

2014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2015. 8

지역발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면지

목 차

제1부 총 괄	1
제1장 경제여건의 변화와 지역경제 동향	3
제1절 2014년의 국내외 경제	3
1. 세계경제	3
2. 국내경제	4
제2절 2014년 지역경제	6
1. 지역경제 개관	6
2. 생산동향	7
3. 수출동향	9
4. 고용동향	11
제2장 지역발전정책 추진경과 및 실적	13
제1절 박근혜정부의 지역발전정책	13
1. 지역발전정책 추진경과	13
2. 비전 및 추진전략	15
3. 주요 추진시책	17
제2절 지역발전정책 추진실적	18
1. 지역발전정책의 제도적 기반마련	18
2. 지역발전정책의 구체화 및 소통	22
제3장 지역발전시책의 예산·평가 체계	29
제1절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편성체계 및 주요 내용	29
1.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편성체계	29
2.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편성 절차	30
3. 2014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주요 내용	33
제2절 지역발전사업의 평가체계	35
1. 평가목적 및 방향	35
2. 평가 대상사업 및 평가등급	36
3. 평가체계 및 절차	37
4. 평가결과 및 활용	40

제2부 부문별 시책45

제1장 지역생활권 활성화 47

제1절 지역주도 협력사업 확충 47

1. 지역간 자율적인 협력체계 구축·강화 47
2. 창조적 마을 만들기 52
3. 지역공동체 활성화 71

제2절 주민 체감 생활인프라 구축 79

1. 생활체감 도시 인프라 정비 79
2. 농어촌 및 취약지역 정주환경 개선 89
3.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실현 102
4. 안전한 지역환경 만들기 114

제3절 지역 중심지 활력 증진 119

1. 지역 중심지 활력 증진 119

제4절 지역 교통·물류망 개선 123

1. 전국 간선도로망 및 대도시권 교통완화를 위한 도로 구축 123
2. 전국 고속철도 및 도시철도망 구축 139
3. 항만 인프라 개선 145
4. 교통·물류 원활화 지원 149

제2장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151

제1절 일자리 창출 중심의 지역대표산업 육성 151

1. 일자리 창출 중심의 지역산업 육성 151

제2절 지역투자 촉진 기반 확대 185

1. 기업의 지역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강화 185
2. 외국인투자기업 등 투자지원 187

제3절 산업단지 고도화로 창조경제 구현 191

1. IT·서비스업 등 신산업 수요에 부응한 입지 공급 확대 191
2. 노후산단 창의·혁신공간 전환 194
3. 입주기업 혁신역량 강화 및 정주여건 조성 198

제4절 지역기반 연구 활성화로 창조경제 지역확산 200

1. 창조경제 패러다임의 지역 확산 200
2. 지역 R&D 기반구축 및 역량강화 205
3.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통한 연구성과 사업화 촉진 217

제5절 지역성장 거점도시 조성 225

1. 행복도시를 명품도시로 조성	225
2. 혁신도시를 지역발전거점으로 육성	229
3. 새만금 기반시설 조기 구축 및 개발 가시화	233
4. 기업도시 활성화로 지역경제에 기여	238
5. 국제자유도시 조성지원으로 외자유치 촉진	240
제6절 농산어업 경쟁력 강화	245
1. 산업간 융·복합을 통한 6차산업화 및 일자리 창출	245
2.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259
3. 도농상생 및 귀농·귀어·귀촌을 통한 농어촌 활력 증진	296
 제3장 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양성	 301
제1절 지방 초·중교 교육환경 개선	301
1. 농산어촌 지역에 우수한 교육환경 구축	301
2. 교육환경 개선	304
제2절 창의적 인재를 키우는 지방대학 육성	308
1. 특성화를 통한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308
2. 지역산업과 연계한 산학협력 강화	315
제3절 일과 학습 병행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319
1. 창의적 인재 육성 체제 정비	319
2. 평생직업교육체제 구축	320
제4절 100세 시대 지역 평생학습체제 구축	325
1.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325
2. 인문학 진흥 강화	330
 제4장 지역 문화 육성, 생태 복원	 332
제1절 지역 문화역량 강화 및 특성화 발전 지원	332
1. 지역문화체계 특화지역 조성	332
2. 지역 고유자원의 재발견 및 재창조를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	333
제2절 맞춤형 문화서비스를 통한 문화격차 해소	339
1. 생활문화 및 공동체 지원	339
2. 지역주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341
3. 문화소의 및 취약지역 문화접근성 향상	346
제3절 지역 관광산업 육성	347
1.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역관광거점 육성	347
2. 창조적 지역문화관광 활성화	351
3. 생태·역사·문화 콘텐츠 중심의 고품격 관광자원 개발	358

제4절 생태·자연환경 보존·활용	365
1. 도시 생태자원의 복원·확충을 통한 지속가능성 제고	365
2. 하천-산림생태 보전·복원으로 융합적 가치 창출	367
3. 자연자원을 활용한 지역의 경제적 기반 및 환경 개선	375
제5장 사각없는 지역복지·의료	380
제1절 지역밀착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380
1. 주민밀착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380
2. 지역수요를 반영한 주민체감형 건강증진사업 강화	389
제2절 맞춤형 복지시책 추진	393
1. 수혜자 특성을 고려한 주민지원 시책 확대	393
2.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복지서비스	400
제3절 취약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403
1.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통한 의료취약지 해소	403
제3부 지역별 시책	409
제1장 서울특별시	411
제1절 경제 현황	411
1. 일반 현황	411
2. 산업 현황	411
3. 혁신활동 현황	413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414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415
1. 발전비전	415
2. 추진전략	416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417
1. 지역생활권 활성화	417
2.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419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421
4. 지역 문화 융성, 생태복원	422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424
제4절 향후 추진계획	425

제2장 부산광역시	426
제1절 경제 현황	426
1. 일반 현황	426
2. 산업 현황	426
3. 혁신활동 현황	428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429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430
1. 발전비전	430
2. 추진전략	431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432
1. 지역생활권 활성화	432
2.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434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436
4. 지역 문화 융성, 생태 복원	437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438
제4절 향후 추진계획	439
제3장 대구광역시	440
제1절 경제 현황	440
1. 일반 현황	440
2. 산업 현황	440
3. 혁신활동 현황	442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443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444
1. 발전비전	444
2. 추진전략	445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446
1. 지역생활권 활성화	446
2.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448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450
4. 지역 문화 융성, 생태복원	451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452
제4절 향후 추진계획	453
제4장 인천광역시	454
제1절 경제 현황	454

1. 일반 현황	454
2. 산업 현황	454
3. 혁신활동 현황	456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457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458
1. 발전비전	458
2. 추진전략	459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461
1. 지역생활권 활성화	461
2.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463
3. 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양성	464
4. 지역 문화 융성, 생태 복원	465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466
제4절 향후 추진계획	467
 제5장 광주광역시	 469
제1절 경제 현황	469
1. 일반 현황	469
2. 산업 현황	469
3. 혁신활동 현황	471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472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473
1. 발전비전	473
2. 추진전략	474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475
1. 지역생활권 활성화	475
2.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476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477
4. 지역 문화 융성·생태 복원	478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480
제4절 향후 추진계획	482
 제6장 대전광역시	 483
제1절 경제 현황	483
1. 일반 현황	483
2. 산업 현황	483

3. 혁신활동 현황	485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486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487
1. 발전비전	487
2. 추진전략	488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489
1. 지역생활권 활성화	489
2.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491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492
4. 지역 문화 융성, 생태복원	493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494
제4절 향후 추진계획	496
 제7장 울산광역시	 497
제1절 경제 현황	497
1. 일반 현황	497
2. 산업 현황	497
3. 혁신활동 현황	499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500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501
1. 발전비전	501
2. 추진전략	502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503
1. 지역생활권 활성화	503
2.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505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507
4. 지역 문화 융성, 생태복원	508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509
제4절 향후 추진계획	511
 제8장 세종특별자치시	 513
제1절 경제 현황	513
1. 일반 현황	513
2. 산업 현황	513
3. 혁신활동 현황	515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516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518
1. 발전비전	518
2. 추진전략	519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520
1. 지역생활권 활성화	520
2.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522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524
4. 지역 문화 융성, 생태복원	525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526
제4절 향후 추진계획	528
제9장 경기도	529
제1절 경제 현황	529
1. 일반 현황	529
2. 산업 현황	529
3. 혁신활동 현황	531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532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534
1. 발전비전 및 목표	534
2. 추진전략	535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537
1. 지역생활권 활성화	537
2.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539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540
4. 지역 문화 융성, 생태복원	541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542
제4절 향후 추진계획	544
제10장 강원도	546
제1절 경제 현황	546
1. 일반 현황	546
2. 산업 현황	546
3. 혁신활동 현황	548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549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550
1. 발전비전	550

2. 추진전략	551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552
1. 지역생활권 활성화	552
2.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553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555
4. 지역 문화 융성, 생태복원	556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557
제4절 향후 추진계획	559
제11장 충청북도	560
제1절 경제 현황	560
1. 일반 현황	560
2. 산업 현황	560
3. 혁신활동 현황	562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563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564
1. 발전비전	564
2. 추진전략	565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566
1. 지역생활권 활성화	566
2.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568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570
4. 지역 문화 융성, 생태복원	571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572
제4절 향후 추진계획	573
제12장 충청남도	575
제1절 경제 현황	575
1. 일반 현황	575
2. 산업 현황	575
3. 혁신활동 현황	577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578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579
1. 발전비전	579
2. 추진전략	580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581

1. 지역생활권 활성화	581
2.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583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585
4. 지역 문화 융성, 생태 복원	586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587
제4절 향후 추진계획	588

제13장 전라북도 590

제1절 경제 현황	590
1. 일반 현황	590
2. 산업 현황	590
3. 혁신활동 현황	592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593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595
1. 발전비전	595
2. 추진전략	596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597
1. 지역생활권 활성화	597
2.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599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601
4. 지역 문화 융성, 생태복원	602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603
제4절 향후 추진계획	605

제14장 전라남도 607

제1절 경제 현황	607
1. 일반 현황	607
2. 산업 현황	607
3. 혁신활동 현황	609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610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611
1. 발전비전	611
2. 추진전략	612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613
1. 지역생활권 활성화	613
2.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615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617
4. 지역 문화 육성, 생태복원	618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619
제4절 향후 추진계획	620
제15장 경상북도	622
제1절 경제 현황	622
1. 일반 현황	622
2. 산업 현황	622
3. 혁신활동 현황	624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625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626
1. 발전비전	626
2. 추진전략	627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628
1. 지역생활권 활성화	628
2.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630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632
4. 지역 문화 육성, 생태복원	632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634
제4절 향후 추진계획	635
제16장 경상남도	636
제1절 경제 현황	636
1. 일반 현황	636
2. 산업 현황	636
3. 혁신활동 현황	638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639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640
1. 발전비전	640
2. 추진전략	641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642
1. 지역생활권 활성화	642
2.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643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645
4. 지역문화 육성, 생태복원	646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647
제4절 향후 추진계획	649
제17장 제주특별자치도	651
제1절 경제 현황	651
1. 일반 현황	651
2. 산업 현황	651
3. 혁신활동 현황	653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654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655
1. 발전비전	655
2. 추진전략	656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657
1. 지역생활권 활성화	657
2.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659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660
4. 지역 문화 융성, 생태 복원	661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662
제4절 향후 추진계획	663

표 목차

제1부 총 괄

<표 1-1-1> 주요 세계 경제지표	3
<표 1-1-2> 주요 국내 경제지표	5
<표 1-1-3> 지역별 생산동향	7
<표 1-1-4> 지역 내 주요 제조업종별 2014년 생산동향	8
<표 1-1-5> 지역별 수출동향	9
<표 1-1-6> 지역 주요 품목별 2014년 수출	10
<표 1-1-7> 지역별 고용동향(취업자)	11
<표 1-1-8> 지역 산업별 2014년 취업자	12
<표 1-2-1> 지역발전정책 추진경과	14
<표 1-2-2> 2000년대 이후 지역발전정책 비교	14
<표 1-2-3> 주요 추진시책(6대분야 17대 추진과제)	17
<표 1-2-4> 지역발전위원회 개최실적	19
<표 1-2-5> 주요 생활권 과제	23
<표 1-2-6> 2014년 신규 선도사업	24
<표 1-2-7> 시도별 특화발전 프로젝트 현황	24
<표 1-2-8> 지역발전 5개년계획(2014~2018년) 수립과정	25
<표 1-2-9> 5대 분야별 국비 재원소요 계획	25
<표 1-2-10> 지역발전 5개년계획(2014~2018년)의 분야별 주요지표 ...	26
<표 1-3-1>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와 지역발전특별회계의 편성체계 비교 ...	29
<표 1-3-2> 포괄보조사업 지원 대상	31
<표 1-3-3>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	33
<표 1-3-4>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계정별)	34
<표 1-3-5>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분야별)	34
<표 1-3-6> 분야별 등급분포	41
<표 1-3-7> 우수사례로 선정된 지자체(22개)	42

제2부 부문별 시책

<표 2-1-1> 지역행복생활권협력사업 생활권 구성 현황	48
<표 2-1-2> 연도별 예산 지원액	52
<표 2-1-3> 도시활력증진지역 현황 (99개 시·군·구)	53
<표 2-1-4> 도시활력증진지역 사업 절차도	54
<표 2-1-5>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추진 현황(2014년도)	55
<표 2-1-6> 성장촉진지역 지정 현황(2014년 9월 25일 기준)	60
<표 2-1-7> 개발촉진지구(낙후지역형) 지정 현황	61
<표 2-1-8>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대상지역 현황	62
<표 2-1-9> 2014년 역량강화 사업 시행내역	63
<표 2-1-10> 지역개발 전문인력 배출현황	64
<표 2-1-11> 2014년도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추진실적	65
<표 2-1-12> 2015년도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추진계획	66
<표 2-1-13> 2015년 신규 선정사업 예산 내역	69
<표 2-1-14> 2015년 신규 선정사업 현황(21개)	69
<표 2-1-15> 농촌공동체회사 유형	72
<표 2-1-16> 농촌 현장포럼 추진 마을 수	73
<표 2-1-17> 마을기업 지정 절차	77
<표 2-1-18> 재정비촉진사업 지원 현황	81
<표 2-1-19> 재정비촉진지구 현황	81
<표 2-1-20> 연도별 마스터플랜 수립 개소	83
<표 2-1-21> 연계사업 추진성과	83
<표 2-1-22> 지자체 한옥공공건축물 지원 현황	85
<표 2-1-23> 저상버스 보급현황(2014년 12월 기준)	85
<표 2-1-24> 특별교통수단 보급현황(2014년 12월 기준)	86
<표 2-1-25> 입체화사업 추진 현황	86
<표 2-1-26> 지역별 광역상수도 공급현황	89
<표 2-1-27> 2014년 지원 마을단위 현황	90
<표 2-1-28> 융자 지원 절차 및 사업규모/지원 조건	92
<표 2-1-29> 도시가스 보급 추이	92
<표 2-1-30> 농촌마을 리모델링 사업 지구별 주요 실적	93

<표 2-1-31> 농촌마을 리모델링사업 지구별 사업내용	93
<표 2-1-32> 상수도 보급률 현황	95
<표 2-1-33>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2014년)	95
<표 2-1-34>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2014년)	96
<표 2-1-35> 기항지 현황	97
<표 2-1-36> 2014년도 기항지 접안시설 개선사업 주요 추진성과	97
<표 2-1-37> 연도별 화장률 변동 추이	98
<표 2-1-38>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현황	99
<표 2-1-39>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 현황(2014년)	100
<표 2-1-40> 시장 경영혁신 지원 교육인원	101
<표 2-1-41> 제2차 연안정비기본계획(변경)	103
<표 2-1-42>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추진실적(2014년)	104
<표 2-1-43> 방치선박 정리 추진실적(2014년)	105
<표 2-1-44> 하수도 보급률 현황	107
<표 2-1-45>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2014)	107
<표 2-1-46> 국고 지원 비율 및 보조율 법적근거(폐기물 처리시설) ·	108
<표 2-1-47>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2014)	109
<표 2-1-48> 하수도 보급률 현황(제주)	110
<표 2-1-49> 국고 지원 비율 및 보조율 법적근거(폐기물 자원화회수시설)	111
<표 2-1-50> 국고 지원 비율 및 보조율 법적근거(폐기물 처리시설)	112
<표 2-1-51> 클린하우스 설치현황(2006~2013년)	113
<표 2-1-52> 사업추진 절차	114
<표 2-1-53> 지방도 위험도로 개량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116
<표 2-1-54> 침수 대응 중장기 투자계획(2012년 5월, 국가정책조정회의) ···	117
<표 2-1-55> 농가인구 고령화율	118
<표 2-1-56> 농업안전보건센터 지정·운영 현황(2014년 기준)	118
<표 2-1-57> 도시재생선도지역 예산 지원 현황	122
<표 2-1-58> 광역도로 현황 및 소요사업비(총 67개)	123
<표 2-1-59> 광역도로 연차별 투자비(국고) 현황	124
<표 2-1-60> 국가지원지방도 연차별 투자비(국고) 현황	125
<표 2-1-61> 교통혼잡비용 추이	125
<표 2-1-62> 대도시권 혼잡도로 연차별 투자비(국고) 현황	126

<표 2-1-63> 제주도 구국도 건설 연차별 투자비 현황	126
<표 2-1-64> 광주순환 고속도로 예산투입 현황	127
<표 2-1-65> 대구순환고속도로 예산투입 현황	128
<표 2-1-66> 돌산-화태 국도건설공사 연차별 투자비(국고) 현황	128
<표 2-1-67> 동해-삼척 고속도로 예산투입 현황	129
<표 2-1-68> 거제-마산 국도건설공사 연차별 투자비(국고) 현황	129
<표 2-1-69> 부산순환 고속도로 예산투입 현황	130
<표 2-1-70> 동해-삼척 고속도로 예산투입 현황	130
<표 2-1-71> 압해-암태, 화양-적금 국도건설공사 연차별 투자비(국고) 현황 ..	131
<표 2-1-72> 영남-적금 국도건설공사 연차별 투자비(국고) 현황	132
<표 2-1-73> 울산-포항 고속도로 예산투입 현황	132
<표 2-1-74> 월전-중군 국도건설공사 연차별 투자비(국고) 현황	133
<표 2-1-75> 동해-삼척 고속도로 예산투입 현황	133
<표 2-1-76> 수도권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 추진현황	134
<표 2-1-77> 주문진-속초 고속도로 예산투입 현황	134
<표 2-1-78> 춘천(동홍천)-양양 고속도로 예산투입 현황	135
<표 2-1-79> 충주-제천 고속도로 예산투입 현황	135
<표 2-1-80> 특정지역 현황	137
<표 2-1-81> 포항-영덕 고속도로 예산투입 현황	138
<표 2-1-82> 함양-울산 고속도로 예산투입 현황	138
<표 2-1-83> 화양-소라 국가지원지방도 연차별 투자비(국고) 현황	139
<표 2-1-84> 광역철도 제도개선 주요내용	140
<표 2-1-85> 광역철도사업현황	141
<표 2-1-86> 도시철도 개통현황	144
<표 2-2-1> 지역별 주력산업분야	151
<표 2-2-2> 시·도 경제협력권산업 선정결과(16개)	153
<표 2-2-3> 사업 유형별 추진방안	154
<표 2-2-4> 동물약품 허브 2014년도 목표치 및 달성결과	157
<표 2-2-5> 국내 로봇시장 규모	161
<표 2-2-6> 연차별 투입 예산(국비)	166
<표 2-2-7> 연차별 투입 예산(국비)	170
<표 2-2-8> 실감미디어R&D기반구축 및 성과확산사업 개요	177

<표 2-2-9> 지역투자촉진보조금 지원절차	185
<표 2-2-10> 2014년 외국인투자유치사업 지원 내용	188
<표 2-2-11> 2008~2014년 외국인직접투자 실적(신고기준)	188
<표 2-2-12> 유턴기업 주요 지원제도	189
<표 2-2-13> 유턴기업 현황 (2012년~2015년 4월 MOU체결 기준)	190
<표 2-2-14> 지역특화산업단지 개발(안)	193
<표 2-2-15> 노후산업단지 현황 (준공 후 20년 경과, 2014년말 기준) ..	196
<표 2-2-16> 산업단지 진입도로 연차별 투자비(국고) 현황	199
<표 2-2-17>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건설 연도별 지원 현황	199
<표 2-2-18> 지역연구개발지원단 현황	205
<표 2-2-19> 기초과학연구원 연구단 구성 현황 (2014.12월 기준)	206
<표 2-2-20> 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의 세부내용	208
<표 2-2-21> 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황	209
<표 2-2-22> 연도별 연구개발특구 예산 추이	209
<표 2-2-23> 연구개발특구 주요 통계	210
<표 2-2-24> 지방과학연구단지 지정 및 사업비 현황	212
<표 2-2-25> 과학기술진흥센터 현황	212
<표 2-2-26> 건설교통기술 지역거점센터 분야 지원 현황 및 투자계획(2013~2020년) ..	213
<표 2-2-27> 건설교통기술 지역거점센터 구축 현황(2013~2014년) ..	213
<표 2-2-28> 지역특화기술개발 분야 지원 현황(2005~2014년)	214
<표 2-2-29> 산학연공동연구법인 설립 현황	219
<표 2-2-30> 대학 TLO 연도별 기술이전 실적	221
<표 2-2-31>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 설립 실적	222
<표 2-2-32> 산학연협력 클러스터 지원사업 실적	224
<표 2-2-33> 이전대상 공공기관 현황	230
<표 2-2-34> 시·도별 이전기관 배치결과(전체 154개 기관)	230
<표 2-2-35> 혁신도시 입지선정현황	231
<표 2-2-36>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건설공사 연차별 투자비(국고) 현황	235
<표 2-2-37>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예산투입 현황	236
<표 2-2-38> 새만금 신항만 단계별 부두개발 규모	237
<표 2-2-39> 기업도시 사업개요 및 추진현황	239
<표 2-2-40> 기업도시 기반시설 국고지원 현황 및 계획	240

<표 2-2-41> 제주국제자유도시 기반시설 국고지원 현황 및 추진실적	242
<표 2-2-42> 제주국제자유도시 주요 프로젝트 추진현황 사업별 추진실적 ..	244
<표 2-2-43> 2014년도 농식품 ICT 융복합 모델개발 추진현황	246
<표 2-2-44> 분야별 ICT 융복합 확산사업	247
<표 2-2-45> 2014년도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주요 추진 성과	249
<표 2-2-46> 자연휴양림 이용객 추이(2005~2014년)	256
<표 2-2-47> 치유의 숲 이용객 추이(2009~2014년)	257
<표 2-2-48> 과실브랜드 육성지원사업 추진 현황	261
<표 2-2-49> 농업기반정비사업 내역사업별 주요내용	263
<표 2-2-50> 작목별 비용절감 효과	267
<표 2-2-51> 경기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 연차별 예산투입 실적	268
<표 2-2-52> 전남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 연차별 예산투입 계획	268
<표 2-2-53> 인삼 생산유통시설현대화사업 지원 현황	270
<표 2-2-54> 클러스터사업단 참여 농기업체 매출액 조사결과	272
<표 2-2-55> 향토산업육성사업 선정·육성 지원 현황	274
<표 2-2-56> 2013년도 향토산업육성사업 주요 추진성과	275
<표 2-2-57> 수산자원조성사업 주요성과	276
<표 2-2-58>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국비지원 실적 및 계획	278
<표 2-2-59> 수산어업 행정지원 실적	279
<표 2-2-60> 어업인 교육 훈련(제주)지원 실적	280
<표 2-2-61> 2014년도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시범사업 추진실적	284
<표 2-2-62>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현황	287
<표 2-2-63> 2014 생활만족도 조사결과	287
<표 2-2-64> 지역별 2014년 사업예산	288
<표 2-2-65> 2014년 농촌지도기반시설 지원실적	290
<표 2-2-66> 2014년 농촌지도기반시설 예산배정 기준	291
<표 2-2-67> 2014년 지역농업 연구기반 조성 사업을 통한 주요 연구개발 성과 ..	292
<표 2-2-68> 연도별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 현황	293
<표 2-2-69> 연도별 백두대간 소득감소분지원 현황	294
<표 2-2-70> 전국 로컬푸드직매장 운영현황	296
<표 2-3-1> 농산어촌 ICT 지원 사업 개요	302
<표 2-3-2> 농어촌 거점별 우수중학교 사업 개요	304

<표 2-3-3> 초등돌봄교실 시설 개선 확충 사업 성과	305
<표 2-3-4> 소규모 학교의 적정규모 학교 육성 지원 현황	306
<표 2-3-5> 연도별 통폐합 인센티브 산정기준	307
<표 2-3-6> 지방대학특성화사업 권역별·사업유형별 지원 현황	308
<표 2-3-7> 2014년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선정 결과	309
<표 2-3-8>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ACE) 지원 현황	310
<표 2-3-9> BK21 플러스 사업 주요 내용	312
<표 2-3-10> 지역인재 선발권역 및 선발비율	313
<표 2-3-11> 2015학년도 의학계열 학과 지역인재 및 지역인재전형 선발 현황.....	314
<표 2-3-12> 2014년 산학협력 선도대학 주요성과(4년제)	316
<표 2-3-13> 2014년 산학협력 선도 전문대학 주요성과(2년제)	318
<표 2-3-14> 선취업 후진학 지원시스템 구축 사업 지원 유형 및 현황	321
<표 2-3-15> 선취업 후진학 지원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경과	321
<표 2-3-16> 선취업 후진학 지원시스템 구축 사업 성과	322
<표 2-3-17> 지역혁신창의인력양성사업 연도별 지원 현황	324
<표 2-3-18> 2014년 지역 평생교육기관 운영·지원 현황	326
<표 2-3-19> 2014년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비 및 프로그램 운영 현황....	326
<표 2-3-20> 대학 중심의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추진 경과	328
<표 2-3-21> 대학 중심의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성과	328
<표 2-3-22> 2014년 평생직업교육대학 선정결과 및 운영 현황	329
<표 2-3-23> 시민인문강좌 및 인문도시 연도별 지원 현황	330
<표 2-4-1> 2014년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지원 현황	333
<표 2-4-2> 대구출판산업지원센터 주요시설	335
<표 2-4-3>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전국 설립 현황	336
<표 2-4-4> 2014년 국제영화제 지원현황	337
<표 2-4-5> 2014년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지원 현황	338
<표 2-4-6> 종합형스포츠클럽 공모요건	344
<표 2-4-7> 클럽운영과정	344
<표 2-4-8> 운영장소 : 전국 434개소	345
<표 2-4-9> 연도별 실적	345
<표 2-4-10> 산업관광 육성 사업 지원 규모	347
<표 2-4-11> 최근 5년간 해양관광 기반시설 조성사업 지원 현황(국비기준) ..	354

<표 2-4-12> 우수 외식업지구 지정 현황('12~'14)	357
<표 2-4-13> 2014년 문화유산관광자원개발사업 지원 현황	364
<표 2-4-14> 자연마당 연도별 조성 계획	366
<표 2-4-15> 생태놀이터 연도별 조성 계획	366
<표 2-4-16> 국가하천정비사업 투자현황	371
<표 2-4-17> 국내 하천정비사업 변천	371
<표 2-4-18> 연도별 백두대간 등 산림생태복원 현황	374
<표 2-4-19> 경관직불보전제 연차별 사업추진 내역	375
<표 2-4-20> 국가농업유산지정 및 다원적자원활용사업지구 현황	377
<표 2-4-21> 생태관광지역 지정 현황	378
<표 2-4-22> 녹색환경지원센터 지정·운영 현황	379
<표 2-5-1>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세부내용	380
<표 2-5-2> 연도별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계획	384
<표 2-5-3>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현황	386
<표 2-5-4> 추진체계도	388
<표 2-5-5>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체계 및 서비스지원 절차 등	393
<표 2-5-6> 연도별 지역아동센터 지원 규모	395
<표 2-5-7>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내용	395
<표 2-5-8> 연령별 이용아동 현황('14.12월말 기준)	396
<표 2-5-9>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개요	398
<표 2-5-10> 청소년수련시설 현황(2014년 12월 31일 기준)	399
<표 2-5-11> 2014년도 청소년시설 확충사업 지원현황	399
<표 2-5-12>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도서비스 운영 실적(2014년 12월 기준)	402
<표 2-5-13> 연도별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지원 현황	404
<표 2-5-14> 2015년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원사업 대상지역	406
<표 2-5-15> 연도별 분만취약지 사업 선정 및 지원 현황	407

제3부 지역별 시책

<표 3-1-1> 서울특별시 경제 일반현황	411
<표 3-1-2> 서울특별시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412
<표 3-1-3> 서울특별시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412
<표 3-1-4> 서울특별시 혁신활동 현황	413
<표 3-2-1> 부산광역시 경제 일반현황	426
<표 3-2-2> 부산광역시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427
<표 3-2-3> 부산광역시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427
<표 3-2-4> 부산광역시 혁신활동 현황	428
<표 3-3-1> 대구광역시 경제 일반현황	440
<표 3-3-2> 대구광역시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441
<표 3-3-3> 대구광역시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441
<표 3-3-4> 대구광역시 혁신활동 현황	442
<표 3-4-1> 인천광역시 경제 일반현황	454
<표 3-4-2> 인천광역시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455
<표 3-4-3> 인천광역시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455
<표 3-4-4> 인천광역시 혁신활동 현황	456
<표 3-5-1> 광주광역시 경제 일반현황	469
<표 3-5-2> 광주광역시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470
<표 3-5-3> 광주광역시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470
<표 3-5-4> 광주광역시 혁신활동 현황	471
<표 3-6-1> 대전광역시 경제 일반현황	483
<표 3-6-2> 대전광역시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484
<표 3-6-3> 대전광역시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484
<표 3-6-4> 대전광역시 혁신활동 현황	485
<표 3-7-1> 울산광역시 경제 일반현황	497
<표 3-7-2> 울산광역시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498
<표 3-7-3> 울산광역시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498
<표 3-7-4> 울산광역시 혁신활동 현황	499
<표 3-8-1> 세종특별자치시 경제 일반현황	513
<표 3-8-2> 세종특별자치시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514

<표 3-8-3> 세종특별자치시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514
<표 3-8-4> 세종특별자치시 혁신활동 현황	515
<표 3-9-1> 경기도 경제 일반현황	529
<표 3-9-2> 경기도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530
<표 3-9-3> 경기도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530
<표 3-9-4> 경기도 혁신활동 현황	531
<표 3-9-5> 경기도 지역행복생활권별 비전 및 추진전략	538
<표 3-10-1> 강원도 경제 일반현황	546
<표 3-10-2> 강원도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547
<표 3-10-3> 강원도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547
<표 3-10-4> 강원도 혁신활동 현황	548
<표 3-11-1> 충청북도 경제 일반현황	560
<표 3-11-2> 충청북도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561
<표 3-11-3> 충청북도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561
<표 3-11-4> 충청북도 혁신활동 현황	562
<표 3-11-5> 선도사업 연계·협력 프로젝트(2014~2016) 현황 및 성과	567
<표 3-12-1> 충청남도 경제 일반현황	575
<표 3-12-2> 충청남도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576
<표 3-12-3> 충청남도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576
<표 3-12-4> 충청남도 혁신활동 현황	577
<표 3-13-1> 전라북도 경제 일반현황	590
<표 3-13-2> 전라북도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591
<표 3-13-3> 전라북도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591
<표 3-13-4> 전라북도 혁신활동 현황	592
<표 3-14-1> 전라남도 경제 일반현황	607
<표 3-14-2> 전라남도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608
<표 3-14-3> 전라남도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608
<표 3-14-3> 전라남도 혁신활동 현황	609
<표 3-15-1> 경상북도 경제 일반현황	622
<표 3-15-2> 경상북도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623
<표 3-15-3> 경상북도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623
<표 3-15-4> 경상북도 혁신활동 현황	624

<표 3-16-1> 경상남도 경제 일반현황	636
<표 3-16-2> 경상남도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637
<표 3-16-3> 경상남도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637
<표 3-16-4> 경상남도 혁신활동 현황	638
<표 3-17-1> 제주특별자치도 경제 일반현황	651
<표 3-17-2> 제주특별자치도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652
<표 3-17-3> 제주특별자치도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652
<표 3-17-4> 제주특별자치도 혁신활동 현황	653

그림 목차

제1부 총괄

<그림 1-2-1> 지역발전정책의 비전과 추진전략	16
<그림 1-2-2> 지역발전계획 수립체계의 정비	21
<그림 1-2-3> 현장 중심의 소통 활동	28
<그림 1-3-1> 지자체 자율편성사업 예산 편성 절차('14년 기준)	30
<그림 1-3-2> 부처편성사업 예산편성 절차	32
<그림 1-3-3> 지역발전사업 평가체계	37
<그림 1-3-4> 평가추진 절차	40

제2부 부문별 시책

<그림 2-1-1> 농촌형 교통모델 개념도	49
<그림 2-1-2> 여성친화도시 비전 및 전략체계	66
<그림 2-1-3> 마을사업 추진체계	73
<그림 2-1-4> 전국 슬레이트 용도별 현황 및 주택등록 현황(2014년12월)	94
<그림 2-1-5> 농촌 중심시 활성화 사업 개요	120
<그림 2-1-6> 도시재생선도지역 선정 절차도	121
<그림 2-1-7> 원주-강릉 철도건설 노선도	143
<그림 2-2-1> 지역특화산업육성 추진체계	152
<그림 2-2-2> 동물약품 허브 평면도 및 조감도	158
<그림 2-2-3> 로봇클러스터 및 로봇산업진흥원 조감도	162
<그림 2-2-4> 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 산업화 기반구축사업 추진체계	165
<그림 2-2-5> 초광역연계 3D융합산업 육성 사업 추진체계	170
<그림 2-2-6>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진흥사업의 인프라 현황	178
<그림 2-2-7> 소프트웨어산업진흥사업의 성과	178
<그림 2-2-8> 최근 5년(2008~2012년)간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변화 추이	179
<그림 2-2-9> 건설교통기술 지역거점센터 분야 주요 성과(2014년) ...	214
<그림 2-2-10> 지역특화기술개발 분야 주요 성과(2014년)	215

<그림 2-2-11> 성과평가 및 사후관리체계	218
<그림 2-2-12> 새만금 농생명용지 이용계획도	234
<그림 2-2-13> 농식품 ICT 융복합 추진체계	245
<그림 2-2-14> 도시숲 조성 사례	256
<그림 2-2-15> 지역농업특성화사업 추진성과	283
<그림 2-2-16> 사업 참여도 및 프로그램 참여도	286
<그림 2-2-17> 지역농업 연구기반 조성 사업 추진 절차	292
<그림 2-2-18> 직거래 일반 및 로컬푸드직매장 생산자·소비자 효용	297
<그림 2-3-1> 기술개발 투자 및 성과	312
<그림 2-3-2> 학교기업 지원사업 1단계(2010~2014) 사업 성과	323
<그림 2-3-3>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개요	325
<그림 2-3-4> 대학 중심의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추진 체계	327
<그림 2-3-5> 특성화전문대학(평생직업교육대학) 육성사업 추진체계	329
<그림 2-4-1> 추진체계	344
<그림 2-4-2> 사업추진 체계도	345
<그림 2-4-3> 도시숲의 도심열섬완화 기능	367
<그림 2-4-4> 사업 추진체계	367
<그림 2-5-1> 2015년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방향	387
<그림 2-5-2>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원 사업 추진체계	405

제3부 지역별 시책

<그림 3-1-1> 서울특별시 발전 비전 및 추진전략	415
<그림 3-1-2> 서울특별시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417
<그림 3-2-1> 부산광역시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430
<그림 3-2-2> 부산광역시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432
<그림 3-3-1> 대구광역시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444
<그림 3-3-2> 대구광역시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446
<그림 3-4-1> 인천광역시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458
<그림 3-4-2> 인천광역시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461
<그림 3-5-1> 광주광역시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473

<그림 3-5-2> 광주광역시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475
<그림 3-6-1> 대전광역시 발전 비전 및 추진전략	487
<그림 3-6-2> 대전광역시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489
<그림 3-7-1> 울산광역시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501
<그림 3-7-2> 울산광역시 공간별 창조도시 추진전략	502
<그림 3-7-3> 울산광역시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503
<그림 3-8-1> 세종특별자치시 발전 비전 및 추진전략	518
<그림 3-8-2> 세종특별자치시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520
<그림 3-9-1> 경기도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534
<그림 3-9-2> 경기도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537
<그림 3-10-1> 강원도 발전 비전 및 추진전략	550
<그림 3-10-2> 강원도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552
<그림 3-11-1> 충청북도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564
<그림 3-11-2> 충청북도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566
<그림 3-12-1> 충청남도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579
<그림 3-12-2> 충청남도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581
<그림 3-13-1> 전라북도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595
<그림 3-13-2> 전라북도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597
<그림 3-14-1> 전라남도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611
<그림 3-14-2> 전라남도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613
<그림 3-15-1> 경상북도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626
<그림 3-15-2> 경상북도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628
<그림 3-16-1> 경상남도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640
<그림 3-16-2> 경상남도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642
<그림 3-17-1> 제주특별자치도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655
<그림 3-17-2>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657

제1부 총괄

- 제1장 경제여건의 변화와 지역경제 동향
- 제2장 지역발전정책 추진경과 및 실적
- 제3장 지역발전시책의 예산·평가체계

제1장 경제여건의 변화와 지역경제 동향

제1절 2014년의 국내외 경제1)

1. 세계경제

2014년 세계경제는 미국, 유로지역 등 선진국의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중국 등 신흥국 성장세의 둔화로 전년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미국경제는 고용사정 개선으로 개인소비지출이 증가하고 고정투자도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전년 수준을 상회하는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유로지역은 일부 재정 취약국의 경기 부진이 이어지고 있으나 독일, 프랑스 등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확대되거나 개선되어 2011년 이후 처음으로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되었다. 일본경제는 소비세율 인상의 여파와 태풍 등 자연재해 피해로 2012년 이후 회복세가 주춤하는 양상을 보였다. 신흥국경제는 전반적인 대내외 수요 둔화로 전년보다 낮은 연간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중국경제는 부동산 경기부진과 과잉설비 등의 영향으로 내수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성장률은 전년 수준을 하회하였다. 중남미에서는 브라질경제의 내수 부진과 원자재 수출 감소 등으로 성장률이 크게 낮아졌다.

표 1-1-1 주요 세계 경제지표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경제성장률 (%)	전 세계	3.9	3.1	3.3	3.3
	선진국	1.7	1.4	1.3	1.8
	미국	1.8	2.8	2.2	2.4
	유로지역	1.6	-0.7	-0.5	0.8
	일본	-0.5	1.4	1.6	0.1
	신흥국	6.2	4.9	4.7	4.4
	중국	9.3	7.7	7.8	7.4
	중남미	4.6	3.0	2.8	1.2
	세계교역신장률(%)	6.1	2.7	3.4	3.1
원유가격(\$/bbl)		106.0	108.9	105.4	96.7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1) 한국은행의 「2014년 연차보고서」(2015년 3월)의 내용을 참고하였다.

세계교역 신장률은 경기회복에 따른 미국, 유로지역의 수입 수요는 늘었으나 신흥국 성장세가 약화되고 일본, 중국 등의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전년보다 소폭 하락하였다.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는 상반기 중 이라크의 정정불안 고조, 리비아의 생산차질 등으로 6월 한때 배럴당 110달러를 넘어서기도 하였으나, 양호한 세계 수급 상황에 힘입어 100달러대에서 안정세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하반기 들어 국제유가는 OPEC의 생산쿼터 유지 결정, 세계경제 전망치 하향 등 초과공급 우려가 확산되고 달러화도 강세를 보임에 따라 급락하여 연말에는 50달러대 초반 수준까지 낮아졌다.

2. 국내경제

2014년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기의 완만한 회복과 설비투자의 개선 등으로 전년 수준을 상회하는 3.3% 성장률을 기록하였지만, 민간소비가 둔화되는 등 내수 회복세는 미약하였다. 연초에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고정투자가 늘면서 높은 성장세를 보였으나, 2/4분기 들어서 세월호 사고로 인한 심리적 위축으로 소비 증가세가 둔화되고 4/4분기에는 수출과 고정투자도 각각 1%대와 0%대의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민간소비는 세월호 사고의 영향으로 2/4분기 위축된 이후, 4/4분기에는 승용차 판매 호조 등에도 불구하고 소비심리 부진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시행 등으로 둔화세가 지속되며 전년 수준을 하회하는 1.8% 증가에 그쳤다. 고정투자는 토목건설 부진으로 건설투자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었으나 기계 및 운송장비 투자 호조로 설비투자가 증가로 돌아서면서 3.1% 증가하였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경기회복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합한 총수출(실질 기준)은 2.8% 증가하였으나 전년 수준에 미치지 못한 반면, 총수입(실질 기준)은 설비투자 등이 늘면서 전년 수준을 미약하게 상회하는 2.1% 증가를 기록하였다.

산업별 생산에 있어 제조업은 전년의 3.6%에서 4.0%로 성장세가 확대되었다. 상반기에는 스마트폰 및 석유제품 판매 증가 등으로 호조를 보였으나, 이후 대중국 수출 부진 등으로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다. 미국 등 대선진국 수출 호조로 기계 및 장비 생산이 늘고 신규설비 가동으로 1차금속제품이 호조를 보였으나, 글로벌 기업 간 경쟁 심화 및 해외 현지생산 확대로 전기 및 전자기기는 증가폭이 축소되었다. 건설업 생산은 정부의 사회간접자본 지출 감소로 전년 수준을 크게 하회하는 0.6% 증가에 그쳤

다. 서비스업은 금융기관 수수료 수입 증가로 금융 및 보험업의 성장세가 확대되었으며, 의료비 지출 확대로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이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반면 세월호 사고 등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은 성장세가 둔화되었다.

고용사정에 있어서 취업자는 장년층 노동공급 증가, 정부 일자리 정책 등으로 전년 수준을 상회하는 2.1% 증가를 기록하였다. 다만 상용근로자의 증가폭이 전년에 비해 줄어들고 임시근로자가 증가하는 등 고용의 질적 개선은 미흡하였다. 실업률은 경제활동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전년의 3.1%에서 3.5%로 높아졌다.

소비자물가는 석유류 및 농산물가격의 하락으로 전년과 동일한 1.3% 상승한 반면, 주택매매가격은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활성화 대책 발표, 기준금리 인하 등에 힘입어 주택시장 매수심리가 개선되면서 전년 수준을 상회하는 2.1% 상승률을 기록하였다.

국제수지에 있어서 상품수지는 국제유가의 하락 등으로 수출입차가 확대되어 흑자규모가 전년의 828억 달러에서 927억 달러로 크게 늘어났다. 반면 서비스수지는 여행수지 개선에도 불구하고 운송·건설수지 흑자폭이 축소되면서 82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표 1-1-2 주요 국내 경제지표

(단위 : %, 억달러)

구분		2013년	2014년				
			연간	I	II	III	IV
국민 소득 ¹⁾	국내총생산	2.9	3.3	3.9	3.4	3.3	2.7
	최종소비	2.2	2.0	2.7	1.7	2.0	1.8
	민 간	1.9	1.8	2.6	1.7	1.5	1.4
	정 부	3.3	2.8	3.0	1.6	3.6	3.1
	고정투자	3.3	3.1	5.8	3.3	3.3	0.7
	건 설	5.5	1.0	4.1	0.2	2.3	-1.5
	설 비	-0.8	5.8	7.2	7.7	4.2	4.2
	수 출	4.3	2.8	4.2	3.4	2.2	1.4
	수 입	1.7	2.1	3.2	2.9	2.3	0.1
산업 생산 ¹⁾	제 조 업	3.6	4.0	5.1	5.1	3.3	2.4
	건 설 업	3.0	0.6	2.1	0.4	1.5	-1.0
	서비스업	2.9	3.1	3.5	2.7	3.2	3.1
고용	취업자수 ¹⁾	1.6	2.1	3.0	1.8	2.0	1.7
	실 업 률	3.1	3.5	4.0	3.7	3.3	3.2
물가	소비자물가 ¹⁾	1.3	1.3	1.1	1.6	1.4	1.0
	주택매매가 ²⁾	0.4	2.1	0.6	0.3	0.5	0.7
국제 수지	상품수지	827.8	926.9	177.5	264.3	216.8	268.4
	서비스수지	-65.0	-81.6	-35.0	-18.4	-9.0	-19.2

주 : 1) 전년 또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2) 전기말월대비 증감률

자료 : 한국은행 「2013년 연차보고서」, 한은경제통계시스템(ECOS)

제2절 2014년 지역경제

1. 지역경제 개관

수도권에서는 경기 지역경제의 개선 정도가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수출·고용 등에서 고른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반도체를 포함한 전자부품을 중심으로 생산·수출이 증가하였고 관련 취업자도 크게 늘었다. 서울은 생산·수출이 전국 수준을 상회하였지만 건설업 취업자 감소로 고용성과는 크게 개선되지 못하였다. 인천은 철강, 자동차 생산 부진으로 권역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가장 부진한 지역이었다.

충청권 지역경제는 여타 권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개선 정도는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전은 지역 주력업종 생산·수출이 견조하게 증가하였고 취업자도 안정적으로 늘어났다. 충북은 반도체 등 전자부품 생산·수출이 줄었으나, 식료품, 전기장비 생산이 호조를 보였고 전지류 수출도 대폭 증가하였으며,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도 늘어났다. 충남 지역경제는 대전·충북과 비교해서는 상대적으로 부진하였으며, 세종은 산업생산은 줄었으나 평판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수출실적은 크게 늘어났다.

호남권은 광주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전북과 전남 지역은 생산·수출·고용 모두 전년수준을 하회하는 등 지역경제 침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는 자동차 생산·수출 호조가 지역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반면, 전북은 자동차, 전남은 석유화학의 부진이 지역경제 침체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대경권은 대구 지역경제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가운데, 자동차부품 생산·수출이 호조를 보였고 서비스업 취업자가 안정적으로 늘어났다. 경북은 제조업 취업자는 증가하였으나, 전자부품 생산이 부진하였고 무선통신기기, 평판디스플레이 수출도 감소하였다.

동남권도 전반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모든 지역의 생산이 전년 수준을 하회하였으며, 수출은 부산만이 자동차 및 부품을 중심으로 높은 실적 증가를 기록하였다. 취업자 증가도 모두 전국 수준을 하회하는 성과를 보였다.

강원은 생산·수출이 동반 부진하고 취업자 수 증가 수준도 전국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제주는 생산·수출이 미약하게나마 전국 수준을 상회하였으며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많이 늘어났다.

2. 생산동향

2014년 연간 전국 기준 산업생산은 1/4분기부터 3/4분기까지는 미약하게나마 상승 폭이 확대되었으나 4/4분기 들어서 전년동기대비 1.9% 하락하며 답보상태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산업생산 증감이 뚜렷이 구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4/4분기에는 대부분의 지역이 증가세가 둔화되거나 감소세로 돌아섰다. 2014년 산업생산이 증가한 지역은 광주(8.3%), 대전(8.1%), 경기(3.8%)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광주는 분기 기준으로 전년동기비 유일하게 10% 이상 생산이 증가하기도 하였다. 대구(2.1%), 충북(1.9%), 충남(1.2%) 등도 미약하게나마 전년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세종(-5.5%), 전남(-4.2%), 경남(-2.3%) 순으로 감소세가 크게 나타났으며, 특히 전남은 전년에 이어 산업생산이 줄어들어 상대적으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 외 울산(-2.0%), 전북(-0.6%), 부산(-0.5%) 등도 생산부진을 나타내고 있다.

표 1-1-3 지역별 생산동향

(단위 :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연간	1/4	2/4	3/4	4/4
전국	1.3	0.7	0.0	0.7	0.5	1.2	-1.9
서울	1.5	-4.6	0.7	-2.4	0.4	3.3	1.6
부산	-0.4	0.1	-0.5	-2.7	-2.4	0.3	2.6
대구	-1.2	3.4	2.1	5.9	2.3	1.8	-0.9
인천	0.7	2.1	-0.4	4.1	-0.2	-1.0	-4.0
광주	-7.4	6.9	8.3	12.3	6.6	15.9	0.4
대전	7.9	-4.5	8.1	-0.1	10.1	15.1	7.6
울산	6.8	-1.8	-2.0	-2.8	0.3	-2.3	-3.0
세종	5.4	0.9	-5.5	-13.7	-10.8	-0.1	3.8
경기	2.2	8.1	3.8	6.5	7.2	3.6	-1.3
강원	1.2	0.5	-1.1	6.3	-2.6	-2.1	-4.8
충북	5.7	22.0	1.9	2.4	1.4	1.8	2.3
충남	0.9	5.3	1.2	2.7	0.7	1.8	-0.5
전북	-3.2	-0.8	-0.6	0.8	-0.6	1.2	-3.0
전남	4.6	-7.6	-4.2	-3.6	-5.8	-4.4	-3.1
경북	0.4	-5.7	0.2	3.3	4.0	-0.1	-5.9
경남	0.4	0.4	-2.3	-3.8	-4.6	-0.5	0.0
제주	3.0	4.6	1.1	-3.3	5.6	0.2	2.2

주 : 지역별 산업생산지수(2010=100)의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 동향조사」

지역 산업생산의 증감에는 지역 주력 제조업종의 업황이 주요하게 작용한다. 2014년 산업생산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광주는 전기장비(-3.4%) 생산이 줄었으나, 자동차(11.6%), 기계장비(6.6%) 등의 호조가 지역 산업생산을 견인한 것으로 보인다. 대전은 지역 내 비중이 가장 높은 고무플라스틱(-4.8%) 생산이 줄었지만, 기계장비(10.7%), 전자부품(8.5%) 생산이 크게 증가하였다. 경기도는 반도체를 포함한 전자부품(7.2%) 생산이 크게 증가하고 자동차(3.7%), 기계장비(10.9%) 등도 동반 호조를 보였다. 대구는 기계장비(9.6%), 충북은 자동차(주로 부품, 18.5%), 충남은 석유정제(17.6%) 등의 호조가 지역 산업생산 증가에 기여하였다.

반면, 전남은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수익 감소로 화학제품(-1.25), 석유정제(-1.2%) 등의 부진과 함께 조선업종의 경기불황으로 장기침체를 겪고 있는 기타운송장비(-20.8%) 등의 생산 급감으로 지역 산업생산이 상대적으로 크게 줄었다. 그 외 울산과 경남도 기타운송장비(각각 -20.8%, -11.3%) 부진이 지역 생산 감소세를 주도하였으며, 전북은 자동차(-4.7%)의 생산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표 1-1-4 지역 내 주요 제조업종별 2014년 생산동향

(단위 : %)

구분	업종	증감률	업종명	증감률	업종명	증감률	업종명	증감률
서울	의복	-0.1	전자부품	0.2	인쇄	-2.5	기계장비	-13.3
부산	철강	-3.0	금속제품	6.3	기계장비	4.8	자동차	8.8
대구	자동차	2.8	기계장비	9.6	금속제품	4.8	섬유제품	3.7
인천	기계장비	2.6	철강	-2.8	자동차	-8.1	금속제품	9.6
광주	자동차	11.6	전기장비	-3.4	고무플라스틱	3.0	기계장비	6.6
대전	고무플라스틱	-4.8	기계장비	10.7	전자부품	8.5	화학제품	4.3
울산	자동차	3.0	석유정제	3.4	화학제품	-0.3	기타운송장비	-20.8
경기	전자부품	7.2	자동차	3.7	기계장비	10.9	금속제품	3.0
강원	비금속	2.3	식료품	2.1	음료품	7.3	자동차	-3.1
충북	전자부품	-5.1	식료품	5.1	전기장비	9.7	자동차	18.5
충남	전자부품	0.1	자동차	3.7	화학제품	3.6	석유정제	17.6
전북	자동차	-4.7	화학제품	1.9	식료품	-4.1	철강	-0.5
전남	화학제품	-1.2	석유정제	-1.2	철강	1.5	기타운송장비	-38.2
경북	전자부품	-3.1	철강	6.3	자동차	-2.6	화학제품	-1.7
경남	기타운송장비	-11.3	기계장비	0.0	금속제품	8.1	자동차	2.4
제주	식료품	-9.5	음료품	10.9	비금속제품	4.0	고무플라스틱	25.1

주 : 1) 지역별 산업생산지수(2010=100)의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2) '주요업종'은 생산지수 가중치 3위내 업종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 동향조사」

3. 수출동향

2014년 연간 수출은 전국적으로 전년보다 2.3% 늘어난 5,727억 달러 실적을 기록하였다. 경기(19.5%)가 1,116억 달러로 가장 많은 실적을 기록하였으며, 울산(16.1%), 충남(11.4%)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연간 증가율 기준으로는 대전(17.4%), 세종(12.9%), 대구(11.3%), 부산(10.8%) 순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대전은 대중국, 대미국, 대일본 수출이 모두 증가한데 힘입어 분기별로도 지속적인 수출 실적 호조를 보였으며, 대구는 대중국, 대미국 이외 베트남으로의 수출이 큰 폭으로 늘어나 지역 수출 증가세를 견인하였다. 특히 부산은 1/4분기에는 전년동기대비 수출이 감소하였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수출 증가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는데, 하반기 들어 완성차 수출이 크게 증가한 데 기인한다. 반면, 전북(-15.4%), 전남(-5.5%), 강원(-4.8%) 등은 전년 실적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전북과 전남은 특히 대중국 수출 부진이 크게 작용하였다.

표 1-1-5 지역별 수출동향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수출 금액	지역간 비중	전년 또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연간	1/4	2/4	3/4	4/4
전국	547,870	559,632	572,665	100.0	2.3	1.6	3.2	3.6	0.9
서울	58,709	60,316	62,329	10.9	3.3	2.6	6.7	4.6	-0.5
부산	13,557	13,263	14,702	2.6	10.8	-2.2	5.9	16.2	22.8
대구	6,984	7,012	7,807	1.4	11.3	22.1	8.5	14.5	2.8
인천	26,710	27,288	30,003	5.2	9.9	12.5	3.1	19.5	6.0
광주	14,133	15,868	16,258	2.8	2.5	-1.1	2.2	8.2	1.0
대전	4,274	4,030	4,732	0.8	17.4	16.3	23.2	11.8	18.7
울산	97,213	91,513	92,400	16.1	1.0	-5.0	14.5	-0.4	-4.2
세종	279	904	1,020	0.2	12.9	5.6	17.8	5.5	23.0
경기	87,980	102,005	111,641	19.5	9.4	14.7	4.1	8.1	11.4
강원	2,142	2,173	2,070	0.4	-4.8	-11.8	-3.8	-5.6	2.5
충북	12,045	13,735	14,196	2.5	3.4	5.2	-3.8	-1.0	13.8
충남	61,752	64,282	65,112	11.4	1.3	0.0	6.4	0.9	-1.6
전북	12,007	10,116	8,556	1.5	-15.4	-30.6	-10.3	0.7	-17.1
전남	41,906	41,402	39,112	6.8	-5.5	-9.0	-1.7	-2.6	-9.0
경북	52,109	53,765	51,476	9.0	-4.3	2.0	-6.1	-3.1	-9.1
경남	55,961	51,859	51,142	8.9	-1.4	0.1	-8.5	3.5	0.9
제주	108	103	106	0.0	3.0	-0.3	14.7	7.0	-3.2

자료 : 한국무역협회

주요 품목별로 대전은 2014년 지역 내 수출금액에서 10.1%를 차지하고 있는 원동기 및 펌프(462.2%)의 대미국, 대일본 수출이 폭증하면서 지역 수출의 고공행진이 나타났다. 세종의 높은 수출 증가율은 지역 수출의 66.4%를 차지하고 있는 평판디스플레이(66.4%) 수출이 크게 늘어난데 기인한다. 대구는 섬유식품 수출은 줄어들었으나 지역 내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부품 수출이 견조한 증가세(12.6%)를 보였으며, 비중은 낮지만 조명기기 수출도 지역 수출에 한 몫을 담당하고 있다. 부산은 하반기부터 시작된 위탁 완성차의 수출과 이와 동반된 자동차부품 수출이 지역 수출을 견인하고 있다. 비교적 견조한 수출 증가세를 보인 지역 중에서 경기도는 지역 내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24.7%)와 무선통신기기(11.4%), 인천은 자동차(-11.4%) 수출은 줄었으나 철강관(153.6%) 수출이 크게 늘어났다.

반면 전북은 자동차(-35.4%), 자동차부품(-37.6%), 전남은 석유제품(-12.9%), 강원은 자동차부품(-18.5%) 등이 지역 수출 감소를 주도하였다. 그 외 경북은 무선통신기기(-3.0%), 평판디스플레이(-19.0%), 경남은 선박해양구조물(-1.0%) 수출이 부진하였다.

표 1-1-6 지역 주요 품목별 2014년 수출

(단위 : %)

	품목명	비중	증감률	품목명	비중	증감률	품목명	비중	증감률
서울	자동차부품	10.1	7.6	평판디스플레이	7.8	-18.3	합성수지	6.6	26.3
부산	자동차부품	11.8	33.9	자동차	10.0	21.5	철강관	5.6	3.7
대구	자동차부품	15.0	12.6	인조장섬유식품	6.7	-0.6	조명기기	3.6	74.6
인천	자동차	17.8	-11.4	철강관	10.6	153.6	자동차부품	9.3	3.0
광주	자동차	38.7	15.5	반도체	23.5	-11.7	냉장고	9.6	12.0
대전	원동기및펌프	10.1	462.2	기호식품	9.4	7.4	공기조절기	9.4	-7.5
울산	석유제품	31.8	-1.0	자동차	18.5	2.5	선박해양구조물	13.3	30.4
세종	평판디스플레이	25.3	66.4	기구부품	16.3	-40.6	자동차부품	9.0	-4.8
경기	반도체	24.7	41.0	무선통신기기	11.4	9.3	자동차	11.0	8.7
강원	전자응용기기	17.3	-0.3	시멘트	16.9	5.1	자동차부품	16.5	-18.5
충북	반도체	33.3	-1.8	건전지및축전지	7.7	13.2	플라스틱 제품	6.5	4.8
충남	반도체	27.7	1.7	평판디스플레이	15.8	-3.0	석유제품	8.6	8.1
전북	자동차	20.9	-35.4	정밀화학원료	12.6	18.7	자동차부품	9.1	-37.6
전남	석유제품	36.2	-12.9	합성수지	21.6	1.2	철강관	11.7	2.4
경북	무선통신기기	20.3	-3.0	철강관	16.1	3.9	평판디스플레이	11.4	-19.0
경남	선박해양구조물	46.0	-1.0	자동차부품	5.5	13.8	원동기및펌프	3.8	-6.4
제주	어류	29.3	-15.8	반도체	22.1	740.2	산식물	9.9	-8.3

주 : MTI 3단위 기준으로 지역 내 수출금액 순위 3위내 품목

자료 : 한국무역협회

4. 고용동향

2014년 전국 취업자는 전년보다 2.1% 늘어난 2,560만명을 기록하였으며, 분기별로는 연초에 전년동기대비 3.0%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이후 취업자 증가세는 둔화되었다. 지역별로는 충북(4.4%), 광주(4.0%), 경기(4.0%) 순으로 전년대비 증가율이 높았으나, 충북은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보다는 임시근로자²⁾ 증가폭이 컸던 반면 광주와 경기는 상용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등 지역 간 고용향상의 질적 차이가 존재하였다. 전남(-0.7%), 전북(-0.1%)은 유일하게 취업자가 줄어든 지역으로서 공통적으로 임금근로자는 늘었으나 경기침체로 인한 자영업자 감소가 상대적으로 컸다. 그 외 제주(3.6%)는 임시근로자의 증가폭이 컸으며 경북(2.5%)은 상용근로자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표 1-1-7 지역별 고용동향(취업자)

(단위 : 천명, %)

구분	2012	2013	2014						
			취업자수	지역간 비중	전년 또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연간	1/4	2/4	3/4	4/4
전국	24,681	25,066	25,599	100.0	2.1	3.0	1.8	2.0	1.7
서울	5,036	5,097	5,146	20.1	1.0	2.4	0.6	0.5	0.3
부산	1,628	1,644	1,667	6.5	1.4	-0.4	0.8	3.1	2.1
대구	1,204	1,195	1,215	4.7	1.7	0.5	1.4	3.1	1.5
인천	1,413	1,442	1,469	5.7	1.9	2.9	2.1	2.1	0.3
광주	685	708	736	2.9	4.0	4.8	5.2	4.6	1.0
대전	726	736	765	3.0	3.9	3.2	3.0	5.3	4.4
울산	547	546	546	2.1	0.0	1.9	-0.9	-0.9	-0.4
경기	5,923	5,988	6,226	24.3	4.0	4.9	4.1	3.7	3.2
강원	694	698	711	2.8	1.9	-0.8	1.8	2.3	4.2
충북	751	776	810	3.2	4.4	5.7	4.0	4.9	3.2
충남	1,056	1,137	1,158	4.5	1.8	6.0	0.8	0.4	0.5
전북	847	876	875	3.4	-0.1	0.0	-0.6	-1.2	1.4
전남	911	915	909	3.6	-0.7	-1.2	-0.6	-1.5	0.9
경북	1,377	1,386	1,420	5.5	2.5	4.2	1.5	2.3	2.0
경남	1,588	1,619	1,632	6.4	0.8	3.5	0.1	0.1	-0.2
제주	296	305	316	1.2	3.6	6.4	2.9	3.3	2.9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 상용근로자는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고용계약 미설정 시 소정의 채용절차에 의해 입사하여 인사관리 규정을 적용받는 사람을 의미한다. 임시근로자는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이거나 고용계약미설정시 일정한 사업(완료 1년 미만)의 필요에 의해 고용된 경우에 해당된다.

산업별로는 전체 취업자의 17%를 차지하는 제조업 취업자가 3.5% 늘어났으며, 70%를 넘는 비중을 차지하는 서비스업은 2.4% 증가에 그쳤다. 지역별로 제조업 취업자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경기(8.9%), 강원(8.7%), 경북(8.4%) 순으로 나타난 반면 제주(-7.1%), 전북(-5.6%), 대구(-4.7%)에서는 제조업 취업자가 줄어들었다. 한편 서비스업 취업자는 제주(11.8%), 충북(6.3%), 경북(5.1%) 순으로 많이 증가한 가운데, 울산(-4.5%)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줄어들었다.

표 1-1-8 지역 산업별 2014년 취업자

(단위 : 천명, %)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지역내 비중	전년대비 증감률		지역내 비중	전년대비 증감률		지역내 비중	전년대비 증감률
전국	4,330	16.9	3.5	1,796	7.0	2.4	18,009	70.4	2.4
서울	493	9.6	4.0	326	6.3	-1.5	4,322	84.0	0.8
부산	278	16.7	-3.5	125	7.5	2.5	1,254	75.2	2.8
대구	241	19.8	-4.7	91	7.5	3.4	852	70.1	3.9
인천	319	21.7	-4.2	105	7.1	11.7	1,023	69.6	4.3
광주	108	14.7	3.8	73	9.9	9.0	532	72.3	3.5
대전	80	10.5	8.1	64	8.4	4.9	613	80.1	3.5
울산	206	37.7	7.9	35	6.4	-2.8	298	54.6	-4.5
경기	1,217	19.5	8.9	465	7.5	10.5	4,401	70.7	2.2
강원	50	7.0	8.7	56	7.9	5.7	507	71.3	0.8
충북	159	19.6	1.9	52	6.4	6.1	503	62.1	6.3
충남	249	21.5	0.8	67	5.8	-11.8	680	58.7	4.9
전북	118	13.5	-5.6	67	7.7	-1.5	556	63.5	2.4
전남	83	9.1	7.8	74	8.1	1.4	517	56.9	0.0
경북	284	20.0	8.4	85	6.0	-8.6	787	55.4	5.1
경남	432	26.5	2.1	88	5.4	-9.3	940	57.6	1.7
제주	13	4.1	-7.1	22	7.0	-8.3	228	72.2	11.8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제2장 지역발전정책 추진경과 및 실적

제1절 박근혜정부의 지역발전정책

1. 지역발전정책 추진경과

해방 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추진한 지역발전정책은 크게 2000년대 이전과 이후로 구분할 수 있다. 2000년대 이전은 1960~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960~1970년대에는 빈곤의 탈피와 자립경제의 기반구축을 위해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추진되고 특정지역에 국가산업단지 및 수출산업단지가 조성되었다. 1980년대는 경제발전과정에 나타난 지역간 불균형 발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되는 한편 지방중소도시와 농어촌지역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이 추진되었다. 1990년대에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법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추구하는 한편,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을 통해 생산적·자원절약형 국토형성과 국토환경의 보전이 강조되었다.

국내에서 지역발전정책이 특별법, 특별회계, 추진체계(대통령 자문위원회 등)를 토대로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2000년대 들어 참여정부부터라고 할 수 있다. 참여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핵심적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혁신주도형 발전과 다극분산형 발전을 위해 세종시, 혁신도시, 기업도시를 추진하였다. 이명박정부는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다'라는 인식하에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광역화 정책과 지방분권 정책을 도입하였다. 2013년에 출범한 박근혜정부는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체감형 지역발전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지역행복생활권을 도입하는 한편, 지역의 자율과 연계, 부처 간 협업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지역발전정책을 돌이켜 보면, 초기에는 제한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경제성장의 기반 구축에 정책적 관심이 집중되었지만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수도권 집중과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면서 지역 간 균형발전, 사회통합,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 등

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발전정책의 방향과 전략이 지속적으로 수정·보완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표 1-2-1 지역발전정책 추진경과

시기		배경·목표	주요정책
1960~197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빈곤의 악순환 탈피· 자립경제기반 구축· 공업화 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72~1981년)· 지방공업개발법 제정(1970년)· 공업단지 및 수출산업단지 조성
198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장과 복지의 조화· 수도권 집중억제· 지방중소도시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82~1991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 제1차 수도권정비계획(1984~1996년)
199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분산형 국토골격 형성· 생산적·자원절약형 국토형성· 국토환경의 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92~2001년)·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1997~2011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법(1994년)· 8개청 3개 기관을 대전청사로 이전
2000년대	참여정부 (2003~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균형발전으로 국민통합· 혁신주도형 발전· 다극분산형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2004년)·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 및 수정계획(2006~2020년)·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2004~2008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운영· 세종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균형정책
	이명박정부 (2008~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향상· 광역화와 연계협력 활성화· 특화발전과 지방분권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2009)· 지역발전5개년계획 수립(2009~2013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운영· 광역경제권·기초생활권·초광역개발권 3차원 정책·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사무국) 구성·운영
	박근혜정부 (2013~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주민의 정책 체감도 제고· 행복한 삶의 기회 균등 보장· 자율적 참여와 협업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2014)· 지역발전 5개년계획(2014~2018년) 수립· 지역발전특별회계 운영· 지역(행복)생활권 및 경제협력권 도입· 포괄보조금 확대 등 지역자율성 제고

표 1-2-2 2000년대 이후 지역발전정책 비교

구분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정책주도	· 중앙정부 주도	▶ 주민·지자체 주도
정책단위	· 5+2 광역경제권	▶ 지역행복생활권
추진방식	· 하향식 정책	▶ 상향식·주민체감 정책
지원방식	· 부처별 산발적 지원	▶ 맞춤형·패키지 지원(부처협업)

2. 비전 및 추진전략

박근혜정부 지역발전정책의 비전 및 추진전략은 2013년 7월 18일에 개최된 제1차 지역발전위원회 회의를 통해 제시되었다. 지역발전위원회는 ‘국민에게 행복을, 지역에 희망을 주기 위한 지역희망(HOPE) 프로젝트’를 지역발전정책의 비전으로 제시하였다. 지역희망 프로젝트는 주민이 현실 생활에서 행복과 희망을 체감(Happiness)하고, 행복한 삶의 기회를 고르게 보장받고(Opportunity), 자율적 참여와 협업(Partnership)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정책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다는(Everywhere) 정책의지를 담고 있다.

이러한 지역발전정책의 비전을 제시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은 반세기만에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고 최근에는 문화, 스포츠, 외교 등 여러 분야에서 국가의 위상을 높여가고 있지만, 국내적으로 보면 지역주민의 삶의 터전인 지방도시와 농촌이 함께 쇠퇴하면서 성장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또한 양질의 일자리 등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문화·교육·보건·의료 등 삶의 질 분야에서 지역간의 발전격차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지역주민들은 중후장대형 발전사업보다는 일상생활에서 본인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지역사업과 행정구역을 넘어서 전개되는 통근, 통학, 여가, 쇼핑 등 생활권에 토대를 둔 지역사업에 높은 선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정책 환경의 변화와 기 추진했던 지역발전정책의 평가를 토대로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의 비전과 전략을 설정하게 되었다.

지역발전위원회는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지역행복생활권 구현, 맞춤형·패키지 지원, 지역주도 및 협력 강화를 3대 추진전략으로 제시하였다. 첫 번째 전략은 지역행복생활권 구현전략으로서 지역행복생활권은 마을, 읍면, 도시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면서 기초 인프라부터 일자리, 교육, 문화, 복지 등 고도수준의 서비스까지 충족되는 생활공간을 의미한다. 시·군이 인구분포,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자발적으로 생활권을 설정하고 발전계획을 수립하면 정부는 유형별로 차별화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두 번째 전략은 맞춤형·패키지 지원 전략으로서 중앙정부는 주민·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행복과 희망증진 효과가 높은 과제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부처 협업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개별부처의 시책을 조정하여 패키지

형태로 지원할 계획이다. 세 번째 전략은 지역주도 및 협력강화 전략으로서 사업기획, 집행의 과정에서 지역의 자율과 책임의 범위를 확대하고 주민참여와 지역공동체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그림 1-2-1 지역발전정책의 비전과 추진전략



3. 주요 추진시책

이러한 비전과 추진전략에 따라 중점적으로 추진할 주요 시책으로 6대 분야 17개 추진과제가 제시되었다. 첫 번째 분야는 지역행복생활권 기반 확충으로서 지역 중심지 활력 증진, 주민체감 생활환경 개선, 지역주도·협력 발전체계 구축을 추진과제로 포함하고 있다. 두 번째 분야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로서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지역산업정책의 전환, 지역투자 촉진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산업단지를 창조경제의 거점으로 육성, 농어촌 일자리 확충을 추진과제로 제시하였다. 세 번째 분야는 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으로서 지방 초중고교 교육여건 개선, 지방 대학 특성화, 지역인재와 기업의 선순환 성장을 추진과제로 포함하고 있다. 네 번째 분야는 지역문화 융성 및 생태 복원으로서 지역 문화역량 강화 및 특성화 발전 지원,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 생태·자연환경 보존·활용을 추진과제로 제시하였다. 다섯 번째 분야는 사각 없는 지역의 복지·의료로서 지역 맞춤형 복지 지원, 취약지역 공공의료 체계 정비를 추진과제로 포함하고 있다. 여섯 번째 분야는 지역균형발전 시책의 지속 추진으로서 혁신도시·세종시의 보완 발전, 지역공약 이행 지원을 추진과제로 제시하였다.

표 1-2-3 주요 추진시책(6대분야 17대 추진과제)

① 지역행복생활권 기반 확충 ① 지역중심지 활력 증진 ② 주민체감 생활환경 개선 ③ 주민 주도·협력 발전체계 구축	②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회복 ④ 일자리 창출중심으로 지역산업정책의 전환 ⑤ 지역투자 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⑥ 산업단지를 창조경제의 거점으로 육성 ⑦ 농어촌 일자리 확충
③ 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⑧ 지방 초중고교 교육여건 개선 ⑨ 지방 대학 특성화 ⑩ 지역인재와 기업의 선순환 성장	④ 지역문화 융성 및 생태 복원 ⑪ 문화역량 강화 및 특성화 발전 ⑫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 ⑬ 생태·자연환경 보존·활용
⑤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⑭ 지역 맞춤형 복지 지원 ⑮ 취약지역 공공의료체계 정비	⑥ 지역균형발전 시책 지속 추진 ⑯ 혁신도시·세종시 보완 발전 ⑰ 지역공약 이행 지원

제2절 지역발전정책 추진실적

1. 지역발전정책의 제도적 기반마련

(1) 지역발전위원회 및 시도발전협의회 구성·운영

지역발전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한 대통령 소속의 자문위원회로서 지역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련 중요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13년 6월 19일 이원중 위원장을 포함한 19명의 위원을 선임함으로써 제3기 지역발전위원회가 출범하였다.³⁾ 지역발전위원회는 2013년 7월 18일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박근혜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발표하였다. 지역발전위원회는 2013년 7월 18일 제1차 지역발전위원회 개최를 시작으로 2014년 말까지 총 11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지역발전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였다.

한편 17개 시·도에는 시·도 발전 및 생활권 관련 심의·협의·조정을 위해 시·도 생활권발전협의회를 설치·운영하였다.⁴⁾ 지역발전위원회는 생활권발전협의회 구성·운영 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고(2014년 1월),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국비 32억 원을 지원하였다. 생활권발전협의회별로 공무원 및 연구원 등 4~5명의 인력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생활권 발전계획의 수립 및 추진 지원, 지역생활권과 관련된 연구·조사·분석 업무 등을 수행토록 하였다. 시·도 생활권발전협의회는 2014년 9월까지 구성·완료되었고, 지역발전위원회는 17개 시·도와 지역발전협력 공동선언 개최(2014년 7~10월, 3회), 합동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지역발전정책을 공유하고 소통을 강화하였다.

3) 2014년 1월 공포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르면 지역발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된다. 당연직위원은 관계부처 장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고 있다. 위촉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따른 협의체의 대표자가 추천한 자, 지역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로 하고 있다.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며 위촉위원은 20명 이내로 하며, 위촉위원의 과반수는 위촉일 현재 1년 이상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주소를 둔 자로 하고 있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으며,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있다.

4) 시도지사는 사도의 특성 있는 발전과 지역생활권에 관한 중요 사항의 협의·조정 등을 위하여 시·도 생활권발전협의회를 둘 수 있다.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표 1-2-4 지역발전위원회 개최실적

차수	개최일	장소	심의·의결 안건
1차	13.07.18	BH	· 지역희망(HOPE) 프로젝트
2차	13.08.27	지역위	· 2012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안) · 농림수산물식품기술원과 농림교육문화정보원의 지방이전계획(안) ·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9개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 변경(안) · 지역발전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 지역행복생활권 추진전략 · 2014년도 지역발전 예산편성에 관한 의견
3차	13.10.30	지역위	· 지역행복생활권 추진 가이드라인(안) ·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등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 변경(안) · 2014년도 지역발전사업 평가계획(안) · 지역발전 5개년계획(2014~2018년) 수립 추진계획(안) · 지역산업 혁신역량 강화 방안 · 농어촌 중학교 집중 육성 방안 · 지방이전 공공기관 임시사택 및 숙소기준(안)
4차	14.01.27	서면심의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전공공기관 지정(안) · 주택관리공단 등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 변경(안)
5차	14.03.12	BH	· 지역주도 발전전략 · 중앙정부의 맞춤형 지원방안
6차	14.04.04	서면심의	· 지역발전 5개년계획(2014~2018년) 수립지침(안)
7차	14.05.16	지역위	· 농림수산물검역본부 등 7개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 변경 · 지역산업육성사업 개편(재정비) · 지역행복생활권 추진상황 및 향후 일정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주요내용
8차	14.06.17	지역위	· 15년 지역발전시책의 투자방향 및 예산편성 의견(안) · 2013년도 지역발전사업 평가결과 · 지역발전 5개년계획(안) 수립 현황 및 추진 계획 · 14년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선정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산학협력 선도대학육성사업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9차	14.07.18	산업부 세종청사	· 2013년도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채택 · 지역발전 정책추진 1주년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10차	14.09.16	지역위	· 지역행복생활권·특화발전 프로젝트 · 성장촉진지역 재지정 · 한국관광공사 등 3개 이전기관의 지방이전계획 변경 · 2014 지역희망박람회 개최계획 보고
11차	14.11.12	지역위	· 지역발전 5개년계획(2014~2018년)(안) · 2015년도 시행계획 수립지침(안) · 2014년도 지역발전사업 평가계획(안) · 축산물품질평가원 등 3개기관 이전공공기관 지정방안 · 축산물품질평가원 등 3개 기관의 지방이전계획(안) · 국토연구원 등 8개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변경(안)

(2)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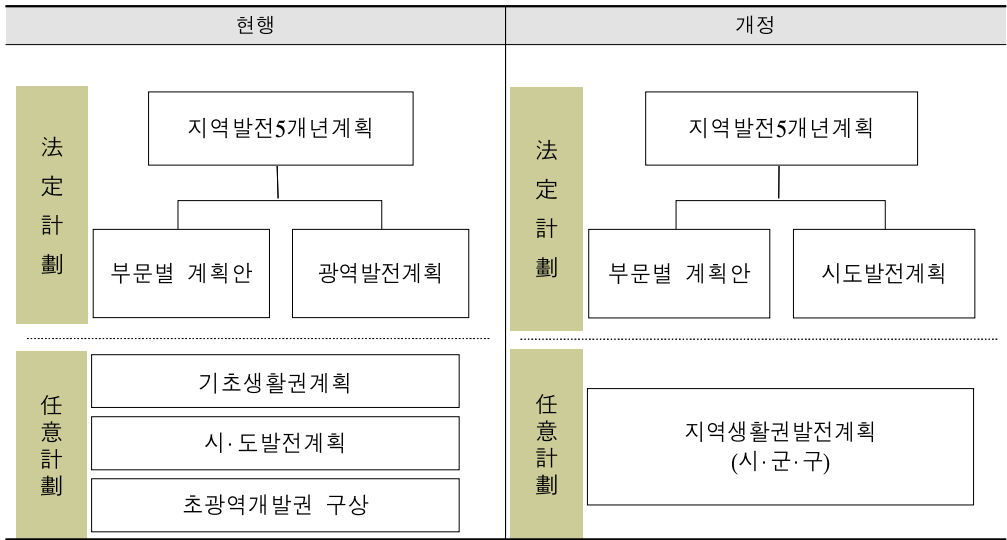
박근혜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전면 개정하였다. 2013년 8월 27일에 제2차 지역발전위원회를 개최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한 이후,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2013년 9월 17일~10월 7일), 토론회 개최(우윤근·완주 국회의원 주최, 2013년 10월 4일)를 거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2013년 10월 31일에 제320회 정기국회에 제출되었다. 제출된 법안은 여당, 야당, 정부의 합의를 거쳐 2013년 12월 26일 제321회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2014년 1월 7일 공포·시행되었다. 동법 시행령은 3월 11일 공포·시행되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크게 5개의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지역발전 개념의 확대 및 지역자율에 의한 권역 설정이라 할 수 있다.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의 목표인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생활권 및 경제협력권의 도입이 필요함에 따라 지역발전 개념을 기존의 지역경쟁력 강화 중심에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경·확대하였다. 그리고 지역생활권과 경제협력권을 설정함에 있어 지역의 주도성과 자율성을 보다 강화하였다. 지역생활권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일자리 및 교육·문화·복지·주거·안전·환경 등의 생활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시(특별시, 광역시 포함)·군(광역시의 군을 포함)·구(자치구를 말함)가 인근 시·군·구와 협의하여 설정한 권역을 말한다. 한편, 경제협력권은 지역의 경제발전과 성장잠재력 확충에 필요한 산업 및 교통 등의 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특별자치도가 협의하여 설정한 권역을 지칭한다.

둘째, 시·도가 중심이 되는 지역발전계획의 수립·추진이라 할 수 있다. 지역생활권과 경제협력권이 새롭게 도입되고 기존 5+2 광역경제권 정책이 폐지됨에 따라 지역발전계획 체계를 새롭게 정비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시·도 발전계획을 법정계획으로 하되, 부문별 발전계획안과 함께 지역발전5개년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생활권을 공동으로 설정하는 시장(특별시시장, 광역시장 포함)·군수·구청장은 지역생활권발전계획(임의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도록 하였다. 한편, 종전의 5+2 광역경제권 정책의 폐지로 인해, 광역경제권발전계획과 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에

관한 규정은 삭제되었다.

그림 1-2-2 지역발전계획 수립체계의 정비



셋째,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의 비전과 전략에 따라 주민생활 인프라 확충, 지역 교육 여건 개선, 환경보전, 지역 복지·보건의료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시책을 반영하기 위해 지역발전시책을 개정·보완하였다. 국토의 다원적 개발(광역경제권, 초광역개발권) 등 획일적 공간 단위의 개발시책을 지역생활권, 경제협력권 등 지역 주도의 추진 시책으로 전환하였고, 종전의 대학 중심의 지원시책을 초·중·고까지 지원 시책(예: 비수도권 소재의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에 대해 동일 지역의 대학에서 별도 선발, 지역 초·중·고등학교 교육여건 개선)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특히, 기존 지역발전정책에서 제외되었던 지역의 복지 및 보건의료 시책(예: 복지전달체계, 공공의료 전달체계 및 응급의료체계 구축, 건강증진·건강관리서비스 등 사회복지서비스 확대, 보건의료 인력육성 및 인프라 확충 등), 환경 보전 등에 관한 시책(예: 생태복원, 자연환경의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였다.

넷째, 지역발전위원회의 기능 강화이다. 지역발전위원회가 부처간 협업, 지역소통의 창구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상과 권한의 강화가 필요하였다. 지역발전위원

회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특별법에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사항 확대, 각 부처 주요 지역발전정책에 관한 의견 제시 및 추진상황 점검,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시 지역발전위원회의 의견 반영이 포함되었다.

다섯째,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의 추진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특별회계를 개편하였다. 기존의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명칭을 지역발전특별회계로 변경하고, 특별회계에 포함된 내부 계정을 지역개발계정은 생활기반계정으로 광역발전계정은 경제발전계정으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특별회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포괄보조금 편성권한을 현행 시·도에서 시·군·구까지 확대하였고 사업비 집행 잔액의 계정간 사용 불허 및 전용절차 폐지를 통해 집행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지역의 자율성을 확대하였다.

2. 지역발전정책의 구체화 및 소통

(1) 지역행복생활권 정책 구체화

지역발전위원회는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발전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추진하였다. 지역행복생활권은 주민들이 불편 없이 기초인프라, 일자리, 교육·문화·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일상생활의 공간으로 이웃 시·군이 연대하여 자발적으로 설정한 권역으로서 2014년 말 기준으로 중추도시권 20개, 도농연계권 13개, 농어촌생활권 21개, 시범생활권 2개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발전위원회는 2013년 7월 18일 발표한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의 비전과 방향 아래 수차례의 전문가 회의 및 지자체·관계부처의 의견수렴, 지역생활권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그 결과 2013년 11월 지역행복생활권 추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발표하고, 2014년 1월 지역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지역에서는 인근 지자체들 간 자율적 협의로 56개 생활권을 구성하고 지역행복생활권 관련 과제 및 선도사업 후보 사업을 발굴·제안하였다(2014년 2월).

우선, 생활권 후보 과제는 2,176건이 제안되었으며 이 중 1,488건이 선정되었다. 분야별로는 생활인프라 조성 등 생활기반(756건), 관광자원 개발·생태보전 등 문화·환경(334건), 지역특화산업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활력 제고(208건), 위험도로 개선

등 안전(100건), 취약지역 응급의료강화 등 의료·복지·교육(90건)이었다. 부처별로는 농식품부(607건), 문체부(199건), 국토부(190건), 환경부(163건), 행자부(115건), 복지부(75건) 순이었다. 지역요구가 높고 주민 삶의 질 개선에 효과가 높은 31개 부처사업에 대해 전년 대비 3천억 원 증액한 3.4조원으로 2015년 예산에 반영하였다.

표 1-2-5 주요 생활권 과제

① 생활권 기반확충 및 노후·안전시설 정비	도심낙후지역정비/농어촌상하수도보급/버스정보제공/석면슬레이트지붕철거/지방도로구조개선 등
②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제고	도시유희인력·과농어촌연계/귀농·귀촌활성화서비스/노후산단구조조도화/산업혁신지원센터 구축 등
③ 교육여건 개선	농어촌 거점별 우수학교 선정/읍면동 행복학습센터 운영/지방기업 맞춤형 R&D인력양성 등
④ 문화·환경여건 개선	작은도서관·생활문화센터 운영/문화특화지역조성/위생적인 폐기물 시설 설치/지방하천 생태복원 등
⑤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체계 구축	복지전달체계 강화/복지담당 공무원 6천명 확충/응급의료네트워크 강화 등

다음으로, 지역간 연계협력 추진을 통해 지역행복생활권 구현을 뒷받침하는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의 경우, 118건이 제안되었으며 이 중 35건이 선정되었다. 생활권별로는 중추도시생활권 14개, 시범생활권 1개, 도농연계생활권 7개, 농어촌생활권 13개였다. 선정된 사업은 3년간 최대 60억 원 이내에서 국비가 지원(보조율 80%)되며, 재정자주도가 낮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국고보조율을 우대 적용할 수 있다. 선정된 사업은 '수혜 범위가 넓은 주민 체감형 서비스 제공', '생활권간 협력을 통한 NIMBY 문제 해소', '지역간, 도·농간 협력을 통한 일자리 연계', '생활권이 공유하는 특화자원의 공동 활용'과 관련이 깊다. 2014년 생활권 선도사업 예산은 650억원이었다.

지역별 특성, 지역의 비전과 발전전략 부합성,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5개 광역 시도별 특화발전 프로젝트를 상향식으로 선정(2014년 9월)하였다. 5년간(2014~2018년) 총사업비 3.5조원(국비 2.0조원) 수준을 지원할 계획이다. 2014년 말 현재 대부분의 사업이 사업자 선정 절차에 착수하는 등 본격 추진 중이다.

표 1-2-6 2014년 신규 선도사업

구분	사업명	참여 지자체
서울	종량천 녹색문화벨트	의정부, 노원, 성북
경기	평안 해오름길 조성	평택, 안성
강원권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	원주, 횡성
충청권	대청호권 생태창조마을	대전, 옥천, 금산
	일자리 중심 Hub	청주, 청원, 진천, 괴산, 증평, 보은
	행복학습공동체 운영	증평, 청원, 진천, 괴산, 음성
	도·농 일자리 지원 센터	단양, 제천
	복합문화정보센터 조성	천안, 아산
	백제숨길 따라 한걸음씩	공주, 부여, 청양
호남권	한뿌리 생활권 프로젝트	광주, 나주, 화순
	취약지 응급협진시스템 구축	광주, 나주, 장성, 담양, 화순, 함평
	새(New) 일(Job) 프로젝트	익산, 전주, 군산
	오순도순 행복마을 만들기	정읍, 고창, 부안
	도농협력 농업인력지원센터	임실, 남원, 순창
	오지마을 지방상수도 공급	진안, 장수
	박물관·미술관 협력 사업	목포, 해남, 진도, 신안, 무안
	패류 종묘 배양장 공동활용	보성, 여수, 광양
	도농협력 일자리 연계	담양, 구례, 곡성
	치매거점병동 운영	장성, 함평, 영광
	여객선 이용객 편의시설 확충	완도, 장흥
	DREAM 일자리 나눔	나주, 화순
영남권	W-line 프로젝트	부산, 김해, 양산, 울주
	폐기물매립시설 공동이용	양산, 김해
	신의 물방울 사업	대구, 청도
	영남알프스 Mountain Top	울산, 양산, 밀양
	낙강선유 명품 원예단지 조성	성주, 고령
	스포츠를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	군위, 의성
	철도역사 문화관광자원화	봉화, 영주
	동해안권 친환경 통합 관광	영덕, 포항, 경주, 울진, 울릉
	경남인력 지원센터 설치	거창, 함양, 산청
	나전칠기 연계 육성사업	통영, 고성
제주권	제주 올레 길 주민 행복 사업	서귀포시, 제주시
기타	에코힐링 벨트화 사업	영월, 단양, 영주
	호두 특화산업단지	김천, 영동, 무주
	DMZ사과 명품화 단지조성	포천, 철원, 연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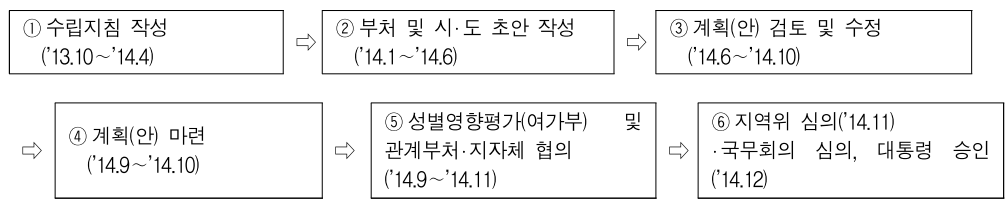
표 1-2-7 시도별 특화발전 프로젝트 현황

시·도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프로젝트	영상	SW 융합	서비스 산업허브	문화 콘텐츠	국방 ICT	친환경 전지	DMZ생태 평화벨트	건강 생명
시·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프로젝트	바이오	디스플레이	농생명	해양 관광	IT 융복합	항공	용암수 융합	-

(2) 지역발전 5개년계획(2014~2018년) 수립

지역발전 5개년계획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조에 따른 5년 단위의 법정계획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전략적 종합계획, 5년 단위의 중기적 실행계획, 중앙-지방간 공동·협력계획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지역발전 5개년계획은 부처가 수립하는 부문별 발전계획안과 시·도가 수립하는 시·도발전계획을 기초로 수립된다. 지역생활권 발전계획은 계획 수립 여부를 시·군·구 자율에 맡기고 있으나 시·도발전계획에 지역생활권발전계획의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상위계획과 연계를 통해 계획의 실천성을 높이도록 하고 있다. 지역발전위원회는 관계부처 및 시·도와 협업을 통해 지역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하였다.

표 1-2-8 지역발전 5개년계획(2014~2018년) 수립과정



지역발전 5개년계획은 2018년까지 ①지역행복생활권 활성화, ②지역일자리 창출, ③교육여건 개선, ④지역문화 융성, ⑤복지의료체계 개선 등 5대 분야에 총 165조원을 투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비 지원총액은 109조원(총 투자액의 66.2%)으로서 제1차 지역발전 5개년계획(2009~2013년)의 92조원에 비해 약 17조원 증가한 규모다. 재원별로는 국비 109조원(66.2%), 지방비 40조원(23.9%), 민간투자 16조원(9.9%)이며 분야별로는 다음 표와 같다.

표 1-2-9 5대 분야별 국비 재원소요 계획

①지역 행복 생활권 활성화	②지역 일자리 창출	③교육여건 개선	④지역 문화 융성	⑤사각 없는 복지·의료
89.6조원 (54.2%)	37.7조원 (22.8%)	8.4조원 (5.1%)	15.6조원 (9.5%)	13.9조원 (8.4%)

표 1-2-10 지역발전 5개년계획(2014~2018년)의 분야별 주요지표

	2014년 현재	5년 뒤
① 생활권 활성화		
▪ 농촌공동체회사	13개소	100개소
▪ 농어촌 상하수도 보급률	65%	80.5%
▪ 전국 도시가스 보급률	76%	81%
▪ 도시재생지역	13개소	118개소
② 지역경제 활력 제고		
▪ 투자선도지구	-	14개소
▪ 도시첨단산업단지	14개소	30개소
▪ 미니복합타운 지정	5개소	12개소
▪ 6차산업화주체	300개소	1,000개소
▪ 로컬푸드 직매장	62개소	120개소
③ 교육여건 개선		
▪ 특성화 전문대학	78개교	100개교
▪ 고등학교 기업맞춤반	741개소	1,000개소
▪ 산업기술명장대학원	-	4개교
▪ 행복학습센터	60개소	227개소
④ 문화융성, 생태복원		
▪ 산업단지 등 문화재생	11개소	70개소
▪ 작은 도서관 / 영화관	36개소 / 22개소	160개소 / 91개소
▪ 문화도시 / 문화마을	1개소 / 2개소	15개소 / 50개소
▪ 생태관광지역	12개소	35개소
⑤ 사각 없는 의료·복지		
▪ 광역·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12개소 / 199개소	17개소 / 237개소
▪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	6개소
▪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1개소	10개소
▪ 분만취약지 의료기관	30개소	48개소

(3) 지역발전정책의 홍보 및 공감대 확산

1) 지역희망박람회 개최

정부는 박근혜정부 2년차를 맞아 ‘지역희망·주민행복’ 등을 중심으로 본격 추진 중인 다양한 지역발전 정책과 사례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2014 대한민국 지역희망박람회’를 2014년 12월 3일부터 6일까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였다. 2014년 지역희망박람회는 ‘지역에 희망을, 주민에게 행복을!’이라는 슬로건 아래 지역발전위원회, 17개 시·도, 산업부 등 관계부처, 학계, 유관기관, 지역주민 등 지역발전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중앙과 지역, 지역과 지역 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다양한 지역발전정책들을 공유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특히, 2014년은 경제·산업 중심으로 진행된 과거 행사와 달리, 주민이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사례 중심으로 행사를 구성하였다. 나열식 시책 홍보를 지양하고 지역행복생활권과 특화발전프로젝트 중심으로 시·도별 특성화·차별화를 위해 노력했다. 예를 들면, 전북의 로컬푸드 레스토랑, 강원도의 캠핑장, 부산의 영화관, 세종의 스마트교실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따복카페(커피·쿠키), 로컬푸드·어묵 체험, 산소캡슐·4D바이크·항공조정 체험, 팝업 복합문화관(전시·공연·영상), 안전 체험관, 신성장 체험관 등과 같이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고객 중심 행사로 개최하였다.

성과 분석 결과, 개막식(479명, 대통령 참석), 전시회(51,485명), 일자리박람회(4,379명), 컨퍼런스(2,703명) 등에 총 6만여 명이 참석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박람회에는 광주·전남지역 87개 기업, 유관기관, 구직자 4,400여명이 참여하여 지역 일자리 매칭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지역 특화상품전에는 지역별 특화상품 115개를 전시·홍보하고 국내·외 바이어 초청 상담회를 진행하여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고⁵⁾, 지역 BI 경진대회에서는 일반인·대학생 대상으로 비즈니스 아이디어 130건을 발굴하였다.

5) 해외 바이어 대상으로는 중국(12), 일본(12) 등 24개 기업 구매상담 107건(상담액 102.5만달러), 국내 바이어 대상으로는 롯데백화점 등 4개사와 구매상담 23건(상담액 16.6억원)을 달성하였다.

2) 현장 중심의 소통과 공감대 확산

지역발전위원회는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핵심 사업의 성과 창출을 독려하기 위해 주민과 현장 중심의 소통 활동을 강화하였다. 행복생활권 관련 생활권과제의 본격 발굴 및 선도사업 추진을 위한 '생활권 선도사업 워크숍(2014년 6월)' 및 생활권발전협의회 공동워크숍(4회)', 지자체 격려 및 사례 전파를 위한 '지역사업 우수사례 시상식(2014년 9월)', '지역발전사업 평가제도 설명회(2014년 10월~11월)', '창조지역사업에 관한 각계 의견수렴 및 컨설팅(2014년 3월~6월)', '찾아가는 지역발전 공감특강(7회, 지역순회)', 청년들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꿈과 열정의 희망 메시지를 전달하는 '지역희망 콘서트(2014년 10월)' 등 정책 현장방문 및 설명회를 수시 개최하였다. 지역발전위원회는 신임 시도지사(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전북, 전남, 제주) 11명과 정책간담회를 통해 지역발전정책, 행복생활권, 특화발전 프로젝트의 지속적 추진의지를 확인하고(2014년 7월~8월), 지역발전위원회와 17개 시·도 간 「발전협력 공동선언문」을 발표하였다(2014년 7월~10월).

지역발전정책을 소개하고 우수사례를 홍보하는 「지역과 발전」을 연 4회 발간하여 총 14,000권을 대학, 지자체, 도서관, 전문가 등에 배포하였다. 박근혜정부 들어 지역발전정책에 큰 변화가 있었다. 이에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용어 180여개를 엄선하여 「자주 찾는 지역발전정책 용어사전」을 제작·배포하였다(2014년 11월). 주요 정책에 대한 일반대중의 이해를 확산하고 정책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맞춤형 보도자료를 32회 제공하였다. 이와 같은 소통 노력은 박근혜정부의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을 소개하고 범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림 1-2-3 현장 중심의 소통 활동



제3장 지역발전시책의 예산·평가 체계

제1절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편성체계 및 주요 내용

1.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편성체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는 종전 균형발전특별회계와 유사하게 지역개발계정, 광역발전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등 3개의 계정으로 구성된다. 지역개발계정은 시·도 및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으로 구성되며, 광역발전계정은 부처편성사업으로 이루어진다. 제주계정의 경우, 제주자율편성사업과 부처편성사업으로 구분되며, 종전 시·도자율편성사업과 균형발전기반지원 사업간 칸막이를 제거하여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제고하였다.

2014년 1월 7일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를 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하고 지역개발계정은 생활기반계정으로 광역발전계정은 경제발전계정으로 개편하며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을 신설하여 시행하고 있다.

표 1-3-1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와 지역발전특별회계의 편성체계 비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지역발전특별회계	
계정	사업	계정	사업
지역개발계정	① 시·도자율편성사업 ② 시·군·구자율편성사업	생활기반계정	① 시·도자율편성사업 ② 시·군·구자율편성사업
광역발전계정	③ 부처편성사업	경제발전계정	③ 부처편성사업
제주특별 자치도계정	④ 제주자율편성사업 ⑤ 특행기관 이관사무 ⑥ 부처편성사업	제주특별 자치도계정	④ 제주자율편성사업 ⑤ 특행기관 이관사무 ⑥ 부처편성사업
(신설)		세종특별 자치시계정	⑦ 세종자율편성사업 ⑧ 부처편성사업

2.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편성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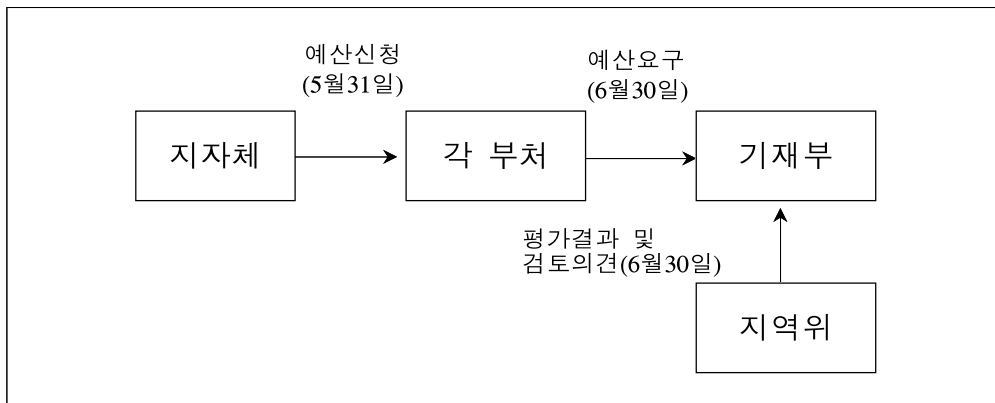
(1) 지자체 자율편성사업

지역개발계정의 시·도 자율편성사업과 기초생활권 관련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제주계정의 제주자율편성사업은 지자체가 사전에 주어진 예산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토록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시·도 협의를 거쳐 시·도/시·군·구별 예산신청한도를 결정·시달하고, 시·도는 신청 한도 내에서 관할 시·군·구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신청사업의 우선순위를 명시한 예산신청서를 소관 부처에 제출한다.

각 부처는 지자체의 예산신청(안)에 대하여 국가정책과의 정합성·중복성 및 사업타당성을 점검하고,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요구한다.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 및 지역발전위원회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지자체와 협의·보완 후 예산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한다.

그림 1-3-1 지자체 자율편성사업 예산 편성 절차('14년 기준)



지자체 자율편성 사업은 25개의 포괄보조금 사업으로 운영되는데 그 중 20개 포괄보조사업은 시·도 자율편성, 낙후지역 개발 등과 관련된 5개 사업은 시·군·구 자율편성으로 운영된다. 시·도는 신청한도 내에서 20개 포괄보조사업 중 선택하여 자원배분

을 하며, 시·군·구는 신청한도 내에서 해당 지역별 기초생활권 개발사업 등을 선택하여 자원 배분을 하게 된다.

표 1-3-2 포괄보조사업 지원 대상

	부처	포괄보조 사업명	2014년 예산 내역사업
시·도 자율 편성 사업	문체부	①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 박물관, 문예회관 등(14개)
		②관광자원 개발	· 관광지 개발 등(3개)
		③체육진흥시설 지원	· 생활체육공원 등(3개)
		④지역문화산업 육성지원	·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등(4개)
	문화재청	⑤문화유산 관광자원화	· 남해안관광벨트 등(4개)
	농식품부	⑥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등(12개)
		⑦농업기반정비	· 밭기반 정비 등(4개)
	해수부	⑧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 어촌어항 관광개발 등(4개)
		⑨어업기반정비	· 지방 어항 등(12개)
		⑩해양 및 수자원 관리	· 연안정비 등(3개)
	농진청	⑪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 농촌지도기반 조성 등(5개)
	산림청	⑫산림경영자원 육성	· 임산물 수출촉진 등(3개)
		⑬산림휴양 · 녹색공간조성	· 휴양림, 수목원 등(6개)
	산업부	⑭지역특성화산업 육성	· 패션산업 지원 등 (19개)
	중기청	⑮전통시장 및 중소유통물류기반 지원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등(2개)
	여가부	⑯청소년시설 확충	· 청소년수련시설 등(2개)
	환경부	⑰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 (도서지역식수원 개발사업 포함)	· 생활용수공급 등(4개)
		⑱자연환경 보전 및 관리	· 자연환경보전 등(3개)
	국토부	⑲대중교통 지원	· 물류단지 지원 등(9개)
		⑳지역거점 조성지원	· 국민임대산단 조성 등(3개)
시·군·구 자율 편성 사업	국토부	㉑성장촉진지역 개발	· 개축지구 지원 등(2개)
	행자부	㉒특수상황지역 개발	· 접경지역 지원 등(15개)
	국토부	㉓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	· 주거환경 개선 등(16개)
	농식품부	㉔일반농산어촌 개발	· 전원마을 조성 등(15개)
	농식품부	㉕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	· 56개 행복생활권 대상

(2) 부처편성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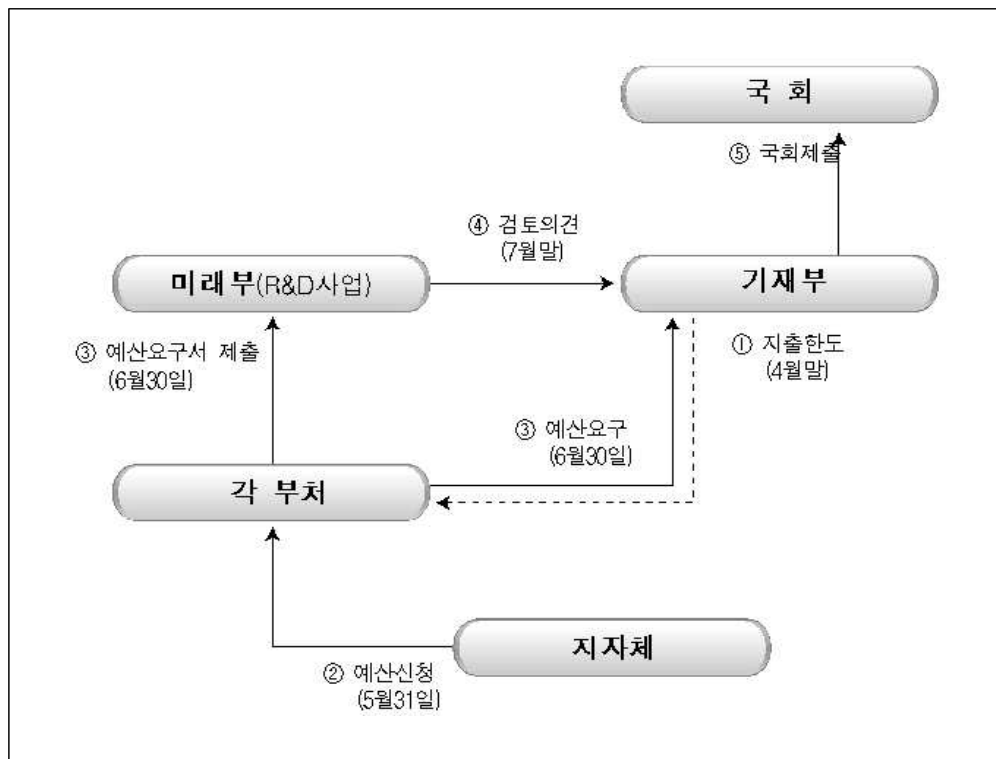
광역발전계정 및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일부 사업(위험도로구조개선, 농수산물 유통

통개선 등)에 대해서는 부처별로 총액 한도를 부여하고, 한도 내에서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예산을 편성한다.

기획재정부는 부처별로 지출한도를 결정하여 시달하고, 지자체는 자체 계획을 토대로 소관 부처에 예산을 신청한다. 각 부처는 사전에 주어진 한도 내에서 지자체 예산신청을 검토하여 작성한 예산요구서를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다. R&D예산의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에도 예산요구서를 6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의 예산요구에 대해 국과위 검토의견 등을 반영하여 예산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한다. 다만, 지역발전위원회는 종전의 예산안 사점검토 대신, 전년도 지역발전사업 평가결과에 대한 검토의견을 6월30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림 1-3-2 부처편성사업 예산편성 절차



3. 2014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주요 내용

(1) 2014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세입 예산

2014년 세입은 주세(32.1%), 일반·특별회계 전입금(59.3%)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주세 세입은 3조 67억 원으로 전년대비 0.9% 감소(30,348→30,067억원)하였고, 일반·특별회계 전입금은 5조 5,549억원으로 전년대비 9.5% 감소(61,362→55,549억원)하였다. 부담금 등 기타 수입은 7,997억원으로 전년대비 0.3% 감소(8,018→7,997억원)하였다.

표 1-3-3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

(단위 : 억원)

구분	2013년		2014년		증감	%
	예산*	구성비	예산	구성비		
합 계	99,728	100.0	93,613	100.0	△6,115	△6.1
○ 주세 100%	30,348	30.4	30,067	32.1	△281	△0.9
○ 전입금(일반+특별)	61,362	61.5	55,549	59.3	△5,813	△9.5
○ 개발부담금 등 기타	8,018	8.1	7,997	8.6	△21	△0.3

주 : * 2013년은 추경 기준

(2) 2014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세출 예산

2014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는 지역개발계정 3.5조원, 광역발전계정 5.5조원, 제주특별자치도계정 0.3조원 등 전년대비 11.8% 감소한 9.4조원으로 편성되었다.

2014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의 주요 특징을 보면 광역경제권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특화산업육성 지원을 강화(2013년, 2,300억원→2014년, 2,576억원)하였으며,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2013년, 2,540억원→2014년, 2,696억원)하였다. 또한 시·군·구 자율편성 사업으로 지역행복생활권협력사업을 신설(2014년 650억원)하여 지자체 자율편성 사업을 25개로 늘렸다.

기능별 세출은 농림수산 분야가 전체 세출의 21.7%로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17.0%), 교통 및 물류(16.1%)등의 순이다. 2013년에 비해서는 통신 분야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15.2%)하였으며, 총액 감소에 따라 과학기

술(△26.6%), 교통 및 물류(△22.6)등이 전년대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표 1-3-4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계정별)

(단위: 억원)

구분	2013년 예산*		2014년 예산		증감	
		구성비(%)		구성비(%)		%
합 계	99,728	100.0	93,613	100.0	△6,115	△6.1
○ 지역개발계정	34,737	34.8	34,773	37.1	36	0.1
○ 광역발전계정	61,449	61.6	55,398	59.2	△6,051	△9.8
○ 제주특별자치도계정	3,542	3.6	3,443	3.7	△99	△2.8

표 1-3-5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분야별)

(단위: 억원)

구분	2013년 예산*		2014년 예산		증감	
	예산*	구성비(%)	예산	구성비(%)		%
합 계	99,728	100.0	93,613	100.0	△6,115	△6.1
일반공공행정	2,250	2.3	2,136	2.3	△114	△5.1
공공질서 및 안전	894	0.9	822	0.9	△72	△8.1
교육	7,912	7.9	8,571	9.2	659	8.3
문화 및 관광	6,667	6.7	6,768	7.2	101	1.5
환경	8,221	8.2	8,357	8.9	136	1.7
사회복지	640	0.6	564	0.6	△76	△11.9
보건	46	0.1	47	0.1	1	2.2
농림수산	21,077	21.1	20,358	21.7	△719	△3.4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6,217	16.3	15,975	17.0	△242	△1.5
교통 및 물류	19,487	19.5	15,074	16.1	△4,413	△22.6
국토 및 지역개발	14,834	14.9	13,752	14.7	△1,082	△7.3
과학기술	1,246	1.3	915	1.0	△331	△26.6
통신	237	0.2	273	0.3	36	15.2

주 : * 2013년은 추경기준

제2절 지역발전사업의 평가체계

1. 평가목적 및 방향

지역발전사업 평가는 지역발전 예산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주체의 바람직한 지역발전사업 추진을 유도하기 위하여 2005년(2004년 추진실적) 이후 매년 상반기에 실시하고 있다. 동 평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9조) 및 동법 시행령(제12조~제14조의 2)에 근거하여 부문별 시행계획 및 광역 시행계획 등의 추진실적을 종합 평가함으로써 지역발전사업을 정기적·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데 의의가 있다.

2014년에는 2013년 지역발전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종합적인 성과를 점검하고 지역사업의 발전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평가의 투명성 강화, 책임성·실효성 확보, 컨설팅형 평가로 전환, 평가방식 효율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첫째, 평가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평가결과를 공개하였다. 광역·제주계정은 사업별 등급을 공개하여 평가의 신뢰도 및 중앙부처의 책임성을 제고하였고, 지역·제주계정은 분야별 우수지자체를 공개하여 타 지자체에 모범사례를 제공하였다.

둘째, 평가의 책임성·실효성 강화를 위해 자체평가를 도입·강화하였다. 총괄 보고서 작성, 자체등급 부여 등 자율적인 내부통제를 통해 지자체와 부처의 사업추진 역량을 강화하고, 평가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광역·제주계정은 부처가 소관 사업에 대해 상대평가를 실시하여 총괄적인 평가의견을 작성하였고, 자체등급(상·중·하)을 부여를 하도록 하였다. 지역·제주계정은 시·도가 포괄보조별 내역사업에 대해 상대평가를 실시하여 총괄적인 평가의견을 작성하고, 자체등급(상·중·하)을 부여를 하도록 하였다.

셋째, 평가 이후 부진사업 위주로 실시하던 지자체 컨설팅을 평가에 도입하여, 신규사업에 대해서도 추진하여 사업 초기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사업기획, 사업추진 방향 및 방법 등이 중요한 신규사업 중에서 지자체 요청사업 등에 대한 컨설팅을 실태조사 기간에 병행하였다.

마지막으로, 평가방식의 효율화를 위해 지역 내 일자리 창출, 삶의 질 개선, 연계협력 외에 주민 소득증가, 방문객 수 등 지역계정의 사업성과 측정기준을 추가하고, 형

식적으로 평가되던 집행실적(집행률)을 제출하지 않도록 하는 등 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피평가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미래부(R&D평가), 기재부(자율평가) 평가와 중복이 최소화되도록 평가대상을 조정하였다. 중복사업은 원칙적으로 지역위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평가 대상사업 및 평가등급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지역발전위원회의 평가 대상은 '시행계획 등의 추진실적'으로서 시행계획에 담긴 모든 사업(일반회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기금, 지방비 및 비재정사업)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나, 평가의 중복 방지, 평가 일정, 평가 실익 등을 고려하여 2013년 광특회계(지역계정, 광역계정, 제주계정)로 지원된 사업에 한정하였다.

상술한 바와 같이 평가대상사업을 2013년에는 광특회계로 지원된 부문별·광역 시행계획에 포함된 사업들로 광역계정, 지역계정 및 제주계정의 3개 계정 사업에 대해 평가를 하였다. 사업체계는 2014년 광특회계 예산작성지침(2013년 4월)의 체계에 따라 광역·제주계정은 세부사업 단위로, 공정률 중심의 일부 SOC사업의 경우는 단위사업 단위로 평가하였으며, 총 80개 사업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다. 지역·제주계정의 시·도 자율편성 20개 포괄보조사업의 147개 내역사업과 시·군·구 자율편성 4개 포괄보조사업의 12개 내역사업을 대상으로 각 지자체가 수행하는 1,199개 단위사업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다.

평가등급은 5단계(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로 상대평가를 실시하고 등급을 강제 부여하도록 하였다. 광역·제주계정은 사업군내 평가대상사업간 비교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하였고, 지역·제주계정은 내역사업별 지자체간 비교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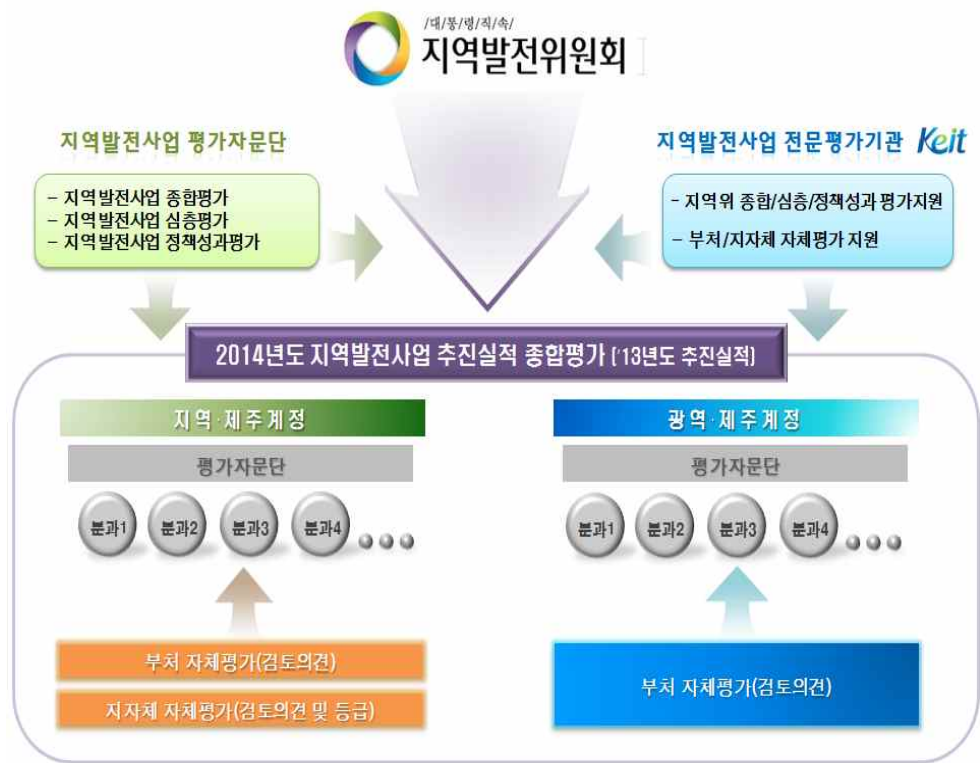
2013년도 신규사업의 경우 평가등급은 부여하지 않고 평가의견만 제시하였다. 다만, 총 사업기간이 1년 이하인 신규사업은 평가등급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광역계정 사업 중 지역발전정책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관련기관 지원, 타 평가(미래부 R&D 평가, 기재부 재정사업자율평가) 중복사업, 제주계정 사업 중 특별행정기관 위임사무 관련 사업과 등 평가 실익이 낮은 사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였다.

3. 평가체계 및 절차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2009년 4월에 개정되어 지식경제부와 행정안전부로 분리·운영되던 지역발전사업 평가체계가 지역발전위원회로 일원화되었다.

지역발전위원회는 평가계획 수립, 평가 및 평가결과 통보 등 지역발전사업 추진실적 종합평가를 총괄한다. 중앙행정기관은 전년도 부문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역위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지자체는 전년도 추진실적에 대해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역위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평가자문단은 지역발전사업 평가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으로 구성, 평가 자료를 토대로 종합평가하도록 하였다. 전문평가기관은 지역위 종합평가 및 관련 기관 자체평가를 지원하도록 하였다.

그림 1-3-3 지역발전사업 평가체계



평가방법과 절차는 자체평가, 보고서 작성, 종합평가, 이의신청평가 순으로 진행하였다.

부처의 자체평가는 부처별 소관 사업에 대해 상대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상·중·하의 3단계 상대평가를 실시하고 사업별로 자체등급을 부여하고 평가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다만, 지역·제주계정사업의 경우, 각 부처에 속한 포괄보조 단위사업별로 평가의견을 작성하고, 시·군구 자율편성 사업은 내역사업별 특이사항을 첨부하여 종합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자체 자체평가는 지역위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시·도별 포괄보조사업의 내역사업 단위로 상대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상·중·하의 3단계 상대평가를 실시하고 내역사업별로 자체등급을 부여하고 평가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지자체와 부처의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였다.

보고서 작성은 광역·제주계정의 경우, 사업별 실적보고서와 부처별 총괄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사업별 실적보고서는 2013년도 사업의 기획·집행·성과를 정리하며, 총괄보고서에는 부처내 사업의 자체평가결과와 함께, 부처별 광역계정 사업 전반의 운영현황 및 계획, 성과관리 등이 포함된다. 지역·제주계정의 경우, 사업별 실적보고서와 시·도별 총괄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실적보고서는 2013년도 사업의 기획·집행·성과를 정리하며, 총괄보고서는 시·도내 사업의 자체평가결과와 함께, 시·도 자율편성사업의 운영현황 등이 포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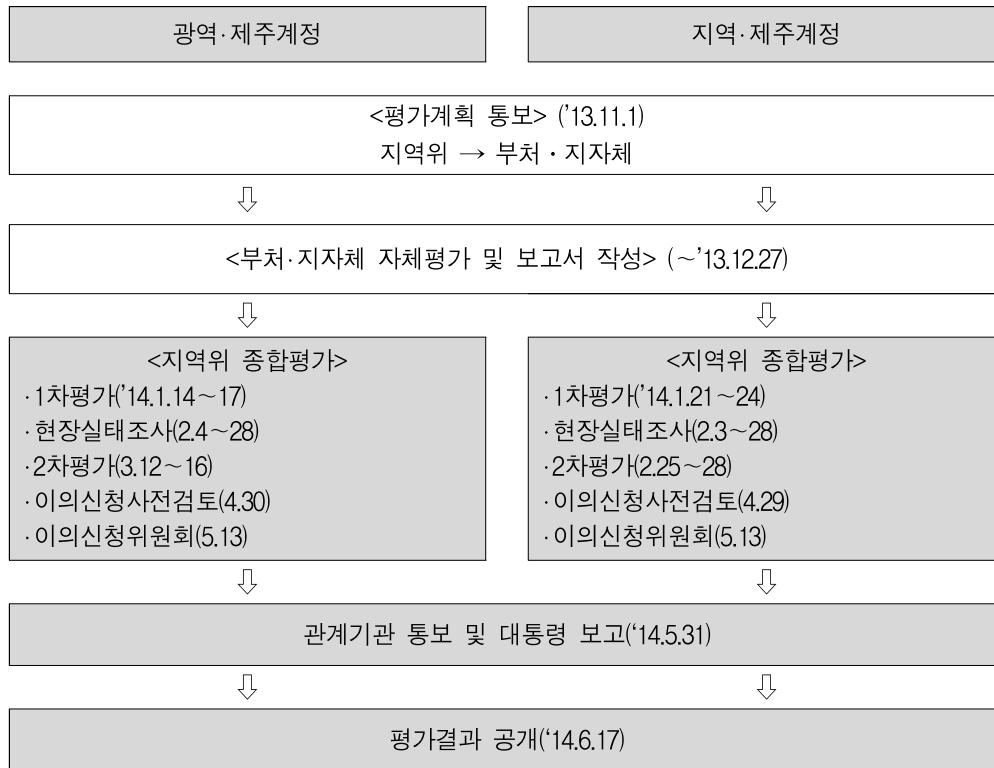
종합평가는 1차 평가(예비평가), 현장실태조사, 2차 평가(본평가), 이의신청평가로 진행하였다. 1차 평가에서는 부처·지자체 실적보고서 및 자체 평가 결과에 대해 분과별 서면평가를 실시하고 사업별 주요 검토사항(질의사항 포함), 추가자료 요청사항, 현장실태조사(대면평가)대상 및 일정 등을 결정하였다. 지역·제주계정사업 평가에서는 선정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컨설팅 사전 검토의견서도 함께 작성하였고, 현장방문 컨설팅 대상 및 일정 등을 결정하였다. 광역·제주계정사업에 대한 평가에서는 별도의 성과지표 전문가그룹이 사업별 성과 계량지표를 평가하였으며, 1차 평가시 개선의견을 도출하여 해당 부처의 성과지표 보완 및 개선을 유도하였다. 현장실태조사에서는 사업의 기획·집행·성과관리 전반에 대해 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하였다. 광역·제주계정의 경우, 평가대상 사업별 우수·부진·이슈 과제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중앙부처의 정책 집행을 효율적 전달 여부 및 수행기관의 사업 이해도를 점검하였다.

지역·제주계정의 경우, 우수·부진·이슈 사업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내역사업은 사업 전반에 대한 사업추진 현황과 성과를 점검하였으며 신규사업은 컨설팅을 병행하였다. 또한, 타 지자체의 모범사례 발굴을 위하여 우수사례 후보를 발굴하였다. 2차 평가에서는 부처·지자체 보고서, 현장실태조사 의견, 추가제출자료 등 평가자료를 종합검토하고, 부처·지자체의 대면평가를 통해 종합 결과를 도출하였다. 광역·제주계정의 경우, 「사업 평가」, 「자체평가 적절성 검토」 및 「우수사례 발굴」 등을 추진하였다. 1차평가에서 도출한 평가대상 사업별 주요 검토사항을 토대로 부처에 응답기회를 부여(대면평가)하였다. 부처 자체평가 결과를 기초로 사업별 평가 등급을 부여하였다. 부처 자체평가 적절성 검토는 자체평가 과정, 근거, 결과 등에 대한 적절 여부를 판단하였다. 우수사례 발굴은 지역산업·경제 기여(일자리 창출 등), 지역간 연계·협력 사례 등 우수 프로그램(세부 과제) 발굴·홍보 등을 중심으로 발굴하도록 하였다. 지역·제주계정의 경우, 「내역사업 평가」, 「시·도 자체평가 적절성 검토(포괄보조금 종합운영실태 포함)」 및 「우수사례 발굴」 등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내역사업 평가는 시·도 및 시·군·구별 내역사업의 평가등급을 부여하고 확정하였다. 기획·집행·성과 측면에서 확인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대면평가도 실시하였다. 시·도 자체평가 적절성 검토(포괄보조 운영 포함)는 시·도가 제출한 자체평가보고서 및 포괄보조금 종합운영실태를 점검하였다. 우수사례 발굴은 일자리창출, 시·도와 시·군·구간 연계·협력사업, 복합시설 등 예산 효율화, 추진체계 개선 등의 사례를 발굴하였다.

이의신청은 C, D 등급을 받은 사업에 대해 가능하며, 평가 과정의 중대한 하자 등으로 평가결과(안)에 이의가 있는 지자체와 중앙부처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였다. 모든 이의신청 사항은 부처 및 지자체의 이의신청 사항에 대한 사전 대면검토를 통해 평가자문단이 의견을 듣는 사전검토를 거치고, 사전검토의견에 대해 평가자문단 분과장 회의에서 이의신청 결과를 확정하였다.

2013년 지역발전사업 추진실적 평가결과는 정책기획·평가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였다. 확정된 평가결과는 사업별 성과 및 개선의견, 중점이슈 사항을 중심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또한, 평가결과 평가대상 사업별 등급(광역계정), 분야별 우수지자체(지역계정)를 공개하였다.

그림 1-3-4 평가추진 절차



4. 평가결과 및 활용

2013년도 추진사업에 대한 평가결과, 지역주도의 사업추진을 위한 포괄보조금 제도의 정착과 개별사업의 기술적·경제적 성과달성은 가시화되고 있으나, 주민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창출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광역·제주계정의 경우, 국가적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 양적성과의 실현은 적정하나, 질적 측면의 체감성과 및 종합성과는 아직 불분명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지역·제주계정의 경우, 포괄보조금 제도 정착으로 사업추진과정의 외형적 틀은 마련되어 있으나, 내실 있는 운영과 파급력 있는 성과도출에 대한 지속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되었다.

광역·제주계정의 경우 총 80개 사업을 평가하였으며, 신규 10개 사업을 제외한 70개 사업에 대해 5단계(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로 상대평가를 실시하여

분야별로 등급을 부여하였다. 전반적으로 지역경제활성화, 지역인력양성, 지역 소득원 확충 등 양적성과는 상대적으로 양호하나, 지역문화·관광육성, 지역발전 거점 육성, 지역교통인프라·SOC 확충 등의 분야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성과제고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평가되었다.

표 1-3-6 분야별 등급분포

분야	신규	계속					
		소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2013년도 평가결과 (비율)	10개	70개 (100.0)	6개 (8.6)	11개 (15.7)	34개 (48.6)	13개 (18.6)	6개 (8.6)
지역산업/기술진흥	4	15	2	2	7	3	1
지역산업기반조성	-	10	1	1	5	2	1
지역문화관광육성	2	10	1	1	5	2	1
발전거점 및 지역개발	2	15	1	3	7	3	1
교통인프라 및 SOC확충	2	20	1	4	10	3	2

사업별로는 ‘숲길네트워크구축’, ‘생태하천복원’ 등 6개 사업이 S등급으로 평가되었고, ‘새만금국제관광단지개발’, ‘대중교통전용지구시범’ 등 6개 사업이 D등급으로 평가되었다.

‘지역문화관광육성’ 분야의 ‘숲길네트워크 구축’ 사업은 상위 기본계획과의 부합성, 일자리 창출효과 발생 등으로 우수한 반면, ‘새만금국제관광단지개발’ 사업은 사업목적(국제관광단지개발)과 사업내용(문화공연 등)의 불일치, 지자체간 협업 부족 등으로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교통인프라 및 SOC확충’ 분야에서는 ‘생태하천복원’ 사업이 부처간 효율적 협업, 하천복구 및 수질개선 등 성과로 우수하게 평가된 반면, ‘대중교통전용지구시범’ 사업은 지자체 수요 반영 부족, 갈등 해결노력 부족 등으로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지역·제주계정도 총 1,199개 내역사업을 5단계(S, A, B, C, D)로 상대평가를 실시하여 지자체별로 등급을 부여하고, 분야별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제시하였다. 전반적으로 주민갈등예방을 위한 공청회 실시 등으로 지역주도 사업추진을 위한 포괄보조금

제도는 정착되고 있으나, 효율적 사업추진과 성과 도출을 위해 지역특성을 반영한 사업개발, 연계협력 등은 지속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되었다.

시·도 자율편성사업의 경우 충청북도가 우수 시·도로 평가되었으며, 사업추진을 위한 조직 구성 및 지역 내 협조체계 구축, 안정적인 사업진행을 위한 시설기반 조성, 타 사업과 연계를 통한 관광객 증가 등이 타 시·도에 비해 우수하게 평가되었다.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사업의 경우 충북 옥천, 강원 정선, 경남 합천 등이 우수 지자체로 평가되었으며, 주민/전문가를 포함하는 거버넌스 체계 구성을 통한 연계협력, 찾아가는 주민 홍보 및 교육, 세부사업별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사업추진, 일자리창출 및 소득증대와 같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점이 타 지자체에 비해 우수하게 평가되었다.

평가결과는 해당 부처 및 지자체에 통보하여 성과가 낮은 사업은 자율적으로 사업 구조조정을 추진하도록 유도하고, 인센티브를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배분하여 지자체 간 경쟁을 촉진하였으며, 우수사례를 인센티브 배분시기에 맞춰 공개·포상하여 우수 사업에 대한 상호 학습 및 사업 개선을 유도하였다.

종합평가의 후속조치로 지역발전사업의 우수사례를 발굴하였다. 우수사례 발굴은 우수 사례의 지역 확산·전파를 통해 지자체의 사업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였다. 총 22개 지자체가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으며, 이들 중 전북 완주군, 경남 거창군, 강원 정선군 등 20개 기관은 차별적 기획, 효율적 사업추진, 연계협력, 파급효과 등 사업추진이 우수하여 선정되었으며, 대전광역시와 경상남도도 자체평가를 충실히 수행한 우수 지자체로 선정하였다.

표 1-3-7 우수사례로 선정된 지자체(22개)

분 야		지자체
사업 추진 우수	차별적 기획(6개)	부산시, 광주 남구, 울주군, 정선군, 증평군, 담양군
	효율적 사업추진(5개)	대전시, 전북, 제주도, 금산군, 함양군
	연계협력 우수(5개)	남양주시, 무주군, 밀양시, 거창군, 합천군
	파급효과 우수(4개)	당진시, 완주군, 진도군, 영천시
자체평가 우수(2개)		대전시, 경상남도

우수사례에는 일자리와 소득 창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사례가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완주군은 마을 내 공동농장 운영을 통해 노인 일자리와 수익창출이라는 농촌 복지모델을 만들어낸 두레농장 상생네트워크사업이 우수하였으며, 정선군은 주민이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여 관광, 농산물 판매를 통해 큰 수익(가구당 2천만원)을 올렸으며, 남양주시는 사용률이 저조했던 저수지를 호수공원으로 변신시켜 지역주민의 쉼터로 만든 사례가 우수하였다.

우수사례에 대한 시상식은 2014년 9월 충북 청주에서 개최되었으며, 22개의 우수지자체와 17명의 우수담당자가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표창을 수여받았다. 우수기관 표창과 함께 처음으로 지역발전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데 기여한 공무원과 일반인 17명도 선정하여 위원장 표창을 수여하였다. 우수사례 시상식 개최 시 사례 발표, 지자체공무원 교육, 패널 전시 등을 통해 사업의 성공요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선정된 우수사례는 스토리텔링을 통해 우수사례집 「행복한 지역을 만드는 희망 이야기 20」으로 발간하여 지역희망박람회 현장에서 배포하였으며, 중앙부처, 지자체, 국책연구기관, 시도발전연구원, 생활권협의회 등 지역발전 유관기관에도 배포하였다.

제2부 부문별 시책

제1장 지역생활권 활성화

제2장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제3장 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양성

제4장 지역 문화 육성, 생태 복원

제5장 사각없는 지역복지·의료

제1장 지역생활권 활성화

제1절 지역주도 협력사업 확충

1. 지역간 자율적인 협력체계 구축·강화

(1) 지역행복생활권협력사업 추진

과거 외형중심의 지역정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개선을 위주로 한 HOPE 프로젝트 제시로 2013년 지방자치단체간 연계협력사업을 신설하여 추진하였다. 2014년부터는 박근혜정부의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의 주요 사업으로서 행정구역을 넘어 주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인프라, 일자리, 교육, 문화, 복지 등 기본 생활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역행복생활권 구현을 위해 지역행복생활권협력사업으로 확대·개편하였다.

지역행복생활권협력사업은 지자체 주민의 생활권 관점에서 단일 시·군 내에서 충족하지 못하는 산업·복지·교통·관광 등의 서비스 확충을 위해 2개 이상 지자체간 공동 사업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인근 시·군 간의 연계협력을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해 56개 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자체간의 협력사업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여, '지역행복생활권'정책의 확산·촉진을 위한 시드 머니(Seed Money)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생활권 내 사업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한편 지원분야에 있어서 생활권사업으로서의 차별성을 확보하였다. 이로 인해 기초 인프라 등 생활권에 꼭 필요한 '주민체감형' 사업이면서 생활권 협력으로 주민불편 해소 및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을 우선 지원하도록 하였다. 특정 생활권 및 생활권 내 특정 시·군을 중점 지원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생활권 내 균형적으로 지원하였다.

동 사업은 시·군구 자율편성 포괄보조사업으로 3개년 이내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 한도 내에서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게 지자체가 자유롭게 시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기존 예산사업에 없는 창의적인 사업, 다(多)부처적 사업 등 주민 복지 증진이

가능한 사업을 우선 지원하였으며, 지역발전위원회가 중심이 되고 사업 관련 부처들이 컨설팅-모니터링 등에 참여함으로써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제고하였다.

표 2-1-1 지역행복생활권협력사업 생활권 구성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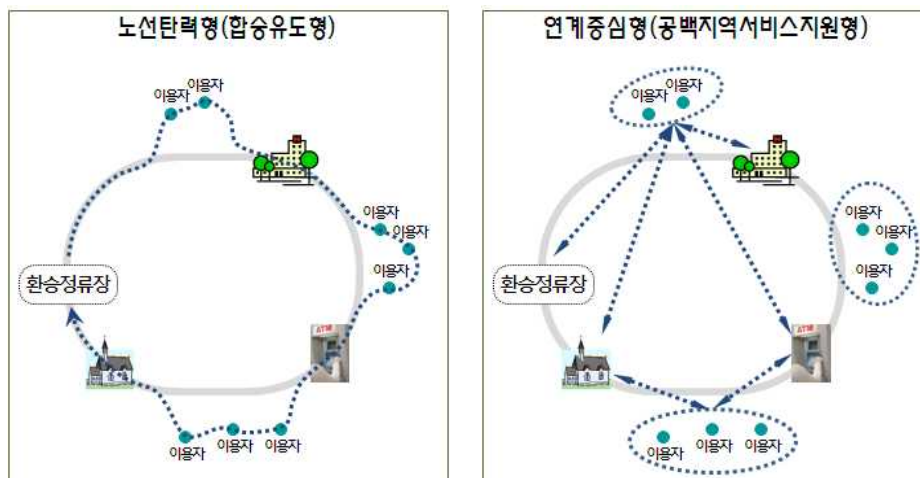
시도	생활권 구성 현황
시범(2)	· 서울(동부4구)+의정부+남양주+양주 / · 인천+부천
부산(1)	· 부산+김해+양산+울주군
대구(1)	· 대구+영천+경산+군위+청도+고령+성주+칠곡+합천
광주(1)	· 광주+나주+담양+화순+함평+장성
대전(1)	· 대전+옥천+금산+계룡+논산
울산(1)	· 울산+양산+경주+밀양
세종(1)	· 세종+공주
경기(4)	· 의정부+양주+포천+동두천+연천 / · 평택+안성 / · 광주+이천+여주+양평+가평 · 포천+연천+강원도 철원
강원(6)	· 춘천+홍천+화천+철원+양구 / · 원주+횡성 · 강릉+동해+삼척+태백/ · 영월+평창+정선 / · 속초+고성+양양 / · 인제+양구삼척+태백
충북(5)	· 청주+청원+증평+보은+괴산+진천 / · 충주+제천+음성 · 제천+단양 / · 옥천+보은+영동 / · 음성+진천+증평+괴산
충남(6)	· 천안+아산 / · 홍성+예산 / · 당진+서산+태안 · 공주+부여+청양 / · 논산+계룡+금산 / · 보령+서천
전북(4)	· 전주+군산+익산+김제+완주 / · 정읍+고창+부안 · 남원+임실+순창 / · 무주+진안+장수
전남(6)	· 목포+무안+신안+해남+진도 / · 여수+순천+광양+보성+고흥 / · 나주+화순 · 영암+장흥+강진+완도 / · 장성+영광+함평 / · 담양+곡성+구례
경북(11)	· 포항+경주+영덕+울진+울릉 / · 구미+김천+칠곡 / · 안동+예천+의성+청송+영양 · 영주+봉화 / · 상주+문경+예천 / · 경산+청도+영천 / · 의성+군위 · 성주+고령 / · 울진+영양+영덕 / · 영동+무주+김천 / · 단양+영월+영주
경남(5)	· 창원+김해+합안 / · 진주+사천+남해+하동 / · 통영+거제+고성 · 창녕+의령+밀양+합천 / · 거창+함양+산청
제주(1)	· 제주+서귀포

2013년도 33개 사업을 선정하여 30,000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35개 사업 선정 및 65,000백만원을 지원하여 지역행복생활권협력사업을 통한 주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였다. 2015년도에는 생활권을 63개로 확대하고, 소관 예산도 120,000백만원으로 증액하여 기초인프라 등을 확충하여 생활권 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제고할 계획이다.

(2)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은 버스노선이 폐지되어 대체 교통수단이 부족하거나 없는 지역의 주민 또는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가 멀어 이동이 불편한 배후마을의 주민도 의료·문화·복지 등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의 보완적·대체적 수단인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로 2013년도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등 준비기간을 거쳐 2014년부터 시범 추진하고 있다. 동 사업은 지역공동체 중심의 교통서비스를 활성화함으로써 공공서비스 거점과 배후마을 간 접근성 제고 및 지역활력 창출을 통해 주민의 체감복지를 제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림 2-1-1 농촌형 교통모델 개념도



도로망+수요+통행행태+배후지 기능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

2014년도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교통모델은 기존의 대중교통 노선을 보완하여 환승 거점지로 교통서비스를 연계하거나, 직거래·농촌관광 등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방식, 목욕탕, 보건지소 등 복지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방식이며, 12개 시·군, 13개 사업을 선정·지원하였다. 2014년도 추진 사업성과로는 대중교통 이용자 만족도 평균 47점 향상(시행전 42점→시행후 89점), 정류장 접근 보행시간은 평균 17분 단축(시행전 22분→시행후 5분), 버스 대기시간은 평균 15분 단축(시행전 20분→시행후 5분), 이용객당

월평균 외출회수는 3.3회 증가(시행전 3.2회→시행후 6.5회)를 들 수 있으며 205개 마을의 40,646명이 혜택을 받았다.

(3) 접경권 한탄강 수계 협력사업 지원

한탄강은 접경지역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 등으로 최근까지 접근이 제한되어 원형 그대로의 환경이 훌륭하게 보전된 비경이다. 북한에서 발원한 한탄강의 남방한계선 이남 구간은 총 79.3km이다. 상류는 강원도 철원군 남방한계선이고 하류는 경기도 연천군 임진강 합류점이다. 한탄강은 경기, 강원 2개 도와 포천시, 연천군, 철원군의 3개 시·군을 걸쳐 흐른다.

3개 시·군은 2014년 한탄강 행복생활권을 구성하여 한탄강을 둘러싼 협력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역발전위원회와 함께 한탄강 수계의 협력사업을 지원하여 지역 자원을 매개로 한 연계협력의 우수모델 창출을 추진하고 있다.

한탄강 협력사업은 소프트웨어 사업과 하드웨어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소프트웨어사업은 ①수계관리, ②지질자원 활용, ③연계관광 활성화 ④주민역량강화, ⑤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으로 구성된다. 수계관리는 수질보전, 수량유지, 상수원보호구역 등과 관련한 지역 현안 사업 논의를 포괄한다. 지질자원 활용은 화산 지대에 형성된 한탄강의 독특한 경관을 활용하는 사업으로서, 국가지질공원 운영 협력, 공동학술행사 개최 등이 해당된다. 연계관광활성화는 공동브랜드 개발·홍보, 주변관광지 연계입장권 발매 등이 포함된다. 주민역량강화는 지역관광해설사 공동양성, 한탄강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이 해당하며 전문가네트워크는 한탄강연계협력 자문위원 구성, 지역전문가 협력체계 구축으로 추진된다.

하드웨어 사업은 총 79km 구간 중 연천·포천·철원의 걷는 길 단절구간 48km를 연결하여 한탄강 주변으로 1박 2일 코스 중주개념의 걷는 길 조성하는 내용이다. 현재 한탄강을 주변으로 각 시·군의 중심부에는 강을 따라 걷는 길이 조성되어 있다. 향후 공동 브랜드와 강 주변 이야기 발굴 등으로 이러한 걷는 길을 보다 널리 알리고 활성화 할 필요성이 있다. 걷는 길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대한다면 궁극적으로 3개 시·군의 단절구간을 연결하여, 누구나 쉽게 찾고 즐길 수 있는 자연속의 길로 만들어 갈 것이다.

2014년도에는 한탄강 걷는길 연천구간, 포천구간의 조성이 추진되고 있으며, 2015년도에는 본격적으로 강 주변에 숨겨진 이야기를 발굴하고 3개 시·군 공동의 걷는 길 브랜드를 만드는 작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4) 접경지역 생태·평화벨트 관광명소 연계기반 구축 사업

접경지역에는 DMZ 일원을 중심으로 멸종위기 67종을 포함한 총 2,716종의 야생 동·식물이 자생하고 있는 등 다양한 생태자원이 서식하고 있고, 고인돌(강화), 선사유적지(연천), 태봉국 도성(철원) 등 역사문화유산과 판문점(파주), 제4땅굴(양구), 노동당사(철원) 등 다양한 역사문화유적도 분포하고 있다.

이러한 생태자원과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일자리 창출, 지역소득 증대 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지자체에서는 지역주민과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2011~2030년)」을 수립하여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접경지역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평화누리길 조성, 생태공원·탐방로 조성, 문화체험공간 조성 등 접경지역내 생태 우수자원 및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명소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명소간을 연결하는 생태·녹색 관광 및 체류형 관광사업을 행자부, 국토부, 문체부, 환경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강화에서 고성까지를 잇는 평화누리길 조성사업이 대표적인 선도사업이다. 2011년에는 강화 초지대교 구간, 파주 통일공산 구간, 연천 차탄천 구간, 철원 철새탐조 구간, 양구 두타연 구간, 고성 동해안 구간 등 6개소에 42km에 국비 88억원(총사업비 125.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였고, 2012년에는 고양 장항습지 구간, 파주 임진각 구간, 인제 백담사 구간, 고성 화진포 구간 총 4개소 71km에 국비 102억원(총사업비 145억원)을 투입하였다.

2013년에는 김포 염하강 구간, 연천 임진강 구간, 철원 근대유적 구간, 양구 돌산령 구간 총 4개소 71km에 국비 91억원(총사업비 130억원)을 투입하였고, 2014년에는 김포 북단 철새탐방구간, 파주 임진강 하구 구간, 연천 송의전 구간, 철원 화강구간, 고성 동해안구간(일부 정비) 총 5개소 62.5km에 국비(총사업비 111억원)을 투입하였다.

2011년부터 2014년간 구축된 평화누리길은 총 378km로서 2020년까지 551km가 완료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접경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및 접경지역 이미지 개선, 친환경적 관광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2. 창조적 마을 만들기

(1)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그 동안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사업은 2007년부터 매년 15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자체나 마을에 사업비의 50%를 보조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시범도시 7개소, 시범마을 16개소 및 성공모델지원사업 3개소에 144억원을 지원하였다. 이와 관련 지역발전위원회(옛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광역화·특성화를 기조로 하는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을 수립·추진하였다(균특법 개정, 2009년 4월 22일).

이에 따라 2010년부터는 국토교통부 소관사업인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포함하여 타 부처에서 추진해 오던 전원마을 조성, 농촌생활환경정비, 어촌종합개발 사업 등 17개 시·군·구 자율 편성 사업을 통합하여 국토교통부 책임 하에 “포괄보조금 지원방식”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에 따라 지자체 스스로의 발전을 꾀하기 위해 도시활력증진지역 99개 지자체(특·광역시 군·구, 인구 50만 이상 시지역 등)를 대상으로 시행하였고, 도시 내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 및 노후불량 건축물을 개량함으로써 도시환경의 개선 및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의 활력증진 및 지역 커뮤니티 복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도시활력증진지역에 연평균 약 1,000억원을 지원하였다.

표 2-1-2 연도별 예산 지원액

(단위 : 백만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101,337	96,400	96,396	108,597	103,167
계속사업	86,396	83,608	85,996	91,850	84,862
신규사업	14,941	12,792	10,400	16,747	18,305

표 2-1-3 도시활력증진지역 현황 (99개 시·군·구)

구 분	개수	도 시 명
서울	25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영등포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성북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인천	8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경기	17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안산시, 과천시, 구리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 화성시, 남양주시
대전	5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충북	1	청주시
충남	1	천안시
광주	5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전북	1	전주시
전남	1	목포시
대구	8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경북	1	포항시
부산	16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
울산	5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경남	2	창원시, 김해시
강원	3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은 주거지재생, 중심시가지재생,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역량강화 4개의 내역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하였다. 첫째, 주거지재생 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의 정비, 주택의 직접 건설 또는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주택개량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둘째, 중심시가지재생 사업은 해당 도시만의 경쟁력 우위요소를 발굴하고, 도시별 특화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의 상업, 환경 등 기능을 복합적으로 재생하는 사업이다. 셋째, 기초생활기반확충 사업은 마을생활권을 대상으로 주민과 함께 마을을 진단하고 마을계획을 수립하여 기반시설을 정비·개량하는 사업이다. 넷째, 지역역량강화 사업은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지역리더 양성 프로그램, 지원센터의 운영, 지역 및 사업을 위한 홍보·교육 등 소프트웨어 사업이다.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은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 향상을 중심으로, 중앙정부, 지방정부, 주민 모두에게 미래지향적인 도시발전의 틀과 질적 측면의 도시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경제성·효율성만을 중시한 도시정책에서 탈피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제시하였다. 또한 지자체는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발전을 유도하여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주민 차원에서는 주민참여형 정책추진으로 수요자

지향형 도시정책을 촉발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기반시설 설치 위주 지원 사업에서 지역자산(수변공간, 공·폐가, 특산물 등)을 활용한 지역맞춤형 활력증진사업으로 전환하여 주민들의 실질적 수요를 반영하였다.

표 2-1-4 도시활력증진지역 사업 절차도

절차	주관부서	내 용
예산신청	기획재정부	예산편성지침 마련(→ 중앙, 광역시·도)
	↓	
	국토교통부	예산신청가이드라인 마련, 지자체 교육
	↓	
예산배분	시·군·구	예산신청
	↓	
	시·도	예산신청서 취합 제출(→ 국토부)
	↓	
사업계획 수립	국토교통부	예산신청, 신규사업제안서 설명회 (지자체 : 사업제한 설명, 국토부 : 내용검토)
	↓	
	국토교통부	예산신청 검토의견서 및 예산배분 요청(→ 기재부)
	↓	
사업수행	기획재정부	지자체별 예산배분
	↓	
	시·도, 시·군·구	지자체 매칭 차년도 예산반영
	↓	
사업평가	국토교통부	사업계획수립 가이드라인 마련
	↓	
	시·군·구	사업계획 수립
	↓	
	시·도	사업계획서 취합 제출(→ 국토부)
	↓	
	시·도, 시·군·구	사업 착공보고(→ 국토부)
	↓	
	국토교통부	사업추진 관리 및 지원
	↓	
	시·도, 시·군·구	사업 완료보고
	↓	
	시·군·구	사업성과 자율평가 및 평가보고서 제출
	↓	
	시·도	자율평가 보고서 취합 제출(→ 지역위)
	↓	
	국토교통부	추진실적 검토의견 제출(→ 지역위))
	↓	
	지역발전위원회	사업성과 평가
	↓	
	기획재정부	인센티브 결정, 차년도 예산반영

표 2-1-5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추진 현황(2014년도)

구 분		내역사업	세부사업(157개 사업)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심시가지재생	구로디지털단지도심활성화를위한가로경관개선사업
	용산구	중심시가지재생	길,남산으로흐르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기초생활기반확충	동양지구농업기반정비
			살기좋은 농촌지역만들기
	남구	지역역량강화	송의목공예마을조성
			목공예기반 특화마을 조성사업
	남동구	주거지재생	소래구역기반시설 확충사업
경기도	부평구	중심시가지재생	서부간선수로 경관개선사업
		중심시가지재생	아시아누들타운조성사업
		중심시가지재생	아시아누들타운조성사업
	남양주시	기초생활기반확충	마을배수관로설치(지둔리)
			남양주그린베이스조성사업
		중심시가지재생	주민참여를 통한 내각마을 재생사업
	부천시	기초생활기반확충	마을활력발전소'학습등대'
			부천북부역문화커뮤니티광장조성
			부천시원도심문화복합시설"Fantabox" 조성사업
	수원시	기초생활기반확충	원도심문화복합기초시설'판타박스' 조성
			매항동노후주택밀집지역자활환경조성
			희망수원의창조경제일자리거버넌스구축
	시흥시	지역역량강화	거북시장(느림보타운)조성재래시장활성화사업
			녹색도시회랑
			녹색도시회랑
	안산시	중심시가지재생	오이도오션프런트
			ART&ECOCUBEProject
			에너지절약시범마을조성
	안양시	지역역량강화	천지인마을만들기
			재생,도시에활력을불어넣다
			대부도해양생태관광마을육성
	오산시	기초생활기반확충	해양생태관광시범마을조성
			낙원소공원 조성사업
			서랑동문화마을
	의왕시	지역역량강화	서랑동문화마을
			행복한다문화가족구현
			배우면서가르치는숨쉬는교육도시조성
	용인시	기초생활기반확충	낙후된농촌지역생환경정비
	의왕시	주거지재생	살기좋은금천마을만들기

구 분		내역사업	세부사업(157개 사업)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의정부시	주거지재생	신녹색문화공간조성사업 복지·문화복합공간 조성사업
	화성시	기초생활기반확충	어촌종합개발사업 농촌생활환경정비 기계화경작로확포장 소규모용수개발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거지재생	주거환경개선사업(장동/옥골구역)
		지역역량강화	배달강좌제
	동구	주거지재생	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홍도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대동3구역)
	유성구	기초생활기반확충	기초생활기반확충
	중구	중심시가지재생	산소충만생도시창조
		주거지재생	주거환경개선사업(보문3구역)
충청남도	천안시	기초생활기반확충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중심시가지재생	명동거리활성화조성사업
		지역역량강화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
충청북도	청주시	중심시가지재생	구청주역사재현및환경정비사업 추억의품물야시장및시민문화공간조성사업 문화예술특성화를위한중앙동상권활성화사업
		주거지재생	주거환경개선사업(영운구역)
광주광역시	광산구	기초생활기반확충	농촌생활환경정비 지표수보강개발 기계화경작로확포장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남구	기초생활기반확충	농촌생활환경정비
		중심시가지재생	푸른길공원주변도시재생
		주거지재생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역역량강화	오카리나주민참여형크로스컬처문화복지도시조성
	동구	기초생활기반확충	농촌생활환경정비 지표수보강개발
		중심시가지재생	추억이깃든경양마을만들기
		주거지재생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역역량강화	도심공동화해소를위한'원도심활력프로젝트'사업
	북구	중심시가지재생	천지인문화소통길조성

구 분		내역사업	세부사업(157개 사업)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전라남도	서구		한새봉두레마을만들기
		기초생활기반확충	지표수보강개발
	목포시	중심시가지재생	철도폐선부지웰빙공원조성 도심수변재생및탄소제로라인구축
		주거지재생	주거환경개선사업(만호구역)
전라북도	전주시	기초생활기반확충	농촌환경개선사업
		중심시가지재생	중앙시장고객소통골목길조성사업
		주거지재생	천사마을가꾸기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풍남초교인근)
			주거환경개선사업(강당재구역)
		지역역량강화	천년전주온브랜드사업 동동마을재생코디사업
대구광역시	남구	중심시가지재생	앞산웰빙먹거리타운조성 문화예술생각대로
		주거지재생	2000배행복마을만들기
		지역역량강화	생생체험,창조드림피아
	달서구	중심시가지재생	"레드블록"젊음과다문화를담은원룸촌재창조
	달성군	기초생활기반확충	농촌생활환경정비 기계화경작로확포장
			농촌생활환경정비
	동구	기초생활기반확충	웅기중기행복녹색마을조성
			안심창조밸리조성사업
			농촌생활환경정비
	북구	기초생활기반확충	농촌생활환경정비
	서구	중심시가지재생	행복한날피골만들기
	수성구	기초생활기반확충	농촌생활환경정비
	중구	중심시가지재생	대구읍성상징거리조성(창조지역사업)
			순종황제가길조성
			남산화원둘레길조성
			술술술,빨간구두속보물찾기
경상북도	포항시	기초생활기반확충	농촌생활환경정비 기계화경작로확포장 농촌마을종합개발
			흥해약성선(농도301)확포장
		중심시가지재생	포항원도심재생사업
	부산광역시	강서구	기초생활기반확충

구 분		내역사업	세부사업(157개 사업)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금정구	기초생활기반확충	농촌생활환경정비
	기장군	기초생활기반확충	농촌생활환경정비
	남구	중심시가지재생	문헌동생태숲조성사업
	동구	주거지재생	산북도로초량동마을활력증진사업
	동래구	중심시가지재생	동래고도심재창조동래방래사업
	부산진구	중심시가지재생	수정터널상부공간연결사업
	북구	중심시가지재생	해피투게더공창마을만들기
			해피투게더공창마을환경정비사업
	사상구	중심시가지재생	사상광장로 가로환경개선사업
		주거지재생	철로변도시재생프로젝트
	사하구	중심시가지재생	하단오거리젊음의거리조성
		주거지재생	지성이면감천문화마을조성사업
	서구	중심시가지재생	대학캠퍼스&임시수도로재창조
	영도구	중심시가지재생	봉래길보행환경개선사업
	중구	중심시가지재생	오름길문화만들기
			큰마루터기상사업
	해운대구	중심시가지재생	반송창조문화그린웨이조성
울산광역시	남구	중심시가지재생	장생포고래문화마을조성
			남산근린공원수변광장조성
			예술이숨쉬는길조성사업
	동구	기초생활기반확충	주전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
		주거지재생	일산진지구주거환경개선
	북구	기초생활기반확충	농촌생활환경정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해양레저체험마을조성사업
	울주군	기초생활기반확충	어촌종합개발사업
		중심시가지재생	태화강수변공원화사업
			태화강수변공원화진출입로사업
			언양중심시가지거리조성사업
	중구	기초생활기반확충	척과천변수변공원조성
			구도심녹지공간조성사업
			달빛누릿길조성사업
		중심시가지재생	한글마을조성사업
		주거지재생	향교일원구시가지기반시설확충
경상남도	창원시	기초생활기반확충	창원들녘지표수보강개발사업

구 분		내역사업	세부사업(157개 사업)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중심시가지재생	월영광장조성사업
			에코뮤지엄시티진해
			문화예술네트워크도시재생
		주거지재생	노후주거지재생기반확충사업
	김해시	기초생활기반확충	화포천권역마을종합정비사업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장척힐링마을만들기사업
		중심시가지재생	봉황동유적지주변공공디자인정비사업
			진영소도읍재활사업
		주거지재생	주거환경개선사업(어방구역)
강원도	동해시	기초생활기반확충	이도시가지 기반시설확충사업
		중심시가지재생	태평북로재정비사업
		주거지재생	빈집정비사업
	속초시	주거지재생	교통지구 기반시설확충사업
	태백시	기초생활기반확충	조탄동굴금김치명품화사업
		중심시가지재생	물이흐르고사람이모이는땅황지재창조
			철암중심시가지정비
			장성동폐광지역구시가지재생

(2) 성장축진지역 개발사업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가 도입되면서 기초생활권(163개 시·군)을 특성별로 도시활력증진지역, 농산어촌지역, 특수상황지역 등 3개 지역으로 분류해 유사·중복적으로 추진되던 지역개발사업을 지역 특성과 부처 기능을 중심으로 재편하고 포괄보조금제를 도입하여 지원체계를 단순화하였다. 이 중 낙후도가 하위인 지역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성장축진지역으로 지정(70개 시·군, 2009년 6월)하고 2010년부터 도로, 상수도 등 기반시설비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동 사업은 성장축진지역 중 기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상의 개발축진지구 사업과 「도서개발촉진법」상의 도서종합개발사업을 포괄하여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고 있다. 70개 시·군 중 66개 시·군은 기존의 개발축진지구 시·군과 동일하나 개발축진지구로 지정되지 않았던

옥천군, 예산군, 정읍시, 밀양시 등 4개 시·군이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14년 9월 성장촉진지역 재지정시에는 각 2개 시·군이 지정 및 제외되었다.

표 2-1-6 성장촉진지역 지정 현황(2014년 9월 25일 기준)

시·도	성장촉진지역
강원	태백시 삼척시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홍천군 양양군(7)
충북	보은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옥천군(5)
충남	서천군 금산군 부여군 청양군 예산군 태안군(6)
전북	남원시 김제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정읍시(10)
전남	나주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함평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영광군(16)
경북	상주시 문경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영천시 영주시(16)
경남	의령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밀양시(10)
합계	70개 시·군

「도서개발촉진법」에 의한 372개 개발대상도서 중 성장촉진지역 내 187개(성촉 재지정에 따라 1개 도서 증가) 도서에 대하여 생산·문화·생활 등 성장기반시설을 지원하여 도서지역 주민의 삶의 질 제고 및 소득증대를 꾀하였다. 2014년 성장촉진지역에 지원된 예산은 2,091억원으로, 이 중 개발촉진지구사업에 1,354억원, 도서종합개발사업에 737억원이 지원되었으며, 2015년도에는 개발촉진지구사업에 1,506억원과 도서종합개발사업에 585억원을 비롯하여 총 2,09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참고로 개발촉진지구사업은 1996년도부터 지정되어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소득기반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기반시설 지원, 세제감면 등을 통해 민간의 지방투자를 유도함으로써 인구와 산업의 지방정착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토의 균형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2014년도에는 충남 예산, 전남 담양 등 7개 개발촉진지구를 신규 지정함에 따라, 개발촉진지구(낙후지역형)는 2014년 말까지 총 60개(해제 포함)가 지정되었으며, 현재 43개 지구에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기존의 개발촉진지구사업은 근거법의 폐지에 따라 지역개발지원법(부칙4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으로 간주되어 추진하게 된다(2015년 1월 1일).

표 2-1-7 개발촉진지구(낙후지역형) 지정 현황

구분	지구 시·군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07~‘09)	7차 (‘09~‘10)	8차 (‘11)	‘13	‘14
계 (7개도)	60 78	7 16	7 11	6 11	6 10	7 9	6 6	8 8	4 4	2 2	7 7
강원	7 12	탄광지역 (태백·삼척· 영월·정선)	영월·화천	평창·인제· 정선	양구·양양	횡성	고성	-	철원		
충북	5 5	보은	영동	-	-	단양/괴산	-	증평	-		
충남	7 7	청양	홍성	태안	보령	-	서천/ 금산	-	-	부여	예산
전북	8 9	진안·임실	장수	순창	고창	무주	-	남원/ 김제	부안		정읍
전남	9 14	신안·완도	곡성·구례	장흥·진도	보성·영광	화순·강진	장성	함평	고흥	무안	담양/ 나주/ 해남
경북	11 17	소백산주변 (봉화·예천· 문경)	산악휴양형 (영주·영양)	중서부평야 (상주·의성)	안동호주변 (안동·청송)	동해연안 (울진·영덕)	영천/ 울릉	청도/ 군위/ 고령	성주		
경남	6 7	지리산주변 (하동·산청· 함양)	의령·합천	남해·하동	합천·산청	함양	-	거창	-		창녕/ 고성

주: 음영 - 해제지구

(3) 일반농산어촌개발(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제외)

2009년까지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은 농림수산물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를 중심으로 하여 각 부처별 특성에 따라 전국토를 대상으로 세부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행정구역단위 분산투자, 중앙부처의 과도한 간섭, 지역간 유사·중복사업 추진 등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일반농산어촌지역 117개 시·군을 대상으로 2009년 이전에 각 부처에서 시행하던 15개 세부사업을 포함하는 4개 사업유형으로 개편하였다. 4개 사업유형은 첫째,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둘째, 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셋째, 신규마을 조성사업, 넷째, 기초생활인프라 정비사업(농촌생활환경정비, 농어업기반정비, 지역창의아이디어) 등이다. 사업내용은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소득증대,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등 4개의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유형별 사업의 목적을 살펴보면,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읍·면소재지를 경제·사회·문화적 기능을 갖춘 농산어촌지역의 거점으로 육성하여 농어촌 주민들의 정주서비스 기능 충족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이며, 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은 마을의 경관개선, 생활환경정비 및 주민소득기반 확충 등을 통해 쾌적한 농촌정주공간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신규마을 조성사업은 농촌 지역에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간을 조성하여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함으로써 농촌 지역 활성화를 도모함이며,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사업은 일반농산어촌의 종합적인 정비, 농업경쟁력 강화, 농촌용수 확보 및 지역의 유·무형 자산을 창의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지역정책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일반농산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에게 최소한의 기초생활수준을 보장하고, 도시민들의 농촌유입을 촉진함으로써 농산어촌의 인구 유지 및 지역별 특색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시·도, 시·군에서 수립하는 시·도 발전계획,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등 상위 계획과 연계하여 시·군단위로 포괄보조사업 5개년 계획(2010~2014년)을 수립하여 시·군에서 예산한도 내에서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고 지자체가 원하는 사업을 지자체가 자유롭게 기획·시행하도록 하였다.

표 2-1-8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대상지역 현황

구분	117개 시·군
경기	평택시, 양평군, 이천시, 안성시, 광주시, 여주군, 가평군
강원	원주시, 강릉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양양군
충북	충주시, 제천시, 청원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충남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당진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전북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원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전남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경북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상주시, 구미시, 영주시, 영천시, 문경시, 경산시, 군위군, 의성군, 울릉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경남	합천군, 마산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제주	제주시, 서귀포시
세종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동 사업이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 참고자료 제공, 계획수립 및 사업집행에 대한 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며, 사업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및 페널티 부여 등을 통해 시·군의 사업추진에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2012년에는 120개 시·군, 1,114개 내역사업에 9,304억원을 지원, 2013년에는 117개 시·군, 1,151개 내역사업에 9,182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117개 시·군, 1,381개 내역사업에 8,723억원을 지원하였다. 2015년도에도 117개 시·군, 1,516개 내역사업에 8,733억원을 지원하여 농산어촌 지역의 정주환경 개선 및 기초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만족수준의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4) 지역 발전역량 강화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과 관계되는 위원장, 사무장 등 리더, 공무원 및 전문가 등 관계자 대상 역량강화는 필수적이다. 이에 지속적으로 교육 대상별 단계별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역량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표 2-1-9 2014년 역량강화 사업 시행내역

과 정 명	교육기간	시행횟수	교육인원(명)
사업5주체교육	1박2일	3	151
신규지구위원장	2박3일	2	80
시행중지구위원장	2박3일	2	48
초급사무장	7일	4	147
중급사무장	6일	2	53
고급사무장	3박4일	1	19
멘토 워크숍	1박2일	1	31
신규권역 추진위원	1일	5	445
현장포럼 실시자	2박3일	2	42
현장활동가(초급)	2박3일	25	504
현장활동가(중급)	3박4일	4	143
현장활동가(고급)	2박3일	2	54
농촌지역개발	4박5일	4	135
색깔있는 마을만들기	4박5일	1	35
농촌 경관계획 및 관리	4박5일	1	35
농촌 삶의질 향상과정	2박3일	1	35
농어촌퍼실리테이터과정	3박4일×2회	1	30
농촌개발컨설팅트과정	3박4일	4	160

마을리더는 권역사업을 신규 추진하는 지구의 위원장과 2년차 이상 사업을 추진하는 지구의 위원장을 구분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였고, 사무장은 역량에 맞추어 초급, 중급 및 고급과정으로 단계적으로 구분하여 추진하였다. 아울러 현장포럼을 실시하는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전문성을 강화하는 현장포럼 실시자 과정 등 전문가 과정도 운영하고 있다.

표 2-1-10 지역개발 전문인력 배출현황

(단위 : 명)

구분	2013년 이전	2014년	계
농촌개발컨설턴트	165	78	243
농어촌퍼실리테이터	59	25	84

2013년부터 각 도에 하나씩 설치된 농촌활성화지원센터는 농촌지역개발과 관련하여 도와 협의하여 지역 인적자원 육성 등의 업무를 수행중인데 2013년부터 지역개발을 지원하는 행정전문인력을 육성하는 현장활동가 초급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2014년부터는 사업을 추진하기 전 마을리더를 대상으로 마을리더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은 색깔있는 마을만들기, 농촌지역개발, 농촌경관 계획·관리 및 농촌 삶의 질 향상과정 등 농촌주민과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현장활동가 중급 및 고급과정도 운영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권역위원장, 사무장 등 마을리더 대상 교육과 농어촌퍼실리테이터 및 농촌개발컨설턴트과정 등 전문가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농촌체험휴양마을 위원장과 사무장을 대상으로도 교육과정을 개설 운영하고 있다. 기타 지역개발관계자, 총괄계획가 및 역량강화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워크숍을 수시로 개최하여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2011년부터 민간자격증이던 농촌개발컨설턴트 자격제도를 2014년부터 국가공인 민간 자격증화하여 운용하고 있다. 또한 2011년부터 농어촌퍼실리테이터 민간 자격제도도 운용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많은 지역개발 전문가들이 배출되어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앞으로 지역개발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행중인 다양한 교육과정을 더욱 보완하고 필요한 과정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5) 특수상황지역 개발지원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은 남북분단 및 도서의 지리적 여건 등으로 지역발전에서 소외된 주민의 복리증진 및 소득증대 등에 기여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도입(2009년 4월)에 따른 포괄보조금제도 시행으로 그동안 소관부처에서 개별법에 의해 단위사업별로 추진해오던 사업을 관할지역별 부처가 통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행정자치부는 접경지역 15개 시·군과 도서지역 19개 시·군·구 186개 도서를 대상으로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4년도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은 사업별 중장기계획에 따라 국토의 불균형발전에 의한 소외·낙후지역 해소에 중점을 두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지역균형발전기반 조성에 주력하였다. 2014년에는 246건의 사업에 대해 국비와 지방비를 합하여 총 2,597억 원을 투자하였다.

표 2-1-11 2014년도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비			
	계	국비(광특회계)	지방비	기타
계	259,737	189,401	69,918	418
기초생활기반확충	149,480	105,699	43,781	-
지역소득증대	90,001	67,697	21,986	318
지역경관개선	19,596	15,477	4,019	100
지역역량강화	660	528	132	-

2010년 이후 특수상황지역(접경, 도서)에 꾸준한 예산투자로 정주여건이 개선되고 주민소득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 증거로 2013년 대비 2014년 지방소득세 부과액이 1.6%로 증가하였으며, 특수상황지역 공무원과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사업만족도가 82.5%로 2013년에 비해 1.4%p(2013년 81.1%) 증가하였다.

2015년도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은 2,529억원을 투자하여 242건의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특수상황지역의 문화·관광자원 개발과 각종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지역 여건과 특성을 감안하여 특성화·차별화된 사업추진으로 주민의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표 2-1-12 2015년도 특수상항지역개발사업 추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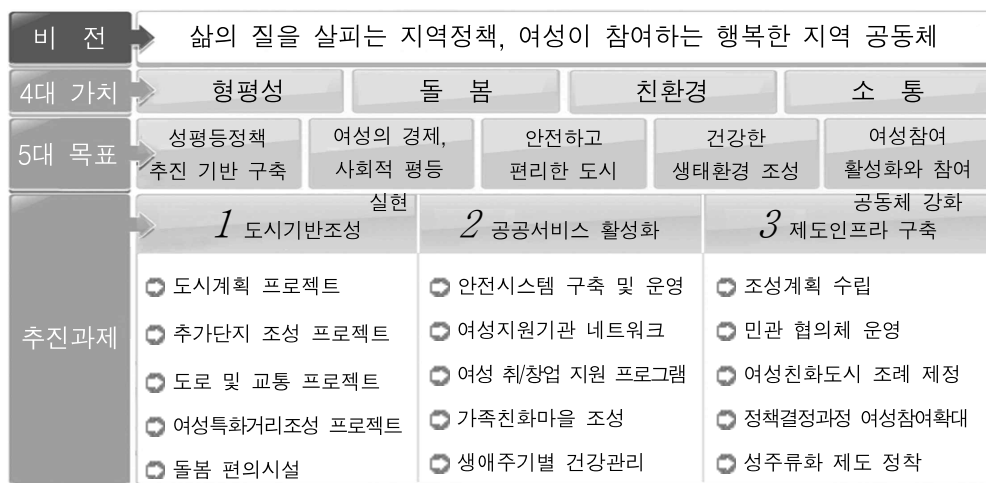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건수	사업비		
		계	국비(광특회계)	지방비
계	242	252,912	189,401	63,511
기초생활기반확충	104	159,574	116,245	43,329
지역소득증대	108	73,205	57,012	16,193
지역경관개선	25	18,778	15,023	3,755
지역역량강화	5	1,355	1,121	234

(6) 여성친화도시 지정 및 조성, 확산 사업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그림 2-1-2 여성친화도시 비전 및 전략체계



여성친화도시는 '삶의 질을 살피는 지역정책, 여성이 참여하는 행복한 지역공동체' 구현을 비전으로 4가지 핵심가치를 추구한다. 첫째는 형평성으로, 지역 내 참여의 기회, 각종 시설과 서비스에의 접근성과 배분, 일상생활의 안전과 편의 등의 측면에서 정의롭고 형평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지역정책 전반에 여성과 일상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둘째는 돌봄으로, 이는 여성의 일로 전가하는 전통적인 고정관념을

탈피하여 남녀가 공유하도록 하고, 사회가 적극 분담함으로써 일-가정 양립의 환경을 촉진하는 것을 추구한다. 셋째는 친환경인데, 이는 신체적 건강을 증진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생태적이며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삶의 전환을 촉진하는 지역발전을 의미한다. 넷째는 소통이다. 이는 행복의 원천인 소통과 친밀한 관계를 촉진하는 주민 공간과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갖춘 민주적이며 개방적인 도시운영 시스템을 의미한다.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지정 사업은 여성가족부가 제안하고 있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기본적인 목표와 핵심 과제를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지역 특성화 과제를 부가하여 지방 정부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2009년에 익산시, 여주시 2개 지자체를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한 데 이어, 2010년 8개 지자체, 2011년 20개 지자체, 2012년 9개 지자체, 2013년 11개 지자체, 2014년 7개 지자체를 추가로 지정하여, 현재까지 총 57개의 여성친화도시가 지정·운영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지역 여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성친화도시의 활성화를 위해 2010년 2월 ‘여성친화도시 조성 매뉴얼’을 개발·배포하였으며, ‘여성친화도시 안내’ 책자를 발간하여 정책 홍보 자료로 활용하였고, 2010년부터 공무원(관리자, 담당자), 지역 시민리더들을 대상으로 여성친화도시 정책형성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지자체가 여성친화도시가 추구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나갈 수 있도록 2011년부터 매년 이행점검 및 정책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7) 창조지역 사업 확대

창조지역사업의 추진배경은 선진국의 창의성을 기반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지역 및 국가경쟁력을 확충해나가는 추세에 부응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기존의 시설물·SOC 중심의 지역개발에서 벗어나 자연·환경·문화 등 지역별 고유의 특색 있는 사업의 발굴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제고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성장모델을 찾아볼 필요성에서 시작되었으며, 지역의 정체성과 지격(地格)을 살린, 살고 싶은 지역개발을 위해 기존의 획일적으로 지원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지자체의 자구적·창조적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2010년도에 신규로 도입하였다.

지역발전위원회는 매년 초 다음 연도 신규사업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관계부처(행자부, 농식품부, 국토부, 기재부 등)와 협의를 거친 후, 3월 중에 관련부처 및 광역시·도에 신규사업 가이드라인을 통보한다. 시·군·구에서는 5월 초까지 시·도에 신규사업

을 신청하며, 각 시·도에서는 5월 중순까지 해당부처에 신규사업을 신청한다. 해당부처에서는 신규사업 신청서에 대한 1차 검토를 하여 5월 하순까지 지역발전위원회에 제출한다. 지역발전위원회에서는 창조지역사업관련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 심사를 거쳐 선정하여 관련부처에 통보하고 관련부처에서는 다음 연도 예산안에 반영하여 정부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9월경에 다음 연도 창조지역 신규사업을 확정하게 된다.

창조지역사업은 “①지역의 유·무형 자산을 토대로, ②창의적 발상으로, ③지역 주민의 참여하에, ④일차적으로 주민의 행복을 위해 이루어지는, ⑤장기적 관점의 지역사업”으로서, 광의적이면서 동태적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창조성과 지역보유자원을 기초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부가가치의 창출’에 목적이 있으며, 내발성·주민참여·상향식 사업추진 등을 특징으로 한다.

창조지역사업은 2011년도부터 안전행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의 포괄보조신규예산(지역계정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일부를 활용하여 매년 50억원 내외 규모로 20여개 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사업대상은 문화예술, 자연자원, 첨단산업, 스포츠 이벤트, 관광자원, 농식품 등 ‘새로우면서 차별성이 있고 독특한 창조적 아이디어’를 지역개발에 적용시키는 일체의 지역개발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사업선정기준은 사업취지 부합성(20%), 사업내용의 창조성(30%), 효과성(25%), 타당성(10%), 추진체계(15%) 등이며, 제외되는 사업의 경우는 H/W 비중이 30% 이상 사업, 주민참여가 전혀 없거나, 미미한 관 주도 사업, 창조성·차별성이 낮은 사업(지역내 또는 타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어 경쟁이 심하고, 수요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정부보조금 종료 후에 사업 지속가능성 및 파급효과가 적은 사업을 들 수 있다.

국고예산 지원현황은 2014년말 기준으로 74개 사업에 국비 439억원의 예산이 지원되었다. 연도별로는 2011년 13개 사업, 2012년 16개 사업, 2013년 18개 사업, 2014년 27개 사업이 추진되었다. 지역별로는 전북 14개, 전남 11개, 경북 10개, 경남 9개, 충남 8개, 강원과 충북이 각각 7개, 대구광역시 3개 등이며, 대전, 세종, 광주, 경기, 제주 등이 각각 1개 사업이다.

2015년 창조지역사업(2014년 선정)은 각 지자체에서 136개 사업을 공모 신청하였으며, 지역발전위원회와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및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21개 사업을 선정하여 43억원을 반영하였다.

표 2-1-13 2015년 신규 선정사업 예산 내역

사업구분	소관부처	선정건수	'15년 지원액(3년간 지원액)
특수상황지역개발	안전행정부	2건	7억원(12억원)
일반농산어촌개발	농림축산식품부	16건	30억원(68억원)
도시활력증진	국토교통부	3건	6억원(16억원)
합 계		21건	43억원(96억원)

표 2-1-14 2015년 신규 선정사업 현황(21개)

권역	시도	부처	사업명	사업내용
서울권	서울	국토	○ (중구) 건강과 문화가 흐르는 Urban Health City Community	▪ 도심 문화건강공동체 구축, 중림시장 활성화, 중구 해피메디컬 투어리즘
		안행	○ (춘천시) 김유정 소설 <i>사랑 담긴 실레</i> 이야기 사업	▪ 애니메이션 및 캐릭터 제작, 상영관 설치, 음성안내판 제작 등
강원권	강원	농림	○ (횡성군) 주민이 함께하는 안흥짬뽕 세계화 프로젝트	▪ 짬뽕명인 양성, 상징물 건립
		농림	○ (영월군) 술이 솟는 샘(酒泉) 술샘마을 육성사업	▪ 왕실전통주 복원, 교육,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농림	○ (괴산군) 유기농 로컬 Food를 이용한 전통 천연 발효 융·복합 사업	▪ 유기농 체험학습장 조성, 체험·관광 연계사업
충청권	충북	농림	○ (증평군) 장뜰두레 농경문화 보존사업	▪ 장뜰 프로그램 개발, 농경문화 전시
		농림	○ (부여군) 그림책 읽는 마을찾집, 기억의 정서적 땃줄을 잇다	▪ 마을 이야기꾼 양성, 마을 그림책 콘텐츠 제작, 그림책 마을찾집 조성
	충남	농림	○ (서천군) 유네스코 무형유산 한산 모시짜기 전승 및 육성사업	▪ 모시학교, 공예아카데미, 유통관리시스템 구축 등
		농림	○ (안주시) 무명 전통복원을 통한 슬로우 패션 마을 만들기 사업	▪ 기능인 양성,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작업장 및 전시관 설치 등
경기권	경기	국토	○ (부천시) 움직이는 문화공간 3.0 부천	▪ 문화강좌, 만화책 제작, 움직이는 강의실 등
		국토	○ (광안구) 다시 쓰는 농촌, 일상·경험·마을을 더하는 『더하기 지구』	▪ 역사공작소, 작은책방, 꼬마농부 상상학교, 들넉다방 운영 등
호남권	전북	농림	○ (김제시) 청소년 녹색 뇌(腦) 프로젝트	▪ 농촌체험, 식품만들기, 문학기행 등
		농림	○ (고창군) 선사의 맛을 찾아 떠나는 시간여행	▪ 마을별 대표음식 만들기, 식도락 마을체험 사업단 운영 등
		농림	○ (순창군) 순창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대사성 질환 치유마을 조성	▪ 치유음식 개발, 농가활용 치유 빌리지 조성 등
	전남	농림	○ (곡성군) 곡성&심청 스토리 공감 행복누리 사업	▪ 심청가 배우기, 주민극단 공연, 판소리명가 쉼터 조성, 콘텐츠 발굴 등
		농림	○ (영암군) 자연을 살리는 체험학교-선애(仙愛) 마을	▪ 생태문화 체험, 디자인(퍼머컬처) 컨설팅, 빗물 홍보관 운영 등
		농림	○ (진도군) 전통민속 상·장례 문화 新 커뮤니티 만들기	▪ 진도 상·장례 커뮤니티 만들기 및 상·장례 문화학교 운영 등
영남권	경북	농림	○ (문경군) 백두대간 산길따라 국민 안전 지킴이 사업	▪ 등산학교 운영, 환경보전 캠페인, 역사 이야기 길 조성 등
		농림	○ (군위군) 아이들의 웃음소리 넘쳐나는 (희희낙낙 <喜喜樂樂> 기쁨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 테마역사, 자연생태, 전통문화 등 권역별 콘텐츠 활용 체험마을 조성
	경남	농림	○ (함양군) 함양백연(白蓮)산업 육성 및 명소화	▪ 백연 생산기반 확대 및 가공식품 개발, 백연 요리경연대회 등
제주권	제주	농림	○ (서귀포) 창조형 미래인재 『관광 도슨트(Tourism Docent)』 육성사업	▪ 지역 관광 도슨트(Dosent) 전문인재 양성 등

그동안 지역발전위원회에서는 매년 지자체 담당공무원 워크숍을 실시하고 전문 컨설턴트와 함께 사업현장을 방문하여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창조지역사업 취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온 결과, 모범이 될 만한 사례도 여러 건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12년 창조지역사업인 칠곡군의 인문학도시 조성사업(2011년 선정) 사례가 있다. 칠곡군은 인문학을 창조지역 사업의 테마로 삼아 주민들이 공감할 콘텐츠 개발을 강조하여 주민들의 삶의 한 부분이 되는 것에서 인문학 소재를 찾고자 했다. 예컨대, 행복한 인문학 마을 만들기를 핵심요소로 마을이 가지고 있는 전통문화, 설화 같은 인문학적 자산을 주민 스스로 찾아내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이를 보존하기 위한 마을 공동체 교육을 실시하고, 마을회관이나 공가를 활용해 만든 마을의 갤러리에서 이러한 마을 자산을 전시하기도 했다. 성인 문해교육도 실시하여 글을 모르는 노인들에게 한글 및 산수를 가르쳤으며, 교육과정을 마친 할머니들이 창작한 글을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 지역의 어르신들에게 새로운 삶의 계기를 제공함과 동시에 인문학의 출발을 이루었다.

2011년 창조지역사업인 예천군의 꿀벌 우수 종봉 선발사업은 지역의 특성과 강점을 살린 사업에 집중한 사례로 평가된다. 예천군은 백두대간에 위치하여 밀원식물이 풍부하고 격리된 지형으로 꿀벌 육종에 적합하다는 지역특성을 잘 활용하였다. 게다가 최근 이상기온, 환경오염 등으로 꿀벌이 줄어들고 근친교배로 여왕벌의 능력이 퇴화하여 봉산물(벌이 생산하는 산물) 생산량이 줄어들어 양봉농가가 어려움을 겪는 현실에서 우량 종봉을 보급하는 공적 기관이 없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래서 예천곤충연구소 일대에 꿀의 원료가 되는 밀원숲과 격리된 육종장 등을 조성하고 질병에 강하고 로열제리 등 봉산물 생산성이 뛰어난 우량 종봉 개발에 성공하여 전국 양봉농가에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 성공사례들이 축적되고 각종 경험 공유의 자리들이 마련되면서 창조지역사업의 이념과 철학에 대해 공감하는 지방자치단체도 늘어나는 것으로 평가된다.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주민들의 실생활과 맞닿은 소프트웨어 중심 사업 개발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대되었다.

창조지역사업의 성과를 더 확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해결해야할 과제들도 있다. 사업 주관부처를 단일화하고 적정한 예산규모를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창조지

역사업은 시·군·구 포괄보조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참여부처가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등 3개 부처로 나뉘어져 있고 예산이 매년 감소추세에 있는 등 예산을 확보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사업예산 확보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더욱 중요한 과제는 창조지역이라는 정책 기조를 유지·발전시키고 공감대를 더욱 넓혀나가는 일이라 할 것이다. 하드웨어 중심의 지역발전사업을 보완하기 위해 창의적인 소프트웨어를 콘텐츠로 하는 지역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일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정책방향이기 때문이다. 지자체 및 중앙부처 공무원, 지역주민들, 유관기관 사이에 창조지역사업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차별화된 사업과제를 적극 발굴하도록 지속적인 교육 및 정보 공유 등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3. 지역공동체 활성화

(1)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공동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농정 패러다임 역시 중앙정부 주도에서 주민 참여 중심으로 전환되는 정책 환경의 변화에서 고령화 등에 따른 농촌 활력 저하에 대응코자 2011년부터 농촌공동체회사 지원 정책을 도입하게 되었다.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은 농촌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농촌공동체회사 사업을 지원해 농가 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 농촌에 필요한 각종 사회서비스 제공 등 농촌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2011~2013년까지 지자체를 통해 우수 농촌공동체회사를 공모하여 매년 54개소를 선정하였고, 개소당 50백만원(국비 50%, 지방비 25%, 자부담 25%)을 시제품개발, 홍보 등의 용도로 지원하였다. 2013년 11월 사회서비스제공형 농촌공동체회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공공서비스 부족 등 지역 복지문제의 주민주도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제공형 농촌공동체회사를 집중 육성하는 방향으로 사업추진방향을 개편하였다. 이에 2014년 우수 농촌공동체회사 사업 공모시 소득사업유형과 사회서비스제공형을 구분하여 선정하였고, 신규 농촌공동체회사의 경우 사회서비스제공형 농촌공동체회사만 선정함으로써 2013년 1개소에서 2014년 14개소를 발굴하는 성과를 창출했다.

표 2-1-15 농촌공동체회사 유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자원부족, 접근성 등으로 인한 농촌의 사회서비스 공급 부족 등 농촌사회문제해소를 위하여 복지·교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유형
복합형		사회서비스제공형과 소득사업유형의 사업을 함께 수행
소득 사업 유형	농식품 산업형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영농 지원 및 식품산업 육성 활동
	도농 교류형	도시민의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 증진, 도시민의 농촌 방문·체류 촉진 활동
	지역 개발형	생활 환경개선, 지역역량강화, 향토자원 발굴·상품개발 등 지속가능한 농촌을 만들기 위한 활동

2014년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은 양적·질적 확대를 가져왔다. 우선 소득사업유형과 사회서비스 유형을 합쳐 60개소(전년대비 6개소 증가)를 지원하였고, 소득사업에 치중되었던 지원을 사회서비스 제공형을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써 농촌지역에 상대적으로 부족한 복지서비스를 주민주도로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향후 사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인건비·운영비 사용이 가능하도록 지원용도를 완화하고, 지원기간을 확대함으로써 사회서비스제공형 농촌공동체회사를 지속 육성할 예정이다. 또한 현장 맞춤형 역량 제고를 위해 컨설팅 지원을 강화하고, 모니터링 및 홍보 지원 등을 통해 농촌공동체회사가 농촌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2) 현장포럼 활성화

여러 부처에서 다양하게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많은 재원을 지역에 투입하여 마을의 정주여건이 개선되는 등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제한되고 마을리더, 전문가 및 시·군 담당공무원 등 일부의 주도하에 지역개발사업이 추진되어, 일부 마을의 경우 사업 추진단계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사업 추진 후에도 주민들의 관심 및 참여 부족으로 인해 일부 시설물이 방치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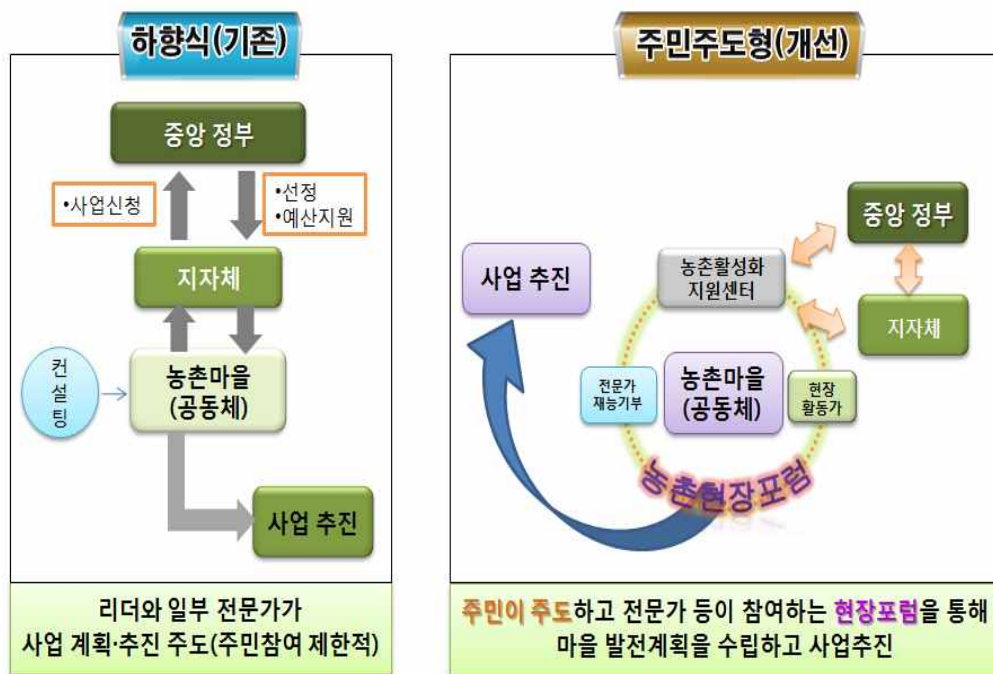
이를 개선하고자 2011년부터 도농상생과 국토 균형발전을 목표로 농촌마을을 마을마다 특색이 살아있는 색깔마을로 가꾸어 나가자는 ‘함께하는 우리농어촌 운동’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그 핵심과제 중 하나가 주민주도의 마을 만들기이고, 그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농촌 현장포럼이다.

표 2-1-16 농촌 현장포럼 추진 마을 수

(단위 : 개)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잠정치)
농촌현장포럼 추진	37	234	350	418

그림 2-1-3 마을사업 추진체계



농촌 현장포럼이란 주민이 현장활동가, 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아 마을이나 권역의 다양한 유무형의 자원과 역량을 분석·진단하고, 주민들이 참여하여 마을의 발전계획이나 마을에 필요한 자율적 결과물 도출을 목표로 한 주민 참여형 공동체 역량강화 프로그램이자 주민협의 프로그램이다. 2012년 37개 마을 시범운영을 거쳐 매년 그 규모를 확대하여 농촌 현장포럼을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에서는 농촌개발사업을 기존의 하향식 마을개발사업 추진에서 주민이 주도하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현장포럼을 통해 마을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주민주도형 마을개발사업으로 개선하여 추진하고 있다.

농촌 현장활동가란 농촌현장포럼 기획 등 색깔있는 마을 만들기에 필요한 지자체 정책 기획, 마을 역량강화 등을 지원하는 행정 전문인력으로 마을만들기 업무관련 공무원, 한국농어촌공사 직원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육성 및 관리하고 있다. 2014년의 경우 초급과정 25회 504명, 중급과정 4회 143명, 고급과정 2회 54명이 수료하였으며, 고급과정 수료자에 대해서는 농어촌퍼실리테이터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여 현장밀착형 전문가를 육성하고 있다.

2013년부터는 색깔있는 마을 육성 등 농촌지역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대학과 전문기관을 연계하여 컨소시엄 형태로 도별 1개소씩 총 9개소의 농촌 활성화지원센터를 구축하였다.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방향은 정립되어 가고 있다. 향후 시·군단위의 중간지원조직 구축 등 보다 효율적인 추진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3)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육성

자율관리어업은 어업인 스스로 자체규약을 정해 지역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자원을 관리하도록 하여 지속가능한 어업생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정부는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을 통해 수산자원 및 어장환경 관리 역량, 어업 경영 능력 제고 및 어촌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자율관리어업을 하고자 하는 공동체는 사업 신청 후에 자원을 조성하고 관리하며 어장환경을 조성하는 활동을 실천하여 평가를 받고 우수공동체로 선정된 후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자율관리어업은 2001년 63개의 공동체로 시작하여 2014년 신규공동체 47개소를 육성하여 총 1,086개 공동체로 증가하였으며, 수산자원·경영 관리 역량 강화로 어업경쟁력 및 공동체 경영 능력을 제고 했다. 특히 신규 공동체에게 컨설팅을 병행하여 공동체 육성 효과를 극대화 하였다.

현재까지 양적인 성장에 주안점을 두었지만 기존의 자율관리어업공동체가 우수공동체로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교육기회 확대 및 체계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어촌활력정착 지원

어촌의 산업이라 하면 어촌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어촌산업의 부가가치 창출이다. 어업인과 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지역의 수산물, 어촌전통문화 등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여 식품가공 및 제조, 어촌문화관광, 서비스업 등을 제공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또한, 농촌과는 다른 어촌의 지형적인 영향으로 인해 반농반어의 어촌 사업구조 특성상 수산물 외 생산되는 농업생산물도 어촌산업에 포괄적으로 함께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어촌 산업의 특성상 최근 어촌지역개발의 환경은 변화하고 있다. 2013년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지역개발 정책 기조는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춘 지역행복생활권 구현과 기존 광역경제권 정책 개편으로 생활권이 연계되는 주민체감형 균형발전으로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해양수산부가 재출범으로 인해 어촌과 농촌의 지역개발사업이 분리되고 어촌·어항·수산분야 정책에 부합되는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어촌만의 독립적이고 능동적인 전략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재출범 하면서 그동안 수산물 시장개방, 자원감소, 고유가 지속, 고령화, 해양환경 악화, 기후변화 등 대내외적인 문제 등으로 어촌산업이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있고 이렇듯 어촌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다양한 문제 극복을 위한 정부의 新부가가치 창출 모델 발굴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로 인해 주민주도의 내생적이고 상향식 개발방식으로 어촌 지역개발 정책의 패러다임도 변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렇듯 많은 시대적 변화와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표적인 정책 사업이 바로 어촌 6차산업화로 어촌 6차 산업화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어촌 공동체 회사 육성과 기술지원, 어촌특화발전지원 특별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 구축을 통해 어촌 6차 산업화 정책을 지원하고 수산업을 기반으로 가공·유통·판매·관광·서비스 등의 융복합화를 추진하여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도모하고 있다.

어촌의 6차 산업화는 어촌지역 수산자원을 기반으로 어촌주민과 어촌공동체 주도의 특화 계획에 따라 1, 2, 3차 산업의 융복합화를 통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개별적으로 추진된 생산·가공·유통·관광 등 기존 사업을 연계하여 부가가치를 창출과 이를 통해 어촌 6차 산업화 기반을 구축하며 마을공동체 기업을 육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어촌·수산정책을

실현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2014년부터 전국 5개의 어촌마을을 대상으로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13년 전국 8개 마을을 대상으로 실시된 어촌특화역량강화교육을 이수한 마을 중 공모과정을 통해 4개 마을을 선발하였고, 그 결과 태안 중장5리마을, 해남 송호·중리마을, 여수 안포마을, 거제 해금강마을이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다. 이와는 별도로 양양 남애마을이 바닷속 체험마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다.

어촌 6차 산업화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5개 마을에 대해서는 각각 1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된다. 6차 산업화를 위한 불가피한 필수시설 지원을 제외하고는 시설위주 사업에서 탈피해 사업역량 제고, 홍보·마케팅, 연구개발, 브랜드개발 등의 S/W개발에 초점을 맞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어촌 6차 산업화는 시범사업 단계로 지원하고 있지만 해양수산부, 지자체, 사업시행 기관, 마을주민 등 사업 주체자들의 유기적이고 협력적인 지원체계를 갖추고 본 사업이 어촌지역개발을 위한 주요 정책사업으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2019년까지 현재 5개소인 사업 대상지를 45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아직 처음 시행하는 시범사업이라는 단계적 특성상 주민들의 사업 이해도와 사업계획 수립의 시행착오 등 미흡한 부분도 존재하고 있지만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전문가 현장 컨설팅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어 향후 성공적인 어촌활력증진을 위한 사업이 될 것이라 기대된다.

(5) 마을기업 육성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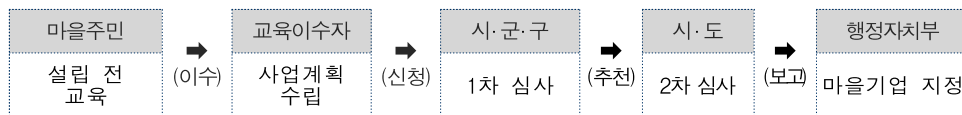
마을기업은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을 의미한다.

마을기업은 지역실정을 가장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주도하에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육성하여 지역문제해결과 지역발전활성화를 유도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2010년 국제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시작한 희망근로사업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으

로 변경하면서 보다 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사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도입하게 되었으며, 2011년 1월 25일 「2011년 마을기업 육성 시행지침」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됨에 따라 본격 추진되었다.

표 2-1-17 마을기업 지정 절차



마을기업은 지역주민 5인 이상이 참여하는 법인형태 조직을 대상으로 공동체성과 지역성, 공공성, 자립가능성 등에 대한 시·군·구와 시·도의 심사 이후, 행정자치부의 최종심사를 통해 지정된다. 지정된 법인 등과 기초자치단체간 마을기업 육성협약을 체결하며, 사업비는 국고보조금 형태로 1:1 매칭(국비 50%, 지방비 50%)하여 지급한다. 마을기업에 대한 사업비는 1차 년도에는 5천만원, 2차 년도에는 3천만원 등 총 8천만원 이내에서 2년간(1+1년) 지원되며, 사업비 외에도 전문교육 및 컨설팅, 박람회 참여 등의 자립을 위한 지원 활동도 이루어지고 있다.

2014년 현재 마을기업은 총 1,249개로 경기도(162개), 전남(109개) 소재 마을기업이 가장 많으며, 제주(26개)와 세종(12개) 소재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을기업을 통한 고용인원은 10,281명으로 1개 마을기업당 평균 고용인원은 8.2명이다. 2014년 마을기업의 총 매출액은 100,362백만원으로, 1개 마을기업 당 평균 매출액은 80백만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1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마을기업은 2012년 120개에서 2014년 220개로 83%이상 증가하는 등 마을기업의 수익성도 증가하고 있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평가된다.

이와 같이 마을기업은 지역공동체를 강화하고 침체된 지역에 활력을 부여하는 사회적 효과뿐만 아니라 고령인력 및 유휴인력에 대한 일자리 창출, 주민소득 증대 등 경제적 효과도 낳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마을기업육성법의 제정, 지원 체계의 효율화, 마을기업 홍보 및 판로개척 강화 등을 통해 더욱 발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6) 자활기업 육성

자활기업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상호 협력하여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형태로 설립·운영되는 업체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요건을 갖추고 보장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기업으로, 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자활기업 참여를 통한 탈빈곤을 목적으로 한다. 1990년대 노동자협동조합운동을 모태로 시작된 자활기업은 오랫동안 자활공동체로 불렸으나, 2011년 12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면서 2012년 7월부터 자활기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자활기업은 자활근로사업을 거쳐 자립하는 자활경로의 최종단계로, 구성원 중 수급자가 1/3이상이어야 인정되며, 지원대상 자활기업 요건을 갖춘 경우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실시기관(읍면동 포함)에서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면, 시·군·구청장은 지원 타당성과 사업수행 능력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시·군·구청장 명의의 자활기업인정서를 발급한다. 자활기업은 자활사업의 최종 귀착지이자 탈출구이며, 정부에 의해 제도적으로 규정되는 조직, 지역자활센터에 부여되는 의무라는 특성이 있으며, 구조적으로 취약한 자본력, 영세한 규모, 낮은 경제적 성취 등으로 기업의 지속가능성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자활기업은 ①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구성되어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자활기업과 ② 2개 이상의 기초 자활기업 연합 또는 2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의 수급자 등으로 구성되어 광역단체장이 인정하는 광역자활기업, ③ 전국단위의 자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2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의 자활기업이 연합하는 경우 복지부에서 인정하는 전국자활기업이 있다. 2014년말 기준 자활기업은 1,241개소에 8,550명(수급자 2,757명, 차상위계층 1,953명, 일반 3,84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근로능력을 고려하여 개발한 5대표준화사업(간병·집수리·청소·폐자원재활용·음식물재활용)에 전체 업종의 60%가 집중되어 있다. 광역자활기업은 32개소에 1,500여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전국자활기업은 3개소에 1,780여명이 종사하고 있다. 보장기관에서는 자활기업 창업 자금 융자 지원, 임대보증금 지원, 국·공유지 우선임대, 국가·지자체 사업의 우선위탁 및 자활기업 생산품 우선구매, 한시적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자활기업의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정립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자활기업에 대한 정책 로드맵을 만들고 관리 시스템을 정비하는 등 지원제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제2절 주민 체감 생활인프라 구축

1. 생활체감 도시 인프라 정비

(1)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정부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하되 개발제한구역의 엄격한 규제로 도시주변이면서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완화하고 지원 및 보상대책의 일환으로 개발제한구역특별법 제16조에 의거하여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다. 주민지원사업에는 ① 주민의 생활편익과 소득증대, 복지증진 및 생활비용 보조 등을 위한 지원사업과 ② 개발제한구역 여가공간 확충을 위한 누리길, 여가녹지 등 환경문화사업, ③ 개발제한구역 보전과 관리를 위한 훼손지 복구사업이 있다. 주민지원사업은 2001년 생활편익사업과 복지증진사업을 시작으로 현재는 소득증대사업, 생활비용보조사업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은 1971년 수도권을 시작으로 1977년까지 5,397km²가 지정되었으나 현재는 제도개선을 통한 구역조정에 의해 14개 시·도에 3,861.5km²(2014년 12월 31일 기준)가 유지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내 공공시설 등의 무분별한 입지를 억제하고, 보존과 관리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특별법 제21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징수하고 있으며 징수한 부담금은 구역 내 토지를 매입하거나 주민지원사업 등의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구역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녹지축 유지에 필요한 토지를 국가가 매수하는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제도를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2014년 12월까지 정부는 4,90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총 1,357필지, 22,326천m²의 토지를 매입하였다. 매입한 토지는 친환경적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에 맞게 보존·관리하고 있으며, 일부 토지는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여가녹지공원 등 조성에 활용하고 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의 엄격한 규제로 도시주변이면서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주

민들의 생활편익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생활편익사업을 통해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있으며, 학자금 및 각종 공과금 등 구역주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생활비용 보조를 통해 생활보장 대책 마련 및 상대적 박탈감을 완화하고 있다. 2014년까지 총 2,673건, 8,648억원을 집행하였으며, 지원항목별 집행건수는 생활편익사업 2,296건(7,056억원)으로 가장 많이 지원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복지증진사업 88건(245억원), 소득증대사업 50건(149억원), 연구조사사업 4건(11억원)이며, 생활비용보조사업으로 4,657세대를 지원하였다.

(2) 재정비 촉진사업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촉법”이라 한다)에 의해 추진되는 재정비촉진사업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 열악하거나 낙후지역 등인 경우에도 재정비촉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도촉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를 개정하여 도시영세민 집단이주지역 등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사업시행자의 부담만으로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와 해당 시·군·구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 이하인 경우에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국가의 지원을 의무화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낙후된 구시가지의 낙후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정비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재정비촉진사업의 주된 목적인 것이다.

재정비촉진사업지원은 도촉법 시행령 제32조에 규정된 재정여건 또는 지구여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군·구에는 지원대상 기반시설인 도로, 공원, 주차장의 설치비용의 10~50%(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기준)를 1,000억원 한도 내에서 국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2009년부터 지원하기 시작하여 2014년까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답십리지구 등 38개 지구에 총 5,028억원의 국비를 지원하여 착공, 보상, 설계용역 등의 과정에 있으며, 2015년에는 1,150억원의 국비를

확보하였다. 향후에는 재정비촉진지구 중 현재 국비를 교부 중인 33개 지구와 국비를 교부하지 않은 21개 지구에 지원범위 내에서 재정비촉진사업 예산을 지원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개별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표 2-1-18 재정비촉진사업 지원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세부내용
재정비촉진사업 지원 지구수	38
국비 지원 금액	5,028
사업 기간	2009년 ~ 계속
지원 비율	10 ~ 50%
사업시행주체	지자체

표 2-1-19 재정비촉진지구 현황

시·도	지 구	최종면적 (천㎡)	지구지정일	지원비율	지원가능 여부
서울시	① 은평 은평	3,492	'06.10.19	10%	○
	② 성북 길음	1,251	"	10%	○
	③ 용산 한남	1,110	"	10%	○
	④ 노원 상계	646	"	10%	○
	⑤ 은평 수색·종산	893	"	10%	○
	⑥ 서대문 북아현	900	"	10%	○
	⑦ 금천 시흥	721	"	10%	○
	⑧ 영등포 신길	1,469	"	10%	○
	⑨ 동작 흑석	870	"	10%	○
	⑩ 관악 신림	529	"	10%	○
	⑪ 송파 거여·마천	1,044	"	-	x
	⑫ 동대문 이문·휘경	1,012	"	10%	○
	⑬ 성북 장위	1,873	"	10%	○
	⑭ 중랑 상봉	506	"	10%	○
	⑮ 광진 구의·자양	385	"	10%	○
	⑯ 강동 천호·성내	276	"	10%	○
	⑰ 종로·중구 세운	438	"	-	x
	⑱ 중랑 중화	511	'06.12.21	10%	○
	⑲ 양천 신정	698	"	-	x
	⑳ 강서 방화	509	"	10%	○
	㉑ 동작 노량진	735	"	10%	○
	㉒ 동대문 전농·답십리	906	'08.12. 2	10%	○
	㉓ 강북 미아	980	'08.12.11	10%	○
	㉔ 동대문구 청량리	370	'09.09.10	10%	○
	㉕ 서대문구 가재울	1,077	'09.12.10	10%	○
	㉖ 영등포구 영등포	226	'10.01.21	10%	○
	㉗ 마포구 합정	297	'10.01.21	10%	○
	㉘ 마포구 아현	1,088	'10.08.19	10%	○
	㉙ 서대문구 홍제	200	'10.12.16	10%	○

시·도	지 구	최종면적 (천㎡)	지구지정일	지원비율	지원가능 여부
부산시	㉔ 강동구 천호	413	'14.07.31	10%	○
	㉕ 금정구 서·금사	1,524	'07.05.23	30%	○
	㉖ 진구시민공원주변	896	"	30%	○
	㉗ 영도구 영도제1	590	"	30%	○
대구시	㉘ 동구 신암	1,085	'07.05.21	30%	○
	㉙ 서구 평리	689	'10.11.22	30%	○
인천시	㉚ 동구 동인천역	310	'07.05.21	10%	○
	㉛ 남구 주안 2,4동	1,274	'08.05.26	20%	○
대전시	㉜ 동구 대전역세권	887	'06.12.29	30%	○
	㉝ 대덕구 상서·평촌	2,595	'07.07.31	30%	○
	㉞ 서구 도마·번동	2,213	'07.08.31	30%	○
	㉟ 중구 선화·용두	739	'07.11.09	30%	○
	㊱ 유성구 유성시장	338	'07.12.28	30%	○
	㊲ 대덕구 신탄진	470	'07.12.31	30%	○
	㊳ 동구 신흥	678	'08.03.28	30%	○
	㊴ 유성구 도룡	501	'08.09.12	30%	○
경기도	㊵ 구리 인창·수택	2,072	'07.06.04	10%	○
	㊶ 광명 광명	2,281	'07.07.30	10%	○
	㊷ 고양 원당	1,306	'07.09.10	-	x
	㊸ 고양 능곡	843	'07.11.05	-	x
	㊹ 남양주 덕소	636.7	'07.11.26	20%	○
	㊺ 고양 일산	612	'07.12.31	-	x
	㊻ 평택 신장	518	'08.05.07	10%	○
	㊼ 남양주 도농	583.2	'08.06.02	20%	○
	㊽ 김포 재정비	2,008	'09.01.16	20%	○
강원도	㊾ 남양주 퇴계원	304	'09.04.30	20%	○
	㊿ 춘천 약사	729	'08.08.29	40%	○
	㊽ 춘천 소양	829	"	40%	○
충남도	㊾ 아산 온양중심상권	224	'07.12.10	30%	○
전남도	㊿ 목포 서산·온금	388	'09.11.27	50%	○
경북도	㊽ 포항 동빈내항복원	591	'09.02.12	30%	○

(3)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2007년 「건축기본법」 및 「경관법」이 제정되어 경관 향상을 위한 제도적 여건은 마련되었으나, 그동안의 경제성·기능성 위주의 토지이용 등으로 국가 위상에 비해 국토경관 형성 및 관리는 열악한 수준이다. 또한 경관에 대한 관심은 증가하고 있지만, 지자체의 재정 여건 등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경관관리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을 통해 지자체의 디자인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품격 높은 공간 환경을 조성하여 개별적·산발적으로 추진해 왔던 사업들의 연계를 강화하고 종합적으로 구상함으로써 지역 활성화에 기여한다.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은 계획수립 지원을 원칙으로 하여 통합마스터플랜 수립과 디자인 관리체계 도입을 위해 지자체당 1.5억원의 국비를 정액지원하고 있다. 시범사업 대상 선정은 경관개선 효과가 크고, 타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실현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우선 고려한다.

2009년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해온 결과, 2009년 마스터플랜 10개소 수립을 시작으로 2014년까지 총 29개 지자체에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다.

표 2-1-20 연도별 마스터플랜 수립 개소

(단위 : 개소)

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9	10	6	2	4	3	4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은 원칙적으로 시공비 지원을 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타부처 또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신청시 적극적으로 행정적 지원을 한다. 현재까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지자체는 연계사업 추진성과는 아래와 같다.

표 2-1-21 연계사업 추진성과

(단위 : 백만원)

연도	지자체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연계사업 추진 성과	
		마스터플랜 수립	내용	투입 예산
'09	대구 남구	함께 소통하는 공간으로 미군부대가로환경 정비사업(100, '09)	▶ 앞산 맞돌레길 사업('10~'14) ▶ 문화·예술 생각대로 사업('11~'15)	10,000
	대전 중구	대전 문화흐름 "중교통" 조성 사업(100, '09)	▶ 산소충만 생생도시 재창조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사업 ('11~'14)	9,080
	전남 목포	목포 근대역사문화타운 내 신파의길 시범가로 조성사업(200, '09)	▶ 근대역사문화 예술공원 조성사업('11~'12) ▶ 유달산 주변 구도심 공폐가 활용 예술인마을 조성('14~'17)	11,300
	경기 안산	공공디자인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들의 상록수(100, '09)	▶ 상록수역 공공디자인사업	200
	경북 영주	새롭게 열리는 역사의 통로(200, '09 / 500, '10)	▶ 40-50년대 형성된 근대시장(후생시장, 중앙시장)과 舊 철도역사 주변 재생	10,000
	강원 춘천	경춘선 철도교량 하부 녹색 공간 조성(200, '09)	▶ (경춘선)하부공간 소공원 조성사업	7,000
	충북 충주	도심 속 녹색생활공간 조성 사업(200, '09)	▶ 충주생태하천 복원사업('10~'15)	42,000
'10	강원 철원	자연과 소통하는 청정 철새마을 문화기반 시설조성 시범사업(150, '10)	▶ 소이산 생태숲 녹색길 조성사업 ▶ DMZ 철새평화타운 조성사업('13~'15)	3,000
	경남 김해	호계천 주변 창의적인 네트워크 사업(200, '10)	▶ 가야역문화 공공디자인 정비사업('10~'15)	15
	경북	해양강국으로 가는 느낌표! 국립 등대박물관	▶ 호미곶 해맞이광장 경관디자인 명소화 사업	2,500

	포항	및 호미곶 주변일대 Redesign 사업(150, '10)		
	부산 중구	영주동 '오름길 문화 만들기'(150, '10)	▶ 중구 오름길 문화만들기 실시설계 - 중구 오름길 모노레일 설치('14.06.12. 준공)	2,194
	충남 보령	대천해수욕장 워터프런트 디자인 리노베이션 프로젝트(200, '10)	▶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1차~3차)	173
	충북 청주	빛이 흐르는 아름다운 경관조명 사업(150, '10)	▶ 관아지 옛길 정비사업	78
'11	경남 거창	공공건축 · 공공공간 네트워크 창조도시 거창 조성 사업(150, '11)	▶ 아카데미파크 조성 실시설계('14.06~) ▶ 2014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 (거창여고, '14~'15) ▶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15~'17)	8,489
	충남 홍성	역사도시 홍성도심 활성화 계획(150, '11)	▶ 천년아문길정비사업('13~'14)	150
'12	경북 울진	울진 보부상 옛터의 재조명(150, '12)	▶ 울산보부상 문화거리 조성 사업 ▶ 전선지중화 사업('14~'15) ▶ 옥외광고 시범거리 조성사업('14~'15)	10,200
	부산 동래	부산 고(古) 도심의 개발여건 변화에 따른 통합 재생정비 방안을 통한 동래 재창조(100, '12)	▶ 동래 고도심 재창조 동래방매 사업('13~'15) ▶ 도시재생 R&D 복합개발형 테스트베드 사업('13~'15)	10,391
	경기 안성	역사 문화의 정체성과 조화되는 주거지 경관 형성(150, '12)	▶ 일죽 죽산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13~'16)	7,000
	경남 하동	공공공간·공공시설을 활용한 도시의 중심성 활력강화 프로젝트(150, '13)	▶ 서부권 개발사업 균형발전사업('14~'23)	42,000
'13	전북 완주	신택리지 고산만들기 사업(150, '13)	▶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14~'17) - 택리지신도시사업 설계 용역('14.08 완료 예정)	6,300
	부산 대청로	부산 대청로 지역대표거리 조성사업(200, '13)	▶ 용두산공원 스텝가든 및 문화오름길 조성	300

(4) 한옥건축지원사업

우리 고유 건축인 한옥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나, 고가의 건축비 등으로 국민들의 생활 속 건축양식으로 널리 접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동 사업은 한옥 건축물의 확산을 통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우리 한옥을 보다 쉽게 체험하고 그것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한옥건축지원사업에서는 가급적 많은 지역 주민들이 한옥을 즐길 수 있도록 한옥 공공건축물 조성 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사업비 규모는 사업 당 약 1~2억원으로, 이는 일반 건축물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한옥의 건축비를 감안하여 그 추가비용을 보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매년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절차를 진행하여 2008년부터 지금까지 총 33개소의 지자체에 50.3억원의 한옥공공건축물 조성사업비를 지원하였다.

이러한 정부지원을 통해 보다 많은 공공건축물을 한옥으로 짓도록 유도하여 한옥에

대한 국민적 인식제고 및 한옥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표 2-1-22 지자체 한옥공공건축물 지원 현황

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50.3억원 (33개소)	2.5억원 (2개소)	5억원 (5개소)	5억원 (2개소)	5억원 (3개소)	9억원 (5개소)	8억원 (5개소)	8.5억원 (6개소)	7.3억원 (5개소)

(5) 저상버스 도입보조사업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4조제3항에 의거 시장이나 군수가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저상버스를 도입할 경우 국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저상버스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12~2016년)에 따라 2016년까지 수평 승·하차가 가능한 저상버스를 전국 시내버스의 41.5%까지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연도별 도입대수는 지자체 재정여건, 교통약자 현황, 수요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2014년말 기준, 전국의 저상버스는 총 6,026대로 전국 시내버스 32,552대의 18.5%를 차지하고 있다.

표 2-1-23 저상버스 보급현황(2014년 12월 기준)

(단위 : 대, %)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세종)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시내 대수	32,552	7,534	2,511	1,658	2,312	930	965	670	9,793	567	540	758	850	680	1,088	1,529	167
저상 대수	6,026	2,445	399	283	288	126	203	90	1,236	170	109	58	106	59	60	384	10
보급률	18.5	32.5	15.9	17.1	12.5	13.5	21.0	13.4	12.6	30.0	20.2	7.7	12.5	8.7	5.5	25.1	6.0

(6) 특별교통수단 도입보조사업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제1항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시장이나 군수는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인 특별교통수단을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 이상 운행하여야 한다. 국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제6항에 의거 특별교통수단의 확보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12~2016년)에 따라 2016년까지 법정기준 보급대수 100% 달성을 목표로 하며, 연도별 도입대수는 지자체의 도입계획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2014년 말 기준, 전국의 특별교통수단은 총 2,298대로 법정기준 보급대수 2,785대의 82.5%를 도입하고 있다.

표 2-1-24 특별교통수단 보급현황(2014년 12월 기준)

(단위 : 대, %)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법정대수	2,785	409	205	141	145	78	84	53	9	562	120	109	137	142	159	188	205	39
운행대수	2,298	446	198	103	140	80	44	32	6	475	65	100	59	86	64	44	316	40
도입률	82.5	109.0	96.6	73.0	96.6	102.6	52.4	60.4	66.7	84.5	54.2	91.7	43.1	60.6	40.3	23.4	154.1	102.6

(7) 철도건널목 입체화

철도와 도로가 평면교차하는 건널목에서의 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건널목개량촉진법 제6조(건널목개량의 실시)에 따라 철도시설관리자 또는 도로관리청이 건널목개량계획을 수립하고 기존 건널목을 입체교차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2-1-25 입체화사업 추진 현황

평면건널목	입체화대상	기시행('14년까지)	추진중	잔여
1,075	615	22	6	587

주: 전체 건널목 1,075개소 중 사고빈도가 높은 615개소에 대해 건널목입체화 추진

철도 건널목 입체화 사업은 열차운행빈도 증가 및 속도향상 등 대외여건 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열차의 안전운행 및 도로통행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널

목입체화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도로관리청)는 재정상황 열악 등을 이유로 사업 추진에 소극적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이해를 구하고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등 철도 건널목입체화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적정 예산확보를 위해 예산당국과 적극 협의하고, 투자 우선 순위에 따른 사업추진의 실행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⁶⁾.

철도건널목 입체화사업을 통하여 건널목 사고요인이 근원적으로 제거되므로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의 손실을 방지하는데 동 사업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8) 광역버스 정보체계 구축

지방자치단체 버스정보시스템(BIS : Bus Information System) 구축사업이 버스이용 확대 등 지자체 필요에 따라 시행하고 있으나 해당 지자체 내의 시스템 구축사업만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당해 행정구역에만 국한되는 한계점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2004년부터 '광역BIS 지원'사업을 통해 광역적 버스정보시스템이 구축됨으로써 해당 지자체뿐만 아니라 광역버스가 운행하는 노선에 관계되는 모든 지자체가 실시간 대중교통정보를 확인·이용하는 데에 기여하였다.

2014년까지 62개 지자체에 대하여 668억원을 지원하였고, 각 지자체에서 생산·제공하는 대중교통정보를 국가대중교통정보센터(TAGO)에서 연계받아 민간(인터넷포털사, 이동통신사)에게 제공하는 등 대민서비스를 추진 중이다.

2015년도에는 35억원을 투입하여 지자체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버스정보시스템을 도입하지 못한 지자체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지역적·경제적 차별없이 보편적인 대중교통정보의 이용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9) 광역상수도 건설사업

우리나라는 강우량의 계절적 편중과 지역적 편중이 매우 심한 편으로 1960년대 이후 4대강 유역종합개발사업을 실시하여 4대강 본류에 다목적댐과 하구둑 등 대단위

6) 「건널목개량촉진법」 및 「건널목입체화비용부담에관한규칙」에 따른 재원분담 : 지방도(50 : 50), 시·군·구·농어촌도(75 : 25)

수자원 시설을 집중적으로 건설하여 홍수예방은 물론 연중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다량의 수자원을 확보하였다. 이렇게 확보된 안정적인 수자원을 대규모 수요지역까지 공급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지역간 수자원 분배시스템이 광역상수도이다. 즉, 다목적댐과 하구둑이 수자원의 계절적 편중을 극복하기 위한 인프라로 볼 수 있다면, 광역상수도는 수자원의 지역적 편중을 극복하기 위한 인프라인 것이다.

경제 발전과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1970년대 이후 용수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하천수질은 크게 악화되었다. 따라서 지자체들이 자체 상수원을 확보하기는 갈수록 어려워짐에 따라 지자체들에게 깨끗하고 안정적인 용수를 공급하는 간선 및 분배 기능인 광역상수도 도입 확대가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는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광역상수도를 확충하고 기존시설 여유량을 전환·공급하는 급수체계조정사업을 지원 중이며, 2015년에는 대청댐(Ⅲ) 광역상수도 등 9개 사업에 691억원을 투입하여 급수혜택이 필요한 지역에 적기 용수 공급을 추진 중이다.

1970년대 들어 경제발전과 대도시 인구집중 등으로 수돗물 수요는 급증했으나 지방상수도가 지자체의 재정부족 등으로 적기에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자, 수돗물 보급확대를 위해 소매로 지역주민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는 지방상수도와 별개로 지자체 등에 원수를 공급하는 광역상수도사업을 도입하였다. 1973년 팔당호를 취수원으로 하여 서울, 성남, 부천, 인천 등 4개 도시에 120만 m^3 /일의 용수를 공급하는 수도권(Ⅰ)광역상수도 착공 이래, 1976년 금강광역상수도, 1977년 수도권(Ⅱ)광역상수도, 1979년에는 낙동강 광역상수도가 착공되었다.

2014년 말 국토교통부(한국수자원공사)에서 관리중인 광역상수도는 35개 시설로 시설용량을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계통이 8,285천 m^3 /일로 전체 시설용량의 60.2%를 차지하고, 기타 지역이 39.8%를 차지한다. 급수량을 보면 전체 급수량 7,891천 m^3 /일 중 수도권계통(수도권Ⅰ~Ⅵ, 일산권)이 54.7%, 기타 지역에서 45.3%를 공급하고 있다.

표 2-1-26 지역별 광역상수도 공급현황

(단위 :천㎥/일)

사업명	시설용량				공 급 량			
	소계	원수	정수	침전수	소계	원수	정수	침전수
광역상수도	13,860	6,293	6,735	832	7,891	3,115	4,270	506
수도권광역(Ⅰ ~Ⅵ)	8,285	4,898	3,008	379	4,172	2,163	1,801	208
구미권광역(Ⅰ,Ⅱ)	400	-	252	149	245	-	182	63
태백권광역(광동,달방)	110	40	70	-	47	4	43	-
대청권광역(Ⅰ,Ⅱ)	1,010	180	571	258	776	156	462	158
남강댐광역(Ⅰ,Ⅱ)	325	-	325	-	174	-	174	-
일산권광역	250	-	250	-	145	2	143	-
섬진강광역	90	-	90	-	59	-	59	-
부안댐광역	87	-	87	-	59	-	59	-
금호강광역	370	325	45	-	265	225	40	-
주암댐광역(Ⅰ,Ⅱ)	596	496	100	-	300	267	33	-
보령댐광역	285	-	285	-	255	-	196	59
전주권광역	700	-	700	-	439	-	439	-
충주댐광역	250	-	230	20	172	-	169	3
밀양댐광역	150	-	150	-	94	-	94	-
포항권광역	161	99	62	-	143	100	42	-
감포댐광역	5	5	-	-	3	3	-	-
동화댐광역	52	-	52	-	25	-	25	-
원주권광역	100	-	100	-	72	-	72	-
울산권광역	220	220	-	-	178	178	-	-
전남남부권광역	150	-	150	-	105	-	105	-
전남서부권광역	30	-	30	-	24	-	24	-
영남내륙권광역	44	-	18	26	32	-	17	15
충남충부권·금강광역	163	29	134	-	91	17	75	-
금산무주광역	27	-	27	-	16	-	16	-

2. 농어촌 및 취약지역 정주환경 개선

(1)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취사 및 난방용 연료로 경제적이고 편리한 도시가스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으나, 전국 단위 주배관망의 연장과 주배관망에 접속되는 공급배관 시설이 필요하므로 지리상 도시가스 공급이 극히 곤란하거나 인프라 투자비용이 과다하여 경제성이 떨어지는 지역이 많다. 이와 같이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지 않은 지역은 공급지역에 비해 주민 소득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취사·난방용 연료는 더 비싸고 불편한 용기LPG, 등유, 화목 등을 사용하고 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소득 역진적 연료비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형저장탱

크를 설치하고 벌크로리를 LPG를 공급받는 형태로 유통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나 재정여건이 열악한 사회복지시설과 농어촌 마을은 그 초기투자 비용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그 비용을 보조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2013년 사회복지시설, 2014년 농어촌 마을 단위에 대하여 LPG 소형저장탱크 설치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을 시작하였다.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LPG 소형저장탱크와 옥내·외 배관 설치비용의 80%를 지원하고 있다(사용자 부담은 20%). 농어촌 마을의 경우 9개 광역도 관내 30세대 이상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 공동 LPG소형저장탱크와 마을내 지하매설 배관망 설치비용 50% 범위 내에서 마을 당 최대 1.5억원을 지원하고 있다(지방비 40%, 사용자부담 10%).

표 2-1-27 2014년 지원 마을단위 현황

(단위 : 억 달러)

광역시도		지원대상 마을		
시·도	배정 마을 수	시·군구	읍면동	마을명
경기도	2	안성시	미양면	하개정마을
		여주시	점동면	처리마을
강원도	3	속초시	장사동	장천마을
		원주시	신림면	황둔·송계마을
		영월군	영월읍	영흥1리
충청북도	2	옥천군	안남면	도농1리
		음성군	소이면	금고2리
충청남도	2	서천군	기산면	원길마을
		청양군	청남면	지곡리마을
전라북도	2	장수군	장계면	원오동
		완주군	구이면	구암마을
전라남도	2	곡성군	겸면	상덕마을
		신안군	흑산면	심리마을
경상북도	2	영천군	임고면	돌빼기마을
		구미시	해평면	문화재마을
경상남도	2	양산시	하북면	지곡마을
		거창시	웅양면	운평마을
제주특별자치도	1	서귀포시	안덕면	신향동
합 계	18			

사회복지시설 지원은 한국LPG산업협회에서, 농어촌 마을단위 지원은 각 지자체에서 주관기관으로 참여하여 주민의견 수렴, 시공업체 선정, 시공 감독·관리, 가스공급자 선정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은 2013년 전국 339개소에 이어 2014년 151개소를 지원하여 총 490개소에 LPG 소형저장탱크 및 옥내·외 배관 시공을 완

료하였다. 농어촌마을은 2014년 9개 광역도 내 18개 마을을 지원하여 마을 공동 소형 저장탱크, 지하매설 배관망 등을 시공 완료하였다.

또한 농어촌 마을 단위의 경우, 공동에 매설된 배관망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이 모호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가스공급자가 지자체로부터 집단공급사업 허가를 받고 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을 지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였다(2014년 9월 11일 시행).

2015년에는 사회복지시설 뿐 아니라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내 학교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고 2015년 5월 29일까지 수요접수 받아 지원할 예정이며, 농어촌 마을의 경우 지자체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한 9개 광역도 35개 마을을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2) 도시가스공급배관 용자사업

농어촌, 지방 등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가스 공급배관을 조기 구축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도시가스사업자 입장에서는 투자 효율이 낮아 정상적인 배관 투자가 곤란한 고지대·채래시장 등 소외지역에도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경제적인 사정으로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못하는 일반 수요자를 위한 서민가계 안정화 및 에너지 복지 확대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가스 공급시설(공급배관 등) 구축은 사업 초기 시설투자 비용이 막대하게 소요되며, 자본 회임기간이 길고, 각 수요처의 시설 설치를 위한 투자 부담으로 민간기업인 도시가스사업자는 자체 자금에 의한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게 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를 융자금으로 지원해주는 도시가스 공급배관 용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동 사업을 통해 도시가스 미공급·소외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배관 건설 예산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도시가스 신규 보급가구에 대한 사용자시설(보일러, 내부 배관 등) 설치비도 지원함으로써 에너지 취약계층의 복지 확대에 힘쓰고 있다. 박근혜정부 출범이후 2013년도에는 620억원, 2014년에는 740억원을 각각 지원하였고, 2015년도 75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2014년말 기준으로 도시가스배관 총연장이 39,633km, 전국 도시가스 수요가구수가 16,881천개, 도시가스 공급량이 23,033백만 m^3 로 대폭 증가되었다. 이에 따라, 전국 도

시가스 보급률이 79.3%(2014년 말)를 달성함으로써 서민들의 보편적 에너지 복지 실현에 기여하고 있다.

표 2-1-28 용자 지원 절차 및 사업규모/지원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자 지원 절차 (공급배관 건설) 지침 수립(산업부) → 용자신청·추천(도시가스사업자, 시·도) → 지원대상 선정(산업부) → 용자추천서 발급(도시가스협회) → 용자대여(시중은행) (사용자시설설치비 지원) 지침 수립(산업부) → 용자신청·추천서 발급(사용자, 시·군·구) → 용자대여(농협) • 2014년 사업규모 (공급배관 건설, 500억원) 도시가스사의 배관 건설 총 투자비의 일부(약 7~8% 수준)를 지원 (사용자시설 설치비, 120억원) 도시가스 신규 사용가구의 시설 비용(가구당 4백만원 수준)을 지원 • 지원조건: 용자 대출 (공급배관 건설) 대출 이자율(변동)은 국고채 3년 유통물평균수익률-1.25%p (사용자시설 설치비) 대출 이자율(고정)은 1.5%
--

표 2-1-29 도시가스 보급 추이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p)
수요가수(천개)	13,361	13,933	14,536	15,160	15,760	16,379	16,881
공 급 량(백만m³)	19,238	19,406	21,954	22,951	24,605	24,942	23,033
사업권역내보급률(%)	69.8	71.1	72.2	75.0	76.5	78.6	79.3
배관연장(km)	30,190	31,597	32,919	34,520	36,344	38,087	39,633

주 : 1) 보급률은 주민등록세대수(행자부 자료) 기준
2) p는 잠정치

(3) 농촌마을 리모델링 사업

정부는 농어촌의 주거환경 및 노후·불량 주택을 계획적·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시행하였다(2014년 6월 3일).

이 법에서는 사업을 전면 재정비형, 연계형, 유지보전형 등 3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농어촌마을 정비종합계획 수립, 정비구역의 지정, 총괄계획가의 운영, 사업시행자 지정, 농어촌마을 정비조합설립, 실시계획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정부는 이 법을 근거로 2013년도에 노후·불량주택이 전체주택의 1/3이상이고, 세대주 2/3 이상이 공동개발을 동의하는 마을 4개 지구를 선정하여 2013~2014년(2년) 국고 80억원과 지방비 61억원 등 141억원을 지원하여 2014년 12월 시범사업을 완료하였다.

시범사업을 통해 슬레이트 주택 164동과 빈집 43동을 정비하고, 공동생활 홈 14동을 건축하여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주택을 마련하는 등 친환경적이며 지속가능한 살기 좋은 농어촌마을을 만드는데 기여하였다.

표 2-1-30 농촌마을 리모델링 사업 지구별 주요 실적

구 분		합계	서천 장항 송림지구	순창 금과 방축지구	진도 군내 안농지구	영주 봉현 주치골지구
마을현황	인구(명)	583	70	335	71	107
	주택(호)	254	22	145	51	36
정비내용	정비유형	-	연계개발	유지보전	유지보전	유지보전
	슬레이트(동)	164	14	87	29	34
	빈집정비(동)	42	9	14	7	12
	에너지효율화(동)	216	기존14, 신규23	131	29	19
	공동생활 홈(동)	5동 17세대	1동 4세대	-	3동 9세대	1동 4세대
총 사업비 (백만원)	합계(100%)	14,107	2,957	4,750	3,100	3,300
	국비(70%)	8,000	2,000	2,000	2,000	2,000
	지방비 등(30~50%)	6,107	957	2,750	1,100	1,300

표 2-1-31 농촌마을 리모델링사업 지구별 사업내용

지 구	사 업 내 용	
서천군 송림지구	- 마을회관, 공동생활 홈 - 빈집정비 9동, 에너지효율화 14동 - 신규단지 23동	- 담장개선, 마을쉼터, 마을창고 - 슬레이트 14동
순창군 방축지구	- 에너지효율화 131동 - 태양광에너지 31동, 마을구판장 리모델링 - 경관정비, 쉼터 3개소, 담장 등	- 슬레이트 87동, 빈집정비 14동 - 농산물가공판매장 - 배수로 정비 등
진도군 안농지구	- 마을회관, 역사관, 창고, 공동생활 홈 - 슬레이트 29동 - 마을내 도로, 상하수도 정비	- 에너지효율화 29동 - 담장, 쉼터, 마을마당
영주시 주치골지역	- 마을회관, 공동생활 홈, 마을카페 - 에너지효율화 19동 - 빈집정비 12동, 부속동 61동	- 주택신축 6동, 리모델링 2동 - 슬레이트 34동 - 도로, 상하수도, 오수 정비 등

(4) 슬레이트지붕 철거지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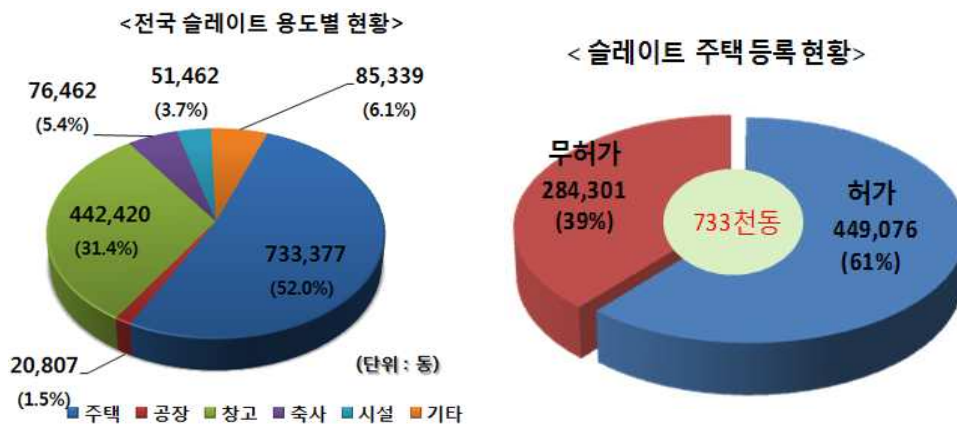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농어촌 및 도심지역의 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른 석면 비산에 의한 국민건강 피해 예방 및 사회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른 국민건강 피해 가능성이 증대되고, 처리비용 과다로 처리지연 및 불법처리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슬레이트의 조속한 철거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2010년 12월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2011~2021년)'을 수립함으로써 슬레이트 처리기반을 마련하였다.

환경부, 안전행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석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2011년 9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련사업 간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슬레이트 지붕의 조속한 철거를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슬레이트 처리 시범사업을 통해 2011년에 국고 28억원을 투입하여 2,372동, 2012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국고 55억원을 들여 8,290만동, 2013년에는 국고 192억원을 투입하여 17,942동, 2014년에는 국고 288억원을 들여 22,320동 지원으로 지금까지 50,924동의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였다.

그림 2-1-4 전국 슬레이트 용도별 현황 및 주택등록 현황(2014년12월)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농어촌 및 도심지역의 노후 슬레이트 주택에 거주하는 서민층의 건강보호는 물론, 주거환경 개선 등 '삶의 질' 제고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정부는 향후 주택 인근의 축사, 창고 등 비주거용 슬레이트 지붕에 대해서도 철거할 수 있도록 사업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5) 농어촌 상수도시설 확충

도시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은 2013년 기준으로 특별·광역시의 경우 99.6%, 일반 시지역은 99.1%에 이르고 있으나, 재정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면지역 및 도서지역 등 취약지역은 65.9% 수준에 불과하여 일시적인 가뭄에도 상습적인 식수난을 겪고 있다.

정부에서는 농어촌지역의 생활용수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1994년부터 2014년까지 농어촌 및 도서지역에 총 4조 3,500억원(국고 3조 1,137억원)을 투자하여 전국 농어촌 및 도서지역 731개소(농어촌생활용수개발 500개소, 도서지역식수원개발 231개소)에 상수도시설을 설치하였으며, 2013년말 기준으로 상수도보급률은 65.9%로 향상되었다.

표 2-1-32 상수도 보급률 현황

(단위 : %)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전 체	94.1	94.6	95.1	95.7
특·광역시	99.5	99.6	99.6	99.6
시 지 역	98.7	98.8	98.9	99.1
면 지 역	55.9	58.8	62.2	65.9

2014년에는 농어촌 개발사업에 대구시 달성군 등 11개 지역에 256,737백만원을 투자하였으며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은 인천광역시 등 7개 지역에 20,576백만원을 투자하여 상수도 확충사업을 추진하였다.

표 2-1-33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2014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대구	강원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농어촌생활용수개발	256,737	1,330	39,726	11,090	16,128	30,051	20,237	53,199	51,374	28,334	2,517	2,751

표 2-1-34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2014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인천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20,576	2,168	245	2,700	9,657	1,500	2,866	1,440

(6) 접경지역 성장기반 조성

DMZ 인근지역은 생태 자원이 우수한 청정지역으로 저탄소 녹색산업 위주의 산업 구조 전환이 필요하고, 향후 통일시대를 대비한 경제·사회적 통합 완충지대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장기적으로 새로운 성장동력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경제 성장을 유도하고 지역녹색성장기반을 확대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육성, 자동차 테마파크 조성, 첨단신소재부품단지, 의료복합 휴양시설 조성, 첨단 국토클러스터, 대학·산학연구시설, 국회·대학·민간 등 연수시설 유치 등이 필요하다.

행자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지역주민과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필수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2011~2030년)」을 수립하여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4년도에는 국회의정연수원을 고성에 유치함에 따라 의정연수원 공사를 착공하였고, 연수원 진입도로개설을 위하여 설계를 진행하였다. 2016년도까지 연수원 시설공사 및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단지조성(강화, 춘천 봉명), 철원 플라즈마 산단 조성, 연천 첨단 국토클러스터 조성 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다. 이를 통해 접경지역의 신성장동력을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지역 인지도를 제고함으로써 접경지역 성장기반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7) 기항지 접안시설 개선사업

전국 여객선이 기항하는 기항지는 육지와 도서지역을 포함하여 총 339개소이며, 항만 45개소, 어항 106개소, 그 외 항만법 및 어촌어항법 적용 범위에 해당되지 않은 지자체 등이 관리하는 소규모 항포구가 188개소로 전체시설의 55.4%를 차지하고 있으나,

지자체의 관심 및 예산 부족 등으로 접안시설·편의시설 등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표 2-1-35 기항지 현황

구분	합계	무역항		연안항		어항				소규모 항포구	기타
		국가	지방	국가	지방	국가	지방	어촌 정주	마을 공동		
개소	339	14	19	4	8	22	53	21	10	103	85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항지 접안시설 개선사업은 낙후된 도서지역의 연안여객선 기항지 접안시설을 개선하여 도서민 등 이용객 승하선 안전 확보 및 해상교통인프라 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양수산부에서는 2012년도부터 동 사업이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해양수산청을 통해 도서민, 지자체 등 기항지 개선 수요를 받아 기항지의 항로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대상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지원 첫해인 2012년부터 장자도, 가사도 2개소에 10억원을 지원하였고, 2013년도에는 백아도, 말도 등 4개소에 대하여 30억원을 지원하였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8개소로 확대하여 33억원을 지원하는 등 이용객의 승하선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한 선박 입출항 등을 위해 열악한 기항지 접안시설을 개선하고 있다.

표 2-1-36 2014년도 기항지 접안시설 개선사업 주요 추진성과

구 분	지원예산	사업실적
2014년 실적	3,300백만원	굴업도, 광도, 연화도, 격포, 위도, 관매도, 옥도, 저동 8개소

또한, 2016년도부터 기항지의 체계적 개발·정비를 위해 주요 거점도서 기항지 조사 등을 통해 안전등급과 이용객 수요 등을 감안하여 해상교통인프라 개발 정비계획 등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에 주력할 계획이다.

(8)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사업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사회 구조의 변화로 가족 중심의 묘지 관리의 한계가 발생함에

따라 방치되는 묘지가 증가하고 있고, 묘지가 가지는 국토잠식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국민인식의 변화로 인하여 장례문화가 점차 매장에서 화장으로 변화하고 있고, 화장률도 10년간 2배로 증가하여 2013년말 기준 화장률은 76.9%를 기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3~4%의 증가율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화장수요 충족을 위하여 장사시설 확충 및 시설 현대화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표 2-1-37 연도별 화장률 변동 추이

구 분	1970년	1991년	2001년	2002년	2005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2년	2013년
화장률(%)	10.7	17.8	38.5	42.5	52.6	58.9	61.9	65.0	67.5	74.0	76.9

장사시설 확충 사업은 전국적으로는 수급상에 큰 문제는 없지만, 지역별 화장시설 접근성(이동시간) 및 비용 문제 등으로 이용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화장시설인 경우 전체 시설의 59%가 1990년대 이전에 설치되는 등 시설의 노후화 및 오염방지시설 및 편의시설 등이 미비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신규사업 추진시 노후 시설 및 지역의 접근성 등을 제고하여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선정하여 시설 접근성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다만, 장사시설 등은 기피시설로 인식하여 지역주민의 반발과 설치기간의 장기화 등으로 시설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국고보조는 화장시설 등 장사시설 신축인 경우에는 m²당 1,500천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화장로 신·증설인 경우에는 기 당 360백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장사시설 중 화장시설의 경우에는 전국 55개소에서 319로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공설 및 법인묘지는 전국에 532개소, 봉안시설은 373개소, 자연장지는 법인 및 공설시설이 68개소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다. 이중 자연장지는 2008년도에 도입된 친자연적 장사시설로서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시설로서 자연환경 훼손을 최대한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장사시설은 설치·조성 단계에서 지역주민의 반발과 설치기간의 장기화(3~5년) 등으로 시설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시설 접근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시설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생활권역을 고려하여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노후화되고 오염

방지사설이 미비된 화장시설의 재건축 및 설비보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지자체가 공동으로 화장시설 등 장사시설을 설치·조성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고 법령을 개정하여(2015년 1월 28일 공포·시행)하여 광역시설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시설 설치시 입지선정 과정에서도 주민이 참여하여 협의할 수 있도록 절차적 근거 등을 마련하여 적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다.

자연환경 훼손을 위하여 도입한 자연장지의 경우에는 조성 면적 및 구역 등에 대하여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주거지역 등에도 조성가능 하도록 설치 제한 지역을 완화(2013년 6월)하였고, 장사시설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장년, 노인층을 대상으로 지역별 순회교육 등을 2014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9) 전통시장과 중소유통물류기반 지원

1)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역경제의 뿌리인 전통시장의 상권이 대형마트의 확산과 소비자의 구매형태 변화 등 유통산업 환경변화·시설 노후화 등으로 위축되고 있어 서민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상권의 위축방지 및 상권 활성화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2002년부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착수하여 2014년까지 1,084개 시장에 대하여 아케이드, 주차장 및 노후시설 개·보수 등에 국비 1조 7,936억원을 지원하여 3,269건의 시설을 개선하였다. 2014년에는 330개 시장에 아케이드 65개, 주차장 51개, 진입로 12개, 기타 노후시설 및 안전시설, 고객편의시설 202개 등 1,388억원을 지원하였다.

표 2-1-38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현황

(단위 : 억원, 건)

구 분	2002~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지원 금액	3,720	1,228	1,616	1,968	1,749	1,572	1,660	1,606	1,430	1,388	17,937
지원 건수	689	201	227	281	261	259	383	330	308	330	3,269

2014년 지원성과를 살펴보면 시설을 종합적으로 개선한 시장은 매출이 14.6% 증가하였고, 고객 수는 6.8% 증가하였다. 반면, 미개선 시장의 경우는 매출이 11.2% 감소하였으며, 고객 수는 10.9% 감소하였다.

앞으로 중소기업청은 전통시장을 근본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현대식 공설시장 조성 등 시장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전개해 나가는 한편, 시장 고유의 특성을 살리는 전략을 추진하여 상인, 고객, 정부 및 지자체와 공동으로 경쟁력 있는 시장을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2)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조성

유통구조의 개선 및 물류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정부는 2003년부터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이하 '물류센터'라 함)의 건립을 지원하고 있다. 본 사업은 그동안 지식경제부에서 지원하다가 2009년 5월 중소기업청으로 이관되었으며, 대부분이 지역 슈퍼마켓 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다. 건립비용은 정부·지자체·민간이 6:3:1의 비율로 분담하고 있다(2009년 5월 이전, 3:4:3 매칭비율로 전환).

물류센터에 대하여는 도매배송장, 검품장, 보관창고, 저온창고 등 유통시설 및 장비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정보화 시스템 등을 1~3년에 걸쳐 지원하고 있다. 2003년부터 2014년까지 38개소에 총 755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고흥 등 신규 1곳과 계속 3곳에 1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센터는 부산, 제주 등 전국에 30개소가 운영 중이며 부천 등 11개소가 현재(2015년 5월) 건립 중에 있다.

표 2-1-39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 현황(2014년)

(단위 : 억원)

연 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금 액	31	36	78	69	40	13	3	25	140	125	161	34억	755

센터를 통해 기존의 복잡한 유통구조(제조업체, 대리점, 중소유통업자 등)를 공동구매와 직거래로 개선하였고, 이를 통해 저렴하게(5~10%) 상품을 공급하고 있다. 센터를 이용하는 회원수는 확대되는 추세에 있으며, 2014년도 실태조사에서 1년 이상 운

영중인 센터의 전체 매출액도 2,770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20.5%정도 증가하였다.

향후 물류센터간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등 활용성을 높이고 지역 확충을 통해 가격 경쟁력 제고 등 물류기능의 효율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3) 시장 경영혁신 지원

전통시장의 노후시설을 개선하는 시설현대화사업과 함께 시장상인의 경영혁신 역량 제고와 경영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상인교육, 마케팅 및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발행 등 시장경영혁신지원 사업을 2002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2009년 7월부터 전국으로 통용되는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을 처음 발행하였으며, 2014년까지 총 18,860억원을 발행하여 15,399억원을 판매하고, 그 중 총 13,968억원을 회수(회수율 90.7%)하였다.

공공부문의 선도적 구매와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 확대로 온누리 상품권의 구매가 촉진되어 전통시장의 매출 및 고객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년 200여개 시장에 축제, 세일·판촉활동 및 홍보 등 마케팅을 지원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상인 36.3만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고객의 눈높이에 맞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인들의 의식개혁과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유통 및 행정전문가 등 퇴직 전문인력 100여명을 매년 시장에 투입하여 회계관리 및 마케팅 기법 등을 전수함으로써 상인조직의 경영 및 관리 능력을 제고하고 있다.

표 2-1-40 시장 경영혁신 지원 교육인원

(단위 : 명)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교육 인원	7,597	13,909	37,973	37,078	43,936	47,583	55,060	41,736	39,178	38,683	362,733

또한, 지역의 고유문화와 관광자원을 연계 가능한 시장을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총 94개를 지원하여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있다. 2011년부터 전통시장 및 인근 상권을 연계하여 지원하는 상권활성화구역 6곳을 시범적으로 운영하였고, 2014년부터는 본격사업으로 6곳을 선정·지원하여, 침

체된 시장과 주변 상권을 연계하여 상권 전반에 대한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시설 또는 경영현대화지원 사업을 실시한 전통시장의 전년대비 일평균 매출은 12.4% 상승(미설시 시장은 11.9% 감소)하였으며, 점포당 일평균 고객은 전년 대비 6.6% 증가(미설시 시장은 10.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정부 지원이 침체된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실현

(1)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2012년 1월 1일 가축분뇨 해양배출 중단에 따른 육상처리 방안 강구, 개별농가 시설에서의 가축분뇨처리 효율 저조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을 지원하여 가축분뇨 공동처리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공동자원화시설의 운영 개선,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구축의 일환으로 2010년부터 공동자원화(에너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축협 등을 대상으로 퇴액비시설은 개소당 30억원(국비 40%, 지방비 30%, 융자30%), 에너지시설은 70억원(국비 30%, 지방비 30%, 융자 20%, 자담 20%)한도 내에서 가축분뇨를 1일 70톤 이상 퇴비·액비·에너지 등으로 자원화 처리할 수 있는 시설·기계·장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개발행위,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절차 이행, 민원 해결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2년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2014년 사업지침을 개정을 하여 액비유통센터를 대상으로 '소규모 공동자원화시설' 지원, 가동 중인 퇴액비화시설에 에너지화시설을 연계하는 '협기소화 연계' 사업을 지원하여 2014년에 퇴액비화시설 70톤 이상 3개소, 소규모 공동자원화 4개소, 협기소화 연계 5개소, 에너지화 70톤 이상 1개소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공동자원화사업은 다수의 가축분뇨(주로 양돈분뇨)를 수거하여 퇴비·액비를 생산후 농경지에 환원하는 체계로 가축분뇨처리를 안정적으로 처리하여 생산비 절감, 환경오

염 방지 등 지속가능한 친환경 가축사육기반을 조성하고, 농업부문에서 농약·화학비료 사용량 감축, 생산량 증대 품질향상 등 농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였다. 현재까지 퇴액비화시설 108개소, 에너지시설 8개소를 지원하여 퇴액비시설 75개소, 에너지시설 3개소를 설치·완료하였으며, 2017년까지 퇴액비화시설 150개소, 에너지시설 21개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2) 쾌적한 연안공간 조성사업

해수면 상승, 이상파랑 등 기후변화로 인한 연안침식의 심각성이 다각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토보전과 친환경적 연안조성을 위해 연안보전(침식저감) 및 친수연안 공간조성 등을 위한 연안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에는 연안정비사업에 대한 수요예측 및 조정 등을 통해 제2차 연안정비 기본계획(2010~2019년) 변경을 위한 지역별 사업계획 재검토 및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아래 표와 같이 전국 370개소에 대한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2019년까지 전체 사업비의 약 51%가 집행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표 2-1-41 제2차 연안정비기본계획(변경)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합계		연안보전사업		친수연안사업	
	지구수	사업비	지구수	사업비	지구수	사업비
합 계	370	1,984,407	296	1,583,889	74	400,518
부 산	29	217,952	17	144,806	12	73,146
인 천	5	2,950	4	2,600	1	350
울 산	6	86,412	6	86,412	-	-
경 기	11	31,579	9	28,305	2	3,274
강 원	45	481,876	43	476,566	2	5,310
충 남	34	150,342	23	50,013	11	100,329
전 북	9	63,109	8	58,109	1	5,000
전 남	100	259,546	86	217,682	14	41,864
경 북	42	421,470	32	325,841	10	95,629
경 남	65	247,203	50	178,093	15	69,110
제 주	24	21,968	18	15,462	6	6,506

한편, 2014년에는 제2차 연안정비기본계획(2010~2019년)에 따라 일반회계 사업비 499억원과 책특회계 사업비 44억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지역개발계정) 사업비 321

억원(국비 50~70%, 지자체 자율편성) 등 전체 예산 864억원을 투입하여 부산시 해운대 해수욕장 등 국가시행 연안정비사업 11개소와 지자체 시행 연안정비사업 47개소를 추진하였다. 2015년에는 일반회계 사업비 522억원과 책특회계 사업비 53억원, 지역발전특별회계(생활기반계정) 사업비 270억원(국비 50~70%) 등 전체예산 844억원을 투입하여 부산시 해운대해수욕장 등 국가시행 연안정비사업 15개소와 지자체 시행 연안정비사업 47개소에 대해 연안보전 및 친수연안 조성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연안공간에 대한 가치 제고와 더불어 국민이 연안을 쾌적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3)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매년 반복적으로 해안가에 각종 쓰레기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으나 신속한 수거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침적 또는 퇴적되어 해안경관을 저해함은 물론 해양 생태계 교란, 어족자원 감소 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이에 해안가에 발생하는 해양쓰레기를 신속히 수거 처리하여 청정 해양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4년에 31억 92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의 사업비로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4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바닷가 해양쓰레기 4,059톤을 수거·처리하였으며, 또한 2015년에는 68억 12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의 사업비로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다.

향후 해안가 등 공유수면에 발생하는 해양쓰레기의 신속한 수거·처리 추진으로 아름답고 깨끗한 해양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연중 수시 해양쓰레기 수거체계 구축 방안을 연구·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표 2-1-42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추진실적(2014년)

(단위 : 백만원, 톤)

구 분	계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사업비	3,192	220	1,872	700	400
수거·처리량	4,059	272	2,773	720	294

(4) 방치선박 정리 지원사업

연안해역 및 해안가에 장기간 방치되어 해양오염을 유발하거나 선박의 안전항해를 저해하고 있는 선박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방치선박 정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4년에 2억원(국비 50%, 지방비 50%)의 사업비로 부산시, 충남도 등 9개 광역자치단체에서 방치선박 160척을 처리 하였으며, 또한 2015년에도 2억 12백만원의 사업비로 방치선박을 정리해 나갈 계획이다.

방치선박은 주로 선령이 오래되거나 어획부진 등으로 폐업 또는 장기간 방치하고도 처리비용 부담 등 이유로 소유자가 스스로 폐선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런 경우 선명 및 어선표지판 등 소유자를 식별할 수 있는 표식시설이 없어 소유자 파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방치선박을 처리함에 있어 소유자가 확인된 것은 소유자에게 제거명령을 내려 자체 처리토록 하고,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방치선박을 처리하고 있다.

앞으로 방치선박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연 2회 이상 방치선박 실태를 조사하여 데이터를 관리하고, 수협에서 실시하는 어업인 교육 등을 이용하여 선장 및 어선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방치선박 발생 예방 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표 2-1-43 방치선박 정리 추진실적(2014년)

(단위 : 백만원, 척)

구 분	계	부산	경기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
사업비	212	34	-	20	30	106	10	12
처리척수	160	13	13	-	11	115	2	6

(5)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확대

정부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지속적인 확충과 시설개선을 통해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고농도 가축분뇨를 적정처리 함으로써 상수원 등 수질 보전에 기여하고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정화처리, 퇴비·액비화, 바이오가스화 등의 처리방법으로 설치되며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협조합에서 설치하는 시설에 대해 국비를 지원하고 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1991년부터 국고를 지원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물환경관리계획과 연계하여 수계별로 수질보전의 필요성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설치하고 있다. 2014년 말 기준 전국에 101개 시설(11.4천㎥/일)이 가동되고 있고, 30개 시설(3.6천㎥/일)이 신·증설 중에 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함으로써 2014년에는 수질오염물질(BOD기준) 51,854톤/년을 유입·처리하여 50,519톤/년을 제거하는 등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물질 저감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한·EU FTA 체결, 2012년 가축분뇨의 해양배출 금지 등에 따른 축산농가의 부담경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0년까지 전국에 공공처리시설 145개소까지 확대하여 설치하고, 이중 가축분뇨 바이오에너지화시설, 농협조합이 설치·운영하는 공공처리시설('지역단위통합관리센터')도 각 10개소 이상씩 확충하여 가축분뇨의 자원화처리의 질적 성장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가동률 저하 및 오염물질 제거효율 감소 등의 문제점에 대해 질소·인 제거시설 설치, 공법 및 운영방안 개선을 통해 적정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6)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2013년 기준으로 도시지역의 하수도 보급률은 94.9%에 이르고 있으나, 재정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및 도서지역 등은 63.7%(읍면지역) 수준에 불과하여 하천 수질오염 등에 취약한 실정이다. 본 사업은 하수도 보급률이 낮은 농어촌 지역의 하수도 시설 확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어촌 지역에 마을단위별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시설용량 500톤/일 미만)을 설치하여 농어촌 마을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를 초기단계에서 정화함으로써 하천·상수원 등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지역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0년까지 농어촌지역 하수도보급률을 77%까지 제고시키기 위해 2013년도부터 2020년까지 농어촌 및 도서지역 하수도 정비사업에 국고 2조 6,615억원(신·증설 1,033개소, 개량 1,901개소)을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에서는 농어촌지역의 하수도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1995년부터 2014년까지 농어촌 및 도서지역에 총 국고 1조 8,960억원(1995년부터 2004년까지 지방양여금 4,877억원, 2005년부터 2014년까지 국고보조금 1조 4,083억원)을 투자하여 전국 농어촌 및 도서지역에 3,130개의 소규모 공공하수처리도시설(시설용량 500톤/일 미만, 2013년말 기준)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농어촌 지역 하수도보급률이 63.7%(2013년말 기준)로 제고되었다.

표 2-1-44 하수도 보급률 현황

(단위 : %)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전국평균	88.6	89.4	90.1	90.9	91.6	92.1
시 지 역	92.5	93.4	93.8	94.2	94.6	94.9
농어촌 평균*	49.1	52.6	56.0	59.5	62.1	63.7
읍지역	76.1	73.5	77.9	82.2	83.5	84.6
면지역	25.1	29.3	38.1	38.7	41.9	44.0

주 : *는 농어촌 읍·면지역(군지역 읍, 면지역) 평균임.

2014년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경기도 가평군 등 12개 시·도에 262,031백만 원을 투자하여 하수도 확충사업을 추진하였다.

표 2-1-45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2014)

(단위 : 백만원)

계	인천	광주	울산	세종	경기	강원
265,031	1,127	7,431	1,600	2,230	12,046	15,928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
21,547	32,118	31,824	38,509	58,227	42,444	-

(7)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사업은 농어촌지역에 매립, 재활용 등 폐기물을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쓰레기 처리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 주체가 되어 시행된다. 지자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에 제출하면 환경부에서는 해당 계획을 검토한 후 국고를 편성하고 해당 지자체에 국고를 지원하게 된다.

이후 지자체에서는 사업을 시행하고, 환경부에서는 집행실태를 파악하고 기술지원 및 정산 등을 수행한다.

표 2-1-46 국고 지원 비율 및 보조율 법적근거(폐기물 처리시설)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자체 보조	70% (15억/개소이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1994년에 농업정책심의회(농어촌생활여건개선분과위)에서 농어촌의 공업화에 대비한 폐기물처리시설 확보를 촉구하면서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을 공포하여 농어촌특별세지원 대상사업에 “농어촌폐기물처리 지원사업”을 포함하였으며, 1995년도에 최초로 사업을 시작하였다.

2003년에는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이 개정되어, 사업기간을 2014년까지 연장하였으며, 농어촌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중 농수산물 등 소관사업 외의 사업에 대해서도 보조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2007년 1월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이 폐지되어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지원 등 관련 사업들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승계되었다.

2014년에는 농어촌 매립시설, 소각시설 등 총 12개소에 83억원의 국고를 지원하는 등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단위 지자체에 지속적으로 재정을 지원하여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도·농 간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였다.

(8)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2013년 기준으로 도시지역의 하수도 보급률은 94.9%이고, 농어촌 및 도서지역 등은 63.7% 수준이나, 그 중 특히, 면지역은 하수도보급률이 44.0%에 불과하여 하천 수질 오염 등에 취약한 실정이다. 본 사업은 UR협상 타결에 따라 농어촌 생활환경개선 및

수질오염 방지를 도모하기 위해 1995년부터 농어촌특별세의 일부를 지원하여 농어촌 지역의 면지역에 하수도설치 사업을 지원하게 되었다.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어촌 지역의 면단위에 공공하수처리시설(시설용량 500톤/일 이상)을 설치하여 농어촌 마을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를 초기단계에서 정화함으로써 하천·상수원 등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지역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면단위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어촌지역 하수도보급률 제고를 위해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존치시점(2024년)까지 하수도 확충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에서는 농어촌지역의 하수도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1995년부터 2014년까지 면단위하수처리장 설치사업에 총 국고 1조 1,180억원을 투자하여 농어촌 면지역의 하수도보급률이 44.0%(2013년말 기준)로 제고되었다.

2014년에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에 경기도 연천군 등 8개 시·도에 81,937백만 원을 투자하여 하수도 확충사업을 추진하였다.

표 2-1-47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2014)

(단위 : 백만원)

계	인천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81,937	2,246	10,371	10,236	1,393	13,127	19,004	3,829	21,731

(9) 하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제주)

2013년 기준으로 도시지역의 하수도 보급률은 94.9%에 이르고 있으나, 재정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및 도서지역 등은 63.7%(읍면지역) 수준에 불과하여 하천 수질오염 등에 취약한 실정이다. 본 사업은 하수도 보급률이 낮은 농어촌 지역의 하수도 시설 확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과 사업내용이 같으며,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제주특별자치도 계정)로 편성되는 사업이다.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어촌 지역(제주)에 마을단위별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시설용량 500톤/일 미만)을 설치하여 농어촌 마을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를 초기단계에서 정화함으로써 하천·상수원 등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지역 주민

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와 농촌간의 하수도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하수도 시설 확충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에서는 농어촌지역의 하수도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1997년부터 2014년까지 제주도 지역에 총 국고 184억원을 투자하여 2013년 말 기준 제주지역 하수도보급률이 89.5%로 제고되었다.

2014년에 하수도 시설 확충 및 관리(제주) 사업에 제주도 2개 시·군에 2,099백만원(서귀포시 732백만원, 제주시 1,367백만원)을 투자하여 농어촌 하수도 확충사업을 추진하였다.

표 2-1-48 하수도 보급률 현황(제주)

(단위 : %)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전국 평균	88.6	89.4	90.1	90.9	91.6	92.1
농어촌 평균*	49.1	52.6	56.0	59.5	62.1	63.7
제주도 평균	82.0	84.8	87.1	88.0	89.2	89.5

주 : *는 농어촌 읍·면지역(군지역 읍, 면지역) 평균임.

(10) 폐기물 자원화회수시설 확충

단순 매립·소각 또는 해양배출되었던 폐기물을 에너지화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고 신재생에너지 생산 등을 통하여 화석연료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면서 기후변화 방지에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음식물폐수(음폐수) 해양투기 금지(2013년)에 따라, 음식물폐수의 안정적인 육상처리 등 음식물류쓰레기 적정 처리를 위하여 공공처리시설을 확충하고자 한다.

폐기물 자원화회수시설 확충사업은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체가 되어 추진되는 사업이다.

지자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환경부에서는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국고를 편성하고 지자체에 국고를 지원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사업을 시행하며, 환경부에서는 수시로 집행실태 파악 및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사업종료 후 적정한 집행인지 여부를 정산을 통해 확인한다.

표 2-1-49 국고 지원 비율 및 보조율 법적근거(폐기물 자원화회수시설)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자체 보조	30~7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2005년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라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폐기물 에너지화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2005년 부산광역시에서 음식물쓰레기를 혐기성 분해 처리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였다.

이후 2006년부터는 「육상폐기물 해양투기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해양환경관리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육상폐기물을 해양으로 배출하는 것을 금지토록 하였다.

2007년에는 광주광역시에 음식물 폐수(음폐수)를 혐기성 분해 처리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 이용(보일러 연료)하는 시설을 설치하고, 2008년 5월 「폐기물 에너지화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으며, 2008년 10월에는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 종합대책」 수립·발표하였다.

2009년 7월에는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 대책」 실행계획을 수립·발표하면서 폐기물 자원화회수시설 확충 사업을 적극 추진하게 되었다. 2014년 1월에는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계획”을 발표하고 그해 5월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친환경에너지타운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시 국고를 지원하고 있다.

2014년에는 가연성폐기물 전처리시설, 음식물류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 소각열회수시설, 친환경에너지타운 등 총 15개소의 자원화회수시설 설치 시 975억원의 국고를 지원하여, 기존 매립 또는 소각되던 쓰레기를 에너지원(연료)으로 전환하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시 최적화 전략을 반영하여 개별처리에 따른 중복투자, 가동률 저조, 운영비 과다 등의 비효율을 해소하였으며, 음식물 바이오가스화 등 육상 처리 방법을 확대함으로써 음식물폐수 등 해양투기에 대응하였다.

(11)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의 생활쓰레기 처리시설 설치사업을 국고에서 지원함으로써, 쓰레기의 위생적·안정적 처리기반을 조성하여 국민

복지를 증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사업은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추진되는 사업이다. 지자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환경부에서는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국고를 편성하고 지자체에 국고를 지원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사업을 시행하며, 환경부에서는 수시로 집행실태 파악 및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사업종료 후 적정한 집행인지 여부를 정산을 통해 확인한다.

표 2-1-50 국고 지원 비율 및 보조율 법적근거(폐기물 처리시설)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자체 보조	70% (15억/개소이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대도시의 쓰레기 처리시설 확보로 대도시의 위생적인 조성을 목표로 1997년에 소각시설 확충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하였으며, 1998년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1998년부터 음식물 쓰레기 등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2014년도에는 매립시설, 소각시설, 음식물처리시설, 매립지정비 등 총 32개소에 482억원의 국고를 지원하여 지역별 폐기물처리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함으로써 생활쓰레기의 안정적 처리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였다.

(12)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제주)

정부에서는 방치된 생활폐기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및 자연경관 훼손을 방지하고 주거 환경 개선, 재활용률 향상을 위한 클린하우스 설치사업과 함께 영농폐비닐 수거·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클린하우스 설치는 생활쓰레기 수거체계를 문전수거 체계에서 거점수거방식으로 전환하여 쓰레기 수거시간 및 인력·장비 단축, 주민들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배출할 수 있도록 배출시간 확대로 주민편의 증대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이와 더불어 농촌지역의 자연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영농폐비닐 수거·지원 사업 또한 추진하고 있다.

클린하우스 사업은 2005년 시범사업을 거쳐 2006년부터 시행하여 2013년 말 기준 비가림 클린하우스 1,399개소, 거치대 1,323개소를 설치·운영하였다. 이후, 생활폐기물의 재활용률은 설치 전 48%(2001~2005년)에서 설치 후 55%(2012년)로 증가하였다. 또한, 클린하우스 설치로 생활환경이 쾌적해져 주택지역의 미관 개선 및 주민들의 환경복지가 증대되는 효과를 가져왔으며, 주민 만족도도 92%로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표 2-1-51 클린하우스 설치현황(2006~2013년)

(단위 : 개소)

구분	클린하우스 설치현황			CCTV 설치현황
	계	비가림시설	거치대	
계	2,727	1,399	1,328	746
제 주 시	2,272	944	1,328	506
서귀포시	455	455	-	240

농촌폐비닐 수거사업은 폐비닐 방치에 따른 토양오염을 방지하고, 무분별한 소각에 따른 대기오염을 방지하여 건전한 토양과 쾌적한 농촌환경을 유지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2010년 1월 1일 농어촌폐비닐 수거지원사업 업무 이관(농림수산식품부→환경부)으로 폐기물 적정 수거 처리를 위한 국고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2014년에도 4.5톤을 수거하였다.

농어촌·단독주택 지역의 재활용률 향상 및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 정부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제주도에 중앙 정부의 차별화된 적극적 지원으로 생활폐기물 재활용 제고에 지방자치 단체의 노력과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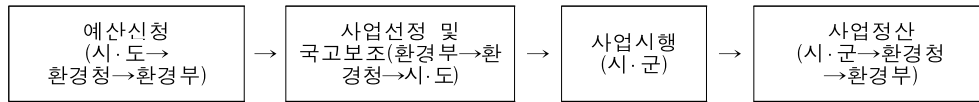
(13) 비점오염저감사업

하천 환경변화, 도시화에 따른 불투수면 증가, 강우특성 변화 등으로 수질과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를 위해 비점오염물질에 대한 관리가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였다.

이에 따라, 도시 및 농촌지역, 도로 등 비점오염원(Nonpoint Source)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하여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하천 수질개선과 생태적으로 건강한 물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강우시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을 저감하여 수질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자연형·장치형 시설) 설치를 지

원하고, 효과적인 도시 비점오염원관리를 위하여 사전예방 차원의 발생원 관리를 통한 유출량을 저감할 수 있는 그린빗물인프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2-1-52 사업추진 절차



2014년에 비점오염저감시설 42개소를 설치하여 도시, 농촌 지역 등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 저감을 통하여 수질을 개선하고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에 기여하였으며, 공공청사 7개소 대상으로 그린빗물인프라 사업을 추진하여 강우유출 저감을 통해 비점오염원을 관리하여 물순환구조를 개선하고 경관가치를 향상하는데 기여하였다.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를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고 사전 발생원 관리를 위한 그린빗물인프라 사업 추진을 확대할 계획이다.

4. 안전한 지역환경 만들기

(1)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교통사고를 심층적으로 분석, 원인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도로구조,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대시설물 등 주변 교통환경을 정비·개선함으로써 교통사고를 감소시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해 왔다.

제1~4차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추진결과, 13,865개소를 개선하였고, 2012년부터 시작된 제5차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계획에 따라 2012년에 272개소(279억원), 2013년 267개소(299억원), 2014년에 139개소(114억원)를 개선·정비하였다. 2015년에는 48억원을 투입하여 78개소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2010년부터 교통운영체계 선진화방안의 일환으로 불필요하게 신호대기 시간이 길고 신호통제성이 낮은 교차로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여 2010년 87개소(172억원),

2011년 97개소(250억원), 2012년 85개소(184억원), 2013년 96개소(260억원), 2014년 54개소(146억원)를 설치하였으며, 2015년에는 67억원을 투입하여 24개소의 회전교차로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2)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은 보·차도 분리, 보도 단절구간 연결, 보행 장애물 제거 등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각종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565억원(국비 2,283억원)을 투자하여 191개소를 정비하였다.

2013년에는 52개소에 618억원(국비 309억원)을 투자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하였으며 특히,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2012년 8월)에 따라 보행권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사업방식을 기존의 선개념에서 지구개념으로 전환하고 공모를 통해 '보행환경 개선지구 시범사업' 10개소를 추진하였다. 공모사업은 교통·안전·도시계획·시민단체 등 전문가 18명으로 구성된 '보행사업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함으로써 객관성, 전문성,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는데 더욱 신중을 기하였다.

2014년에는 378억원(국비 189억원)을 투자하여 공모사업 18개소와 일반사업 2개소를 정비하였고, 2015년에는 308억원(국비 154억원)을 투자하여 공모사업 10개소와 일반사업 4개소를 정비할 계획이다.

(3) 어린이 안전영상 정보 인프라 구축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환경 제로 구축” 국정과제(협업과제)로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도시공원·놀이터에서 어린이들을 범죄 및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2014년까지 21,230개소(1,888억원 지원) CCTV를 설치하였으며 2015년까지 24,860개소에 설치 예정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부서별로 각각 설치된 CCTV를 통합하여 관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영상정보에 대한 관리부실 문제를 개선하고자 2013년까지 120개 기초자치

단체(618억원 지원)에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였다. 그리고 CCTV 육안 관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능형 CCTV 관제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국민생활 안전에 기여하고 있다.

(4)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굴곡부·급경사, 노폭협소 등 구조적으로 사고위험이 높은 지방도로에 대하여 선형개량, 경사완화, 도로폭 확장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10개년 중장기 사업계획(제1차 2004~2013년, 제2차 2014~2023년)에 따라 2004년부터 연차별로 추진 중에 있다.

제1차 위험도로 구조개선 중장기 사업계획에 따라 전국 1,692개소의 위험한 지방도로에 1조 7,484억원을 투자하여 개선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14년도에 제2차 위험도로 구조개선 중장기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총 723개소에 1조 4,078억원을 투자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2015년에는 738억원(국비 369억원)을 투입하여 117개소의 위험한 지방도로를 개선할 계획이다.

표 2-1-53 지방도 위험도로 개량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단위 : 개소, 억원)

구 분		계	2004~2014년 실적	2015년 계획	2015년 이후
사업량		2,415	1,708	117	590
사업비	합 계	31,562	18,218	738	12,606
	국 비	15,781	9,109	369	6,303
	지방비	15,781	9,109	369	6,303

(5) 도시침수 대응사업

최근 기후변화로 집중호우가 빈번히 발생하나 하수관거 용량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여 매년 도시침수 발생하고 있다. 지난 100년간 연간 강수량은 17%, 향후 2050년까지 15.6% 증가할 전망이다. 본 사업은 상습침수지역에 대하여 하수도시설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이다.

상습침수 지역에 대해 우수관로와 펌프장 등을 대폭 확충하여 통수능력을 강화하고 사고 도심지역내 하수관로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 하수저류시설을 설치하여 침수를 예방하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정주여건과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고자 한다.

이에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하수도정비대책을 마련하고 도시침수 대응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침수대응 사업은 크게 도시침수 대응 시범사업과 침수대응 하수도정비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도시침수 대응 시범사업 추진의 추진경과 및 성과는 다음과 같다. 정부에서는 도시규모, 하수도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6개 지역에 침수대응 하수도시설 확충 시범사업 추진 중으로, 시범사업의 경험(설계, 공사 등)을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지정 지역의 하수도정비대책 추진과정에 활용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김해·천안·부천·안동시, 보성·서천군 등 6개소이며, 사업기간은 2013~2015년까지 총사업비 2,327억원이 투자될 계획이다(2014년 공정률 : 19~67%).

침수대응 하수도정비 사업 추진의 추진경과 및 성과는 다음과 같다. 2013년부터 하수 범람으로 침수피해 발생 또는 우려가 있는 지역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예산을 중점 지원하여 침수대응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 지역은 2014년까지 32개 지역을 지정하였다.

표 2-1-54 침수 대응 중장기 투자계획(2012년 5월, 국가정책조정회의)

(단위 : km, 개소, 억원)

구 분	합 계(2013~2022년)		1단계(2013~2017년)		2단계(2018~2022년)	
	사업량	금 액	사업량	금 액	사업량	금 액
하수관거	2,007	14,738	1,105	7,925	902	6,813
저류시설	165	20,046	44	6,017	121	14,029
펌 프 장	81	1,900	42	942	39	958

(6) 농업안전보건센터 지정·운영

농업인의 고령화 추세 및 안전사고 증가 등으로 의료복지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농업인은 비농업종사자에 비해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농업은 3대 위험산업(광업>농어업>건설업)에 속하고,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증

가하고 있으나, 농작업과 만성질환과의 관련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미흡하고 사전예방을 위한 노력도 부족하였다.

표 2-1-55 농가인구 고령화율

구 분	2010년	2014년
농가인구	24.4	39.1
전국	7.6	12.7

주 : 고령화율=(65세 이상 인구÷총인구)×100

농업인의 직업성 질환에 대한 조사·연구와 예방 교육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2013년부터 농업안전보건센터를 지정하여 지원(개소당 300백만원)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농업인 농약중독 질환과 감염성 질환에 대해서 조사·연구가 실시되도록 2개소를 추가 지정하였다.

센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2013년 지정한 센터 5개소에 대해서 1년차 사업추진 실적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연구결과 확산을 위한 심포지엄을 2회 개최하여, 농업인 주요 질환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물 전시·배포 등을 실시하였다.

향후에도 현재 포함되지 않은 주요 질환에 대해 연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농업안전보건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농업인의 직업성 질환에 대한 조사·연구와 예방교육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표 2-1-56 농업안전보건센터 지정·운영 현황(2014년 기준)

지정기관	연구 주제	지정시기
한양대 농업안전보건센터	농업인 호흡기 질환	2013년
강원대 농업안전보건센터	농작업 허리질환	“
충북대 농업안전보건센터	농업인 일광·자외선 노출질환	“
조선대 농업안전보건센터	농업인 무릎관절염 질환	“
경상대 농업안전보건센터	과수 등 농업인 상지 근골격계 질환	“
단국대 농업안전보건센터	농업인 농약중독 질환	2014년
동국대 농업안전보건센터	농업인 감염성 질환	“

제3절 지역 중심지 활력 증진

1. 지역 중심지 활력 증진

(1) 농촌 중심지 지원 사업

농촌중심지⁷⁾에 대한 정책은 1972년부터 소도읍가꾸기, 소도읍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해 오던 행정자치부가 2003년부터 읍급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지방소도읍육성사업을 도입하면서 본격 추진되기 시작하였으며, 2007년부터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면소재지를 대상으로 하는 거점면 소재지 마을종합개발사업을 도입함에 따라 이원적으로 추진되었다. 이후 2010년부터 기초생활권 발전정책과 포괄보조금제도가 도입되면서 일반농산어촌지역, 특수상황지역, 도시활력증진지역 등의 지역유형별 주관부처에 의해 각기 다른 방식으로 그 중심지 정비사업이 추진되어 왔다.

일반농산어촌지역에 있어서 농촌중심지 관련 정책·사업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읍(동)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등 308지구를 추진하여 읍·면의 기초생활 인프라를 개선하고, 서비스 기능을 확충하였다. 다만, 사업이 농촌중심지 체계상의 위계 및 기능과 관련성이 낮고, 도로 및 시가지 정비 등 H/W 중심 추진으로 활성화의 한계에 부딪혔다. 또한, 新지역발전 핵심시책인 중심지 활력 증진 등을 통한 ‘지역행복생활권’ 정책과 농촌 지역개발정책 개편(2013년 12월)을 통해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을 정책화 하였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농촌 중심지의 잠재력과 고유의 테마를 살려 특성과 경쟁력을 갖춘 농촌 발전 거점으로 육성하고 농촌 중심지를 배후마을과 도시를 연결하는 연결 거점으로서 지역행복생활권 구현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주요 기능은, ①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의 중심지, ② 배후 농촌마을의 발전을 선도하는 발전 거점, ③ 도시와 농촌을 매개하는 교통·정보 결절, ④ 학교·지역사회단체·공공시설 등이 집중된 지역공동체 활동의 거점이다.

7) 농촌 중심지 : 도농복합시와 군지역의 읍면소재지 중에서 주민들에게 교육문화·복지 등 일상생활 서비스의 공급 중심지 및 경제활동과 지역공동체 활동의 거점 역할을 하는 곳이다.

그림 2-1-5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개요



농촌 중심지의 활성화를 통해 농촌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생활권 구현을 목표로 하는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4가지 전략은 다음과 같다. ① 농촌 주민의 생활서비스의 원활한 충족, ② 농촌 경제활동의 다각화 및 새로운 경제 활력 창출, ③ 공동체 활동 거점기능의 강화, ④ 고유 자원의 보전 및 활용 등이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추진방식은, [추진체계]→[계획수립]→[통합적 접근]→[투자 효율성]→[계획적 투자]의 단계로 추진되며 각 단계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추진체계]거버넌스(읍면발전협의회, 추진위원회, 총괄계획가)의 확장 및 역할강화, ② [계획수립]주민주도형 농촌 중심지 활성화 계획 수립, ③ [통합적 접근]타 사업·계획과 연계한 장소중심 통합적 접근, ④ [투자 효율성]개별 중심지별 테마 중심으로 투자 집중, ⑤ [계획적 투자]선택과 집중으로 중심지 선정 및 계획에 반영 등이다.

2014년도⁸⁾에 농촌 중심지 지원 사업으로 283개 지구를 대상으로 2,984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15년도⁹⁾에도 325개 지구에 3,111억원을 지원하여 농촌 주민의 생활서비스 충족 및 경제 활력 창출에 기여할 계획이다.

8) 2014년도에 농촌 중심지 지원 사업은 읍면소재지 종합정비, 거점면소재지종합개발, 소도읍육성 등의 세부 내역사업으로 지원하였다.

9) 2015년도부터는 기존에 지원하던 내역사업 이외에도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선도지구와 일반지구를 포함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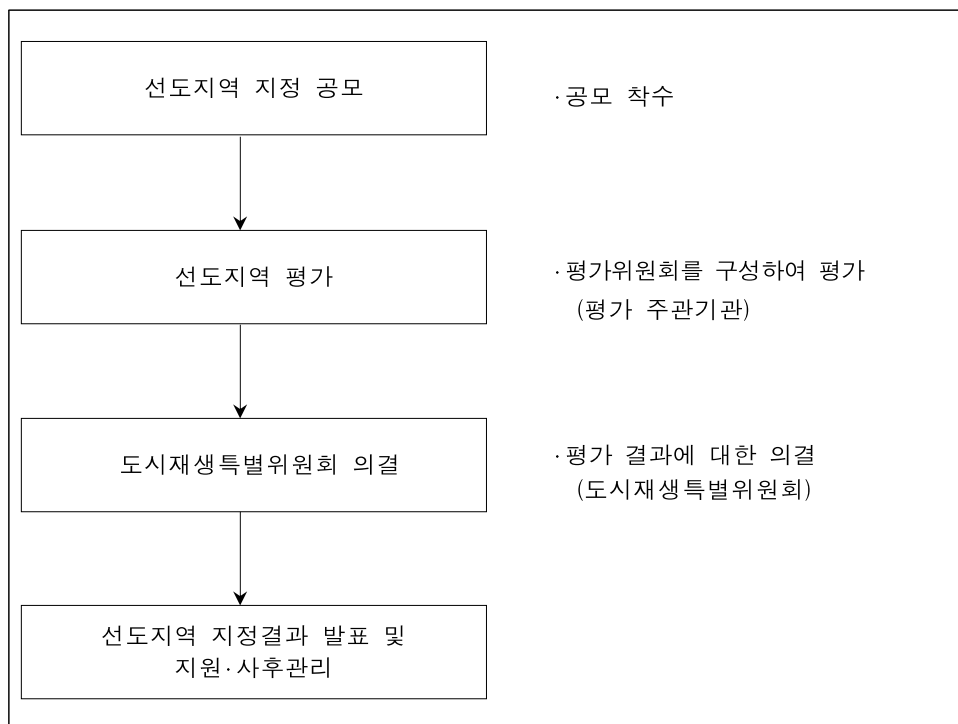
(2) 도시재생사업 지원

도시재생선도지역은 「도시재생 특별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재생이 시급하거나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직접 또는 전략계획수립권자의 요청에 따라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하여, 국가와 지자체의 시책을 중점 시행함으로써 도시재생 활성화를 도모하는 지역이다.

본 사업은 선도지역에 대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사업시행 및 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성공적인 한국형 도시재생의 모델을 정립한다. 특히, 장소 중심으로 각 부처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을 종합·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구체적인 사업방식을 도출하는데 의의가 있다.

도시재생선도지역의 평가·지정 절차는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따르고 있으며, 그 절차는 아래와 같다.

그림 2-1-6 도시재생선도지역 선정 절차도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은 노후산단과 그 주변 재생, 항만 및 배후지 활성화, 역세권 개발, 공공청사, 군부대, 학교 등 이전적지의 복합적 활용, 지역 고유의 역사·문화·관광자산 활용 등 경제 회복효과가 큰 핵심시설 정비 및 개발과 연계하고, 복합적 개발사업 등을 통해 도시에 새로운 기능 부여 및 고용기반 창출이 가능한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재생 사업이다.

한편,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은 쇠퇴한 구도심 및 중심시가지 등의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과 생활여건이 열악한 노후·불량 근린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재생 사업이다.

2013년 12월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2014년 5월 도시재생선도지역 13곳을 선정하였고, 현재 선도지역 중 12곳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착수하였다.

도시재생선도지역 중 2곳의 경제기반형은 총사업비 250억원, 6곳의 일반 근린재생형은 총사업비 100억원, 5곳의 소규모 근린재생형은 60억원의 국고를 지원하고 있다.

표 2-1-57 도시재생선도지역 예산 지원 현황

구분	도시경제기반형	근린재생형	
		일반규모	소규모
선도지역개수	2개	6개	5개
1개소당 지원액	250억원	100억원	60억원

제4절 지역 교통·물류망 개선

1. 전국 간선도로망 및 대도시권 교통완화를 위한 도로 구축

(1) 광역도로 건설

광역교통권역인 시·도간을 연결하는 도로는 지역간 접근이 편리하도록 도로기능을 충분히 제공할 필요가 있으나 시·도간 이권 및 예산부족으로 도로확장, 개설, 포장 등 개선사업이 조속히 시행되지 못한 점이 있다. 그러므로 시·도간 접근성 편의를 제공하고 이동시간 단축 등을 통한 물류비용 절감 등을 위해 시·도간 연결도로의 확장 등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1997년 4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된 이후 단계별로 광역도로를 지정, 지자체간 의견을 조정한 후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총 사업비의 50%에 해당하는 국비를 지원하는 등 광역도로 건설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표 2-1-58 광역도로 현황 및 소요사업비(총 67개)

구분	사업 수	연장거리	사업비
수도권 1차(1999~2003년)	18	61.83km	16,352억원
수도권 2차(2004~2008년)	11	50.76km	8,052억원
지방권 1차(2002~2006년)	15	88.46km	9,868억원
대도시권광역교통1차(2007~2011년)	13	65km	13,844억원
추가지정(2009년 12월)	1	9.8km	582억원
대도시권광역교통 2차(2011년 12월)	9	47.1km	7,597억원

광역도로로 지정된 총 67개 사업(319.2km)중 33개 사업(148.5km)을 2014년 12월 현재 완료하였고, 20개 사업(89.5km)은 2020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연차별 설계 및 공사를 시행중에 있다. 현재 미착수중인 14개 사업(81.3km)은 국가재정 및 산업단지 조성, 택지개발 등 지역의 여건 변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의 경제성이 확보

될 경우 연차별로 착수해 나갈 예정이다.

사업효과를 조기에 실현하고 공사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무엇보다 사업 기간의 단축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준공 예정사업과 추진이 원활한 사업에 예산을 적극 지원하는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예산부족으로 인해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예산확보를 위해 예산당국과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광역교통권역인 시·도간 연결도로 중 교통정체 발생 등 서비스 수준이 저하된 도로에 대하여 지자체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광역도로를 지정하고,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서비스 수준 향상, 이동시간 단축, 물류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실현되어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

표 2-1-59 광역도로 연차별 투자비(국고) 현황

(단위 : 억원)

연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광역도로	2,305	2,472	1,492	1,483	1,322	779

(2)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

국가지원 지방도는 지방도 중 주요 도시, 공항, 항만, 관광지 등을 연결하며 고속국도·국도로 이루어진 국가간선도로망을 보조하는 도로로서 1996년 처음 도입되었다. 국가지원지방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역할을 분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에서 노선지정 및 기본계획 수립, 조사·설계를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설 및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건설재원의 경우 국가에서는 공사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상비 및 유지관리비를 부담하고 있다.

국가지원 지방도는 도로법에 의거한 5년 단위의 중장기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진된다. 현재 ‘제2차 국지도 건설 5개년(2006~2010년)계획’ 및 ‘제3차 국지도 건설 5개년(2011~2015년)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 중이며, 향후에 추진할 ‘제4차 국지도 건설 5개년(2016~2020년)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국가지원지방도는 1996년 사업을 착수한 이후 2012년까지 총 103건, 658km를 완료하였고, 2013년에 6,404억원을 투자해 64건, 576km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4년도

에는 59건, 485km에 5,442억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다.

표 2-1-60 국가지원지방도 연차별 투자비(국고) 현황

(단위 : 억원)

연도	1996~ 2001년	2003년	2005년	2007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국지도	14,047	5,600	5,426	6,039	5,865	6,285	5,943	6,072	6,404	5,442

(3) 대도시권 혼잡도로 건설

고속도로, 국도 등 광역 교통시설의 지속적 확충으로 지역 간 교통난은 완화되고 있으나, 도시부 교통난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5년 기준으로 전국 교통혼잡 비용의 63.8%가 도시부에서 발생 중이며, 도시부 비중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표 2-1-61 교통혼잡비용 추이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증가율 (%)
전국 교통 혼잡비용 (십억원)	계(A)	23,540	24,621	26,172	26,903	27,706	28,509	29,097	30,315	31,420	32,385	33,350	3.54
	지역간	9,094	9,180	9,684	9,881	10,064	10,436	10,742	11,130	11,418	11,737	12,057	2.86
	도시	14,446	15,441	16,488	17,022	17,641	18,073	18,355	19,185	20,002	20,647	21,293	3.96
GDP(B, 조원)		919.8	966.1	1,043.3	1,104.5	1,151.7	1,265.3	1,332.7	1,377.5	1,428	1,483	1,542	5.30
GDP 대비 비중 (A/B, %)		2.56	2.55	2.51	2.44	2.41	2.25	2.18	2.20	2.20	2.18	2.16	-

자료 : 2015년 전국교통혼잡비용 산출과 추이분석(교통연, 2015년)

이에 따라 2004년 7월 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대도시권 투자가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였다. 또한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계획 수립 연구용역(2004년 1차(2006~2010년), 2009년 2차(2011~2015년), 교통연)을 시행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 및 예산당국의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하였다.

동 기본계획에 따라 대도시권 혼잡도로 개선을 위하여 자치단체에 국고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2010년 1건(대구-포항고속도로 진입로), 2011년 1건(유등천좌안도로), 2013년 1건(상인-범물), 2014년 1건(신천좌안도로(상동교-가창))을 준공, 2014년 기본설계 1건

(식만-사상), 실시설계 2건(상개-매암, 을숙도-장림)을 추진 중에 있으며 11개 사업을 시행 중이다.

표 2-1-62 대도시권 혼잡도로 연차별 투자비(국고)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대도시권교통혼잡도로	427	311	335	456	1,158	1,290	1,423

(4) 제주구국도건설

제주지역 구국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2006년 7월)된 국도로서, ‘국도 대체우회도로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1997년 9월)’ 및 ‘제2차 국도건설 5개년(2006~2010년) 계획수립(2003년 12월)’에 의거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위한 교통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다.

본 사업은 제주지역 시내권 교통량 분산으로 도심지 교통체증 완화를 위해 제주 구국도 및 국도대체우회도로 등 건설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다. 2009년까지 2,268억원을 지원하였고, 2014년에는 회천-신촌 등 3개 사업(21.7km)에 2,574억원을 투자하여 준공·개통하였으며, 아라-회천 등 2개 사업(10.1km)에 225억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다.

표 2-1-63 제주도 구국도 건설 연차별 투자비 현황 (단위 : 억원)

연 도	2009년까지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2,268	730	752	803	536	519
제주구국도건설	2,268	730	752	803	536	519

(5) 광주순환고속도로건설사업

고속도로는 국가 간선교통망의 중추로서, 전국 차원에서 발생하는 교통수요를 충족하고, 국민 이동성 보장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주요 국가교통시설이다. 고

속도로 건설은 1968년 경부선 건설 이래 국가 및 한국도로공사가 역할을 분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기본계획 수립, 조사·설계를 국가가 수행하고 한국도로공사에서 건설 및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건설재원은 국가에서 공사비의 40%, 보상비의 100%를, 한국도로공사에서는 공사비의 60%를 부담하고 있다.

광주순환 고속도로는 급증하는 대도시권 교통량의 효과적인 수용 및 혼잡비용 감소를 통한 광주외곽지역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07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타당성이 확보된 본량-진원 구간(B/C=1.05) 총 16.2km의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고속도로는 도로법에 의거한 10년 단위의 장기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진된다. 현재 '제2차 도로정비 기본계획(2011~2020년)'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광주순환 고속도로는 7×9+6R 중 6R(6개 대도시 순환망)에 해당되는 노선으로 2014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5년 착공할 예정이다.

표 2-1-64 광주순환 고속도로 예산투입 현황

(단위 : 억원)

연 도	총사업비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이후
예 산	2,124 (4,481)	138 (138)	11 (11)	150 (180)	1,825 (4,152)

주 : ()는 도로공사 부담분 포함

(6) 대구순환고속도로건설사업

대구순환 고속도로는 급증하는 대도시권 교통량을 효과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도시교통과 지역간 교통을 분리하여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12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타당성을 검증(B/C=1.14)한 후 지천-상매 구간 총 32.4km의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현재 '제2차 도로정비 기본계획(2011~2020년)'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구순환 고속도로는 7×9+6R 중 6R(6개 대도시 순환망)에 해당되는 노선으로 2013년에 설계를 완료하고 2014년에 착공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다.

표 2-1-65 대구순환고속도로 예산투입 현황

(단위 : 억원)

연 도	총사업비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이후
예 산	6,353 (12,166)	296 (296)	981 (1,215)	1,638 (2,486)	3,438 (8,169)

주 : ()는 도로공사 부담분 포함

(7) 대도시권 광역환승센터 구축

도로·철도 등 교통시설간 연계성과 보완성이 부족하여 연계·환승 거리가 길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며, 특히 교통결절점 중심의 연계·환승 교통체계 구축이 미흡하여 대중교통 이용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하철, 버스 등 교통수단간 빠르고 편리한 환승이 이루어지도록 주요 환승 발생 지점에 교통특성을 고려한 대중교통 환승시설을 단계적으로 확대 구축하고 있다.

2014년까지 국비 340억원을 지원하여 서울 3개소, 부산 1개소, 하남 1개소 등 총 5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수원 1개소, 오산 1개소, 부천 1개소, 부산 1개소 등 4개소를 구축 중에 있다. 이들 환승센터가 완공되면 통행자의 통행시간 및 환승시간 감소, 대중교통 이용객 흡수, 개인교통수단의 도심지 진입 억제 등으로 교통수요를 감소시켜 교통난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8) 돌산-화태 국도건설공사

국도77호선 미개통구간 연도교 건설로 해상에서 육상으로의 교통수단 전환을 통한 접근성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간 운행거리 및 시간단축을 도모하고자 2002년 5월에 본 사업 추진이 계획되었다.

돌산-화태 구간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03년 2월에서 2004년 9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04년도에 사업을 착공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다.

표 2-1-66 돌산-화태 국도건설공사 연차별 투자비(국고)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총사업비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장래
돌산-화태	159,655	111,686	21,494	23,273	3,202

(9) 동해-삼척고속도로건설사업

동해-삼척 고속도로는 강원권 관광사업 발달에 따른 증가하는 교통량에 대응하고, 상대적으로 간선도로망 구축이 더딘 강원 북부권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2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하여(AHP=0.652) 총 18.6km의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현재 '제2차 도로정비 기본계획(2011~2020년)'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해-삼척 고속도로는 계획된 7×9+6R 중 남북 7축(간성-부산)에 해당되는 노선으로 2008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9년 착공, 2016년에 개통할 예정이다.

표 2-1-67 동해-삼척 고속도로 예산투입 현황

(단위 : 억원)

연 도	총사업비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이후
예 산	3,016 (5,855)	2,045 (3,490)	396 (961)	377 (910)	198 (494)

주 : ()는 도로공사 부담분 포함

(10) 거제-마산 국도

2006년 7월 경상남도는 지역균형발전과 남해안 관광산업활성화 차원에서 국도 5호선 연장조정을 건의하였으며, 2008년 11월 국도 5호선에 거제시 연초면~마산 월영동 구간을 포함하여 541.6km 연장 계획하였다.

2008년 9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마산-창원-거제를 연결하는 Ring Road를 구축하여 지역 연계 개발을 강화하고 산업클러스터 형성 등의 목적으로 본 사업을 광역발전 30대 선도프로젝트로 선정하였다.

거제-마산 구간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09년 6월에서 2012년 3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12년도에 사업을 착공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다.

표 2-1-68 거제-마산 국도건설공사 연차별 투자비(국고)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총사업비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장래
계	355,219	44,854	55,840	53,459	220,734
거제-마산2	169,332	22,272	31,904	30,335	96,352
거제-마산3	185,887	22,582	23,936	23,124	124,382

(11) 부산순환고속도로건설사업

부산순환 고속도로는 대도시권의 광역화, 부산 신항 개발에 따른 교통량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08년 30대 광역발전 선도프로젝트의 하나로 지정되어 진영-기장 구간 총 48.8km의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한다.

현재 '제2차 도로정비 기본계획(2011~2020년)'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산순환 고속도로는 7×9+6R 중 6R(6개 대도시 순환망)에 해당되는 노선으로 2010년에 설계를 완료하고 2011년에 착공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다.

표 2-1-69 부산순환 고속도로 예산투입 현황

(단위 : 억원)

연 도	총사업비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이후
예 산	12,035 (22,185)	4,090 (5,193)	2,423 (3,610)	2,100 (4,781)	3,422 (8,601)

주 : ()는 도로공사 부담분 포함

(12) 상주-영덕고속도로건설사업

상주-영덕 고속도로는 간선도로망 구축이 되어있지 않은 경북 북부 내륙과 동해권을 연결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북 북부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8년 30대 광역발전 선도프로젝트의 하나로 지정되어 상주-영덕 구간 총 107.6km의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현재 '제2차 도로정비 기본계획(2011~2020년)'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주-영덕 고속도로는 계획된 7×9+6R 중 동서 4축(당진-영덕)에 해당되는 노선으로 2009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0년 착공하여 2016년에 개통할 예정이다.

표 2-1-70 동해-삼척 고속도로 예산투입 현황

(단위 : 억원)

연 도	총사업비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이후
예 산	12,702 (26,442)	6,646 (11,399)	1,331 (3,322)	2,278 (5,684)	2,447 (6,037)

주 : ()는 도로공사 부담분 포함

(13) 서남해안 연륙교(압해-암태, 화양-적금)

신안군 도서지역 연결을 위한 국도 미개통구간의 연도교 건설로 해상에서 육상으로의 교통수단 전환을 통한 접근성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간 운행거리 및 시간단축을 도모하고자 본 사업이 추진되었다.

압해-암태 구간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09년 3월에서 2010년 7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10년도에 사업 착공하여 사업 진행 중에 있다.

화양-적금 구간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10년 12월에서 2011년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12년도에 사업을 착공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다.

표 2-1-71 압해-암태, 화양-적금 국도건설공사 연차별 투자비(국고)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총사업비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장래
합 계	912,406	308,280	99,781	114,383	389,962
압해-암태	554,030	245,364	46,029	54,707	207,930
· 1공구	257,265	134,095	20,006	31,428	71,736
· 2공구	296,765	111,269	26,023	23,279	136,194
화양-적금	358,376	62,916	53,752	59,676	182,032
· 1공구	72,116	12,337	11,794	9,054	38,931
· 2공구	98,988	14,387	14,682	13,828	56,091
· 3공구	135,569	26,504	18,812	26,198	64,055
· 4공구	51,703	9,688	8,464	10,596	22,955

(14) 영남-적금 국도

국도77호선 미개통구간 연도교 건설로 해상에서 육상으로의 교통수단 전환을 통한 접근성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간 운행거리 및 시간단축을 도모하고자 2002년 5월에 본 사업 추진이 계획되었다.

영남-적금 구간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03년 2월에서 2004년 9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04년도에 사업 착공하여 현재 사업 진행 중에 있다.

표 2-1-72 영남-적금 국도건설공사 연차별 투자비(국고)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총사업비	2013까지	2014년	2015년	장래
영남-적금	277,363	199,233	45,349	31,085	1,696

(15) 영주-울진고속도로건설사업

영주-울진 고속도로는 '제2차 도로정비 기본계획(2011~2020년)' 상에서 동서 5축(보령-울진) 중 경북 북부 내륙인 영주에서 동해권인 울진을 연결하는 구간으로, 동서5축은 보령-울진 구간 중 세종-오창-괴산-울진 구간의 간선도로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현재 '제2차 도로정비 기본계획(2011~2020년)'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영주-울진 고속도로는 계획된 7×9+6R 중 동서 5축(보령-울진)에 해당되는 노선으로 경제성이 부족(오창-괴산 B/C=0.21, 괴산-울진 B/C=0.14)하여 장기계획 노선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2014년 사전기본계획조사를 실시하여 2015년 완료 예정에 있으며 결과에 따라 타당성 및 추진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16) 울산-포항고속도로건설사업

울산-포항 고속도로는 부산-울산 고속도로와 연계하여 부산항-울산공업단-포항을 연결하는 화물 수송로를 확보하고, 부산 신항 개발 등 지역개발 가속화에 따른 배후 교통망을 확충하기 위해 2000년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타당성을 확보(B/C=1.09)하여 울산-포항 구간 총 53.7km의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현재 '제2차 도로정비 기본계획(2011~2020년)'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울산-포항 고속도로는 계획된 7×9+6R 중 남북 7축(간성-부산)에 해당되는 노선으로 2009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0년 착공하여, 2015년 양남터널 구간(11.6km)을 제외한 42.1km를 개통하고 2016년에 완전 개통할 예정이다.

표 2-1-73 울산-포항 고속도로 예산투입 현황

(단위:억원)

연 도	총사업비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이후
예 산	10,342 (19,917)	7,352 (12,552)	966 (2,335)	1,357 (3,360)	667 (1,670)

주 : ()는 도로공사 부담분 포함

(17) 월전-중군 국도

국도2호선 여수-순천간 국대도이며,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 배후도로로서 목포-광양 고속도로, 여수-순천 도로와의 연계성 강화를 통해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지역균형 개발을 촉진하고자 본 사업이 추진되었다.

월전-중군은 월전-세풍, 세풍-중군 2개 구간으로 나뉘 추진되었으며, 월전-세풍은 2001년 착공, 2011년 준공하여 현재 개통 중에 있다.

세풍-중군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03년 7월에서 2005년 10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06년도에 착공하여 현재 사업 진행 중에 있다.

표 2-1-74 월전-중군 국도건설공사 연차별 투자비(국고)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총사업비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장래
계	414,411	323,402	32,144	15,773	43,092
월전-세풍	122,938	122,938	-	-	-
세풍-중군	291,473	200,464	32,144	15,773	43,092

(18) 음성-충주고속도로건설사업

음성-충주 고속도로는 평택-음성간 고속도로 연장을 통해 수도권 기능 분산을 도모하고, 중부내륙지역을 동서로 연결하는 간선도로망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8년 30대 광역발전 선도프로젝트의 하나로 지정되어 대소-엄정 구간 총 45.6km의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한다.

고속도로는 도로법에 의거한 10년 단위의 장기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진된다. 현재 '제2차 도로정비 기본계획(2011~2020년)'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음성-충주 고속도로는 계획된 7×9+6R 중 동서 6축(평택-제천)에 해당되는 노선으로 '06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7년 착공, 2014년에 개통하였다.

표 2-1-75 동해-삼척 고속도로 예산투입 현황

(단위 : 억원)

연 도	총사업비	2012년까지	2013년	2014년
예 산	5,583 (9,648)	4,581 (7,497)	645 (1,276)	259 (616)

주 : ()는 도로공사 부담분 포함

(19) 제2외곽순환고속도로건설사업

수도권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수도권 광역화에 따라 급증하는 교통량에 대응하고, 정체가 심해지는 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를 대체하는 순환축을 형성하기 위한 것이다. 김포-파주 구간 등 총 12개 구간 258.3km에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한다. 현재 '제2차 도로정비 기본계획(2011~2020년)'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도권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는 계획된 7×9+6R 중 6R(순환2축)에 해당되는 노선이다.

표 2-1-76 수도권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 추진현황

(단위: 억원)

노 선 명	현 황	노 선 명	현 황
오산-봉담	공용중('09준공)	파주-포천	착공예정('15)
봉담-송산	민자사업 협상중	포천-화도	민자사업 협상중
송산-안산	공용중('13준공)	화도-양평	공사중('14착공)
안산-인천	에타중(~'15.6)	양평-양평	공용중('12개통)
인천-김포	공사중('12착공)	양평-이천	기본설계중(~'15.6)
김포-파주	실시설계중(~'16.10)	이천-오산	협약체결('15.5)

(20) 주문진-속초고속도로건설사업

주문진-속초 고속도로는 강원권 관광사업 발달에 따른 증가하는 교통량에 대응하고, 상대적으로 간선도로망 구축이 더딘 강원 북부권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2008년 30대 광역발전 선도프로젝트의 하나로 지정되어 현남-속초 구간 총 43.4km의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한다.

현재 '제2차 도로정비 기본계획(2011~2020년)'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문진-속초 고속도로는 계획된 7×9+6R 중 남북 7축(간성-부산)에 해당되는 노선으로 2004년에 착공한 현남-하조대 구간은 2009년 개통하였고, 잔여구간(하조대-양양)은 2009년 착공하여 2016년에 개통할 예정이다.

표 2-1-77 주문진-속초 고속도로 예산투입 현황

(단위 : 억원)

연 도	총사업비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이후
예 산	5,112 (9,340)	4,121 (6,932)	302 (711)	409 (999)	280 (698)

주 : ()는 도로공사 부담분 포함

(21) 춘천-양양고속도로건설사업

춘천-양양 고속도로는 강원권 관광사업 발달에 따른 증가하는 교통량에 대응하고, 수도권과 상대적으로 간선도로망 구축이 더딘 강원 북부권을 연결하여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3년 타당성재조사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B/C=1.44$)한 후 춘천-양양 구간 총 88.8km의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한다.

현재 '제2차 도로정비 기본계획(2011~2020년)'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춘천-양양 고속도로는 계획된 7×9+6R 중 동서 8축(인천-양양)에 해당되는 노선으로 2004년 착공한 춘천-동홍천 구간은 2009년 개통하였고, 2008년 착공한 동홍천-양양 구간은 2017년에 개통할 예정이다.

표 2-1-78 춘천(동홍천)-양양 고속도로 예산투입 현황

(단위 : 억원)

연 도	총사업비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이후
예 산	11,544 (24,141)	6,666 (5,306)	1,245 (3,100)	1,416 (3,534)	2,217 (5,534)

주 : ()는 도로공사 부담분 포함

(22) 충주-제천고속도로건설사업

충주-제천 고속도로는 음성-충주와 연계하여 평택-음성간 고속도로 연장을 통해 수도권 기능 분산을 도모하고, 중부내륙지역을 동서로 연결하는 간선도로망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1999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B/C=1.16$)한 후 엄정-금성 구간 총 23.9km의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한다.

현재 '제2차 도로정비 기본계획(2011~2020년)'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충주-제천 고속도로는 계획된 7×9+6R 중 동서 6축(평택-제천)에 해당되는 노선으로 2009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9년 착공, 2015년에 개통할 예정이다.

표 2-1-79 충주-제천 고속도로 예산투입 현황

(단위 : 억원)

연 도	총사업비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이후
예 산	3,973 (7,874)	2,864 (5,164)	788 (1,963)	109 (272)	-

주 : ()는 도로공사 부담분 포함

(23) 특정지역 도로건설지원

1963년에 제정된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근거하여 최초 특정지역제도를 도입했는데, 이는 당시 우리나라는 경제개발을 추진하면서 에너지를 비롯한 기초재원이 부족하여 성장잠재력이 있고 개발효과가 큰 특정지역을 집중적으로 개발하여 국가전체의 경제성장을 선도할 수 있는 거점개발방식의 채택이 필요했다.

특정지역계획은 1963년 10월에 제정된 「국토건설종합계획법」과 1980년 1월에 제정된 「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랐으나(1993년 6월 11일, 백제문화권지정), 국토의 균형적 개발촉진이용을 위하여 1994년 1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광역권개발계획 및 개발촉진지구제도가 도입되고, 특정지역제도는 폐지되었다.

한편 지방자치제의 발전으로 지역간 연계개발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소득수준의 향상과 함께 문화·관광분야 등에서 지역개발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성장거점방식의 광역권 개발계획, 낙후지역 개발수단인 개발촉진지구만으로 지역개발수요를 수용하는 데 한계가 있어, 2002년 1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특정지역제도를 재도입하였으며, 현재 지정된 특정지역은 8개 지역이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상기 근거법에 따라 특정지역은 ① 문화관광권형, ② 산업전환지대형, ③ 특수입지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문화관광권형은 역사·문화유산의 보전·정비 또는 관광자원 개발 등을 위해 기반시설의 설치, 주변지역의 연계개발·정비가 필요한 지역이다. 산업전환지대형은 주요산업·기반시설이 이전·쇠퇴하거나 부존자원 고갈 등으로 새로운 지역경제기반 구축이 필요한 지역이다. 특수입지형은 자연재해·산업재해 등으로부터 항구적인 복구·정비가 필요한 지역, 기타 국가의 특별한 경제·사회적 목적을 위해 집중개발이 필요한 지역 등에 지정할 수 있다.

특정지역은 개발제도간 연계성 강화를 위하여 개발촉진지구의 지정면적(150km²)과 광역개발권역의 지정면적(3,000~9,000km²)인 점을 감안하여 그 중간규모인 500km²이상으로 하고, 과도한 지정을 방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시·도별 1개소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특정지역제도는 상기 근거법의 폐지와 지역개발지원법의 시행(2015년 1월 1일)에 따른 통합 지역개발계획의 하나로 존재하게 된다(신규지정 불가).

표 2-1-80 특정지역 현황

명칭	지정지역	면적 (km ²)	지정일 (사업기간)	총사업비	주요사업
계		11,576.93		- 10조 9,424.2억원 ·국비 4조 5,761.3 ·지방비 3조 2,982.9 ·민자 3조 680	- 총 330개 사업 ·역사문화자원정비(141) ·관광레저개발(87) ·기반시설 확충(76) ·도시환경정비 등(26)
내포 문화권	충남 서산·보령·홍성·예산· 당진·태안·서천·아산	1,036.73	'04.12. 9 ('05~'20)	- 6,404억원 ·국비 2,320 ·지방비 3,958 ·민자 125	- 총 63개 사업 ·정신문화창달(6) ·역사문화유적정비(41) ·관광휴양시설확충(6) ·기반시설확충(10)
영산강 유역고대 문화권	전남 나주·담양·화순·해남· 영암·무안·함평·장성	809.38	'05.12.30 ('06~'15)	- 1조 1,301억원 ·국비 5,304 ·지방비 5,542 ·민자 455	- 총 42개 사업 ·문화재정비(9) ·문화유적 전승(10) ·관광휴양시설 확충(16) ·기반시설 설치(7)
해양농경 역사 문화권	전북 김제·정읍·부안·고창	1,066.43	'09.12.21 ('09~'19)	- 7,213억원 ·국비 2,874 ·지방비 2,203 ·민자 2,136	- 총 30개 사업 ·역사문화자원정비(11) ·관광레저개발(17) ·기반시설 확충(2)
중원 문화권	충북 충주·제천·단양	975.75	'09.12.23 ('09~'19)	- 1조 7,404억원 ·국비 8,617 ·지방비 3,756 ·민자 5,031	- 총 29개 사업 ·역사문화자원 복원·정비(8) ·관광자원 정비·조성(8) ·정주환경개선(2) ·기반시설(11)
동남내륙 문화권	울산	693.70	'10.6.17 ('10~'19)	- 1조 536억원 ·국비 3,566 ·지방비 3,389 ·민자 3,581	- 총 25개 사업 ·역사문화자원 복원·정비(10) ·관광자원 정비·조성(5) ·정주환경개선 및 자연보전(3) ·기반시설 설치(7)
	경남				
가야 문화권	대구	931.90	'10.12.24 ('10~'19)	- 9,062억원 ·국비 6,541 ·지방비 2,330 ·민자 191	- 총 37개 사업 ·역사문화자원 복원·정비(16) ·관광자원 정비·조성(9) ·기반시설 설치(12)
	경북				
설악단오 문화권	강원	536.94	'11.7.27 ('11~'20)	- 1조 2,120억원 ·국비 4,073 ·지방비 1,283 ·민자 6,764	- 총 18개 사업 ·역사문화자원복원·정비(3) ·관광자원 정비·조성(5) ·도로·교통기반시설 설치(10)
	강릉·속초·고성·양양· 인제				
임진강 평화문화 권	경기 김포·파주·연천 ·포천·동두천	768.51	'14.10.13 ('14~'23)	- 5,886.2억원 ·국비 2,704.3 ·지방비 2,691.9 ·민자 490.0	- 총 31개 사업 ·역사문화자원복원·정비(12) ·관광자원 정비·조성(11) ·도로·교통기반시설 설치(8)

(24) 포항-영덕고속도로건설사업

포항-영덕 고속도로는 동해안 종축 노선 구축을 통해 동해안권 도로망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8년 30대 광역발전 선도프로젝트의 하나로 지정되어 포항-영덕 구간 총 30.9km의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한다. 현재 '제2차 도로정비 기본계획(2011~2020년)'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포항-영덕 고속도로는 계획된 7×9+6R 중 남북 7축(간성-부산)에 해당되는 노선으로 2015년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2015년 하반기 발주하여 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표 2-1-81 포항-영덕 고속도로 예산투입 현황

(단위 : 억원)

연 도	총사업비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이후
예 산	5,577 (12,237)	215 (215)	98 (98)	228 (243)	5,036 (11,681)

주 : ()는 도로공사 부담분 포함

(25) 함양-울산고속도로건설사업

함양-울산 고속도로는 간선도로망 구축이 되어있지 않은 경남 북부 내륙과 동해권을 연결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남 북부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8년 30대 광역발전 선도프로젝트의 하나로 지정되어 함양-울산 구간 총 107.6km의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한다.

현재 '제2차 도로정비 기본계획(2011~2020년)'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해-삼척 고속도로는 계획된 7×9+6R 중 동서 2축(함양-울산)에 해당되는 노선으로 2013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한 밀양-울산 구간은 2014년 착공하여 공사 중이며, 잔여구간(함양-창녕, 창녕-밀양)은 2014년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순차적으로 착공할 예정이다.

표 2-1-82 함양-울산 고속도로 예산투입 현황

(단위 : 억원)

연 도	총사업비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이후
예 산	25,154 (57,591)	1,499 (1,499)	437 (541)	1,180 (1,840)	22,038 (53,711)

주 : ()는 도로공사 부담분 포함

(26) 화양-소라간 국지도확포장사업

화양-나진-소라 국가지원 지방도는 국지도22호선으로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안포리에서 소라면 덕양리를 연결하며 현재 공사 시행중인 국도77호선 화양-적금 국도 확포장공사와 연결되어 국가간선도로망을 보조하는 도로로서 2009년 6월에 공사 착공하였다.

화양-소라 구간은 2개구간으로 화양-나진 10.24km, 나진-소라 11.64km로 4차로 확포장 공사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05년 12월에서 2008년 8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 하여 2009년도에 사업 착공하여 사업 진행 중에 있다.

국가지원지방도는 2009년 사업을 착수한 이후 2013년까지 93,174백만원을 투자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22,600백만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다.

표 2-1-83 화양-소라 국가지원지방도 연차별 투자비(국고)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총사업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장래
계	191,251	4,213	16,600	23,976	23,600	24,785	22,600	75,477
화양-나진	102,669	2,107	8,300	11,279	9,500	11,785	14,500	45,198
나진-소라	88,582	2,106	8,300	12,697	14,100	13,000	8,100	30,279

2. 전국 고속철도 및 도시철도망 구축

(1) 광역철도

수도권은 신도시 개발 등으로 대도시 생활권이 확대됨에 따라 교통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교통체증이 심화되는 등 대도시권 광역교통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장기 종합계획의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따라 광역철도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2007년 1월)을 통하여 5년 단위의 대도시 광역교통 시행계획수립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국가 계획과 지자체 계획의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도로와 더불어 광역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접근 틀을 마련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작되었다.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광역철도의 지원대상은 수도권, 부산권, 대구권, 인천권, 광주권, 대전권 등 대도시권의 주민이며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역교통시행계획에서 지정하며 사업별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국토교통부가 사업주체가 되며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사업을 시행한다.

사업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분을 분담하는 구조인데,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가와 지자체간 사업비 분담에 대한 이견이 있었으며, 광역화 추세에 미치지 못하는 표정속도와 획일적인 광역철도 연장 제한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여 시대적 여건에 맞게 광역철도 건설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대두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2013년 12월 30일 개정, 2014년 3월 31일 시행)과 같은 법 시행령(2014년 3월 28일 개정, 2014년 3월 31일 시행)을 개정하여 광역철도 사업비 분담비율을 개선하고, 광역철도 지정요건을 합리화하는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다.

표 2-1-84 광역철도 제도개선 주요내용

구 분	현 행	변 경
사 업 비 분담비율 개 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비 75%, 지방비 25% ○ 지자체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비 60%, 지방비 40% (서울은 국비 40%, 지방비 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비 70%, 지방비 30% ○ 지자체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비 70%, 지방비 30% (서울은 국비 50%, 지방비 50%)
광역철도 속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정속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0km/h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정속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km/h 이상
광역철도 지정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구간이 50km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도시권의 중심지*로부터 반경 40km이내일 것 * 수도권은 서울시청 또는 강남역, 부산·울산권, 대구권 등은 광역시청

앞으로도 광역철도는 단계별로 수도권 및 지방 대도시 주변의 광역철도망을 구축하여 철도의 수송분담률을 향상시킴으로써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하여 심화된 교통체증을 해소 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광역철도로 지정된 사업은 경의선(용산~문산) 등 16개 사업이며, 2022년까지 총사업비 34조 5,585억원(국비 15조 3,182억원)을 투자하여 총 연장 482.9km를 구축할 계획으로 2013년까지 15조 7,353억원(국비 6조 2,941억원)을 집행하는 등 광역교통

난이 심각한 수도권을 위주로 광역철도 교통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광역철도 사업은 1993년 처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2005년 12월 개통한 중앙선(청량리~덕소, 18.0km)을 시작으로 2006년 12월 경원선(의정부~동안, 22.3km)을 개통하여 경기 동북부 지역인 동두천, 남양주, 양주시 권역을 전철 통근지역으로 넓혀나갔다.

표 2-1-85 광역철도사업현황

(단위 : 억원)

사 업 명	연장(km)	사업기간	총 사업비	기투입	2014년 예산	2015년 이후
계	485.8		153,182	62,941	5,214	85,027
청량리~덕소 복선전철	18.0	1993-2010년	5,724	5,724	0	0
의정부~동안 복선전철	22.3	1995-2007년	6,090	6,090	0	0
왕십리~선릉 복선전철	6.8	2000-2012년	5,192	5,192	0	0
망우~금곡 복선전철	18.0	1997-2013년	4,653	4,653	0	0
신분당선(강남~정자)	18.5	2005-2011년	1,913	1,913	0	0
오리~수원 복선전철	19.5	2000-2014년	8,905	8,905	0	0
용산~문산 복선전철	48.6	1996-2014년	17,932	17,631	0	301
수원~인천 복선전철	52.8	1995-2015년	12,311	8,541	1,495	2,275
신분당선(정자~광교)	12.8	2005-2016년	2,477	2,389	0	88
신안산선 복선전철	46.9	2006-2022년	30,735	722	450	29,563
별내선 복선전철	11.4	2007-2016년	4,190	225	500	3,465
신분당선(용산~강남)	7.8	2008-2017년	1,385	52	0	1,333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130.9	2014-2021년	30,981	100	10	30,871
진접선 복선전철	14.8	2012-2019년	7,222	335	800	6,087
하남선 복선전철	7.7	2013-2020년	3,689	240	800	2,649
삼성~동탄 복선전철	37.9	2014-2019년	6,723	226	1,158	5,339
신분당선(광교~호매실)	11.1	2014-2019년	3,060	3	1	3,056

주 : 사업비는 국비 기준임

2009년 7월에는 용산~문산 복선전철 DMC~문산 구간(40.6km)을 우선 개통하여 파주, 고양시의 광역교통 편의를 제공하였고, 2010년 10월에는 수도권 동부지역인 경춘선 망우~금곡(17.9km)구간을 개통하였다.

2011년 12월에는 오리~수원 복선전철 사업 죽전~기흥 구간(5.9km) 및 신분당선(강남~정자) 등을 개통하여 분당, 용인, 수원지역까지 광역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광역철도망을 구축하였다.

2012년에는 수인선 복선전철 오이도~송도구간(13.1km) 및 왕십리~선릉 복선전철(6.8km), 오리~수원 복선전철 사업의 기흥~망포(7.4km), 용산~문산 복선전철의 DMC~공덕구간(6.1km)을 각각 개통하였다. 2013년 12월에는 오리~수원 복선전철의 망포~수원구간(5.2km)을 개통하여 분당선 전 구간을 개통하였으며, 2014년 12월에는 용산~문산 복선전철의 용산~공덕구간(1.9km)을 개통하였다.

(2) 대곡-소사-원시 간선철도

1) 대곡-소사

대곡~소사 복선전철은 소사~원시구간과 연계 운행하는 노선으로 수도권 서북부지역(고양시, 서울시 강서구, 부천시)을 남북방향으로 연계하고, 장래 남북철도망 연결에 대한 간선철도 기능수행을 목적으로 추진 중으로, 사업구간은 고양 대곡~김포공항~부천 소사, 총 19.6km(고양시 6.8km, 서울시 6.5km, 부천시 6.2km)이며 총사업비 1조 2,592억원(2009년 6월 기준 불변가)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원래 일반철도로 계획되었고, 2005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후 2006년 “제1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하면서 당시 예산이 광특회계로 편성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광역철도사업으로 고시 되었다. 이후 2008년 BTL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2009년 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해 같은 해 12월 민간투자사업으로 고시 되었다. 그간 관련 지자체는 이 사업이 대곡~군산을 연결하는 일부구간이므로 일반철도 전환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2011년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일반철도사업으로 고시되었고, 2014년까지 예산안 편성협의를 진행하였으며 2015년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이다.

2) 소사-원시

소사-원시 복선전철은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남서부와 남북을 연결하는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인선·안산선 환승 및 대곡~소사선·신안산선·서해선과 직결되는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총 연장 23.4km, 1조 7,883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며, 2002년 7월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여 2011년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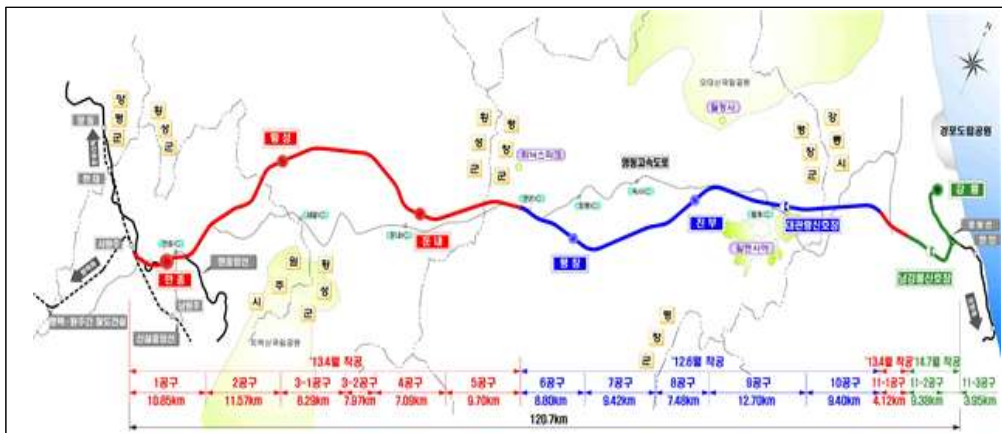
월에 착공하였으며, 2015년 3월 기준으로 공정률은 43%에 이르고 있다.

이 사업은 민간투자방식(BTL)으로 국고 2,387억원, 민간자본 15,495억원이 투입되며, 연평균 266억원의 임대료로 20년간 임대하게 될 예정이다.

(3) 원주-강릉 간선철도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적 개최 지원 및 중부~동부간을 횡축으로 하는 철도망을 구축하고 있다. 강원도 지역의 개발촉진을 위해 추진 중인 원주~강릉 복선철도(120.7km, 3조 9,411억원) 건설사업은 실시설계를 완료(2010년 8월~2012년 12월)하고, 총 14개 공구로 분할 발주하여 전 공구 정상 추진 중에 있다. 또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수송 지원을 위하여 올림픽 개최 전인 2017년말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그림 2-1-7 원주-강릉 철도건설 노선도



원주-강릉 철도건설사업은 총예산 3조 7,846억원으로 2014년도까지 총 1조 2,738억원을 투입(2015년 예산 9,200억원)하여 노반공사, 건물 구조물 공사, 궤도 및 신호·통신공사 등 주요 공정을 본격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 4월말 기준 총 공정률은 37%를 보이고 있다.

(4) 도시철도

도시철도는 도시교통난 해소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핵심 운송수단으로서 우리나라 최초의 도시철도는 1974년 8월 15일 개통된 종로선(1호선 서울역~청량리역) 구간이다. 이후 도시철도의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1979년 4월 지하철건설촉진법이 제정되었으며, 지자체 중심의 도시철도 사업을 국가가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하철건설촉진법은 1990년 도시철도법으로 개정되었다.

이후 도시철도법은 수차례의 개정을 반복하다가 2014년 1월 보다 체계적인 도시철도 건설을 위한 10년 단위의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수립, 도시철도 내 각종 부대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도시철도시설의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전부 개정되었다.

표 2-1-86 도시철도 개통현황

구분	노 선	연 장 (km)	역수	구 간	사업비 (억원)	개통일 (최초)
합계	21개	615.0	591		369,640	
서울 (9)	소 계	327.1	302		172,797	
	1호선	7.8	10	서울역~청량리	984	'74.08.15
	2호선	60.2	50	성수~성수	11,171	'80.10.31
	3호선	38.2	34	지축~오금	13,798	'85.07.12
	4호선	31.7	26	당고개~남태령	8,315	'85.04.20
	5호선	52.3	51	방화~상일, 마천	30,215	'95.11.15
	6호선	35.1	38	응암~봉화산	25,496	'00.08.07
	7호선	57.1	51	장암~부평구청	39,676	'96.10.11
	8호선	17.7	17	암사~모란	8,502	'96.11.23
	9호선	27.0	25	개화~신논현	34,640	'09.07.24
부산 (4)	소 계	107.8	108		68,314	
	1호선	32.5	34	노포~신평	9,751	'85.07.19
	2호선	45.2	43	장산~양산	28,552	'99.06.30
	3호선	18.1	17	대저~수영	17,395	'05.11.28
	4호선	12.0	14	안평~미남	12,616	'11.03.30
대구 (2)	소 계	57.3	59		41,334	
	1호선	25.9	30	대곡~안심	15,187	'97.11.26
	2호선	31.4	29	문양~영남대	26,147	'05.10.18
인천	1호선	29.4	29	계양~국제업무지구	24,320	'99.10.06
광주	1호선	20.5	20	녹동~평동	16,658	'04.04.28
대전	1호선	20.5	22	판암~반석	18,931	'06.03.16
부산-김해	부산-김해	23.2	21	사상~가야대	13,241	'11.09.17
의정부	의정부	11.1	15	발곡~탑석	6,767	'12.07.01
용인	용인	18.1	15	기흥~전대	7,278	'13.04.26

2014년 말 기준으로 도시철도는 36조 9,640억원이 투입되었으며, 전국 총 21개 노선으로 총연장은 615km에 이른다. 지자체별로는 서울시가 총 327km로 총연장의 53%를 차지하며, 부산 108km, 대구 57km 등이 뒤를 잇는다. 도시철도를 운행하는 차량은 5,535량으로 연간 33억명(수송인원)을 실어 나르고 있으며 2010년 29억명에서 지속적으로 수송인원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수송분담률 또한 공로 87.6%(승용차 포함) 다음인 8.2% 수준(2013년 기준)으로 승용차 등 차량을 제외한 교통수단 중 가장 많은 인원을 수송하고 있다. 또한 도시철도와 철도의 분담률인 4.1%의 2배에 이르고 있어 도심교통의 핵심적인 수단으로 자리매김하였다.

2014년 기준으로 총 14개 노선 총 183.7km(총사업비 12조 2,184억원)의 도시철도가 건설 또는 설계 중에 있으며, 이 중 서울 9호선 2단계(논현~잠실)은 2015년 3월에, 대구 3호선(칠곡~범물)은 2015년 4월에 새롭게 개통되었다.

3. 항만 인프라 개선

(1) 서귀포 크루즈터미널 조성사업

서귀포항 크루즈터미널 조성사업은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입항하는 크루즈관광객의 편의제공과 친수문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해군기지 기능과 국제관광을 연계한 크루즈항 기능의 조화로운 개발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크루즈터미널 조성사업은 2014년 6월 공사를 착수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귀포 크루즈터미널이 완공되면 제주 남부지역의 크루즈관광 거점지역으로 발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제주항 건설

제주항은 제주지역의 연안화물 및 국내외 해상여객 운송을 위한 핵심 교통 인프라이자, 관광 및 수산물 유통 등이 이루어지는 지역 경제의 거점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제주항에서는 2013년 10월 착수한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 신축공사'가 2015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연안화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시행중인 '제주의항 철재부두 축조공사'(2만톤급 1선석, 210m)도 2015년 3월 준공 예정으로 정상 추진 중에 있다. 또한 탐동지역의 월파피해 방지와 부족한 해양 친수공간 확보를 위하여 탐동지역에 대한 항만개발도 추진 중이다. 향후 제주항 건설이 마무리되면 제주경제 발전의 전략거점 및 국제 경쟁력을 갖춘 동북아권역의 관광 거점항만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3) 항만 재해예방사업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과 태풍 강도 증가로 우리나라의 항만 및 배후지역의 침수 피해가 우려되며, 항내 정온도 확보를 위해 항만 외곽에 축조한 방파제는 설계파고 증가로 인해 취약성이 대두됨에 따라 항만시설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재해에 대비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재해취약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2011년)하고, 단계별 보강 계획에 따라 2030년 완료를 목표로 2012년부터 사업을 시행 중에 있다. 침수피해 방지사업은 마산항 구항 방재언덕 사업 외 4개 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1단계로 2020년까지 10개 항만을 완료하고 이후 2030년까지 22개 항만을 완료할 계획이다. 설계파고 증가에 따른 방파제 보강사업은 2014년까지 18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여수항 동방파제 등 9개소를 추진 중으로 2020년까지 71개소를 완료하여 재해에 안전한 항만을 구축할 계획이다.

(4) 항만 친수시설 조성사업

'항만친수공간'이란 항만구역 내에 존재하는 개방적인 수변공간으로서, 시민들의 상시 접근이 가능한 여가공간으로 해상구역과 육상구역을 포함하는 공간을 말한다. 광양항, 마산항, 목포항, 제주 성산포항 등에 항만친수시설을 조성하여 국민들에게 편의시설 제공 및 해양관광지로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2014년도에 약 7,000백만원을 투입하여 친수시설을 조성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친수시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5) 부산항 특화 개발

부산항 신항에 전용터미널을 단계적으로 40선석까지 확충하고 자동차 등 다목적부두(5선석)도 수요에 맞춰 개발하여 2015년 5월 기준 '권'부두 21선석(923만TEU), 잡화 1선석, 자동차 1선석을 운영 중에 있으며, 트리거 룰(Trigger Rule)을 적용하여 부두 조성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북항과 동반성장을 도모하고, 선박대형화에 대비하여 18,000TEU급 이상 선박의 상시 입·출항이 가능하도록 2017년까지 신항 항로 수심을 17m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북항의 기존부두를 도심 속 해양 문화관광 인프라 창출을 위해 부산 북항 재개발사업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6) 광양항 특화 개발

광양항은 깊은 수심(최대 41m), 인공 방파제 없이도 정온수역 확보가 가능하고, 양호한 조수 간만의 차(3.8m) 등 천혜의 조건을 갖춘 항만이나, 배후산업기반과 항만 연관산업 취약 및 정기항로 부족 등으로 항만시설 능력 대비 물동량 처리실적이 미흡(2014년 234만 TEU 처리)함에 따라 광양항 활성화 대책(2012년 2월)을 수립하여 1~2번 선석 기능전환('권'→일반) 등 복합물류거점으로서의 실질적 활성화 대책을 추진 중이다. 또한 국·내외 해운·항만 물류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광양항의 경쟁력과 가능성을 바탕으로 광양항만의 특화된 발전 전략과제를 발굴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광양항 특화 발전전략 수립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

(7) 울산항 특화 개발

울산항을 동북아 오일허브 거점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신항 남항 2단계 외곽시설을 지속 추진 중이며, 신항, 북항 및 남항지역에 유류부두 7선석 및 2,840만 배럴 규모의 저장시설 등 오일허브 구축사업계획을 수립하여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2014년 남항 2단계 외곽시설 중 2013년 12월 착공된 남방파제 2-1공구(900m)를 2017년 완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하였으며, 오일허브 1단계(하부시설) 사업 또한 2017년 상

반기 완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 중이다.

2015년에는 남방파제 2-1공구에 이어 2-2공구 추진을 위한 기초조사용역을 시행하고 북항 및 남항 방파호안을 연말 착공할 예정이며, 오일허브(2단계)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뢰하여 사업 추진 타당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8) 인천항 특화 개발

인천항은 수도권 산업단지 수·출입 지원 및 유통기지 역할 강화와 對 중국교역 거점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 ‘컨’ 부두를 2015년까지 6선석, 2020년까지 12선석(최대 4천TEU급) 건설하고 ‘컨’ 대형선박(8천TEU급) 유치를 위한 항로증심(14→16m)을 2015년 착수하여 2017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신항 개발을 추진 중이다. 내항 및 남항지역 항만공간의 해양관광산업 발전 거점화를 위해 시민 친수공간(내항 1·8부두) 및 크루즈·국제전용부두 확보(남항) 사업을 2012년에 시작하여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컨’ 부두 개장에 따른 부족한 복합물류단지 조성 및 국내·외 기업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 항만물동량 창출을 위해 항만배후단지(1단계) 조성사업을 2015년 설계에 착수,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9) 연안항 인프라 개선

용기포항, 연평도항, 대천항 등 17개 연안항에 대한 어선접안시설, 여객교통시설, 외곽시설 등 주민 생활편의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 중이며, 2013년 국가관리연안항 기본계획이 수립·고시됨에 따라 연안항 중 11개 항만에 대해서는 국가안보, 영해관리, 선박대피를 위해 국가에서 직접 개발·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4. 교통·물류 원활화 지원

(1) 교통물류 원활화(BRT구축)

간선급행버스체계(BRT : Bus Rapid Transit)는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기존의 버스체계에 철도시스템의 운영 도입으로 통행속도, 정시성 등의 서비스를 지하철 수준으로 향상시킨 저비용·고효율의 새로운 대중교통시스템이다. BRT가 도입될 지역의 범위에 따라 2개 시·도 이상을 연결하는 광역BRT와 단일 도시에 구축되는 도시BRT로 구분하고 있다.

2005년도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특히 2011년도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광역BRT사업의 재정지원 근거를 별도로 마련하였다. 2014년도에는 효율적인 BRT 구축을 위해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광역BRT는 2014년까지 국비 579억 원을 지원하여 2011년 3월 경기 하남~서울 천호(L=10.5km), 2013년 7월 인천 청라~서울 강서(L=19.8km) 구간을 개통하였으며, 세종시와 연결되는 대전 대전역~와동IC(L=11.51km) 구간은 2016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다. 도시BRT는 2014년까지 국비 277억원 지원하여 서울·경기 지역에 30.5km를 개통하였으며, 현재 서울·부산에서 22.7km 구간을 공사 중에 있다.

BRT 개통 결과, 버스통행속도 증가 및 정시성 확보 등 버스서비스의 고급화로 버스이용객이 증가하였으며, 버스이용객의 만족도도 상당히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2)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

화물차의 주차시설 부족으로 도로변, 주택가에 불법 주차 문제가 심각하여 인근 주민의 민원제기와 교통사고 발생 등이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고 영세한 화물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04년에 '화물차 공영·공동차고지 확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고, 2014년에는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종합계획'을 보완 수립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다.

2005년 2개 지역(대구, 제주)에 지원을 시작으로 2014년까지 11개 시·도 21개 지역(부산 노포·회동,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진곡·서구, 강원 춘천, 전북 고창·정읍·남원·전주, 전남 광양·순천·목포·강진·나주, 경남 진해·거창·진주, 제주)에 1,461억원을 지원하였다. 2009년 3월 제주에 공영차고지가 준공된 이후 2014년에는 3월 광주 진곡 등 10개소를 준공·운영 중에 있다. 2015년에는 전북 전주, 대구 신서 등 신규사업을 포함하여 총 12개소에 290억원을 지원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제2장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제1절 일자리 창출 중심의 지역대표산업 육성

1. 일자리 창출 중심의 지역산업 육성

(1) 지역특화산업육성(주력산업육성)

정부는 1995년을 기점으로 기술혁신센터(TIC), 지역협력연구센터(RRC) 및 1997년 시범테크노파크 조성·운영사업을 지원함에 따라 지역산업육성사업을 본격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들 사업은 당시 국가주도의 산업기술정책 차원에 초점을 맞추어 온전한 지역산업정책으로 평가하기엔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이후 지역산업의 자립화를 실현하기 위해 2003년 국가균형발전 '3대 원칙' 하의 '7대 과제' 중 하나로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을 선정·지원하게 되었으며,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과 지자체연구소육성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지역 대학의 강점분야를 대상으로 지역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는 중장기 성장엔진 육성을 위해 1995년부터 추진 중인 지역혁신센터조성사업을 2010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으로 통합 추진하였다.

표 2-2-1 지역별 주력산업분야

지역	주력산업	지역	주력산업
대전	무선통신융합 , 로봇자동화, 금속가공, 바이오, 지식재산서비스	대구	스마트지식서비스 , 스마트분산형에너지, 정밀성형, 소재기반바이오헬스, 의료기기
충남	디스플레이 , 자동차부품, 인쇄전자부품, 동물식약, 디지털영상콘텐츠	경북	디지털기기부품 , 모바일융합, 에너지소재부품, 성형가공, 기능성바이오소재
세종	자동차부품, 바이오소재	부산	디지털콘텐츠 , 지능형기계부품, 조정밀융합부품, 금형열처리, 바이오헬스
충북	바이오의약 , 반도체, 전기전자부품, 태양광, 동력기반기계부품	울산	에너지부품 , 정밀화학, 조선기자재, 자동차, 환경
광주	디자인 , 스마트가전, 초정밀생산가공시스템, 생체의료용소재부품, 복합금형	경남	항공 , 기계소재부품, 지능형생산기계, 풍력부품, 항노화바이오
전남	석유화학기반고분자소재, 에너지설비, 금속소재·가공, 바이오식품	강원	웰니스식품 , 세라믹신소재, 스포츠지식서비스
전북	건강기능식품 , 기계부품, 복합섬유소재, 해양설비기자재, 경량소재성형	제주	물융합 , 관광디지털콘텐츠, 청정헬스푸드, 풍력·전기차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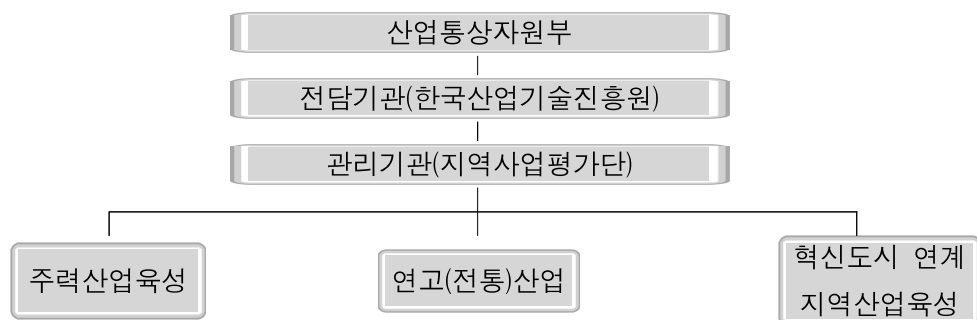
* 굵은 글씨 : 시도 특화발전프로젝트 해당산업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원하던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은 1999년부터 광역 시·도차원에서 추진된 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이 종료(2012년)됨에 따라, 지역 내 기술 개발, 기업지원, 거점기관운영지원(지역정책기획·기업지원)에 대한 수요를 흡수하여 新 특화산업육성사업으로 개편·추진되었다. 개편된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은 기존의 지역 연고산업육성사업, 지역혁신센터조성사업, 지자체연구소육성사업을 유지하되, 지역별 수요와 집적도, 특화도 및 육성의지를 반영하여 선정된 시·도 단위의 주력산업 분야의 기술개발, 기업지원사업을 추가함에 따라 기존의 지역산업 정책으로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구조로 추진되고 있다.

또한,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은 2014년도 지역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지역 기업 간의 연계지원을 통해 지역 성장거점을 구축하기 위한 ‘혁신도시 연계 지역산업 육성사업’과, 기존 시·군구 단위 지원사업과 함께 지역행복생활권 단위 경제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풀뿌리기업육성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였다.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은 중앙-지역 간 협업을 통해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이 지역 성장의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처-전담기관-관리기관-수행기관으로 이어지는 유기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2014년 3월 ‘2014년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였고, 이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 결과, 기술개발 495개(857억원) 과제, 기업지원 131개(641억원) 과제, 지역연고산업육성 72개(468억원) 과제, 지역혁신센터조성 28개(154억원) 과제, 지자체연구소육성 8개(25억원) 과제, 풀뿌리기업육성 22개(110억원), 혁신도시 연계 지역산업육성 24개(60억원) 과제를 비롯해 총 838개(2,576억원) 과제를 지원하였다.

그림 2-2-1 지역특화산업육성 추진체계



주된 성과로, 2014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의 전체 신규고용 인원은 총 5,489명이었으며, 지원 R&D 기업의 매출증가액은 전년도 3,814억원에서 2014년 5,312억원으로 크게 향상되었다. 이 외에도 특허 출원 965건, 등록 369건, 시제품 제작지원 1,054건, 기술인증 216건 등 지역산업의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함에 따라 지역 내 부가가치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2) 경제협력권산업육성(R&D)

정부는 시·도 간 자발적 협력을 통해 구성된 경제협력권 내 핵심 대표산업을 육성하여 일자리·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2015년부터 경제협력권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3년 7월 'HOPE 프로젝트'에서 인위적 광역경제권을 탈피하여 자율·협력·융합에 기초해 지역산업을 육성기로 결정한 이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2014년 1월)으로 제도 정비를 완료하고 경제혁신3개년계획(2014년 2월)을 통해 시·도 간 협력사업을 선정·지원기로 결정하였다. 제1차 지역경제위원회(2014년 3월)의 의결을 거쳐 14개 시·도간 자율협의를 통해 산업생태계를 반영한 총 16개 경제협력권(시·도별 3개 이내)이 선정되었다.

표 2-2-2 시·도 경제협력권산업 선정결과(16개)

협력산업	협력권		협력산업	협력권	
	주관	참여		주관	참여
① 조선해양플랜트	경남 부산	전남 울산	⑨ 이차전지	충남	충북
② 화장품	충북	제주	⑩ 기능성 화학소재	대전	충남
③ 의료기기	강원	충북	⑪ 지능형기계	경북	대구, 대전
④ 기계부품	충남	세종	⑫ 에너지부품	광주	전북
⑤ 광·전자융합	광주	대전	⑬ 바이오활성소재	전남	전북, 강원
⑥ 기능성하이테크섬유	대구	경북, 부산	⑭ 자동차융합부품	경북	대구, 울산
⑦ 친환경자동차부품	전북	광주	⑮ 차량부품	부산	경남
⑧ 휴양형MICARE	제주	강원	⑯ 나노융합소재	울산	경남, 전남

동 사업은 비수도권 14개 시·도를 대상으로 2~4개의 시·도가 1개의 협력산업을 선

정하여 공동 육성하는 16개 경제협력권으로 구성된다. 협력권 내 산업생태계 육성 및 지역 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 분야 기업에게 기술개발 및 기업지원서비스(역량강화·시제품제작·디자인·시험인증 등)를 병행 지원할 예정이다.

R&D과제는 협력산업별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유망품목의 개발·사업화를 위해 전·후방 연관기업들이 역할분담을 통해 동시적으로 연계 추진해야 할 R&D과제를 패키지로 지원하게 된다. 5개 내외의 연관 기업이 참여하는 비즈니스협력형 과제와 2~3개의 협력기업(기관)의 지역협력형 과제,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지역주도형 과제로 구분된다. 비R&D과제는 협력산업권 전·후방 연관 기업에 대해 효과적인 기업지원을 추진하고 협력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함으로써 R&D 지원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추진되며 지역협력형과 지역주도형으로 구분된다. 2015년에는 총 1,691억원(R&D 1,234억원, 비R&D 457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제협력권사업을 통해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매출, 수출, 부가가치가 확대되고 지역의 기술혁신형 강소기업을 육성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아울러 이에 기반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표 2-2-3 사업 유형별 추진방안

유형	지원방법	내용	매칭비율
R & D	비즈니스협력형	산업생태계 조사, 수요조사 등을 통해 발굴한 비즈니스협력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유망품목의 개발·사업화 (지원규모) 연차별 과제당 10억원 내외 (지원기간) 과제당 3년 이내 (지원방식) 지정공모형	국비 100%
	지역협력형	지역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통해 고용 (지원규모) 연차별 과제당 4억원 이내 (지원기간) 과제당 3년 이내 (지원방식) 지정공모 + 자유공모	국비 100%
	지역주도형	지역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통해 고용 (지원규모) 연차별 과제당 4억원 이내 (지원기간) 과제당 3년 이내 (지원방식) 지정공모 + 자유공모	지방비 100%
비 R& D	지역협력형	협력산업 관련 타겟 기업군 중심으로 지원하 (지원규모) 기업수요에 따른 합리적 예산규모 (지원기간) 과제당 3년 이내(연차협약)	국비 100%
	지역주도형	고, 전후방 연관기업에 대한 포괄지원 (지원내용) 기술지원/사업화지원/역량강화 (지원방식) 지정공모 + 자유공모	지방비 100%

(3) 감성터치플랫폼

애플의 아이폰, 아이패드 등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터치산업”이 2010~2011년 IT산

업계의 최대 관심 분야로 대두되고, 스마트폰, 태블릿 등이 급성장함에 따라 감성터치 등 차세대 입력 디바이스 시장은 급속도로 성장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핵심기술의 선제적 개발이 긴요해지고 있다. 우리나라 휴대폰 및 디스플레이 등 출력산업은 세계 1위이나, 터치 패널 등 입력디바이스 산업은 극도로 취약한 상태이다. 이에 감성터치 산업육성을 통해 디스플레이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 및 응용분야 확대를 바탕으로 신산업 주도권을 선점할 필요가 있으며, 디스플레이 등 출력 디바이스 대비 경쟁력이 취약한 입력 디바이스(터치센서 등) 분야 핵심기술 개발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

감성터치플랫폼개발 및 신산업화지원사업은 기반조성분야와 기술개발분야 과제지원을 통해 세계 2위 감성터치 산업국 진입 초석을 마련하고자 한다. 감성터치 IT 융합분야의 글로벌 기술수준 확보를 위하여 기반구축 및 기술개발과제로 2011년에는 3개 과제 20억원, 2012년에는 10개 과제 105억원, 2013년에는 12개 과제 123억원, 2014년에는 19개 과제 211억원을 지원하였다. 특히 2014년 6월에는 기반조성사업인 감성터치산업기술지원센터가 완공되었으며, 터치모듈생산을 위한 터치 부품·소재의 상용화 제품 개발을 대대적으로 지원하여 터치·소재 관련 기업이 대규모로 분포되어 있는 지역산업의 성장과 동시에 중소기업의 매출 증가에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많은 사업화 실적인 나타났다(특허출원 34건, 특허등록 8건, 사업화 매출액 261억원, 고용창출 58명).

앞으로도 소재→부품→디바이스→알고리즘(control IC)→응용 제품(컨텐츠 포함)에 이르기까지 상호기술 연관도가 매우 높아 Supply chain의 기업 동반성장을 유도하고,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기술/시장경쟁력을 보유한 출력 디바이스(모바일, 디스플레이, IT응용기기 등)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자 한다.

(4) 그린전기자동차 차량부품개발 및 연구기반 구축사업

울산광역시시는 2013년도 기준 전국 자동차산업 생산의 20.9%, 부가가치 21%를 담당하는 국내 자동차산업 메카이며, 세계적인 규모의 자동차산업 단지이다. 자원의 고갈과 세계적인 환경규제의 강화에 따라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은 친환경차량으로 급속도로 변모 중이다. 이에 대응하여 일본, 미국, 중국, 유럽 등 각국은 전기자동차 개발

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산업구조의 변화는 기존 자동차부품업체들의 미래성장과 직결되는 생존문제이므로, 향후 본격적인 시장전개가 예상되는 전기자동차 산업을 집중 육성해서 세계적인 흐름에 대응할 계획이다.

그린 전기자동차 차량부품개발 및 연구기반 구축사업은 전기자동차의 주행거리 제한을 극복하기 위해 자가발전기를 탑재한 장거리주행 전기자동차(RE-EV, Range Extended Electric Vehicle) 핵심부품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RE-EV 전용의 구동계, 엔진발전기 및 에너지관리 시스템, RE-EV 전용 차체, 전장 및 주행제어 부품 등 핵심부품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산학연 공동연구와 전기차 부품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그린카 기술센터를 건축해서 전기자동차 분야의 시험평가/인증을 수행할 수 있는 연구기반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2011년 9월에 사업을 시작해서 2013년까지 8개 기술개발과 1개 기반조성사업 진행하였으며, 2014년에는 3개 기술개발 신규과제를 추가해서 RE-EV용 구동계, 고효율 엔진발전기, 전용 차체샤시, 에너지관리시스템, 통합플랫폼 등 11개 핵심부품 개발을 지원하였다. 기반조성사업으로는 울산광역시에 그린카 기술센터 건축을 진행 중으로, 2013년 10월에 착공해서 2015년 10월에 건립을 완료할 예정이다. 연구개발 사업에는 DH홀딩스 등 34개의 중소·중견 부품기업과 17개의 연구소 및 대학 등이 참여하고 있다. 2014년까지 특허출원 및 등록 70건, 논문 44편, R&D 인력 고용창출 462명의 직접 성과를 도출한 바 있으며, 개발이 완료되는 2016년부터 본격적인 사업화 성과가 기대된다.

정부는 2016년까지 그린 전기자동차 핵심부품 개발 지원을 통해 장거리 주행 전기자동차 핵심부품을 상용화해서 향후 전기자동차 부품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그린카 기술센터 건립을 통해 전기자동차 분야에 특화된 공동연구·시험평가·품질개선·상용화 및 실증평가에 이르는 세계적 수준의 일괄지원체계를 확보함으로써 전기차 분야의 강소 중핵기업을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 동물약품 허브조성사업

국가 동물약품 산업 규모는 2014년 기준 약 5,839억원으로 타 사업 대비 큰 규모는 아니나, 전년대비 7% 성장하는 등 지속적인 발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07년

부터 2014년의 기간 동안 연평균 22%의 수출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4년 현재 수출 1억 8천 백만 달러(2011년 1억 달러)를 달성하는 등 수출 유망 산업으로 각광 받고 있다. 또한, 최근 개발도상국의 생활조건 향상에 따라 육류 소비증대, 반려동물 시장 확대 등에 따라 동물약품 산업 시장이 커지고 있어, 관련 시장 선점이 중점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를 위해 선진국 수준 동물약품 개발 및 상용화를 통한 주요 수출 시장 선점이 절실하지만, 국내에는 대부분 동물약품 기업이 영세하여 자체 연구 개발 시스템을 투자/운영할 역량이 부족한 실정이다.

동물약품허브조성사업은 수출 주도형 동물약품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산·학·연·관 R&D 지원 체계 구축, 동물약품 원료의 연구개발과 시험생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 고기능성 상용화 촉진 등 동물약품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One-Stop 지원시스템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3년 9월부터 2016년 8월까지 3년간 국비 90억원, 지방비(충남도, 예산군) 100억원, 민간부담금 76억원 등 총 266억원을 투입하여 동물약품 원료 시험생산 기반 구축 1건과 동물약품 원료 연구개발 2건을 수행 중에 있다. 기반구축사업은 (재)충남테크노파크 주관으로 2013년 9월 사업에 착수하여, 동물약품 원료 중 합성원료와 발효/천연물원료를 국제기준(euGMP)에 맞추어 시험생산이 가능한 시험생산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2013년 후보 부지 확보를 완료하였으며, 2014년 원료의약품 시험생산 설비에 대한 디자인 개발 및 설계를 완료하고 2015년 5월 착공하여, 2016년 5월 이내 완공을 목표로 건축을 추진 중에 있다.

기술개발사업은 (주)고려비엔피, (주)코시스바이오 2개 동물약품 중소기업과 1개의 연구소, 2개의 대학이 참여하여, 천연허브 기반 원료와 DDS 기반 합성 원료 기술개발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6년 개발을 완료하여, 사업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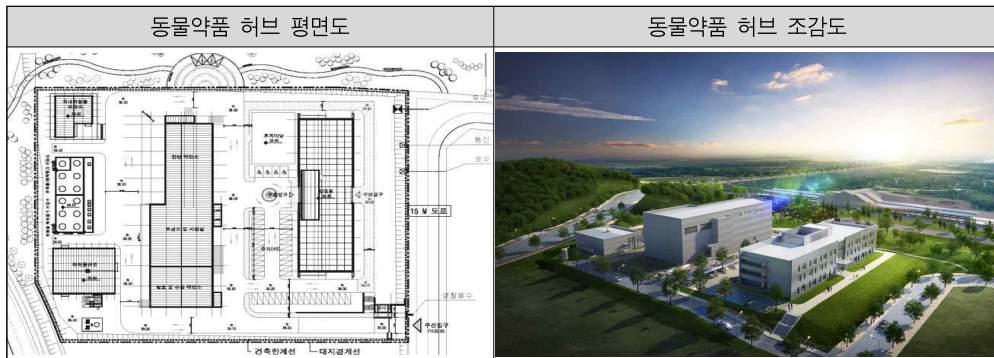
본 사업은 기반구축을 포함한 사업으로 기반시설이 완공되는 2016년 이후부터, 본격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예측되지만, 시험생산 시스템의 연내 조기 시가동을 통해 고용창출, 사업화 매출액 등 주요 지역 발전성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표 2-2-4 동물약품 허브 2014년도 목표치 및 달성결과

성과지표	목표치	달성치(단위)
건축공정률(%)	30%	30%
특허출원(건)	3건	3건
사업화고용창출(명)	1명	3명

향후 동물약품허브의 국제기준 확보를 통한 관련 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으로 국내 동물약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수출시장 확대로 수출 주도형 산업으로의 변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2-2-2 동물약품 허브 평면도 및 조감도



(6) 디자인 융합 Micro-모빌리티 신산업 생태계 구축

미래사회에는 환경문제, 거대도시화, 사회고령화 등과 같은 지금까지 경험할 수 없었던 생소하고 광범위한 파급효과를 초래하는 사회현상과 맞서 지혜롭고 효율적인 대응책을 제시해야만 한다. 불과 향후 10년 이후인 2025년에는 전 세계인구의 65%가 대도시에서 집중될 전망이다. 이는 인구 1천만 이상 거대도시가 2010년 22개에서 2025년 30개 이상으로 늘어날 것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인구의 도시 집중 현상과 더불어, 전통적인 4인 가구에서 1~2인 가구로 가구유형 변화도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며, 거대 도시화에 따른 교통 혼잡이나 주택문제 등은 실로 그 속도를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이동수단 부문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사회 환경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적이고, 소수의 탑승자를 이동하기에 최적화된 신개념 근거리 이동수단 개발과 新산업 생태계의 조성이 꾸준히 요구되고 있다.

Micro-모빌리티를 포함하는 다양한 개인용 이동수단 시장은 2013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10.7% 이상 꾸준한 성장이 예상되며, 특히 Micro-모빌리티의 경우 연평균 38.5% 수준의 급속한 성장이 기대되어 2018년까지 세계시장 50만대 수준으로 예상된다. 특히, 저속전기차 등 현재까지 환영받지 못했던 관련 중소·중견 핵심부품 업체들

이 생태계 주인공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임을 고려할 때, 그 파급효과는 매우 크다 할 수 있다. 국내의 경우, 기존 완성차 업체를 제외한 1~2인용 전기구동 운송수단 (세그웨이, 전기자전거, 전기이륜차, 3·4륜 Micro-모빌리티 등) 관련 국내 중소·중견 부품업체가 약 130개 이상 존재하며, 저속전기차 완성차 업체를 포함한 10개 이상의 완성차 업체들, 그리고 그들과 유사한 잠재력을 보유한 다양한 중견기업들이 新산업 생태계에 참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현실이다.



성공적 Micro-모빌리티 新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i) 高 신뢰성 Micro-모빌리티 및 핵심부품 개발, (ii) 핵심부품 평가·인증 지원을 위한 장비구축, (iii) 중소·중견기업의 연구개발 및 평가 등 전주기적 one-stop 지원 센터의 구축이 필히 요구되며, 마지막으로 (iv) Micro-모빌리티의 효율적 보급·확산을 위한 법·제도 개선안 도출 및 제도적 지원이 핵심적 요소라 할 수 있다.

연구개발은 2014년 9월부터 시작된 4륜 Micro-모빌리티 및 핵심부품 개발은 중견기업인 (주)DY를 중심으로 6개의 중소기업, 2개의 비영리 연구소, 1개의 대학 등이 참여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2015년 3분기부터는 신규 과제로서, 3륜 Micro-모빌리티 개발이 추가 진행될 예정이다. 高신뢰성 핵심부품 개발을 위한 평가·인증 인프라 구축은 모두 3년에 걸쳐 14종이 전남 영광군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 內 사업지(자동차

부품연구원 E-모빌리티연구센터)에 설치될 예정이다. 1차년에는 Micro-모빌리티 디자인 및 설계 지원, 2차년에는 핵심부품 성능 및 인증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며, 마지막인 3차년에는 핵심부품 및 Micro-모빌리티 신뢰성 고도화를 위한 장비가 구축될 예정이다.

연구동 및 시험동의 E-모빌리티연구센터구축은 본 사업 중 기반구축부문의 주관기관인 자동차부품연구원과 공공성 기반 건축 위수탁수행기관인 전남개발공사가 각 기관의 전문지식을 융합, 미래지향적 구성으로 추진 중에 있다. 한편, 법·제도 개선을 위해 개발 중인 Micro-모빌리티의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 확대 및 관련 업체의 투자결정 등에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서 한국교통연구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부처 전문기관 및 Micro-모빌리티 개발 업체, 대학 등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다.

유럽은 UN/ECE 규정을 근거로 L6e 또는 L7e 등급에 Micro-모빌리티를 분류함으로써, 법·규제를 완화하여 조기 활성화가 가능토록 하고 있으며, 일본은 새로운 차량 등급인 ‘초소형 모빌리티’를 새롭게 제정하여 일본 내 도로 주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비해 국내에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를 위해 차량 등급 정의, 차량 등록 및 법제도 정비, 보험 및 면허제도, 자동차관리법 및 시행령 개정 등에 대한 검토가 시급하다.

(7) 로봇산업클러스터조성사업

2013년도 세계 로봇시장 규모는 전년대비 4.1% 성장한 147.8억불(2012년도 133.3억불)로 추산되며, 연평균(2007~2013년) 10%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국내 로봇시장 또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로봇산업은 4대 로봇분야 기준 2013년 생산액이 2조 2,210억원으로 초기 시장진입기에서 확대·발전하고 있는 추세이다.

정부는 로봇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2008년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촉진법’을 제정하고, 2009년 ‘제1차 지능형로봇기본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아울러, 같은 해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계획’을 통해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산업 중 하나로 로봇산업을 지정하여 육성책을 강화하였다. 로봇수요의 쏠림 산업 확대 및 개방형 로봇산업 생태계 조성, 선택과 집중을 통한 로봇 R&D 종합역량 제고를 위해

2014년 7월 제2차 지능형로봇기본계획'을 수립·발표하였다.

정부는 그동안의 정부육성정책을 토대로 로봇산업을 주력산업화하기 위하여 특화육성분야 선정과 집중지원을 통해 로봇산업 성장을 견인하고, 로봇융복합 기술을 활용한 전후방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로봇산업클러스터조성사업을 2012년 착수·추진하였다.

표 2-2-5 국내 로봇시장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생산액	구성비(%)	생산액	구성비(%)	생산액	구성비(%)	생산액	구성비(%)
제조업용 로봇	1,411,076	71.5	1,647,894	70.7	1,618,410	71.5	1,695,849	70.0
전문서비스용 로봇	99,472	5.0	68,236	2.9	35,510	1.5	37,797	2.0
개인서비스용 로봇	171,687	8.7	239,418	10.3	295,896	13.1	265,056	11
로봇 부품 및 부분품	102,566	5.2	190,878	8.2	182,895	8.1	222,337	9.0
소 계	1,784,801	90.4	2,146,426	92.1	2,132,711	94.2	2,221,039	92.0
로봇시스템	116,888	5.9	159,632	6.9	114,103	5.0	168,313	7.0
로봇임베디드	2,307	0.1	1,696	0.1	4,034	0.2	1,175	0.1
로봇서비스	70,211	3.6	22,627	1.0	13,229	0.6	16,134	0.9
총 계	1,974,207	100.0	4,454,180	100	2,264,078	100	2,406,661	100

자료 : 2014년 로봇산업실태조사, 산업통상자원부

로봇산업클러스터조성사업은 로봇융합 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조성사업과 중소제조·사회안전·의료·부품모듈 상품화 등 4개 분야 상용화 기술개발 과제지원을 통해 로봇산업 R&BD허브를 구축하고 산학연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국가 로봇융합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기반조성사업의 경우 1차년도 부지매입, 기본계획수립 및 설계, 2차년도 공사 입찰을 통한 사업자 선정, 센터 착공(2013년 12월)을 거쳐 3차년도인 2015년 5월에 로봇혁신센터와 로봇협동화팩토리를 준공을 통해 집적화된 로봇환경을 조성하여, 표준시험인증센터 내 성능·신뢰성 평가 장비구축을 시작으로 센터별·연차별로 순차적으로 장비 구축을 통하여 로봇 기업의 제품개발 역량 및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잠재적 우수로봇기술을 발굴하여 로봇 전문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술사업화촉진지원사업으로서 로봇기술제품화 및 기술이전을 위한 사업화 검증 과제를 통하여 1차년도 14개, 2차년도 18개 과제, 3차년도 15개 과제를 지원하여 제품화성공비율 73.75% 달성 및 18개 과제에서 53억 6,900만원의 매출이 발생하였다.

또한 3차년도부터 추진한 로봇창업맞춤형과제를 통하여 7개사의 로봇 창업 및 로봇기업화로 로봇산업 저변을 확대하였다.

상용화기술개발 과제의 경우 1차년도 14개 과제, 2차년도 2개 과제, 3차년도 11개 과제를 추가 선정으로 총 27개 과제(2014년 1개 종료과제 포함)가 수행 중으로 동 과제를 통해 2014년 12월 기준 특허 37건, 신규고용 59명, 사업화 실적 12억 1,900만원 등의 성과를 창출하였다.

그림 2-2-3 로봇클러스터 및 로봇산업진흥원 조감도



향후 성장성이 높은 의료용로봇, 사회안전로봇, 중소제조지원로봇의 기술개발과 제품혁신을 통해 로봇기업의 글로벌 기술 및 품질 경쟁력이 향상될 것이다. 또한, 중소제조용 로봇개발 및 제품화로 뿌리산업 중소제조 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강화시키고, 메카트로닉스산업 등 전·후방 산업에 로봇기술을 융합함으로써 로봇산업의 시장 확대 및 타산업과의 융복합화가 진전될 것으로 기대된다.

(8) 산업기술거점기관지원

산업기술거점기관지원 사업은 지역의 경제·산업의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특화산업·신산업의 발굴·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 사업은 크게 기술개발과 기반조성의 두 분야로 나뉘며, 기술개발은 전국단위의 공모를 통해 선정된 지역 신산

업분야의 경쟁력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주관기관)에게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자금을 지원한다. 아울러, 기반조성의 경우에는 테스트베드, 시험인증, 기술개발지원 등 기업 지원을 위해, 대학·연구기관·TP(테크노파크) 등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부지·유희시설에 건축·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2013년도부터 '광역경제권거점기관지원사업'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된 이래, 2013년에는 국비 604억원(15개 내역사업)을 지방비와 매칭하여 지원하였다. 2014년에는 22개 내역사업에 국비 714억원을 투자하였으며, 분야별로는 기반조성 24건(센터건립 8건, 장비구축 16건)과 기술개발 5건(31개 과제)으로 분류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4개 기관은 각 내역사업을 총괄관리(기획·평가 등) 하는 전담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내역사업별 주관기관(기업·연구기관 등 총 59개 기관, 2014년 기준)은 해당 지자체와 협력하여 동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향후, 분야·성격이 다른 다양한 내역사업의 지역발전 성과를 높이고 보다 효율적인 사업관리 등을 위하여, 공통의 성과목표·지표 마련, 전담조직 구성 및 사업성과의 공유 등 포괄적인 관리·분석 시스템의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9) 수출전략형 FGCV 연구개발

미래 그린 상용차부품의 R&D 지원체계 구축 및 이를 활용한 기술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핵심부품의 세계적 공급기지화 달성을 위해 '수출전략형 미래그린상용차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상용차 산업은 환경적으로 CO₂, NO_x와 수도권 미세먼지 발생의 주원인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기술적으로 차량 및 부품에 대한 청정화, 에너지 절감 등의 분야에서 기술경쟁력확보가 필요한 산업분야이다.

수출전략형 미래그린상용차부품 기술개발사업은 2012년 7월부터 시작되었으며, 5년간 국비 1,117억원, 지방비 354억원, 민자 265억원 등 총 1,736억원을 투입하여 선진국 대비 70% 수준인 국내 상용차의 기술수준을 선진국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상용차 에너지 효율향상 기술, 친환경 동력 기술, 고안전 경량화기술 등 12개 핵심요소 기술개발과제와 이들 기술개발을 지원할 상용차에 특화된 연구기반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2012년도에는 전량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고연비 다단 자동화 수동변속기 개발 과제를 선정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상용차부품 R&D센터 및 상용차복합주행성능 실증기반 구축에 착수하여 상용차부품 R&D센터 설계 완료, 상용차복합주행성능 실증기반 설계 및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계약을 완료하였다.

2차년도인 2013년에는 상용차 보조동력 부품인 “상용차용 고마력 유압식 보조제동 장치(Retarder) 개발” 등 2개 과제를 추가로 선정하여 고부가가치 핵심부품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상용차 R&D센터 건축을 2014년 6월에 완공하고, 상용차에 특화된 대형상용차용 실차기반 전기적 적합성 평가시설 등 2개 평가장비에 대한 미래부의 장비도입심의 통과 및 계약이 완료되었다. 상용차 부품 복합주행성능 실증기반은 상용차 핵심부품에 대해 실차상태의 신뢰성과 성능평가를 수행하는 시설로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및 상용차부품 R&D센터의 착공을 수행하였다.

3차년도인 2014년에는 친환경 동력기술 확보를 위한 “대형상용차용(8L급 이상) Euro-6 규제 대응 One-Box 배기후처리 시스템 캐닝기술 개발”과제를 신규로 추가하여 총 4개 과제를 진행하였으며, 기반구축으로는 상용차부품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상용차부품 R&D센터의 준공, 복합주행성능 실증기반의 설계, 도시계획 인가고시 완료 등을 수행하였으며, 2015년 3월 착공하여 구축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향후 계획으로는 기 완공된 상용차부품 R&D센터 내 상용차 핵심부품의 국산화 및 양산화를 지원할 수 있는 시험·공동연구 장비를 연차별 계획대로 구축하여 국내 상용차부품산업을 지원하게 되고 2017년 완공예정인 상용차복합주행성능 실증시험장의 완공을 위하여 부지매입 및 운영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본 사업을 통해 유럽에 비해 열세인 상용차 산업의 국산화, 고부가가치화를 실현하여 2020년까지 상용차 세계시장 점유율 5% 이상, 수출 200억불 이상 등 상용차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개척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10) 전자의료기기부품소재

정부는 첨단의료기기산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선정하여 신서 및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과학비즈니스벨트 등의 국책사업과 원주의료기기단지, 경기, 인천 송도 등에서 지자체 차원의 의료산업육성을 추진 중에 있다. 대구·경북지역은 구미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발달된 전자산업을 기반으로 세계적인 IT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으나, 새로운 IT융합산업으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따라서 IT분야의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한 구미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대구·경북의 의료기술을 접목하여 첨단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 산업기반 조성을 통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원주의료기기 단지 등과 연계한 첨단의료기기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 경쟁거점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란 의료기기 중 전자장치 특히, 컴퓨터를 제어나 정보가공 장치로 이용하는 전자의료기기를 만들기 위하여 소요되는 핵심요소 및 자원을 의미하며, 전자의료기기 산업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확장하는 추세이다. 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 산업화기반구축사업은 2011년 9월부터 시작되었으며, 향후 5년간 국비 820억원, 지방비 270억원, 민간부담금 43.5억원 등 총 1,133.5억원을 투입하여 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 관련 기술개발사업과 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 산업 지원을 위한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상용화지원센터 및 집적생산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 의료기기 부품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생체의료기기, 의료영상기기 분야 등 5대 분야의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상용화지원센터는 (주)루셈, (주)엔디디 등 14개 기업이 입주하여 입주율이 95.3%이고, 2017년에 완공 예정인 집적생산단지는 IT 업종전환 기업 생산시설 입주, 유치된 국내외 의료기기 앵커기업 생산시설 입주, Connect형 의료기기 벤처기업 육성 지원시설, 클린룸, 멸균실 등 GMP 인증 지원시설을 구축할 예정이다.

그림 2-2-4 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 산업화 기반구축사업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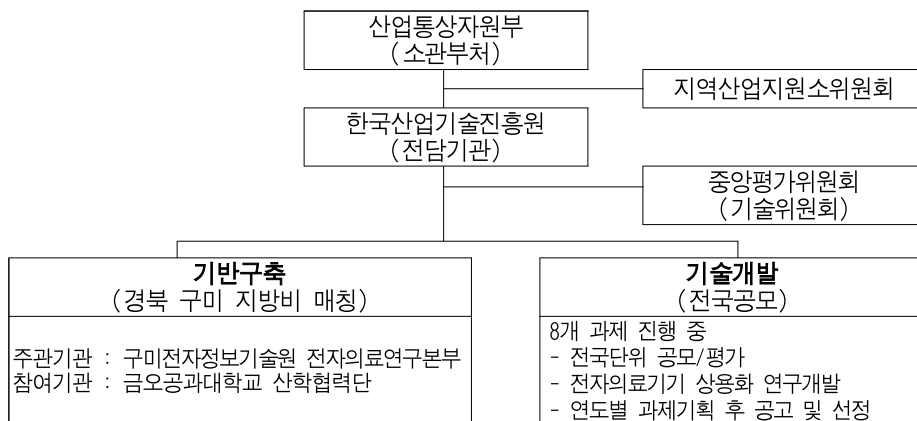


표 2-2-6 연차별 투입 예산(국비)

(단위 : 억원)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예산 투입	20	58.87	95.60	122.6	215.0

기술개발사업으로 현재 8개 과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재활훈련장비 제어 및 근전전 동역수 진단시스템” 등 총 13건의 특허를 출원하였는데, 10억원당 특허출원 실적이 3.5건으로 2013년 국가연구개발사업 10억원당 특허출원 평균 건수인 1.4건을 약 2.5배 초과하는 등 우수한 실적으로 달성하였다.

이외에도 기업 비즈니스 지원의 일환으로 국내외 의료기기 관련 전시회 참가 및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위한 구미시 독일경제사절단 파견을 지원하고, 전자의료기기 분야 전문가를 초청하여 기술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마케팅 지원은 물론 대경지역 IT업체들의 전자의료기기 산업으로의 업종전환을 유도하는데 집중하였다. 그 결과 마이크로 엔엑스, 대영오앤이 등 7개 기업이 업종다각화를 성공하여 매출액 258억원을 달성하였으며, 세아메카닉스, 동양산업 등 20개 IT기업의 업종 다각화를 진행 중에 있다.

또한, 수행사업별 성과 점검 및 확산을 위하여 워크숍, 기반조성협의회, R&D수행 기업 협의회 등을 통하여 상호 정보교류, 공동협력 방안 제고 및 성과 부진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피드백 함으로써 수행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예비타당성조사(BC 1.02, AHP 0.572)시 집적생산단지 조성에 따른 생산 편익이 전체 사업 편익의 80.5%를 차지하였으나 국비 미확보로 조성이 지연되었다. 현재 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이 진행 중이며 2017년 완공된 후에 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산업 관련 기업의 생산활동 지원을 통한 생태계 조성으로 전자의료기기 전문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1) 차부품고급브랜드화

벤츠, BMW, 아우디 같은 자동차 브랜드는 대중적인 자동차는 아니지만 남녀노소 누구나 이름만 들으면 고급차라고 인식하고 있다. 고급브랜드(프리미엄) 자동차는 단순히 고가의 자동차가 아니라 기술적 혁신성을 동반한 자동차를 의미한다. 고유가에 따른 중·대형 세단의 판매 급감에도 불구하고, 고급브랜드 자동차 판매는 연평균 5%에

육박하는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폴크스바겐그룹 영업이익의 60%를 프리미엄 자동차 브랜드인 아우디가 차지할 정도로 부가가치가 높은 시장이다.

고급브랜드 자동차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디자인과 성능, 안전, 승차감 등 모든 부분에서 뛰어나야 한다. 프리미엄 자동차 시장에서는 가격보다는 성능이 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에 있어서도 가격 경쟁력 보다는 타협하지 않는 높은 성능이 요구된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적인 자동차에서는 가격과 제조의 어려움 때문에 사용되지 않는 재료와 제조방법들이 고급브랜드 자동차용 부품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흔히 사용된다.

이렇게 개발된 프리미엄 자동차용 부품은 양산화 된 초기에는 비용과 생산성의 문제로 프리미엄 자동차에 탑재되지만 개발과 생산을 거치면서 일반 자동차에도 도입된다. 프리미엄 자동차 부품 연구개발이 결국 자동차 기술 발전을 이끌면서 자동차 산업의 밑거름이 되는 것이다.

2012년 7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차부품 고급브랜드화 연구개발사업’은 2013년 하반기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총 4년간 사업비 786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국내 자동차 부품의 질적 향상을 위해 추진되는 이 사업은 전남 영암에 위치한 F1경주장을 활용해 프리미엄 차량용 고부가가치 핵심부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과 개발된 부품들을 시험, 평가하는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타이어, 휠, 제동 등 3대 부문 고부가가치 연구개발 핵심 부품 5종 개발사업과, 이를 위한 센터 건축 및 장비 구축, 평가 기법 확보 등의 기반 조성 사업도 동시에 진행 중

에 있다. 특히 F1 서킷을 활용한 극한 성능 평가가 이뤄져 현재 대부분 해외에서 이뤄지고 있는 성능시험 비용이 크게 절감되고 국내 자동차 부품 관련 기업들이 프리미엄 자동차 부품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사업이 완료되면 개발된 국산 자동차 부품을 프리미엄 차량과 모터스포츠 차량에 우선 적용하여 국내 부품업체들의 브랜드 인지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F1 경주장 인근에 연구 기반시설을 구축함으로써 영암 F1 서킷의 활용도를 극대화해 전후방 연관산업 유치를 통해 많은 일자리도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12) 차세대건설기계부품특화단지

건설기계산업은 자본집약형, 수출지향형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후방 연계 발전과 고용창출 효과가 큰 전략산업이다. 건설기계산업은 기계산업의 수출 견인, 세계 건설기계·부품 시장은 연평균 5.4%로 지속 성장하고 있으며, 세계 건설기계 시장규모는 2015년에 1,711억 달러로 조선, 공작기계의 2배 규모 산업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다.

세계 건설기계·부품시장에서 국가 정책적인 적극 지원을 받고 있는 중국의 해외시장 진출 가속화에 따른 조기대응을 통해 건설기계·부품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및 해외시장 점유율 지속적 확대가 시급하다. 2013년 한국과 중국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각각 5.0%와 14.4%로 2002년(2.7%와 1.6%)과 비교해 중국은 9배의 급성장을 하였지만, 한국은 1.8배의 저조한 성장을 보이고 있어, 성장 및 수출 동력화를 위해 완제품·부품의 고품질화, 연관산업 집적화 및 기술기반 구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차세대 건설기계부품 특화단지조성사업은 친환경적이며 저비용 고효율, 지능형 장비 생산을 위해 건설기계부품의 주력산업화를 통한 전략적 특화단지 조성 및 대용량 유압 기술 등 핵심기술 개발, 통합 시험·인증·연구 인프라 구축을 통해 국산화율을 현재 30~50%에서 2020년에 70%이상으로 제고하고, 2020년 생산 493억 달러(세계 4위) 달성 및 대기업 10개사, 매출규모 1조원 이상의 중견기업 완성차 25개사, 중소 부품기업 500여개사를 육성하고자, 2012년도부터 국비 1,334억원과 지방비 423억원, 민자 7,094억원 등 총 8,851억원을 투자하여, 경산지식산업지구 내 종합실차시험장 및 시험평가

센터 건축과 실차시험장비 및 분석장비 구축, 건설기계부품 기업전문단지 구축 그리고 건설기계부품 핵심기술개발로 구성되어 있다.

본 사업의 핵심과제는 건설기계부품 기업 실수요 중심의 시설·장비 기반구축을 통한 활용극대화 시스템 구축과 국내외 건설기계전문기업의 특화단지 내 입주 유치라 할 것이다.

2014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건설기계부품 특화단지 활성화를 위한 기업전문단지 내 입주기업 유치를 위해 국내외 전시회 참가 및 정기적인 기업방문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2013년 하반기에 추진된 기술개발과제에서 대용량 유압기술, 지능형제어기술 등 전략핵심기술개발 4개 과제를 지원하여 국내외 특허출원 6건, 고용창출 3명의 성과를 2014년에 창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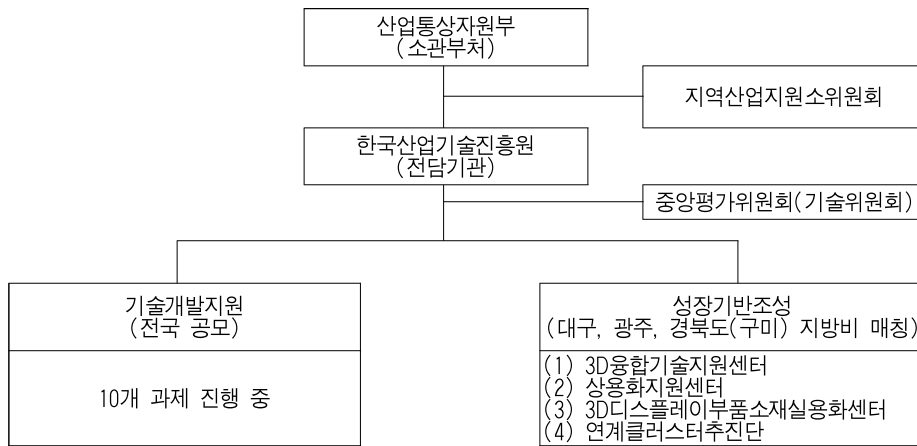
2015년에는 융복합센터 및 종합실차시험장을 착공하고, 국내외 전시회, 기술교류회, 세미나 등을 통한 기업유치 활동 추진, 대용량 유압기술, 지능형제어기술 등 전략핵심 기술개발 통해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계획이다.

(13) 초광역연계3D융합산업

초광역연계 3D융합산업 육성 사업은 영상산업(영화, 방송 등) 및 영상기기(3D TV 등)에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3D기술을 다양한 산업에 적용함으로써 3D기술을 기반으로 한 신제품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3D융합 신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입체감, 사실감, 현장감을 제공하는 3D기술을 활용하여 의료기기, 자동차, 로봇, 콘텐츠, 엔지니어링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개념의 제품과 기술혁신을 도모하고자 추진되고 있다.

특히, 국내 IT산업 최대 집적지인 대구, 경북과 광산업 집적지인 광주의 역량을 결합하여 서로 다른 기술 및 산업 역량을 효과적으로 결합함으로써 각 지역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상호 보완적 연계클러스터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대구 경북의 소프트웨어 기술과 광주의 광학 기술을 결합하여 새로운 개념의 제품 개발 등을 추진하는 등 지역 간 협력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림 2-2-5 초광역연계 3D융합산업 육성 사업 추진체계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구, 광주, 경북(구미)에 각각 지역 거점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공동의 성과 창출 및 전문인력양성, 글로벌 기술교류의 활성화를 위해 공동으로 연계클러스터추진단도 운영하고 있다. 또한, 3D융합기술의 취약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핵심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한 기반기술 개발 및 중소·중견기업의 제품화 역량강화를 위한 시장선도형 기술개발도 지원하고 있다.

본 사업은 2010년 발표된 범부처 차원의 「3D산업 발전전략」을 기초로 해서 2011년 10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함으로써 실시가 확정되었다. 2012년 7월에 사업이 착수된 이후, 5년간 추진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 예산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표 2-2-7 연차별 투입 예산(국비)

(단위 : 억원)

연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예산 투입	90	193	257.3	360

2014년도 현재 10개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3건의 국내외 특허를 출원하였는데, 10억원당 특허출원 실적이 6.8건으로 2013년 국가연구개발사업 10억원당 특허출원 평균 건수인 1.4건을 약 4.8배 초과하는 등 우수한 실적을 달성하

였다. 특히, 본 사업의 지원 금액 10억원당 해외특허 출원 실적도 1.5건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균인 0.3건을 5배 초과하여 3D융합산업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2014년도 기술개발 결과의 사업화 실적도 13건으로 정부지원금 10억원당 3.8건을 달성하였으며, 이것은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균 실적인 0.9건을 크게 상회하여 중소기업의 제품화 역량 강화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거점센터를 통한 기업지원으로 2014년 총 42건의 기술의 사업화를 실적을 달성하였고, 이를 통해 총 47명의 고용을 창출하였는데, 특히 신규 고용인원 중 정규직 고용률이 95.7%에 달할 정도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그동안 3개 거점센터 건축이 완료되지 않아 임시공간에서 기업지원을 수행하다 보니 기업지원에 여러 가지 애로가 있었으나, 2015년 하반기에 3개 거점센터가 모두 완공될 예정이고, 장비 등의 인프라 구축도 확대될 예정이므로 향후 기업지원의 양과 질이 모두 대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15년도부터 10개 내외의 신규 기술개발 과제를 추가 지원함으로써 3D융합 분야의 기술경쟁력 향상 및 중소기업의 제품화 역량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4) 클린디젤자동차핵심부품산업육성사업

에너지효율이 높고 이미 유럽을 중심으로 시장이 성숙단계에 있는 클린디젤자동차 기술의 국제경쟁력 향상과 광주지역 자동차부품업체들의 기술혁신을 통한 수익성 제고 및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해 클린디젤자동차 핵심부품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클린디젤자동차 핵심부품 산업육성사업은 2011년 9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총 5년간 국비 1,283억원, 지방비 366억원, 민간부담금 222억원 등 총 1,871억원이 투입되어 연구기반시설 구축과 클린디젤 핵심부품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다.

연구기반시설 구축사업은 디젤기술전문센터와 핵심부품소재센터 등 2개의 연구센터를 건축하고 관련 장비를 구축하여 기업의 기술개발 등을 지원한다. 기반구축 사업의 주관은 (재)광주그린카진흥원이 맡고 있으며, 자동차부품연구원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공동 참여하고 있다. 클린디젤 핵심부품 기술 개발은 동력발생부품, 전후처리/엔진부대부품 등 6개 분야에서 21개 핵심요소기술을 개발한다.

2014년 인프라 성과로 2013년 6월부터 센터 착공, 2015년 3월 구축이 완료되어 클린디젤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 및 지역 자동차부품기업지원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성능평가 및 분석 장비는 5종을 기구축 또는 구축 추진 중에 있다. 1차년도 장비 포터블 FT-IR 분석계(2012년 12월 구축 완료) 및 2차년도 장비 열전도도측정기(2013년 8월 구축 완료)는 기구축 완료되어 활용중이며, 중·대형 엔진동력계 및 3차년도 장비 대형 엔진동력계, 진동환경챔버 2종은 디젤기술전문센터 내 제작 및 설치 중이며, 8월 구축 완료 예정이다. 4차년도 장비 “4WD 승용 차대동력계” 등 장비 5종의 경우, 센터구축이 완료되어 장비구축 집적화 공간이 확보되었으므로 2015년부터 점차적으로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기술개발사업은 “연비 개선을 위한 전동식 융합형 클러치타입 워터펌프 기술 개발” 등 총 15개의 수행과제 중 6개 과제는 완료되었으며, 2개의 계속과제가 수행 중이며, 신규과제 7개를 추진 중에 있다. 과제에 참여하는 기업현황으로는 태원물산 등 16개 부품기업과 9개의 연구소, 6개의 대학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역 기업으로는 신진정밀(주) 등 8개 부품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2014년까지는 핵심기술 검증 및 신뢰성 확보, 지식재산권 선점을 위하여 논문, 특허성과 창출에 주력하였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5년부터 클린디젤 성능평가, 신뢰/내구평가 등 클린디젤사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지역 부품기업의 수요에 적합한 장비 구축을 본격화하고 기업지원(지식재산권 확보, 신뢰성 시험/평가 지원, 기타 기술지원 등) 활성화를 통해 지역 기업의 기술개발 역량 강화 및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전망이며, 최종적으로 사업 성공의 수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우수한 사업화 성과 창출에 주력할 예정이다.

본 사업을 통해 유럽에 비해 열세인 클린디젤 핵심부품 기술을 2016년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수준으로 견인하여 대외 기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급성장하는 그린카 시장에서의 그린카 4대 강국 달성에 클린디젤자동차가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할 예정이다.

(15) 첨단메디컬신소재(섬유)개발사업

메디컬 섬유란 의료기기 및 의약외품의 핵심 부품소재로 사용되면서 모든 생명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섬유상의 소재 및 제품을 말하며 진찰, 치료, 외과

수술, 건강관리 등 의료행위에 사용되는 의료기기 및 의약외품 중 섬유구조재료가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제품을 지칭한다. 일반적으로 메디컬 섬유는 치료/수술용 섬유와 헬스케어/위생용 섬유로 분류되며, 치료/수술용 섬유는 다시 이식용 섬유와 비이식용 섬유 그리고 체외장치용 섬유로 구분된다.

2013년 세계 의료기기 시장규모는 3,284억불이며, 연평균 5.1%의 성장을 지속하여 2015년에는 3,625억불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2013년 의료기기 시장규모는 4조 6,315억원으로 연평균 5%의 성장을 지속하여 2015년에는 5조 1,124억원으로 전망된다. 국내 메디컬 섬유소재 시장(의료위생용품)의 경우는 2013년 수출 1억 4,000만 불로 전년대비 5% 증가하였고, 수입은 3억 2,000만 불로 기록되어 무역수지가 적자 1억 8,000만 불을 보이고 있다.

첨단메디컬신소재(섬유)개발사업은 2011년 9월부터 시작되었으며, 5년간 국비 647억원, 지방비 163억원, 민간부담금 142억원 등 총 952억원을 투자하여 수입의존도가 심화(대외 무역수지 적자 : 2006년 12억불→2009년 17.6억불)되고 있는 첨단 메디컬 섬유소재 융합제품의 치료/수술용 섬유소재 개발, 헬스케어/위생용 섬유소재 개발, 메디컬 섬유소재 테스트 베드 기반 구축할 계획이다.

치료/수술용 섬유소재 개발은 창상치료 제품, 임플란트용 치료/수술제품, 비임플란트용 치료/수술제품, 신체기능 보조용 제품 등의 기술개발이며, 헬스케어/위생용 섬유소재 개발은 소모성 위생용품, 감염방지 보조용품, 스킨케어용품, 인체보정용품 등의 기술개발이다.

1차년도인 2011년에는 기술개발 과제로 조직재생기능 복합 다층구조 드레싱재의 개발, 생흡수성 및 생체적합성 고분자로 이루어진 섬유상 조직유착방지막 개발, 기술융합 복합기능성 의료용 섬유제품 개발, 인체친화형 경량 무연 방사선 차폐 소재 및 의료용 보호복 개발, 의료용 압박스타킹 제조를 위한 환편시스템 및 제품개발, Medical Textile 용도전개(Application) 기반기술 개발을 선정하였다. 2차년도인 2012년에는 메디컬섬유소재테스트베드 기반조성을 위해 물성위주의 기반을 경북테크노파크에 설치하였으며 항염증 기능성 도입을 통한 통증완화 효과를 가지는 생체분해성 봉합사의 개발, 팽창력과 유연성이 우수한 판형 및 원통형 인조혈관 스텐트 개발, 99.99% 이상의 바이러스 차단율과 TVOCs 제거율을 가지는 복강경 수술용 복합 다층 구조 smoke 제거 필터의 개발 등 4개 사업을 선정하였다.

3차년도인 2013년에는 경북테크노파크의 주관으로 경북 경산에 메디컬섬유소재테스트베드 건축을 착공하였으며 비혈관용 생분해성 브레이드 섬유 스텐트 제조 기술 개발, 셀룰라이트 감소 유도 물질의 경피 흡수 촉진용 기능성 섬유소재 개발, 응급실 환경에서의 HIV 감염성 질환의 멀티 분석 디바이스 및 정량적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을 선정하였다.

4차년도인 2014년에는 메디컬섬유소재테스트베드 건축을 본격적 추진하여 2015년 6월 준공 예정이며, 다당류계 섬유상 지혈제, 의료용 High Pressure Injection Line, 항문대체용 인공장관 및 장루, 2.4 Fr급 PTCA balloon catheter, 산소투과도가 우수한 소프트 하이드로겔 마스크, 나노케어 스팟패치 등 6개 신규 사업 개발을 선정하였다.

(16) 탄소밸리구축사업

탄소섬유, 인조흑연 등 탄소소재 관련 원천기술과 응용기술 개발을 통하여 국가 경쟁력의 원천인 핵심소재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탄소소재 개발에서부터 이를 활용한 중간재, 부품, 완제품 등의 산업 밸류체인을 형성 또는 집적하여 차세대 신산업으로서 육성하기 위하여 탄소밸리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탄소소재는 고강도, 경량성 등의 특징 때문에 자동차 경량화, 신재생에너지 분야 등에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각국의 환경규제 강화와 신재생에너지원의 확대로 미래의 녹색성장을 주도할 핵심소재로 거론되고 있다.

탄소밸리구축사업은 2011년 9월부터 시작되었으며, 5년간 국비 1,087억원, 지방비 78억원, 민간부담금 826억원 등 총 1,991억원을 투입하여 탄소소재 관련 기술개발사업과 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1차년도인 2011년에는 단가 절감을 위하여 24K 이상의 토우를 뽑아내는 라지토우 탄소섬유 생산기술 및 중간재 개발, 석탄·석유 잔사물을 활용한 피치계 탄소섬유와 응용기술개발(단열재, 자동차부품에 적용), 그리고 공정상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저에너지비용 탄소섬유 공정기술개발 등 5개 기술개발 과제를 선정하였다.

또한, 시험·분석 장비와 성형·가공 장비 인프라 조성을 위하여 탄소소재 일류화지원 기반조성 과제의 주관기관으로 KIST 전북분원을, 탄소복합부품 성형기술지원 기반

조성 과제의 주관기관으로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을 각각 선정하여 탄소밸리 조성을 위한 지원기반의 첫 걸음을 내디뎠다.

2차년도인 2012년에는 석유잔사유를 활용한 이차전지 전극용 피치계 코팅소재개발을 신규 선정하였다. 그리고 2013년 5월 고성능 탄소섬유(T700급)의 국내 생산기반이 마련되어 연 2천톤 규모의 탄소섬유 국내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석탄계 피치섬유개발을 위한 파일롯(40톤/년)이 설치되었으며 이를 이용한 단열재용 복합재 및 활성탄소섬유 제조원천기술이 확보되었다. 3차년도인 2013년에는 개발된 탄소섬유의 응용확대를 위한 자유공모 10개 과제를 신규 선정하였다. 자동차 부품용 탄소복합재 개발을 포함, 탄소복합재 재활용 등 국내 탄소산업 중소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하였다. 또한 석유계 피치섬유 개발을 위한 파일롯(50톤/년)을 구축하였다.

4차년도인 2014년에는 개발된 탄소섬유 사업화 확대를 위해 기술수요 조사를 통한 재활용 분야를 비롯한 탄소섬유를 활용한 고성능 부품 등 우선 지원분야를 도출하여 13개 과제를 신규 선정하였다. 이는 사업의 탄소섬유의 원천소재 개발에서 응용제품의 사업화로 연결할 수 있도록 소재-부품-완제품 간 상호연계 강화 및 성과극대화를 목적으로 하였다. 또한 사업 초기 추진된 라지트우 탄소섬유(50톤/년), 석탄·석유 잔사물을 활용한 피치계 탄소섬유 개발을 위한 파일롯(50톤/년) 구축 및 응용기술개발 본격 추진 예정이다.

기반구축사업을 통해 10건 이상의 시제품 개발이 이루어졌으며, 협의회 구성을 통해 카본인더스트리포럼, 탄소페스티벌, 탄소밸리구축사업 KICK-OFF 등을 실시하였으며, 세계 최고 복합재료 전시기관인 JEC asia 'Innovation Awards' 수상하였다. 더불어 JEC europe에서 최초로 한국관(탄소밸리 특별관)을 열어 우리나라 탄소복합재 기술력을 세계 시장에 알렸다. 국내 탄소섬유 분야의 글로벌 위상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국제전시 참여와 시제품 개발 지원으로 기술 및 사업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에 있다. 현재 T700급 탄소섬유(고강도 탄소섬유)는 (주)효성, 태광산업, 도레이 첨단소재 등 3개사의 생산량 증가로 국내생산이 100%에 달하고 있으나 고가로 인해 시장성장이 더디어지고 있다. 탄소밸리 구축사업이 충실히 수행되고, 관련 기업들의 양산화 투자가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2020년까지 저비용 라지트우 탄소섬유 및 피치계 탄소섬유의 국산화가 100% 이루어져, 원천소재·공정기술 개발 등을 활용한 자동차 부품시장 진출로 국내 약 1조 5천억원, 해외 약 11조원의 신규시장 창출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또한 그 결과로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조선, 기계, 에너지, 토목/건축 분야에도 폭발적인 시장성장이 기대된다.

(17) 실감미디어산업 R&D기반구축 및 성과확산사업

실감미디어(Realistic Media)는 몰입감과 현장감을 극대화하도록 오감정보와 감성 정보를 인간에게 제공할 수 있는 차세대 미디어이다. 실감미디어산업은 통신기기, 컴퓨터, 전자부품, 정밀기기, 콘텐츠 및 소프트웨어 산업 등으로 광범위하게 형성되며, 융합을 통한 혁신제품 출현 기회가 크고 전·후방 파급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실감미디어 산업은 태동기이므로, 기술개발 뿐 아니라 기반구축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국내시장을 조기에 형성하고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여 국내 실감미디어 산업이 세계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선점하여야 한다. 세계 각국은 이미 실감미디어 산업 분야에서 경쟁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공격적인 투자와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주친 중에 있으므로, 국내 산업에도 이러한 투자와 지원이 동반되지 않으면 해외산업에 의해 기술적으로 종속되고 시장이 잠식될 것이 우려된다. 이를 위해 실감미디어산업 R&D 기반구축 및 성과확산 사업은 'ICT와 미디어 기반의 실감미디어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이라는 비전하에 산업화 지원→혁신 기술개발→R&D 혁신기술 및 제품 테스트베드→기술이전 및 사업화→재투자의 선순환 구조 정착과 신 시장 창출로 지역성장 모멘텀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실감미디어산업 R&D기반구축 및 성과확산사업은 실감미디어 산업의 기반 구축 및 핵심 기술 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5년간 1,847억원(국비 1,281억원, 지방비 266억원, 민간 3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산업기반구축사업은 전남의 실감미디어 기반조성사업단 구축사업, 경북의 실감미디어산업 성과확산사업단 구축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감미디어 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기업지원, 인력양성, 품질인증, 테스트베드 구축 등 인프라 구축 및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표 2-2-8 실감미디어R&D기반구축 및 성과확산사업 개요

사업명		사업내용	
기술개발 (R&D)		·기능성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를 위한 다감각 실감미디어 체험시스템 개발	
		·다중미디어·다중디바이스 지원 미디어 게이트웨이 기반 실감전송시스템 기술개발	
		·에어플로팅 스페이스 기반 스포테인먼트 실감체험플랫폼 개발	
		·배우의 움직임과 무대 자동화 기술을 연동한 인터랙티브 실감공연 통합제어시스템 개발	
기 반 구 축	성과 확산 (경북)	·실감미디어 성과확산사업단 구축	·실감미디어 기반조성사업단 구축
		·실감미디어 전송테스트베드 구축	·실감미디어 제품테스트베드 구축
		·실감미디어 인터넷기반 공공서비스	·실감미디어 품질인증 사업
		·실감미디어 기업지원사업	·실감미디어 기업지원사업
		·실감미디어 인력양성사업	·실감미디어 인력양성사업
		기 반 조 성 (전남)	

기술개발사업은 실감미디어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발굴하고 개발함으로써 기술적 우위 확보와 관련 시장 활성화를 통한 고부가가치의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1차년도인 2012년에는 「기능성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를 위한 다감각 실감미디어 체험 시스템 개발」, 「다중 미디어·다중 디바이스 지원 미디어 게이트웨이 기반 실감 전송 시스템 기술」 등의 2개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 중이며, 2차년도인 2013년에는 「에어플로팅 스페이스 기반 스포테인먼트 실감체험 플랫폼 개발」, 「배우의 움직임과 무대 자동화 기술을 연동한 인터랙티브 실감공연 통합제어시스템 개발」의 2개 과제를 추가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실감미디어 산업의 핵심기술개발과 지역 중심의 산업 기반구축을 통해 경북·전남의 지역 경제 발전의 모멘텀을 창출하고 진정한 ICT강국으로 도약을 위한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실감미디어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를 토대로 실감미디어산업 활성화 및 신규 일자리 창출, 관련 중소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8) 지역SW산업진흥지원

동 사업은 정부의 지역 소프트웨어(SW)산업육성 정책에 따라 1998~2005년까지 18개 지역소프트웨어지원센터 설치, 7개 지역 소프트웨어타운으로 확대, 소프트웨어, 멀티미디어 고가의 공용장비 지원 등 하드웨어중심의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그림 2-2-5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진흥사업의 인프라 현황

지역SW융합센터	IT특화연구소	SW품질역량센터
		
18개 지역 IT·SW 산업진흥/기업 전문 지원	지역내 기반산업과 연계한 IT/SW 융합 R&D 지원	SW품질관리, 테스트 업무지원 기능
1998~ 계속	2006 ~ 2012	2011~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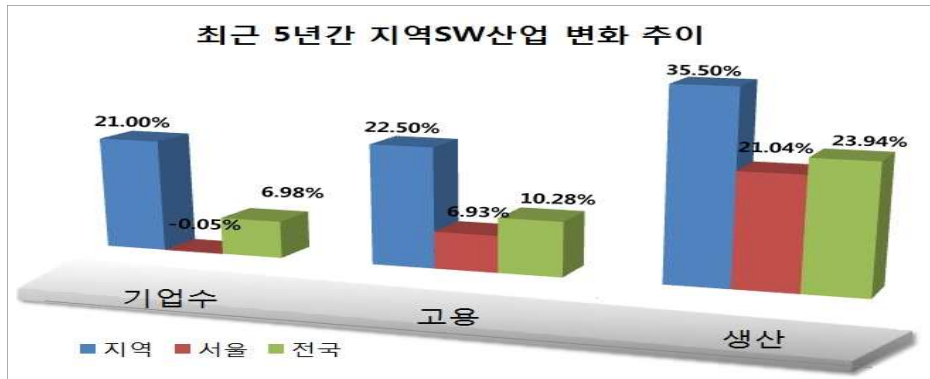
2006년 이후 소프트웨어융합지원사업 등 소프트웨어성 인프라 확충을 통하여 지역 내 소프트웨어산업 생산 25배, 기업수 10배, 고용 9배 등 지속적인 성장을 하였다.

그림 2-2-7 소프트웨어산업진흥사업의 성과



특히, 2008~2012년간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은 기업수 21.0%, 고용 22.5%, 생산액 35.5% 증가, 글로벌 경제위기, 저성장 기조에도 불구하고, 경제창출(매출, 고용 등) 효과 우수한 사업으로 선정, 범국가적인 지역발전위원회 평가를 통해서도 S·A등급을 지속 획득, 성공적인 사업으로 대외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그림 2-2-8 최근 5년(2008~2012년)간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변화 추이



이러한 급속한 성장 및 산업구조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프트웨어산업의 서울 집중도(생산 78.3%, 고용 76.3%, 기업 수 59.8%)가 높아 인프라 구축을 넘어 관련 산업의 생태계 조성·정착 및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육성 정책이 전략상 매우 중요하였다.

이에 18개 지역의 지자체 및 소프트웨어산업육성 전담기관(지역소프트웨어융합센터)과 협력하여 소프트웨어기업들이 창업,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지역 내 특화된 기반산업과 연계한 소프트웨어융합 중심의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육성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추진 중에 있다. 세부사업으로서 지역소프트웨어기업성장지원 사업은 지역 내 중소소프트웨어기업을 대상으로 인력양성, 마케팅, 기술지원, 네트워크 등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14년 국비 59.5억원을 투자하였고, 18개 지역의 505개 중소소프트웨어기업을 지원하여 수혜기업 매출액 2.16조원(전년대비 20.2% 증가), 고용 창출 1,320명, SW관련 인증 340건, 소프트웨어인력양성 프로그램을 통한 전문인력 배출 1,781명, 특허 271건, 프로그램 등록 80건, 시제품 및 사업화 139건, MOU 99건 등 성과를 창출하였다. 또한 광역권내 지역 간 또는 초광역 공동사업 추진을 통하여 마케팅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도 창출하였다.

소프트웨어융합지원사업의 경우 지역 내 신규 소프트웨어시장 창출을 위하여 2014년 76.8억원을 지원하여 지역별로 특성화된 기반산업과 연계한 소프트웨어융합 신규 서비스 발굴 및 제품화를 위한 28개의 프로젝트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상의 사업을 통해 지역 내 62개 중소 유망소프트웨어기업을 지원하여 프로젝트 수요에 의한 신규고용 362명, SW관련 인증 39건, 인력양성 57명, 특허 74건, 프로그램 등록 96건, 시제품 및 사업화 62건, MOU 42건 등 경제적 성과를 창출하였다. 대기업 및 공공/민간 기관 등과 연계한 중소기업의 공동 프로젝트를 창출하고, 미국, 터키, 일본, 러시아 등과의 수출계약 등을 통하여 소프트웨어기업의 실 매출로 연계되는 등 지속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어 지자체 및 지원 기업의 실제 만족도가 높은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정책기획·집행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을 통하여,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소프트웨어정책 로드맵 수립, 정보제공, 지역 간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과제의 집중 품질관리 등을 실시함으로써 서울에 비해 소외된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육성을 위한 성과 창출 제고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19)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지방화·분권화 추세에 따라 중앙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기획된 고용·능력 개발 정책으로는 지역수요에 적합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지역의 관점에서 지역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추진함으로써 정책 효과를 제고하고, 지역 간 고용기회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역고용정책 필요성 제기로 지역이 주체가 되어 사업을 설계하고 추진 할 수 있도록 2006년부터 실시하여 왔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지역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하여 해당 지역의 자치단체 주도로 비영리단체(또는 법인)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고용촉진, 능력개발 등을 추구하는 사업을 말하며, '특화사업', '연구 사업', '포럼사업' 및 이들 사업 중 둘 이상이 결합된 '패키지사업'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의 사업성과로는 첫째, 지역특성에 기반을 둔 다양한 지역 밀착형 사업발굴이다. 둘째,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과 능력개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고용관련 주체 및 전문가의 인적네트워크 형성을 촉진하였다는 점이다. 셋째, 지역의 고용주체들의 사업수행 역량이 향상되었다. 넷째, 지역의 고용서비스 및 직업훈련 시장이 확대된 점을 들 수가 있다. 2014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공모절차를 거쳐 567개 사업을 선정하여 770억원을 지원하였다. 선정 결과 특화사업이 485건으로 가장 많이 선정 되었고, 패키지사업 16건, 포럼·컨설팅사업 34건, 연

구사업 32건을 지원하였다. 특화사업의 사업에 참여하여 21,939명이 수료하고 13,496명이 취업(61.5%)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다.

수행기관 중심의 개별사업 지원에서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프로젝트(일자리목표 공시제 등 지자체의 지역고용정책이 반영된 사업들로 구성) 단위 지원으로 전환하고 인력양성사업 위주에서 고용촉진사업 등으로 사업형태를 다양화 등 추진이 필요하다. 또한 평가결과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2년 연속 C등급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사업을 배제하고, 정책단위(프로젝트)사업의 평가 방법 및 활용방안을 모색하여 일자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1) 추진배경

그간 ‘일자리’ 문제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일자리대책을 제시하였으나 자치단체별 경제 및 고용 여건의 격차가 커서 지역 상황에 맞는 일자리 창출 및 고용서비스 제공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중앙과 지방이 소통하면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내실 있는 일자리 대책을 추진하고, 중앙정부는 자치단체의 일자리 정책 수립 및 추진과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단순한 구호 수준의 일자리 공약을 넘어 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창출 모델을 만들고,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협력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역고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를 도입하였다.

2)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개요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란 자치단체장이 임기 동안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할 일자리 목표와 일자리 대책을 공시하면 중앙정부가 그 대책을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 일자리 정책의 성과를 높이는 지역고용활성화 전략이다. 243개 지방자치단체(광역시 17, 기초 226) 장이 고용노동부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고용심의회(지역노사민정협의체),

지역고용전략 개발포럼 등 지역 내 고용관련 기구와의 협조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일자리 목표와 대책을 수립하고 지역 언론, 자치단체 홈페이지, 주민대상 설명회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공시한다. 이때, 일자리 목표는 고용률 증가, 취업자 수 증가 등 통계 조사를 통해 확인 가능한 공통 목표와 함께 일자리 창출, 일자리 유지 및 미스매치 해소, 직업능력 개발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분야별 목표를 수립하게 된다.

3)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추진 경과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는 2010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2009년 12월) 및 제1, 3차 국가고용전략회의(2010년 1월 3일)에서 대통령께 보고되었다. 그 주요 내용은 지방이 중앙정부와 함께 일자리를 위해 노력하도록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를 도입하고, 그 추진 성과를 평가하여 우대 지원하는 방안이다. 이후 관계 부처, 시·도 고용정책 담당과장,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지역별 일자리 공시제 도입을 위한 의견 수렴 및 협의(2010년 3월~5월), 관련 연구용역 추진(2010년 4월~9월)을 거쳐 2010년 7월에 사업 계획을 확정·공표하였다.

2011년 들어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에 참여한 자치단체가 증가함에 따라 자치단체 스스로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대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을 강화 하는 한편 ‘지역브랜드 일자리 경진대회’ 개최(2011년 8월 30일, 2012년 9월 5일), 지역 일자리정책 한마당’ 개최(2012년 3월 13일, 2013년 3월 28일)를 통해 자치단체 사기진작 및 우수사례를 공유하였다.

2013년부터는 ‘지역브랜드 일자리 경진대회’ 명칭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경진대회’로 변경하여 개최(2013년 9월 4일)하였고, 2014년도는 ‘지역일자리 정책한마당’ 명칭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으로 변경하여 개최(2014년 3월 12일, 2015년 5월 20일)하여 지역고용정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4)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참여 현황

2010년 7월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가 도입된 이후, 2011년까지 총 244개 자치단체(17개 광역 포함) 중 227개 자치단체가 참여하였고, 2012년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

치시 등 17개 자치단체가 참여를 신청함에 따라 2012년 7월부터는 모든 자치단체가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에 참여하고 있다.

5) 추진성과 및 향후 추진방안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가 도입된 이후 자치단체는 공시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자리 전담부서를 신설하거나 인력을 보강하고, 일자리 관련 예산을 확대하는 등 자치단체장의 관심과 의지를 바탕으로 지역 일자리 부문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였다. 또한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참여 자치단체의 일자리 대책 수립·추진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일자리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되었고, 일자리 담당자의 업무역량도 향상되었다.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시행 이후, 자치단체는 지역특성을 반영한 일자리 사업 발굴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14년도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을 통해 13,496여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향후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를 내실화하기 위해 지역 내 일자리 문제와 관련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고용문제를 협력하고 조율하기 위한 중앙과 지방 간 고용네트워크 강화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중복성을 해소하고, 컨설팅을 통해 자치단체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하다.

(21) 선박관리산업 육성지원

선박관리산업은 선원관리, 선용품 공급, 선박수리, 금융, 보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서비스산업으로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며, 다른 연관 해운산업에 대한 파급 효과가 큰 산업이다. 최근 세계 해운업의 경향은 비용절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박에 대한 소유와 관리를 분리하고 있는 추세로서 선진 해운국인 유럽과 미국, 홍콩, 싱가포르 등은 다양한 해운 정책과 제도를 통하여 선박관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선박관리산업은 선진 해운국에 비해 영세한 수준이며 국제화가 미흡한 실정으로 1984년 선박관리업이 도입된 이후 2014년말 현재 363개의 선박관리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업체가 중소기업 수준이다.

2012년 7월 국내 선박관리산업의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선박관리산업 발전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선박관리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시스템이 구축되었다. 현재 추진중인 선박관리산업 육성지원은 선박관리전문가 양성을 통한 전문역량강화, 복잡다양한 선원, 선박 등의 체계적 관리적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경영비용절감 및 적극적인 해외 마케팅으로 해외시장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다.

급변하는 해운환경에 능동적인 대처와 선박관리 업무의 전문성이 강화되는 세계적 추세에 부응하여 양질의 선박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선박관리전문가 양성 시급함에 따라 선박관리사업협회를 교육기관으로 지정, 교육과정을 양성과정(7개 세부과정)과 심화과정(5개 세부과정)으로 구분하여 매년 약 200명의 양성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세계적으로 금융기관의 선박보유량 증가와 국제협약의 복잡성으로 인해 해운업이 소유와 경영으로 분리되는 추세에 따라 선박관리산업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로 선박유치경쟁 가속화됨에 따라 중소형 개별기업이 진출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아 업계와 정부가 공동으로 해외마케팅을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2013년에는 일본, 2014년에는 그리스 등 상선대를 많이 보유한 해운선진국을 대상으로 해외투자 설명회를 적극 추진해 오고 있으며, 2014년 현재 우리나라 선박관리업체의 선박관리척수 1,946척 중 57%인 1,120척이 외국선박이다.

아울러, 선박관리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경쟁력(비용절감, Cost Down) 확보 및 서비스품질 제고가 우선적으로 전제되어야 하므로 이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2014년 5억원의 국고를 지원하여 선진화된 선박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향후 인적역량 강화, 해외진출 활성화 및 선진 선박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산업성장 기반을 공고히 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확보하여 선박관리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제2절 지역투자 촉진 기반 확대

1. 기업의 지역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강화

(1) 지역투자촉진(세종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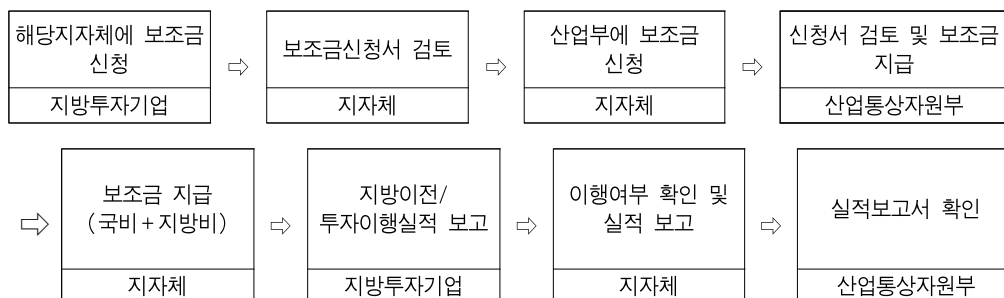
1) 기업 지방이전 촉진

1999년부터 세제·금융 등의 지원을 주 내용으로 하는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대책'이 시행되었으나, 시행 초기에는 그 효과가 미흡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발전적 분업구조 형성과 상호협력을 통한 지역 간 동반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수도권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해 온 부동산업, 소비성서비스업, 건설업을 제외한 업종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기업으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원하고 있다.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지원보조금 종류는 입지보조금, 설비투자보조금이 있다. 그 동안의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지원 실적을 보면 2004년부터 2014년까지 460개 업체에 총 5,133.9억원의 기업지방이전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지방 투자액은 총 10조 8,370억원, 지방 신규고용 창출효과는 30,479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2-9 지역투자촉진보조금 지원절차



* 신증설 기업, 국내복귀기업, 개성공단 입주기업지원 등 지원대상에 구분없이 동일한 절차 적용

2) 지방 신·증설기업 지원

종전에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이전보조금, 법인세 감면, 종전부지 매입지원, 금융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해왔으나, 기존의 지방소재기업은 정부지원이 부족하여 투자 및 고용 유인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2011년부터 비수도권 소재 지방기업에 대해서도 신규투자를 통한 고용을 창출한 경우 신·증설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이는 지역의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생산증대의 선순환을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228개 지방 신증설기업에 1,839억원을 지원함으로써 지방기업의 투자 촉진을 유도하여 고용과 생산력 증대에 의한 지역 경쟁력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향후 신증설 보조금 신청수요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3) 국내복귀기업 지원

2012년 하반기부터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U턴 기업)에 대해서도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보조금 지원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중에서 해외사업장에서의 상시 고용인원 30명 이상인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4)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지원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남북관계 영향과 같은 외부적 환경요인에 따라 생산활동이 중단되는 등 경영활동 제약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 노력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요구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거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 수리를 통해 개성공업지구에 설립한 기업 중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14년에 최초로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지역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보조금 지원수요는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 세제 혜택 확대

내국인이 고용과 연계된 투자를 한 경우에는 투자금액의 일정률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준다. 이러한 공제 혜택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었는데, 2014년 말 세법개정을 통해 2017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까지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고용이 증가한 경우에 추가로 공제해주는 추가공제율을 3%에서 4%로 1%p 인상하여 지역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본사 또는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7년 동안은 100%, 그 후 3년 동안은 50%(지방광역시, 수도권 인접지역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5년 동안은 100%, 그 후 2년 동안은 50%)를 감면한다. 이러한 감면 혜택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는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었는데, 2014년 말 세법개정을 통해 2017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는 경우까지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종전에는 공장 등을 이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바로 감면기간이 시작되었으나, 공장건축, 장비이전·설치 등 이전 초기에는 결손으로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가 많아 이전일부터 감면기간이 시작되면 세제지원 효과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이전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2. 외국인투자기업 등 투자지원

(1) 투자유치기반조성

투자유치기반 조성사업은 외국인투자유치를 통한 첨단기술 도입, 일자리 확보 등의 효과를 창출하여 우리나라 산업기반 고도화 및 지속적 경제성장을 도모하고자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거 1994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토지매입, 현금지원, 투자유치활동 등을 지원한다. 외투기업의 높은 지가부담을 완화하여 국내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 제공하고, 고도기술 수반 및 고용창출 효과가 큰 전략적 프로젝트

트 유치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주한상의 간담회, 외투기업 경영실태 조사, 정책연구용역 등을 통하여 외국인투자유치 현황을 점검, 이를 제도 개선 및 예산에 반영하고 있다.

표 2-2-10 2014년 외국인투자유치사업 지원 내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원금액	시행기관	지원형태
부지매입비	51,915	산업통상자원부	직접수행
현금지원	19,989	산업통상자원부	민간보조
투자유치활동비	8,944	KOTRA, 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 등	민간보조
국내복귀기업지원	729	KOTRA 유턴기업지원센터 등	민간보조
용역비	480	산업통상자원부	직접수행
합 계	82,057		

2014년에는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총 821억원이 지원되었다. 분야별로는 외투기업의 지가부담을 완화하여 국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부지매입비 519억원, 전략적 프로젝트 유치를 위해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현금으로 제공하는 현금지원 200억원, 투자유치단 파견, 투자가 초청, 투자환경 개선 등 투자유치활동비로 89억원이 지원되었으며, 정책연구용역 및 국내복귀기업지원 등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적극적 투자유치 활동의 결과로 2014년도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190억 불로 사상 최대의 실적을 달성하였다. 이는 기존 최고 실적이었던 2012년 162.9억 불 대비 16.6% 증가한 기록이며, 2013년(145.5억 불) 대비 30.6% 증가한 성과이다.

표 2-2-11 2008~2014년 외국인직접투자 실적(신고기준) (단위 : 백만달러)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11,712	11,484	13,071	13,673	16,286	14,548	19,003

이는 정상외교 등을 포함한 적극적 투자유치활동, 외촉법 개정 및 각종 규제개선, 글로벌 헤드쿼터와 연구개발센터 유치를 위한 기준마련 등 국내 투자 및 기업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특히, 외국인투자기업 최고경영자 간담회 및 주요국 대상 한국투자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한 현 정부의 친화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한 결과가 성과로 연결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2015년에는 성과위주의 밀착형 투자유치활동과 규제 및 제도개선을 통해 국가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글로벌 기업 헤드쿼터, R&D센터, 핵심소재부품, 고도기술수반, 고부가 서비스 등 중점유치 분야 위주의 외국인투자 유치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2) U턴기업의 지역정착 촉진

최근, 중국 등 아시아 생산기지의 인건비 증가에 따라 국내로 복귀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한·미, 한·EU FTA의 관세효과와 한류 열풍에 따른 'Made in Korea' 선호도 증가로 더욱 확산되고 있다. 특히, 신발, 주얼리 등 해외로 떠났던 지역의 대표적인 전통 산업들이 국내로 복귀하면서 지역의 산업 기반이 확충되고, 지역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2013년 8월 제정, 2013년 12월 시행)」을 통해 조세감면, 입지 및 설비투자 보조금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유망 유턴 기업의 지역 투자를 촉진하고 있다

표 2-2-12 유턴기업 주요 지원제도

구 분	내 용
조세감면	• 법인·소득세 최대 7년간 50~100% 감면, 신규·중고 설비 도입시 관세 감면
보조금	• 입지(9~40%) 및 설비투자(4~22%) 금액 보조
입지	• 산단 입주 희망시 우선권 부여 등
외국인력	• 현지 인력의 국내재고용 허용(내국인 고용인원의 10% 이내, 최대 30인 한도)
고용보조금	• 1인당 1,080만원의 고용보조금 지원(1년간, 최대 100인 한도)

또한, 유턴기업의 지역투자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해 KOTRA에 '유턴기업 지원 센터'를 운영중이며, 중국과 미국 등 주요 거점의 KOTRA 무역관내에 '해외 유턴 지원데스크'를 설치하여 유턴 의향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각 지자체의 강점과 전략산업과 연계하여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중이다.

2015년 7월 현재 기준으로, 전북 익산 주얼리, 부산 신발 등 총 73개 기업이 지자체와 유턴 MOU를 체결하고 유턴을 추진 중에 있다.

표 2-2-13 유턴기업 현황 (2012년~2015년 4월 MOU체결 기준)

지역	전북	부산	충남	경기	세종	광주	경북	전남	대구	강원	인천	계
기업(개)	30	14	6	6	5	3	3	2	1	2	1	73

향후에는 한중 FTA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업종의 유턴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전략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R&D 등 고부가가치화 지원을 강화하여 유턴기업이 국내 복귀 후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제3절 산업단지 고도화로 창조경제 구현

1. IT·서비스업 등 신산업 수요에 부응한 입지 공급 확대

(1)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1970~1980년대 제조업 중심으로 산업경제성장기반을 구축하여 발전하여 왔으나 2000년대 들어 지식정보화 시대에 맞는 첨단산업에 대한 입지를 적기에 공급하고, 기업투자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대두되고 있다. 이런 산업입지 흐름에 반하여 현재 IT 등 첨단산업을 위한 도시 인근의 용지가 전국 산업단지의 0.2%에 불과하여 여전히 부족하며, 지역 전략산업이 집적된 곳에도 용지 공급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IT, BT 등 첨단산업을 위한 용지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도시첨단산업단지 제도를 도입(2001년)하고, 첨단산업 수요가 많은 도시 인근에 중소규모의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을 확대하기 위해 산업·지원·공공시설의 복합입지를 허용하는 복합용지 도입, 용적률 상향, 녹지율 완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도시첨단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2017년까지 국가가 직접 전국 13개소를 개발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선도사업으로 판교테크노밸리와 연계한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창조경제 생태계를 구현한 ‘판교 창조경제밸리’로 육성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기업의 투자촉진 및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시첨단산업단지 확대 조성으로 첨단산업기반을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본 사업을 통해 지역에 총 8조 원 이상의 신규투자와 12만 명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가 예상되며, 각 지역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대학·연구소 등 혁신자원을 활용하여 아이디어 및 기술을 사업화할 수 있는 지역 창조거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지역특화산업단지 조성

지난 1960~1970년대 조성된 국가산업단지는 석유화학, 조선, 철강 등 국가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중점 추진되었으나, 1980년대 들어서면서

전체 경제규모 확대를 목적으로 다양한 업종이 입지할 수 있는 국가산업단지를 다수 조성하였다. 이러한 국가산업단지는 일반적인 산업발전에는 기여하였으나, 국가의 미래성장동력이 될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한편, 특화산업을 위한 산업단지는 관련 업종의 집적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인프라를 산업특성별로 맞춤 지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입주 업종 제한으로 충분한 산업수요 확보가 어려워 사업시행자의 위험 부담이 높은 문제가 있어 시장원리에 의해 추진되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지역의 균형발전과 국가의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방안으로 첨단산업, 미래유망성장산업 등 국가적 육성이 필요한 지역별 특화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어, 국정과제에 지역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지역별 특화산업 입지 지원”을 반영하였다. 이는 대통령 공약에 포함된 항공, 식품, 신재생, 신소재 등 다양한 특화산업에 대한 입지지원 사항을 실행하기 위한 사항으로 2013년 국토부 업무계획'에도 지역별 특화산업을 미래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입지 중점 지원 내용을 반영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정부에서는 지역별로 특화된 산업에 대한 조사 용역 등을 토대로 다양한 업종을 유치하는 “백화점식 산업단지”에서 벗어나, 지역별 장점을 최대한 활용한 특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맞춤형 산업단지” 개발을 적극 지원하기로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2015년 3월 12일)를 통해 발표하였다. 발표 내용은 정부의 특화산업 육성계획이 있고 지역내 특화산업의 집적도가 높은 원주(의료기기), 전주(탄소섬유), 진주·사천(항공), 거제(해양 플랜트), 밀양(나노) 등 5개 지역을 대상으로 LH 등 사업시행자의 타당성 분석과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각 지역별 지원방식(산업단지 유형, 규모, 입지, 개발시기 등)을 결정하기로 하였다.

산업 집적도, 정부 육성계획, 거점시설 입지현황 등을 고려하여 지역특화산업 조성 지역으로 선정된 5개 지역에 대해 지자체 사업제안(위치, 규모, 지원사항 등), 특화산업 소관 부처의 지원정책 등을 종합, 타당성을 검토하여 사업시행예정자(LH공사)를 중심으로 지자체와 입주기업 수요, 위치, 적정규모, 조성원가 등 협의하여 2014년 12월 국토정책위원회를 통하여 “지역특화산업단지 개발방안” 마련하였다. 5개 지역 중 개발이 시급하고, 개발방안 협의가 완료된 전주, 진주·사천, 밀양, 거제는 2015년부터 국가산업단지로 개발하고, 원주는 기업·혁신도시 등 주변 산업용지를 우선 활용하면

서 추가적인 입주수요 발생시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하기로 하였다. 전주, 진주·사천, 밀양 지역특화 산업단지는 공공기관(LH공사) 개발방식으로 추진하고, 거제는 사업시행자로 민관 SPC를 설립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표 2-2-14 지역특화산업단지 개발(안)

지역	위 치	규 모	사업 시행자	사업비 (추정)	개발방향	추진계획
전 주 (탄소섬유)	동산동 팔복동	825천㎡ (약 25만평)	LH공사	2,280억원	전북 창조경제센터, 탄소밸리구축사업과 연계하여 부품소재 연구기업, 앵커기업의 시제품 및 완제품 생산 지원, 창업기업 등 유치	•예타착수 (‘15.6) •산단지정 (‘16.하)
진주·사천 (항공)	진주시 정촌면 + 사천시 용현면	1,650천㎡ (약 50만평) (진주 50%, 사천 50%)	LH공사	3,574억원	KAI 등 항공기 제조기업, 연관 부품생산기업, 항공산업 관련 연구기관 등 유치	•예타착수 (‘15.6) •산단지정 (‘16.하)
밀 양 (나노융합)	부북면 오례리	1,650천㎡ (약 50만평)	LH공사	3,350억원	R&D자금 지원 등을 기반으로 개발된 나노기술 상용화를 위한 제조기업, 연관기업을 유치하고, 한전 산하기관 입주를 통해 거점시설 확보	•예타착수 (‘15.6) •산단지정 (‘16.하)
거 제 (해양플랜 트)	사등면 사곡리	3,811천㎡ (약 115만평)	민관 SPC	12,664억원	남해안권 해양플랜트 산업벨트(하동 갈사만지구, 부산연구개발특구 등)와 연계하여 실수요기업 중심으로 개발	•SPC설립 (‘15.상) •산단지정 (‘16.하)
원 주 (의료기기)	부론면 노림리	610천㎡ (약 18만평)	민관 SPC	627억원	현재 부론일반산업 단지로 개발 추진중	기업·혁신도시 산업용지를 우선활용하고 추가 입주수요 발생 시 국가산업단지 지정

현재 전주, 진주·사천, 밀양 지역특화 산업단지는 공공기관(LH공사) 개발방식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위한 관련 용역을 추진 중이고, 거제는 사업시행자인 민관 SPC 설립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2. 노후산업단 창의·혁신공간 전환

(1)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

선진국을 따라잡는 형태인 기존의 Catch-up 전략으로는 발전에 한계가 있어 공정 혁신, 독자적인 기술 개발 등을 통한 독보적인 제품을 생산하는 혁신주도형 성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기초·원천적인 기술·지식을 창출하는 대학, 연구기관과 이런 기술·지식을 실제로 제품에 적용하는 산업현장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는 선순환 구조가 있어야 한다. 즉, 산·학·연이 서로 상호 긴밀한 협조관계 속에서 혁신이 창출되는 혁신클러스터 공간이 형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산업단지가 산업현장이 밀집되어 생산기능은 뛰어난 반면 연구개발 역량은 매우 취약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R&D역량 강화와 산업주체간 연계를 통해 산업단지를 지식, 정보가 교류되고 창조혁신이 선순환되는 혁신클러스터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산업집적지 경쟁력강화사업이 시작되었다.

2005년 4월 창원, 구미, 울산, 반월·시화, 광주, 원주, 군산 등 7개 단지를 시범단지로 하여 진행되었으며, 2007년말에 남동, 오창, 성서, 녹산, 대불 등 5개 단지가 추가 지정된 후, 2010년 4월부터는 5+2 광역경제권 정책에 따라 전국의 산업집적지로 확대되었다. 최초에는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사업”이라는 명칭이 사용되다가 광역경제권 개편이후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R&BD네트워크 구축·운영, 테마클러스터, 기업성장지원센터를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2014년 예산 577.3억원).

R&BD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산학연 협의체인 미니클러스터(Mini-Cluster: MC)를 구성하여 운영하는데, 미니클러스터란 업종별 기술분야별로 기업을 중심으로 대학, 연구소, 지원기관 등으로 구성된 소규모 협의체로서 문제인식을 통해 애로 및 해결사항을 발굴해 과제화하고, 이를 MC에 참여하는 전문가와 네트워크를 통해 과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2014년 12월말 전국 6개 권역에 총 71개의 미니클러스터가 구성되어 있으며, 7,512명의 산학연 관계자가 활동하고 있다.

(2)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2011년부터 산학융합지구조성 사업을 추진하였다. 동 사업은 산업단지에 대학, 기업연구소를 유치하여 청년들이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산업현장에서 맞춤형 교육과 R&D, 취업활동이 연계·선순환되는 산업인력 양성의 선도모델을 만드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한다. 특히 대학이 직접 산업단지로 이전하여 산업단지 근로자들이 직장생활과 대학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先취업-後진학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2011년도에는 반월·시화(경기), 구미(경북), 군산(전북), 2012년도에는 대불(전남 목포), 오송(충북), 울산, 2013년도에는 당진(충남), 2014년에는 창원(경남)을 선정하였다.

동 사업은 교육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추진 중에 있으며, 양 부처는 대학의 산업단지 입주가 확대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학의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확대하여 저렴한 토지를 공급하였고 교육부는 대학이 산업단지에 캠퍼스를 조성할 경우 토지 및 시설 확보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2014년까지 시화·구미·군산 등 3개 지구에서 총 7개 대학 17개 학과 4,708명, 기업연구소 173개소가 이전을 완료하여 대학중심으로 산학 공동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까지 산학공동 R&D 124건, 사업화 프로젝트 44건 등에 학생들이 참여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 혁신과 더불어 총 387명의 학생이 참여기업 취업에 성공하였다. 아울러, 기 재직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근로자 7,400여명이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며,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학생 3,800여명에게는 현장 직무교육의 기회가 제공되었다.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지난해 9월 산업단지 50주년 행사를 통해 발표된 「노후산단의 스마트혁신단지化」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동 사업을 2017년 17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3) 노후산업단지 재정비 지원

1980년대 이전에 조성된 노후 산업단지는 산업중흥을 선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준공 후 도로와 주차장, 공원, 녹지 등 공공시설과 지원·편의시설이 부족하여

생산활동에 장애가 되거나, 도시 확산으로 산업단지가 도시 내부로 편입되어 주거지 등과 인접하면서 공해·소음으로 인근 주민과의 마찰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표 2-2-15 노후산업단지 현황 (준공 후 20년 경과, 2014년말 기준)

구분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단지 수	입주 기준 업체 수
	단지명	개발 년도	입주 업체	단지명	개발 년도	입주 업체	단지명	개발 년도	입주 업체	단지명	개발 년도	입주 업체		
국가산업단지	한국수출(부평)	69	751	한국수출(서울·인천)	73	9,748	옥포	80	1	포항반월특수(반월)	92	98	12	19,880
				구미1	73	1,194	구미2	83	128					
				한국수출(주안)	74	487	고정	85	43					
				익산1	74	223	죽도	85	1					
입주자산업단지	전주1추후	69	131	원주우산	70	19	양산	81	102	신평중원(협동화)	90	449	51	11,532
							정읍1	81	8					
							진주상평	81	515					
							소촌	83	50					
							달성1차	83	327					
							강릉중소	83	45					
							하남1-3(1차)	83	186					
							오천	83	45					
							본촌	83	111					
							송암	83	65					
							신평장림(기존)	84	160					
							향남제약	85	38					
							안성1	85	49					
							순천	86	37					
							전주2	87	19					
							반월도금	88	107					
							대구영색	88	125					
							성서1	88	897					
							하남1-3(2차)	89	331					
							문평	89	7					
							청주	89	356					
							안성2	85	38					
							충주1	93	43					
							상봉암	93	6					
							평택	93	63					
							경산1	94	194					
							강화합동	94	15					
							완주	94	83					
							외동	94	22					
							문발1	94	13					
							현도	94	3					
합계	3		958	12		16,298	26		3,843	22		10,313	63	31,412

이러한 노후화된 산업단지들이 새로운 기업 수요 및 도시기능에 맞게 현대화된 산업단지로 재생될 수 있도록 산업기능과 기반시설 등을 시급히 정비할 필요가 있으나, 기반시설의 설치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지자체의 재정 여건상 자체적으로 추진이 불가능하고, 수익성이 낮아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저조한 실정이다.

정부는 지자체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산업단지과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업종 전환, 기반시설 정비, 지원시설 확충 등을 다각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첨단 산업단지로의 재정비 및 도시 기능의 종합적인 향상을 도모하는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2006년부터 노후산업 재정비 타당성 분석 연구 및 실태조사, 그리고 재정비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2009년에는 노후 산업단지 재생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으며, 같은 해 9월 시범사업지구 4개소(대전, 대구, 부산, 전주)를 선정하였다. 2010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재생사업에 산업단지 주변과 공업지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 산업단지와 같이 재생사업단지도 조세와 부담금을 감면토록 하였으며, 산업단지 지원지침을 개정(2011년)하여 재생단지 내부도로 등 국비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였다. 재생사업에는 계획수립비, 도로·주차장 등 필수 기반시설 비용의 50%를 국비 지원한다.

이들 시범사업지구 네 곳에는 사업완료(2020년)까지 국비 4,400억원 가량을 투자하여 낙후된 기반시설을 개선하고, 첨단 업종의 산업단지로 개편할 계획이다. 2차 사업지구 4개소(춘천, 안산, 구미, 진주)도 재생지구 지정(2015년~2016년) 및 사업 타당성 분석을 거쳐 순차적으로 국고 지원을 추진 예정이다.

정부는 향후에도 노후 산업단지의 경제적 중요도, 혁신역량, 기반시설 노후도, 기업 및 근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15년 9개소(3차) 및 2016년 4개소(4차)를 추가적으로 선정·지원함으로써 낡은 산업단지를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젊은 인재가 모이는 활력있는 산업단지로 재탄생시킬 계획이다.

한편, 재생사업의 추진속도를 높이고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연구를 실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민간공모 재생사업 도입,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주택도시기금 출범에 맞추어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3. 입주기업 혁신역량 강화 및 정주여건 조성

(1) 산업단지 혁신 및 근로여건 개선 지원

2014년도 산단환경개선 펀드사업은 구미국가산업단지 내 부지를 대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130억원 출자와 민간투자 유치, 한국산업단지공단 사업부지 활용 등을 통해 총 580억원 규모의 근로자용 오피스텔 건립을 추진 중이다. 이 오피스텔은 구미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산단 경쟁력 향상을 위해 기업지원 및 근로자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목적 복합시설 조성을 지원하는 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사업을 추진 중이다. 2014년도에는 군산, 청주종합비즈니스센터가 준공되었으며 산단 내에 부족한 기업지원기관, 편의시설 입주, 회의공간 마련 등으로 해당 산업단지 내에 기업 및 근로자 지원 기능을 확충하는 데 기여하였다.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한 ‘산업단지 경쟁력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정부 부처별 산업단지 지원 사업들을 지자체 대상으로 합동공모로 추진 중에 있다. 2014년에는 4개 부처(고용부, 산업부, 문체부, 교육부) 7개 사업(종합복지관, 산재예방시설, 산단형공동직장어린이집 등)으로 11개 산단(25건)에 국비 152.2억원을 지원하였다.

(2) 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원사업

산업단지 진입도로는 1997년부터 산업단지의 분양가 인하 및 물동량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국가산업단지 및 50만㎡ 이상의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하여 진입도로 건설에 소요되는 사업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다.

2005년부터 산업용지의 공급확대를 위하여 산업단지 진입도로 국고지원 대상을 국가산업단지 및 30만㎡ 이상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로 확대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1997년 사업에 착수한 이후 2014년까지 총 148건, 411km를 완료하였고, 2015년에는 7,610억원을 투자해 77건, 171.7km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표 2-2-16 산업단지 진입도로 연차별 투자비(국고) 현황

(단위 : 억원)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4년
예산	47,582	8,233	8,881	8,391	7,629	7,610

(3) 지역거점조성지원사업(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건설)

국가경쟁력 높이기(10%) 일환으로 지방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 사업비를 국고로 지원하여 산업단지 분양가를 인하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산업단지의 기반시설인 용수공급시설(용수공급관로, 배수지, 정수장 등)을 1998년부터 국고로 전액 지원하여 설치중이며, 사업시행은 시·도 자율편성사업으로 지자체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있다.

2014년까지 149개 산업단지에 공업용수도건설지원(국고지원 9,021억원)을 하였고, 2015년에는 51개 산업단지에 공업용수도건설지원(국고지원 891억원)을 추진 중이다.

표 2-2-17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건설 연도별 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지원단지수	사업비	누계사업비
1998	9	15,500	15,500
1999	12	21,383	36,883
2000	10	21,383	58,266
2001	11	20,641	78,907
2002	7	1,898	80,805
2003	8	6,775	87,580
2004	8	10,742	98,322
2005	10	15,970	114,292
2006	11	37,180	151,472
2007	12	34,320	185,792
2008	16	47,064	232,856
2009	22	50,684	283,540
2010	49	101,234	384,774
2011	63	155,971	540,754
2012	68	135,708	676,453
2013	64	119,134	795,587
2014	51	106,563	902,150
2015	51	89,065	991,215

제4절 지역기반 연구 활성화로 창조경제 지역확산

1. 창조경제 패러다임의 지역 확산

(1) 창조경제 혁신센터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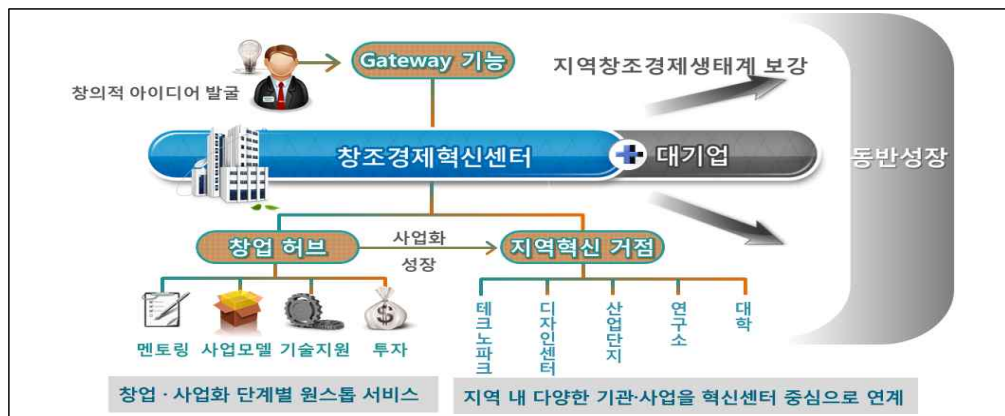
지금까지 많은 사업화와 창업 관련 정책이 수립·시행되었지만 창업·사업화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 요소로서 현재의 생태계에서 부족하다고 판단된 대기업의 경험과 신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소스(open source) 공간을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우수 인재가 상주하며 지역에 기여하는 경제시스템과 대기업·중소기업·벤처·창업기업 간 유기적 생태계 조성 기반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을 추진하게 되었다.

	<table border="1"> <tr> <td>대구 (14.9월)</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Lab, 벤처파트너스데이 등 창업·벤처 육성 • 섬유·자동차부품 등 전통산업 재도약 지원 </td></tr> <tr> <td>대전 (14.10월)</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드림벤처스타 글로벌벤처스타 등 글로벌진출 지원 • 공공연구성과 사업화 디자인씽킹 등 창의인재 육성 </td></tr> <tr> <td>전북 (14.11월)</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개 탄소소재 히든 챔피언 선정 • 파이낸스 존 설치, 400억 규모 펀드 조성 </td></tr> <tr> <td>경북 (14.12월)</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 공장 원스톱 서비스 제공 • IT의료기기, 로봇 등 7대 상생협력 프로젝트 추진 </td></tr> <tr> <td>광주 (1월)</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산업 창업 및 수소연료전지차 지원 • 법률존 설치, 서민 창조경제기금(100억) </td></tr> <tr> <td>충북 (2월)</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바이오허브와 제로에너지하우스 시범사업 • 특허지원창구 구축 </td></tr> <tr> <td>부산 (3월)</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혁신상품 인증제 시행 • 안전,관광분야 IoT 7대 시범사업 </td></tr> <tr> <td>경기 (3월)</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세대 글로벌 게임, 핀테크, 헬스케어 산업 육성 • 전국 창조기업의 글로벌 진출의 허브 </td></tr> <tr> <td>경남 (4월)</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카트로닉스의 허브 • 향노화 천연물의 고부가가치 제품화 </td></tr> <tr> <td>강원 (5월)</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빅데이터 기반 창업, 맞춤형 사업화 지원 • 클라우드싱 플랫폼 구축 관망헬스케어 등 사업화 </td></tr> <tr> <td>충북 (5월)</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양광 클러스터 구축 중소벤처 글로벌 진출 지원 • 명품 농산품 브랜드화(스토리텔링) </td></tr> </table>	대구 (14.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Lab, 벤처파트너스데이 등 창업·벤처 육성 • 섬유·자동차부품 등 전통산업 재도약 지원 	대전 (14.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드림벤처스타 글로벌벤처스타 등 글로벌진출 지원 • 공공연구성과 사업화 디자인씽킹 등 창의인재 육성 	전북 (14.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개 탄소소재 히든 챔피언 선정 • 파이낸스 존 설치, 400억 규모 펀드 조성 	경북 (14.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 공장 원스톱 서비스 제공 • IT의료기기, 로봇 등 7대 상생협력 프로젝트 추진 	광주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산업 창업 및 수소연료전지차 지원 • 법률존 설치, 서민 창조경제기금(100억) 	충북 (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바이오허브와 제로에너지하우스 시범사업 • 특허지원창구 구축 	부산 (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혁신상품 인증제 시행 • 안전,관광분야 IoT 7대 시범사업 	경기 (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세대 글로벌 게임, 핀테크, 헬스케어 산업 육성 • 전국 창조기업의 글로벌 진출의 허브 	경남 (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카트로닉스의 허브 • 향노화 천연물의 고부가가치 제품화 	강원 (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빅데이터 기반 창업, 맞춤형 사업화 지원 • 클라우드싱 플랫폼 구축 관망헬스케어 등 사업화 	충북 (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양광 클러스터 구축 중소벤처 글로벌 진출 지원 • 명품 농산품 브랜드화(스토리텔링)
대구 (14.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Lab, 벤처파트너스데이 등 창업·벤처 육성 • 섬유·자동차부품 등 전통산업 재도약 지원 																						
대전 (14.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드림벤처스타 글로벌벤처스타 등 글로벌진출 지원 • 공공연구성과 사업화 디자인씽킹 등 창의인재 육성 																						
전북 (14.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개 탄소소재 히든 챔피언 선정 • 파이낸스 존 설치, 400억 규모 펀드 조성 																						
경북 (14.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 공장 원스톱 서비스 제공 • IT의료기기, 로봇 등 7대 상생협력 프로젝트 추진 																						
광주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산업 창업 및 수소연료전지차 지원 • 법률존 설치, 서민 창조경제기금(100억) 																						
충북 (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바이오허브와 제로에너지하우스 시범사업 • 특허지원창구 구축 																						
부산 (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혁신상품 인증제 시행 • 안전,관광분야 IoT 7대 시범사업 																						
경기 (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세대 글로벌 게임, 핀테크, 헬스케어 산업 육성 • 전국 창조기업의 글로벌 진출의 허브 																						
경남 (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카트로닉스의 허브 • 향노화 천연물의 고부가가치 제품화 																						
강원 (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빅데이터 기반 창업, 맞춤형 사업화 지원 • 클라우드싱 플랫폼 구축 관망헬스케어 등 사업화 																						
충북 (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양광 클러스터 구축 중소벤처 글로벌 진출 지원 • 명품 농산품 브랜드화(스토리텔링) 																						

2014년 3월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을 시작으로 2014년 12월말 현재 대구(2014년 4월), 전북(2014년 11월), 경북(2014년 12월) 4개 지역에 개소를 완료하고 주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혁신센터운영위 및 센터간 협력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창조경제혁

신센터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한편 전담기업(지역 창조경제생태계 보강)을 접목하는 추진체계 구성을 통해 정책적 지원 기반을 구축하여 지역특성과 전담기업 강점분야와 연계되는 지역특화사업을 추진 중이다.

아이디어부터 가치창출(idea to value)까지 지원하는 창업허브,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혁신거점의 역할을 수행한다. 세부적으로는 우수 아이디어를 6개월간 집중 멘토링하여 기술창업을 지원하는 “6개월 챌린지 플랫폼”과 “민간투자 연계형 기술사업화(R&BD)”을 통해 창업성공기업을 육성하고 센터별 전담직원이 고객에게 창업·중소기업 지원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함으로써 모든 지역역량을 최대한 연계한 밸류체인 강화와 우수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발굴을 통해 멘토링, 투자, 판로개척, 해외진출을 직접 지원하고 있다.



① 대구센터(출범: 2014년 9월 15일) : 민관협력 혁신센터 운영모델 제시

주요 사업으로 C-Lab 공모전을 통해 창업기업 발굴, 자금지원, 해외진출 전주기 지원과 벤처파트너스데이를 활용한 지역내 중소·벤처 투자와 성장지원 및 패션 디자인 센터 운영으로 민관협력형 혁신센터 운영모델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C-Lab 공모전> '14년 11월 '아이디어만 있으면 당신이 주인공입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창업 팀 공모전을 진행하여 전국에서 3,800여건의 아이디어가 접수(경쟁률 200:1)되어 **최종 18개 팀을 선정 C-Lab에 입주**. 17개팀이 법인설립을 완료하고 서울 등 수도권에서 **대구로 본사를 옮기는 사례***도 발생. 입주기업에는 초기 지원금(2천만원), 우수 기업에는 C-펀드를 통해 기술개발금(2억원), 삼성의 해외거점을 통해 해외진출까지 지원

* '존규'(탈부착 백팩개발, 서울→대구), '에픽옵틱스'(차량편의장비, 성남→대구)

<사례1> 대구·경북지역의 우수 중소기업 대상으로 투자 지원을 위한 '**삼성벤처파트너스데이**'를 실시하여 총 **14개 기업에 22.5억원 투자를 확정**하였으며, 본 프로그램을 통해 3억원을 투자받은 의료용 모니터를 생산하는 벤처기업 '**코제**'는 판로가 확대되어 중국과 태국에서도 주문이 들어오고, 글로벌 의료장비 회사와도 납품을 계획하는 등 성장기반을 확충

<사례2>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확대출범식에서 대구시-삼성-대구창조센터와 자금지원 및 공동 기술개발 협약을 맺은 '**(주)성진포머**'는 초정밀 냉간단조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한 자동차부품 생산업체로서 **삼성으로부터 30억원을 투자받았으며, 삼성 협력업체로 등록**되어 2015년 연매출 1천억원을 목표로 하는 등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성장을 기대

<사례3>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C-Lab 입주기업인 '**(주)인터태그**'(NFC기반 방문자 관리 및 출입 통제시스템 개발)와 '**(주)사운드브릿지**'(모바일 앱 기반 보청솔루션 및 전용이어폰 개발)는 미래부 미국현지 센터(KIC)와 연계하여 미국보스턴에 진출(3월~4월)하여 해외 현지 맞춤형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전문 멘토링 등 완료

② 대전센터(2014년 10월 10일) : 산학연 협력 모델(대전-Connect) 제시

드림벤처스타, 글로벌벤처스타 공모전을 통해 10개월간 글로벌 진출까지 지원하고 디자인 씽킹(Design-Thinking), T-아카데미, Fab-Lab 트럭 등 창의인재 육성사업과 지역 내 강소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SK동반성장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산학연 협력모델을 선도하고 있다.

<드림벤처스타 공모전> '14년 8월, ICT, 에너지, BT, 반도체 분야의 창업 지원 공모전을 진행하여 180여개의 업체가 응모(경쟁률 18:1)되어 **최종 10개팀을 선정**. 대전센터에 입주. 현재, **12.6억원의 매출**이 발생하였으며, **17명의 신규인력채용**으로 고용창출 효과도 발생. 입주 기업에는 창업초기자금(2천만원), 전담멘토링, 기술개발자금(팀별 최대 2억원), 해외진출 등 사업화 전반에 걸쳐 지원

<글로벌벤처스타 공모전> '14년 11월,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ICT기반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고자 공모전을 진행하여 19개 업체가 응모(경쟁률 6:1)되어 최종 3개팀을 선정. 팀당 1천만원의 초기자금 지원을 완료하였고, 본격적인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1단계로 **3월 한 달 동안 SK텔레콤아메리카의 자회사인 이노파트너스를 방문**하여 해외에서 활동 중인 업체 대표자와의 만남을 진행하여 해외 사업 환경을 이해하고 **해외 VC와 고객사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소개와 투자 상담을 진행** 완료

<사례1> 총 **13개 기업에 61.3억원의 투자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이 중 '엑센', '태그웨이' 기업 등은 풍부한 투자금을 기반으로 기술개발에 집중할 수 있어 상품 출시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사례2> '드림벤처스타' 기업으로 선정되어 입주해 있는 '**태그웨이**'는 체운을 활용하여 전기

를 만드는 기술로 유네스코에서 선정하는 ‘인류의 삶에 큰 영향을 줄 세계 10대 IT 기술’ 중 그랑프리를 수상('15.2.4), 국내외 50여개 업체와 제품관련 협의를 진행 중

<사례3>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어플리케이션 ‘잼’) 업체인 ‘노바토’는 대전센터의 연계 지원으로 코넥스에 상장되어 있는 ㈜판도라티비와 11억원 규모의 인수합병('14.12월)을 이루어 2013년 창업 후 단기간에 성공스토리를 창출

<사례4> ‘드림벤처스타’ 기업으로 선정되어 입주해 있는 ‘(주)씨메스’는 산업용 3D 센서 제조업체로 국내 주요 자동차 부품업체에 장비를 납품하여 7억원 규모의 수주 실적을 올렸으며, 해외 업체인 콘티넨탈 필리핀과 납품 계약을 체결('14.12월)

③ 전북센터(2014년 11월 24일) : 기술금융 파이낸스존, 탄소소재 특화산업 육성

지역특성과 전담기업 강점분야와 연계되는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창조경제 혁신센터의 전략에 부합하도록 ‘탄소소재분야 히든챔피언 육성’을 위한 특화된 인큐베이팅, 기술금융 종합상담 및 금융상품 서비스 특화존 설치, 농생명 자산의 고부가가치 상품화 및 전통문화 자원을 활용한 사업화 지원을 통해 전북지역의 성장을 이끌 기반을 마련하였다.

<탄소소재> 탄소소재의 적용이 가능한 8대 아이템*을 발굴하여 관련 지역 중소기업과 예비 창업자에게 탄소소재 공급, 기술경험전수, 멘토링 등을 통해 사업화 및 창업을 진행 중으로, 향후 탄소특화 창업보육센터 건립(전북 호성공장내 500평 규모, '15.9월)을 완료하여 창업·사업화를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할 계획임. ‘JEC Europe 2015’(파리, 3월)에 지역의 11개 탄소 업체를 참가시켜 수출상품·홍보 등 해외 판로개척을 지원

<사례> 탄소관련 업체인 ‘(주)동우’ 및 ‘불수원신소재’는 JEC Europe 2015(파리, '15. 3월)에 전북도와 (주)호성의 전북관과 호성관 운영에 공동참여로 MPE Group 등 30여건의 수출 상담실적과 현재 5개 업체의 샘플 및 자재 요청에 대한 단가 협상을 추진 중인바, 해외마케팅 효과가 극대화되고 있음

<농생명·문화> 현재까지 죽염, 유자차, 막걸리 등 수출 가능성이 높은 전략업체 12개*를 선정('15.2~3월)하여 브랜드 개발과 함께 호성 해외네트워크**를 통한 판로개척(해외 시장정보 제공, 해외 거래처 연결 등) 중

* 죽염(한국로하스죽염), 닭가공(참프레), 유자차(두레원), 캔커피(청맥), 막걸리(동진주조), 와사비(농미원), 고추장(참고을), 김부각(깃듬), 만두(GMF), 수산물(참바다), 오리갈비(알티엠코리아), 귀뚜라미(239)

** 아시아(13개국, 29개소), 유럽(8개국, 11개소), 북미(미국, 9개소), 남미(3개국, 6개소) 등

④ 경북센터(2014년 12월 17일) : 중소 제조업 대상 스마트 팩토리 사업

중소기업의 스마트 팩토리 도입에 필요한 컨설팅, 설비보급, 금융지원 제공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업으로 新산업 창출을 위한 IT의료기기, 첨단로봇, 탄소복합부품, 3D 영상, 스마트센서, 초정밀 금형가공, 문화 콘텐츠 등 7개 유망분야 시범사업 추진과 경북의 풍부한 문화 및 농업자산을 활용한 사업화 지원으로 경북지역의 차별화된 발전의 토대를 구축하였다.

<스마트팩토리> 노후화된 구미산단 소재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스마트 팩토리를 보급할 61개 과제를 발굴하여 진행 중, 삼성 공정 전문가가 150회 이상의 컨설팅을 통해 2개 과제 완료('15년 100건 목표)

<사례> 스마트폰 케이스 제조업체인 '(주)인탑스'는 경북센터의 스마트팩토리사업을 통해 공정 시뮬레이션을 도입하여, CNC(수치제어공작기) 금형 가공기 생산 공정의 자재 이동 동선을 개선하여 생산성을 효율화함(물류동선 33%, 생산소요시간이 11% 단축되었고, 작업효율이 18.8% 향상됨)

(2) 지역연구개발지원단 육성

정부는 지방 R&D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지방 R&D 조사·분석, 기획, 평가 전담기관을 지정육성하기 위해 2007년 7월 '지역별 R&D 전담 추진기구 설치·운영 방안'을 수립·추진하였다.

지역 연구개발지원단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50 : 50비율의 Matching Fund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 내 R&D 사업의 조사·분석, 지역의 과학기술 관련 정책 지원, 지역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관리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다. 2007년 12월 부산을 시작으로 2014년 12월말 기준으로 15개 시·도에 연구개발지원단을 지정·육성하고 있다.

2007년 부산을 시작으로 충북(2008년), 대구·전북(2009년), 경기(2010년), 광주(2012년), 강원·경남·경북·인천·전남(2013년), 대전·울산·제주·충남(2014년) 등 15개 지역 연구개발지원단을 지역 R&D 사업의 통합·조정 Control Tower로 육성하였다. 지역 R&D 전담기구로 육성함으로써 지역 R&D 정책의 효율성 제고 및 지역 중심 R&D 조사·분석·기획 역량을 높였다.

표 2-2-18 지역연구개발지원단 현황

구분	부산	충북	대구	전북	경기	광주	강원	경북
지정 년도	2007년	2008년	2009년	2009년	2010년	2012년	2013년	2013년
주관 기관	부산TP	(재)충북 지식산업 진흥원	대구TP	전북TP	(재)경기 과학기술 진흥원	(재)광주 과학기술 교류협력 센터	(재)강릉 과학산업 진흥원	(재)구미 전자정보 기술원
구분	전남	경남	인천	충남	울산	제주	대전	
지정 년도	2013년	2013년	2013년	2014년	2014년	2014년	2014년	
주관 기관	전남TP	경남TP	인천TP	충남 TP	울산TP	제주TP	대전TP	

또한 지역별 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구축을 통한 정책협력체계 기반을 확립했다. 이를 통해 지자체와 지역 R&D 거점기관 간 상호보완적 연계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하여 지역별 발전방향 제시하였다. 이 중 지역 R&D 조사·분석 체계 표준화를 통해 중앙 및 지방정부 간 정책지원 시스템 확립 및 자가점검체계를 통한 개선방안 모색하였다. 한편, 지역 과학기술 정책 및 방향, 지역 혁신 및 클러스터, 지역 조사·분석 및 기획 능력 제고하였다. 사업 참여인력의 역량강화 및 성과확산 기회(2014년 9월), R&D 전담인력의 글로벌 지식확대 기획관리 교육(2014년 10월), 지자체 담당관과 함께 과학기술역량강화 교육을 통한 지역혁신체계 구축(2014년 12월) 등을 진행하였다.

2. 지역 R&D 기반구축 및 역량강화

(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1) 기초과학연구원 연구 및 운영

세계적 수준의 기초과학연구를 통해 과학벨트를 세계적 지식창출의 1차 연구단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초과학연구원(2011년 11월 설립)은 2012년 5월 선정을 시작으로 2014년까지 5차에 걸쳐 총 24개 연구단을 구성·운영 중이다. 또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포럼(2013년 5월) 개최 및 영국왕립학회와의 MOU 체결(2013년 11월), IBS-영국 왕립학회 Research Conference 개최(2014년 10월) 등을 통해 세계적 기초연구 기관과의 협력기반을 다져 나갔다.

표 2-2-19 기초과학연구원 연구단 구성 현황 (2014.12월 기준)

분야	연구단장	연구단 유형	연구 분야	연구단명
생명과학	신희섭	본원	뇌과학	인지 및 사회성 연구단
	김은준	캠퍼스(KAIST)	뇌과학	시냅스 뇌질환 연구단
	Charles Surh	캠퍼스(POSTECH)	면역학	면역 미생물 공생 연구단
	남홍길	캠퍼스(DGIST)	식물생물학	식물 노화·수명 연구단
	김빛내리	외부(서울대)	분자세포생물학	RNA 연구단
	김성기	외부(성균관대)	시스템 뇌과학	뇌과학 이미징 연구단
	명경재	캠퍼스(UNIST)	게놈 생물학	유전체 항상성 연구단
수학	오용근	캠퍼스(POSTECH)	기하학 수리물리학	기하학 수리물리 연구단
물리	Yannis Semertzidis	캠퍼스(KAIST)	소립자 물리학	우주의 기원 및 대칭성 연구단
	남창희	캠퍼스(GIST)	광학	초강력 레이저 과학 연구단
	노태원	외부(서울대)	응집 물질물리	강상관계 물질 연구단
	이영희	외부(성균관대)	나노구조 물리	나노구조 물리 연구단
	김영덕	본원	입자물리학	핵입자 천체물리학 지하실험 연구단
	염한웅	캠퍼스(POSTECH)	응집물질물리	원자제어 저차원 전자계 연구단
	최기운	본원	이론물리	순수물리이론 연구단
	Sergej Flach	본원	이론물리	복잡계 이론물리 연구단
화학	유룡	캠퍼스(KAIST)	나노과학 및 화학	나노물질 및 화학반응 연구단
	김기문	캠퍼스(POSTECH)	초분자화학	복잡계 자기조립 연구단
	장석복	캠퍼스(KAIST)	유기화학	분자활성 촉매반응 연구단
	현택환	외부(서울대)	나노과학	나노입자 연구단
	Rodney Ruoff	캠퍼스(UNIST)	재료화학	다차원 탄소재료 연구단
	조민행	외부(고려대)	물리화학	분자분광학 및 동력학 연구단
융합	김진수	본원	생화학	유전체 교정 연구단
	Steve Granick	캠퍼스(UNIST)	연성물질 물리화학	첨단 연성 물질 연구단

2) 중이온가속기 구축

과학벨트의 핵심거대연구시설인 중이온가속기 구축을 위해 2011년 12월 기초과학연구원 내 중이온가속기구축사업단을 구성하고 2012년 1월 수립된 「중이온가속기구축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본격적으로 가속기 구축에 착수하였다. 이후, 가속장치 및 실험장치의 개념설계를 시작으로 국제자문위 자문결과 등을 반영하여 상세설계를 완료(2013년 6월) 하였으며, 핵심장치 제작 및 성능시험을 통해 2014년 12월 중이온가속

기의 핵심부품인 초전도가속관(QWR, HWR) 국산화에 성공하였다.

또한, 2014년 4월 기재부 사업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사업기간, 사업범위, 총사업비가 확정되면서 2021년까지 사업 전반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여 효율적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사업범위가 장치구축에서 시설건설까지 확장됨으로써 시설건설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2014년 5월 「중이온가속기 시설건설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2014년 12월 중이온가속기 시설건설 기본설계를 착수하였다.

3) 거점지구 개발 및 기능지구 지원

과학벨트에서 기초연구 분야의 거점기능을 수행하게 될 거점지구는 2011년 5월, 대전 신동·둔곡지구로 지정 되었으나 기초과학연구원 부지가 부지매입비 문제로 신동지구에서 도룡지구로 변경(미래부-대전시 MOU, 2013년 7월)됨에 따라 도룡지구가 2013년 10월에 추가 지정되었다. 이에 따라 2014년 9월에 신동·둔곡지구 개발계획(2012년 11월 고시)을 변경·고시하고, 12월에 실시계획을 수립·고시하였다. 특히, 기초과학연구원건립은 기재부의 과학벨트 조성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한국개발연구원 수행, 2012년 7월~2014년 1월)를 바탕으로 한 총사업비 확정(2014년 4월)에 따라 도룡지구 내 기존시설 철거공사 및 설계 등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였다.

거점지구의 기초연구활동을 배후 지원하고 기초과학 연구성과를 사업화하고자 지정된 기능지구(천안, 청주, 세종)는 당초 목표한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프라 조성 및 특화 분야 중심의 공동연구개발, 인력양성 등 혁신역량 강화에 중점 지원하였다. 특히 기능지구 학연산 융합의 공간기반이 될 SB플라자는 건립 기본계획을 2014년 9월에 확정하고 사업에 착수하였으며, 2013년 이어 기능지구 소재 대학을 대상으로 특화분야별 과학-비즈니스 융합전문가(PSM) 양성 전문과정 및 학연산 응용·개발 연구 및 사업화 역량 강화사업을 지원하였다.

(2) 연구개발특구 육성

연구개발특구 육성 사업은 특구 내에 있는 대학·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상호협력을 활성화하며,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기술의 혁신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은 「지식창출-기술확산-창업의 생태계가 작동하는 4만달러 혁신경제의 견인차로 도약」이라는 비전하에 (i)지속발전형 혁신클러스터 육성, (ii)기술-창업-성장이 선순환하는 창조생태계 조성, (iii)특구 커뮤니티 강화, (iv)창조적 연구 사업화 공간구축 및 생활환경 개선 등을 목표로 연구성과의 사업화 촉진, 특구 창업·글로벌지원 및 4개 특구 간 연계 활성화를 통해 기술개발→사업화→재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하고 국가 신 성장 동력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표 2-2-20 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의 세부내용

구 분	사 업 명	세부내용
연구개발특구육성 (R&D) 추가연구개발특구육성 (R&D)	특구연구성과 사업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찾기 포럼 및 기술이전 촉진사업 등 기술발굴·연계 공공기술이전 및 연구소기업·특구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기술이전 사업화 연구소기업 설립지도, 사전기획, 기술가치평가 등을 통한 전략육성 공공연구기관 기술의 연구성과 사업화 촉진
	특구창업·글로벌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업 엑셀러레이터 기능 강화 및 창업 아이템 검증역학 고도화 특구 특화성장 육성사업을 통해 특구기업 체질강화 및 특화사업 추진 기술, 기업의 해외진출과 글로벌 자금의 특구유치 촉진
연구개발특구육성 (非R&D)	글로벌 환경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구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발 및 홍보 특구기반시설 구축 및 관리 연구개발특구 간 연계 활성화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 투자지원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 투자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개발특구 펀드 출자 및 운영·관리 특구내 기술금융 활성화 및 투자

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의 연구개발특구 육성 정책에 따라 2005년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하여 (i)특구 내 우수기술 발굴·기술이전·연구소기업 설립 및 육성을 통한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ii)기술창업 및 기술사업화 활성화, 산·학·연 간 네트워크 강화 등을 위한 벤처생태계 조성, (iii)외국인 투자유치,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촉진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 강화 등을 통한 글로벌 환경 구축, (iv)연구개발특구 내 기술사업화 투자지원을 위한 펀드 조성 및 운영을 핵심 추진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아울러 2011년 광주·대구연구개발특구 및 2012년 부산연구개발특구를 추가 지정하여 각 특구별로 비교우위를 점하는 분야 및 산·학·연 특성을 살려 전략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확산 촉진, 글로벌 혁신클러스터로 도약, 일자리

창출, 국가·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 과학기술역량 제고에 주력하고 있다.

표 2-2-21 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황

구 분	대덕특구	광주특구	대구특구	부산특구
지정연도	'05.7	'11.1	'11.1	'12.11
범 위	대전시 유성구·대덕구 일원	광주시·광산구·동구·북구 및 전남 장성군 일원	대구시 동구·북구·달서구·달성군 및 경북 경산시 일원	부산시 강서구·금정구·남구·영 도구·사하구·부산진구· 연제구 일원
면 적	총 67.8km ²	총 18.7km ² (광주 15.0km ² , 장성 3.7km ²)	총 22.2km ² (대구 16.2km ² , 경산 6.0km ²)	총 14.1km ²
특화분야	·IT 융복합 ·바이오메디컬 ·나노융복합 ·신재생에너지	·광기반 융복합 ·차세대전지 ·친환경 자동차 부품 ·스마트케어가전	·스마트 IT 융합기기 ·의료용 융복합기기 ·그린에너지 융복합 ·메카트로닉스 융복합	·해양플랜트 엔지니어링 및 서비스 ·조선해양플랜트기자재 ·그린해양기계

표 2-2-22 연도별 연구개발특구 예산 추이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 연구개발특구육성(R&D)	6,908	12,950	23,060	25,517	34,110	33,116	33,116	34,706	34,706	38,706
1. 연구성과 사업화	4,500	9,890	18,500	20,982	26,325	26,416	27,216	28,906	28,206	32,406
2. 벤처생태계 조성	2,408	3,060	4,560	4,535	7,785	6,700	5,900	5,800	6,500	6,300
□ 연구개발특구육성(非R&D)	3,092	12,074	26,940	35,983	31,890	10,602	13,502	29,046	10,029	9,839
1. 글로벌 환경구축	2,270	7,950	22,220	30,902	26,806	5,365	6,670	22,404	2,075	1,495
2. 특구진흥재단 운영지원	822	4,124	4,720	5,081	5,084	5,237	6,832	6,642	7,954	8,344
□ 추가연구개발특구육성(R&D)	-	-	-	-	-	-	10,000	14,000	27,000	30,000
1. 연구성과 사업화	-	-	-	-	-	-	8,600	12,450	23,750	26,060
2. 벤처생태계 조성	-	-	-	-	-	-	1,400	1,550	3,250	3,940
□ 연구개발특구기술사업화투자지원	-	-	-	-	-	-	-	10,000	10,000	5,000
계	10,000	25,024	50,000	61,500	66,000	43,718	56,618	87,752	81,735	83,545

연구개발특구는 우수기술 발굴→이전→사업화(R&BD)의 단계를 거쳐 글로벌 혁신 클러스터로서 큰 폭으로 성장하였다. 외형적으로 연구개발특구가 지정된 2005년에 687개로 시작한 입주기업수는 2013년 12월 기준 3,018개로 약 339% 증가하였다. 특히 이 중 코스닥 상장기업수는 2005년 11개에서 2013년 64개로 약 482% 증가하여 양

적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 성장도 도모하였다. 이와 함께 연구개발특구 내 입주기업의 매출액은 2.5조원(2005년)에서 35.4조원(2013년)으로 증가하여 매우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혁신역량 측면에서는 연구개발비 투입규모가 1.8조원(2005년)에서 8.3조원(2013년)으로 약 361% 성장하였으며, 연구인력은 16,759명(2005년)에서 54,295명(2013년)으로 약 224% 증가하였다.

표 2-2-23 연구개발특구 주요 통계

(단위 : 백만원)

구분	2005년	2013년	증감(%)
입주기업 수 (개)	687	3,018	339
입주기업 매출 (조원)	2.5	35.4	1,316
연구개발비 (조원)	1.8	8.3	361
연구인력 (명)	16,759	54,295	224

사업지원 측면에서도 전반적으로 양호한 성과와 파급효과를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성과 사업화의 경우 2005년 연구개발특구 지정 이후 10년(2005년~2014년) 간 3,603억원을 지원하여 1,777건의 기술을 이전하였으며, 기술이전금액이 1,040억원에 달성하였다. 또한, 기술-창업-성장이 선순환하는 창조생태계 조성을 통해 2014년까지 연구소기업 89개, 첨단기술기업 114개가 설립 및 지정되었다. 기술사업화 투자지원의 경우 2014년까지 총 1,250억원의 펀드를 조성하여 30개 기업을 대상으로 601억원 투자하였다. 더불어 2008년~2014년까지 개발도상국 등을 대상으로 한국형 STP 모델 조성 및 운영에 대한 교육훈련 총 13회(60개국, 253명 참여) 실시, STP 정책 수립, 개발 및 운영을 위해 3개국을 대상으로 전략컨설팅 지원하였다. 또한, 특구 내 및 특구 간 산·학·연의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특구 커뮤니티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또한 특구 내 지원시설 등 인프라구축(광주이노비즈센터 건립(2015년 12월 완공 예정), 부산글로벌테크비즈센터 건립(2014년 신규) 및 특구 입주기관 민원서비스와 특구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으로 연구개발기능과 생산기능이 결합된 혁신클러스터 사업화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였다.

(3) 지역특화맞춤형 기술이전

정부는 과학기술진흥센터 등의 기술사업화 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기술시장 활성화

를 도모하고자 2014년부터 지역기업의 기술수요를 반영하여 지역대학, 출연(연)등의 유망기술을 발굴·이전하여 연구성과의 사업화 촉진하기위해 지역특화맞춤형 기술이전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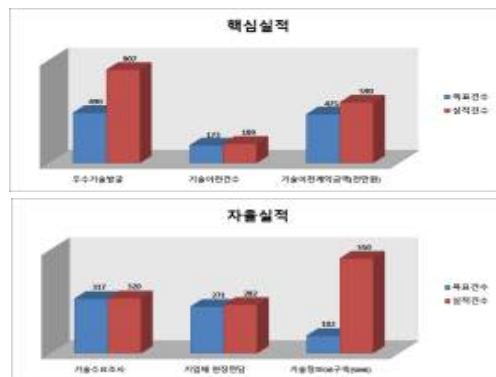
지역특화맞춤형기술이전사업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80 : 20비율의 Matching Fund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방과학기술진흥센터가 주관하는 민간TLO 및 공공TLO(지역대학 및 출연(연) 등)간 컨소시움을 구축, 활용하여 지역 맞춤형 기술거래 촉진을 도모하고, 지역발전을 선도하고자 2014년부터 시작하고 있다. 2014년도 지역기업의 기술수요를 반영하여 지역대학, 출연(연)등의 유망기술을 발굴·이전하여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있다.

【핵심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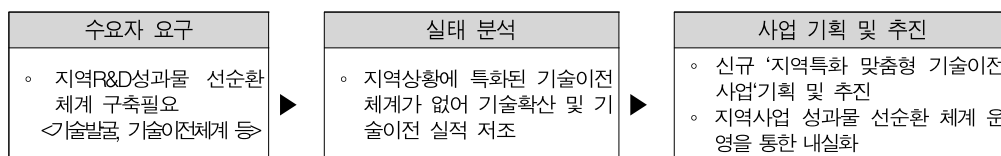
- 우수기술 발굴 907건
- 기술이전 124건
- 기술이전 계약금액 63.17억원

【현장 수요발굴】

- 기업수요조사 320건
- 기업현장면담 282건
- SMK 작성 550건



또한 지역발전 전문가 및 실무진 WG 개최를 통해 지역 R&D사업기술이전시스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지역특화 맞춤형 Action Plan을 마련하였다



(4) 지방과학연구단지 육성

정부는 국가과학기술 혁신 및 지방과학기술 진흥을 위해 연구기관, 대학, 기업부설 연구소 등 2개 이상의 기관이 입주한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과학연구단지로 지정하여 산·학·연이 한 곳에 모여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 협력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2003년 5월 ‘지방과학연구단지 육성사업’을 수립·추진하였다. 2004년 10월 광주, 전북 지방과학연구단지 지정을 시작으로 2013년 12월말 기준으로 10개 단지를 지정·육성하고 있다.

「과학기술기본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지방과학연구단지는 지역계획 및 특성에 맞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대해 5년 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50 : 50비율의 Matching Fund로 총 300억원 내외(정부 150억원 내외)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표 2-2-24 지방과학연구단지 지정 및 사업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단지지정(누계)	1개	3개	4개	6개	8개	10개	10개	10개	10개	10개
센터건립(누계)	-	-	-	1개	1개	3개	6개	8개	9개	10개
예산	3,000	8,000	9,000	17,720	13,320	17,300	16,000	26,100	26,100	10,700

* 예산은 당해연도 국비 기준임(지방비, 민자 제외)

표 2-2-25 과학기술진흥센터 현황

지 역	사업기간	센터건립	주관기관
광 주	'04~'08	과학기술진흥교류협력센터 건립	(재)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
전 북	'04~'09	전북 R&D Core 구축·연구인력 지원	(재)전북테크노파크
충 북	'05~'09	유비쿼터스기반 U-플랫폼센터 건립·장비 구축	(재)충북지식산업진흥원
강 원	'06~'12	강원 과학기술진흥센터 건립	(재)강릉과학산업진흥원
부 산	'07~'12	부산 과학기술진흥센터 건립	(재)부산테크노파크
대 구	'07~'12	대구과학기술진흥센터 건립	(재)대구테크노파크
전 남	'08~'13	전남 과학기술진흥센터 건립	(재)전남테크노파크
경 북	'08~'13	경북 과학기술진흥센터 건립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울 산	'09~'14.12	울산 과학기술진흥센터 건립	(재)울산테크노파크
경 남	'09~'14.1	경남 과학기술진흥센터 건립	(재)경남테크노파크

사업의 주요 내용은 크게 지역 연구개발 거점으로서 센터 건립, 연구 인프라 구축 및 R&D 연구 지원 등으로 각 연구단지별 상황 및 특색에 맞춰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인프라 조성이 완료된 과학연구단지에 대하여 지역대학·출연(연)과 연계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전국 10개 시·도에 과학연구단지를 지정하고 과학기술진흥센터를 건립하여 지역의 산·학·연 및 R&D 유관기관이 한곳에 모여 연계·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5) 건설교통기술지역특성화사업(건설교통기술 지역거점센터)

수도권에 집중된 건설교통 분야 연구 인프라를 지역에 분산시키고, 지역 전문인력 양성, 연구 네트워크 구축, 연구성과 홍보, 기술사업화 지원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의 국토교통 R&D 허브”를 구축하기 위하여 건설교통기술지역특성화사업(舊 지역기술혁신사업) 내 건설교통기술 지역거점센터 분야를 추진하고 있다.

건설교통기술 지역거점센터 분야는 전국을 6대 권역으로 구분하여 2013년부터 현재까지 총 52억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하였으며, 2020년까지 예산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표 2-2-26 건설교통기술 지역거점센터 분야 지원 현황 및 투자계획(2013~2020년) (단위 : 백만원)

연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정부예산	1,104	4,136	6,572	9,500	11,000	12,000	13,000	13,000	70,312

표 2-2-27 건설교통기술 지역거점센터 구축 현황(2013~2014년)

구축연도	구분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2013년	충청권 건설교통기술 지역거점센터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박형근
	강원권 건설교통기술 지역거점센터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강현찬
	동남권 건설교통기술 지역거점센터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	윤경구
2014년	호남권 건설교통기술 지역거점센터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김화중
	대경권 건설교통기술 지역거점센터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김영상
	제주권 건설교통기술 지역거점센터	제주도자치개발공사	고기원

2014년 건설교통기술 지역거점센터 분야의 가장 큰 성과로는 전국 6개 권역의 지역거점센터 구축을 완료하여 “지역의 국토교통 R&D 허브”로서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각 권역에서는 지역의 산업발전과 연계한 특성화주제를 발굴하여 신규 연구개발과제를 착수하였으며, 지역의 전문인력 양성 및 신규 인력채용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강원권 건설교통기술 지역거점센터에서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국내 최초로 봅슬레이·루지·스켈레톤 겸용 트랙의 설계 및 시공기술을 개발하여 국내 건설회사에 기술이전을 실시하였다. 이로써 순수 국내 기술력으로 국내 건설회사가 평창 봅슬레이·루지·스켈레톤 겸용 트랙을 건설함으로써 100억원 이상의 수입대체 효과를 달성하였다.

그림 2-2-9 건설교통기술 지역거점센터 분야 주요 성과(2014년)



〈 올림픽 조직위 Mock-UP 시공현장 테스트 〉

〈 봅슬레이·루지·스켈레톤 검용 트랙 조감도 〉

건설교통기술 지역거점센터 분야는 앞으로도 지역산업과 연계한 특성화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지역의 연구인프라 조성 및 지역 산업발전에 기여할 예정이다.

(6) 건설교통기술지역특성화사업(지역특화기술개발)

지역의 자연재해, 기후변화, 환경문제 등 현안을 해결하고 지역의 낙후된 건설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교통기술지역특성화사업(舊 지역기술혁신사업) 내 지역특화기술개발 분야를 추진하고 있다.

표 2-2-28 지역특화기술개발 분야 지원 현황(2005~2014년)

(단위 : 백만원)

연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합계
정부 예산	2,000	4,000	8,000	6,270	7,000	7,000	7,000	6,300	5,196	3,864	56,630

지역특화기술 분야는 전국을 7대 권역(5+2 광역경제권)으로 구분하여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총 566억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하였다. 2014년 지역특화기술개발 분야의 주요성과로는 7건의 설계기준·시방서·지침을 제안하였으며, 32건의 연구성과를 지역현장에 적용하여 지역의 현안 및 애로사항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였다.

특히, “높은 파도에 따른 해안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수중 구조물 개발(경북대학교, 김화중)” 과제에서는 국내 연안특성을 고려하고 기존 제품 대비 파랑제어성능을 약 40% 개선한 한국형 해양설치용 다기능 인공리프 개발을 성공하였으며, 이로 인해 정

부의 연안정비사업비가 15%(2,500억원)이상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해양 문화공간을 위한 정주형 플로팅 건축 설계기술 개발(군산대학교, 문창호)” 과제에서는 플로팅 건축물 계획 및 구조설계 기준을 개발하여 국내 플로팅 건축시장의 초석을 마련하였으며, “환경친화적 연안역 개발을 위한 기술 개발(공주대학교, 이병식)” 과제에서는 충남 서해안 연안역의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녹색기술 개발을 위하여 하이브리드 인공습지 설계 및 유지관리 기술을 개발하였으며, 충남 태안군 등 현장에 적용하여 지역 현안을 해결하였다. 그리고 “제주도 물순환 해석 및 수자원 관리 기반 구축(제주대학교, 양성기)” 과제에서는 육지부와 상이한 제주지역의 산지형 극한조건 홍수사상에 대하여 CCTV 영상 기반 유량 해석 기술을 개발하여 현장에 설치하였다. CCTV 영상 기반 유량해석 기술은 기존 유량관측기 대비 정확도가 10% 향상되었으며, 기기당 설치비가 약 3,500만원 감소하였다.

그림 2-2-10 지역특화기술개발 분야 주요 성과(2014년)



마지막으로 지역특화기술개발 분야는 2015년 미래창조과학부 주관 연구개발사업 중간평가에서 국토교통부 연구개발사업 중 유일하게 ‘우수’ 등급(2015년 5월)을 획득함으로써, 그간의 지역특화기술개발 분야의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7)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은 단지의 지정 및 지원을 통하여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 등의 상호협력에 의한 의료연구개발의 활성화 및 연구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함으로써 국내 의료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업이다.

대구·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신약의 경우 합성신약, 의료기기의 경우 IT기반첨단 의료기기로,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는 신약의 경우 바이오신약, 의료기기의 경우 BT기반첨단의료기기로 각각 특성화하였고, 특성화 방향에 따라 시설, 장비 등을 구축하되 필요시 타분야 연구개발 및 융·복합 연구지원도 수행하기로 하였다.

또한 단지 내에 후보물질 도출(혁신신약)과 설계·시제품제작·성능평가(첨단의료기기) 및 초기 임상시험 등과 관련된 취약한 R&D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존 대학·연구소 등의 기초연구 성과를 단지내 인프라를 활용하여 시장성이 있고 임상시험이 가능한 수준으로 제품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임상시험을 거쳐 개발된 첨단제품은 기존단지 등의 생산시설 및 의료기관을 통해 국내외 의료서비스 시장에 공급·확산토록 하며, Core 인프라 구역에 국내 첨단제품 개발과정에서 가장 취약한 핵심 인프라를 제공(신약개발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첨단임상시험센터)할 예정이다. 또한 연구지원시설 구역에 단지 내 혁신신약·첨단의료기기 개발 및 임상시험에 필수적인 세포·실험동물을 위한 생물자원의 안정적 공급 등 지원을 위하여 실험동물센터, 임상시험신약생산센터를 설치한다. 기타 연구기관 입주구역 및 편의시설 구역에 국내·외 우수연구기관 및 연구중심 벤처기업 등이 입주하여 단지 내 핵심인프라 활용 및 공동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원들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편리한 정주여건도 제공할 계획이다.

동 사업은 의약품·의료기기·의료서비스 등 보건의료산업을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2007년 6월 추진방안을 확정하고 2009년 8월 제5차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에서 대구 신서와 충북 오송 등 2개 지역을 복수로 선정하였으며, 2010년 1월 2개의 단지가 상호 보완적으로 특성화 될 수 있도록 의료산업의 중점 육성분야와 지역의 산업 역량 및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성계획을 심의·확정하였다.

2011년 3월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우수한 연구

인력(기관) 유치 및 여건 조성 등을 위해 첨단의료복합단지 제1차 종합계획(2011년~2013년)을 수립하였으며, 성공적인 단지 조성을 위하여 2개의 복수단지 조성을 기준으로 향후 30년간(2009년~2038년) 국가·지자체·민간의 총투자 소요를 8조 6천억원으로 추계하고, 2038년까지 단지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제1차 종합계획에 따라 첨단의료복합단지 핵심연구시설(신약개발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실험동물센터, 임상시험신약생산센터) 인프라 구축을 2011년 10월에 착공하고, 2013년 11월에 완공함으로써, 보건산업 육성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였다. 아울러 2013년 12월에 첨단의료복합단지 제2차 종합계획(2014년~2016년)을 수립함으로써 핵심인프라 활용도 제고방안 마련, 제품화 중심 공동연구 개발 등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3.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통한 연구성과 사업화 촉진

(1) 산학연공동연구법인 지원사업

대학·출연(연)이 연구개발을 통해 산출한 연구성과는 사업화되기에 매우 불안정한 상태이고, 추가적인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의 'death valley' 극복이 필요하다. 또한, 중소·중견 기업들은 3~4년 이후의 주력제품 발굴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으나 핵심 원천기술과 중장기 R&D 투자 수행 여력 부족으로 애로를 겪고 있다.

이에 대학·출연(연)·기업이 함께 공동연구법인 설립을 통해 기초·원천기술의 활용·확산 강화, 기업의 신산업 발굴, 전주기적 R&D 투자 효율성 제고, 기술지주회사 활성화 및 산학협력 촉진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대학·출연(연)이 보유한 기술의 직접사업화를 견인하고, 연구개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산학협력 촉진을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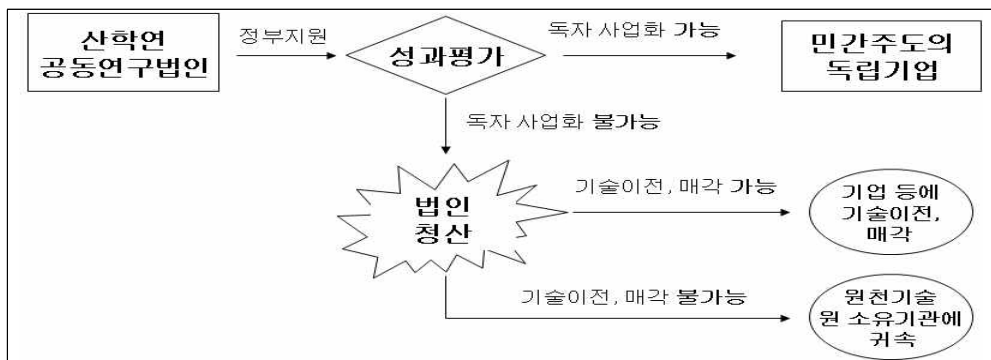
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과학기술기본계획), 동법 제17조(협동·융합연구개발의 촉진), 국정과제 17(산·학·연·지역 연계를 통한 신산업 창출 기능 강화)를 근거로 하여, 2011년에 '산학연공동연구법인 기본계획'을 수립(11월 7일)하였고, 2014년까지 총 5개의 '산학연공동연구법인'을 설립하였다.

대학·출연(연)의 보유기술 중 차세대 먹거리 신산업창출이 가능한 기초·원천 기술을 대상으로 시제품 개발·제작까지의 상용화를 지원하고, 기술의 사용자인 중소·중견 기업이 법인 설립 시 투자·공동연구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상용화 성공률을 극대화 하고 지역산업 발전의 기반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

사업의 추진 절차는 2014년까지는 대학·출연(연)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통해 후보과제를 선정하고 사업화 기획을 추진하는 사업화 기획단계(1단계)와 후보과제 중 상용화 가능성 및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추가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추진하는 법인 설립 및 R&BD(2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하였으나, 2015년부터는 이를 통합하여 진행할 계획이다.

사업완료 후에는 성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상용화에 성공하였거나 성공가능성이 높은 경우 민간 주도의 독립적 계속기업으로 전환, 단독으로 사업화 추진이 곤란할 경우 연구성과물을 민간기업에 기술이전 또는 매각 추진, 기술이전·매각이 불가능할 경우 원천 기술의 원 소유기관 귀속의 3가지 방안으로 후속관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그림 2-2-11 성과평가 및 사후관리체계



동 사업을 통해 2012년에는 아이씨엠(주)(연세대), (주)인지바이오(광주과학기술원), 2013년에는 (주)지안산업(전북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회사), (주)이노캠텍(충남대), 2014년에는 (주)탐앤씨(한밭대)의 공동연구법인이 설립되어,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 신체변화 고감도 바이오센서, 표층처리용 무기결합제, 이온선택성 소재 및 부품, 리튬 2차전지 파우치 분야의 후속연구개발을 진행 중이다. 2015년에는 총 2개의 신규 공동연구법인을 설립할 계획이다.

표 2-2-29 산학연공동연구법인 설립 현황

구분	연세대기술 지주회사	광주과기원	전북지역대학연 합기술 지주회사	충남대	한밭대
법인명	아이씨엠(주)	(주)인지바이오	(주)지안산업	(주)이노캠텍	(주)탐앤씨
대표	이제호	김민곤	문경주	강경석	김동수
사업 분야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 개발	신체변화 고감도 바이오센서 개발	표층처리용 무기결합재 개발	이온선택성 소재 및 부품 개발	리튬 2차 전지 파우치
자본금	5억원	14.8억원	5.95억원	1.84억원	4.05억원
출자 기관 (지분)	○ 연세대기술지 주회사(90%) ○ 아이진(주) (10%)	○ 광주과학 기술원(38.7%) ○ 한국생명공학 연구원(41.8%) ○ (주)인포피아 (19.5%)	○ 전북기술지주회 사(35%) ○ (주)씨엠디 기술단 (65%)	○ 충남대학교 (45.6%) ○ (주)시온텍 (27.2%) ○ 코아텍(주) (27.2%)	○ 한밭대기술지 주회사(63%) ○ (주)플렉스피이 (37%)
설립일	2012. 9. 18	2012. 9. 26	2013. 7. 3	2013. 5. 8	2014.8.7
소재지	연세대학교 과학원	광주과학 기술원 고등광기술 연구소	우석대학교 본관 806호	충남대학교 산학협력지원 센터 106호	한밭대학교 S9동 101-102호
후속 연구 개발 과제명	연골세포 기초활성 제어를 통한 퇴행성 관절염 예방 및 치료기술 개발	고감도/고속/ 다중 화학 발광법 POC 진단 바이오센서 개발	노내탈황방식 유동층 보일러 저품질 석탄재를 활용한 Cement-zero형 지반고화재 상용화 및 제조 시스템 개발	이온선택성 핵심소재 및 부품 상업화 응용기술 개발	알루미늄 파우치 필름 및 이를 위한 10m/min 코팅속도, Web 폭 1,200mm를 갖는 R2R 장비 및 양산화 공정기술개발 개발
연구 책임자	김대원 교수 (연세대)	김민곤 교수(GIST)	윤성진 연구소장 (지안산업)	황택성 교수(충남대)	김동수 교수(한밭대)
연구 기간	5년 (3년+2년) (2012.10.1. ~ 2017.3.31)	5년 (3년+2년) (2012.10.1 ~ 2017.3.31)	5년 (3년+2년) (2013.8.1 ~ 2018.3.31)	5년 (3년+2년) (2013.8.1 ~ 2018.3.31)	5년 (3년+2년) (2014.9.1 ~ 2019.3.31)
연구비	매년 5억원	매년 5억원	매년 5억원	매년 5억원	1차년도 3.5억원, 2차~5차년도 5억원

현재까지 총 5개의 산학연공동연구법인이 설립되었으며, 이를 통해 총 23명의 신규 인력 채용(연구법인 채용인원), 약 17억원의 매칭펀드 및 투자금 유치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설립공동연구법인당 5년의 후속연구개발이 진행 중이며, 후속연구개발 및 상용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향후 매출발생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통해 기초·원천 연구성과의 활용, 고용창출, 중소·중견 기업 이익창출 등 지역경

제 활성화 및 산학협력 촉진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선도 기술이전 전담조직(TLO) 지원

정부는 대학에서 개발된 기술의 민간으로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커넥트 코리아(Connect Korea) 사업의 일환으로 대학 TLO지원 사업을 통해 대학 산학협력단 내 기술이전 전담조직(TLO : Technology Licensing Office)을 설치하여 지식재산권의 창출, 유지 관리 등 지식재산권 관리와 관련된 업무 및 우수 기술의 발굴, 마케팅, 기술이전 등을 포함한 기술사업화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2006년부터 추진한 제1기 대학 TLO지원 사업을 통해 18개 대학 TLO를 지원하였으며 제1기 사업의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2011년부터 제2기 대학 TLO지원 사업을 시작하여 기관별 기술이전·사업화 역량에 따라 선도형(독자형)과 컨소시엄형으로 구분하여 30개 사업단으로 확대 지원하였다. 특히, 기술이전·사업화 역량이 다소 미약한 8개 대학들은 기술거래전문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운영하였고, 신규로 선정된 12개 사업단의 조기 사업안정화를 위해 전문가 중심 현장컨설팅 및 전담인력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2011년까지는 교과부와 지경부가 공동으로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나 2012년부터는 사업관리체계 단순화 및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대학 TLO 지원사업은 교과부(현재 미래창조과학부)가 출연(연)TLO 지원사업은 지경부가 전담토록 조정하였다. 2013년부터는 자체적인 TLO조직 구성 및 전문인력의 확보가 어려운 소규모 대학의 기술이전·사업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기존 TLO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E-TLO(External Technology Licensing Office)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으며 소규모 대학의 기술이전을 촉진시키고 있다.

대학 TLO 지원사업을 통해 이루어진 대학 보유기술의 기업이전 건수 및 기술료 수입은 급성장하였다. 기술이전 계약체결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4년도에는 2006년도 대비 511% 성장하였고, 기술이전 수입료 역시 높은 비율로 성장을 거듭하여 2014년도에는 2006년도 대비 625% 성장하였다.

표 2-2-30 대학 TLO 연도별 기술이전 실적

(단위 : 건, 억원)

구분	제1기(2006년~2010년)					제2기(2011년~201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건수	314	507	564	680	693	1,123	1,152	1,295	1,605
수입료	64	118	181	205	249	376	447	370	400

* 제1기 18개 사업단, 제2기 30개 사업단 실적이며, 수입료는 현금 입금액 기준, E-TLO(공동TLO)를 통한 기술이전 실적은 제외

(3) 대학 보유기술사업화 지원

정부는 세계 각국이 대학이 창출한 지식을 신속히 사업화함으로써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용창출과 경제성장을 도모함을 반영하여 국내 대학이 창출한 신기술을 사업화하는 수단 중 “기술지주회사” 모델이 기존제도의 한계를 극복 하도록 기술기반형 학교기업의 적극적 수익창출 기회부여와 경영위험 회피 등을 위해 기술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사업을 지원하였다.

대학 연구성과물의 직접 사업화 촉진을 위해 (i)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 활성화 및 (ii)기 설립된 기술지주회사의 성공적 안착을 지원함으로써 대학 연구개발 선순환 구조 확립을 지향하고 있다. 산학협력단이 사업화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준비 및 기술출자 등의 비용,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준비 및 기술출자를 위한 전담인력의 인건비(국고지원금의 30% 이내)를 지원하고 있다.

대학의 기초연구 및 응용연구를 통해 도출된 성과의 사업화 추진을 통해 대학의 우수 기술이 신제품에 적용되고 소비자의 편리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고 있다.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 설립은 2011년 대비 2014년도에 300% 성장하였고, 자회사 설립 건수는 186% 향상되었다. 자회사가 생산하는 기술의 제품화와 판매에 따른 수익금은 대학으로 환원되어 연구개발에 재투자 되며, “대학 연구성과 사업화 및 대학 연구개발 선순환 구조 구축에 이바지하게 되었다. 자회사 설립을 통해 대학 기술의 사업화가 활성화된다면 지역 중소기업 설립 촉진 및 지역산업 경쟁력 향상으로 연계되고 중·장기적 성과로서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국가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 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2-2-31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 설립 실적

(단위 : 건, 억원)

구분	2010년 이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기술지주회사	-	3	7	3	9
누적	13	16	23	26	35
자회사	-	30	44	27	56
누적	44	74	118	145	201

(4) 특화전문대학원 지원 사업

특화전문대학원 지원 사업은 2008년 7월 ‘대학과 연구기관의 협력 활성화’를 새정부 국정과제로 설정한 것을 계기로 사업이 기획되었으며 정부출연연구소의 연구개발 활동을 대학 교육과 연계시켜, 대학·정부출연연구소의 교육·연구 역량을 상호 보완하여 연구개발과 인재양성이라는 협력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대학원 구성원(대학 교수, 출연(연) 연구원, 대학원생)을 중심으로 학연협력에 의한 기초원천 연구를 활성화하고 정부출연연구소의 현장연구경험을 활용하여 이론과 경험을 겸비한 창의적 고급연구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시범과제로서 2009년 충남대학교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 공동으로 설립한 충남대학교 분석과학기술대학원을 특화전문대학원으로 선정하고 정부 출연금을 2009년도 20억원을 시작으로 2010년부터 매년 30억원 2013년까지 총 140억원을 지원하였다. 분석과학기술대학원은 2011년 첫 졸업생 14명, 2012년 23명, 2013년 18명 등 총 55명을 배출하였다. 이중 진학 17명, 기업 및 연구소 등에 36명이 취업하는 등 2명을 제외한 53명이 진학과 기업 및 연구소에 취업하였다.

정부는 2012년에 고려대학교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공동으로 설립한 고려대학교 그린스쿨전문대학원을 에너지·환경 기술정책 융합분야 특화전문대학원으로 추가 선정하였다. 신규 선정된 특화전문대학원에는 출연(연)과 대학의 공동연구개발비, 교육과정개발·운영비, 전문대학원 운영비 등에 소요되는 연구비를 2012년에 10억원, 2013년에 30억원을 지원하였다. 3차년도까지 지원한 후 2015년에 3월에는 단계평가 실시한 결과, 학연 공동연구를 통해 “박막태양전지” 기술의 경우는 세계 최고 효율을 달성하였으며, 미세조류를 활용하여 플라스틱을 생산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 앞으로 2016년까지 매년 30억원을 지원하여 학연 공

동연구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시키고, 자립화에 필요한 10대 과제를 완수함으로써 정부 지원이 종료되더라도 에너지·환경 기술정책 융합 분야의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토록 할 예정이다.

그린스쿨전문대학원은 2012년 첫 졸업생 3명, 2013년 17명, 2014년에는 9명 등 총 29명을 배출하였으며, 이중 2명을 제외한 27명이 진학(3명)과 취업(24명)하였다. 현재 미국 텔라웨어대학교, 러시아 무기모대학교(에너지)에 대학원생을 파견하는 등 국제 협력교육을 강화하고, 2015년 5월에는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환경 관련 국제기구)로부터 개도국 공무원 교육프로그램 과제를 수주하는 등 에너지·환경 기술정책 융합 분야에서 국제적 위상을 높여 가고 있다.

(5) 산학연협력 클러스터 지원사업

글로벌 기업들이 개방형 기술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학, 출연(연), 국외기관 등 외부와의 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 기업들은 신기술·제품의 개발과정에서 개방형 협력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201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보고서, 2013년). 또한 국내 기업들은 R&D협력 연계기능 부족과 공동연구 성과의 기술이전·사업화 부진을 산학연 R&D 협력의 가장 어려운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012년).

이에 산학연 연구협력 네트워크 구축·운영을 통한 기업의 R&D 역량 강화를 위하여 산학연 협력 클러스터 지원을 추진하게 되었다.

2002년 과학기술진흥기금의 ‘기업연구클러스터사업’으로 지원을 시작하였으며 2010년부터는 ‘클러스터’에서 도출된 과제가 기술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핵심애로기술개발’을 추가하고 일반회계의 민간연구기관 맞춤형 R&D 컨설팅 사업을 통합하여 ‘산학연협력 우수연구실 사업’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2013년에는 ‘2단계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의 세부사업으로 2009년부터 추진된 ‘산학협력 연계망구축사업’을 통합하여 산학연 연구협력 네트워크인 ‘지식클러스터 지원’과 ‘핵심융합기술개발 지원’으로 구성·운영되었다.

‘지식클러스터 지원’을 통해 2개 이상 기술분야의 산·학·연 및 관련 기술전문가가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기술·정보교류, 기업수요의 단기 애로기술 개발 및 기술로드맵

구축, 융합아이템 및 단기사업화과제 발굴을 지원하였다. 또한 '핵심융합기술개발 지원'으로 지식클러스터 활동을 통해 발굴한 융합아이템 및 단기사업화과제에 대한 공동연구를 지원하여 기업수요 중심의 산·학·연 공동연구 및 기업주도의 자발적 기술혁신을 유도하고 있다.

표 2-2-32 산학연협력 클러스터 지원사업 실적

지원 분야		연도	2002년~ 2013년	2014년	합계
예산(백만원)			12,840	2,400	15,240
지식클러스터 지원	지원과제(개)		340	18	358
	과제기획(건)		2,749	67	2,816
	정부사업(건)		1,002	85	1,087
	공동연구 등(건)*		1,147	65	1,212
	기술로드맵(건)		14	14	28
핵심애로기술개발 지원	지원과제(개)		224	7	231
	지식창출**				
	논문(건)		11	(진행 중)	11
맞춤형 R&D컨설팅***	특허(건)		15	(진행 중)	15
	지원과제(개)		219	-	219
	컨설팅(회)		1,240	-	1,240

* 협동연구, 기술지도, 기술이전, 개발용역, 단기애로기술해결 등

** 지식창출(논문, 특허) 수행기간: '13년~계속

*** 맞춤형 R&D컨설팅 수행기간: '09년~'12년(UNITEF)

제5절 지역성장 거점도시 조성

1. 행복도시를 명품도시로 조성

(1) 행복도시 광역도로 건설사업

행복도시와 수도권 및 전국 주요도시와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광역교통체계를 정비·확충하고 사업 추진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직접 수행한다. 행복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한 후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이후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진행하고 용지 보상을 통해 공사를 시행한다.

2015년 준공사업인 대덕테크노 연결도로의 4차 공사, 2016년 준공사업인 청주·청원 IC 연결도로, 2017년 준공사업인 공주 연결도로 차수공사 착공(2014년 2월) 등 장기 계속공사 4개 노선의 차질 없는 공사를 진행하였고 오송~청주(2구간) 및 조치원 연결도로 타당성 재조사 완료(2014년 6월) 등 광역도로 2개 노선 타당성 재조사를 완료하였다.

외삼~유성복합터미널 및 공주 2구간 설계 착수(2014년 5월) 등 광역도로 2개 노선을 설계 착수하고 조치원 우회도로, 금남~북대전IC, 회덕IC 및 공주터미널 연결도로 4개 신규노선 추가 발굴 및 총 18개 노선 118km의 광역도로 노선 확정 등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2차, 2014년 11월)을 실시하였다. 광역도로 특성상 두 지역이상의 이해관계로 인한 사업시기, 추진일정 등에 차질과 과도한 요구사항이 많지만, 협의를 통해 해결하였다.

(2) 행복도시 국가행정시설

대통령기록물의 체계적이고 독립적인 관리를 위한 대통령 기록관 건립, 세종청사 편의시설 확충과 집적화 및 접근성을 강화하여 이용자 편의 제공을 위한 복합민원센터를 건립하고 2008년~2017년(총 9년) 사업기간 동안 행복청(공공청사기획과), 국가기록원, 세종특별자치시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대통령기록관은 골조공사(2014년 6월) 및 외부마감공사(2014년 10월)를 완료하고

칸막이 벽체 설치 등 내부공사를 진행하였고, 복합민원센터는 기본계획을 수립(2014년 10월)하고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2014년 12월, 국토부)를 통해 입찰방법을 결정하였다. 대통령기록관은 2015년 준공 대비 78.3%(건립추진율)를 이행하였고, 복합민원센터는 기본계획수립과 입찰방법의 결정으로 공사추진 동력을 확보하였다.

(3) 행복도시 도시행정시설

시청사, 경찰서 및 소방서 등 필수 도시행정 시설의 적기 건립을 통해 지방행정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고 안정적 도시정착 지원을 위해 2006년~2018년(총 10년) 사업기간동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직접 사업을 추진한다.

시청사 의회동 지상층 추가 건립을 위한 총사업비 변경 및 2015년 예산 90억원을 반영하고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사업 추진, 건축·전기·통신·소방 분야를 분리 발주하여 공사 착공(2014년 7월)해서 건립공사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경찰서는 수시배정 사업으로 선정되어 2015년도 기본설계비 913백만원 예산을 확보하였다.

시청사 본관동은 78.9% 공정률로 정상 추진 중이고, 의회동은 총사업비 변경을 통해 2015년 예산 90억원 확보, 소방서는 38% 공정률로 정상 추진 중이고 경찰서는 기본설계비 913백만원 확보로 건립기반을 마련하였다.

(4) 행복도시 문화시설

행복도시의 위상을 제고하고 다양한 계층이 함께 공유하여 지역 공동체·문화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예술문화시설 중 공연장과 전시·미술실, 영상관 등을 특색있게 건축하여 다양한 예술문화를 향유·체험·창작하는 허브 역할을 수행하는 아트센터 건립을 2012년~2018년(총 7년) 사업기간 동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직접 사업을 추진한다.

국회, 지역주민, 언론 및 공연예술전문가 등의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아트센터 건립 규모 확대(700석→1,200석) 방침 결정 및 이의 반영을 위해 총사업비 조정 및 타당성 재조사 요청(2014년 2월)을 함으로써 이를 통한 문화기반구축을 통해 상위목표 달성에 적극 기여했고 아트센터 총사업비 85,732백만원 대비 2014년까지 누적집행액

25,110백만원을 반영했다.

타당성 재조사의 조속한 완료를 위해 KDI에 사업설명, 세부사항 협의 및 세종시 등 관계기관 협의 등을 지속 추진하였으나, 2014년 타당성 재조사가 2015년까지 이뤄지고 있으며 2015년 중으로 완료하고 기본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5) 행복도시 주민편의시설

행복도시의 행정, 문화, 복지,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 제공을 통해 주민생활의 편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광역 복지지원센터 등의 건립 추진, 2006년~2026년(총 21년) 사업기간 동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사업을 직접 수행하고 있다.

광역복지지원센터는 세종시내 종합복지지원을 위해 1생활권 종합복지지원센터를 준공(2014년 10월)하고 입주 예정시기에 맞춰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복지 기반 마련하고 있다. 2015년말 예정되었던 2생활권 가족복지지원센터를 2014년말 조기 발주함에 따라 입주민 복지지원을 위한 다양한 시설을 확충하여 정주성 제고 등 도시 발전을 도모하는 등 총 6개의 광역복지지원센터 중 2014년까지 1개를 완료하고, 1개소에 대해 공사 및 설계 시행중이며 연차적으로 계속 시행할 예정이다.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생활권별 주민 입주 시기에 맞춰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복지 기반 마련공공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등 총 21개의 복합커뮤니티센터 중 2014년까지 4개를 완료하고, 7개소에 대해 공사 및 설계 시행중이며 연차적으로 계속 시행한다.

광역복지지원센터는 총사업비 88,407백만원 대비 2014년까지 누적투자액 49,831백만원을 반영하고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총사업비 411,685백만원 대비 2014년까지 누적투자액 186,089백만원을 반영하였다.

광역복지지원센터와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과 같은 경우 건설주체(행복청)와 운영주체(세종시)가 달라 준공후에도 즉시개소가 이루어지지 않아 입주주민의 편의시설이 용이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운영주체와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다.

(6) 행복도시 자족기능 확충사업

수도권 과밀완화와 국가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건설되는 행복도시의 자족기능 유치 지원을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직접 수행한다.

외국교육기관, 지식산업센터,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대학 6개 시설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6개 자족시설에 대해 총건축비의 25%이내 건축비 지원 등 『자족시설 유치 지원기준(안)』 마련 및 확정·고시(2014년 8월)하였다. 한편, 행정중심복합도시 입주기업에게 금융 자문 및 지원(부지매입비·건축비, 종사자 생활자금 등)을 제공하고, 행복청의 투자유치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은행과 행복도시 입주기업 금융지원을 위한 MOU를 체결(2014년 3월 6일)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토지·시설자금, 청년창업·기술형 창업자금, 종업원 정착자금 저리융자 등과 경영전략, 재무관리, 경영컨설팅 등 무료 제공 등 후속조치(2014년 3월 26일)를 실시했다.

사이언스파크 내에는 리서치파크(연구소), 리서치코어(지식산업센터), 벤처파크(기술집약적 중소기업)가 입지하여 연구기반 산업축을 구성하는 등 행복도시 산학연클러스터 조성계획을 마련하고 개별대학 캠퍼스 및 복수의 대학이 공동 이용하는 공동캠퍼스로 구성하는 등 혁신적 대학모델로 창조형 캠퍼스타운 조성계획 수립했다.

투자유치 활동을 병행한 도시알리기 행사로 "2014 행복도시 세종박람회"를 개최하였다. 행사 프로그램은 및 전시관은 도시알리기(9종), 시민참여(8종), 기업유치·홍보(8종) 3가지 분야 25종으로 구성·운영되었다. 박람회 기간 중 관람객은 약 15천명이었다. 행복도시에 관심있는 94개 기업이 전시부스를 설치·운영하고 행복도시 입주희망기업(65개)과 MOU를 체결했다.

정부소속·교육기관 등 집적화를 위한 입주수요를 조사(2014년 4월 10일~30일)하여 보건의료국가시험원 등 3개 기관 입주의향서를 제출하고 기업유치를 위한 창조경제포럼 기업과 기업투자설명회 개최(2014년 4월 24일, 11월 14일) 및 행복도시 입주를 위한 MOU 희망기업 조사(2014년 5월 14일~22일)를 실시하여 58개 창조경제포럼 기업 회원 중 19개 업체가 희망 의사를 표시했다.

도시 핵심앵커시설로서 고려대 약대이전의 교육부 승인(2014년 8월)을 받았고 R&D 기반 지식산업센터 건립예산을 확보하고 도시첨단산업단지지정을 신청(2014년 12월)했으며 입주 희망 65개 기업과 MOU를 체결했다(2014년 11월).

또한, 국조실과 협업을 통하여 3개 공공기관을 유치하고 대형유통시설 유치(2014년 6월 27일, 코스트코와 토지매매계약 체결), 세종충남대병원 예비타당성 결과 확정(2014년 8월, 현재 총 사업비 변경 추진 중)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대학, 병원 등 도시핵심앵커시설 유치는 관련 기관과의 연계 및 협조가 필수적이나 각 기관의 의견 반영, 공감대 형성과정이 어려워 계획대비 진행이 미흡했다.

2. 혁신도시를 지역발전거점으로 육성

(1) 혁신도시건설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

우리나라는 과거 일극중심의 불균형 발전전략에 따른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낙후된 지방 경제를 지역 특화발전을 통해 활성화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의 하나로 정부는 2005년 이후 수도권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11개 광역시·도에 10개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지역발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2003년 6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방침을 발표하고 2004년 4월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법적·제도적 근거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제정과 함께 2004년 8월 공공기관 이전방안의 기본원칙과 추진방향을 발표함에 따라 정부와 12개 시·도지사간의 '중앙·지방간 기본협약'(2005년 5월) 및 '노·정간 기본협약'(2005년 6월) 체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05년 6월 24일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전 대상기관은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2005년 6월 24일) 발표 당시 전체 공공기관(409개) 중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345개)을 대상으로 기관의 성격 및 수행기능 등을 분석하여 수도권 잔류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기관은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75개 기관을 선정하였으며, 이후 농촌진흥청과 수도권에 신설·분리된 관세국경관리연수원 등 4개 기관이 추가되고, 세종시로 이전하는 23개 중앙행정기관이 제외되었다. 또한, 2008년 8월에 공기업 선진화 방안 등에 따른 통폐합 등으로 12개 기관이 감소되었고, 2012년과 2013년, 2014년에 농림수산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등 7개 기관이 추가되어 최종적으로 154개 기관이 지방이전대상 기관으로 확정되었다.

표 2-2-33 이전대상 공공기관 현황

이전대상기관 (합계)	지방이전대상		
	혁신도시	개별이전	세종시
154개	115	19	20

자료 : 국토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기관별 직제개편전 기준)

표 2-2-34 시·도별 이전기관 배치결과(전체 154개 기관)

지역	이전기관	지역	이전기관
부산 (13)	대한주택보증, 한국자산관리공사 영화진흥위원회 등 13개 기관	대구 (11)	한국가스공사,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학술진흥재단 등 11개 기관
광주/ 전남 (16)	한국전력, 한전KPS, 한국전력거래소 등 16개 기관	울산 (9)	한국석유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 국립방재연구소 등 9개기관
강원 (12)	한국광물자원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관 광공사 등 12개 기관	충북 (11)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 평가원, 한국교육개발원 등 11개 기관
전북 (12)	농촌진흥청, 한국식품연구원, 국민연금공단 등 12개 기관	경남 (11)	한국토지주택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국방 기술품질원 등 11개 기관
경북 (12)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기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12개 기관	개별 이전(19)	국방대학교, 국립경찰대학, 경찰수사연수원 등 19개 기관
제주 (8)	한국국제교류재단,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등 8개 기관	세종시 (20)	한국개발연구원, 법제연구원 등 20개 기관

자료 : 국토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발표(2005.6.24) 이후, 공기업선진화방안(2008.8) 등으로 인하여 일부 기관들은 통폐합
되어 이전지역 등이 변경되고 이전기관은 154개로 확정되었음.

혁신도시는 지방이전 공공기관 및 산·학·연·관이 서로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최적
의 혁신여건과 수준 높은 주거·교육·문화 등 정주환경을 갖춘 새로운 차원의 미래형
도시를 말한다. 정부는 각 시·도에 구성된 혁신도시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 2005년말
10개 혁신도시의 입지선정을 마무리하고, 혁신도시별로 특색있고 차별화된 혁신도시
건설을 위해 혁신도시 개발 기본구상을 수립(2006년 2월~12월)하였다.

표 2-2-35 혁신도시 입지선정현황

강 원	원 주	경 남	진 주
충 북	진천·음성	대 구	동 구
전 북	완주·전주	울 산	중 구
광주·전남	나 주	부 산	해운대구 등
경 북	김 천	제 주	서귀포

자료 : 국토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또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건설을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 특별법」이라 함)을 제정·시행(2007년 2월 12일)하였으며, 이후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내 원주민의 재정착을 위한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 지원, 그 밖에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 시행토록 하는 규정도 신설(법 제47조의 2, 2007년 10월) 하였다.

정부는 혁신도시건설을 위해 관련 절차를 거쳐 10개 혁신도시를 모두 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여 확정, 고시하였으며(2007년 3월~4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 개발절차를 모두 수립 완료(2007년 5월~2008년 12월)하였다. 이와 함께 10개 혁신도시의 용지보상은 2013년 12월말 기준 평균보상률이 99.7%로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추가로 발생하는 보상용지에 대하여도 빠른 시일내 보상을 완료할 계획이다. 혁신도시 부지조성공사는 혁신도시별로 2~9개 공구로 구분하여 공사를 발주하여, 혁신도시별로 우선 1공구 조성공사에 대해 2007년 9월 제주와 경북을 시작으로 2009년말까지 10개 혁신도시 42개 전공구를 착공하여 2013년 12월말 기준 전체 평균공정률 99.9%로 2015년 완공목표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다. 이러한 꾸준한 추진에 의거 혁신도시 부지조성과 진입도로, 상수도 등 혁신도시 기반시설이 대부분 완료됨에 따라 공공기관 이전도 차질없이 진행되어 2014년까지 95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하였다.

아울러, 혁신도시에서 양질의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전기관이 이전지역 인력을 우선하여 고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법 제29조의 2, 2013년 3월)하였으며, 이전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지역별 합동채용설명회 개최(9개 혁신도시, 8회) 및 이전기관과 지역대학간 MOU 체결(9개 혁신도시, 8회)을 통해 2014년 지역인

재 채용률이 10.2%가 되었다.

정부는 혁신도시 건설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총 154개 공공기관 중 나머지 59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2016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며, 혁신도시별 채용설명회 등을 통해 지역인재 채용을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혁신도시로 공공기관 이전이 본격화됨에 따라 이전직원 가족 및 입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해 핵심 정주여건인 주거·교육시설과 생활서비스 시설인 각종 의료·어린이집·행정시설·편의시설 등을 적기 공급하고, 생활가이드 앱 개발·보급 등으로 생활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2)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

정부는 국가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이전 공공기관과 관련있는 기업·대학·연구소 등을 혁신도시에 유치하여 혁신도시를 지방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2007년부터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중에 있다. 2012년까지 지자체 중심의 혁신도시별 특화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4년에는 이전기관과 연계성이 높고 파급효과가 큰 핵심 산업 위주로 수요를 분석하고 유치전략을 검토하여 클러스터 구축계획을 수정·보완하였다.

2014년 5월에는 혁신도시특별법을 개정하여 혁신도시내 입주하는 연구기관, 국제기구, 대학, 종합병원에 건립비 지원, 고용보조금 등 우선지급, 국·공유재산의 임대료 등 감면규정 완화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고, 2014년 12월에는 세제혜택 등을 위해 클러스터 부지의 도시첨단산단 중복지정을 완료(대구, 충북)하였다.

한편 정부는,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각 혁신도시별 산학연 유치지원센터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이전 공공기관과 산학연 클러스터 형성, 혁신도시와 인근지역간의 연계발전, 지역 및 관련 기관간 자율적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활동지원을 목적으로 2007년부터 혁신도시 소재 시·도별로 담당공무원으로 센터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 5월에는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을 통해 센터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다. 현재 충북혁신도시가 센터를 건립·운영하고 있으며(경북혁신도시 2015년말 준공예정), 2014년 5월에는 관련 지침을 개정하여 비영리재단법인으로 센터를 구성토록 유도하고 있다. 2007년부터 2014년까지 10개 혁신도시

11개 산학연 유치지원센터에 288억원의 국비를 지원하였으며,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를 통한 혁신도시 지역성장거점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혁신도시는 2016년 공공기관 이전을 마무리하고, 2단계로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는 단계에 있다. 하지만 혁신도시 전체 용지 분양률(2015년 4월 기준 84.8%)에 비해 클러스터 용지 분양률(2015년 4월 기준 34.6%)은 매우 저조한 등 클러스터 조성은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따라서 산학연 유치지원센터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용지 분양률을 높이고, 기업들의 조기입주를 독려하여 클러스터를 활성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향후 센터가 이전기관·유치기관 간 네트워크의 장이자 유치기업 입주공간 제공 등도 담당할 수 있도록 타 혁신도시도 센터건립을 지원하여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각 부처의 산학협력·R&D사업, 지자체의 지역발전사업 등을 혁신도시에 적극 유치해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3. 새만금 기반시설 조기 구축 및 개발 가시화

(1) 새만금 내부개발

새만금사업은 1991년 전북 군산~부안을 연결하는 방조제 33km를 축조하여 공유수면 40,100ha를 토지 28,300ha와 담수호 11,800ha로 개발하여 대단위 간척농지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였으며, 방조제공사는 1991년에 착공하여 2010년에 준공하고 2009년부터 내부토지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방조제공사는 총사업비 2조 9,490억원을 투입하여 방조제 33km, 배수갑문 2개소 등 주요시설물과 함께 3호·4호 방조제 내측에 연접하여 다기능부지 198ha를 조성하고, 홍보관, 전망대, 쉼터, 주차장 등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2010년 준공식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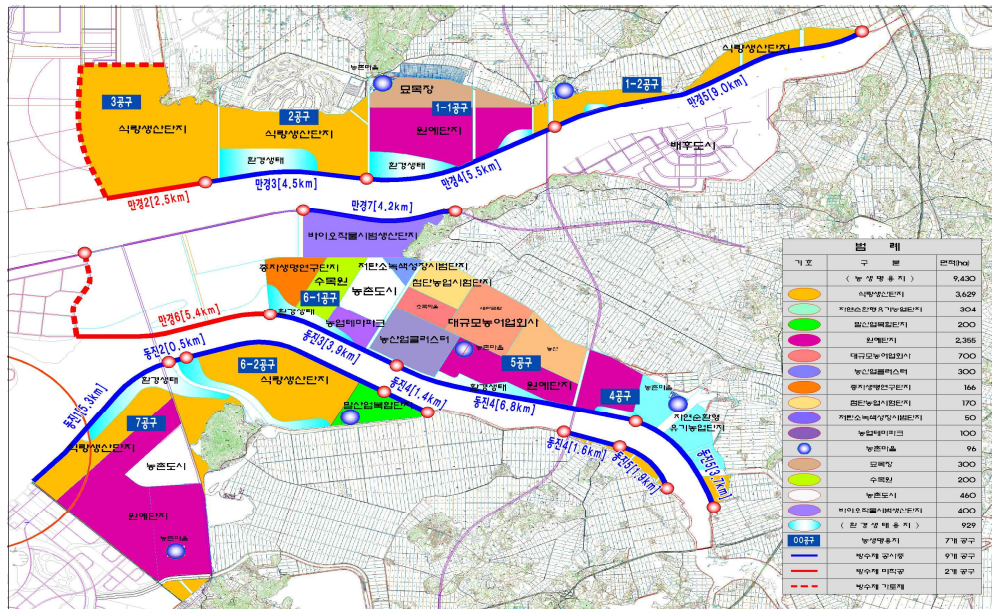
2009년에는 사업 착수이후 국내외의 사회·경제적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새만금지역을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개발'하는 것으로 목표를 수정하고 농지개발 면적비율을 축소(농지 72%→30%)하는 한편, 새만금 내부토지의 70%는 산업·관광·복합도시·신재생에너지·생태환경 등 다양한 용도로 개발하는 것으로 "새만금 내부개발 기본구상"을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2010년에는 “새만금 내부개발 기본구상 및 종합실천계획”을 수립하고, 2011년에는 기본구상의 개발방향과 목표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문가 간담회, 새만금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새만금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였다.

동 계획에는 내부토지의 개발을 조기에 가시화하기 위해 복합도시 개발, 방조제 및 다기능부지 명소화사업 추진, 매립토 조달사업, 농생명용지 조성 구간의 방수제공사 조기 착공, 만경·동진강 하천종합정비사업 등을 5대 선도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키로 하였다.

새만금 전체 내부개발토지(28,300ha)의 30%에 해당하는 8,570ha는 2020년까지 농생명용지로 개발하기로 함에 따라, 농생명용지 조성 구간의 방수제공사를 선도사업으로 선정하여 조기 착공하기로 한 것이며, 방수제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농업용지조성 공사를 착수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림 2-2-12 새만금 농생명용지 이용계획도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는 방조제공사 준공을 앞둔 2009년에 농생명용지 조성 구간의 방수제 62km, 농생명용지 9,430ha 및 생태환경용지 929ha 등을 개발을 위한 총사업비를 확보하고, 농생명용지 조성 구간의 방수제 중 선도사업 구간 54km를 착

공하였으며, 2014년말 현재 공정률 80% 수준까지 추진하였다.

농생명용지는 국제 경쟁력을 갖춘 저탄소 녹색성장의 복합농산업·수출전진기지로 조성하기 위해 고품질 첨단농업, 수출농업, 녹색성장, 농업생태관광을 지향하는 농산업 모델로 개발해 나갈 예정으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농생명용지 중 개발여건이 양호한 5공구 1,513ha는 2013년에 착수함에 따라 2015년까지 대규모농업회사 입주 예정지 700ha에 대해 우선 기반시설공사를 완료할 예정이고, 2017년까지 5공구 전체면적을 농업용지로 개발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다. 이와 같이 농생명용지를 조기 개발함에 따라 새만금지구 내 산업·도시 및 관광용지 등에 대한 투자를 유발하는 등 타 용지 개발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머지 농생명용지도 2015년부터 연차적으로 착공하여 2020년까지 친환경적이고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룬 고품질 첨단농업, 수출농업, 농업생태 공간 등 경쟁력있는 다양한 농산업 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같이 새만금지구의 첨단 농산업 단지 개발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제발전을 견인하는 성장동력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건설공사

새만금복합단지와 고군산군도를 연계한 국제해양 관광벨트화 및 도서지역 주민 등 도로 이용자의 교통편의 제공, 생활환경의 질적 향상 등을 도모하고자 본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고군산군도 연결도로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08년 2월~2009년 11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09년도에 사업 착공하여 사업 진행 중에 있다.

표 2-2-36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건설공사 연차별 투자비(국고)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총사업비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장래
계	291,426	176,336	50,858	34,076	30,156
고군산군도1	48,742	37,122	1,631	4,390	5,599
고군산군도2	117,804	74,020	34,647	7,876	1,261
고군산군도3	124,880	65,194	14,580	21,810	23,296

(3) 새만금-전주고속도로 건설사업

고속도로는 국가 간선교통망의 중추로서, 전국 차원에서 발생하는 교통수요를 충족하고, 국민 이동성 보장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주요 국가교통시설이다. 고속도로 건설은 1968년 경부선 건설 이래 국가 및 한국도로공사가 역할을 분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기본계획 수립, 조사·설계를 국가가 수행하고 한국도로공사에서 건설 및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건설재원은 국가에서 공사비의 40%, 보상비의 100%를, 한국도로공사에서는 공사비의 60%를 부담하고 있다.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는 군산-부안을 방조제로 연결, 401km를 간척하여 다기능 융복합 도시를 건설하는 새만금 개발사업을 지원하고, 서해안·호남·순천-완주 고속도로와 연계하여 낙후지역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0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하여 진봉-상관 구간 총 54.4km의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고속도로는 도로법에 의거한 10년 단위의 장기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진된다. 현재 '제2차 도로정비 기본계획(2011~2020년)'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해-삼척 고속도로는 계획된 7×9+6R 중 동서 3축(새만금-전주)에 해당되는 노선으로 2014년 기본설계를 완료하여 후속절차를 추진 중에 있다.

표 2-2-37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예산투입 현황

(단위 : 억원)

연 도	총사업비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이후
예 산	8,311 (18,348)	107 (107)	110 (110)	158 (158)	7,936 (17,973)

* () : 도로공사 부담분 포함.

(4) 새만금 신항만 개발사업

새만금 신항은 서해 중부권 물류 거점항으로 새만금 배후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물동량 처리를 위해 2030년까지 총 2조 5,482억원(재정 1조 4,102억원/민자 1조 1,380억원)을 투자하여 안벽 18선석, 호안 14.4km 등을 단계적으로 건설하여 하역능력 17,291천RT/년을 확보할 수 있는 항만시설을 구축함으로써 국제적인 항만의 비즈니스

스 및 물류, 관광레저 등의 복합기능을 수행할 계획이다.

표 2-2-38 새만금 신항만 단계별 부두개발 규모

구 분	선박규모	총 계		2020년(1단계)		2030년(2단계)	
		선석수	계획연장	선석수	계획연장	선석수	계획연장
자 동 차	2만 DWT	1	225	1	225	-	0
일반잡화	2만 DWT	14	2,970	2	420	12	2,550
컨테이너	2천 TEU	2	515	1	265	1	250
크 루 즈	8만 GT	1	405	-	-	1	405
합 계	-	18	4,115	4	910	14	3,205

새만금 신항 개발은 항내 정온 수역을 확보하기 위한 방파제(3.1km)축조를 시작으로 2014년까지 약 2,210억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2016년도 방파제 준공을 기점으로 새만금 신항의 진입도로 및 호안축조 등 본격적인 내부개발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2015년도에는 새만금 내부개발을 위해 진입도로 및 북측 방파호안 축조공사와 가호안 및 매립호안축조공사로 나눠 연차적으로 발주할 계획임에 따라 신항만 내부개발이 입체적으로 병행 추진되어 신항 개발의 조기 구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며, 입찰방법이 각각 대안입찰과 일괄입찰로 결정됨에 따라 공기 단축 등 사업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새만금 신항만 1단계 건설로 인해 지역경제의 파급효과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항만 건설투자와 항만운영의 지역 경제효과로서 2조 1,729억원으로 추정되었으며, 고용 유발효과는 1만 5,822명의 고용 유발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울러, 새만금 신항의 2단계 사업에는 8만톤급 크루즈선이 정박할 수 있는 전용부두를 건설 계획임에 따라 신시도 고군산 마리나 항만, 고군산 군도를 비롯해 새만금 방조제 등을 연계한 물류와 관광이 복합된 항만으로 건설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환황해권 경제 공동체의 중심지로서 국가 경쟁력 제고와 신 성장 엔진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4. 기업도시 활성화로 지역경제에 기여

(1) 기업도시 기반시설 지원사업

우리나라는 지난 40년간 수도권 집중억제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구·산업 등의 수도권 집중현상이 지속되어 왔다. 그 결과 산업·금융 등 경제활동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지방은 인구감소를 겪는 실정으로 산업공동화에 따른 소득감소 및 실업증가로 지방의 자립기반이 크게 약화되었다.

이에 정부는 민간기업을 국내 투자촉진과 지역발전의 견인차로 활용할 방안으로 2004년 12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기업도시는 산업입지와 경제활동을 위해 민간기업 주도로 개발되는 도시로서 기업 자신이 필요한 용지를 개발하여 생산·연구개발 등 유관 산업과의 연계성 및 효율성을 극대화함과 동시에 정주에 필요한 주택·교육·의료 등 자족적 복합기능을 가진 도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기업도시 건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 기업도시 개발사업을 조기에 가시화하여 지자체의 관심을 제고하고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2005년 1월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고시한 결과 8개 지역이 신청하였으며, 이에 대한 현지조사 및 평가, 기업도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충주·원주(이상 지식기반형), 무안(산업교역형), 태안·무주·영암·해남(이상 관광레저형) 등 최종 6개 시범사업이 같은 해 7~8월 선정되었다. 선정된 시범사업은 각 사업별 참여기업과 지자체 주도로 전담 기업을 설립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를 거쳐 2007년 10월 태안기업도시의 착공을 시작으로 2008년 충주(6월), 원주(7월), 2013년 영암·해남 구성지구(1월)가 사업을 착공하였으나, 국제금융위기 및 국내경기 침체에 따른 경영악화에 의해 사업시행자의 사업포기로 2011년 1월 무주 사업이 취소된 이후 무안 기업도시도 주 출자자인 중국측의 철수, 특수목적법인(SPC)의 청산 등으로 2013년 2월 사업이 취소되는 등 기업도시 사업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실정이었다.

정부는 부진한 기업도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3년도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 무역투자진흥회의 안건상정을 통하여 공유수면 매립면허권 양도·양수가격 기준 마련, 면허권 양수대금 분할납부(3년 거치 7년 상환) 시 이행보증증권 제출 면제,

이자율 하향조정(5%→2.65%)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였고, 2014년도에는 영암해남 기업도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유수면 매립후 총사업비 정산을 위한 토지가격 평가시 평가기준을 기업도시 지정당시 현실이용상황으로 평가하는 공유수면 특례도입을 추진하였고, 기업도시 공원녹지 확보율을 완화하여 기업도시 사업시행자의 사업성을 향상하였다.

표 2-2-39 기업도시 사업개요 및 추진현황

(단위 : 만㎡, 억원)

구 분	면적	총사업비	사업추진현황	분양 및 입주현황	참여기업
총 주	701	5,966	준공 (2012년 12월)	분양률 80.5% 24개사 입주계약 16개사 입주완료	포스코건설, 주택공사, 임광토건, 엠코, 동화약품, 포스데이터 등
원 주	529	9,437	착공 (2008년 7월)	공정률 60% 분양률 20.9% 22개사 입주계약 3개사 입주완료	롯데건설, 경남기업, 벽산건설, 농협, 경남은행 등
무 안	-	-	-	-	사업취소(2013년 2월)
태 안	1,464	11,462	착공 (2007년 10월)	공정률 24% 골프장 2개소 완료 및 운영	현대건설
무 주	-	-	-	-	사업취소(2011년 1월)
영 암 · 해 남	삼호	920	개발계획승인 (2010년 7월)	공유수면 매립공사 및 골프장 공사 추진	에이스화원건설, 한국관광공사, 전라남도 등
	구성	2,096	착공 (2013년 1월)	공유수면 매립공사 및 골프장 건설공사	보성건설, 한양, 전남개발공사, 전라남도 등
	삼포	429	개발계획 승인 (2010년 10월)	1단계 F1 경기장으로 기사용	SK건설, 전남개발공사, 전라남도 등
	부동	-	-	-	* KDI 사업타당성 분석결과(2011년 12월), B/C율 1미만으로 반려(2012년 1월)

* 영암해남기업도시 중 부동지구는 시범사업 외 추가사업임.

또한 2005년도에 도입된 기업도시 제도에 대한 문제점, 사업추진현황 등을 분석하고 기업의 신규참여 확대를 위해 맞춤형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였다. 맞춤형 제도개선안에는 입지규제완화, 개발유형통합, 최소개발면적 축소, 주된 용지율 완화, 거점확장형 개발방식도입, 개발이익환수제 완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도 도입 등으로 제도가 개선될 경우 민간기업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업도시 개발사업 주 진입도로 건설비의 50%를 국고보조(2014년까지 710억원 지원)하여 충주기업도시 개발사업은 준공(2012년 12월)하였고, 원주기업도시 개발

사업은 공정률 60%(2014년 12월 기준)를 달성하였으며, 영암·해남 기업도시 구성지구 및 삼호지구는 공유수면 매립공사와 골프장건설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태안 기업도시는 골프장 2개소를 완공하여 운영하는 등 기업도시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기업도시 구성에 따라 충주기업도시는 3만명의 고용유발효과와 3조원의 직·간접적 생산효과가 예상되고, 원주기업도시는 1만명의 고용유발효과와 8,7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기대되는 등 기업도시의 성공적인 건설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일자리 창출효과도 기대된다.

정부에서는 영암해남 기업도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특례를 도입한 법률 개정안과 기업의 신규참여 확대를 위해 마련한 기업도시 맞춤형 제도개선안을 조속히 법제화하여 기업도시가 활성화 되도록 2015년 상반기내에 법률과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표 2-2-40 기업도시 기반시설 국고지원 현황 및 계획

구 분	계	2012년까지	2013년	2014년	2015년 이후
계	2,281	640	38	32	80
원주	289	166	25	18	80
충주	143	143			
태안	199	199			
영암·해남	1,650	132	13	14	1,491

* 충주, 태안은 2012년 이전 지원완료

5. 국제자유도시 조성지원으로 외자유치 촉진

(1) 제주국제자유도시 기반시설 지원사업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전략은 사람·상품·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 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이 적용되고,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제주도 무사증 입국 대상을 190개 국가로 확대하였으며, 투자진흥지구 도입 및 첨단과학기술단지 등을 조성하였다. 또한 법인세, 소득세 및 지방세를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한편 해외자본 유치를 위하여 부동산 투자이민 제도를 도입하여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부동산에 투자하고 3년 또는 5년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영주권을 부여하여 부동산의 간접투자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행정기관에서는 각종 법령과 민원서류에 대한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외국의 명문 국제학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내·외국인 관광객 유인 강화를 위하여 골프장의 입장료 인하 등 각종 조세감면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02년 제주공항과 항만에 내국인 면세점을 설치하였고, 2005년에는 제주도를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하고 2006년에는 평화사업 추진을 위한 국제평화재단을 설립하였으며, 2006년에는 전국 최초로 도 전역을 국제회의 개최 도시로 지정하였다.

정부는 위와 같은 다양한 시책의 지속 추진뿐 아니라 새로운 시책 발굴로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고 IT·BT 등 첨단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제주도를 금융과 물류가 결합된 종합적 대외거점이자 동북아시아의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는 특색있고 경쟁력 있는 국제 비즈니스 클러스터로 육성하여 홍콩, 싱가포르 같은 국제적인 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국가산업단지인 첨단과학기술단지는 제주지역의 첫 번째 산업단지로서 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여 원활한 단지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용수시설 약 25억원, 진입도로시설에 총사업비 약 400억원(L=4.4km, B=20m)을 투입하여 2013년에 완공하였다.

서귀포관광미항 조성사업은 국가지정 항만인 서귀포항을 비롯한 주변지역을 정비·개발하는 사업으로 진입도로는 총사업비 약 280억원(L=2.6km, B=20~25m)을 투입하여 2016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2014년까지 약 242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영어교육도시는 1단계 시범학교 개교에 맞춰 2013년까지 사업비 약 283억원(L=8.2km, B=20~27m)을 투입하였다.

한편, 제주헬스케어타운조성은 국내외 기업유치 및 의료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제자유도시 핵심사업으로서 글로벌 의료 환경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진입도로에

1단계로 사업비 약 144억원(L=2.3km, B=20~24m)을 투입하여 2017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2014년까지 약 80억원을 지원하였다.

표 2-2-41 제주국제자유도시 기반시설 국고지원 현황 및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기간)	투입 사업비	진입도로 내 사업 추진 실적
첨단과학기술단지 진입도로 (2005~2012년)	40,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4년 10월 : 국가산업단지 지정 2005년 06월 : 부지조성공사 착공 2010년 01월 : 부지조성공사 및 지원시설 준공 2015년 05월 : 126개 기업 입주(산업단지 100%분양)
영어교육도시 진입도로 (2008~2013년)	28,337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1년 09월 : NLCS 및 KIS 국제학교 개교 2012년 10월 : BHA 국제학교 개교 2012년 12월 : 부지조성공사 준공
서귀포미항 진입도로 (2006~2016년)	24,238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6년 05월 : 문화재청 기본계획 승인 2007년 12월 : 기반시설공사 착공 2009년 10월 : 1단계사업 준공 2012년 04월 :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지정
헬스케어타운 진입도로 (2013~2017년)	7,952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1년 12월 : 부지조성공사 착공 2012년 10월 : 녹지그룹(中) 본계약 체결 2012년 11월 : 1단계 건축공사 착공 2014년 8월 : 1단계 건축공사 준공 2014년 10월 : 2단계 건축공사(의료시설 포함) 착공

제주특별자치도를 국제적인 관광휴양도시, 첨단지식산업도시 등의 복합적인 기능을 갖춘 국제자유도시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진행 중인 다양한 프로젝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2)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사업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전략은 사람·상품·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 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이 적용되고,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제주도 무사증 입국 대상을 190개 국가로 확대하였으며, 투자진흥지구 도입 및 첨단과학기술단지 등을 조성하였다. 또한 법인세, 소득세 및 지방세를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한편 해외자본 유치를 위하여 부동산 투자이민 제도를 도입하여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부동산에 투자하

고 3년 또는 5년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영주권을 부여하여 부동산의 간접투자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행정기관에서는 각종 법령과 민원서류에 대한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외국의 명문 국제학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내·외국인 관광객 유인 강화를 위하여 골프장의 입장료 인하 등 각종 조세감면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02년 제주공항과 항만에 내국인 면세점을 설치하였고, 2005년에는 제주도를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하고 2006년에는 평화사업 추진을 위한 국제평화재단을 설립하였으며, 2006년에는 전국 최초로 도 전역을 국제회의 개최 도시로 지정하였다.

정부는 위와 같은 다양한 시책의 지속 추진뿐 아니라 새로운 시책 발굴로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고 IT·BT 등 첨단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제주도를 금융과 물류가 결합된 종합적 대외거점이자 동북아시아의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는 특색있고 경쟁력 있는 국제 비즈니스 클러스터로 육성하여 홍콩, 싱가포르 같은 국제적인 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및 추진체계 구축을 통하여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제주도의 국제자유도시 건설이라는 정부의 개발의지와 함께 30대 광역선도프로젝트사업인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은 부지내 국제학교 3개교를 개교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2021년까지 약 9천여명의 학생 수용과, 완전한 도시로써 자리매김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할 계획이다.

그리고, 지식산업기반 마련을 위하여 추진하는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사업은 산업단지 100%의 분양 완료되었고 Daum, 이스트소프트 등 126개 기업이 입주하였다. 한편 휴양형주거단지 사업에 버자야사(말련)는 총사업비 2조 5천억원 규모로(FDI신고기준: 1,246억원) 총 9단계 사업 중 1단계사업 착공을 위한 준비 작업을 마쳤다.

또한 2012년 10월 중국의 녹지그룹은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 투자를 위한 MOA를 체결하였고, 2013년 9월 중국 람정그룹은 신화역사공원 내 복합리조트 투자계약을 체결하는 등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투자유치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정부에서는 제주도를 국제적인 관광 휴양도시, 첨단지식산업도시 등의 복합적인 기능을 갖춘 국제자유도시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진행 중인 다양한 프로젝트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표 2-2-42 제주국제자유도시 주요 프로젝트 추진현황 사업별 추진실적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 규모	추진실적
영어교육도시 (2008~2021년)	17,810억원 3,792천 m 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1년 09월 : NLCS 및 KIS 국제학교 개교 2012년 10월 : BHA 국제학교 개교 2012년 12월 : 부지조성공사 준공
헬스케어타운 (2006~2018년)	9,050억원 1,539천 m 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1년 12월 : 부지조성공사 착공 2012년 10월 : 녹지그룹(中) 본계약 체결 2012년 11월 : 1단계 건축공사 착공 2014년 8월 : 1단계 건축공사 준공 2014년 10월 : 2단계 건축공사(의료시설 포함) 착공
신화·역사공원 (2004~2018년)	11,010억원 3,985천 m 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2년 03월 : 부지조성공사 준공 2013년 09월 : 랍정그룹(중) 투자계약 체결 2014년 4월 : 항공우주박물관 개관
첨단과학 기술단지 (2003~2021년)	5,800억원 1,099천 m 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4년 10월 : 국가산업단지 지정 2005년 06월 : 부지조성공사 착공 2010년 01월 : 부지조성공사 및 지원시설 준공 2015년 05월 : 126개 기업 입주(산업단지 100%분양)
서귀포 관광미항 (1.2단계) (2003~2020년)	2,223억원 231천 m 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6년 05월 : 문화재청 기본계획 승인 2007년 12월 : 기반시설공사 착공 2009년 10월 : 1단계사업 준공 2012년 04월 :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지정
휴양형 주거단지 (2003~2017년)	17,643억원 744천 m 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9년 11월 :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2011년 12월 : 부지조성공사 준공 2013년 03월 : 1단계 콘도 건축공사 착공

또한, 제2첨단과기단지 조성, 오션마리나시티 사업 추진, 국제문화복합단지 조성 등 신규 프로젝트도 적극 발굴·추진하고,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배당 허용 등 규제개선사항도 적극 발굴하여 제주도가 명실상부한 국제자유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제6절 농산어업 경쟁력 강화

1. 산업간 융·복합을 통한 6차산업화 및 일자리 창출

(1) 농식품 ICT 융복합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는 ICT 첨단기술 접목을 통해 농식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고부가가치 창조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대내외 여건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FTA, 기후 변화 및 농업·농촌의 고령화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생산성 향상 및 품질향상, 노동력 절감 등을 통해 농식품 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ICT 융복합 모델개발 및 확산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농업이 미래성장산업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농산물 생산·가공·유통 및 농촌 등 현장 적용이 가능한 농식품 ICT 융복합 모델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모델개발은 확산사업 추진을 위한 현장 적용성 및 경제성을 검증하는 과정이며, 정부 연구기관 및 민간에서 R&D를 통해 검증된 연구결과를 활용하고 있다. 또 성과가 확인된 모델에 대해서는 확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4년도에는 시설원예, 과수, 양돈분야 성과모델에 대해 확산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림 2-2-13 농식품 ICT 융복합 추진체계



2014년도 모델개발 사업은 8개 과제가 추진되었다. 생산분야에서는 양계 등 가금류 및 버섯분야의 스마트 팜 확산을 위한 모델개발이 진행되었으며, 2014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스마트 팜 확산사업에 대한 축종 및 작물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모델개발

이다. 양계분야의 모델개발 사업은 사육환경을 모니터링하고 제어시스템을 개발하여 양계의 사육환경에 최적화된 시스템을 농가에 보급하기 위한 모델로, 사료관리, 음수 관리, LED 조명을 사육단계별로 최적화하여 제공하고, 환기, 화재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축사경영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버섯모델은 스마트 폰을 통해 새송이 버섯 원격 환경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농가의 통합관리 및 데이터 축적을 통한 최적생장 DB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진행되고 있다. 또, 영상을 이용한 웹 기반의 생장환경 모니터링을 통해 수출지원도 진행되고 있다.

유통분야에서는 고랭지 농산물의 수급안정 위한 종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재배이력기반의 생산·유통연계 농산물 종합관리망을 구축하는 등의 과제가 추진되고 있다. 또 제주도 감귤에 대한 수출지원을 위해 글로벌 GAP 충족을 위한 모델개발사업도 진행하였다.

표 2-2-43 2014년도 농식품 ICT 융복합 모델개발 추진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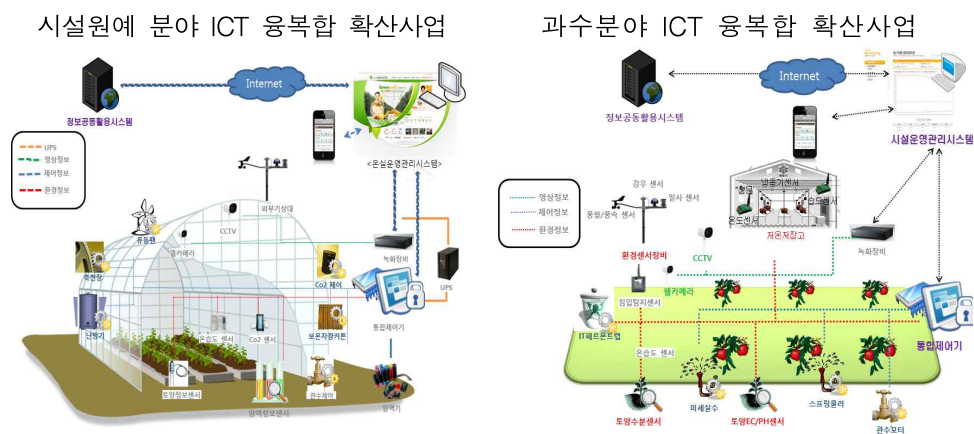
분야	지자체	품목	개발모델명(과제내용)
생산정밀	전북 김제	가금류	가금류 사육환경 자동관리 및 생산경영관리
	경북 김천	버섯	새송이버섯 세균성 감염자동 예찰 및 수출지원
유통지능	강원	채소류	강원도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종합관리
	경북 울진	김치	ICT융합을 통한 울진명품 저염김치 6차산업화
	경남 거창	수박 등	재배이력기반 생산·유통연계 농산물 종합공급망 관리
	경기	친환경농산물	농축산물 학교급식 통합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수출지원 등	제주	감귤	농가용 MIS와 소비자연계형 생산이력 추적시스템
	전남	딸기 등	전남 농식품 ICT 융복합 거점지원센터 구축·운영

2013년까지 모델개발을 통해 성과가 확인된 시설원예, 과수, 축산 등 생산분야 모델에 대해서는 2014년부터 스마트 팜 확산사업이 추진되었다. 시설원예 분야의 확산사업인 스마트온실 보급사업은 유리온실, 비닐하우스 등에서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등의 작물생장에 필요한 조건을 통해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여 생산성 및 품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ICT 융복합 시설 장비를 보급하고 과학적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각종 센서를 통해 온실 내외부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온실의 측창, 천창 등의 시설물을 제어하고 작물생장 시기별로 필요한 영양분(양액)의 적정량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농가에서는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전문가의 컨설팅

을 통해 생산성의 향상을 기할 수 있게 된다.

또, 과수분야의 확산사업은 과수원의 온습도, 풍향, 강우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작물의 생장에 필요한 물의 공급을 과학적으로 하고, 병해충의 예찰을 통해 방제의 시기 및 방법을 결정하고 서리방지, 냉해방지, 야생동물의 침입방지 등을 위한 ICT 융복합 시설 장비를 보급하는 사업이다. 농가에서는 과수원의 토양, 병해충 상태, 기상 및 작물의 생리상태 등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기초로 영농활동을 함에 따라 생산성 향상 및 품질향상을 기할 수 있게 된다.

표 2-2-44 분야별 ICT 융복합 확산사업



양돈분야의 확산사업은 축사의 온도, 습도 및 이산화탄소 등의 환경에 대한 모니터링 뿐만 아니라, 돼지의 사육단계별로 필요한 사료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급이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축사별 급이기, 음수관리기 등의 ICT 융복합 시설장비를 보급하고 생산경영관리시스템의 연계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게 된다. 향후 양계, 낙농 및 한우 등으로 ICT 융복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시설원예, 과수 및 양돈분야 등에서 추진하는 확산사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 거점에서 전문가가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농가의 현장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진행되고 있다. ICT 융복합 거점지원센터에는 농장에서 축적된 ICT 융복합 정보를 활용하여 컨설팅 기반 체계를 마련하고 원격 및 현장지원을 통해 농가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가게 된다.

(2)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시장개방 등으로 인한 농어업 분야의 '생산 위축→일자리 축소→농어촌 활력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단순한 농외소득 증대 차원을 넘어 지역의 다양한 부존자원을 산업화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획기적인 노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농어촌 지역 부존자원의 융복합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농어촌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2010년부터 종전에 개별 사업으로 시행하던 13개사업(①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 ②농어촌테마공원조성, ③농공단지조성, ④어촌관광개발, ⑤복합낚시공원조성, ⑥완전미브랜드파워현대화시설, ⑦한우명품화, ⑧FTA대비 축산업경쟁력제고, ⑨전통발효식품전용공장건립, ⑩향토산업육성사업, ⑪특화품목육성사업, ⑫김육상채묘 및 냉동망 보관, ⑬고효율 어류사료생산공장건립)을 1개의 포괄보조사업으로 통합하여 농어촌의 다양한 부존자원을 기반으로 하여 1·2·3차 복합산업화를 촉진하고 창업 및 기업유치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경제활동을 다각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3년에는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수산 분야는 해양수산부로 이관하고 사업명칭을 '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에서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으로 변경하였다.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은 농업인 조직, 생산자 단체, 농산물가공업체 등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고, 국고에서 50%, 지방비와 자부담을 합하여 50%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비는 농촌 자원의 융복합화를 위한 농산물의 생산·유통·제조·가공 기반 구축은 물론, 농촌 체험·관광기반 구축 및 농공단지 조성 등 농촌 산업 집적화 기반 조성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은 재원 용도를 포괄적으로 지정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부여된 재원 한도 내에서 자체실정에 맞는 사업을 자율적으로 기획·설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포괄보조사업으로서 추진방식에 있어서 사업계획 수립, 사업시행 등 사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책임 하에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중앙부처는 모니터링 및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에 주력하고 있다.

포괄보조금 통합 첫해인 2010년에는 16개 내역사업에 대하여 2,359억원을 지원하였고, 2011년에는 17개 내역사업에 대하여 2,435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12년에는 13개 내역사업으로 2,031억원을 지원하였고, 2013년에는 6개 내역사업(유형)으로 2,280억원

(수산분야 174억원 포함)을 지원하였다. 그리고 2014년에도 6개 내역사업(유형)으로 1,763억원을 지원하여 총 매출액 4,859억원, 총 고용인원 8,164명 등 농촌지역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하였으나, 아직도 종전의 여러 개별사업을 물리적으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일부사업은 목표와 내용이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도 일부 있다.

표 2-2-45 2014년도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주요 추진 성과

구 분	총 매출액	총 고용인원
2014년 실적	485,850백만원	8,164명

*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참여한 업체에 대한 매출액과 고용인원임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2011년에는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의 취지 및 사업목표에 부합될 수 있도록 지원가능한 사업내용을 ①농수산물 생산·유통 기반 구축 지원, ②농수산물 제조·가공 지원, ③체험·전시 지원, ④농어촌체험·관광지원, ⑤농공단지 조성 및 정비 지원 등 5개의 사업 유형으로 재구성하여 사업의 정체성 확립을 기하였다. 2012년에는 지역별 산업화 대상 부존자원의 유형을 고려하여 지역에서 실제로 사업화가 가능한 다양한 산업화 사업모델(모형)을 개발·보급하는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 역량강화에 노력하였다.

2013년에는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이 해양수산부의 수산부문과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농촌부문으로 분리되어 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과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으로 이원화되었다. 2013년부터 ①농촌산업기획·평가체계 구축 지원, ②농산물생산유통기반구축 지원, ③농산물제조가공지원, ④농산물 체험·전시지원, ⑤농촌 체험·관광지원, ⑥특화농공단지 조성 및 개보수 지원 등 6개의 사업 유형으로 재구성하여 지자체에 대한 자율성 확대에 상응하는 사업추진 역량 제고와 사업비 집행의 책임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시·도 단위 농촌산업화 기획·평가·컨설팅·모니터링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였고, 2014년에는 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집행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시행지침 및 모니터링 지침 등을 개정하여 지자체 사업담당자 교육을 하였고, 예산집행시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분석하여 제도개선에 활용, 우수 사례 발굴 및 타 지자체 전파를 통해 포괄보조사업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였다.

(3)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농촌은 면지역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1995년 : 608만명→2010년 : 447만명) 농가소득 수준이 정체(2005년 : 32백만원→2010년 : 32백만원)하고 있으며, 농촌취업자 수가 감소(2000년~2009년 동안 41천명 감소) 하는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을 안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자연환경과 전통문화 등 농촌의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체험·휴양 프로그램 등의 제공을 통해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농촌발전을 도모하고 농업의 6차 산업을 중심으로 한 내발생적 지역순환경제의 실현을 목표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을 하고 있다.

농촌관광은 그동안 양적 성장 단계(농촌체험휴양마을 지정현황: 2011년(549개소)→2014년(840개소))에서 질적 발전단계로 접어들면서, 경영체의 품질수준 유지와 공급자 지향적 정보의 확산과 재생산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농촌관광사업 등급제를 통한 농촌관광 사업 주체들의 자발적인 서비스 등의 품질수준 제고를 도모하고, 계절별·테마별 홍보콘텐츠 발굴로 저변을 확대하였으며, 체험마을 공동협의체 중심으로 한 지역단위 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통해 농촌지역의 경제활성화를 달성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농촌체험휴양마을의 방문객은 (2011년, 6.5백만명→2014년 8.2백만명) 연평균 8.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매출액 또한 (2011년, 70천만→2014년, 871억원) 연평균 7.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농촌관광사업 등급제는 농촌 관광사업을 표준화된 기준에 따라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시설 및 서비스 등 수준을 차별화하여, 사업자의 자발적인 품질개선 유도를 통한 수익창출을 도모하고 소비자에 신뢰성 있는 정보제공을 위해 도입되었다. 2013년 「농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정에 따른 등급실시로 2013년 118개, 2014년 286개소의 농촌체험휴양마을에 대해 등급을 결정하였다. 경관·서비스, 체험, 숙박, 음식 등 4개 부문에 대해 1~3등급과 등급외를 부여하며, 4개 부문 1등급인 마을에 대해 으뜸촌(2013년 9개소, 2014년 14개소)으로 지정하여 홍보·마케팅을 지원하고 있다.

농촌체험관광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2007년 웰촌포털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 수요자 요구에 적합한 콘텐츠 분류 및 구조변경 등의 개편작업을 하였다. 또한, 소비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지역자원과 연계된 농촌관

광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기 위해 소비자 트렌드 분석을 통해 월별로 총 90선의 테마형 농촌관광 정보를 제공하였다.

2006년부터 역량 있는 지역인재를 활용한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경영을 통한 농촌체험휴양마을 발전을 위해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제도를 운영(국비·지방비 각각 50%)하고 있으며,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2005년부터 역량강화 교육(2005년, 1,322명→2014년, 2,707명 대상)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농촌체험시설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농촌체험휴양마을 안전관리 매뉴얼 제작 및 배포하고 체험 및 화재 보험 등에 대해 지원(국비·지방비 각 50%, 2012년 체험 253개소·화재 72개소→2014년 체험 432개소·화재 304개소)하고 있다. 농촌체험관광에 대한 이용 편의성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해 코레일과 협업하여 철도 인프라와 농촌관광을 연계한 여행 상품을 개발(9종)하여 운영하였다.

농촌관광 경험 정도가 2004년 7.7%에서 2014년에는 14.76%로 증가하여 연평균 증가율은 17.7%에 달하고 있으며, 체험형 관광 및 환경친화적 관광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농촌관광산업은 지속적으로 발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농촌자원과 융복합한 패키지 상품 개발과 지역주도의 발전체계 구축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4) 농촌축제지원사업

문화관광축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농촌 마을·권역단위의 축제를 지원하여 농촌지역 활력 증진 등을 도모하고자 2008년부터 농촌축제 지원사업을 추진하였다.

농촌의 경관·체험 등을 소재로 한 마을·권역단위 축제 지원을 통해 도농교류 촉진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유도 등을 목적으로 하고, 축제 개최를 위한 기획, 프로그램 개발, 운영·홍보·컨설팅 및 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있다.

2014년에 총 41개 농촌축제를 선정하여 10억원(국고 50%, 지방비 50%)을 지원하였으나, 세월호 사건 등으로 2개 축제가 취소(국고 30백만원)되고 39개 축제가 개최되었다. 농촌의 마을·권역 단위 소규모 축제를 통해 도농교류 및 농촌활력 증진 등에 기여하였다. 2008년 19개소에 국비 3억원 지원을 시작으로 2014년 39개소에 5억원을 지원하였다.

농촌의 소규모 마을단위 축제 지원으로 농촌의 활력 증진 및 다양한 가치 제고 등에 기여하고 있으나, 일부 축제의 경우 개최목적 및 내용·구성 등이 본래 취지와 다르게 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촌축제가 공동체 활성화라는 사업목적에 부합하고,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즐기는 축제가 되도록 농촌축제 지원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5) 특화어항

기존 수산 기능 중심의 단순어항 개발에서 벗어나 보다 가치 있는 어항을 개발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어항을 지역경제 중심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2차 어촌·어항발전 기본계획(2014년)」을 통해 선을 보였다. 2차 기본계획에 따라 어항의 부가가치를 창출시키고 어촌 지역발전 및 어촌 소득증대 기반 마련을 위해 관광레저 및 편의시설 확충이 우선적으로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해양안전 대책 마련 또한 중점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시책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필요성과 목표에 맞추어 국가어항 특화개발을 위해 전체 사업비 3,320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다기능어항 개발, 이용고도화 사업, 아름다운 어항 조성, 어촌마리나역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2014년부터 추진 중인 국가어항 레저관광 개발 계획 수립은 사업비 5억원을 투입하여 어항의 어메니티 창출을 위한 아름다운 어항 4개소를 선정하고, 국민의 해양레저활동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어항에 어촌 마리나역(驛)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단조롭고 정체된 어항을 문화와 레저가 접목된 지역 명소로 조성할 계획이다.

그리고 성과평가(2012년)를 통해 어가소득 향상 및 관광객 증가 효과가 드러난 다기능어항 시범사업(2004년~2015년)의 연장선이라 할 수 있는 다기능 어항 확대개발에 전체사업비 54억원을 투입하여 어항을 지역특성과 연계한 경제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번 다기능 어항 개발사업은 복합형, 피서리나형, 낚시관광형으로 유형화 하였으며, 지자체 공모를 통해 기존 시범사업과는 다소 차별화된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현재 관광, 레저, 상업 등 복합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복합형 다기능어항이 5개소로 선정되었으며, 낚시관광형 다기능어항이 3개소, 피서리나형 다기능어항이 2개소가 개발계획 수립단계에 있다.

죽변항, 거진항, 방어진항, 구시포항이 2011년에 어항 이용고도화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고 2014년 상반기에 실시설계가 완료됨에 따라 2014년 하반기부터 8억원의 예산으로 사업 착수가 진행되고 있으며, 2019년까지 4개항에 대한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용고도화 사업이 완료되면 어항시설의 기능재편 및 현대화를 통해 수산물 생산, 가공·유통 등 수산기반 거점어항 역할을 수행하여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6) 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제주 포함)

최근 어촌은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어촌산업의 1차, 2차, 3차 복합산업화를 촉진하고 창업 및 기업유치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의 경제활동 다각화와 소득고용기회 증대를 도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각 시·도에 ‘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지원을 통해 어촌 지역의 부존자원 발굴과 산업화에 필요한 생산, 유통, 제조, 가공, R&D, 유통, 마케팅 등의 기반 구축과 향토기업의 집적화를 통한 기반 조성을 하고자 한다.

어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어업 위주의 단편적이고 어촌·어항·어장의 공간 중심의 패키지 지원과 지역의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는 사업형식으로 사업지원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어촌 산업화의 외연적 확대 및 6차산업화라는 정책목표 하에 기존 수산물과 어항 중심의 산업화 대상자원을 수산물, 어항, 특산물, 역사·문화경관·자원 등의 무형자원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단순식품가공에서 6차산업화를 위한 융복합화를 추진하고 어업인 중심이 아닌 어업인과 마을기업 및 지역주민이 함께 산업화 주체로 사업을 주도한다. 사업내용도 H/W위주의 단순구조에서 탈피해 생산, 유통, 제조, 가공, R&D, 유통, 마케팅, 체험, 관광 부분의 S/W분야 지원을 강화하고자 한다.

기존 중앙부처에서 직접 추진하던 하향식 사업추진 방식도 포괄보조사업 형태의 지자체의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는 상향식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자체의 자율성 강화와 포괄보조사업 제도의 취지와 강점을 최대한 살리며 중앙부처인 해양수산부는 지자체에 사업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향후 사업성 검토를 통해 우수 시·군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어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은 사업 지원목적에 부합되는 경우, 지원 제외 대상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을 제외하고는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자는 어업인 조직, 생산자 단체, 수산물가공업체, 시장·군수·구청장, 연구단체 등이다. 지원자격은 어업인 조직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에 지원할 수 있으며, 작목반 등 비법인이 법인(영어조합법인, 수산업회사법인 등)으로 전환된 경우 작목반 등 비법인의 운영실적화 법인의 총 운영실적이 1년 이상 되어야 한다. 참고로 지원제외 대상 사업은 법령에 의한 지원제외 사업, 해양수산부 정책방향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 총 사업비 20억원 이상 투자되는 사업 중 해양수산부의 사전 사업성 검토를 받지 않는 사업 등이므로 사업을 지원하는 지자체는 이를 잘 파악해서 사업을 지원해야 한다.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지원되는 어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은 국고 50%와 지방비 50% 그리고 일부 자부담이 포함된다.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인 생산, 유통, 제조, 가공시설의 설치사업은 2~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단년도 사업추진도 지양해야 한다.

사업예산 신청은 각 시도별로 배정된 포괄보조금 예산한도범위 내에서 예산신청을 해야 한다. 기존사업의 경우 가이드라인 시행 전 확정되어 추진 중인 계속사업은 당초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정해진 기간까지 사업계획 및 해당 예산을 우선 반영한다. 신규사업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및 시행령 41조에 따라 사업금액 20억원 이상(행사성 사업 등 5억원)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군수, 40억원 이상(행사성 사업 10억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총사업비 규모 2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자체 타당성검토를 거쳐 해양수산부의 사업성 검토를 사전에 받아야만 한다.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사업 형태에 따라 7개 사업 유형으로 분류하여 예산신청을 할 수 있다. 사업유형은 ① 시·도 단위 어촌산업화 기획평가 ② 수산물 생산·유통 기반구축 지원 ③ 수산물 제조·가공 지원 ④ 수산물 등 체험·전시 지원 ⑤ 어촌체험·관광 지원 ⑥ 특화 농공단지 조성 및 노후단지 개보수 지원 ⑦ 생산·유통·제조·가공·체험·관광 등 6차산업화 지원으로 분류되어 각 사업 유형에 부합하는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시행 다음연도에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추진전략의 적정성, 추진체계의 적절

성 및 추진과정의 효율성, 사업목표의 달성도 및 사업의 파급효과 항목에 대해 지역발전위원회 주관의 지역발전사업 평가를 받는다. 평가결과 우수 지자체 및 사업은 예산 추가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받지만 미흡한 지자체 및 사업은 예산 삭감이라는 페널티를 부여 받을 수도 있다. 또한,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는 반기 1회 이상, 시·도 및 시·군·구는 분기 1회 이상의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2010년부터 2013년도까지 사업지원을 통해 2010년도 181,597백만원이던 매출액은 2013년도 197,056백만원으로 증가했으며 고용인원은 2010년 2,625명에서 6,993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갈등, 계획년도를 초과하는 부진 사업지구 발생 등의 문제 또한 발생하고 있어, 앞으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하향식이 아닌 상향식 지원방식으로 추진되는 어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은 침체된 어촌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으며, 어촌자원의 다양한 산업화를 통해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위해 중앙부처, 지자체, 어촌계, 지역주민 모두의 노력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7)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

1) 지자체 자연휴양림 조성

최근 주40시간 근무제, 주5일 수업제, 고속철도 확충 등 시간 및 공간 이용 패턴의 변화로 야외휴양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숲길걷기와 산림휴양·치유, 숲 체험, 산림교육 등 다양한 영역으로 산림복지서비스에 대한 국민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1988년 자연휴양림을 최초 개장한 이래 2014년까지 162개소의 자연휴양림이 조성되었으며, 2014년에는 전국민의 약 30%에 해당하는 1천 3백만명 이상이 자연휴양림을 방문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국민여가 활용의 대표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2015년에는 10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1개소의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는 한편 다양화되는 국민수요에 대응하여 숲속야영장,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등 다양한 유형의 산림휴양시설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표 2-2-46 자연휴양림 이용객 추이 (2005~2014년)

(단위 : 만명)

연 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이용객	508	578	626	763	869	944	1,060	1,161	1,278	1,359

2) 지자체 도시숲 조성

도시민들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 녹색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2005년부터 지자체 도시숲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숲은 기후조절, 방음, 대기정화, 정서함양, 도시생태계 보전 등의 효과가 있다. 2014년에는 548억원을 투입하여 녹색쌈지숲(163개소), 산림공원(35개소), 생활환경숲(58개소)과 가로수(675km)를 조성하였으며, 2015년도에도 537억원을 투입하여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다.

그림 2-2-14 도시숲 조성 사례



산림공원



가로수

3) 지방수목원 및 박물관 조성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따라 멸종위기에 처한 산림 식물자원의 체계적인 수집·보존·증식 및 연구·이용 촉진을 위해 지방수목원과 산림박물관을 육성·지원하고 있다. 2014년에는 147억원을 투입하여 지방수목원 26개소(조성 13, 보완 13) 및 산림박물관 6개소(조성 1, 보완 5)에 대한 연차별 사업을 지원하였고, 2015년에는 113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4) 지역 생태숲 조성

산림생태계가 안정되어 있거나 산림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을 생태숲으로 지정하여 산림식물자원의 자생지내 보전기능을 강화하고 국민의 자연학습 및 생태 교육의 장으로 제공하고 있다. 2014년에는 59억원을 투입하여 총 13개소에 대해 지원하였으며, 2015년에는 43억원을 투입하여 산림생태계의 안정과 산림생물다양성의 유지·증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5) 지자체 치유의 숲 조성

최근 도시화, 고령화 등 사회환경의 변화로 건강과 복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산림환경이 각종 질병의 원인인 스트레스를 해소함으로써 심리안정 및 각종 질환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연구사례들이 소개되면서 잘 가꾸어진 산림자원을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대안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산림치유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2009년 산음 치유의 숲을 시작으로 2014년까지 5개소의 국·공립 치유의 숲이 조성되어 운영 중이며, 최초 운영을 시작한 이래 6년간 2,490천명이 치유의 숲을 방문하였다. 2015년 전국에 31개소의 치유의 숲을 조성중이며, 194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표 2-2-47 치유의 숲 이용객 추이 (2009~2014년)

(단위 : 천명)

연 도	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이용객	2,490	1	76	158	315	787	1,153

현재, 질 높은 산림치유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산림치유지도사 제도를 운영 중이며, 국립 치유의 숲의 경우 배치기준에 따라 1개소당 3명을 배치하고 있다. 향후 산림복지 전문업 등록제 운영 등 산림치유지도사의 장기일자리 전환을 통한 전문성 확보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산림복지 전문업 등록제는 법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산림복지 전문업으로 등록한 단체를 통해 산림치유지도사

등 산림복지 전문가를 상시 고용하도록 유도하고 프로그램 운영 용역 등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장기 일자리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코자 도입하는 제도이다.

(8) 숲길 네트워크 구축

1) 등산로 정비

여가시간 증가 및 소득수준 향상으로 증가하는 국민의 등산수요에 부응하고, 산악 사고 예방 및 산림생태계 보호를 위해 훼손 등산로를 자연친화적으로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숲길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산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4년에는 국고 22억원을 투입하여 등산객 증가로 훼손이 심화되고 있는 백두대간·정맥 등산로 109km를 정비하였으며, 2015년도에도 15억원을 투입하여 훼손 등산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국민의 등산수요에 부응할 계획이다.

2) 트레킹길 조성

등정(登頂) 및 주능선 종주에서 탈피하여 수평적 개념의 산행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등산로에 집중되는 이용자 분산을 통한 산림생태계 훼손 완화와 지역의 역사·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마을과 마을을 잇는 트레킹길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숲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2014년에는 국고 26억원을 투입하여 백두대간 트레일, 한라산둘레길 등 국가 트레킹길 151km 조성을 지원하였으며, 2015년도에도 19억원을 투입하여 농·산촌 경제 활성화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체험중심의 건전한 산행문화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국가 트레킹길을 지속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2.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1) 과수 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우리나라와 칠레(2004년 4월 1일), EU(2011년 7월 1일), 미국(2012년 3월 15)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은 발효되었으며, 캐나다, 호주, 콜롬비아와는 협상이 타결되어 세계 50개국과 FTA를 체결하였다. 앞으로도 중국 등 거대 농업국가와의 협상진행으로 농산물 시장개방이 확대되고 있어 국산 과실과 수입산 과실과의 경쟁은 가속화되고 있다. 더불어 국내 과수 생산·유통구조는 소비자 지향적으로 개편되고 있어 정부의 과수산업 발전 방향도 국내외 여건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개방 하에서도 지속 가능한 과수산업 육성을 위하여 2004년부터 2010년까지 FTA 과수경쟁력제고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1년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발효와 앞으로 진행될 각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 등에 대응하여 과수농가에 대한 FTA 보완 대책을 수립(과수산업발전대책, 2011년 5월)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수 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해 외국산과 품질경쟁이 가능하도록 과수농가의 생산시설을 현대화하여 생산비 절감 등 경쟁력 확보와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기반을 구축해 왔다.

특히, 고품질의 과실생산과 유통체계 정착 등 과수 생산·유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 여건반영, 투융자 효율성 제고 등 사업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자체가 수립한 과수종합발전계획을 엄격히 심사하여 패키지로 지원하는 지방자율계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산·학·연 전문가로 「민간평가단」을 구성하고, 2단계 평가를 통해 성공가능성 등을 엄격히 심사하여 지원대상 지자체를 선정하고 있다. 생산시설현대화(국비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및 유통시설현대화(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사업의 지원조건에 따라 우량품종갱신, 지주시설, 비가림시설 등 고품질생산, 생산비·에너지절감 시설 및 장비, 방풍·관수 등 재해예방 시설을 지원하고 있다. 2014년에는 57,341백만원을 지원하였고, 2015년에는 56,441백만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중장기적으로 2017년까지 고품질시설현대화 54천ha, 감귤유통시설현대화 25개소 설치를 목표로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2)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

우리나라의 과수농가 호당 경영규모는 0.8ha 수준으로 1ha미만이 81.2%를 차지하며, 전체농가 중 61%(122천호)가 60세 이상 고령농가로 기술개발이나 자본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다른 나라에 비해 경영규모가 적어 기계화가 어렵고, 경사지 경작로 등 기반정비가 미흡하여 노동력 소요가 많은 생산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개방에 대비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수 생산·유통기반을 구축의 일환으로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을 통해 용수개발, 농작업로 확·포장 등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경쟁력 있는 과수 생산단지를 육성하고 있다. 또한, 품목별 생산성 향상과 품질 고급화에 필요한 핵심 재배법을 확대하고 적정규모의 영농규모를 갖추고 기술농업을 실천하며, 생산조직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업농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 사업은 과수주산지 중 집단화된 지구(30ha 이상)를 대상으로 관정, 양수정 등 용수원을 개발하고, 진입로 및 경작농로 확·포장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한·미 FTA 등 시장개방 대응 및 과수산업 기반유지를 위해 2015년도부터 사업지원범위를 최소 10ha이상으로 확대하였다. 사업시행주체는 시·도지사(시장·군수)로 기반조성비는 국고 80%, 지방비 20%이며, 사업기간은 2년으로 1년차에 30%, 2년차 70%를 지원한다. 연차별로는 2013년 119억원(567ha), 2014년 144억원(413ha)을 지원하였으며, 2015년에는 141억원(600ha)을 지원할 예정으로 중장기적으로는 2017년까지 과실전문생산단지 7,000ha 기반조성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3) 과실브랜드 육성지원사업

다국적기업(Sunkist, Dole 등)과 경쟁할 수 있는 국내 대표과실브랜드를 육성하고 지역단위 군소브랜드를 통합한 과실주산지 중심의 지역공동브랜드 육성하여 과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07년부터 과실브랜드 육성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브랜드 품질관리, 마케팅 운영지원, 브랜드 홍보지원 등을 통해 생산자를 조직화·규모화하여 계획적인 생산과 품질 관리로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을 갖춘 과실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통합브랜드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제고 및 마케팅 능력과 시장 교섭력을 증대하여 농가소득 향상은 물론 과수 소비확대 등을 도모하고 있다.

사업대상자는 사업시작 전년도에 전문 평가단을 구성하여 사업계획의 적정성, 브랜드경영체의 적합성, 생산·유통 혁신 실적 및 계획 등을 평가하여 선정하고 있으며, 평가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은 사업비 조정 등 사업계획에 반영함으로써 과실브랜드 육성 지원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업이 시작된 2007년에는 전국 공동브랜드(Sunplus) 1개와 지역공동브랜드 7개를 지원하였으며, 2014년에는 3개 브랜드경영체(전국, 밀양, 김천)에 905백만원을 지원하였다. 2014년까지 17개 과실브랜드를 육성하였으며, 과실브랜드 경영체의 유통비율이 15.0%까지 증가(2013년: 175천 톤, 14.3%→2014년: 214, 15.0)하였다. 2017년까지 브랜드경영체 20개소를 육성하고, 과실 유통량 중 브랜드경영체의 유통비율을 20%까지 달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난립하고 있는 과실 브랜드를 개선하고 경쟁력 있는 브랜드경영체를 육성하기 위해 2015년부터 광역 또는 시도단위 브랜드경영체에 한해서 사업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표 2-2-48 과실브랜드 육성지원사업 추진 현황

(단위 : 백만원, 개)

구 분	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사업비(국고)	13,427	2,227	2,507	2,256	1,847	1,375	1,335	975	905
브랜드경영체 수	17	8	3	1	2	1	1	1	-
(당해연도 국고 지원)		(8)	(11)	(12)	(7)	(5)	(5)	(3)	(3)

(4)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

과수 생산과 유통을 주도할 품목조직을 육성하고, 산지유통체계를 개선하는 등 과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4년부터 과수 주산지에 규모화·현대화된 거점산지유통센터(APC)를 건립을 지원해왔다. 특히, 한·미 FTA 등 추가 시장개방에 따라 국내 피해 과수농가의 안정된 영농보장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과수 주산지에 집하, 선별, 포장, 저장 등이 가능한 현대화된 산지유통시설을 지원함으로써 산지농가 조직화와 유통 규모화 및 시장교섭력 제고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 사업은 산지의 마케팅 경쟁력과 교섭력을 높이고,

상품화 시설 및 위생시설을 일괄 지원함으로써 상품성 향상과 부가가치를 높이는 사업으로 지자체 및 생산자단체에 국고를 지원하고 있다. 사업기간은 2년으로 1년차 40%, 2년차 60%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또한 기존 지원 사업 규모를 현행 APC규모(처리물량 1~2만 톤)와 병행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중형 규모(5천톤~1만톤)의 APC 건립 지원으로 확대하여 사업을 활성화 하였고, 공공유형보다 일반유형(생산자단체 등) 위주로 지원하여 책임 경영을 유도하고 있다.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총 21개소를 선정하여 1,235억 원을 지원, 건립하여 산지유통의 중심축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2014년에는 6억원, 2015년에는 7억원을 지원하여 총 24개소 건립을 추진 중이며 중장기적으로는 2017년까지 거점산지유통센터 30개소 건설하여 주요과실 전체 유통량의 30%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5) 농업기반정비

농업기반정비사업은 농업, 축산업의 1차적인 생산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지원하여 생산성 향상과 편의영농기반 구축 등 안전·편의영농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개발여건이 양호한 논, 밭을 대상으로 용수개발, 농로개설 등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생산성 향상과 편의영농기반을 구축하고, 논에 밭작물 재배 유도를 위한 시설 지원으로 국제 곡물가 상승 대응 및 국내 곡물 자급률을 제고토록 하며, 재해에 취약한 시·군 관리 노후 수리시설을 보수·보강함으로써 재해예방 등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농업기반정비사업은 밭작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밭기반정비, 필지규모가 작아 생산성 향상에 한계가 있는 논에 대한 대구획경지정리, 국제 곡물가 상승에 대비하여 국제 곡물 자급률 제고를 위한 논·밭작물 재배기반지원, 안전영농기반 구축을 위한 시·군관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등이 있다. 지난 2010년부터 광특회계 시·도 자율편성사업으로 추진중으로 재원의 용도를 포괄적으로 지정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농업 생산에 필요한 기반을 지자체 특성에 맞도록 선정하고 부여된 재원의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기획·설계·시공하도록 지자체에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부여하고 중앙정부에서는 사업추진에 따른 모니터링,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는 한편, 매년 사업추진

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과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되도록 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사업비 지원방식은 기초인프라 기반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국고 80%, 지방비 20%로 구성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포괄보조사업 이전에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던 개별사업은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종전 보조율을 적용하고, 새로이 추진하는 사업부터 변경된 보조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표 2-2-49 농업기반정비사업 내역사업별 주요내용

내역사업명	사업 주요내용
밭기반 정비	채소, 과수, 화훼, 특용작물 등 주산단지 및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용수개발, 농로개설 등 생산기반 구축, 밭작물 생산성 향상, 품질개선으로 소득증대
대구획 경지정리	농로, 용·배수로 시설이 취약한 우량농지를 재정비하여 대형기계화 영농 기반 조성으로 토지 및 노동의 생산성 증대와 농지 및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보전, 관리기반 조성
논의밭작물 재배기반지원	기존 용·배수체계 활용이 가능한 집단화된 논을 대상으로 암거배수, 송수관로, 농로개선 등을 정비, 논에 밭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국제곡물가 상승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곡물 자급률 제고
시·군수리시설 개보수	노후·손괴 등으로 기능상실 및 재해취약한 시·군관리 수리시설의 보수·보강을 통해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영농편의 제공
가축분뇨처리 지원(제주)	액비저장조, 액비유통센터, 액비살포비 등 지원으로 가축분뇨를 퇴비·액비 등으로 자원화하여 자연순환농업을 활성화하고, 적정처리를 통한 수질 등 환경오염 방지

밭기반정비,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은 2009년까지는 개별사업으로 추진해오다 2010년부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에 따라 수산분야를 포함한 광특회계 농어업기반정비사업으로 추진하였고, 2012년부터는 농어업기반정비사업에 논에 밭작물 재배유도를 위한 논의밭작물 재배기반지원사업을 신설하였으며, 2013년부터는 재해예방을 위한 시·군관리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을 새로이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다. 한편, 정부부처 조직개편에 따라 2013년부터는 수산분야를 제외하여 농업기반정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4년도에는 8개 내역사업에 국고 1,460억원을 지원하였다. 계정별로 분류해 보면, 일반 시·도를 대상(지역개발계정)으로 밭기반정비, 대구획경지정리, 논의밭작물재배기반지원, 시·군수리시설개보수 등 4개 내역사업에 국고 1,191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를 대상(제주계정)으로 밭기반정비, 농업인교육훈련, 농업경영컨설팅지원, 가축분뇨처리지원, 원원종 및 원종생산 등 5개 내역사업에 269억원을 지원하였다

농업기반정비 사업의 계획수립 및 추진과정에서 주민설명회 개최, 협의회 구성, 명예감독관 위촉 등으로 지역주민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렴·반영하였으며, 받기반정비,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은 농한기를 이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영농기 이전 완료해야 하는 시한성 사업으로 매년도 세수부족에 따른 반복적인 국고 교부지연에 대비하여 지방비를 우선 투입하여 영농에 지장 없도록 사업은 계획대로 정상 마무리하였다.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은 생산기반 지원을 통해 소득 증대 측면도 있지만, 가뭄, 태풍, 집중호우, 해일 등 자연재해를 예방하는 목적도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에 대한 적정 투자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기이다.

(6) 친환경농업기반 구축

1) 친환경농업지구조성 사업

친환경농업지구조성 사업은 토양·생산·인증·유통과 소비 부문으로 세분화되어 이루어지는 정부차원 친환경농업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왔다. 정책추진의 세부분야 중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농가소득을 보전하는 목적을 갖는 생산부문에 해당한다. 본 사업의 목적은 친환경 농업 실천이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을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농약·화학비료 사용량 감축과 축산분뇨 자원화를 통한 농업환경 유지·보전과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체계 구축이다.

사업대상자는 친환경농업지구사업을 희망하는 지역(마을)에서 사업을 원하는 농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로 하고 있으며, 지원자격 및 요건은 농경지가 10ha 이상 집단화되고, 참여농가가 10호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지원대상은 친환경 농자재 생산시설·장비, 친환경 농산물 생산시설·장비 지원, 친환경 농산물 유통시설, 친환경농업 교육시설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조건은 사업규모에 따라 지구당 2.5~10억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국고 30%, 지방비 50%, 자부담 20%)하고 있다. 또한 건강한 자연경관과 농업환경을 유지·보전하며,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유도하도록 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1995년부터 미생물배양시설, 퇴비장,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시

설 등의 주요시설을 설치하며 마을 단위 10ha 규모의 친환경농업지구를 조성해왔고, 2014년에는 29개소 45억원(국고)을 지원하여 2014년말 무농약 이상 인증면적이 60.5%로 전국 평균(4.9%) 보다 12배 정도 높아 친환경농업기반구축 확대에 크게 기여하였다.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사업을 통해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등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및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크게 기여 하는 등 사업대상이 아닌 인근지역 및 전국에 대한 파급효과도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까지 1,141개소를 설치·완료하였으며, 2018년까지 매년 20여개소 이상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사업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사업은 농업환경개선과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해 경종(耕種)과 축산을 연계하여 친환경농업 확산과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단지화·규모화하여 단지 내에서 물질순환이 이루어지도록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저탄소 자원순환형 모델 구축을 하기 위함이다.

사업대상자는 지역 농·축협 또는 농업법인으로 사업면적 200ha 이상 확보가 가능한 조직으로 하고 있으며, 지원대상 품목은 벼, 채소, 과수, 축산 등 친환경 농산물 인증이 가능한 모든 작물이다. 또한 지원대상은 친환경농자재생산시설·장비,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시설·장비, 농축순환자원화시설 등을 지원하며 개소 당 20~100억원(국고 30%, 지방비 40%, 자부담 30%)을 지원하며, 사업기간은 3개년(1년차 10%, 2년차 50%, 3년차 40%)간 연차별로 지원하고 있다. 1년차에는 사업계획 수립, 설계, 장비구입, 시설 착공 등을 지원하고, 2년차에는 주요시설·장비의 설치, 3년차에는 사업 마무리를 통해 완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목표를 위해 본 사업에서는 200ha 이상의 경지에서 친환경농업 실천이 가능하며 효과를 최대화시킬 수 있는 단지를 중심으로 사업대상을 선정하여, 향후 국내 친환경 농업의 이상적 모델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육성하고 있다. 특히,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자원순환형 농업을 중심으로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광역친환경농업단지를 조성 중이며, 2014년에는 광역단지 14개소 127억원을 지원하여 농업환경개선, 친환경 농업육성, 자원순환형 농업단지조성 등을 통해 친환경 농업 정착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단지내 무농약 이상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은 20.8%로 전국 평균(4.9%)보다 4배 정도 높고, 가축분뇨자원화를 통한 농업환경 보전 등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기반조성에 크게 기여하는 등 친환경 농업 인프라 구축에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 앞으로도 정부에서는 환경보전, 생태계 개선 및 소비자의 신뢰도 향상에 노력할 것이다. 2014년말 현재 48개소를 선정·지원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농축순환자원화센터 민원 등으로 신규지원은 중단하고, 기존 광역단지 추가 지원하여 친환경농업기반구축을 지속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7) 농기계 임대사업

우리나라의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기계 이용효율을 높이고 영세농가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1990년대부터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농협에서 도입하였으며, 2003년부터는 소규모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과 농기계 구입으로 인한 농가부채를 완화하고 농기계 이용효율 향상을 위해 정부예산으로 밭작물 위주의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함으로써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고 농작업 기계화율을 제고하여 농촌일손을 해소하고자 지원하고 있으며 총사업비 10억(국고 50%, 지방비 50%)내에서 임대농기계 및 관리장비, 보관창고 등 사후관리 시설·장비 구입이 가능하며, 보관창고는 총사업비의 50% 이내에서 지역규모에 맞는 규모로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필요시는 지방비를 추가 투입할 수 있도록 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밭작물용 농기계 임대사업은 2003년부터 시작되었는데 2016년까지 전국에 400개소의 임대사업장을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2003년에는 지역농협을 대상으로 5개소를 선정 운영하였으나 지역농협에서는 장기임대로 농업인에게 임대하고 있어 본질적 취지에 벗어나므로 2004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를 변경하였고 2014년까지 336개소를 설치하였으며, 2015년에는 43개소를 설치한다. 그리고 개소당 지원규모는 2003~2005년까지는 2억 5천만원을 지원하였으나 2006년부터는 매년 2~3억원 정도를 인상하여 2009년부터는 개소당 10억원으로 임대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농기계 임대사업의 성과는 기계화가 미흡한 분야의 기계화를 촉진시켜 기계화영농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농산물의 생산에 투입되는 비용과 노력을 절감하는 경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아울러 농업인들이 농기계 이용으로 힘든 농작업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건강을 증진시키는 후생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었다.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으로 농업경영비 절감 및 이용률 제고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특히 농기계를 자가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보다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 조사료는 97%, 콩과 마늘은 77%, 과수는 54%의 비용절감을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50 작목별 비용절감 효과

작 목	평 균	작업별 비용절감 효과(%)
감 자	83.6%	파종 79, 수확 88
마 늘	77.6%	쪽분리 65, 파종 75, 수확 93
콩	76.0%	파종 83, 수확 85, 탈곡 50, 정선 87
조사료	97.1%	집초·결속 97
과 수	54.2%	제초 31, 방제 77

농기계 임대사업은 지역여건에 따라 가급적 기계화가 미흡한 농작업용 농기계와 다수의 영세소농 농업인이 이용할 수 있는 농기계 등을 대상으로 임대사업을 실시하여 농촌의 고령화에 따른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농가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최소화하여 저비용으로 기계화 농업을 촉진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밭작물 기계화가 낮은 파종·이식, 수확 등 여성친화형 농기계 중심, 적정 임대료 산정, 수익성을 확보한 다양한 임차 농작업 개발 및 농기계 운영자에 대한 농기계 교육 등을 추진 운영할 계획이다.

(8) 친환경농산물종합물류센터 건립

1990년대 중반부터 친환경농업육성 정책의 본격적 추진으로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¹⁰⁾과 생산량¹¹⁾이 증가하였고, 전체 경지면적에서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이 차지하는 비중¹²⁾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2006년 '제2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

10) 2014년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 100천ha (출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1) 2014년 친환경농산물 생산량 825천톤 (출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2) 2014년 전체 경지면적 대비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 비중 5.8% (출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획(2006~2010년)'을 수립하면서 친환경농산물과 일반농산물의 유통경로를 분리하여 친환경농산물의 상시거래 장소로서 가격형성, 수집분산, 유통정보 제공, 친환경인증 및 안전성 관리, 통합물류, 상품화 등의 통합적 기능을 수행하는 권역별 종합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다.

우선적으로 수도권 지역에 1개소를 건립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에 총사업비 480억원(국비 50%, 지방비 50%), 부지 68,972㎡, 건축연면적 25,927㎡(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여, 2012년 9월에 완공하고 현재 14개 친환경법인이 입주하여 수도권의 친환경농산물 물류의 허브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표 2-2-51 경기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 연차별 예산투입 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48,000	1,686	12,618	22,712	10,984
국 비	22,900	843	6,309	11,356	4,392
도 비	25,100	843	6,309	11,356	6,592

아울러 2012년부터 전남 나주에 호남권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사업비 289억원(국비 50%, 지방비 50%)을 투자하여 2016년 하반기에 준공할 예정이다.

표 2-2-52 전남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 연차별 예산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28,852	1,152	9,440	5,944	-	12,316
국 비	14,426	576	4,720	2,972	-	6,158
도 비	14,426	576	4,720	2,972	-	6,158

* 사업부지 변경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으로 당초 2015년도 예산을 2016년도에 편성

위와 같이 2016년까지 친환경농산물 전용 종합물류센터를 2개소(경기, 전남) 조성하여 친환경농산물의 대표가격 형성, 안정적 판로확대 및 소비자 신뢰구축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기존 친환경농산물의 제한적 유통구조를 개방적 유통구조로 점차 확대하여 친환경농산물 소비확대에 기여할 것이다.

(9) 인삼생산유통시설현대화

인삼은 일제시대부터 국가에서 직접 경작 및 홍삼제조를 장려하였고, 오랫동안 전매제를 실시하는 등 정부에서 직접 산업을 관리하여 오다가 1996년 농림수산부로 이관되면서 자율경쟁체제로 전환, 인삼 생산 및 수출이 크게 증가되는 등 국내 인삼산업이 급속한 성장을 이루게 되었다.

그러나, 인삼산업은 오랜 전매제 실시의 영향으로 생산·유통구조가 크게 낙후되어 있으며, 수삼은 계약재배, 포전매매, 자가출하 형태로 유통되고 홍삼은 인삼공사 또는 인삼조합, 백삼은 금산제조업체 중심으로 생산·유통되는 등 용도별로 구분되어 낙후된 방식으로 유통되고 있다. 또한, 한·미 FTA협상 결과 현행 고율관세(222.8~754.3%)가 철폐되는 등 시장개방 가속화에 따른 인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농가의 조직·전문화를 통한 대외 경쟁력을 확보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국내 인삼산업의 규모화 및 대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산단계부터 유통단계까지 일관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조직화·규모화·브랜드화를 통해 인삼 전문 생산단지조성 조성을 추진하게 되었다.

사업대상자는 경작규모 200ha 이상 규모의 조직화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인삼 전문생산단지로 기존의 농식품사업·지자체 자체사업과 연계가 가능한 농업법인·생산자단체로 선정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은 선별기, 증삼기, 건조기 등 인삼 생산·유통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의 인삼 브랜드 육성, 사업추진·운영 계획의 수립, 수출 및 마케팅 전략 수립 등 관련 마케팅·경영전략컨설팅을 지원하며 개소당 21억원(생산·유통시설 현대화: 국고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마케팅·경영전략컨설팅지원: 국고 30%, 지방비 60%, 자부담 10%)을 지원하며, 사업기간은 2년간 연차별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인삼류는 인삼산업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정된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국정 검사기관인 농협중앙회 인삼검사소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인삼검사소 공신력 제고를 위해 노후화된 검사장비 교체하고 검사항목의 다양화에 대응하여 분석장비 등 시설 현대화를 지원하고 있다.

사업선정은 시·군 지역의 인삼 산업여건 및 전망, 사업별 목표 설정, 농가조직화 및 조직원에 대한 교육, 지자체 자체사업과 연계추진 방안 등 지자체의 종합적인 인삼산

업 육성전략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을 수립·심사·평가를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사업대상자가 투명하게 운영하고, 사업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경영 및 기술지도, 현장애로 사항 해결 등을 위하여 마케팅·컨설팅과 관련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같이 지원하고 있다.

표 2-2-53 인삼 생산유통시설현대화사업 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연 도	사업 대상자	예산액
2010-2011	경기 화성시(화성인삼영농조합법인)	840
	강원 홍천군(강원인삼농협)	840
	충남 금산군(금산인삼농협)	840
	충남 부여군(백제인삼농협)	840
	농협중앙회 인삼검사소	415
2012-2013	경기 안성시(안성인삼농협)	630
	충남 서산군(서산인삼농협)	630
	경북 영주시(중앙인삼영농조합)	630
	농협중앙회 인삼검사소	407
2014-2015	경기 포천시(포천홍삼영농조합법인)	630
	충북 괴산군(괴산홍삼영농조합법인)	630
	농협중앙회 인삼검사소	-

인삼생산유통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은 생산권역별 생산자단체가 주체가 되어, 단순히 낙후된 시설 개선이 아닌 지역 인삼 농업인에 대한 교육 및 농가를 조직화하고 해당 지역의 인삼산업 여건을 바탕으로 새로운 전략과 차별화 방안, 소비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 인삼의 대내외 경쟁력을 확보하였으며, 더불어 지자체에서 인삼자원을 연계한 지역 발전의 좋은 모델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주요 인삼 거점지역에 사업추진이 완료되어 신규사업 수요는 점차 줄어들고 있어, 동 사업은 2018년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10)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

FTA 체결로 국가 간 무역이 개방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분야의 타격이 상대적으로 더욱 크다. 세계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다국적 종자 기업들이 국내시장으로 종자판매를 확대하게 되면 해외 품종들로 인해 국내 종자산업이 타격을 받게 되고 이를 사용하는 농업인들은 점차 많은 로열티를 내고 종자를 구입해야 할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예측된다. 종자 연구개발은 오래시간이 걸리는 것을 생각한다면 국내 종자기반이 무너지면 다시 일으키는데 많은 노력과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2009년도부터 주산지 위주로 우량종자 증식·보급시설을 지원하여 종자생산 단가를 낮추고 지역에서 자급할 수 있는 기반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씨감자, 벼싯종균, 약용작물, 마늘종구 등 12개 분야를 지원하고 있으며, 2009년 7개소 지원에서 시작하여 2015년까지 70개소를 지원하고 있어 지자체 종자산업기반 구축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12년 1,150톤 규모로 생산되던 씨감자 보급량이 2014년 1,960톤으로 늘어났으며, 딸기의 국산품종 점유율(2012년 74.5%→2014년 86.1%)과 화훼분야(국화, 장미) 국산품종 점유율(2012년 23.9%→2014년 28.5%)이 지속 향상되고 있다. 또한, 농업 생산비의 초기단계인 종자가격부터 안정화시켜 농산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종자확보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우수종자로 인해 면적당 생산량이 증가하여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 일정물량의 농산물을 공급하여 물가 불안을 해소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사업이 부실추진이 되거나 무분별한 예산지원이 되지 않도록 보조비를 조정, 사업참여 지자체의 예산 및 부지확보 등 사전단계 점검, 사업추진시 현장 점검을 강화하여 사업성과가 농업인들에게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11)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FTA/DDA 등 시장개방 가속화에 따른 농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농업경영체 및 지역농산업의 잠재력, 내생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에 특화된 농산업을 중심으로 기술과 경영이 조화롭게 융합된 시스템농업의 구축을 통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새로운 전략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새로운 농업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하여 2004년에 ‘농업·농촌 종합대책’ 수립 시 지역농업 발전계획의 하나로 지역농업 클러스터를 포함하였고, 이후 지역 전문가 및 지자체 공무원 등의 의견수렴 및 공감대 형성을 통해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2005년에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시범사업 첫해인 2005년에는 20개 사업단을 선정하여 2007년까지 3년간 지원하였고, 2008년에는 22개 본 사업단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역단위의 분산·중복투자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지역간 연계를 통하여 사업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군 단위 클러스터는 향토산업 육성사업에서 추진하고 둘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만 광역클러스터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하도록 역할을 정립하여 2009년에 12개 사업단을 선정하였다.

그 동안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사업단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이 사업추진 첫 해와 비교하여 각각 149%(2005년 선정), 166%(2008년 선정), 243%(2009년 선정), 128%(2011년 선정) 증가하였다. 생산 위주의 농산업 정책에서 벗어나 2, 3차 산업으로 폭넓게 성장한 결과로 평가된다.

표 2-2-54 클러스터사업단 참여 농기업체 매출액 조사결과

(단위 : 억원, %)

구분	2005년	2006~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B)	증가율 (B-A)
2005년선정사업단	5,720(A)	13,414	7,645	8,295	8,445	8,280	8,397	149
2008년선정사업단			4,105(A)	5,292	5,404	5,429	6,813	166
2009년선정사업단				3,829(A)	4,513	7,034	9,323	243
2011년선정사업단						1,906(A)	2,446	128

지역발전위원회로부터 성과지표에 대한 난이도를 높이라는 지적에 따라 2013년부터 흑자사업단 비율(계획 50%) 및 자담확보 사업단(50%)을 대표지표 적용한 결과, 흑자사업단 비율 58%, 자담확보 사업단 58%로 사업단의 산업화와 자립화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간 ‘클러스터사업단’의 명칭이 참여주체, 시설의 지리적 집중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나 지리적 집적과는 다소의 거리가 있다는 의견도 있어 2010년 4월에는 미래 농산업을 주도할 전략적 농수산물을 관련된 주체(산·학·연·관)가 협력하여 식품산업을 육성한다는 의미로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으로 개칭함과 아울러, 사업단 선정시 단순 생산 및 유통 위주의 사업단은 선정을 배제하는 등 사업추진 추진 개선 방안을 수립·시행하였다. 2011년 사업단 선정에는 산·학·연·관, 생산-유통-가공-판매-소비 등 관련 주체 간 네트워크 및 R&D, 마케팅 등의 시너지 효과 창출 이외에 식품산업과의 연계강화를 통해 지역 식품산업의 중심축이 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를 고려

하였고, 그 결과 13개소가 선정되었다.

지금까지는 지원 전년도 하반기에 사업단이 선정되어 사업단 구성, 사업방향 설정 등에 1차년도를 소비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2014년에 지원 사업단부터는 지원 전전년도에 예비사업단을 선정하여, 1년 동안 컨설팅 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개선하였고, 선정 기준은 농업과 연계한 농식품경영체 육성을 목적으로 10개를 지원하였으며, 2015년부터는 지특회계 시도 포괄보조사업으로 변경이 되어 신규 사업단 4개소에 대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지역 농산업의 혁신모델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건실한 농업경영체를 육성할 계획이다.

(12) 향토산업 육성사업

농촌지역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향토자원을 개발하고 다양한 1·2·3차 산업으로 연계·발전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지역특화사업 내의 세부사업 형태로 ‘향토산업 육성사업’을 신설하였다. 2005년 제1차, 2006년 제2차 향토자원 발굴조사를 통해 선정한 49개(2005년 19개, 2006년 30개) 자원에 대해 ‘시·군별 향토자원개발 기본계획’에 제시된 연차별 계획에 따라 2007년부터 관련 사업을 추진하였다.

2009년부터는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향토자원 발굴 형태의 사업에서 공모형태의 사업(정부 편성)으로 변경하였으며, 신규 선정한 사업대상 30개 향토자원에 대한 산업화 지원을 위해 사업설명회, 세부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컨설팅을 통해 지역의 사업추진 역량 강화와 사업추진 마인드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또한 사업 효과 제고를 위해 사업평가를 통해 피드백이 되도록 하였고, 인센티브 및 페널티를 통해 성과관리도 강화하였다. 또한 2012년, 2013년도에는 농촌 부존자원에 대한 가치 및 산업화 가능성 등의 분석에 기초한 향토산업 등 농촌 산업화 지원을 위해 161개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자원일제조사 및 보완조사를 실시하여 1,011개의 자원을 발굴하였다.

향토산업 육성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현 정부 국정과제로 중점 추진 중인 6차 산업화를 위해 농촌의 향토자원을 지역 핵심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역내 향토자원의 산업화에 필요한 소프트웨어(홍보·마케팅, 디자인·브랜드 개발 등), 하드웨어(생산시설, 판매시설 등) 분야를 포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문평가단을 구성하여 서면 및 현장 평가 절차를 거쳐 지원 대상 사업을 선정한다. 추진방식에 있어서는 지자체가 사업계획 수립, 사업시행 등 사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상향식 추진방식을 채택하였다. 중앙부처는 모니터링 및 컨설팅 등 지원을 통해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2014년도부터는 향토산업육성사업으로 추진되는 R&D분야에 대한 사전 사업성 평가를 받도록 하여, 제품 등의 연구개발이 사업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개편하였다.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지역의 부존 향토자원 203개를 발굴하여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고, 2014년 현재 추진중인 향토산업육성사업 70개 지구에 대하여 추진 실적을 평가한 결과, 그동안 농업 생산 위주의 1차산업 중심에서 벗어나 산·학·관·연의 지역 네트워크를 통한 상품화 기술개발, 농업의 융복합 산업화를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 등 1·2·3차산업 연계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55 향토산업육성사업 선정·육성 지원 현황

구 분	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지원대상(개소) (최종사업지구)	203	18	28	28	28	29	26	26	20
예산 (억원, 국비)	2,413 (322)	43 (43)	90 (90)	286 (136)	344 (53)	406 (0)	409 (0)	438 (0)	397 (0)

* 2007~2008년도 선정지구에 대한 마무리 사업비까지는 군특회계 지역개발사업계정(광특회계 지역개발계정)에서 지원하고, 2009년도 신규 선정분부터는 군특회계 지역혁신사업계정(광특회계 광역발전계정)에서 지원

** ()는 군특 또는 광특회계 지역개발계정 지원액

향후 2015년부터는 지자체 자율편성사업(포괄보조사업)으로 이관하여 신규지구 선정부터 예산편성 권한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등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대, 그에 상응하는 책임성을 강화하여 지역별 특성화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과 연계를 강화하여 광역사업단위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표 2-2-56 2013년도 향토산업육성사업 주요 추진성과

구 분	사업참여기업매출액 (사업지구당)	일자리 창출실적 (사업지구당)
2014년 실적	3,670백만원	30개

* 2012~2014년 착수지구(70개소)를 대상으로 조사

(13) 국가어항(제주)

제주지역 국가어항을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어선의 안전정박·수용으로 어업인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수산물 생산, 유통 등 어업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수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사회발전 핵심기반을 조성하고자 2007년부터 해수부의 지원(국비 100%)을 받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직접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4년에는 신양항, 모슬포항에 182억원을 투입하여 방파제 및 물양장을 건설하였으며, 2014년 말까지 제주 국가어항에 총 1,792억원을 투자하였다. 2015년에도 신양항 및 모슬포항에 223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14) 수산자원 조성사업

수산자원 조성사업은 「수산자원관리법」에 근거하여 남획, 지구온난화 등으로 고갈되어가는 수산자원을 회복·증강시키고 갯녹음(바다사막화) 등으로 황폐해져가는 연안생태계를 복원함으로써 우리 바다를 풍요롭고 건강하게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2011년 1월에 설립된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탁 시행하고 있다.

수산자원조성사업은 갯녹음 치유를 위한 바다숲 조성(2030년까지 54,000ha 조성), 수산자원 증대를 위한 연안바다목장 조성(2020년까지 50개소 조성) 등의 적극적 자원조성과 TAC 대상종에 대한 총 허용 어획량 조사사업 등이 있다.

2014년에는 총 623억원을 지원하여 바다숲 2,574ha, 바다목장 24개소를 조성하였고 연어 등 건강종묘를 생산 방류(2,250만 마리)하였으며, TAC 대상종(오징어, 고등어 등 11종)에 대한 총허용 어획량을 조사하였다.

2014년 주요성파로 바다숲 조성에 따른 연안어장 생태환경 개선율은 15.8%로서, 연

안어장 생물종수는 2013년 33.729n/㎡에서 2014년 43.143n/㎡으로, 생체량은 같은 기간 동안 1,462.468g/㎡에서 1,516.241g/㎡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바다목장 조성에 따른 단위노력당어획량(CPUE)은 2013년 1,516.9g/푼에서 2014년 2,178.3g/푼으로, 유용생물량은 235.8g/㎡에서 395.2g/㎡으로 증가하여 어패류 서식환경이 전년 대비 55.6% 개선되었다.

표 2-2-57 수산자원조성사업 주요성과

(단위 : %)

구 분	측정산식	내역	측정결과
연안어장 생태환경 개선율	(당해연도 생물종수 증가율)*0.5 +(당해연도 생체량 증가율)*0.5	(43.143/33.729-1)*0.5+ (1,516.241/1,462.468-1)*0.5	15.8
어패류 서식환경 개선율	(단위노력당어획량 증가율)*0.5 +(유용생물량 증가율)*0.5	(2,178.3/1,516.9-1)*0.5 +(395.2/235.8-1)*0.5	55.6

(15)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수산식품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을 위해서는 가공공장의 기반시설이 필요하며, 또한 산지 수산물을 고차가공품으로 개발하여 고부가가치 창출로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본 사업이 추진되었다.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을 위해 2014년에 총 71개소의 수산물 가공시설에 283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산지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고차가공품 및 우수식품으로 가공하여 지역 특산품 등으로 생산·유통할 수 있도록 52개 산지가공시설사업에 191억원을, 수산물의 주요 생산지역인 어촌지역을 중심으로 산지에서 수산물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신선한 수산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수산물 처리·저장시설사업 10개소에 61억원을, 수산물 가공품의 생산비 절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동가공시설의 현대화사업 9개소 31억원을 지원하였다.

2014년 수산물 가공산업 실적은 생산량 234만톤, 생산금액 7.5조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28.4%, 1.4% 증가하였다. 품목별 생산량은 냉동품이 전체 수산가공품의 68%를 차지하였고, 지역별 생산량 점유율로는 경남 22%, 부산 18%, 전남 17%를 차지하였다.

(16)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 지원

정부에서는 수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생산자단체 중심의 수산물 부가가치 제고를 위하여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FPC)를 지원하고 있다. 시범사업으로 2012년부터 제주 한림수협 등 5개소(중규모 2개소, 소규모 3개소)를 건립 중에 있다.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 확충을 통해 산지에서 수산물을 매입·위탁받아 물량을 직접화하여 전처리·가공 등을 거쳐 부가가치를 높여주고 대규모 소비지에 있는 분산물류센터와 연계하여 상품을 유통함으로써 생산자 중심의 대안 유통경로 및 마케팅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어업인 소득증대 및 소비자 가격안정 도모에 기여하고 있다. 2014년에는 중규모의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 2개소에 대한 유통시설, 위판시설 및 가공시설 등 건물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이를 위해 36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였다. 향후 시범운영 및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FPC와 소비지분산물류센터를 연결하는 4단계형 유통구조를 시범 구축할 계획이다.

(17) 수산물 유통시설 건립

정부에서는 신선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소비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1963년부터 현재까지 수산물 유통시설 건립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세부사업으로는 수산물 위판장, 직매장, 유통물류센터 등이 있으며, 2007년부터는 기존 유통시설기능인 먹을거리 제공과 더불어 볼거리 및 즐길거리 기능이 합쳐진 해양수산복합공간조성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수산물 유통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유통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동 사업의 성과로는 생산자 어업인에게 대량 판로 기반 유지를 통한 수취가 제고로 신뢰감을 조성하고, 지역 여건별로 특성에 맞는 유통시설을 지원함으로써 수산물 유통 효율성 제고 및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여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2014년에는 총 20개소 114억원(위판장 8개소 61억원, 직매장 5개소 14억원, 수산물 유통물류센터 6개소 62억원, 해양수산복합공간조성 1개소 6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였다. 2014년 수산물유통시설사업 중 주요 내역사업인 수산물 위판장 확충을 통한 성과 산출물로 '수산물계통출하율'을 지표로 설정하고 목표를 50%로 하였으며, 사업 추진

결과 57.7%로 목표치보다 높은 성과를 달성하였다.

향후 산지 유통시설에 대한 위생시설 및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위생기준에 따라 지역별 거점위판장을 중심으로 위생설비를 집중 투자할 계획이고, 기타 수산물 직매장 및 수산물유통물류센터 건립 등의 사업에 대하여는 지역여건 및 특성을 감안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18)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

지역별로 풍부한 수산자원을 활용한 고품질의 수산식품개발, 브랜드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역특화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표 2-2-58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국비지원 실적 및 계획

(단위 : 국비, 백만원)

지 역	사업개요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이후
합 계	11 개	1,522	9,734	8,759	14,360	16,750	15,400	14,235	30,187
①부산	수산식품가공산업 산학관연구센터 (2009~2010년 33억 원) : 지원종료	-	500	1,150	-	-	-	-	-
②목포	고기능수산식품지원센터 (2008~2011년 222억 원) : 지원종료	1,522	3,250	1,000	5,350	-	-	-	-
③부안	수산물종합유통물류기반시설 (2009~2012년 99억 원) : 지원종료	-	500	1,000	1,000	2,450	-	-	-
④여수	수산물종합센터 (2009~2013년 290억 원) : 지원종료	-	1,984	2,000	2,000	5,000	3,516	-	-
⑤영광	염산향화도바다매체타워 (2009~2013년 100억 원) : 지원종료	-	500	1,000	1,000	1,500	1,000	-	-
⑥고창	동천장어웰빙센터건립 (2010~2014년 150억 원)	-	-	250	1,760	1,000	1,100	100	3,290
⑦포항	과메기산업화가공단지 (2009~2014년 380억 원)	-	3,000	2,359	3,000	2,000	2,100	2,144	4,397
⑧영덕	로하스수산식품거점단지 (2011~2014년 250억 원) : 지원종료	-	-	-	250	4,500	2,500	5,250	-
⑨군산	수산물연구가공거점단지 (2012~2014년 195억 원) : 지원종료	-	-	-	-	300	4,484	4,966	-
⑩울진	북은대계식품산업단지 (2013~2015년 170억 원)	-	-	-	-	-	300	700	7,500
⑪충북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2013~2015년 180억 원)	-	-	-	-	-	400	700	7,900
⑫속초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2015~2017년 150억 원)	-	-	-	-	-	-	375	7,100

2014년도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 지원내역을 보면 신규 사업으로 속초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건립을 위한 3억원을 포함해 총 7개 내역사업에 142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였다.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가 조성이 되면 지역특화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수산물가공업과 지역의 문화·관광산업의 연계 발전이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19) 수산어업행정지원 사업

2008년 2월 정부조직개편으로 수산기술보급기관인 수산사무소가 지방자치단체로 2009년 5월 지방자치단체로 조직과 업무가 이양되었으며, 이에 따라 수산어업지원기능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하여 지방 이양된 311명의 이체인원과 30개의 수산사무소 및 18척의 기술지도선에 대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 및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이관된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기본경비, 청사·지도선 운영비 및 행정정보화 비용 등 경비를 2010년부터 지원하였으며, 2014년에는 228억원을 지원하였다.

향후 정부에서는 이관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어업인에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산어업지원기능을 제공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표 2-2-59 수산어업 행정지원 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합계	133,561	20,196	21,886	22,866	22,871	22,871	22,871
인건비	107,458	16,059	16,862	17,705	18,944	18,944	18,944
기본경비	13,162	2,142	2,142	2,142	2,206	2,265	2,265
청사·지도선운영	10,555	1,598	2,485	2,622	1,324	1,263	1,263
행정정보화	2,386	397	397	397	397	399	399

(20) 어업인 교육훈련 사업(제주)

2007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함에 따라 제주지역 어업인에 대한 선진수산기술 전파 및 수산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전환되었다.

제주지역의 어업인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훈련 지원을 위하여 자율관리 공동체를 통하여 동 지역의 어업인이 전문경영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구축 마련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1천 2백만원을 지원하였다. 향후 정부에서는 제주지역 어업인의 전문인력 육성과 선진수산기술 제공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표 2-2-60 어업인 교육 훈련(제주)지원 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어업인 교육 훈련(제주)	107	11	12	12	12	12	12	12	12	12

(21) 농식품가공 체험기술보급

농식품 가공·체험 기술보급사업은 농식품의 6차산업화로 국정과제인 ‘농림축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뒷받침하고 있으며, 인적·물적·문화적 자원을 활용한 농촌지역 활력 도모와 농산물 가공, 체험기술 보급을 통한 농산물 부가가치 증진 및 농가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06년부터 시작된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국비 50%, 지방비 50% 매칭사업이며, 2014년까지 총사업비 383억원을 지원하였다. 농산물가공 기술보급 지원, 농촌체험 기술보급 지원, 6차 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 등 3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 외식, 체험분야 개발 기술과 지역자원을 연계하여 지역민 주도의 새로운 농가 소득원 개발을 지원한다.

2014년 사업규모는 8개 사업 76개소(농산물 가공 기술보급 지원 42개소, 농촌체험 기술보급 지원 23개소, 6차산업수익모델시범 11개소), 국비 8,697백만원을 지원하였다.

전통식문화계승 사업(12개소)을 통해 농업인, 음식연구회원, 차세대, 학교급식관계자 등에게 전통음식 실습, 전통 식생활 및 문화, 미각교육, 음식해설사과정 등 78과정 6,654명에게 교육하였으며 교육 수료자 중 자격증 취득 114명, 창업 92명, 강사활동 184명 등 사회 및 소득활동에 기여하고 있다. 44종의 자료제작과 24회 행사를 추진하였으며 “지역 식재료 맛체험” 교재를 제작·보급 하였다.

향토음식자원화 사업은(5개소) 2007년을 시작으로 전국에 총 88개소를 육성하였고,

창업 및 관리에 도움을 주고자 “농가맛집 창업운영 가이드북”을 개발·보급하였고, 농림축산식품부와 문화체육관광부 협업과제로 국내관광 활성화 캠페인에 우수 농가맛집 59개소를 소개하였다. 사업추진 성과로는 향토음식 발굴·개발 76건, 일자리 창출 15명으로 나타났으며, 농가맛집 사업장의 식자재 조달은 자가 생산 43.8%, 지역 내 구입 47.5%로 지역 농산물 활용 촉진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10개소)을 통해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조성하여 창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가공창업교육과 농산물 가공기술 이전, 가공기기 공동 활용, 시제품 생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농업인소규모창업기술지원(15개소)을 통해 농외소득 증가 및 지역사회 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다.

농촌체험 지역네트워크(9개소), 농촌체험 명품화(2개소)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단위 농촌관광 협의체 3개회(267명) 구축, 리더 역량 교육·자격증과정·연구모임 등 전문교육 318회(9,502명), 소비자 대상 농촌관광 행사운영 및 참가 132회, 홍보물 제작 12종을 추진하였다. 농촌체험 지역네트워크와 농촌체험 명품화 사업은 2014년에 종료하였다. 농촌교육농장 육성(12개소)을 통해 2014년까지 477농장을 육성하였으며, 농장주 능력배양을 위해 단계별 교사양성과정을 운영(기초과정 1회 47명, 심화과정 1회 35명)하여 교육농장 개념을 이해하고 운영에 필요한 실천능력을 향상시켰으며 유관기관인 교육부 등과 협력하고 농어촌 여름휴가 페스티벌, 체험학습박람회 등에 참가하였다.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농촌교육농장 육성을 위해 품질인증제를 운영하고 74개 농장을 선정하여 인증서를 전달하였다. 사단법인 한국농촌교육농장협회를 설립(2014년 4월)하여 정보교류 및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6차산업수익모델시범사업은(11개소) 2014년부터 2개년사업으로 추진하였고, 사업을 통해 1,292명(상시 11명, 비상시 1,281명)의 일자리를 창출과 매출액을 분석한 결과 3,519백만원의 영업이익이 창출되었으며 시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상품 개발을 37종하였고 농촌진흥기관 R&D 개발 기술(48개)을 적극 활용 하여 신기술 접목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였다.

2015년에는 농업인의 경험과 솜씨를 활용한 소규모 창업 활성화 지원 및 지역식문화와 연계된 농외소득사업 지원으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농업의 6차 산업화의 기반을 확고히 다지고 시·군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한 농산물 가공산업 우수사례를 유형별로 발굴, 타 지역에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농촌교육농장 육성을 위해 품질인증제를 지속 추진할 것이며 자유학기제 인프라 구축을 위해 농업관련 진로, 체험 교육의 질적 수준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6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 농업인 핵심리더 교육, 기술 코디네이터 교육, 시·군 담당공무원 워크숍 등을 지속 추진토록 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농업인 실질 소득 창출에 적극 기여하여 우수 경영체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22)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지원

지역농업특성화기술지원사업은 시·군 여건에 맞는 주요품목(사업)을 소득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술·교육·예산을 집중 투입하여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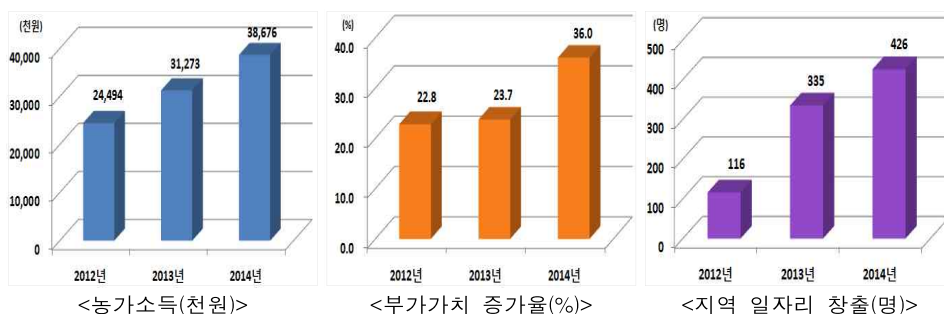
지역농업특성화기술지원사업은 시·군 자원에 의한 사업계획을 평가하여 사업대상을 선정하고 사업연차별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공모사업으로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차등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세부사업은 지역농업특성화사업 및 비교우위품목경쟁력제고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지역 특화품목 육성 기반조성, 사업추진 전담조직 및 지역협의체 운영, 사업 참여 농업인단체 교육 및 생산·가공·유통·체험분야 연구성과 현장기술지원 등 1·2·3차 산업 연계 지원으로 시·군농업기술센터의 지역농업 특성화 역량강화를 지원하여 농가소득 향상 및 지역경제활성화 촉진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2014년 사업규모는 77개소(1년차 45개소, 2년차 26개소, 제주 6개소), 국비 16,231백만원으로 시·군별 사업계획 및 결과 평가에 따라 개소 당 145백만원~300백만원씩 차등 배분하였다.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사업담당자 워크숍(3월 13일, 160명), 시범사업 농업인 리더 교육(3월 21일, 200명), 2015년 신규사업 신청 시·군 컨설팅(9월 2일~4일, 60개 시·군)을 실시하고 사업평가는 중간평가(8월) 및 발표평가(1년차 9월, 2년차 11월)를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1년차 시·군은 2015년 사업비 차등 지원, 2년차 시·군은 상위 6개 시·군을 우수 시·군으로 선정(청장상)하였다. 지역농업 특성화 분야유공 공무원을 20명 선정(장관표창 12명, 청장표창 8명)하여 시상(2014년 12월 10일)하는 한편, 사업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6차산업화 연계방안 토론회(12월 10일, 40명)를 실시

하여 추진성과 공유 및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중앙-지방간 연계, 소속기관 중심의 현장 기술지원으로 연구와 지도의 시너지를 강화하였다.

사업 성과관리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서울대 산학협력단)에 의한 사업 2년차 시·군 대상으로 농가소득을 조사 결과, 농가소득이 2013년(31,273백만원) 대비 2014년 소득이 38,676백만원으로 나타나 전년 대비 2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가공을 통한 부가가치액은 67,562백만원에서 91,878백만원으로 증가하여 전년대비 36.0%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 만족도는 85.4점으로 조사되었으며 사업으로 인한 지역 일자리 창출이 426명(상시 125명, 비상시 301명)으로 나타나는 등 외부효과에 대한 노력이 인정되어 지역발전위 지역발전사업평가에서 우수 사업으로 평가(2015년 5월)받았다.

그림 2-2-15 지역농업특성화사업 추진성과



중앙과 지방의 기술보급체계 역할 분담으로 기술 중심의 사업을 추진하여 고품질 재배기술 향상과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2015년은 95개소에 19,294백만 원을 지원하여 식량·원예·특용작물·축산 및 융복합기술산업 유형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평가·환류체계를 개선하여 사업 시·군 평가를 연 2회에서 1회로 줄이고 2년차 사업 평가결과는 다음 연도 신규 사업에 우선 반영할 예정이다. 그리고 소속기관 기술지원과와 연계하여 현장기술지원 및 사업추진현황 점검을 연중 실시하여 현장 모니터링 및 애로기술 해결을 적극 추진하여 사업 내실화 및 성과 제고에 노력할 예정이다.

(23) 지역농촌지도활성화 지원

1)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농작업과 관련된 업무로 인한 각종 재해 및 농작업성 질환 등을 유발하는 유해 농작업 환경 개선을 위한 지역별 맞춤형 농작업 편이 장비개선 및 보급으로 농업 노동부담을 경감시키고, 고령 및 여성 농업 인력도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안전하고 능률적인 농작업 환경 조성에 목적이 있다.

농촌 노동력의 고령화·여성화로 농작업 재해 증가 및 건강관리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농업인의 만성질환 중에서도 농작업과 관련이 깊은 근골격계 질환에 있어서 농업인 종사자가 비농업인의 2배 이상으로 나타나 농업활동으로 인한 작업 위험요인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2008년부터 기계화되기 어렵고 신체에 무리가 오는 농작업을 안전하고 능률적으로 개선하는데 목적을 둔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2-2-61 2014년도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시범사업 추진실적

도별	사업량 (개소)	사업참여 인원(명)	위원회 및 전문가 등 활용실적(횟수)	교육실적		보급 장비(점)
				횟수	인원	
계	185	6,834	2,332	1,026	20,489	13,911
경기	19	521	271	209	3,170	1,630
강원	19	969	230	107	2,959	1,866
충북	11	247	159	32	570	278
충남	15	524	190	51	720	985
전북	12	260	122	39	597	279
전남	42	1,884	492	264	4,802	5,869
경북	23	515	332	103	2,348	683
경남	25	1,197	294	100	2,712	1,432
제주	8	446	94	40	1,112	238
광역	11	271	148	81	1,499	651

본 사업은 개소당 50백만원(국비·지방비 50%)을 지원하여 해당 작목의 농작업 여건 파악과 필요 편이장비의 조사, 선정, 보완 및 개발, 평가 등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편이장비의 운영과 평가, 분석 및 관리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2014년 시범사업은 185개소 마을, 농업인단체 6,834명을 대상으로 근골격계 질환 및 각종 농부증 등을 예방하기 위한 근골격계질환 예방 스트레칭, 농작업 피로회복 교육과 선진지 견학 및 농작업 편이장비 관련 박람회 관람 등을 포함한 총 1,026회의 교육을 추진하였고 20,489명이 참석하였다.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위원회 및 관련 전문가 활용, 컨설팅 등 총 2,332회의 활발한 활동을 수행하였고, 작업자세 개선, 중량물 운반작업, 작업능률 향상, 특정 신체부위의 반복작업 및 과도한 힘 사용 개선 등을 위한 전동운반차, 방제기, 동력운반차, 전지전정가위, 살포기, 작업보조류 등 904종 13,911점의 편이장비를 보급하였다.

사업추진 성과분석 결과 마을주민의 종합적인 만족도(리커트 5점 척도)는 4.54점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농작업 효율 개선율의 연간 농가당 농작업 시간이 전국 평균 281.6시간(52.9%)이 단축되는 효과를 나타내었으며, 연간 농가당 인건비 절감액은 전국 평균 1,548,000원이 절감되어 편이장비 개선 지원을 통해 농업 노동 부담 경감뿐만 아니라 농작업 경제적 이익에도 큰 기여를 하는 사업으로 평가되었다.

보급된 3년 이상의 편이장비에 대해서 지역별 순회교육 및 수리요령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노후된 편이장비의 사용을 증대시키기 위한 대안과 동일 기종 편이장비에 대한 단일 가격 보급 및 사후관리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2)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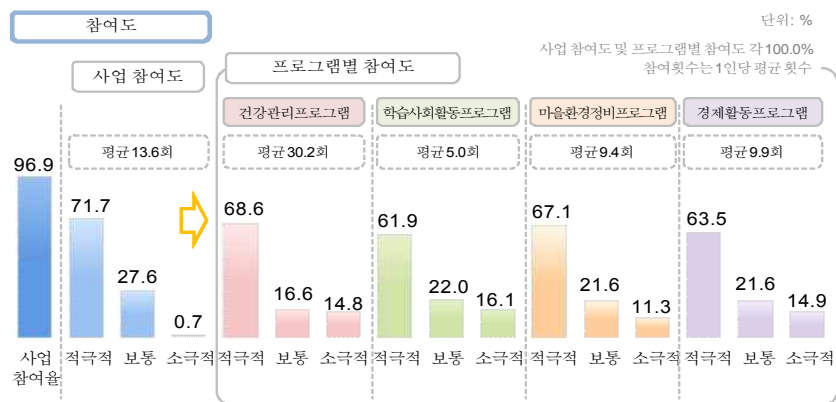
농촌 고령화에 대응한 건강관리, 학습·사회활동, 안전생활·환경정비, 소득·경제활동 등 4개 사업 영역을 적극 지원하여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당당하며 활기찬 노년 생활 문화를 영위할 수 있는 생활기반, 건강장수 마을을 조성하는데 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사업은 고령화된 농촌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노인들 스스로 자신의 삶을 당당하고 건강하게 개척하고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마을단위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업의 주요내용은 농촌노인의 건강관리, 학습·사회활동, 환경정비, 소득활동 등 4개 영역에 대한 과제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4년까지 737개소 마을을 지원하였다. 2014년에는 1년차 79개소, 2년차 53개소, 3년차 23개 총 155개소에 개소당 40백만원~50백만원씩을 지원하여 76억원을 지원하였다.

2014년 사업마을 추진실적은 154개(강원 화천 사업이월)에서 14,404명이 참여하였

으며 이중 남자가 47.7%(6,871명), 여자가 52.3%(7,533명)이며, 참여자중 65세 이상 고령자는 7,192명으로 전체 참여자의 49.9%를 차지하고 있다. 사업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4개영역별 사업비 집행은 환경정비>소득활동>학습·사회활동>건강관리 순이며, 건강관리 활동으로는 요가, 건강체조, 걷기 동우회, 탁구 등이며, 학습·사회활동의 내용은 풍물, 요가, 노래, 국선도, 고전무용, 한지공예, 소리전승, 게이트볼, 시낭송, 규방공예 등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 졌다. 4개 영역에 대한 프로그램은 건강관리를 위한 활동에 3,861회, 학습·사회활동 5,171회, 환경정비 6,609회, 소득활동 1,142회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그림 2-2-16 사업 참여도 및 프로그램 참여도



또한 농촌건강장수마을 2012~2014년 사업 선정마을 700명을 대상으로 외부전문기관 평가를 실시한 결과 사업에 대한 종합 만족도가 83.5점으로 '매우 만족'하는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사업 참여율은 96.9%, 1인당 평균 참여 횟수는 13.6회로 적극적인 참여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소득활동으로는 두부가공, 공동재배, 절임배추 등으로 다른 영역과 비교할 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향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소일거리 사업 발굴과 이에 대한 촉진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농촌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립적인 공동생활의 터전을 만들고, 농촌지역주민 간 협동심과 마을활기를 되찾는 계기가 되었다.

표 2-2-62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현황

(단위 : 개소, 억원/국비·지방비 각 50%)

구분	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사업량 (개소)	1,000 (1년차기준)	100	200	50	84	7	59	82	23	53	79
	2년차	-	100	200	50	84	7	59	82	23	53
	3년차	-	-	100	200	50	84	7	59	82	23
	소계	100	300	350	334	141	150	148	164	158	155
사업비	974	42	150	160	167	71	75	74	81	78	76

* 개소당 40~50백만원씩 3년간 지원

사업마을(n=700)과 일반마을(n=300)의 마을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생활실태 및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사업마을의 종합적인 생활 만족도는 “매우 만족”하는 수준인 79.3으로 일반마을의 73.6 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요인별 만족도 또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사업으로 인한 농촌노인의 생활 활력에 기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2-2-63 2014 생활만족도 조사결과

(단위 : 점(명))

구분	생활만족도	마을활동	마을환경	개인생활	농업환경
사업마을 (700)	79.3	83.8	83.0	65.1	80.0
일반마을 (300)	73.6	78.1	80.3	58.0	73.4
통계검증(t)	5.015***	4.507***	ns	5.135***	4.125***

***, **, *는 각각 유의수준 1%, 5%,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3)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사업

우량종자 및 종묘, 생산기술개발 및 지역실증시험 등 기초기술의 중점보급으로 지역전략작목의 규모화·명품화를 추진하고, 지역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품목의 우량종자 보급과 작부체계 개선을 통한 생산기반조성과 농업인이 개발한 우수과제(농업인개발과제)의 확대보급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

2013년도 시·도에서 기획재정부에 신청한 지도기관별 사업계획을 심의하여 최종 42개 시·군에 6,008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주로 지역의 특수작목과 중점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작목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지역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작목을 중심으로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고, 품목별 우량종자 보급과 작부체계 개선을 통한 생산기반을 조성하였다. 2014년도 사

업 추진 시·군 중 소득조사가 가능한 32개 시·군을 대상으로 성과를 종합한 결과 사업전 대비 소득은 23.5% 높아졌으며, 매출은 17.5%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시·군별 추진사례를 살펴보면, 인천 강화는 수박 인공수분용 수정별 등 활용 생력화 기술 투입으로 25%이상 비용절감을 나타내었으며, 전북 임실은 지역복숭아 명품화 생산을 위한 기반조성으로 정형과율 생산이 당초 50%에서 90%까지 향상되었으며, 수량도 사업전보다 33% 이상 향상되는 결과를 보였다. 충남 당진은 화훼 수출단지 조성 및 현장 컨설팅으로 프리지어 및 국화 등 총 130천본을 일본에 수출하였으며 수출화훼연구회를 영농조합법인으로 전환하여 조직화·규모화를 통해 지속적인 수출촉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표 2-2-64 지역별 2014년 사업예산

(단위 : 백만원(국비기준))

지역별	사업비	2014년 사업내역
계(42시·군)	6,008	47개 사업
강원	550	
(강릉)	100	- 지역부존자원 소득화 기반시설 지원
(삼척)	100	- 지역특화작목 우량종묘 생산보급 기반조성
(영월)	50	- 기능성 '호산버섯' 재배단지 조성
(정선)	100	- 지역축제 연계 다래마을 조성사업
(철원)	100	- 신품종 청아콩 특화단지 조성
(화천)	100	- 친환경 과채류 재배단지 생력화 설비 지원
충북	500	
(충주)	50	- 수박재배단지 전천후 재배시설 개선 사업
(제천)	50	- 오미자 생산가공유통 상품화 사업
(청원)	60	- 새소득원 창출 화훼농업 육성
(보은)	55	- 신소재 상품성 개발 명품 대추군 육성
(옥천)	50	- 기상재해 대비 시설채소 생산기반조성
(영동)	50	- 비교우위품목 블루베리 경쟁력제고 사업
(증평)	50	- 뽕잎이용 건강 기능성 제품 개발
(진천)	50	- 민속채소 재배단지 기반조성
(괴산)	50	- 시설딸기 재배단지 조성으로 관광상품 개발
(음성)	50	- 최고품질 멜론 안정생산 단지 육성
충남	500	
(보령)	100	- 우량종자 생산단지 조성
(당진)	100	- 수출화훼 생산단지 육성
(부여)	100	- 토마토 연작장해 대책 수경재배단지 육성
	100	- 표고 연중 안정생산 기반조성
(서천)	100	- 친환경 한산모시 잎 전문생산농가 육성

지역별	사업비	2014년 사업내역
전북	2,250	
(기술원)	1,000	- 고소득 지역특색 벤처농업 육성
	600	- 기후변화 대응 녹색농업기술 개발
(정읍)	250	- 틈새를 이용한 블랙베리 단지 조성
(무주)	100	- 표고 재배단지 조성
	100	- 우리품종 고랭지 과수단지 조성
(임실)	200	- 복숭아 명품화 사업
경북	343	
(김천)	268	- 경북남서부 고랭지 친환경 사과생산단지 조성
(경산)	50	- 우량건전종묘연구기반 조성
(울릉)	25	- 울릉도호박엿 기반조성 사업
경남	830	
(창원)	90	- 친환경 블루베리재배 안정생산 기반 구축
(진주)	100	- 수출 작목 활성화 시범
(사천)	100	- 농산물 가공식품 브랜드 및 포장디자인 개발
(김해)	90	- 지렁이 분변토 생산 자동화 시스템 구축
(밀양)	90	- 시설딸기 하우스 보온 시스템 강화
(거제)	90	- 관광체험형 포도재배단지 조성
(창녕)	90	- 태추의 창녕단감 명품화
(함양)	90	- 함양 고종시 명품화
(거창)	90	- 한우 차별화로 고급육 생산
제주	885	
제주	125	- 극조생온주 고품질생산단지 외 1과제
서귀포	135	- 노지감귤성목이식시범 외 1과제
동부	100	- 원예작물경쟁력강화사업 외 1과제
서부	525	- 원예작물경쟁력강화사업 외 1과제
세종	100	- 기후변화대응 새소득작목 기반조성 및 친환경작물 기반시설 지원
인천(강화)	50	- 지역활력화작목 기반 조성사업

앞으로도 지역별 농업인이 개발한 우수한 과제를 확대 보급토록 하여, 지역의 중점 기술을 투입하여 대농민 교육 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지속적 작부 체계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4)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은 지방농촌진흥기관의 기술개발 촉진과 기술보급 시설확충으로 농업기술센터를 지역 농업기술 보급의 중추기관으로 육성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농업인 교육시설과 장비를 보강하여 농업인을 만족시키는 지도사업 추진을 지원하

고자 함에 있다.

1997년부터 추진한 본 사업은 지난 2005년부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개발계정)로 전환하여 지원하였으며, 2010년부터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지역개발계정)로 전환하였다. 주요사업내용은 도심소재 지방농촌진흥기관의 교외이전에 따른 청사건축, 과학영농시설, 농업인교육관, 다목적 농업인 교육시설, 농촌생활과학관 등 시설비지원과 지역특수시설 기자재 구입 및 현지 지도활동 강화를 위한 순회지도 및 상담 차량지원, 교육 및 홍보활동을 위한 장비 지원, 농산물가공기술교육장비, 종합검정장비 및 조직배양장비 지원, 기타 도농교류를 위한 체험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촌지도기반조성을 위한 농촌지도시설 지원 사업은 총 92개소로 청사 시설지원, 과학영농시설, 농업인 교육시설을 지원하였다. 2014년까지 추진한 농촌지도기반시설은 827건, 250,169백만원을 지원하여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 하였다.

표 2-2-65 2014년 농촌지도기반시설 지원실적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사업량	사업비
계	92	17,646
청사시설지원	6	1,022
농업인교육시설	29	7,645
과학영농시설	29	4,651
테마파크조성	5	721
농업 체험관	6	1,175
기타	17	2,432

농촌지도장비는 순회지도 및 상담차량 지원 35대, 농기계차량 8대, 교육 등 홍보 29조, 가공교육장비 13대, 종합검정장비 73대, 가축질병진단장비 5대, 조직배양장비 8대, 기타 미생물배양장비 등 28대 총 212종 5,545백만원을 지원하였다.

사업추진결과 수혜자만족도 88.9%로 높게 나타났으며, 농촌지도장비의 연간 활용실적은 93회로 고객을 만족시키는 농촌지도사업 전개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요 시·도별 지원(배정)기준을 보면, 광특회계 지역개발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별 사업계획에 의거 신청 후 기획재정부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규모를 결정하여 통보하고 있다.

표 2-2-66 2014년 농촌지도기반시설 예산배정 기준

(단위 : 개소, 백만원)

	사업명	사업량	지원단가	지원금액
농촌지도 기반조성	계	304	-	23,191
	지역개발계정	277	2.5~4,600	21,141
	제주계정	27	5~500	2,050

본 사업은 앞으로 지방농촌진흥기관을 지역 농업인의 현장 실증교육장으로 활용하여 농업기술 수준향상 및 지역특화작목 개발보급을 촉진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농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14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4) 지역연구기반조성

지역농업 연구기반 조성은 지역발전 5개년계획의 “광역 경제권 성장잠재력 확충”과 연계하여 지자체의 농업연구기반 현대화 지원을 통해 각 도의 농업기술원을 지역농업 연구의 핵심거점으로 육성하고, 지원된 연구기반을 활용하여 농업기술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1991년부터 시작된 지자체 보조 사업으로 국비 50%, 지방비 50% 매칭사업이며, 2013년까지 총 사업비는 4,042억 원으로 이중 국비는 2,021억 원을 투자하여 도의 농업기술원(9개소) 및 지역특화작목시험장(40개소)을 대상으로 연구시설 및 장비구축을 지원하였다.

2014년에는 148억원을 지원하여 경기도농업기술원의 기후변화대응 과수 신품종 재배기술 확립을 위한 장비 구축, 강원도농업기술원의 양액분석 실험실 장비 현대화, 충북농업기술원의 작물 신품종 육성 노후 시험장비 보강 등 노후 연구기반 교체 71건, 전북농업기술원의 채소 우량묘 생산을 위한 육묘장 신축, 경남농업기술원의 FTA 및 기후변화 대응 과수 연구시설 기반 조성 등 신규 연구기반 구축 75건, 총 146건의 시설·장비를 구축하였다. 구축한 시설·장비를 활용하여 영농활용기술개발(188건), 정책제안(13건), 품종개발(54건), 연구인프라 공동활용(2,747건) 등을 추진함으로써 도농업기술원의 연구개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그림 2-2-17 지역농업 연구기반 조성 사업 추진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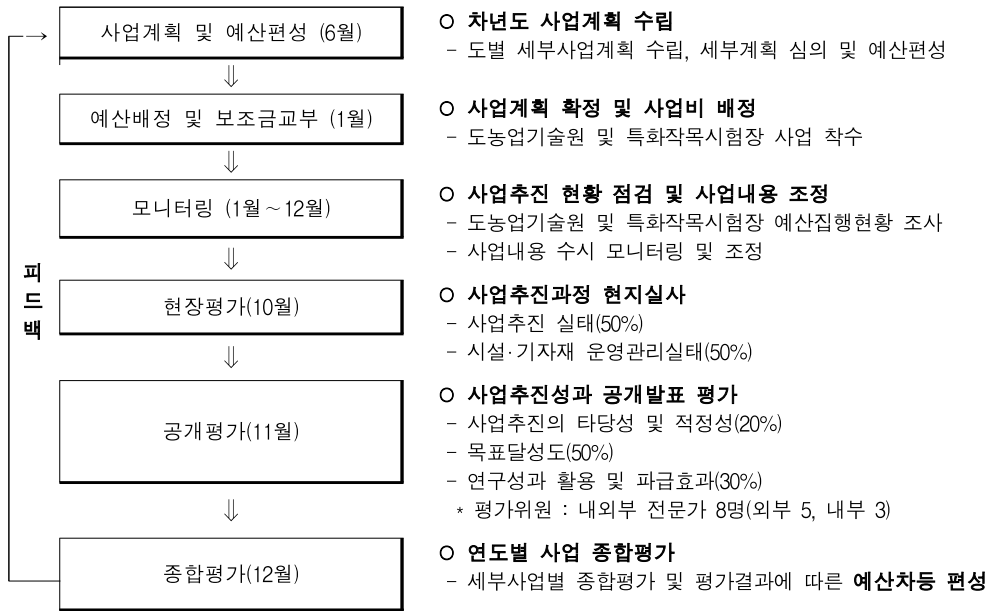


표 2-2-67 2014년 지역농업 연구기반 조성 사업을 통한 주요 연구개발 성과 (단위 : 건, %)

구분	논문	특허출원/등록	품종출원/등록	정책제안	영농활용	자체활용률	공동활용
성과	61	24	54	13	188	78.6%	2,747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의 정량적성과 외에도, 농식품가공 기초 분석장비 구축 및 가공제품 개발을 통한 특산물 활용 가공제품 개발로 지역농업의 6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며,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기술 개발 장비 확충으로 신성장 채소류 소득작물을 발굴하고 상품화하였으며, 지역농업 연구기반 조성사업에 따르는 생산유발액 및 부가가치유발액은 매년 각각 189억원과 87억원으로 나타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고 있다. 또한 B/C(비용-편익분석) 비율은 최소 2.87에서 최대 7.17로서 비용을 상회하는 사회경제적 편익을 발생시킴으로 경제적 효율성을 확보한 사업이다(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2년).

우 수 사 례	전통식품 유래 유용 미생물 발굴 및 활용
<p>○ 수입균주를 대체할 우수 기능성을 가진 유용 미생물 분리 및 활용</p> <p>※ 국내시장에 일본산 종균 60% 차지, 군주 수입액은 약 466억 원에 달함</p> <p>- (분리원) 배추김치, (분리균주) <i>Lactobacillus sakei</i> M-5 등 5종, (기능성) 항균, 향장(주름개선, 미백효과) 활성 우수</p> <p>- (주요성과) 국제유전자은행 등록, 군주 기탁, 특허출원(분말앰플 제조기술)</p> <p>- (활 용) 유용 군주 이용 가공식품 개발 및 제품화</p> <p>- (금후계획) 김치 유산균 분말 활용 가공품 제조 및 평가 : 블루베리, 천마</p> <p style="text-align: center;"><유용 미생물 대량생산 절차></p>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김치유래 균 분리 ('11)</div> <div>⇒</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특성검정, 유전자 등록 ('12)</div> <div>⇒</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앰플제조, 특허 ('13)</div> <div>⇒</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분말 시제품 생산 ('14)</div> </div>	
	

(25)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백두대간 보호지역은 6개 도, 32개 시·군, 108개 읍·면·동에 분포하고 있다. 이 지역의 대부분은 보호지역 지정 이전에도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이나 백두대간보호지역으로 지정됨으로 인해 지역의 개발이 억제되어 상대적으로 더욱 낙후되고 있는 실정이다.

백두대간 보호지역 주민은 백두대간의 구성요소인 동시에 백두대간보호의 주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백두대간보호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백두대간 주민의 역할이 매우 크며, 백두대간의 보호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주민의 경제적인 안정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백두대간의 임산자원을 바탕으로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총 81,305백만원을 지원하였다. 임산물의 부가가치 증대에 필수적인 저온저장고,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등이 안정적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임산물 가공시설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백두대간 소득사업 지원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표 2-2-68 연도별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합 계	2005~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81,305	47,601	8,620	6,616	6,786	5,768	5,914

또한 2007년부터 백두대간 생태계·자연경관의 보전 또는 보호·육성을 위하여 백두

대간보호지역 내 벌기령이 지난 입목의 벌채를 유보한 산림소유자에 대하여는 소득감소분을 지원하고 있다. 소득감소분은 입목 벌채 예상수익금의 1년 이자액을 매년 지급하는 것으로 2014년까지 439백만원을 지원하였다.

표 2-2-69 연도별 백두대간 소득감소분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합 계	2007~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439	154	63	60	68	46	48

(26) 산림경영자원육성

1) 임산물수출 촉진

임산물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 임산물 수출을 촉진하여 영세한 임산농가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수출용 포장용기, 수출상품 선별기 등 장비 구입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2014년도에는 밤 수출 확대를 위해 포장용기, 장비 구입비 2억원을 충남 아산·논산에 지원하였으며, 2015년에도 충남 아산·부여·논산 등 5개소에 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2) 목재이용가공 지원

최근 웰빙(well-being), 로하스(LOHAS) 등과 더불어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목재의 중요성 또한 높아짐에 따라, 친환경 소재인 목재 이용 확대를 위해 각계 각층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목재문화를 접할 수 있는 체험중심형 행사와 초·중·고 학생 등을 대상으로 목공 체험교육을 실시하고자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을 지원하고 있다.

2007년에 개장된 충북 청원 등 7개소에서 목재문화체험장이 운영 중이며, 2014년에는 경기 용인, 강원 철원·양양, 전북 장수 등 29개소에 193억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2015년도에도 인천시, 대전시, 경기도 남양주·이천·안성 등 25개소에 229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국산재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목재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목재이용·가공시설

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경기도 가평, 전북 완주 등 4개소에 13억원을 지원하였고, 2015년에는 경남 진주·함양 2개소에 6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3) 나무은행

숲가꾸기 및 각종 산림개발지에서 발생하는 조경적 가치가 있는 수목을 가로수 식재, 공원 조성 등 공익사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나무은행 조성·운영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전국 461개소(지자체 451개소, 산림청 10개소)에서 나무은행을 운영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약 336천본의 조경수를 수집하여 247천본(가로수 23천본, 도시숲 41천본, 기타 공공용 183천본)을 식재하여 약 682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창출하였다.

2014년 전남 곡성, 장흥 등 28개소에 나무은행 조성을 위하여 30억원을 지원하였고, 2015년에도 강원 정선, 전남 나주 등 34개소에 3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27) 임도 시설

임도(Forest Road, 林道)는 산림 내 도로로서 임산물의 운반, 조림·숲가꾸기, 목재 생산 등의 산림경영은 물론 산림보호·관리에 필수적인 기반시설이며, 임업의 기계화를 통한 경영비용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다. 또한, 산불·산사태·병해충 방제 등 산림재해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며, 최근에는 산길걷기, 산악마라톤·산악자전거 등 산림휴양·레포츠 등의 산림복지서비스를 위한 장소로서도 각광을 받고 있다. 아울러 농산촌의 교통은 물론 농산물 유통도로 등으로도 활용되어 지역산업과 사회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등 다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1968년 국유림 내 임목매각지 3개소에 15km를 설치한 것이 임도사업의 효시이며, 1984년부터는 공·사유림에 국고보조사업으로 민유임도를 설치하기 시작하여 2014년 말 현재 총 시설임도의 거리는 19,072km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ha당 전국 임도밀도는 2.99m에 불과하여 선진 임업국과 비교하면 매우 빈약한 실정으로서 임도시설 확대가 시급한 실정이다.

산림청에서는 2010년 임도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2030년까지 54,000km의 임도를 시설하여 임도밀도 8.5m/ha 달성을 장기목표로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시

설물량의 확대와 사업의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4년도에 1,442억원을 투자하여 688km의 임도를 신설하였다. 이중 민유림에 447km를 시설하여 총거리는 13,242km로 임도밀도는 2.74m/ha이며, 국유림은 241km를 시설하여 총거리는 5,830km 임도밀도는 3.77m/ha로, 국유림의 임도밀도가 민유림에 비하여 다소 높은 편이다. 또한, 집중호우에 의한 재해 안전성 강화와 산림 사업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374km의 노후 임도에 대한 구조개량과 5,383km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보수를 실행하였다. 2015년에는 1,487억원을 투자하여 임도신설 687km, 구조개량 306km, 유지보수 4,324km를 실행할 계획이다.

3. 도농상생 및 귀농·귀어·귀촌을 통한 농어촌 활력 증진

(1) 로컬푸드직매장 설치 지원

로컬푸드직매장 설치 지원은 2013년 5월 농산물 유통구조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를 활성화하여 유통경로간 경쟁을 촉진하고 유통비용을 절감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행복한 유통구조를 만들기 위해 도입되었다.

2014년 기존 소비자유통활성화지원사업에서 소비자참여형직거래활성화 별도사업으로 분리되어 직거래장터 설치 지원, 소비자교류 지원 등과 함께 동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직매장 설치 및 생산자교육, 홍보 등을 보조 30~100% 조건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2014년까지 3년간 총 41개소가 지원을 수혜하였다.

이러한 정책지원에 힘입어 로컬푸드직매장은 전국적으로 2012년에 3개소에서 2014년에 71개소로 확대되었으며 매출액 또한 동 기간 64억원에서 950억원으로 대폭 증가하여 직거래의 대표적인 성공모델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표 2-2-70 전국 로컬푸드직매장 운영현황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개소수	3개소	32개소	71개소
매출액	64억원	317억원	950억원

로컬푸드직매장은 판로가 부족한 영세농, 고령농, 귀농인구에 적합한 다품종 소량 유통방식으로서 일반 마트 출하와 비교할 때 농가수취가격이 20.0%p 높아 생산자의 소득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규모화·조직화 중심으로 추진되어 온 산지유통정책에서 소외된 반면 직매장에 참여하면서 가격을 직접 결정하고 유통·판매과정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농업에 대한 자부심과 소비자와의 애착이 형성되어 심리적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

매장 판매단가 또한 일반마트 대비 17.2%p 낮고 당일 수확 당일 유통 원칙의 적용으로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합리적 가격에 만나게 된 소비자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2-2-18 직거래 일반 및 로컬푸드직매장 생산자·소비자 효용



자료 : 직거래 활성화 소비자 만족도 및 생산자 기대효과 조사분석 연구, '14.12, 농식품신유통연구원

로컬푸드직매장은 2015년 말까지 100개소로 확대 예정이며, 신규 설치 지원 외 기존에 운영 중인 직매장의 경영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온라인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지원을 추가로 실시하여 직거래 확산의 중심축으로 지속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2) 귀농·귀촌 활성화

정부는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 등에 대비하여 귀농·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귀농·귀촌 종합대책」을 2009년 4월에 발표하였다. 그 후 귀농·귀촌의 다양한 사례를 확인·검토하여 귀농·귀촌인들이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농업창업, 농촌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귀농·귀촌 정보 제공, 교육, 자금지원 등 체계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왔다.

귀농·귀촌 지원 정책은 조기퇴직, 은퇴 등으로 새로운 직업을 찾는 도시민에게 일 자리를 제공하여, 농식품산업 관점에서는 다 산업분야 경험 인력의 유입을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를, 농촌의 관점에서는 주민 확보는 물론 문화, 관광, 서비스 분야 활성화 등 지역의 활력 증진을 도모할 수 있다.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귀농귀촌종합센터를 서울로 이전하고, 영농기술, 농지, 주거, 창업자금 등 귀농·귀촌 관련 정보·상담을 One-stop으로 제공하고, 소그룹 강의 등을 통해 귀농·귀촌에 관한 생생한 강의를 제공하는 등 종합센터의 기능을 강화 하였다. 또한 '2014 귀농·귀촌 창업박람회(2014년 6월 22일~25일)' 개최를 통해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다양한 정보와 상담·체험 기회를 제공하였다.

귀농·귀촌인에게 관심 단계부터 실행, 정착 단계에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 하기 위해 귀농·귀촌 준비 단계별로 교육과정을 분류·편성 하는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였으며, 천안연암대학, 여주농전 등에서는 실습전문 합숙교육 과정을 운영하였다. 교육 효과성 제고 및 교육생 동기부여를 위해 30% 수준의 자부담 비율은 유지 하되 교육생 여건 및 환경에 따라 교육생 자부담 비율을 차등 지원하였으며, 2030세대 젊은층의 귀농·귀촌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을 하였다. 또한, 교육기관 평가를 통해 교육과정의 내실화를 도모하였다.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을 통해 40개 시·군의 귀농·귀촌 및 도시민 유치 활성화를 지원하였다. 시·군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귀농·귀촌 활성화 워크숍 및 현장점검 등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가족과 함께 일정기간 체류하면서 농촌적응, 영농교육·실습, 농촌체험 등을 할 수 있는 체류형 농업창업 지원센터 건립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4개소(제천, 영주, 홍천, 구례)를 건립 중에 있다. 입주자들에게 일손부족 농가를 중심으로 농가실습교육을 알선하고 이를 마을 주민과의 자연스러운 교류 확대로 이끌어 해당 지역의 정착을 유도하였다.

귀농 초기 자본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을 통하여 부족한 자금을 지원하였다. 2억원 한도 내

에서 농지구입, 시설건립 등 영농기반 마련 자금을 융자 지원하고, 주택 구입 및 신축을 위해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였다. 대출 조건은 창업자금은 연리 3%, 주택(신축) 자금은 2.7%이며(65세 이상 : 2%),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인 농어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본 법률의 제정으로 귀농·귀촌인에 대한 정의,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귀농·귀촌 실태조사 등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향후 체계적인 귀농·귀촌 정책을 추진하고 시행함에 있어 바탕이 될 예정이다.

귀농·귀촌 관련 정부의 정책 지원은 귀농·귀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산되고 귀농·귀촌 실행 전에 충분한 사전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통한 농업·농촌의 신규 인력 확보와 농촌지역 농식품산업 활성화, 농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베이비 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 전원생활을 통한 다양한 가치 추구 경향 확산 등으로 귀농·귀촌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에서는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교육·실습, 자금 지원 등 정부 정책을 확대·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3) 도농 일자리 연계

농업에서 고용인력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농가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현장에서는 노동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업생산의 계절성으로 농번기가 존재하고, 근래 상업농의 진전, 원예·축산 시설 규모화로 고용노동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도시에서는 일자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데 반해, 농촌에서는 농업인 중 87.4%가 인력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예를 들면, 전남 무안군의 경우, 양파 수확기에 비숙련작업 일당은 8~10만원으로 건설업·제조업 단순노무자 일당보다 높은 수준임에도 인력 구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농촌 일손부족 문제를 도시 유흥인력의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는 도·농간 협력이 필요하다. 이에 농산업을 필요로 하는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 고용서비스 기능을 확충하는 도농 일자리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갖춘 농협중앙회를 활용하여 2013년 9월에 전국 농협의 158개 시·군농정지원단에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설립하였다. 센터를 통해 농촌의 구인자와 도시의 구직자를 모집하여 농산업 일자리를 중개하고, 일자리 참여자의 농작업 안전보험료를 지원하는 고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업초기에는 사업홍보 및 구인·구직 정보 부족 등으로 일자리 중개가 부진하였으나, 2014년에 사업 활성화를 위해 대표전화(1899-1152)를 개설하고, 농협 CD기·아파트 단지·지하철 모니터 광고 및 반상회보·농업인 단체 회의 지면광고 등 집중 홍보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2013년에 연인원 1만3천명 수준이었던 중개인원이 2014년에는 26만명(유상인력 10만명, 자원봉사 4만명, 사회봉사 10만명)으로 대폭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2014년에는 농촌지역의 낮은 접근성, 불편한 교통 등 농산업 분야의 근로기피 요인을 해소하여 도시의 구직자가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행복생활권협력사업으로 5개 권역 13개 시·군을 선정하여 '도농협력 일자리 연계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5개 권역 : 거창·함양·산청/ 임실·순창·남원/ 담양·구례·곡성/ 나주·화순/ 단양·제천).

이들 권역에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총 3년간 권역별로 14억 2천만원의 국비(재원 : 지특회계 지역행복생활권협력사업)를 지원한다. '농산업 인력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전문 상담사를 통한 인력중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일자리 참여자에게는 교통·숙박·상해보험 지원 및 작업·안전 교육 등을 실시한다. 2015년에는 도시·농촌의 효율적인 농산업 구인·구직 연계를 위하여 5개 권역을 중심으로 '농산업 구인·구직 연계 정보시스템'을 구축 할 계획이다. 향후, 농산업 인력지원센터는 농산업 일자리와 관련된 서비스를 종합 지원함으로써 농가 경영활동 및 도시 구직자의 직업활동을 개선하고, 도·농간 인력교류를 통해 국가 인적 자원의 효과적인 활용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제3장 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양성

제1절 지방 초·중교 교육환경 개선

1. 농산어촌 지역에 우수한 교육환경 구축

(1) 농산어촌 학교의 ICT 교육환경 구축

농산어촌 학교의 ICT 교육환경 구축 사업은 농산어촌 학생들에게 ICT 콘텐츠를 활용하여 자신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도록 양질의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농산어촌의 사회경제적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농산어촌의 지리적, 문화적 불리함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그 동안 축적된 교육정보화 역량과 학습 콘텐츠를 최대한 활용하고, 최근 보편화 되고 있는 스마트 기기 등 인프라를 구축하여 정보 격차를 줄임으로써 보다 많은 지적·문화적 소양과 체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농어촌 학교의 학습여건은 약 40%(1,896교)가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로, 복식 수업, 방과 후 학교 운영 제약, 또래학습 결여 등 열악한 여건이나, 대부분 농촌학교 인근에 학원이 전혀 없어 학습결손 보충이 어렵고 영어 및 예체능 능력 계발에도 한계가 큰 상황이다. 더욱이 도농 간 학생들의 기초학력 격차가 커지고, 중학교 단계에서의 수준 격차는 보통을 넘어서고 있다. 더욱이 열악한 경제·사회적 여건으로 체험기회 제공 기관 및 장소가 부족하고, 기초수급자,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등 경제적·구조적 취약계층의 가구가 증가하면서 가정의 돌봄 기능이 취약한 편으로 보고되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여건이 열악한 학생 수 60명 이하의 면·도서벽지 지역의 소규모 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우선 대상으로 300개교를 지정한 후 2013년 시범사업(2013년 9월~2014년 2월)을 실시하였다. 2013년 시범사업의 긍정적인 반응을 기반으로 ICT를 활용한 농산어촌 학생 학습여건 개선 및 문예체험 확대 사업을 추진하여 2014년 참여학교 수를 2,000개로 증대시켰으며, 2015년에는 전체 농산어촌 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참여시킬 계획이다.

ICT를 활용한 농산어촌 학생 학습여건 개선 및 문예체험 확대 사업은 크게 스마트 기기, 무선인터넷망 보급, 스마트 멘토링의 3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다. 스마트 기기, 무선인터넷망 보급은 학교별 기 구축 여건을 감안하여 시·도교육청 자체 계획에 의해 차등 지원되었으며, 스마트 멘토링은 방과 후 시간에 교사, 방과 후 강사, 대학생 등 다양한 멘토가 참여하는 온·오프라인 체험학습으로 운영되었다.

표 2-3-1 농산어촌 ICT 지원 사업 개요

구분		내용
사업 목표		농산어촌 학생들에게 ICT 콘텐츠를 활용하여 자신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도록 양질의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농산어촌의 사회경제적 불리함 극복
사업 지원 대상		2,000개교
사업 기간		2013년부터 2015년
사업 규모	지원 기간	1년
	지원 학교 수	총 2,000개교 지원 - 2013년 300개교 선정 - 2014년 1,700개교 선정
	지원 예산액 (지원 형태)	교당 지원액 상이(특별 교부금) 총 116억원 지원
지원 내용		스마트 기기 보급: 스마트패드 구매 무선 인프라 구축: 무선 인터넷망, AP 등 스마트 멘토링: 방과후 스마트 기기 활동 능력이 뛰어난 멘토의 지원
사업 관리		컨설팅 및 성과 관리

그동안 추진된 농산어촌 학교의 ICT 교육환경 구축을 위해 운영된 ICT를 활용한 농산어촌 학생 학습여건 개선 및 문예체험 확대 사업은 2013년 운영 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사례 및 체험 중심의 학습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보급하였으며, 문체부와와의 협업을 통해 박물관, 미술관 등의 ICT 콘텐츠를 통합 사이트와 연계하여 국립민속박물관 등 9개 기관의 7개 분야(자연과학, 철학·종교·심리학, 사회과학, 언어, 예술, 문학, 역사·지리)의 방대한 자료를 학생들에게 제공하였다. 그 외 자기주도 수학학습콘텐츠, 학생 과학연구 수행 결과물, 오케스트라 동영상, 원격 진로 멘토링, 학생체력평가 앱, 인물로 보는 한국사 등 다양한 자료를 실시간으로 제공함에 따라 열악한 농산어촌 지역의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2) 농산어촌 거점별 우수 중학교 육성

농산어촌 거점별 우수 중학교 육성 사업은 농어촌 학교의 교육력 제고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21조(농어촌 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다. 최근 10년간 농어촌 학교 육성을 위하여 약 9,978억원을 투자하는 등 꾸준한 지원을 하였으나 중학교 지원은 초등학교나 고등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력을 조사하였을 때 중학교의 도·농간 학력 격차가 크게 발생하였으며, 농어촌 중학교에 대한 낮은 신뢰로 교육 이농 현상이 심화되었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연계할 수 있는 우수 중학교를 육성하여 우수한 입학자원의 이탈을 방지하고, 농어촌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릴 수 있는 교육여건을 구축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의해 추진되었다.

농산어촌 거점별 우수 중학교 육성 사업은 농어촌 학생 수 감소와 학교 소규모화의 악순환을 막고 우수한 교육을 보장할 수 있는 지역의 중심 중학교 육성하기 위한 목표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재학생이 60명 이상인 면 소재의 중학교를 80개교를 선정하여 특별교부금으로 매년 3~5억원씩 총 3년간 지원 중에 있으며, 2018년부터는 시·도별 지방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시·군, 지역 교육청, 단위학교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진해야 한다. 시·군 교육청은 교육지원청 및 학교와의 MOU체결을 추진하여 행·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중학교 육성 계획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등 지역 발전 전략과 연계하여 추진토록 한다. 교육청은 인근 지역의 희망학생을 유치할 수 있도록 광역학구제를 허용하고, 학교장 공모제(초빙형)를 통하여 학교 육성에 열정이 있는 교장을 초빙해야 하며, 진로 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진로진학상담교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단위학교는 자유학기제, 학교진로교육프로그램(SCEP), 학교 동아리 운영(스포츠 클럽, 오케스트라, 뮤지컬, 연극 등), 농산어촌 ICT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그동안 추진된 농산어촌 거점별 우수 중학교 사업은 열악한 농어촌 지역의 교육여건 및 시설 확충에 기여하였으며,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에게 풍부한 교육 경험을 제공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특히, 다목적 강당, 기숙사, 특별실 등 교육 시설을 구축하고, 진로, 예체능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각 학교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

으로써 일부 학교에서는 사업 시행 후 학생 수가 증가하고, 지역 주민의 신뢰가 회복되어 지역 학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표 2-3-2 농어촌 거점별 우수중학교 사업 개요

구분		내용
사업 목표		농어촌 학생 수 감소와 학교 소규모화의 악순환을 막고, 지속적으로 유지 가능하며 학생들에게 질 좋은 교육을 보장할 수 있는 지역의 중심 중학교를 육성
사업 지원 대상		재학생이 60명 이상인 면 소재의 중학교
사업 기간		2013년부터 2017년
사업 규모	지원 기간	대상 선정 후 3년 동안 지원
	지원 학교 수	총 80개교 지원 - 2013년 20개교 선정 - 2014년 30개교 선정 - 2015년 30개교 선정
	지원 예산액 (지원 형태)	매년 교당 3~5억 원 내외 지원(특별 교부금)
지원 내용		시설비: 기숙사 신축, 리모델링, 특별실 구축 등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단기 인건비 기자재비: 각종 기자재 및 장비 구입 비용 프로그램 운영비: 각종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경비 기타: 통학 버스 임차 등 운영에 필요한 기타 경비
사업 관리		컨설팅 및 성과 관리
추진 근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21조(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

2. 교육환경 개선

(1) 초등돌봄교실 시설개선 및 확충

초등돌봄교실 시설개선 및 확충 사업은 2014년부터 초등 방과후 돌봄을 희망하는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전면적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늘어나는 학교 내 돌봄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2014년에 한시적 국비 지원으로 초등돌봄교실을 구축하고 노후 시설을 개선하는 등 총 6,025개의 돌봄교실을 확충하였다. 그 결과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질 높고 안전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2014년에는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부모의 만족도가 92.5%로 나타나 높은 평가를 받았다.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는 전체 초등학교 수는 2013년 5,784개교에서 2014년 5,938개교로 늘어났고 초등돌봄교실 운영 교실 수는 7,395실(2013년)에서 10,966실(2014년)로 크게 증가 하였다.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 수는 2013년에 약 16만명에서 2014년에는 약 22만명으로 급격하게 늘어났으며 이에 상응하는 돌봄교실을 충분히 확보하였기에 돌봄 희망 수요를 충족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초등돌봄교실은 학교 내에서 방과후 돌봄 기능을 지속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만족도 높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간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표 2-3-3 초등돌봄교실 시설 개선 확충 사업 성과

(단위: 교, 실, 명, %)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초등돌봄교실 운영 학교수 (교)	5,652	5,784	5,938
초등돌봄교실 운영 교실수 (실)	7,086	7,395	10,966
초등돌봄교실 학생수 (명)	159,248	159,737	221,310
초등돌봄교실 참여 학부모 만족도 (%)	-	-	92.5

(2) 소규모 학교의 적정 규모화

소규모 학교의 적정규모화 정책은 학령인구 감소 및 도농격차 심화 등으로 농어촌 지역에 소규모 학교가 증가함에 따라 추진하게 되었다. 소규모 학교는 교육과정 운영의 한계와 시설·자료 부족으로 인한 교육의 만족도 저하, 효과적인 교육프로그램 운영의 곤란, 비효율적인 교원배치, 학업 성취도 및 인성·사회성 발달의 어려움 등이 지적될 수 있다. 특히 중·고등학교의 경우 비전공교사나 순환교사 운영에 따라 교육의 질이 저하되고 체육활동에 지장이 큰 상황이다.

이와 같은 소규모학교 운영으로 인한 문제점 해소를 위하여 1982년부터 1998년 까지 시·도 교육청에서는 자체적으로 학교 통폐합을 추진하여 이 기간 동안 3,481개 학교, IMF 시기인 1999년에는 일시적인 정부 재정지원으로 798개교를 통폐합 할 수 있었다. 이후 2005년까지는 다시 시·도 교육청이 주도하여 474개교의 통폐합을 추진하였다가 2006년부터는 통폐합 추진을 위한 정부 정책으로서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과 적정규모학교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소규모 학교 통폐합 권장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통폐합 추진에 따른 특별교부금 지원을 명시화하게 되었다. 나아가 2008년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규칙」 개정으로 통폐합 실적에 대한 교부재원을 특별교부금에서 보통교부금으로 변경하였고, 2009년에는 대통령 보고 및 시도교육청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적정규모학교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교육청에 소규모 학교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2010년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을 개정하여 통폐합 실적에 대한 재정지원 뿐만 아니라, 통폐합에 따른 신설 및 개축비 지원, 군단위 통폐합에 따른 다목적 시설비 지원, 사립학교 이전 건축비 지원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다.

특히 교육부는 2012년에 「초중등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적정규모 학교 육성 종합 대책」을 수립하여 학교급별·지역별로 통폐합 인센티브 차등화 지급, 통합 운영학교 지원 등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제도를 제시하는 등 적정규모 학교육성에 대한 종합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하였고, 이는 적정규모 학교 육성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하여 시·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적정규모학교 육성계획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게 되었다.

2013년에는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의 가속을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통폐합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규모를 대폭 강화하여, 적정규모학교 육성의 실질적인 주체인 시·도 교육청이 보다 능동적으로 통폐합을 추진할 수 있는 유인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시·도 교육청에서는 그간 자체적인 노력과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 정책에 힘입어 꾸준히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향후에도 당분간 학생 수 감소 추세 및 이농현상 심화가 계속되고, 구도심 지역의 공동화 현상 심화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소규모 학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접근 방식 및 이에 대한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 등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의 중요도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표 2-3-4 소규모 학교의 적정규모 학교 육성 지원 현황

(단위 : 교, 억원)

교부연도	분교폐지		분교폐지		분교장개편		신설대체이전		합계	
	학교수	교부액	학교수	교부액	학교수	교부액	학교수	교부액	학교수	교부액
2011	14	400	35	350	9	9	-	-	58	759
2012	31	930	28	280	4	4	-	-	63	1,214
2013	21	1,320	28	280	3	3	6	260	58	1,863
2014	24	1,630	13	130	2	2	9	350	48	2,112

표 2-3-5 연도별 통폐합 인센티브 산정기준

연도	본교폐지	분교폐지	분교장 개편	신설대체이전	통합운영학교
1982~1998	시도교육청 자체 추진				
1999	5	2	0.2	-	5
2000~2005	시도교육청 자체추진				
2006~2009	10	3	0.2	-	10(보통교부금으로 변경)
2010~2011	20	10	1	-	20(시설 폐쇄) 10(시설 폐쇄 없이 공동이용)
2012	20 (시지역 60)	10	1	-	
2013~	초 30 (시지역 60) 중고 100	10	1	초 30 중고 50	

제2절 창의적 인재를 키우는 지방대학 육성

1. 특성화를 통한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1)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지방대학 특성화사업은 지역사회 수요에 기반한 특성화를 통한 대학 체질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비수도권 소재 4년제 국·공·사립대학을 대상으로 2014년 시작되었다.

‘지방대학 지원확대’의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2013년 10월 ‘지방대학 육성방안’이 발표되었으며, 이듬해 2월 지방·수도권대학 특성화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공고 후 평가를 거쳐 79개 대학 264개 지역산업·지역사회 수요에 기반한 특성화 사업단이 최종 선정되어 지원되고 있다. 또한 10월에 수도권 대학에 버금가는 경쟁력을 갖춘 지방대학의 우수학과를 육성하기 위한 ‘특성화 우수학과’ 선정 및 지방대학의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지역산업 및 대학의 동반성장을 지원하고자 ‘지역선도대학 육성 사업’을 실시하여 지방대학 육성에 힘쓰고 있다.

표 2-3-6 지방대학특성화사업 권역별·사업유형별 지원 현황

권역	대학 자율	국가 지원	지역 전략	합계		
				학교수	사업단수	지원액
충청	34	43	3	27	80	585억원
대경강원	29	34	3	18	66	487억원
호남제주	24	28	3	16	55	401억원
동남	27	33	3	18	63	469억원
소계	114	138	12	79	264	1,942억원

지방대학 특성화사업은 학생수, 학교수 및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여 4개 권역(충청권, 호남·제주권, 대경·강원권, 동남권)으로 구분하였으며 대학 및 사업단이 자율적으로 특성화 분야를 선정 지원하도록 하여 개별 대학 및 지역여건에 맞는 대학 특성화를 견인하도록 하였다. 지역별 10개 컨소시엄을 구성한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은 지방대학이 선도대학과 협력대학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역거점으로서의 새로운 가치 창출

및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방대학 특성화사업으로 특성화 교육과정 개설·운영 및 글로벌 역량강화를 통해 지역산업과 연계한 특성화를 유도(권역별 국제화 중점 육성 분야 : 대경강원권(글로벌 식량자원, 농업개발), 동남권(신발산업, 해양수산), 충청권(아시아전문 경영인력), 호남 제주권(국제개발협력))하여 지역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사회에 경쟁력 있는 인적 역량 확보 및 국제적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역선도대학 육성으로 지역기반 특성화분야를 중심으로 대학과 지자체, 기업, 기관, 연구소가 참여하는 지역 연계 시스템을 구성함으로써 지역사회와의 동반성장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2)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 사업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 사업은 2014년을 시작으로 2018년까지 총 5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문대학 강점분야 중심 특성화를 통해 지식기반산업 및 창조경제의 역량 있는 핵심 직업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동 사업의 주요 특징으로는 학별이 아닌 능력중심 사회 실현을 위해 일자리·현장중심(NCS 기반) 교육과정을 도입·운영하는 등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 혁신을 통해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며 산업계 수요 중심의 교육체제로 개편을 유도함에 있다.

특성화전문대학은 I 유형(단일사업분야 특성화), II유형(복합산업분야 특성화), III유형(프로그램 특성화)을 구분하여 70개 대학을 선정, 2,147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17년까지 총 84개교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표 2-3-7 2014년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선정 결과

구분	I 유형 (단일산업분야)		II유형 (복합산업분야)		III유형 (프로그램)	합계
지원 대학	수도권	7개교	수도권	15개교	4개교	70개교
	지방권	14개교	지방권	30개교		
	소계	21개교	소계	45개교		
지원금	64,000백만원		148,983백만원		1,717백만원	214,700백만원

2014년도 사업 수행 결과 ‘취업률(I·II·III유형)’은 사업개시 전 64.3%에서 65.0%로 0.7%p, 충원율은 98.9%에서 99.3%로 0.4%p 증가하는 등 사업 수행 1년차임에도 불구하고 대학 강점 분야 특성화로의 체제 개편에 따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은 지역(국가)·특정산업과 연계한 대학의 강점분야 특성화로 체제를 개편하여 고등직업교육 중심 기관으로서의 전문대학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고 그동안 지적되어 온 졸업생 직무능력과 현장의 '미스매치' 현상도 차츰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사업 1차년도 연차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각 대학별 우수사례들의 확산·보급을 위해 사례집을 발간하며 사업 참여 대학들을 대상으로 사업운영 전반에 대한 집중적인 대면·현장 컨설팅을 실시하여 보다 더 내실 있는 사업이 추진되도록 할 계획이다.

(3)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ACE사업)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ACE, Advancement of College Education)은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혁신적인 대학 교육을 비전으로 하여 '잘 가르치는 대학' 학부교육 선도모델의 창출·확산을 정책목표로 하고 있는 사업이다. 대학의 교육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및 학사구조의 개선과 교수·학습 체제의 혁신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대학의 자발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동 사업은 2010년에 신설된 교육부의 대표적인 대학 교육중심 재정지원 사업으로, 2014년부터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에서 분리되어 개별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2014년에는 13개 대학(신규 7개교, 재진입 6개교)을 신규 선정하고, 2011년~2012년 기 선정 대학(16개교)을 포함하여 총 27개 대학(수도권 9개교, 지방 18개교)에 대해 평균 20억원씩, 총 573억원을 지원하였다. 2012년에 선정된 3개교에 대해 중간평가를 실시하였고, 2011년에 선정된 11개교에 대해 연차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평가 결과는 2014년도 재원 배분 시 반영하였다.

표 2-3-8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ACE) 지원 현황

(단위 : 개교, 백만원)

지원 년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지원 대학 수 (누계, 개교)	11	22	25	25	27
당해 연도 예산 (백만원)	30,000	60,000	60,000	60,000	57,272

동 사업은 대학별로 4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4년에 이른바 2주기에 들어섰는

데, 특히 대학생 핵심역량 함양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교양교육 내실화를 강조하였다. 기존에 전공 위주의 대학교육에 따른 교양교육의 형식화 문제를 해소하고, 창의적 인재양성 및 학부교육의 근간이 되는 교양교육을 강화하기 위함이었다. 그 결과 지원 대학의 교양교육 관련 기반 및 역량이 제고되었는데, 지원 대학이 모두 별도의 교양교육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하게 되었고, 교양교육 관련 강좌 수가 증가(758개→792개(중복제외))했음은 물론 교양교육 관련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도 확대(29.7%→38.7%)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또한, 사업 참여 대학의 수혜자인 교직원 및 학생 954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당초 목표치인 80점에 0.7점을 초과한 80.7점을 달성하였는데, 이는 지원 대학이 사업 프로그램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보인 것도 있지만, 대학의 전체적인 교육분위기 향상 및 '잘 가르치는 대학'으로의 변화의 노력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보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동 사업은 총액 교부(Block Grant) 방식으로 지원하는데, 지원 대학은 각 대학의 비전과 인재상에 맞는 교육목표를 세우고, 대학의 특성에 맞게 수립한 성과목표와 사업계획서에 따라 지원금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배분하고 집행한다. 이 과정에서 개별 대학의 교육여건 등을 고려한 예산집행이 가능하여 사업 취지 및 추진에 대한 대학사회의 높은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그동안 산학협력, 연구(R&D)에 비해 비교적 소홀했던 대학의 '교육' 기능에 지원하여 대학의 교수-학습의 질 개선을 지속적으로 유도해온 만큼 앞으로도 대학의 '교육'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그 결과 전체 대학의 학부교육의 질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4) BK21플러스 사업을 통한 지방 대학원 연구역량 강화

BK(Brain Korea)21 사업은 1999년부터 “국가발전을 주도하는 고급인력 양성”이라는 취지하에 추진되어온 우리나라 대표적인 학문후속세대 양성 사업으로, 1단계 BK21(1999~2005년), 2단계 BK21(2006~2012년)을 거쳐 현재 운영 중인 BK21 플러스(Program for Leading Universities & Student) 사업에서는 2013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모든 학문분야에 있어 창조경제를 견인할 석·박사급 창의인재 양성 및 국내 대학원의 교육·연구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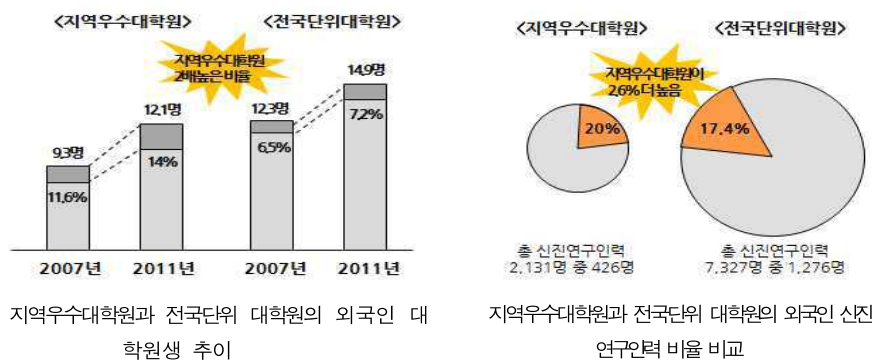
표 2-3-9 BK21 플러스 사업 주요 내용

구분	미래기반창의인재양성	글로벌인재양성	특화전문인재양성
인력양성 방향	▪ 과학기술, 인문사회, 융복합 등 모든 학문분야 후속세대 양성	▪ 과학기술 기반 융·복합 분야의 학문후속세대 양성	▪ 특화전문분야 고급 실무형 전문인재 양성 * 디자인, 문화콘텐츠, 관광, 헬스케어, 정보보호 등
'15년 예산	▪ 2,355억원	▪ 193억원	▪ 149억원
지원규모	▪ 471개 사업단(팀) ▪ 대학원생 13,000여명	▪ 21개 사업단 ▪ 대학원생 400여명	▪ 53개 사업단 ▪ 대학원생 600여명

이번 BK21 플러스 사업은 2단계 BK21(2006년~2012년) 대비 지방대 지원 사업비를 24%에서 32%로, 지방대 선정 사업단(팀) 비중을 35%에서 44%로 상향 조정하여 지역 우수 대학원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87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지방 대학 241개 사업단(팀)을 지원하였다.

본 사업은 석·박사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뿐만 아니라 신진연구인력(박사후 과정생, 계약교수)의 인건비도 지원하고 있으며, 장·단기 해외연수, 산학협력활동 등 대학원 연구역량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도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로 인해 본 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지방대학원은 우수한 국내·외 대학원생 유치를 통한 연구인력의 지속적인 확충이 가능하게 되어 대학의 연구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

그림 2-3-1 기술개발 투자 및 성과



BK21 플러스 사업은 2015년 시행할 중간평가를 통하여 학문분야 및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실적 성과 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앞으로 본 사업을 통한 지속적인 지방대학원의 고급인력 양성과 연구력 강화가 지역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짐으로써 지역사회와 지방대학원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5) 지방대학의 지역인재 전형제도 도입

지역인재 전형제도는 지역인재의 지방대학 입학 기회를 확대하여 지방대학에 우수한 지역인재를 유치함으로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정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지난 2013년 2월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로 ‘지방대학 지원확대’를 선정하고, 후속 조치로 지방대학 육성과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5대 중점과제를 담은 ‘지방대학 육성방안’이 확정·발표(2013년 11월)하였다. 그리고 공무원·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확대 및 지역인재전형 도입 등 지역인재 육성·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학 육성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시행(2014년 7월)되었다.

이를 통해 지역인재전형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지역의 범위를 6개 권역으로 설정, 권역에 따라 학생 전체 모집 인원 중 일정 비율 이상을 해당 지역 학생으로 선발하도록 하여 지역인재의 지역 정주를 유도하고 지방대학을 지역 창조경제의 구심점으로 지역 사회와 상생 발전하는 선순환 구조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표 2-3-10 지역인재 선발권역 및 선발비율

(단위 : %)

구 분	권역(6개)별 모집비율			대 상
	충청, 호남,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	제주	
학 부	30	15	15	해당 지역 고교졸업(예정)자
전문대학원 (법학, 의학, 치의학)	20	10	10	해당 지역 대학졸업(예정)자

※ 한의학전문대학원의 경우 지역 범위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인 아닌 지역으로 설정하며 학생모집비율을 20%로 함

‘지방대학 육성법’ 시행 후 첫 입시를 치른 2015학년도 학부 신입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방대학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은 평균 58.5%로 조사되었다. 부산·울산·경남권

이 가장 높은 81.7%, 강원권이 가장 낮은 29.2%이며, 모든 권역에서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법령상 권고 비율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5학년도부터 새롭게 도입한 지역인재전형을 통해 68개 대학에서 5,633명을 선발하였으며, 이는 전체 지역인재 선발 인원(124,401명)의 4.5%를 차지한다. 특히, 지역인재 선발에 높은 관심이 집중되었던 의학교열 학과들의 경우 32개 대학에서 396명을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하여 전체 지역인재 선발인원(914명)의 43.3%에 달해 지역인재전형 실시로 인한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표 2-3-11 2015학년도 의학교열 학과 지역인재 및 지역인재전형 선발 현황(권역별) (단위 : 명,%)

권역	입학 정원 (A)	지역인재 선발인원 (B)	지역인재전형 선발인원(C)	지역인재 선발비율 (D=B/A)	지역인재 중 지역인재전형 비율 (E=C/B)
강원권	318	21	12	6.6	57.1
대구·경북권	468	236	57	50.4	24.2
부산·울산·경남권	434	218	99	50.2	45.4
충청권	405	131	84	32.4	64.1
호남권	702	308	144	43.9	46.8
합계	2,327	914	396	39.3	43.3

출처 : 2015학년도 대학입학 지원현황 및 최종등록현황 자료(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5학년도 학부 및 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선발은 전반적으로 '지방대학 육성법'의 취지에 맞게 이루어졌으며, 특히 의학교열 학과에서는 지역인재전형 실시로 인하여 지역인재 선발이 대폭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권역별로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편차가 있으므로 권역별로 지역인재 선발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지역인재 선발비율이 크게 떨어지는 권역에 대해서는 지역인재 선발비율이 낮은 구조적인 원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한편 지역사회·대학들과 협력을 통하여 지역인재 선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2016학년도 학부 지역인재전형 모집인원은 전년도보다 더욱 확대되어, 79개 대학에서 9,980명을 지역인재전형으로 모집할 예정이다.

2. 지역산업과 연계한 산학협력 강화

(1)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 (4년제 대학)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은 2012~2016년까지 총 5년간의 지원 사업으로 1, 2차년도(2012년~2013년)에는 51개 4년제 대학에 각 1,700억원(대학평균 33억원), 2,147억원(대학평균 42억원)을 지원하였고, 3차년도(2014년)에는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56개 4년제 대학(10개교 탈락 및 15개교 신규 진입)에 대학당 평균 42억원씩, 총 2,366억원을 지원하였다. 동 사업으로 지원받는 대학은 산학협력 친화형 교원인사제도 도입, 산학협력단 역량강화를 필수적으로 수행하여 대학이 산학협력 친화형 체질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였다.

1단계(2012년~2013년) LINC사업은 산학협력 선도모델 기반조성 및 내실화를 목표로, 교원 업적 평가 시 산학협력 실적 반영 등을 통해 산학 간 네트워크 구축은 물론 대학에서 산학협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대하였으며, 2단계(2014년~2016년) 사업의 성과 창출 및 확산 목표에 따라 산학협력 프로그램의 고도화 및 내실화를 더하고 있다.

대학과 협약을 체결한 산학협력 가족회사의 경우 1차년도(2012년) 31,135개사, 2차년도(2013년) 40,663개사, 3차년도(2014년) 48,992개사로 증가(전년대비 20.5% 증가)하여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추진하여 기술개발 및 사업화 등의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특히 기업체 공동연구와 대학이 보유한 핵심 기술 지원을 통한 기술사업화가 촉진되어서, 기술이전 계약은 1차년도(2012년) 992건(151억원)에서 2013년 1,583건(175억원), 2014년 2,000건(259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8,931건의 특성화 분야 특허 등 기술개발을 수행하여 지역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취업·창업 등 현장 실무형 교육, 기술개발 등 다양한 산학협력 프로그램에서 활동하는 산학협력 중점교수가 1차년도(2012년) 2,808명, 2차년도(2013년) 3,561명, 3차년도(2014년) 4,107명으로 증원되었다.

1단계 LINC사업을 통해 구축한 산학협력을 기반으로 학생교육의 변화도 두드러졌다. 학생 교육과정은 산업체 수요 맞춤형으로 개편되었으며 현장실습 및 캡스톤디자인, 맞춤형학과 운영 등을 기반으로 학생 취업이 연계되고 있다. 현장실습 및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을 이수한 학생은 1차년도(2012년) 각 19,616명, 42,744명에서 2차년도(2013년) 27,618명, 70,145명, 3차년도(2014년) 35,757명, 81,858명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현장실습은 사전 안전교육 등이 정규교과목으로 개설되는 등 지난 1단계(2012년~2013년)에 비해 안전관리가 보다 강화되었으며, 학기제 장기현장실습도 도입되었다. 캡스톤디자인은 인문사회·예체능 계열로 확대되어 융합형 캡스톤디자인 운영이 증대되었고, 기업 수요를 반영하여 학생과 기업이 공동으로 과제를 진행하여 학생 아이디어를 기술이전 및 사업화로 발전시키는 등의 성과가 확산되었다.

맞춤형학과, 계약학과, 융·복합 전공 및 연계전공, 기업연계 트랙 등 산업체 수요를 기반으로 개설·운영되는 산학연계 교육과정은 1차년도(2012년) 872건, 2차년도(2013년) 1,484건, 3차년도(2014년) 1,650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학생의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창업강좌를 1,378건 운영하였고, 창업동아리 및 창업교육에 약 246억원을 지원하는 등 창업교육 활성화에도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앞으로 산학협력 범위 확대와 산학협력 프로그램 다양화를 통해 산학협력 성과창출·확산을 가속화하고, 지역대학의 창의적 인재양성과 기술개발 성과가 지역산업의 고용·기술혁신으로 이어짐으로써 지역대학과 지역산업이 동반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표 2-3-12 2014년 산학협력 선도대학 주요성과(4년제)

년도	구분	산학협력 가족회사	산학협력 중점교수명	현장실습 참여 학생수명	capstone design 참여 학생수명	산학연계 교육 과정 운영(건)	창업강좌 (사수)	창업 재정지원 (천원)	창업 공간지원(㎡)
1차년도 (2013. 2)		31,135	2,808	19,616	42,744	872	53.2	15,015,811	58,579
2차년도 (2014. 2)		40,663	3,561	27,618	70,145	1,484	79.4	19,864,463	74,418
3차년도 (2015. 2)		48,992	4,107	35,757	81,858	1,650	94.2	24,636,748	92,016
년도	구분	산업체 공동연구 과제수(건)	산업체 공동연구비 (천원)	기술이전 실적(건)	기술이전 수입료(천원)	특성화 분야 인력 양성(명)	특성화 분야 기술개발(건)	기술사업화 실적(건)	공동활용 연구장비 운영 수입(천원)
1차년도 (2013. 2)		2,434	85,850,988	992	15,144,395	54,862	4,942	1,949	27,259,135
2차년도 (2014. 2)		3,561	99,657,954	1,583	17,496,940	89,417	7,392	3,014	30,513,426
3차년도 (2015. 2)		3,510	124,010,446	2,000	25,887,398	99,834	8,931	3,906	32,330,663

(2)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LINC) 육성

교육부는 산학협력 중심전문대학 육성사업(2005년~2011년)을 통해 조성된 산학협력 기반을 바탕으로 지역 산업체와 연계한 산학협력 선도모델을 창출·확산하기 위해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을 추진하였다.

동 사업은 2012년을 시작으로 2016년까지 총 5년간(2+3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산학협력 선도형 10개, 현장실습 집중형 20개 등 총 30개 전문대학에 1단계 1차년도(2012년) 총 120억원(교당 평균 4억원), 2차년도(2013년) 140.4억원(교당 평균 5억원)을 지원하였고, 2단계 LINC사업 추진으로 2014년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탈락(지원중단 포함 6개교) 및 신규 선정(6개교)을 통해 2014년(3차년도)에는 총 30개 전문대학에 평균 6.5억원씩 총 195억원을 지원하였다. 동 사업으로 선정·지원받는 대학에서는 교원인사, 학사관리 등 대학의 교육시스템을 산학협력 친화형으로 개편하고 산학협력단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게 함으로써 대학이 산학협력 친화형 체질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였다.

1단계 LINC사업 및 2단계(2014, 3차년도) 사업을 통해 산학협력 가족회사수를 1차년도(2012년) 14,751개, 2차년도(2013년) 17,241개, 3차년도(2014년) 16,991개로 가족회사 질적 관리에 노력하고 있고, 산학협력 중점교수는 1차년도(2012년) 215명, 2차년도(2013년) 296명, 3차년도(2014년) 330명으로 전년대비 11.5%증가하였으며, 교수업적평가(재임용·승진·승급)시 산학협력 실적 반영 등을 통해 산학간 네트워크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전체 30개 산학협력선도대학에 현장실습 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현장실습 프로그램의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산업체 수요에 맞는 인력양성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산학협력 선도형 전문대학에서는 중소기업 애로기술 지원도 활발히 추진하여 지역 산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으며, 대학이 창업 활성화의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창업교육센터를 설치하고 창업 강좌, 창업동아리·창업기업 지원 등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앞으로는 동 사업을 통해 대학 교육과정에 다양한 산학협력 프로그램이 도입되고, 산학친화형 제도 및 인프라 구축과 상호연계가 강화됨으로써 각 대학 특성과 역량에 따른 산학협력 모델 창출·확산이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표 2-3-13 2014년 산학협력 선도 전문대학 주요성과 (2년제)

구분 년도	산학협력 가족회사(개)	산학협력 중점교수(명)	현장실습 참여 학생 비율(%)	기술지도(건)	창업 강좌 (시수)	창업 재정지원 (천원)	창업 공간지원(m²)
1차년도 (2013. 2)	14,751	215	62.9	1,381	1,232	766,450	3,658
2차년도 (2014. 2)	17,241	296	72.6	2,126	1,307	944,000	4,254
3차년도 (2015. 2)	16,991	330	70.6	2,170	1,456	1,059,000	5,095

제3절 일과 학습 병행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1. 창의적 인재 육성 체제 정비

(1) 지역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지원 확대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현장중심 직업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 강화’를 국정과제로 정하고 특성화고·마이스터고에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 취업역량 강화를 통한 고졸취업 활성화를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에 대한 정부, 지자체의 지원을 확대하고, 전국 특성화고에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에 기반한 교육과정을 도입하여 ‘아는 교육’에서 ‘할 줄 아는 교육’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채용연계형 기업맞춤반 확대,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등을 도입하였다.

독일·스위스의 도제교육 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도입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지역의 산업단지, 기업과 연계하여 학교에서는 이론교육과 기초실습을, 기업에서는 체계적인 현장교육훈련을 이수함으로써 기업현장이 요구하는 실무역량을 기르게 되며, 2014년 시범학교 9개교를 선정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전국 국가산업단지와 연계하여 41개교로 확대할 계획이다.

마이스터(Meister)고는 조기에 직업 기술인으로 진로를 결정한 학생이 졸업 후 우선 취업을 목표로 하여 사회에서 인정받는 마이스터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로개발을 지원하는 학교로 2008년부터 본격화 되었다. 국가전략산업 분야 및 지역전략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2010년에 제1·2차 지정 마이스터고 21교 개교를 시작, 2012년에 제3·4차 지정 7교, 2013년에 제5·6차 지정 7교, 2014년에는 제7차 지정 2교, 2015년에는 제8·9차 지정 4교가 개교하였고, 2016년에는 8차에 지정되었으나 기숙사 건축 등으로 개교 준비 중인 1교와 10차 지정 2교가 개교할 예정이다.

마이스터고의 교육과정은 산업계의 인력수요를 반영하여 산업 맞춤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산업 맞춤형 교육과정 편성을 위해 관련 산업체의 경력자들을 교육과정 개발 연구진으로 참여 시켜 국가직무능력표준, 직무분석 등에 기반한 커리큘럼 개편 작업을 진행하였다. 또한, 개방형 공모를 통해 산업체 경력자를 학교장으로 영입하고, 인근

협력 산업체에 근무하는 산학겸임교사를 활용함으로써 학교와 산업체 간 산·학 연계 교육, 교원 산업체 연수, 학생 산업체 현장 체험 등 다양한 협력을 진행하고 있으며,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등 학비를 면제하고, 저소득층 자녀와 우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적성과 소질을 가진 학생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마이스터고는 졸업 후 지속적인 경력개발이 가능하도록 군 입대 연기제도를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군 특기병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국방부 및 병무청과 협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직장 내 학위 취득이 용이하도록 사내대학, 일반대학 계약학과의 설치 및 입학요건을 완화하였으며, 취업 후 재직경력으로 진학할 수 있는 재직자특별전형 확대, 고졸 재직자 국비유학 제도 등 다양한 후진학 제도를 마련하였다. 마이스터고 제도 도입이 계기가 되어 마련된 이와 같은 제도는 현재 마이스터고 졸업생 뿐 아니라 특성화고 졸업생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어 적용되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지역 전략산업 및 국가 전략산업, FTA 등에 대비하여 다양한 분야 마이스터고를 지정함으로써 마이스터고가 고교 직업교육의 선도모델로 자리잡고, 마이스터고 성과가 특성화고에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마이스터고는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과 산학연관 협력체제 구축으로 2013년 제1기 졸업생 취업률이 92.3%, 2014년 2기 졸업생 취업률이 90.6%에 달하는 등 '취업명품학교'로서 기반을 마련하였고, 질 높은 교육으로 '좋은 학교(사교육·폭력 없는 학교, 교육의 3주체(학생·학부모·교사)가 행복한 학교)'로서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또한, 세계적 경영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McKinsey)와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에서 마이스터고를 직업교육의 성공사례로 소개하는 등 국외에서도 큰 관심을 갖는 제도가 되었다.

2. 평생직업교육체제 구축

(1) 선취업 후진학 지원시스템 구축

선취업 후진학 지원시스템 구축사업은 마이스터고·특성화고졸 재직자의 교육기회 확대 및 취업 후 경력 개발과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학업경로 구축 지원을 목적으로, 재직자를 위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재직자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학업 보완 프로그램

운영 등 대학의 “후학업”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 도입되었다.

2012년부터 시작된 본 사업은 재직자특별전형 학과 운영지원 사업(2012년 도입)과 전문·희소분야 대표대학 운영 지원 사업(2013년 도입)으로 분류되며, 다양한 후진학 지원체제 확충과 재직자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표 2-3-14 선취업 후진학 지원시스템 구축 사업 지원 유형 및 현황

사 업 명	지원대학	
	4년제	전문대
전문·희소분야 대표대학 (10개교)	경북대, 전북대, 경상대, 동명대 경희대, 계명대, 한밭대	제주한라대, 전주기전대, 서일대
재직자특별과정 학과운영지원 (12개교)	건국대, 경상대, 광주대, 동덕여대, 명지대, 중앙대, 창원대, 한경대, 한국산업기술대, 한양대, 홍익대	창원문성대

표 2-3-15 선취업 후진학 지원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경과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재직자특별전형 학과 운영지원	후진거점대학 지정·육성	예산
2012년	18개교	-	1,200
2013년	18개교	7개교	2,800
2014년	12개교	10개교	2,400
지원기간	단년도	2~4년(학제기준)	

전문·희소분야 대표대학은 전국에 흩어져 있는 소수·희소계열 재직자의 계속교육 학사운영 체제 마련을 위해 대학간 교육과정 공동운영 등 학사 유연화를 선도하고, 재직자 특별전형 운영 대학은 재직자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및 학업 보완 프로그램 운영 등 대학의 후진학 교육여건 조성하고 있다.

본 사업 지원 대학들이 지역산업 기반의 현장 중심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재직자에게 맞는 수업방법을 유연화하는 등 재직자의 특성·요구에 부합하는 학사관리 체제를 구축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원대학의 재직자 특별전형 신입생 충원율은 전체 대학 대비 현저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2-3-16 선취업 후진학 지원시스템 구축 사업 성과

(단위 : 개, 명, %)

연도	전체 대학				예산 지원 대학(재직자특별전형 학과 운영지원)			
	학교수	모집 정원	모집 인원	충원율	학교수	모집 정원	모집 인원	충원율
2010	3	265	183	69.1%	-	-	-	-
2011	7	541	349	64.5%	-	-	-	-
2012	23	1,027	375	36.5%	-	-	-	-
2013	70	4,462	1,060	23.8%	18	1,512	730	48.3%
2014	87	5,093	1,348	26.5%	18	1,509	695	46.1%
2015	88	5,932	1,547	26.1%	12	1,247	721	57.8%

2016학년도부터는 마이스터고 첫 졸업생(2013년, 3,375명) 및 일반계고 전문반 및 직업교육과정 위탁생(2013년, 22,670명)들이 재직자특별전형 지원대상이 되어 선취업자들의 후진학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바, 2015년은 이러한 고졸 재직자들의 후진학 체제를 갖추어 줄 수 있도록 대학의 체제 변화가 더욱 요구되는 시점이다.

(2) 학교기업 지원사업

학교기업(School-Based Enterprise)이란 학생과 교원의 현장실습교육과 연구에 활용하고, 산업교육기관에서 개발된 기술 등을 민간부문에 이전하는 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정학과 또는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물품의 제조·판매·가공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행하는 학교 소속 부서를 말한다.

학교기업의 설치목적은 재학생이 일반기업체에서 체험할 수 있는 산업현장체험과 실습교육기회를 학교 내 학교기업을 통하여 제공하여 실무적합형 인재를 육성함에 있다. 그리고 현장실습교육과정 수행과 구비된 인프라를 통해 생산된 재화(제품)와 용역서비스를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학교기업의 자생적 운영 기틀을 갖추고, 더 나아가 수익금을 교육재정에 재투자하는 선순환적 구조를 최종목적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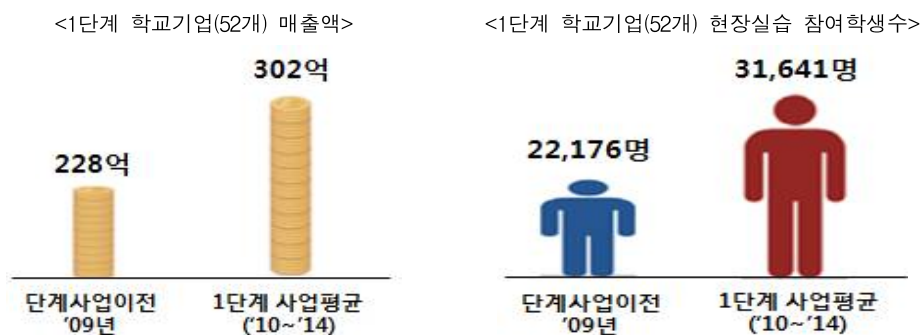
동 사업은 2003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 및 2004년 「학교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에 따라 2004년부터 시행되었고, 2010년부터 단계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2010년에는 53개의 학교기업을 신규 선정하여 지원하였고, 지원 2년 후 중간평가를 통해 하위 30%를 지원 중단하고 17개의 신규지원 학교기업을 선정하여 운영하였다. 또한 해마다 연차평가를 실시하여

“미흡” 평가를 받은 학교기업은 지원을 중단하고 있다. 2014년에는 1단계(2010년~2014년) 사업의 마지막 해로 총 46개의 학교기업에 약 2.4억원씩 총110억원을 지원하였다. 지원 대상 학교기업은 정부지원금의 30% 이상을 대응투자금으로 의무 확보하여야 한다(고등학교 제외).

2014년 기준 학교기업 수는 전체 185개로 대학 64개, 전문대학 63개, 고교 58개 학교기업이며, 제조업 61개, 서비스업 22개, 콘텐츠 24개, 기술서비스 36개, 식품제조 34개, 농임어업 8개를 운영하고 있다.

2014년 학교기업 지원사업 추진결과 단계사업 이전 학교기업 매출액은 228억원이었으나 단계사업 이후 302억원으로 약 74억원 증가하였고, 현장실습 참여학생은 단계사업 이전 22,176명에서 단계사업이후 31,641명으로 약 9,465명 증가하였다.

그림 2-3-2 학교기업 지원사업 1단계(2010~2014) 사업 성과



또한, 학교기업 지원사업의 수혜자 만족도 조사결과 학교기업의 운영 적절성 항목에서 일반기업 만족도는 70.2점이나, 학교기업 만족도는 75.3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산업체 인사 담당자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학교기업 현장실습을 이수한 직원의 만족도가 76.3점으로 기타 직원의 만족도 70.3점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학교기업 지원사업은 매출액, 현장실습 학생수 등의 양적성과 뿐만 아니라 수혜자 만족도라는 질적 성과도 거두고 있다.

(3) 지역혁신창의인력양성사업

지역혁신창의인력양성사업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소재 대학과 기업 간의 공동 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과제에 참여하는 석·박사 과정 연구원을 지역·현장 맞춤형 인재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 사업을 통해 현장 감각과 연구력이 향상된 석·박사 연구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지역혁신역량강화 여건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대학의 기술정보, 인력을 활용하여 기업의 수요기술 및 원천기술을 개발하여 지역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에 위치한 4년제 대학(이공계 학과)과 기업으로 구성된 산학협력 사업팀」으로서 연간 과제별 1억원 이상 3억원 이내의 연구개발비를 3년간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14년도에는 사업유형을 기업수요지향형창의인력양성, 지역특화창의인력양성, 글로벌창의인력양성이라는 3가지 유형으로 확대·개편하여 지원하고 있다.

사업의 주요 특징으로는 과제별 연구개발비의 40~50%를 학부 4학년생, 석·박사급 인력에 대한 인건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과제에 참여하는 기업은 정부출연금 대비 5% 이상의 대응자금(현금)을 출연한다.

2014년에는 신규과제 51건, 계속과제 105건 등 총 156개의 과제를 선정하여 276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였다.

표 2-3-17 지역혁신창의인력양성사업 연도별 지원 현황 (단위 : 억원, 개)

연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예산	205	300	250	241	240	260	247	237	237	257	276	276	3,026
과제 수	241	328	360	255	296	309	254	202	167	168	165	156	2,901
(신규/계속)		(92/236)	(55/305)	(127/128)	(137/159)	(107/202)	(66/188)	(52/150)	(59/108)	(68/100)	(42/123)	(51/105)	

사업의 주요 성과로는 2014년까지 석·박사급 연구인력 총 15,540명을 양성하고 졸업자 5,119명중 4,497명이 취업하여 취업률 87.8%이며 그 중 51.5%가 지역 내 산업체에 취업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학술활동 및 기술개발(SCI급 논문 2,911편, 특허출원과 등록 3,832건)과 산학협력(기술지도 12,572건, 현장실습 8,541명)의 사업성과를 거두고 있다.

제4절 100세 시대 지역 평생학습체제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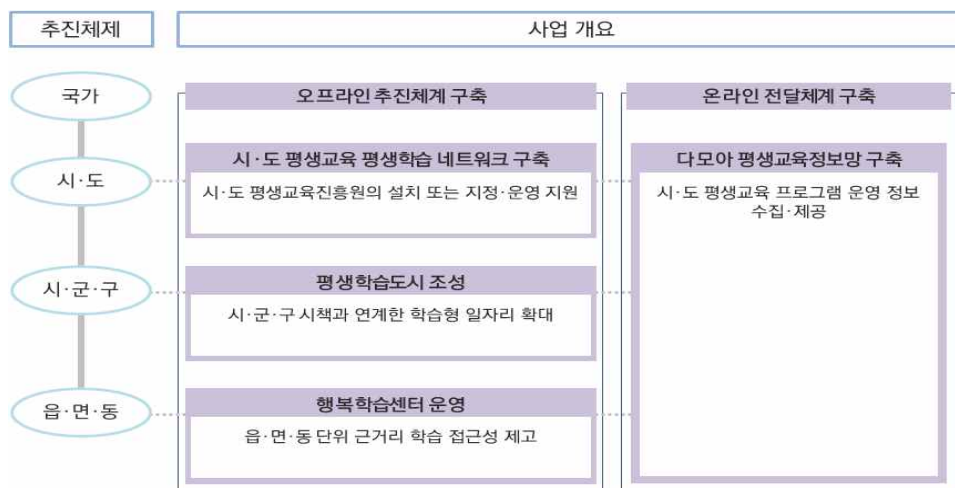
1.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1)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은 100세 시대 국가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서 국가·시·도·시·군·구·읍·면·동으로 이어지는 국가 평생교육 추진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를 반영한 생활 맞춤형 평생학습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 주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11년부터 시작된 본 사업은 시·도의 평생교육진흥원 설치운동을 지원하는 ‘시·도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사업’, 시·도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정보를 수집·제공하여 주민의 평생학습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다모아 평생교육정보망 구축 사업’, 시·군·구 단위의 평생교육 서비스를 통해 지역 단위 학습공동체 형성 및 일자리 확대를 지원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 읍·면·동 단위에서 주민과 지역사회의 평생학습 수요에 대응한 근거리 학습 접근성 제고를 위한 ‘행복학습센터 운영 사업’ 등 4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2-3-3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개요



2014년 사업을 통해 14개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이 설치·운영되었고, 3개 시·도의 다모아 평생교육정보망을 새롭게 구축하였으며, 11개의 시·군구를 신규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지원하였고 30개 시·군·구의 지역별 특성화사업을 지원하였다.

특히 2014년부터는 읍·면·동 단위 행복학습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하였다. 60개 시·군·구에서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마을 회관, 경로당 등 공공유휴시설을 활용하여 180개 행복학습센터를 운영하였으며, 주민의 학습수요를 파악하고, 학습자 지원을 위한 행복학습매니저 551명을 양성·배치하였다.

표 2-3-18 2014년 지역 평생교육기관 운영·지원 현황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운영·지원(개)			평생학습도시 조성(개)				행복학습센터 운영(개)		시·도 다모아 정보망 구축(개)
신규	계속	소계	신규	기존	일반 시·군·구	소계	시·군·구	읍·면·동	
4	10	14	11	14	5	30	60	180	신규 3

2013년부터는 ‘학습형 일자리’ 개념을 도입하여 학습자들이 교육과정 이수 후 교육 결과를 활용하여 지역사회 활동 및 소득창출로 연계될 수 있는 사업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2014년 한 해 동안 학습형 일자리 창출 등을 목적으로 지역 특성을 살린 1,371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전체 70,985명의 학습자가 참여하였으며 이 중 924명이 취업 및 창업을 통해 소득을 창출하였고, 10,014명이 재능기부, 자원봉사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표 2-3-19 2014년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비 및 프로그램 운영 현황

사업비(백만원)			운영 프로그램	학습자 (명)	사회참여자(명)		
국비	지방비	계			일자리	재능기부	계
4,801	8,136	12,937	1,371개	70,985명	924	10,014	10,938

2001년 이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도시의 성과를 보면, 평생교육 예산(2014년, 평생학습도시 853백만원, 일반도시 249백만원) 및 학습동아리수(2014년 평생학습도시 53.9개, 일반도시 19.6개), 인력 등 평생교육기반구축 성과가 일반 도시에 비해 우수하였다. 또한, 그동안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을 통해 평생교육을 받은 학습자들의

지원체제 구축 및 생애단계별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지원하였다.

표 2-3-20 대학 중심의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추진 경과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업구조	지원대학	예산
2010년	평생학습중심대학, 평생교육원활성화	20개교	2,500
2011년	대학전체체제개편, 평생교육원체제개편	24개교	4,040
2012년	선취업후진학, 4050제도약형	25개교	5,508
2013년	학위과정, 비학위전문가과정	47개교(비학위13개교)	27,508
2014년	학위과정, 비학위전문가과정	45개교(비학위10개교)	10,203
지원기간	1~3년(학제기준)		

베이비붐 세대를 포함한 중견 전문인력 등에게 적합한 일자리 친화적 자격·직업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취업·창업 연계를 도모하는 비학위 과정은 지역사회·지역경제 기반 취업형, 창업형, 해외진출형 등을 구분하여 대학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지역 산업 분야의 고용과 연결시킬 수 있는 성인 일자리 친화적 과정으로 운영 하였다.

표 2-3-21 대학 중심의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성과

(단위 : 개, 명, %, 백만원)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예산	5,508	27,508	10,233
대학 수	25	47(비학위13)	45(비학위10)
학과 개편 수	69	139	164
학위과정 학습자	1,166	3,209	2,762
비학위프로그램 수	320	538	102
비학위과정취창업률	-	37.7	67.0

앞으로는 동 사업을 통해 대학의 성인 전담 평생교육단과대학 개편을 유도하여 대학의 우수한 시설, 인력을 활용한 성인학습자의 후학습을 지원할 계획이다.

(3) 평생직업교육대학 육성사업

평생직업교육대학 육성사업은 일부 전문대학을 재직자, 퇴직자 등의 재교육과 재취업·창업을 위한 미래형 고등직업교육기관 모델로 전환 육성하고 평생직업교육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평생직업교육대학을 포함한 '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육성'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전문대학 육성방안'이 발표(2013년 10월)되었으며, 이듬해 2월 전문대학

육성방안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동 사업 공고 후 평가를 거쳐 평생직업교육대학 8개교를 최종 선정·지원하고 있다.

그림 2-3-5 특성화전문대학(평생직업교육대학) 육성사업 추진체계



사업 첫째(2014년) 평생직업교육대학 8개교는 총 459개의 비학위·학위과정을 운영하여 이수자 5,733명을 배출하였으며, 대학에서 보유하고 있는 인적·물적 인프라를 활용한 지역수요 맞춤형 특화 평생(직업)교육프로그램 운영, 진로·직업교육을 위한 교육인프라 적극 개방 등을 통해 지역 평생(직업)교육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표 2-3-22 2014년 평생직업교육대학 선정결과 및 운영 현황

권역	선정 학교 수	지원액	비학위·학위(NCS기반)교육과정 운영수	비학위·학위(NCS기반)교육과정 이수자수
강원충청권	2	6,613백만원	85	1,338
대경권	2	9,233백만원	154	1,970
동남권	2	10,564백만원	87	1,065
호남권	2	4,873백만원	133	1,360
소계	8	31,283백만원	459	5,733

또한, 동 사업으로 일자리·현장 중심(NCS기반)의 유연하고 다양한 비학위과정 평생(직업)교육으로 지역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이 양성될 것으로 기대되며, 선취업·후진학 계속교육 기회 확대로 청년층의 조기 입직을 촉진하고, 아울러 대학 교육 인프라 확충

및 제공을 통해 취약지역, 교육사각지대에 대한 복지 혜택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인문학 진흥 강화

(1) 인문학 진흥 강화(대중화·전국화)

인문학대중화사업은 인문학 성과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보급하여 대중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인문학에 대한 관심 제고를 통해 인문학 진흥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시민인문강좌사업을 통해 전국 각지에서 일반시민, 학생,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각종 인문학 단체 주관의 다양한 인문강좌 개설을 지원하고, 인문도시사업을 통한 지역 인문자산 발굴·활용으로 도시 전체에 인문체험의 장을 형성하고 해당도시를 지역인문거점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석학인문강좌를 통해 각 분야에서 학문적 성과가 높은 인문학자의 일반인 대상 강좌를 지원하였고, 유네스코와 함께 세계인문학포럼을 공동 개최함으로써 한국이 주도하는 인문학분야의 세계적 포럼을 육성하고 있다.

2014년도의 예산은 총 60억원으로 전국 13개 지역에 시민인문강좌 60개 과제를 선정 지원하였다. 선정된 시민인문강좌 중 23개 과제는 노숙자, 교도소 재소자, 시각장애우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특화 강좌를 중점 지원하였다. 인문도시의 경우 2013년에는 5개 인문도시를 지원하였으나 2014년에는 그 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17개 인문도시(경기광주, 동해, 영천, 춘천, 파주, 천안, 대구, 서울, 인천, 울산, 산청, 공주, 광주, 제주, 수원, 여주, 전주)를 지원하였다.

표 2-3-23 시민인문강좌 및 인문도시 연도별 지원 현황

(단위 : 개)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시민인문강좌	27	22	19	19	20	55	52	60	274
인문도시	-	-	-	-	-	2	5	17	24
계	27	22	19	19	20	57	57	77	298

시민인문강좌에 참여한 전국 수강생은 2013년 49,114명에서 2014년 76,169명으로 대폭 증가하였고 석학인문강좌의 경우, ‘나누는 인문학, 통하는 인문학’을 슬로건으로

문·사·철 예술 등 다양한 주제들에 대한 석학의 연속강좌(36개 정규강좌, 매주 토요일, 서초구민회관)와 비수도권 시민을 위한 인문공감콘서트(8회) 개최를 통해 21,500여명의 시민이 고품격 인문강좌를 통해 인문학의 향훈을 만끽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특히, 10월말 마지막 주를 인문주간(Humanities Week)로 지정하여 전국 인문도시 및 시민인문강좌기관 등에서 강좌, 체험 등 다양한 인문학축제를 개최하고 더불어 인문주간 기간에 제3회 세계인문학포럼을 개최하여 전국에서 7만 여명의 시민이 인문주간 행사에 참여하였다.

2014년 인문학대중화사업 총 참여자수는 15만 6천명에 달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총 72만 여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제4장 지역 문화 융성, 생태 복원

제1절 지역 문화역량 강화 및 특성화 발전 지원

1. 지역문화체계 특화지역 조성

(1) 지역문화진흥체계 마련

지역 간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시행(2014년 4월 27일)됨에 따라 향후 5년간 지역문화진흥의 방향을 제시할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이를 기반으로 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행계획을 마련하게 된다.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에는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기본방향, 지역문화의 균형 발전과 특성화에 관한 사항, 생활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지역문화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문화도시 육성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내용이 반영된다.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을 통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역문화진흥 사업 추진이 가능해지고, 특히 사업의 환류 및 협력 체계가 마련되어 지역현장에 기반을 두고 사업을 기획, 추진할 수 있게 됨으로써, 지역문화가 더욱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2)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은 지역의 특화된 문화자원을 창조적으로 발굴, 활용하여 지역의 대표브랜드로 육성하고 국민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지역 주민의 참여를 통한 상향식 지역문화정책으로서 지역의 역사·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하여 문화도시·문화마을 자체가 브랜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은 지특회계 사업으로 2014년부터 새로이 추진한 사업으로 문화도시 조성의 경우 매년 3억원씩 5년간, 문화마을의 경우 매년 0.8억원씩 3년간 국비를 지원하고 있다. 2014년 남원 문화도시 조성, 공주(상신마을) 및 부여(규암마을) 문화마을 조성 등 문화도시 1개소, 문화마을 2개소를 시작으로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표 2-4-1 2014년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지원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국비/지방비)
계	3개 지역		
문화도시 (1개소)	남원 문화도시 조성	2014년~2018년	37.5억(15억/22.5억)
문화마을 (2개소)	공주 상신리 전통문화마을 조성	2014년~2016년	3억(1.2억/1.8억)
	부여 규암 근대문화거리 조성	2014년~2016년	7.5억(3억/4.5억)

2. 지역 고유자원의 재발견 및 재창조를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

(1) 지방문화산업 기반 조성

1) 지역 문화산업연구센터(CRC) 지원

지역 문화산업연구센터(CRC) 지원사업은 전국 14개 지방 문화산업지원기관(또는 문화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해당지역 산·학·연으로 이루어진 구성체가 연구개발(R&D)을 통하여 지역문화에 기반한 특화상품을 기획·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문화에 기반한 특화상품은 문화상품 시장 형성을 가능하게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져오며, 기업체·대학·연구소 간 협력체계 구축과 대학의 인력과 지역 문화산업 핵심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지역 문화산업 연구개발(R&D) 역량을 강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한다.

2005년부터 연구개발 과제 지원을 시작하여, 2014년까지 총 80개 과제를 지원하였으며, 2014년에는 인천, 전남, 제주 등 총 3개 지역 과제를 지원하였다. 과제당 지원규모는 3억원 이내(총사업비의 50% 이내)이며, 2014년 국비 지원규모는 7억원이다.

2) 대구 디자인패션산업 육성지원

대구 디자인패션산업 육성지원 사업은 대구지역의 특화된 섬유패션업계에 고부가가치 디자인 경쟁력 향상과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을 통해 지역 브랜드 경쟁력 강화 및 매출 상승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2014년에는 패션 완제품 업체 20개를 선정 및 지원하여 글로벌 마케팅 사업을 촉진하였고, 이를 통해 텍스타일 디자인 170점, 소재/완제품 565점의 상품을 개발하였으며, ISPO Beijing, WHO'S Next 등 업체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전문 박람회 참가 지원을 통한 개발품의 해외 수주액은 701,420 달러에 달한다.

지역 패션 브랜드와 온라인 유통의 플랫폼 구축을 목적으로 새로운 패션상품 및 문화 융합 콘텐츠 개발을 위한 총 2팀의 상품제작을 지원하고, 참신하고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대학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를 대상으로 10개 팀을 선정하여 지역의 인적 자원을 배출하는 창업 시스템을 확립하였다. 또한, 패션문화캠프를 통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패션체험교육을 하는 등 고부가가치 시장 창출과 잠재적 패션인프라 확충에 힘썼다.

아울러, 지역의 차세대 디자인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업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지재권등록 45건과 총 15명의 신진 텍스타일 디자이너를 양성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패션디자인 브랜드의 판로 개척 및 맞춤형 마케팅 지원을 위한 크리에이티브 디자인 창작 스튜디오 운영을 통해, 입주 디자이너 16명의 디자인 및 마케팅을 지원하는 등 차세대 패션디자인 인력양성 및 시장판로 개척에 힘썼다.

나아가 디자인패션분야의 1인 창조기업 중 창의성이 돋보이는 우수한 아이디어를 10개 선정하여 사업화 및 상품화를 지원하였으며, 국내외 시장진출을 통해 창작개념의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였다.

3) 대구출판산업지원센터 건립

대구출판산업지원센터는 대구출판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구출판산업단지 활성화 및 지방출판산업의 주요 거점 육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 대구출판산업지원센터는 대구 달서구 출판산업단지내에 위치하며 부

지 6,040㎡, 건축연면적 8,600㎡로서 지하 1층, 지상6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동 센터는 2012년부터 추진하여 2016년에 완공할 예정이며 국비 88억원, 지방비 137.1억원(용지비 49.1억원 포함) 등 총 225.1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계획이다. 주요 시설로는 대구 출판산업단지의 업무 지원시설과, 기업입주시설, 생산지원시설로 구분되며, 세부적으로는 창작 레지던스, 전문 창작자 커뮤니티룸, 공동장비센터, 공동물류창고, 교육실, 지식정보지원실, 전자출판공동 제작공간, 회의실, 비즈니스 상담실 등이 들어서게 된다.

대구는 센터 용지비 49.1억원을 확보, 2013년말에 용지 구입을 완료하였으며, 2013년에 건축설계를 공모하여 2014년 6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다.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가 국고 45억원을 지원하고 대구시는 자체예산 45억원을 확보하여 2014년 12월에 센터 건설 시공업체를 선정 발주하였다. 2014년 12월부터 2016년까지 센터를 건립하고 대구출판산업단지 입주업체의 출판제작을 지원할 공동장비 구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표 2-4-2 대구출판산업지원센터 주요시설

구 분	시 설 배 치
생산지원시설	공동장비센터, 공동물류창고, 교육실(컴퓨터실, 강의실), POD센터, 지식정보지원실, 전자출판공동제작공간 및 아카데미
기업입주시설	출판콘텐츠업체 사무실, 1인 창조기업 공동사무실, 창작 레지던스, 전문창작자 커뮤니티 룸, 휴게실
업무지원시설	센터 사무실, 유관기관 사무실, 소회의실, 대회의실, 비즈니스 상담실
기 타 시 설	은행, 편의점, 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대구출판산업지원센터가 건립되는 대구출판산업단지는 영남권 출판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조성되는 지방산업단지로 총면적은 245,413㎡(74천평)으로 1,248억원의 예산으로 조성되고 있다. 출판업, 인쇄업, 영상·정보서비스업이 주요 입주업종이며, 대구시에서 추진하고 있다.

대구는 2010년에 대구출판산업단지 계획을 승인, 고시하였으며, 2012년 12월에 단지 기반조성공사를 완료하였다. 2014년 6월에 현재 93개 산업시설 필지를 93개 업체에 분양을 완료하였고 2015년 5월 현재 81개사가 입주완료하고 12개사가 건축 공사 중이다. 대구출판산업 단지 조성과 대구출판산업지원센터 건립으로 취약한 지방

출판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이며, 대구지역의 구미공단과 연계하여 전자출판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4) 지역 영상미디어센터 건립

영상문화 향유권 제고 및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하여 2005년부터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설립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2014년까지 19개 지역을 선정하여 지역영상미디어센터 건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총 국고지원액은 160억원에 이른다.

지역영상미디어센터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지역 미디어에 대한 이해, 미디어 활용 능력 제고와 영상 향유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창작 지원사업, 영상물 상영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표 2-4-3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전국 설립 현황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4년
지역	경남 김해	제주	대구	인천 남구	충남 천안	충북 제천	경북 안동	강원 원주	전북 익산	경기 부천	강원 강릉	경기 고양	전남 순천	경기 성남	경기 수원
개관일	'05.11	'06.7	'07.4	'07.9	'08.9	'08.11	'08.12	'09.4	'09.7	'10.2	'10.4	'11.4	'11.11	'12.12	'14.3

5) 국제영화제 지원

국제영화제 지원 사업은 국제경쟁력 있는 국제영화제의 육성을 통해 우리나라 영화 문화 및 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1998년부터 추진되어 왔으며, 2014년에는 부산국제영화제, 전주국제영화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제천국제음악영화제, DMZ 국제다큐영화제, 서울국제여성영화제 및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 등 총 7개의 국제영화제를 지원하였다. 이들 7개 영화제는 부분 경쟁을 도입한 비경쟁 영화제로 각기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 중 부산, 전주, 부천 그리고 제천 영화제는 지역영상산업의 성장을 고려한 지자체 주최 행사이다.

표 2-4-4 2014년 국제영화제 지원현황

영화제명	개최내역		사업추진		예산(억원)			
	기간	장소	상영편수	참가인원	계	영발기금	지방비	기타
부산국제	2014.10.2.~10.12	부산	79국 312편	226,473	123.5	14.6	60.7	48.2
전주국제	2014.5.1.~5.10	전주	40국 180편	68,477	36	6.1	21.7	8.2
서울국제여성	2014.5.29.~6.5	서울	30국 100편	19,846	14.34	3.4	3.8	7.14
부천국제판타스틱	2014.7.17.~7.27	부천	48국 210편	59,241	43.5	5.5	23.8	14.2
제천국제음악	2014.8.14.~8.19	제천	31국 87편	28,915	23.5	2.9	14.3	6.3
서울국제청소년	2014.8.21.~8.28	서울	41국 142편	19,369	12.6	2.0	4.0	6.6
DMZ국제다큐	2014.9.17.~9.23	파주, 고양	35국 110편	12,207	16.35	0.5	12.2	3.65
계			1,052편	434,528	269.79	35	140.5	94.29

(2)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문화 재생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로 인해 폐기 또는 방치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유휴공간을 문화예술 창작 및 체험 등을 위한 문화예술 융복합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사업으로 공동체 구성원과 함께 노후 산업단지 및 폐 산업시설에 문화로 새로운 활력과 활기를 불어넣어 지역발전 및 사회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4년 신규사업인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은 12개 사업에 222억원(국비 111억원, 지방비 111억원)을 투입하였다.

동 사업은 2014년부터 새로이 추진한 사업으로 지역의 산업단지 내 유휴시설, 개화기 근대건축물 및 폐광, 폐소각장 등 용도 폐기된 장소를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활용하는 사업에 지원하였으며 2015년부터는 일반회계에서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이관되어 매년 200여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2014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지자체 및 지역주민, 각 산업단지, 예술단체, 관광산업 등 분야별 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 연계와 협업을 유도하는 등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하였으며, 장소가치를 기반으로 삶의 현장에서 재창조되는 새로운 문화지대 안에서 직접 문화를 실현하고 함께 체감하는 과정을 통해 문화융성의 핵심가치를 인식하고 효과를 발현함에 기여하였다.

표 2-4-5 2014년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업 지 역	사 업 명	사업비(국비)
	계	12개 사업	22,200 (11,100)
산업 단지 (6개소)	시화반월(안산시)	안산스마트허브 문화재생	1,312 (656)
	소촌농공(광주광역시)	예술의 새로운영토 소촌 아트팩토리	2,000 (1,000)
	첨단문화산업(청주시)	도시첨단문화 산업단지 재생	2,000 (1,000)
	영월농공(영월군)	영월 갤러리 온 팩토리 조성	1,000 (500)
	창원국가(경상남도)	문화대장간 '풀무'	2,000 (1,000)
	시화반월(시흥시)	예술창작소 「創·工」	1,186 (593)
폐산업 시설 (4개소)	경기 광명시	광명 문화공간 조성(폐 자원회수시설)	2,000 (1,000)
	경기 부천시	부천문화콘텐츠플랫폼(폐 소각장)	3,990 (1,995)
	전남 담양군	예술로 "남송창고" 재창조(폐 양곡저장창고)	1,212 (606)
	전남 나주시	나주 나비(羅飛)센터(구, 잠사)	4,900 (2,450)
콘텐츠 지원	인천시	인천아트플랫폼	300 (150)
	강원 정선군	삼탄아트마인	300 (150)

제2절 맞춤형 문화서비스를 통한 문화격차 해소

1. 생활문화 및 공동체 지원

(1)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2009년부터 시행된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문화소외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의 역사·사회적 현상과 문제에 대한 문화예술적 접근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문화예술 창작 활동의 주체가 되어 개인의 삶을 풍부히 하고 공동체 문화를 회복하여 지역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사업으로서, 이를 통해 국민들의 문화향수권을 신장하고 지역의 주체적 문화역량 및 공동체 역량을 강화하고자 추진하였다. 기초생활권 내 임대아파트 단지, 서민 단독주택 밀집지역, 농산어촌 등 문화적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2009년에는 18개 지역을, 2010년에는 19개 지역, 2011년에는 25개 지역, 2012년에는 24개 지역, 2013년에는 27개 지역, 2014년에는 31개 지역을 선발, 각 12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총 3만 8천여 명의 주민들이 본 사업을 통해 다양한 공동체 문화 활동에 참여하였다.

(2)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사업

2014년 처음 시행된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 사업은 지역의 유휴시설(폐교, 폐목욕탕 등) 및 기존 문화시설의 일부를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다. 생활문화센터로 재탄생된 공간은 지역 생활문화동호회의 연습·발표 공간이자 지역주민의 자유로운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된다. 2014년 지자체 대상 공모를 통해 13개 시·도 35개 시설을 선정, 총 108억원의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향후에도 매년 30개 내외 시설을 생활문화센터로 선정,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3) 체육진흥 인프라 확충

1) 체육진흥시설 지원(생활체육, 지방체육, 노인건강)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쾌적한 체육활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녹지공간 속에 각종 생활체육시설을 집중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4년에는 25개소에 118.5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15년에는 17개소에 97.9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노인건강체육시설 조성사업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여 노인들의 건강 및 여가선용을 위해 게이트볼장, 파크골프장, 휴게공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4년에도 6개소에 17.6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15년에도 5개소에 11.6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방체육시설 지원사업은 지방체육 진흥 및 국내외 경기대회 개최 등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주민의 체육활동 공간을 확충하기 위하여 운동장, 체육관, 종목별 체육시설 등 각종 체육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4년에는 157개소에 912.7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15년에는 161개소에 91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운동장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과 레저스포츠시설 지원사업은 2013년까지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추진해오다 2014년부터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으로 이관되었다. 운동장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은 초·중·고등학교 및 지자체가 보유한 운동장에 인조잔디·천연잔디·마사토 구장 및 우레탄 트랙, 야간 조명시설 등의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에 74개소 276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레저스포츠시설 지원사업은 서바이벌 게임장, 래프팅장 등 레저스포츠 활동을 즐기기 위해 필요한 시설의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에 6개소 9.7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2) 전국체전시설 건립 지원

전국체전시설 건립 사업은 전국체전을 개최하는 시·도의 미 보유 시설 및 규격 미달 경기장 건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4년에는 36개소(제주 36개소, 강원 15개소, 충남 3개소)에 140.4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15년에는 26개소(강원 22개소, 충남 3개소, 충북 1개소)에 193.6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3)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사업은 20년 이상 경과된 전문체육시설(실내 500석, 실외 1,000석 이상)의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4년에는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10년 이상 경과된 생활·전문체육시설의 개·보수, 체육

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대한 영향을 끼치는 시설의 긴급한 개·보수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으며, 2015년에는 87개소 19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2. 지역주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1)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1)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사업은 선진국 수준의 공공도서관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18년까지 1,100개의 공공도서관을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2014년 말 기준으로 전국 공공도서관 수는 930개관으로 인구 5.5만명당 1관 수준이다. 2014년 개관에 592억원 지원한 것을 포함하여 지난 1991년부터 2014년까지 총 840개관에 총 5,213억원을 지원하였다.

특히 행정구역상 읍면지역에 건립하는 도서관의 건립비에 대해서는 80%, 최대 16억원까지 특별 지원(일반 공공도서관은 40%)하여 지역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정보소외지역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공도서관 건립의 내실을 기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도서관 건립·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규 건립 예정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설계·시공·운영 전반에 관한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2014년에는 45개관에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총 165개관에 컨설팅 지원하여 전문 인력이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하여 지자체 담당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 공립박물관 건립 지원

1996년부터 문화기반시설 확충계획에 따라 지원하기 시작한 공립박물관 건립 지원 사업은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과 지역의 문화유산을 보존, 활용하기 위한 인프라 확충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2014년까지 총 132개관, 2,342억원을 지원하였고, 2015년에도 95억원을 투입하여 서울시 등 10개 시·도에, 부산박물관 등 11개관(계속 3개관, 신규 8개관) 건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3) 공립미술관 건립 지원

미술인구의 저변 확대와 미술에 대한 감상기회 확대를 통한 국민들의 문화 향수권 신장 및 미술문화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1999년부터 공립미술관 건립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3년까지 총 761억원을 투입해 35개소의 미술관 건립, 개보수를 지원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93억원을 투입하여 12개소(부산 3개소, 충북 1개소, 충남 1개소, 전북 4개소, 전남 2개소, 제주 1개소)에 미술관 건립을 추진하였다.

4) 문예회관 건립 지원

문화예술회관 건립지원 사업은 1997년 이후 지역 간 균형 있는 문화공간 확충을 통해 지역주민의 문화 향수권 신장을 도모하고자 1지자체당 1개관 건립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노후화된 문화예술회관이 늘어남에 따라 개·보수도 2005년부터 지원하고 있다(건립 및 개보수 1관당 20억원 이내 지원). 2014년에 17개관 109억원을 지원하였고(누적 지원액 3,309억원), 2015년에는 17개관에 16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5) 지방문화원 시설비 지원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지방문화원의 낙후된 시설 리모델링 및 신축사업을 1989년부터 지원하고 있다. 2012년도에는 7개 시·도 10개문화원(계속 2개, 신규 8개), 2013년도에는 5개 시·도 7개문화원(계속 4개, 신규 3개), 2014년도에는 5개 시·도 8개문화원(계속 2개, 신규 6개)을 지원하였다. 지역사회 내에서 지역문화 거점 역할을 하고 있는 지방문화원이 지역주민 문화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시설 건립지원이 필요하며 2015년도에는 7개 시·도 9개 문화원(계속 6개, 신규 3개)을 지원할 계획이다.

(2)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주민생활공간 가까운 곳에 위치해 접근성 및 주민친화성이 높은 작은도서관은 지식 정보 습득뿐 아니라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역문화강좌를 통한 문화 향유 및 마을 현안에 대한 대화와 토론의 장소로 이용되어 지역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키는 문화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다.

작은도서관은 주민센터, 복지관 등의 유휴 공공시설, 노후한 기존 공·사립문고 등의 리모델링으로 2004년부터 2014년 말까지 총 676개관(정부지원 556개관, 기업후원 45개관, 국외 75개관)이 조성되었다.

2014년에는 20억원 예산으로 36개관의 작은도서관 조성을 지원하였다. 기업 및 민간후원으로 조성되는 '고맙습니다 작은 도서관'은 국민은행이 10억원을 후원하여 서울 양천구 등 5개관이 리모델링으로 조성 지원되었으며, 강원도 영월군에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이 1개소가 신축되었다.

또한 전문인력 부족이라는 작은도서관 운영의 가장 큰 애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작은도서관에 총 303명 순회사서를 지원하였다. 2014년에는 76개 공공도서관에 순회사서 1명씩을 파견, 작은도서관 304개관의 자료정리,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하여 작은도서관 운영 내실화 및 이용서비스 제고에 기여하였다.

(3)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사업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사업은 전국 17개 시·도 및 231개 시·군·구에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참여 동기 부여 및 체계적인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3년에는 2,230명을 배치하여 275억원을 지원하였고, 2014년에는 2,480명을 배치하여 305억원을 지원 중이다.

(4) 종합형 스포츠클럽 육성

폐쇄적인 동호인 클럽의 구조 개선과 체육 시설·프로그램·지도자 연계를 통한 생활체육의 효율성 및 공공체육시설 활용도 제고를 위해 2013년부터 공모를 통해 30개

종합형 스포츠클럽을 육성지원하고 있으며, 학교-생활-전문체육 간의 연계 강화, 은퇴 선수 및 지도자 일자리 창출 등 안정적인 생활체육 선순환 생태계 마련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표 2-4-6 종합형 스포츠클럽 공모요건

구 분	공모 요건
자 격	비영리법인(지자체 및 영리법인 제외)
운영종목	4종목 이상(올림픽 종목 2종목, 생활체육 종목 2종목) 및 시설
체육시설	4종목 이상 운영 시설 확보(소유, 위탁운영, 임대 등)
회원 확보	1차년 100명이상 → 2년차 500명이상 → 3년차 700명이상

그림 2-4-1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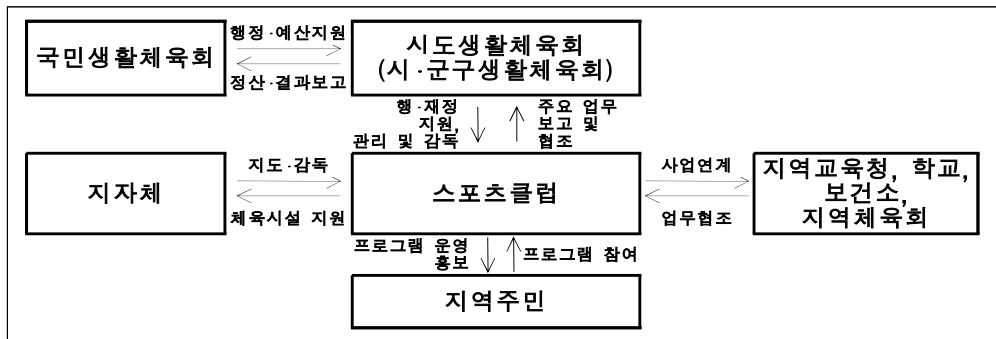


표 2-4-7 클럽운영과정

①	②	③	④	⑤
클럽 설립 (회원 모집)	클럽 시스템 구축 (시설·지도자·종목)	안정적인 재정 확보 (회비·지자체 매칭)	종목별 활동 (강습과 리그 운영)	커뮤니티 활동 (지역사회 기여)
·회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설립 ·비영리사단법인 형태로 설립 (총회 개최-이사회/운영위 구성)	·자체적인 체육 시설 확보 ·은퇴선수 중심의 지도자 채용 ·4종목 이상의 다종목 프로그램 운영	·클럽 회비 중심으로 기본 수익 구조 창출 ·지자체 지원금 확보 (공공성 유지 조건) ·기타 수익사업 전개	·종목별로 다 연령/다 세대 프로그램 운영 ·초보자 강습과 레슨, 대회·리그 참가 ·학교 연계 및 엘리트 선수 배출	·가족 구성원 참여를 통한 세대 통합 ·소외계층 지원을 통한 공공성 확보 ·지역주민 커뮤니티 프로그램으로 지역 사회에 기여

(5) 생활체육 광장 조성

1993년부터 아침 또는 저녁 시간대 지역주민 생활체육 모임 현장에 전문 지도자를 배치하여 마을단위 생활체육 참여환경 제공으로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그림 2-4-2 사업추진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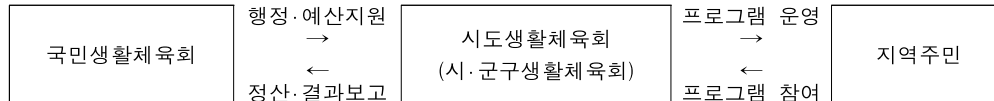


표 2-4-8 운영장소 : 전국 434개소

지역	개소	지역	개소	지역	개소
서울	35	울산	14	전북	31
부산	32	세종	2	전남	36
대구	35	경기	30	경북	30
인천	20	강원	30	경남	37
광주	21	충북	25	제주	10
대전	22	충남	24	계	434

* 행정구역 시·군·구 단위에 1개소 이상 운영

표 2-4-9 연도별 실적

구분	1993년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개소	250	302	256	381	404	402	500	500	500	500	500
횟수	62,788	109,165	95,285	146,737	162,009	148,412	149,012	145,148	140,016	142,816	137,074
인원	2,958,738	4,639,698	3,848,978	6,163,892	6,614,786	5,629,935	7,008,138	5,500,018	6,024,524	5,370,996	4,703,464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개소	500	500	500	500	520	520	520	518	434	434	434
횟수	140,892	142,672	157,322	166,180	88,609	86,363	74,924	56,644	60,981	60,971	59,774
인원	4,943,438	5,029,846	5,452,284	5,955,670	4,818,484	4,750,232	2,822,325	1,803,503	1,857,131	1,805,937	1,721,924

3. 문화소의 및 취약지역 문화접근성 향상

(1) 작은영화관 조성 지원

작은영화관 조성 지원 사업은 지역민의 영화향유권 강화 및 지역 간 영상문화 격차 해소를 위하여 극장 부재 지역에 대도시와 동시에 최신 영화를 볼 수 있는 소규모 상설 상영관 설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4년에는 9개 지역(인천 강화, 강원 삼척, 평창, 철원, 충남 예산, 서천, 경남 남해, 전남 장흥, 고흥)에 33억원을 지원하였다.

(2) 소외계층문화순회 사업

소외계층 문화순회 사업은 문화 인프라 시설이 부재한 문화소외지역을 찾아가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 및 참여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문화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 향유권 신장 및 문화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2014년에 100억원의 예산지원으로 287개 예술단체가 전국 2,001회 순회공연을 펼쳐 588,994명이 관람하였으며, 2015년에는 100억원의 예산으로 200여개 예술단체가 다채로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가지고 문화·경제적 소외계층을 찾아갈 예정이다.

제3절 지역 관광산업 육성

1.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역관광거점 육성

(1) 산업관광육성

산업관광 인프라 조성 및 산업관광 수용태세 개선, 산업관광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지자체 공모를 통해 2012년부터 산업관광 육성 사업을 선정하여 지원 중에 있다.

2012년 6개 시범사업 추진 이후, 매년 4개소~6개소 내의 사업을 선정 하여 지원 중이며, 2012년~2015년간 지원되는 사업은 20개 지자체, 21개 사업으로, 2012년 15억원 지원 이후 매년 20억원 내외의 예산 지원 중이다. 또한, 지자체 공모사업과 별개로 한국관광공사를 통해 산업관광 상품 개발 및 홍보마케팅 강화 등 산업관광 기반 및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표 2-4-10 산업관광 육성 사업 지원 규모

(단위 : 백만원)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지자체 공모사업	선정사업수	6개 사업	5개 사업	6개 사업	4개 사업
	지원 예산	1,000	1,720	1,320	1,320
산업관광 기반조성 (한국관광공사)		400	280	260	260
계		1,400	2,000	1,580	1,580

(2) 올해의 관광도시 선정, 육성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은 광역시·도 단위 「지역방문의 해(2004년~2013년)」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경쟁력 있는 사업 발굴·추진 필요에 따라, 관광의 잠재성이 큰 중소도시를 올해의 관광도시로 선정, 콘텐츠·상품개발, 컨설팅 등 체계적 지원을 통해 매력적인 관광목적지로 육성하기 위해 2014년도부터 시작되었다. 공모를 통해 매년 3개 도시를 지정 3년간 최대 25억원(관광기금 50:50 매칭)을 체계적

으로 지원하여 내실있는 행사 실행을 유도하고 있다.

지원 분야로는 i)숙박 등 환경·시설개선, 유휴공간 재생·재활용, 정보 및 안내체계 개선 등 환경개선, ii)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가진 자원의 활용과 상품화, iii)관광 관련 인적자원의 효과적인 네트워킹 및 활용, 전문인력 양성 등 주민·지자체 역량강화, iv) 이벤트·축제 등 문화관광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마케팅 등이다. 2014년도에 제천시, 무주군, 통영시를 '2016 올해의 관광도시'로 선정하였으며, 향후 3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3) 크루즈 관광 활성화 지원

크루즈 산업은 해운·조선·관광 등 연관 산업이 집적화된 대표적인 융·복합 산업으로 2014년 우리나라를 방문한 크루즈 관광객(105만명)이 소비 지출한 금액으로만 추정하더라도 약 1조 2천억원(1인 평균 117만원)의 경제효과가 있는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크루즈는 당초 미국·유럽 등 실버세대의 레저문화로서 시작된 것이 이제는 남녀노소, 세대 구분 없이 즐길 수 있는 여유와 낭만이 있는 품격 있는 해양문화로 성장(2020년까지 연평균 4%이상 성장 예상/세계크루즈협회)하고 있다.

최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크루즈 시장은 2013년 크루즈 관광객 137만명(2012년 대비 6.5% ↑), 시장규모 2조원(운임기준)으로 2020년까지 700만명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맥킨지)하고 있으며, 국내시장 또한 크루즈 관광객(기항지기준)이 2014년 105만명(2013년 대비 31.3% ↑), 2020년까지 300만명 이상 급성장이 예측된다.

우리나라는 한·중·일 크루즈 항로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고, 크루즈 산업의 기본 여건인 동·서·남해 연안에 인접한 도시와 항만인프라, 풍부한 관광자원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크루즈 관광객은 5만명 수준에 불과하며, 크루즈 전용부두·터미널 등 기반시설, 전문인력, 건조기술 등이 부족한 실정이다.

2013년 7월 해수부·문체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크루즈 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고, 2015년 2월 '크루즈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적크루즈 선사 육성, 외국 크루즈 관광객 유치 확대 등 크루즈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먼저 외국 크루즈 관광객 확대를 위하여 2015년 5월 상해를 방문하여 국내 기항지 매력 홍보 등 투자유치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부산·인천·제주·속초에 2016년까지 전용부두 5선석을 추가 확보하는 등 크루즈 관광객 편의를 위한 기반시설을 적기에 제공할 계획이다.

그리고, 국적 크루즈 선사 육성을 위하여 시범운항 등을 통해 국내 크루즈 인구의 저변을 확대하고, 한국·러시아·일본을 잇는 환동해권 新 크루즈 항로와 한류와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등 한국형 크루즈 모델을 제공할 계획이며, 특히, 크루즈선 매입 자금 지원 및 크루즈선에 대한 톤세제 적용 등 국적 선사에 대한 금융과 세제 지원방안 마련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크루즈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통하여 2019년까지 크루즈 전문 인력 5백명을 양성하고, 모항으로 운영될 주요 항만에 선용품 유통센터를 건립하는 등 크루즈 연관 산업 육성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위 활성화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서는 외국인 승무원 비자 발급 개선 및 출입국 심사 간소화(법무부), 선박 매입지원 지원(문체부), 외국 크루즈선 기항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지자체) 등 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한 관계부처 등과의 협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정부는 크루즈 산업 활성화 사업 추진으로 2020년까지 크루즈 관광객 300만명을 달성하여, 명실상부한 크루즈 강국으로 도약하고, 해양분야의 신성장 동력 산업이자 국가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중추 산업으로 성장시켜 나갈 계획이다.

(4) 동북아 해양관광레저특구 조성사업

동 사업은 2012여수세계박람회(2012년 5월 12일~8월 12일, 93일간) 이후 ‘여수박람회장을 해양관광레저특구로 지정하고, 해양관광산업의 집적단지로 조성하여 국제해양관광 중심지로 발전시키겠다’는 현 정부의 전남지역 공약사업이다.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수박람회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12여수세계박람회(이하 “박람회”라 한다.)를 계기로 기 구축된 SOC와 박람회가 남긴 핵심자산(한국관, Big-0, Sky-Tower, 아쿠아리움 등)을 재활용하고, 박람회장 내 부지·시설의 매각·임대에 의한 민간투자 유치

를 통해 박람회장을 동북아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해양관광리조트로 조성하여 남해안 해양관광의 중심지로 육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동 사업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여수박람회법 제14조에 따라 '2012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의 정책·예산 지원하에 여수박람회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이 동 사업의 실행을 전담하고 있다.

동 사업의 대상지는 여수박람회법 제15조(해양박람회 특구의 지정)에 따라 지정된 해양박람회특구(약 65만㎡)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박람회장 및 주변 입지를 고려하여 크게 엔터테인먼트 리조트구역, 복합콘텐츠구역, 해양레저구역 등 3개 구역으로 구분하고, 휴양시설과 상업시설 등을 유치하여 해양관광리조트로 조성하는 것이 기본 구상이다.

먼저 동북아해양관광레저특구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계획을 수립(2012년 9월)한데 이어 여수박람회법을 제정(2012년 12월)하여 해양박람회특구의 지정(2013년 1월)과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을 설립(2013년 2월)하고,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한 박람회 사후활용 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사업추진 체계를 구축하였다.

이어서 여수박람회 폐막 이후 폐장상태인 박람회장을 새로이 단장하고, Big-0, Sky-Tower 등 특화시설 콘텐츠를 보강하여 2013년 4월 10일 시민들에게 재개장함으로써 박람회장을 시민공원화하였으며, 박람회 기념관 조성(2014년 5월)과 한국관 및 국제관 컨벤션시설을 활용한 국내외 회의·행사유치(연중) 등을 통해 박람회장 활성화에 주력한 결과 2013년도에는 박람회장 방문객 190만명·운영수입 25억원을, 2014년도에는 방문객 223만명·운영수입 48억원을 달성하여 박람회장 활성화 가능성을 확인하는 등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었다.

한편, 민간 참여를 통해 박람회장을 동북아해양관광레저특구로 조성하고자 세차례(2012년 9월~11월, 2013년 7월~9월, 2014년 6월~9월)에 걸쳐 민간제안사업을 공모하였으나 사업입지 여건의 불리, 부지·시설 매입에 따른 초기 투자 부담,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 등을 이유로 유찰되거나 아예 응찰자가 없는 등 민간투자 유치에 실패하였다.

박람회장을 세계적인 해양관광리조트로 조성하여 남해안 해양관광의 중심지로 육성

하기 위해서는 박람회장의 선 활성화와 함께 민간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현행 매각 중심의 민간투자유치 방식을 매각·장기임대 병행방식으로 변경하여 민간투자를 유인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해수부·기재부·여수시 공동으로 추진한 정책연구용역(2014년 7월~2015년 1월) 결과를 토대로 '2012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계획' 변경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2. 창조적 지역문화관광 활성화

(1) 문화생태탐방로 프로젝트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 탐방로사업은 지역의 역사문화 및 생태자원을 활용해 도보여행길을 조성하고 선형으로 네트워크화 하는 사업이다. 특히 본 사업은 지역별로 산재해 있는 탐방로를 해파랑길, 강변 탐방로, 삼남대로 옛길 등과 상호 광역적으로 연계해 도보여행의 매력도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문화생태 탐방로 조성사업은 체류형·체험형 관광 상품으로 단순 관람 위주의 관광문화에서 건전한 체험형 관광문화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2010년에는 '땅끝길(전남 해남)', '새재넘어 소조령길(충북 괴산, 충주, 경북 문경)', '대관령 너머길(강원 강릉, 평창)', '백의종군로(경남 산청, 하동)', '토성산성 어울길(경기 광주, 하남시, 서울 송파)', '쇠돌레평화누리길(강원 철원)', '토영 이야~길(경남 통영)', '남해 바래길(경남 남해)', '유교문화길(경북 안동)', '풍류락도 영산가람길(전남 나주)', '청산여수(靑山麗水)길(전남 완도)', '증도 모실길(전남 신안)' 등 12개소를 선정·지원하였으며, 2011년에는 '아차산 고구려 역사길(서울 광진구)', '사비길(충남 부여)', '서울성곽길(서울 종로구, 중구, 성북구, 서대문구)', '금강 하구길(전북 군산)', '갈재길(전남 장성, 전북 정읍)', '섬진강길(전북 임실, 순창, 전남 곡성, 구례)', '동강길(강원 정선, 영월)', '두물머리길(경기 양평, 남양주, 구리)', '승부역 가는 길(경북 봉화)', '담양 수목길(전남 담양)' 등 10개소를 선정·지원하였고, 2012년에는 '천년여행길(충남 홍성)', '선비문화탐방로(경남 함양)', '태백산 문화기행길(전남 보성)', '홍부길(전북 남원)', '위례길(경기 하남)', '중원문화길(충북 충주)', '낙동강 하구 생태길(부산광역시)', '무돌길(광주광역시)', '함라산둘레길(전북 익산)', '갯길(전남 무안)' 등 10개소(295km)를

선정·지원하였고, 2013년에는 ‘난지생명길(서울 마포)’, ‘백령 구경길(인천 옹진)’, ‘포천 한탄강 어울길(경기 포천)’, ‘아름다운 순례길(전북 김제)’, ‘가거도 셋개재길(전남 신안)’, ‘아리랑길(전남 진도)’, ‘성주 가야길(경북 성주)’, ‘진주 비단길(경북 진주)’, ‘해파랑길(부산외 11개 시·군)’ 등 9개소(896.5km)를 선정·지원하였고, 2014년에는 탐방로 프로그램운영, 안내체계 정비 등 23억원을 지원하였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들에게 우리 국토를 걷는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건전한 도보여행 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한 ‘청소년 여행문화학교’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고, 동해안 광역 탐방로인 ‘해파랑길’의 홈페이지 개발, 통일된 안내체계를 구축하는 등 도보여행 기반 확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2) 관광두레 조성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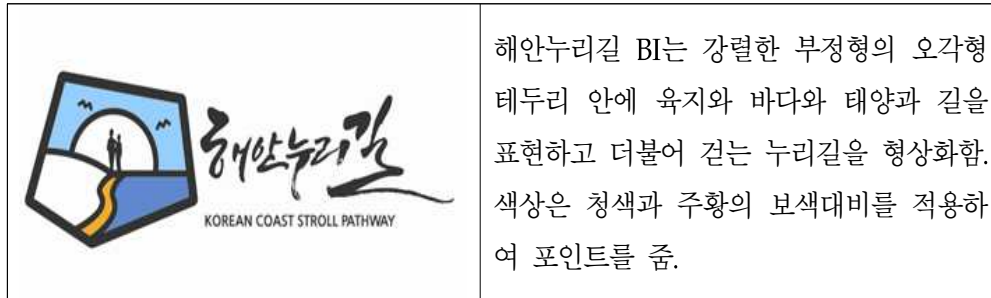
관광두레는 그간 지역관광 개발 사업이 시설·인프라 조성 위주로 추진되어 준공 이후 운영 저조, 지역 주민의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 수혜 미흡 등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관광두레PD(매개자)와 함께 지역 주민 주도로 기 조성된 지역의 공공시설 및 자원을 활용, 식음·숙박·관광프로그램 등을 개발·육성하여 관광객에게는 다양한 “관광거리”를 제공하고, 주민에게는 일자리와 소득창출이 가능한 새로운 지역관광모델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3년 시범사업(5개 지역, 4억원)을 시작으로 2014년부터 본격 추진(20개 지역 추가, 20억원)하여 2017년까지 100개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3) 해안누리길 활성화 사업

웰빙문화 확산에 따라 삶과 자신을 돌아보는 걷기여행이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매김 하면서 바다를 더욱 가까운 곳에서 느끼고, 공감하고 싶어 하는 수요증가에 따라 ‘해안길 걷기’라는 새로운 여행문화 정착을 위해 2010년 해양수산부에서는 경관이 우수하고 걷기여행에 적합하며 지역 고유의 이야기가 있는 노선을 선정하여 도보여행 활성화 추진을 기획하였다.

‘해안길 걷기’에 걸맞는 명칭을 선정하고자 대국민공모를 실시한 결과 2,504건의 명칭이 제안되었으며, 전문가 심의를 거쳐 아라길, 아랑길, 해솔길 3개의 후보명칭을 선

정하였으나, 국내 해안길을 대표하기 위한 대표성과 신선함이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해안누리길'로 최종 확정되었다.



‘해안누리길’ 명칭에 걸맞는 도보여행에 적합한 168개의 노선을 지자체로부터 추천받아 민·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선정위원회의 심의 및 현장조사를 통해 11개 시·도 36개 시·군·구에 52개 노선을 선정하였다.

‘해안누리길’을 적극 홍보하기 위해 2010년에 「대한민국 해안누리길」 책자를 발간하여 온오프라인을 통해 판매 및 보급을 하였다. 2011년도에는 코레일관광개발과 손잡고 부안변산마실길과 남해다랭이길을 관광상품으로 개발하여 해당지역 관광활성화에 기여하였다. 또한 2011년부터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매년 1~3개의 노선에 대하여 종합안내판,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였고, 해안누리길 걷기행사를 매년 실시하여 우리나라 연안의 아름다움을 느끼도록 하였다.



(4) 해양관광 기반시설 조성지원

최근 소득변화, 주 5일제 근무제 정착에 따른 여가시간의 증대, 철도 및 도로 등의 개선에 따라 새로운 관광 활동의 대상으로서 해양관광에 대한 잠재적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해양레저·관광시설 조성을 통하여 다양한 해양관광 수요변화에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해양관광자원 시설지원 사업은 2005년부터 지자체 보조사업(보조율 50%)으로 2014년도에는 19개 사업 115억원(광특회계)을 투입하여 '거금 해양레저 친수공간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을 준공·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신규사업으로 '여사 낚시공원 조성' 등 9개 사업을 포함한 23개 사업에 137억원을 투입하여 해양관광 기반시설 조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각 시·도별 금년도 사업으로는 충남도 '안흥항 해양관광자원 조성' 등 3개 사업 23억원, 전남도 '다도해 명품 해수욕장 조성' 등 5개 사업 36억원, 경남도 '거제 해양낚시 공원 조성' 등 4개 사업 21억원, 경북도 '울릉 남양해양관광 친수공간 조성' 등 5개 사업 26억원, 강원도 '강릉 해중공원 레저전용 Zone 조성' 1개 사업 5억원, 제주도 '범섬 해양공원 조성' 등 5개 사업 26억원이다.

앞으로도 지역별로 수려한 해안선 및 연안별로 특색 있는 해양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해양관광기발시설 조성 사업을 통해 해양관광의 계절별 편중성을 해소하고 다양한 관광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표 2-4-11 최근 5년간 해양관광 기반시설 조성사업 지원 현황(국비기준) (단위 : 백만원)

년도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사업수	21	18	22	20	18
예산액	13,819	15,569	17,482	12,338	11,111

(5) 어촌관광 활성화 지원

어촌 주민들은 대부분 바다를 생산 공간으로 사용하는 1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FTA등 시장개방으로 인하여 더 이상 어업만으로는 경쟁력을 가지기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다. 특히 어촌의 지속적인 어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어업생산 감소로 어가 소득이 도시 가구소득과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어촌의 관광자원을 적극 발굴하여 어업인의 어업 외 소득을 확보하고자 어촌관광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정부는 그동안 어촌에 기반시설 위주의 지원을 하였으나 어촌이 자발적 발전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각 어촌마을이 가지고 있는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한 관광 상품화를 추진하여 낙후된 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하고 어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또한, 최근 국민들의 어촌관광에 대한 수요 변화로 어촌이 단순한 수산물 생산 공간에서 도시민들의 휴식과 체험관광 공간으로 전환될 것이 필요하였고, 이러한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생산·주거·관광이 어우러진 종합공간으로 어촌을 조성하였다. 2001년부터 전국의 어촌마을을 대상으로 체험과 휴양이 가능한 마을을 집중 육성하여 2014년까지 106개소를 조성하였으며, 체험마을 이용객수 88만명, 체험소득은 224억원의 성과를 이루었다.

또한, 정부는 2014년 3월 맞춤형 어촌관광 포털사이트의 운영 내실화와 함께 도시-어촌 자매결연 강화, 재능기부 활성화 등 어촌관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였으며, 10월에는 어촌관광 사업장의 경관, 서비스 수준, 숙박시설 등을 사전에 확인해 보고 방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어촌체험마을 등급제 추진을 위한 고시를 제정하여 어촌체험마을을 방문하는 국민들의 불편을 줄이고자 노력하였다. 아울러, 유명 연예인의 어촌사랑 자매결연 라디오 방송 목소리 기부, 서울지역 대학생의 벽화 그리기 등 20여건의 재능기부 활동을 통해 도시와 어촌의 교류를 증진하였다.

국민들의 건강한 제철 수산물 소비촉진과 어촌체험을 결합하여 건강한 관광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바다마을 식도락 여행” 책자를 계절별로 발간하여 도시민이 어촌체험 마을에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였으며, 관련 책자는 전국 관광안내소, 체험관광 전문여행사, 렌터카 사업장 및 수도권 은행지점 등에 무료로 배포하여 도시민이 손쉽게 어촌 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하였다.

외국인 관광객을 어촌체험마을에 유치하고자 “외국인 관광객 어촌체험마을 유치계획”을 수립하여 인천 포내 어촌체험마을 등 전국의 5개 어촌체험마을을 “국제 관광 어촌체험마을”로 확대 지정하고, 적극 추진한 결과 작년 한해 2,753명의 외국인이 우

리 어촌마을을 방문하였다. 특히, 해양수산부가 국제관광 어촌체험마을로 지정한 제주 구업 어촌체험마을을 방문한 중국관광객 만족도가 높음에 따라 제주관광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를 잡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지난 2010년부터 “바다해설사” 제도를 운영하여 어촌을 방문하는 도시민 등 국민에게 어촌의 인문·자연자원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하여 장기적인 관광수요에 대한 만족도 제고로 어촌 관광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도 어촌체험마을이 국민의 힐링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도시민 가족 구성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체험마을을 방문한 도시민이 편안하게 먹거리와 잠자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의 특색을 고려한 지역별 특화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방문객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어촌주민의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사업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6) 우수 외식업지구 육성사업

우수외식업지구 육성사업은 지역별로 특성 있고 수준 높은 외식문화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 외식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나아가 국내산 식재료의 소비를 확산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사업시행 이후 2014년까지 전주 한옥마을·함양 건강100세 음식지구 등 13개의 지구가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우수외식업지구로 선정받기 위해선 「외식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하여 지구 내 외식업체 비중(50%이상), 우수 식재료 사용비중(40% 이상) 등 여러 지정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추진 기본계획에 따라 각 시·도지사가 지정한 우수 외식업지구 중에서 지구별 사업계획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매년 사업대상 지구를 선정하게 된다. 선정된 지구는 개소당 2억원(국고 50%, 지방비 50%), 2년간 총 4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사업내용은 우수식재료 소비촉진·지역특화 메뉴개발·서비스 개선·교육·컨설팅·홍보 등으로 구성된다.

우수외식업지구 선정 이후에도 지속적인 운영 내실화 작업이 추진된다. 매년 우수 외식업지구 방문객 대상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각 지구별 운영상황을 평가하여 그 결과가 우수한 지구는 '올해의 우수 외식업지구'로 선정·시상하게 된다. 2014년도 올해의 우수외식업지구로 '함양 건강100세 음식지구'가 선정되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이 시상된 바 있다.

2014년도 우수외식업지구 운영상황 평가결과 우수 식재료 구매비용은 전년대비 144.1% 증가하고 전체 평균 매출액은 24.3% 증가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우수외식업지구는 농촌관광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앞으로 우수 식재료의 소비촉진 뿐만 아니라 지구 인근의 관광사업과도 연계한 다양한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표 2-4-12 우수 외식업지구 지정 현황('12~'14)

년도	지자체	지구명	소재지
2012	전북 전주시	한옥마을	전북 전주 완산구 풍남동, 교동, 전동 일원(36개 업소)
	대구 수성구	들안길 먹거리타운	대구시 수성구 상동, 두산동 일원(98개 업소)
	경남 함양군	건강100세 음식특구	경남 함양군 함양읍 상림공원 일원(23개 업소)
	강원 평창군	효석문화메밀마을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창동리, 원길리 일원(60개 업소)
	경기 안산시	전통음식거리 댕이골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1347-1352번지 일원(34개 업소)
2013	부산 동래구	명륜1번가	부산시 동래구 명륜로 112번가길 일원(177개 업소)
	제주 제주시	용두암 어영마을	제주 제주시 용담2동 어영마을 일대(41개 업소)
	제주 서귀포	아랑조을거리	제주 서귀포시 천지동 일대(55개 업소)
	전북 고창군	선운산 풍천장어거리	전북 고창군 아산면 선운산도립공원 일원(40개 업소)
2014	대구 달서구	수밭골 웰빙음식거리	대구시 달서구 도원동 일원(33개 업소)
	경기 안산	대부도 방아머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방아머리 일대(38개 업소)
	강원 평창	오대산 산채마을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간평리, 동산리 일원(32개 업소)
	강원 인제	용대리 황태마을	강원도 인제구 북면 용대리 182번지 일원 (30개 업소)

3. 생태·역사·문화 콘텐츠 중심의 고품격 관광자원 개발

(1) 관광자원개발 사업

1) 관광지 개발

관광지 개발은 지역의 고유한 역사·문화·레포츠 자원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관광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광지내 도로, 주차장, 상수도 등 공공기반 시설 및 기초 인프라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의 관광매력도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2014년에는 인천 마니산 관광지 등 총 39개 관광지에 286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15년 용문산관광지 등 총 37개소 38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2) 문화관광자원개발

문화관광자원 개발은 「관광진흥법」에 의해 지정된 관광지나 관광단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지정된 사적지, 정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광역권 개발사업에서 제외된 지역에 소재한 독특한 역사·문화, 레저·스포츠자원 등을 대상으로 소규모 자본을 투자하여 관광자원화 함으로써 다양한 관광수요에 대응하고자 1999년부터 지원한 사업이다. 2014년에는 황령산전망대 사업 등 176개 사업에 1,315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15년에는 하동명상치유센터 조성 사업 등 164개 사업에 1,16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지역의 독특한 역사문화자원을 테마로 한 관광자원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각 지역마다 차별화된 관광상품을 보유하고 관광객들의 다양한 관광수요에 부응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발전 및 국토의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3) 생태·녹색 관광자원 개발

생태녹색 관광자원 개발사업은 습지, 옛길, 강, 호수 등 생태자원을 보호하는 동시에 이를 활용하여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개념의 관람·체험관광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

으로 지역식생 확대, 체험·관람시설 확충 등 인프라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생태자원의 중요성을 관광객들에게 인식시키고 건전한 체험형 관광문화를 활성화 한다는 점에서 추진 필요성이 날로 더해가고 있다.

2014년에는 지리산 생태아트 파크조성사업 32개에 256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15년에는 세어도 자원생태관광활성화 사업 33개에 23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4) 광역 관광자원개발

동·서·남해안 및 지리산권 등 권역별로 특성있는 관광자원(자연·문화·역사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관광인프라 구축 및 관광콘텐츠를 개발하여 관광개발의 효과 제고는 물론,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정기적인 사업평가 및 환류를 통해 사업을 재구성하여 전략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4년에는 동해안권 광역관광개발사업 7개에 55억원, 서해안권 광역관광개발사업 8개에 69억원, 남해안 관광클러스터 조성사업 10개에 184억원, 지리산권 광역관광개발사업 18개에 129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15년에는 동해안권 광역관광개발사업 6개에 43억원, 서해안권 광역관광개발사업 10개에 84억원, 남해안 관광클러스터 조성사업 9개에 206억원, 지리산권 광역관광개발사업 16개에 11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2) 한국형 생태녹색관광 육성

1)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슬로시티(Citta Slow) 운동이란 ‘느림의 미학(slow is better)’을 철학적 기반으로 하여, 자연친화적 환경 속에서 지역 고유의 먹을거리와 전통문화를 느끼며 질적인 삶을 추구하고, 현대인들에게 인간다움의 회복 및 마음의 고향을 제공하고자 하는 운동이다.

2011년 4월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 24개국 142개 도시가 슬로시티 국제연맹에 가입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2007년에 신안군(중도면), 장흥군(유치면), 담양군(창평면), 완도군(청산면)이, 2009년 하동군(악양면), 예산군(대흥면), 2010년 남양주(조안면), 전

주(한옥마을), 2011년에는 상주시(함창읍·이안면·공검면), 청송군(부동면·파천면)이 각각 국제연맹으로부터 슬로시티로 인증받았다.

정부는 슬로시티 인증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향토문화 계승, 지역생태, 역사 문화자원 보존을 통한 한국적 슬로라이프 실현 및 새로운 개념의 체험형 관광문화를 활성화함으로써 느리게 살기 철학의 가치 구현을 도모하고 한국만의 독특한 관광상품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2009년 47억원, 2010년 52억원, 2011년 20억원, 2012년 21억원, 2013년 22억원, 2014년 19억원 국비를 편성, 슬로시티 인증지역의 기초 관광 인프라 구축 및 관광프로그램 개발 등에 지원하였다.

2) 한국형 생태관광 10대 모델사업

한국형 생태관광 모델사업은 2008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의 6대 추진전략 사업에 포함시킨 사업이다. 본 사업은 DMZ 등 우수 생태·문화·역사자원 보유지역을 대상으로 한국형 생태관광 세계화 모델을 창출하기 위해 생태계 보전계획, 인프라 설치, 프로그램 개발, 홍보 등에 대한 지원·육성을 한다.

문화부는 환경부와 공동으로 한국적 특성이 담긴 생태자원을 활용하여 우리 고유의 생태관광을 개발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경쟁력을 갖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국형 생태관광 모델사업 대상지를 선정하였다. 모델사업 대상지는 자연의 보전가치, 관광자원의 매력도, 지역주민 참여도 등 6개 지표의 15개 세부지표를 적용하고 환경보전, 관광, 홍보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0년 2월 23일 한국형 생태관광 세계화 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 10개 지역을 선정·지원하였다. 선정된 10개 지역은 충남 태안군 신두리 해안사구, 전남 순천시 순천만, 경남 창녕군 우포늪, 충남 서산시 천수만, 강원도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및 백룡동굴, 영주시 소백산 자락길, 진안군 고원 마실길 및 데미샘, 경기도 파주시 서부 DMZ, 강원도 화천군 동부 DMZ, 울릉도 및 독도, 제주도 거문오름과 서귀포 생물권 보전지역(관광진흥개발기금과 제주관광진흥기금의 용도가 같아 지원대상에서 제외) 등이다. 또한 2010년 3월에 생태관광 컨설팅단 발족식 및 지자체별 보고회를 개최하고, 생태관광 모델사업 기본·실시계획 가이드라인을 수립한 후 지자체에 통보하여 지자체별 생태관광 컨설팅단의

자문을 받아 가이드라인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2011년 6월 완료). 현재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지별 특성을 반영한 한국형 생태관광 모델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1년까지는 기본계획수립 및 사업추진을 위한 토대마련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2012년부터는 연차별 사업추진 계획에 따라 생태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인프라 조성 등을 추진하였다. 2010년에는 20억원, 2011년에는 18억원, 2012년에는 18억원, 2013년에는 39억원, 2014년도에는 36억원을 한국형 생태관광 10대 모델 사업지에 지원하였다.

(3) 광역관광개발 사업

1) 3대문화권 생태관광기반 조성

동 사업은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30대 선도사업 중 대구·경북권 사업으로 대구·경북 지역의 유교, 신라, 가야의 3대 문화권과 백두대간, 낙동강의 생태 축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 문화의 독창성 부각, 대단위 관광 기반의 조성, 생태 자연의 보고로 만들기 위한 종합 관광개발사업이다.

2009년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여 2010년 3월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10년 12월 선도사업(9개 사업), 2011년 4월 전략사업(26개 사업)에 대한 간이예비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추진을 시작하였다.

총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21년까지 12개년으로, 2010년에는 세계 유교선비문화 공원 등 13개 사업에 250억원, 2011년도에는 녹색문화 상생벨트 사업 등 28개 사업에 600억원, 2012년도에는 유림 문학 유토피아 사업 등 42개 사업에 917억원을 지원하였다. 2013년도에는 신화랑풍류체험벨트 등 44개 사업에 1,097억원을 지원하였고, 2014년도에는 37개 사업 1,009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35개 사업에 1,47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2)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21세기의 화두로 등장한 녹색관광 실현에 따른 선도적 권역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

면서 충북의 남한강과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한 생태·휴양 중심의 녹색관광개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2009년에 동 사업의 기본계획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충북, 강원, 경북의 3개 도 17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총사업비 77억원 규모의 3개 부문 75개의 세부사업을 구상하였다. 동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사업추진을 확정하고 2012년 9월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총 사업비 3,970억원, 39개 세부사업으로 총사업규모를 확정하였다.

총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개년으로, 2013년에는 간현 녹색충전지대 조성 등 11개 사업에 55억원을, 2014년에는 국제 수변레포츠단지 조성 등 11개 사업에 105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15년에는 백두대간 곤충놀이나라 등 16개 사업에 145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3) 한반도생태평화벨트 조성 사업

한반도생태평화벨트 조성은 DMZ 인접지역 3개 시·도 10개 시·군 지역의 생태 및 역사, 문화관광자원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2009년 ‘평화생명지대 광역관광개발계획’에 대한 연구용역(2008년 8월~2009년 10월, 3.6억원)을 통해 테마 횡단코스 개발 등 37개 사업(총사업비 5,516억원)이 구상되었으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제20차 보고(2010년 3월)에서 사업명을 ‘한반도생태평화벨트 조성계획’으로 변경하였다. 행안부, 산림청, 환경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44개 세부 사업을 확정하고 2013년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2013년부터 2022년까지 3개 시·도 10개 시·군, 총 44개 세부사업에 국비 2,097억원을 포함하여 총 4,61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2014년도에는 ‘애기봉 평화생태공원(경기 김포)’ 등 6개 사업에 85억원을 지원하였고, 2015년도에는 ‘연평도 평화기원 등대언덕 조성(인천 옹진)’ 등 6개 사업에 12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4) 등대 해양문화공간 조성

21세기 지식기반사회 진입과 더불어 문화예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국민들의 관광 및 여가활동 등의 욕구가 증가됨에 따라 해양경관이 수려하여 국민들이 즐겨 찾는 등

대를 다양한 해양문화의 장(場)으로 활용함으로써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 국민과 함께하는 해양수산부, 열린 정부를 만들어 보이지 않는 담장을 없애고자 하였다.

2001년부터 유인등대 정비계획에 따라 등대 건축물을 개량하면서 전시실, 방문객 이용시설 등 기본적인 하드웨어 구축이 완료되었다. 해양관광지와 근접하고 경관이 수려한 역사적 가치가 있는 영도등대, 팔미도등대, 울기등대, 우도등대, 속초등대, 오동도등대, 소매물도등대 등 지역을 대표하는 해양관광 자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일부 방문객이 많이 찾는 유인등대를 이용하여 해양 안전교육, 등대체험, 미술전시, 음악공연 및 세미나 개최 등 적극적 해양문화행사 유치로 등대가 뱃길을 안내하는 전통적인 등대기능은 물론 해양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부가하여 방문객의 지속적인 관심과 발길이 이어져 오고 있어 등대에 대한 이미지 제고 및 폐쇄적인 관공서 이미지 개선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그간 다소 폐쇄적이었던 유인등대를 개방하고, 해양문화공간 조성 등으로 방문객들에게 향로표지의 역사, 사진 및 미술전시 음악공연, 체험 등 각종 볼거리 등을 제공하고 있다. 방문객이 많이 찾는 영도, 오동도, 속초 및 간절곶등대에는 해설사를 채용하여 방문객들에게 등대와 주변 설명을 돕고 있지만, 육지와 도서, 접근성 및 방문객 수 등 각기 다른 여건에 따라 문화 콘텐츠의 차별화와 지역 특성을 잘 고려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나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지금까지 외부 구조물 등 커다란 하드웨어 중심으로 추진된 사업이 완료되고 15년 이상 지난 시점인 요즘, 전시물의 변화, 행사의 다양화 등 방문객의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는 변화가 필요한 시기이다. 하지만, 이용자의 욕구를 따라가기에는 안전시설 등 다른 사업에 비해 단기간에 재투자 되어지는 예산지출에 곱지 않은 시선이 있는 게 현실이다.

등대에 전시되는 향로표지와 해양관련 전시물 및 행사, 노후 시설물 정비 등은 역사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며, 주변 등대와 차별화할 수 있는 특색 있는 콘텐츠의 지속적인 개발과 투자가 요구되며, 방문객이 해양문화 공간을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안내, 홍보할 수 있는 지속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5) 문화유산관광자원개발

전국에 소재한 각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을 집중적·체계적으로 발굴·보존·정비하고 관람·편의시설 등을 확충하여 역사교육의 장 및 역사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이다. 문화유산관광자원개발사업을 위하여 2014년에는 233.2억원(국비 98.3억원, 지방비 134.9억원)을 투입하였고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4-13 2014년 문화유산관광자원개발사업 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지 역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사업비(국 비)
계	11개 사업		23,323 (9,828)
서울 서대문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정비	• 창고 복원	1,400 (980)
강원 속초	신흥사유물전시관 건립	• 실시설계, 부지 정비	290 (145)
경기 양주	회암사지 종합정비	• 단지 정비(토목공사, 조경공사)	2,196 (1,537)
경기 연천	전곡리 선사문화체험 관광벨트 조성	• 토지매입, 식생복원, 기반조성	3,981 (2,435)
경기 시흥	오이도 유적 종합정비 및 역사공원 조성	• 발굴조사, 역사공원 조성	2,500 (1,250)
충북 청주	금속활자 복원	• 직지활자 복원, 직지목판 복원	400 (200)
충남 예산	내포 보부상촌 조성	• 기반조성(토목공사)	9,006 (1,506)
충남 논산	돈암서원 정비	• 서원 보수정비, 우회도로 개설 • 조경정비	650 (325)
경북 칠곡	구 왜관터널 주변정비	• 실시설계, 터널입구 정비	400 (200)
경남 함양	사근산성 순국선열 추모사당 건립	• 추모사당 건립, 삼문·화장실·관리사 건립, 부지조성	1,500 (750)
경남 남해	물건리 방조어부림 주변정비	• 하수처리시설 중설, 2층 누각, 석축 보수, 해안산책로 정비	1,000 (500)

문화유산 관광자원개발사업은 2005년부터 매년 10여개 사업을 선정, 100여 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역적·역사적 특성을 지닌 대표적 역사문화유적에 대하여 발굴·보존·정비, 편의시설 확충 등을 지원해 왔다. 특히, 2014년에는 양주 회암사지 종합정비 및 연천 전곡리 선사문화체험 관광벨트 조성 사업 등 계속사업 이외에 속초 신흥사유물전시관 건립사업, 구 왜관터널 주변정비 등을 새롭게 추진하면서 지역유산의 테마별 관광자원화 개발로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문화유산의 가치를 확산하여 국민의 문화향유권 신장에 기여하였다.

제4절 생태·자연환경 보존·활용

1. 도시 생태자원의 복원·확충을 통한 지속가능성 제고

(1) 자연마당 조성

도시의 훼손방치된 지역을 적극 발굴하여 생물서식지 조성 등 생물다양성 증진을 도모하고 생태적인 도시 구성에 기여하며, 조성된 자연마당은 도시내 자연과 함께하는 지역주민의 생태휴식공간으로 활용한다.

환경부는 인구 10만명 이상 지자체의 도시지역내 생활권에 위치한 유휴·훼손·방치된 지역으로 최소 5만㎡ 이상의 국·공유지를 사업대상으로 하며, 이 중 지자체 수요조사와 전문가 심사·평가를 거쳐 사업대상지를 선정한다.

자연마당 조성사업은 환경부가 주체가 되고 지자체에서는 유지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평균적으로 1개소 조성하는 데 30억원~40억원 수준의 사업비가 투자(생태계 보전협력금 반환금 활용)된다. 사업기간은 3년(1차년도 설계, 2~3차년도 공사)으로 생태휴식공간 확충을 위한 국정과제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국토부(주관부처) 등과 협조하여 추진한다.

2014년 2월에 2014년 자연마당 조성사업 추진계획(3개소 완공, 2개소 착공, 3개소 실시설계)을 수립하였고, 3월에 인천 및 익산에서 자연마당 조성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2014년 3월에서 7월까지 2014년 자연마당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대전, 군산, 경산 등 3개소를 사업대상지로 선정하였다. 이후 2014년 8월에서 12월까지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실시설계를 추진하였다.

2014년에 총 3개소의 자연마당이 조성되었고 2개소는 인허가 되어 공사를 추진하고 있어 2015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또한, 실시설계가 완료된 곳이 3개소로 2016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2017년까지 자연마당 20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자연마당을 조성하여 녹지 및 생태공간이 취약한 도시지역에 다양한 생태휴식공간을 확충함으로써 도시생태계의 건전성을 증진하고 도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하였다.

표 2-4-14 자연마당 연도별 조성 계획

(단위 : 개소)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조성사업 수	5	3	4	4	4	20

(2) 생태놀이터 조성

도시생활권의 부족한 생태공간을 확충하고, 어린이에게 놀이·체험공간, 주민에게 휴식·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생태놀이터'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는 도시 주거생활권의 국·공유지로서 유휴·방치부지, 인공·노후된 놀이터, 방치된 공원·녹지공간 등을 대상으로 지자체 수요조사 및 전문가 심사·평가를 거쳐 사업대상지를 선정하며, 생태놀이터는 조성가능지 여건을 고려하여 개소당 500~5,000㎡ 규모로 조성된다.

환경부가 사업주체자가 되고 사업유지관리 주체는 지자체이며, 개소당 5억원 수준(국비 1.5억원, 지방비 3.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2013년 12월에 2014년 생태놀이터 조성사업 추진계획을 수립(3개소 완공, 2개소 착공, 3개소 실시설계)하여, 2014년 1월 2014년 생태놀이터 조성사업 대상지 12개소를 선정하였다. 이후 2014년 3월에서 6월까지 생태놀이터 조성 가이드라인 및 조성 가이드 북을 작성하였으며, 2014년 6월 말에는 국고보조금을 교부하고 가이드라인 및 가이드 북을 배포하였다. 그리고 2014년 6월부터 12월까지 지자체별 생태놀이터 조성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조성 공사를 시작하였다.

생태놀이터 12개소를 조성하여 집 근처 도심에서, 보다 쉽고 가깝게 자연생태 학습과 체험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아이들의 정서발달은 물론 도시민의 휴식과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였다. 2014년 12개소를 시작으로 2017년까지 총 100개소의 생태놀이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표 2-4-15 생태놀이터 연도별 조성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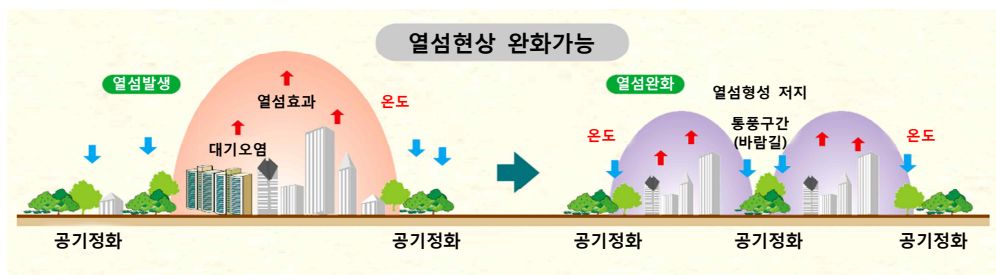
(단위 : 개소)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조성사업 수	12	23	30	35	100

(3) 도심열섬완화를 위한 녹색공간 조성

산업화 도시화에 따라 국민 대부분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나 도심지내 생활환경은 대기오염, 도시열섬현상 등으로 인하여 열악한 실정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녹색공간 확충이 필요하다. 도시숲은 여름 한낮의 평균 기온을 3~7℃ 낮추고, 평균 습도는 9~23% 높여주는 등 기후 및 습도조절 효과가 있다. 2014년에는 548억원을 투입하여 녹색 공간을 확충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537억원을 투입하여 도시숲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그림 2-4-3 도시숲의 도심열섬완화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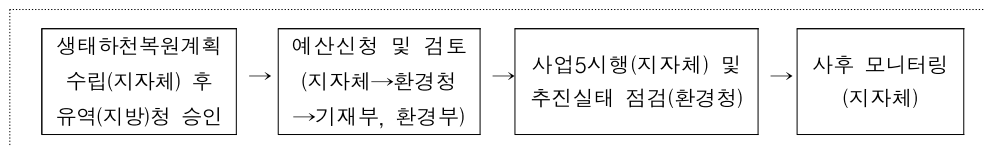


2. 하천-산림생태 보전·복원으로 융합적 가치 창출

(1) 생태하천 복원

인공구조물의 설치 등으로 생태계, 수질 등이 훼손된 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하천으로 복원하여 국민들에게 생태 친수공간을 제공하고자 한다. 해당 사업은 2014년부터 국고보조율이 50%에 달하는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으로 2017년까지 1,667km에 해당하는 오염·복개하천을 생태복원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그림 2-4-4 사업 추진체계



2014년도 오염·훼손된 하천의 복원 목표는 100km이었으며, 목표 대비 101.5%인 115.6km의 하천을 복원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또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체계를 정비하였다.

국토부와 환경부 합동으로 부처간 중복성 해소를 위한 ‘지방하천정비사업 및 생태하천복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지침’을 제정(2014년 2월 17일)하였으며, 생태하천복원사업 계정을 광역발전특별회계 광역계정(2014년까지)에서 지역발전특별회계 생활계정(2015년부터)으로 전환하면서 그에 따른 “생태하천복원사업 업무처리지침”을 개정(2014년 12월 3일)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은 생태하천 복원계획 수립 후 환경부 심의를 의무화하고, 국고 신청 절차 및 방법, 보조사업자 사후관리 개선방안을 지침상에 수립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생태하천복원 선진국인 미국 환경보호청(EPA) 수생태복원원칙 재해석본을 제작하고 배포함으로써(2014년 10월 17일) 생태하천복원사업에 대한 대국민 홍보에 기여하였다.

수질개선 및 수생태복원을 위해 2015년에 141개의 생태하천을 복원할 계획이며, 생태하천복원사업의 지속적·체계적 추진을 위해 2015년 ‘생태하천복원사업 선진화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2)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은 주 5일 근무제, 휴가문화 정착 등으로 우수 자연자원이 소재한 특정 지역에 탐방객이 집중되면서 환경훼손이 우려됨에 따라 자연자원을 보호하고 증가하는 생태탐방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08년부터 국고보조사업(50% 보조)으로 추진하고 있다. 생태탐방로의 개념은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아름다운 자연자원 및 생태적 배경을 가진 문화·역사자원을 보다 쉽게 찾고, 즐기고, 체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조성된 도보 중심의 길이다

환경부는 전국단위 생태탐방로 조성을 위한 연구사업(2006년~2007년)을 실시하고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전국단위 생태탐방로 조성계획’을 수립(2007년 11월)하여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 가이드라인’을 마련(2010년)하였다. 2008년부터 추진된 국고보조사업 결과 2014년까지 38개 사업에 약 1,280km가 조성되었으며, 2015년 현재 13개 사업에 약 670km를 추가 조성 중에 있다.

‘전국단위 생태탐방로 조성계획’에는 전국에 걸쳐 5대강과 옛길(영남대로, 삼남대로), 해안길 등을 중심으로 우수한 생태탐방자원을 네트워크화 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의 특수성을 살린 테마형 생태탐방로를 조성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생태탐방로는 기존 정상등반을 목적으로 하는 등산, 마루금을 타고 종주하는 트레킹 등의 형태를 지양하고, 가족단위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걸을 수 있는 길들을 위주로 우수한 생태적 배경을 가진 강·하천길, 옛길, 숲길, 마을길, 들길, 해안(바다)길 등 다양한 형태로 조성된다.

또한 탐방자원의 가치, 전국적 연계성 등을 기준으로 국가생태탐방로, 광역생태탐방로, 지역생태탐방로로 구분하고 기존에 있는 길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등 최소한의 시설 설치로 자연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있다. 아울러 훼손·단절지역 복원 등 생태네트워크 구축사업을 병행하여 야생동식물의 서식이동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다.

국가생태문화탐방로는 2017년까지 총 2,500km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으며, 기 조성된 곳은 2015년부터 DB 구축 및 스토리텔링 작업을 추진하여 생태관광 홈페이지(www.eco-tour.kr)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등 생태관광자원으로 연계하여 환경과 경제가 상생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할 계획이다.

(3) 생태탐방체험시설 및 에코촌 조성

환경부는 「자연환경보전법」 제41조(생태관광의 육성),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56조(생태관광의 촉진 등)에 따라 생태관광지역을 지정하고 이를 육성·지원하기 위해 생태탐방체험시설 및 친환경 숙박시설인 에코촌 등 기반시설 조성을 지원하고 있다.

2014년에 수립된 ‘생태관광 활성화 대책’에는 생태관광 활성화의 저해요인중 하나로 숙박 등의 체류를 위한 기반시설 부족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저해요인의 해소를 위해 국립공원의 우수 생태자원 활용과 생태탐방 프로그램 운영 노하우를 지역사회에 전파할 수 있도록 거점시설로서 생태탐방체험시설(연수원)을 조성중이며, 국립공원 외의 지역에 지정되는 생태관광지에는 관광객이 체류하면서 생태체험을 할 수 있도록 에코촌 조성사업을 국고보조사업(보조율 50%)으로 추진 중이다.

생태탐방체험시설로는 2010년 북한산 생태탐방연수원 건립을 시작으로 총 7개소가 단계적으로 조성 중에 있다. 2015년 현재 북한산(2011년) 및 지리산(2015년) 생태탐방

연수원이 운영 중에 있고, 소백산·설악산·한려해상·무등산·내장산 생태탐방연수원 5개소가 2018년까지 조성될 예정이다. 생태탐방연수원은 가족단위나 소규모 단체를 대상으로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우수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사회에 보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구성 시에도 국립공원 인근지역의 다양한 생태·역사문화자원을 연계하여 지역사회가 생태관광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지역주민 해설사·자연환경해설사 등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 중이다.

에코촌은 2015년 현재 순천만 에코촌(2013년)과, 우포늪 에코촌(2015년)이 운영 중에 있으며, 랍사르 습지로 지정된 동백동산습지가 있는 제주 선흘1리에 신규로 조성 중에 있다. 에코촌은 조성된 이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며 그 수익이 지역주민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생태탐방연수원은 운영·조성 중인 7개 시설을 거점으로 생태관광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효율적 운영방안을 논의 중에 있으며, 에코촌 조성사업은 주민 참여도와 추진의지, 생태관광 인프라 등 잠재성을 검토하여 추가 조성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4) 국가하천 정비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의 빈발, 도시화·산업화 등으로 홍수위험에 대한 사회적 취약성 증대에 따라 홍수예방, 하천환경개선 등 수계별 특성을 고려한 국가하천정비를 통하여 하천관리의 효율화 도모코자 하였으며, 이에 따라 1995년부터 2020년까지 국가하천 2,458km에 대하여 치수·이수·환경 등을 고려한 종합정비를 목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1995년부터 2020년까지 6조 7,927억원을 국비를 투자하여 국가하천 2,458km에 대하여 치수·이수·환경 등을 고려한 종합정비 사업 추진 중에 있다. 주요 사업내용은 제방축제 및 보강, 하도준설, 보설치 및 개량, 초지조성, 자전거 도로 설치 등이며,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직접 수행 중에 있다. 국가하천정비사업 총 사업비 6조 7,927억원 중 2014년말 현재 4조 7,354억원을 투자하였으며, 2015년 이후 2조 573억원을 투자하여 2020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표 2-4-16 국가하천정비사업 투자현황

(단위 : 억원)

사업명	전체	2012년 까지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비고
국가하천정비	67,927	38,940	4,133	4,281	4,338	4,250	11,985	

표 2-4-17 국내 하천정비사업 변천

구 분	사 업 시 기	주 요 내 용	대표사업	비 고
자연하천	1960 이전	▪ 자연 그대로의 하천으로 환경기능 양호	-	
방재하천	1960 이후	▪ 치수 목적으로 정비된 하천 ▪ 이수 및 치수 기능은 양호하나, 환경 기능 미흡	▪ 하천개수사업 ▪ 낙동강 연안 개발 사업 등	
공원하천	1980 이후	▪ 친수성을 강조하여 조경시설 및 운동시설 위주로 정비	▪ 한강종합개발 사업 등	
자연형하천	1990 이후	▪ 생물서식처 복원 ▪ 이·치수 안전성을 확보하고 생물 서식처 보존	▪ 양재천, 경안천, 하천환경 정비사업 등	
복합하천	2010 이후	▪ 이·치수 안전성을 확보하고 생물 서식처 보존 ▪ 역사·문화를 고려한 문화하천	▪ 4대강 사업, 고향의 강 정비 사업 등	

(5) 지방하천 정비

우리나라는 여름철에 강우가 집중되고 지역적 편중이 매우 심한 편으로 하천관리가 매우 어려운 자연적 특성을 지니고 있어 예로부터 치수를 위해 제방을 쌓거나 이수를 위한 저수지, 보 등을 건설하여 하천을 지속적으로 정비·관리해 왔다.

이러한 수문특성을 고려하여 지방하천을 홍수에 안전하면서도 문화·생태·친수가 공존하는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하천공간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종합적이

고 체계적인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960년대 하천법이 제정되면서부터 홍수예방을 위하여 제방이나 호안을 콘크리트 구조물로 정비하는 등 하천을 본격적으로 개발하였다. 1960~1980년대 지방하천 정비 사업은 산업화 및 도시화에 따른 홍수예방을 위한 치수사업이 주를 이루었다.

1990년대 후반 이후부터 하천환경에 대한 인식 변화 및 하천환경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하천의 치수 및 이수 기능을 고려함과 동시에 하천환경 및 친수기능을 고려한 하천정비로 변화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하천의 치수적 안정성은 물론 생태, 역사, 문화 등이 복합된 친환경 하천조성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하천의 규모를 고려하여 지금도 홍수방어에 집중하고 있으며 하천의 특성을 고려하여 하천환경정비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지방하천에 대한 지속적인 재정투입과 노력으로 홍수피해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나 아직도 취약한 부분이 많은 실정이다. 국토부에서는 2011년 “지방하천종합정비계획”을 마련하여 기후변화에 선제적 대응, 홍수로부터의 안전, 품격있는 친환경적 하천공간 조성 등을 위해서 단계적으로 예방적 투자를 위한 하천정비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경제적·사회적으로 중요한 지방하천은 국가하천으로 승격·관리하여 홍수예방에 대해서는 국가의 역할을 확대하여 안전한 국토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1945년 이전은 근대적인 하천관리체제의 구축 및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개념의 도입으로 남북한 14개 하천에 대해 개수계획을 수립하여 치수위주의 개수사업을 시행하였다. 광복 후 복구시기인 1945~1950년대에는 치수사업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강조되어 국가차원의 남강방수로 공사 및 중요하천의 개수와 유지보수사업 시행을 위해 국가하천 19개, 지방하천 44개의 약 680km의 하천개수 및 유지보수 사업을 추진하였다.

수자원 종합개발 출발 및 정착시기인 1960년대~1970년대에는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의 수립과 함께 연간 289.3km의 하천개수 추진 및 치수사업 4개년 계획을 수립하였고 1965년에는 수자원종합개발10개년계획(1966년~1975년)을 수립하여 치수사업과 이수사업을 병행 추진하였다. 1974년부터 낙동강연안 종합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및 5대강 수계 치수사업시작으로 1975년부터 한강, 낙동강 및 금강의 국가하천 구간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수자원 종합개발 고도화 시기인 1980년대에는 지역 간 균형 개발의 국토정책에 의

해 지구별 분산개수 방식에서 수계별 일괄개수 방식으로 하천관리 정책의 전환이 있었으며, 1987년 대홍수를 계기로 「방재대책 중장기계획(1988)」을 수립하였다.

치수사업에 대한 투자확대 시기인 1990년대에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1991년~2001년)을 수립하여 하천 유역 개발 및 관리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1996년에 보완된 수자원장기종합계획(1997년~2001년)에서는 본류와 지류를 일괄하는 치수사업을 추진하여 2007년까지 하천개수 100% 달성을 목표로 계획을 수립하였다. 1999년 「수해방지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수해 관련법과 제도 개선, 하천개수 투자 확대, 조직개편 등을 시행하였으며, 치수위주의 하천관리에서 하천환경에 대한 인식 대두로 1991년부터 하천정비에 환경개념을 도입하였다.

유역단위의 치수 및 생태하천 조성 병행 시기인 2000년대에는 하천법에 유역종합치수계획 수립 조항을 신설하여 유역단위의 종합적인 치수계획을 수립하였다. 하천의 환경기능의 보전 및 개선을 병행한 수해에 안전하고 환경이 조화된 친환경적 하천관리를 도모하였으며, 지자체 특성과 자연친화적 하천정비기법을 도입하여 도시하천구간의 정비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다.

그 동안의 성과로는 기본계획 수립률은 전국 지방하천 총 3,774개, 하천연장 26,822km에 대한 하천연장기준 79.6%(3,082개, 21,362km)의 수립률을 달성하였다. 또한 지속적인 하천정비를 통해 하천 개수율(하천제방 비율)은 74.8%(제방정비 완료 48.9%, 제방보강 필요구간 25.9%)를 달성하였다.

(6) 백두대간 마루금 생태축 복원

최근 자연재해와 더불어 각종 개발사업 등 인위적 간섭으로 인해 훼손되는 산림의 면적이 매년 확대되고 있다. 또한 기온상승, 강우패턴 변화 등으로 고유 산림식물의 서식환경이 점차 악화되고, 이로 인한 산림생태계 교란과 건강성 저하는 자연재해 발생 시 피해면적 확대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한반도 핵심 생태축을 이루고 있는 백두대간의 경우, 과거 도로 개설로 인해 마루금(능선)이 단절¹³⁾되어 산림경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백두대간 고유 생태계의 건강성과 역사성, 상징성까지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도로 개설 등 인위적으로

13) 포장도로 61개소, 비포장도로 2개소 등 총 63개소 단절(2007, 한국환경생태학회)

훼손된 백두대간 마루금 생태축을 훼손되기 이전의 구조와 기능을 가진 원래의 상태에 가깝게 돌려놓음으로써 백두대간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생물다양성과 온전성·건강성·회복력 등을 증진시킴과 동시에 재해방지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06년부터 2014년까지 백두대간 지역의 폐광산, 폐군사시설, 사유토지 매수지 등을 대상으로 69.9ha의 면적을 생태적으로 복원하였으며, 백두대간과 연계된 생태축인 정맥·지맥지역 훼손지 15.7ha에 대해서도 산림으로 복원하였다.

표 2-4-18 연도별 백두대간 등 산림생태복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2006~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합계	85.6	20.8	9.6	13.6	23.7	6.8	11.1
백두대간	69.9	20.8	9.6	11.0	15.7	3.8	9.0
정맥·지맥	15.7	-	-	2.6	8.0	3.0	2.1

또한 도로 개설 등으로 인하여 단절된 백두대간 마루금에 대해서는 친환경 터널 설치 후 그 위에 원지형과 식생을 복원하여 연결하는 ‘백두대간 마루금 생태축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2년 이화령(충북 괴산~경북 문경)을 시작으로, 2013년에는 일제강점기 단절된 육십령(전북 장수~경남 함양)과 벌재(경북 문경) 구간을 복원하였으며, 2014년에는 비조령(경북 상주) 구간 복원과 동시에 정령치(전북 남원) 복원을 위한 설계를 추진하였다.

생태계의 건강성과 종다양성이 우수한 백두대간의 경우, 생태축이 복원된 이후에 야생동물이 이동하는 모습과 배설물 등이 현장에서 자주 발견되었으며, 특히 육십령의 경우 멸종위기 2급 동물인 삿대벌레가 출현하여 화제가 되었다.

한편, 복원 후에도 복원 목표에 따라 복원과정이 제대로 진행되는지의 여부를 평가하여 복원효과를 검증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현장에 설치된 CCTV 분석과 현장조사를 통해 식생변화, 야생동물 이동 등 생태계 회복과정과 복원사업의 효과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3. 자연자원을 활용한 지역의 경제적 기반 및 환경 개선

(1) 경관보전직불제

농지에 경관작물을 재배하고 마을경관보전활동을 실시하여,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고 형성하여 지역축제·농촌관광 등 도농교류프로그램과 연계함으로써 지역활성화 및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하였다.

지원대상 작물은 유채, 자운영, 메밀 등 꽃이 피는 경관작물과 청보리, 밀 등 꽃이 피지 않지만 경관형성에 도움이 되는 준 경관작물로 구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관형성을 위하여 경관작물은 2ha이상, 준경관작물은 10ha이상 집단화된 지구에 대하여 참여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경관보전직불 지원단가는 경관작물 170만원/ha, 준경관작물 100만원/ha, 마을경관보전활동비 15만원/ha(국고 70%, 지방비 30%)를 지급하고 있다. 2004년 3월 농어업인 삶의 질 특별법 제정으로 법적근거 마련하였으며, 2005년부터 경관보전직불제 시범사업 추진하여, 2008년부터 본 사업을 추진하였다.

표 2-4-19 경관직불보전제 연차별 사업추진 내역

(단위 : ha, 백만원)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 시행면적	470	470	800	5,814	16,171	16,600	13,741	13,786	12,796	12,696
-경관작물	시범사업 (구분없음)			502	600	1,000	5,928	5,796	7,483	7,648
-준경관작물				5,312	15,571	15,600	7,813	7,990	5,313	5,048
○ 예 산	600	600	1,000	2,646	9,640	15,679	13,903	7,579	14,072	14,072
- 직불금	560	560	952	2,596	9,590	15,596	13,853	7,475	13,968	13,968
- 행정비	40	40	48	50	50	83	50	104	104	104
○ 마 을 수	45	44	60	412	939	795	788	796	527	519
○ 농 가 수	763	641	1,216	6,549	16,287	17,632	15,660	18,386	12,778	10,572

경관작물 재배를 통해 꽃을 활용한 지역축제로 지역 이미지 제고뿐 만 아니라 지역 대표 축제로 발전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휴경지 상태로 농촌의 미관을 저해하는 농지의 기능회복과 깨끗한 마을경관 형성에 기여하였다.

마을경관보전활동의 핵심인 시장군수와의 협약 및 경관보전활동이 형식화되고 경관

작물 재배에만 치우쳐 있으며, 소득작물인 준 경관작물의 재배를 선호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주도의 마을경관보전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마을경관보전활동의 유형화와 활동비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며, 경관형성 효과가 우수한 경관작물의 면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준 경관작물은 밭농업작물(논 이모작 등)로의 전환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2) 농촌다원적자원활용사업

농촌의 토지이용을 통하여 오랫동안 형성되어온 경관 및 전통생태농법 등 전통문화가 깃든 농어촌 고유의 자원을 복원·발굴하여 관리하고, 활용함으로써 생물다양성 및 다원적 가치를 증진하고 농촌다움 유지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추진하였다.

사업대상은 농업과 관련된 전통적인 유산자원의 보유지역이며 사업초기에는 국가농업유산으로 지정된 지역을 우선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다원적자원활용 사업은 지역 유산자원을 복원하고, 이를 활용하여 지역브랜드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3년간 15억원(국비 70%, 지방비 30%)을 지원하고 있다.

2012년 3월에 국가농어업유산제도도입 하였으며, 12월에 농업유산지정관리기준(고시)을 제정하고 2013년부터 농촌다원적자원활용사업을 추진하였다. 2013년 1월 10일 국가농업유산 2개소를 지정(청산도 구들장 논, 제주 밭담)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4년말 현재 4개 지구에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국가농업유산지정 및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2014년 말 현재 국가농업유산 4개소를 지정하고, 지정지역을 다원적자원활용사업지구로 선정하여 농업유산자원의 보전관리 및 활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3년도에 지정한 국가농업유산(청산도 구들장논, 제주 밭담)이 FAO GIAHS(세계 중요농업유산)에 등재(2014년 4월)됨에 따라 우리나라 농업유산의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는데 성과를 거두었다. 지자체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농업유산자원의 발굴 및 관리에 한계가 있어 전문기관을 통한 체계적인 발굴지원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지역 자원발굴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표 2-4-20 국가농업유산지정 및 다원적자원활용사업지구 현황

지정번호	명칭	지정범위	주요 특징
농업유산 제1호	청산도 구들장 논	청산도 전역 (5.0ha)	○전통온돌 방식인 구들장 방식의 통수로가 논바닥 밑에 설치된 논
농업유산 제2호	흑룡만리 제주 돌담 발	제주도 전역 (22,108km)	○현무암으로 만들어진 발을 둘러싼 돌담
농업유산 제3호	구례 산수유농업	구례군 산동면 일원(228ha)	○전국 생산의63%, 천년된 산수유나무 보유, 산수유 군락 및 낮은 돌담 등 경관우수, 지역고유의 재배기술 보유
농업유산 제4호	담양 대나무밭	담양읍 삼다리, 향교리 일원(56.2ha)	○전국 죽림면적의 26%, 경관적가치우수, 생물다양성 및 죽순생산, 농기구이용 및 전통죽제품 생산

(3) 생태관광지역 지정, 육성

기존 규제중심의 자연자원 보호정책은 생태 우수지역에 대한 개발행위 제한 등으로 지역사회에 불만을 가중시켰었다. 이에 자연환경보전 정책의 패러다임을 자연을 느끼고 즐기면서 보전하는 '현명한 이용'으로 전환하고 생태관광 정책을 도입하였다. 최근의 급속한 도시화로 국민의 생태체험 수요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러한 수요를 자연자원의 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체계 구축에 활용하고 생태관광 용어 남용, 자연보전이 담보되지 않은 프로그램 운영 등 생태관광산업의 왜곡을 방지하고자 생태관광지역을 지정·육성하고 있다.

2008년 10월 람사르 총회 개최 이후 생태관광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환경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동으로 '생태관광 활성화 대책'을 마련(2008년)하였으며, 2014년에는 질적 향상과 우수사례 확산을 위해 성공모델(제주 선흘1리, 인제 생태마을, 고창 용계마을, 영산도 명품마을) 중점 육성을 통한 생태관광 활성화를 주요내용으로 '생태관광 활성화 대책'을 보완하였다.

생태관광지역 지정·육성 정책은 2010년 '한국형 10대 생태관광 모델사업', 2011~2012년 생태관광지 핵심모델개발사업, 2013년 생태관광지역 시범사업을 거쳐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자연환경보전법」을 개정(2013년 3월)하여 본격적인 '생태관광지역 지정제도'가 추진되고 있다. 생태관광지는 2014년 12개소, 2015년 5개소의 총 17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표 2-4-21 생태관광지역 지정 현황

구 분	생태관광지역 지정현황
개 념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교육할 수 있는 지역
근 거	자연환경보전법 제41조
생태관광 지역 지정	① 부산-낙동강하구, ② 울산-태화강, ③ 강원 양구-DMZ, ④ 강원 인제-생태마을, ⑤ 강원 평창-백룡 동굴 일원, ⑥ 충남 서산-천수만철새도래지, ⑦ 충남 서천-금강하구 및 유부도, ⑧ 전남 순천-순천만, ⑨ 경북 울진-왕피천계곡, ⑩ 경남 창녕-우포늪, ⑪ 경남 남해-앵강만, ⑫ 제주 제주시-동백동산습지, ⑬ 경기 안산-대부도, ⑭ 강원 강릉-가시연습지와 경포호, ⑮ 충북 괴산-산막이옛길과 괴산호, ⑯ 전북 고창-고인돌·운곡습지, ⑰ 제주 서귀포-효돈천과 하례리 마을

생태관광지역 지정은 지방자치단체 공모 및 추천을 받은 후 전문가 서면평가, 현장 조사, 문화체육관광부 협의를 통해 지정하며, 자연·생태적 가치, 도입 시설의 생태적 설계, 환경과 지역문화 이해도, 지역사회의 추진의지와 기반, 보유 생태자원에 대한 보전·관리 전략 등을 평가한다. 지정 이후에는 주민협의체 운영,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지역주민 역량 강화 등에 국고보조금을 지원(보조율 50%)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생태탐방로, 친환경 숙박시설 조성 국고보조사업을 우선 지원하고 전문가 컨설팅, 집중홍보 등을 실시한다.

2015년은 질적 향상을 위해 성공모델 중점 육성을 통한 우수사례 발굴을 집중 추진하고 점차 양적 확산을 도모할 계획으로 2017년까지 30개소를 지정할 예정이다. 생태관광은 관광객, 지역주민, 자연환경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지원

정부는 1994년에 제정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근거하여 중앙정부의 획일적이고 사후적인 규제를 통한 환경관리에서 벗어나 지역주체가 능동적으로 지역 특유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을 시작하였다.

1998년 12월에 울산과 전남여수 지역에 최초로 녹색환경지원센터를 지정한 이래 2000년 8월에 8개소, 2001년에 5개소, 2002년에 1개소, 2005년에 2개소를 지정하여 현재 전국 16개 시·도에 총 18개소의 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센터는 당초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로 지정·운영하였으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시행 2011년 10월 29일)에 따라 녹색환경지원센터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녹색성장 기반조성 및 활성화 기능을 추가하였다.

표 2-4-22 녹색환경지원센터 지정·운영 현황

구분	1998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5년
18개소	2개소 (울산, 전남)	8개소 (강원, 인천, 대구, 경기, 시흥, 안산, 충남, 대전)	5개소 (충북, 경북, 경남, 전북, 광주)	1개소 (제주)	2개소 (부산, 서울)

그간 센터에서는 지역의 환경문제 해결 및 기업에 대한 기술지원을 위하여 2014년까지 틈새환경기술개발 및 조사연구 2,778개의 연구과제, 기업환경기술지원(컨설팅) 10,454개 업체, 누적인원 41만 5천명에 대한 환경교육을 수행하였다.

또한, 2011년부터는 영세중소기업 환경기술지원 사업비로(환경시설 개선비 지원, 업체당 최고 2천만원) 연간 약 13억원의 국고보조금을 편성하여 222개(2011년 77개, 2012년 77개, 2013년 68개, 2014년 69개) 업체의 노후된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개선하고 있다.

지역별 환경현안 해결을 위해 환경조사연구, 기업체 컨설팅, 환경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환경사각지대에서 환경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체 지원 등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제5장 사각없는 지역복지·의료

제1절 지역밀착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1. 주민밀착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1)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저출산과 고령화,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등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사회서비스 욕구가 지역·계층별로 다양하게 분출되었다. 아동의 정서·심리·행동 문제, 가족기능의 지원, 고령자 소외예방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해 적극적인 맞춤형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신규 개발하여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지역 주민의 욕구(needs)에 따라 예방적 복지서비스를 구현하고, 지자체 신규사업 개발을 통해 지역사회에 대한 진단을 스스로 할 수 있게 하며, 사회서비스 산업화·시장 활성화를 유도하여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방자치단체보조사업으로서 매칭비율은 국고 7: 지방비 3의 비율로 지원되고 있으며, 세부 내역사업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표 2-5-1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세부내용

세부 사업명	사업 내용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직접 기획한 사회서비스 지원 (아동재활, 아동역량개발, 노인장애인 사회참여, 가족역량관리, 신체·정신건강관리)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도우미의 산후조리 지원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저소득 취약계층에 재가간병·가사지원

별개의 단위사업으로 존재하던 3개의 사업을 2013년부터는 지역수요에 민감한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사회서비스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포괄보조로 재정배분 방식을 전환하여 시·도가 사업 기획 및 운영의 자율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효율적 관리체계를 도입하였다. 2015년부터는 포괄보조를 제도화하여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을 일반회계에서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전환하였다.

포괄보조로 전환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중앙정부(복지부)는 사업의 성과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시·도가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의 계획→집행→성과→환류의 단계에 따라 성과평가를 추진하고 있다. 연중 평가방식으로 상반기(계획, 서면평가), 하반기(성과, 현장평가)로 구분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결과에 입각하여 차년도 시·도별 사업 예산에 반영하는 환류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사회가 지역별 특성과 주민욕구를 반영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주도적으로 개발·제공토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개인 특성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아동, 노인 등에 대한 인적자본 형성, 건강투자 활성화,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제공, 고령근로 촉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 등 주민들의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성과가 있었다.

아울러 지속적인 재정 투자 확대를 통해 영유아,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성인, 가족 등 다양한 계층에 대해 생애주기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 제공기관 간의 경쟁을 통해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유도하는 등 제공기관의 양적 확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 복지공동체 활성화(민관협력)

우리나라의 복지예산은 2015년도 기준 115.7조원(총예산의 30%)으로 정부 예산의 1/3 수준이다. 국민소득을 고려하면 OECD 국가들 중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최하위 수준이지만 사회보장 제도의 종류 및 보장 규모의 지속 확대와 인구고령화 진행으로 복지지출의 증가속도는 OECD 최고 수준이다. 향후 산업구조나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한다면 국가의 복지예산 만으로는 늘어나는 복지예산 수요에 맞춤형으로 충분히 대응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 분명하여 복지자원 총량 확대를 위한 민관협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확대된 사회보장체계에도 불구하고 복지제도를 신청도 하지 않고 적절한 도

움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해소에도 민관협력이 절실하다. 정부는 2014년도 초에 발생한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지자체 복지담당 공무원 6천명 추가확충을 추진하고 있으나(2014~2017년) 그간 늘어난 사회보장제도의 집행 부담을 고려할 때 이들만으로 도움이 필요한 지역주민에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제7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마련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종합대책」(2014년 5월)에는 이러한 고민의 결과가 담겨있다. 정부는 복지담당 공무원을 확충하는 동시에 주민 최 접점인 읍면동 단위에서 지역주민과의 협력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상시발굴체계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먼저 주민협력을 통한 촘촘한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읍면동 인적안전망 강화”를 추진하였다. 이는 지역사회 통·이장을 복지업무에 적극 활용하는 복지통·이장제를 시행하는 것과, 부녀회장·자영업자·교사·종교인 등 지역주민으로 읍면동 별 10~40명 규모의 민관협의체를 구축·운영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이를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별도 예산 지원은 없었으나 선도적인 지역들의 우수사례 발굴과 그러한 사례들을 통한 성과에 대한 교육·홍보 등을 통하여 지자체가 스스로 움직이도록 유도하였다.

동시에 이와 별도로 모범적인 조직 구성·운영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읍면동 민관협의체의 확산모델 개발을 위해 전국 5개 시·군구 14개 읍면동에서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였다. 각 시·군구 당 2천만원씩 지원되는 예산을 마중물로 하여 읍면동 협의체 위원들 교육, 워크숍 등을 통해 지역차원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갔다.

각 시·군구는 2014년 8월까지 자체 추진실적을 수립하였고, 복지부는 2014년 10월과 2015년 2월 총 두 차례에 걸쳐 시·군구별 추진실적 파악하고 2014년 10월과 2015년 2월에는 현장을 다니며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독려하였다. 아울러 여러 차례에 걸쳐 지자체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였고(2014년 7월·12월, 2015년 2월) 지자체 우수사례를 공모·선정하여 포상(2014년 12월, 9.5억원) 하여 지자체들의 적극적인 추진을 유도하였다.

그 결과 2014년 12월까지 총 201개 시·군구에서 복지통(이)장제를 시행하였고, 218개 시·군구 3,276개 읍면동에서 총 7만 4천명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가 구성되었다.

이들은 일반 복지대상자 뿐 아니라 주민등록 말소자, 은둔형 외톨이 등 공무원이 미처 알기 어려운 위기가구 총 17만1천 가구 발굴하는 성과가 있었다. 또한 소액의 비공식적인 자원까지 포함하여 총 229억원 상당의 민간자원을 발굴하여 52만건에 달하는 서비스 연계성고가 있었다.

민관협력 확산모델 도출을 위해 추진한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의 시행지역은 일반 지역에 비해서도 뛰어난 성과를 나타냈다. 복지사각지대는 총 1,254가구를 발굴하였고, 민간자원은 총 6억 천4백만원 상당을 발굴했는데 7개월간 총 14개 읍면동에서 추진된 점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지역 수준 대비 복지대상은 4.8배 수준, 민간자원은 13배 수준의 성과를 달성한 것이다. 복지부는 이러한 시범사업 수행 성과와 노하우를 매뉴얼로 구성하여 전국에 총 5천부를 배포하여 민관협력 성공노하우를 확산하였다(2015년 2월).

(3)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지전달체계 구축(인력확충)

그간 복지인력 7,000명 확충(2011년~2014년) 등 지속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인력을 증원해 왔음에도 사회복지담당공무원 1인당 관리 대상자수는 크게 줄어들지 않아(2014년 6월 현재 읍면동 기준, 복지담당공무원 1인당 기초수급자수 99명) 찾아가는 서비스나 위기가구에 대한 지속적인 사례관리에는 한계가 있고, 복지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도 미흡하여 인력증원 효과가 반감되는 등 충실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애로를 겪어 왔다.

아울러, 사회복지담당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처우개선에도 불구하고 과중한 업무 부담, 악성 민원인의 폭행·폭언, 승진기회 부족, 행정직을 복지업무에 배치하였으나 이탈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등 행정직의 복지업무 기피 및 직렬간 칸막이 문제 등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및 인력확충의 효과성·지속성 제고를 위한 관리 강화를 위해 제9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및 관리방안」(2014년 10월)을 마련 추진하기로 하였다.

먼저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총 6,000명을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충원하

기로 하였고, 이중 맞춤형복지급여 제도 시행을 위한 신규 복지직 공무원 1,177명은 2014년 7월 시·군구에 우선 선발 배치하였으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복지직 3,360명(70%), 행정직 1,463명(30%) 등 4,823명을 매년 1,600명씩 충원하기로 하였다.

표 2-5-2 연도별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계획

(단위 : 명)

구 분		계	2014년	3개년 계획		
				2015년	2016년	2017년
계		6,000	1,177	1,600	1,600	1,623
사회 복지직	소 계	4,537	1,177	1,120	1,120	1,120
	정원 순증	4,057	1,177	960	960	960
	자연결원 대체	480	-	160	160	160
행정직 등	소 계	1,463	-	480	480	503
	행정직 순증	983	-	320	320	343
	행정직등 재배치	480	-	160	160	160

2015년부터 충원되는 인력은 복지대상자와의 접점인 읍면동 등 최일선 행정기관에 우선 배치하여 현장에 밀착된 사각지대 발굴·지원 및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읍면동 인적안전망 운영, 인적·물적 자원 발굴·연계, 노인·장애인 방문상담, 복합적 요구를 가진 복지대상자 사례관리 업무 등을 수행토록 하였다.

한편, 인력확충의 효과성·지속성 제고를 위해 시·군구별로 복지업무 수행 행정직 정원을 정원규칙에 별도 표기토록 하여 이탈을 방지토록 하고, 시도 정부업무 합동평가 시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운용관련 지표 신설·평가를 추진토록 하고, 복지업무 담당자의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 전보제한 기간을 현행 1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토록 하고, 1년 이상 복지업무 담당 경력에 대한 평정가점을 부여토록 하고, 2년 이상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직에 대해 장기재직 가산금(월 3만원)을 신설토록 하고, 시도 국장급 및 시·군구 부단체장 대상 사회복지 교육 연 2회 실시, 읍면동장 대상 사회복지 교육 연 1회 의무화, 5급 승진자 교육훈련 과정에 사회복지 교과목 편성·운영,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승진에 필요한 상시학습 시간(연간 80시간) 중 사회복지 관련 교육을 10%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하는 등 사회복지 분야 교육훈련 강화 방안도 함께 마련 추진하기로 하였다.

각 시도에서는 2015년 3월 14일에 신규 복지직 1,669명(2015년 목표 1,120명 초과)

선발을 위한 전국 동시 신규 복지직 채용 필기시험을 실시하여 7월중 임용·배치를 완료할 계획이며, 신규 행정직 채용(2015년 목표 320명)을 위해 2015년 6월 27일(서울 6월 13일) 필기시험을 실시하여 연내 임용·배치를 완료할 계획이며, 그 외 행정직의 복지 분야 재배치 등 인력구조 개선을 통한 확충은 2015년 9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그리고 사회복지 인력 관리 강화와 관련하여 2년 이상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직에 대해 장기재직 가산금(월 3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완료(2015년 1월) 하였고,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승진에 필요한 상시학습 시간(연간 80시간) 중 사회복지 관련 교육을 연 4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의 개정을 완료(2015년 1월) 하였다. 그 외 복지업무 담당자의 전보제한 기간 연장을 위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입법예고(1차 2014년 12월 22일~2015년 2월 1일, 2차 2015년 6월중 예정)를 추진 중에 있으며,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이 완료되면 1년 이상 복지업무 담당 경력에 대한 평정가점 부여를 위한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는 2016년 자치단체 합동평가 시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운용관련 지표 신설도 함께 추진 중에 있다.

(4)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지방자치제의 발전 및 그에 따른 지방재정 분권화 이후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전달체계 구축 및 공공과 민간의 협력적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2005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체계 구성·운영되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에 의거 지역 내 사회복지사업의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 심의·건의, 사회복지·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제공 사회복지 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 연계·협력을 목적으로 설치된 민관협력 기구로 2014년 기준 229개 시·군구에 설치·운영되고 있다.

특히, 2015년 7월 시행되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은 종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 확대 및 활성화의 전기를 마련하였으며 큰 틀에서 변화가 요구된다. 사회보장의 범주 확대로 보건·복지 영역 외에 사회보장 전 영역에 걸쳐 위원 구성을 확대하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협의체의 역할이 강화된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사업추진체계는 크게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로 구성된다. 대표협의체는 지역사회복지계획 등에 대한 심의 또는 건의 기능을 수행하고, 협의체 내에 지역사회 내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관련기관 간의 연계·협력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두며, 지자체 여건에 따라 실무협의체 내에 노인, 고용, 주거 등 복지대상자별·기능별 실무분과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2015년 7월부터 「사회보장급여법」이 시행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협의체 위원은 사회보장의 범주 확대에 그 위원 구성인원도 10명 이상 40명 이하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시·군구 협의체 업무 효율화를 위해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를 구성하는 것은 물론,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운영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해소하고 보다 촘촘한 지역사회보호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도부터 읍면동 단위까지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민관협력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주요기능은 지역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 및 지역사회복지계획 심의·건의,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서비스 연계·협력 강화이다. 2014년 말기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 실적은 다음과 같다.

표 2-5-3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현황

(단위 : 개, 명)

시·군구 수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운영실적				
	구성	참여 인원	구성	참여 인원	구성	분과 수	참여 인원	계	정책 심의	제도 개선	서비스 연계 조정	교육 훈련
229	229	4,643	228	4,862	227	1,915	17,821	113,173	3,820	885	106,689	1,779

2015년 7월부터 사회보장급여법 시행으로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확대되고, 시도 사회보장위원회부터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까지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도 대폭 개편될 전망이다.

이러한 지역사회보장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지자체가 협의체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협의체 기능 및 위원구성 확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운영 등을 포함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침 개정 및 조례 제·개정 지원 등의 후속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읍면동 복지기능 강화 및 민관협력 활성화의 지역복지정책 추진방향에 부응하여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효율적으로 구성·운영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통한 다양한 모형 제시 등의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그림 2-5-1 2015년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방향

비전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 발굴·연계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 및 지역사회보장 증진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공공·민간 거버넌스체계 구축 ●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욕구에 대응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 내 자원 발굴·연계 강화 및 지역주민 참여 활성화로 지역사회 문제 해결
금년도 추진 계획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지역사회보장 관련위원회 통합 운영 등을 통한 협의체 기능 내실화 ② 협의체 간 교류·협력 촉진 및 우수사례 공모를 통한 인센티브 제공 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환을 통한 기능 강화 및 확대
제도적 기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운영 등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 개편 ○ 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한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적 지원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 및 지자체 조례 정비를 통한 협의체 운영기반 조성

(5) 나눔문화 활성화

최근 인구 고령화 등으로 계속 증가하는 복지 수요에 대응하는 데는 정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민간자원의 활용을 통한 사회적 자본 확충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우리나라 국력과 경제적 역량에 상응하는 선진화된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걸림돌을 제거하여 국민행복이 국가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새로운 선순환 구조 확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간의 정책적 노력으로 나눔의 양적 규모는 크게 늘었지만, 나눔에 대한 관심 부족과 나눔정보 제한 등으로 생활 속 나눔문화 정착은 미흡한 실정이다. 사회지도층 기부에서도 미국은 빌게이츠, 워런 버핏과 같이 기업주 본인이 기부하지만, 우리나라는 대부분 기업 명의로 기부하고 있어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나눔단체의 회계정보 공개 수준이 미흡하고, 객관성과 투명성도 부족하여 국민들의 신뢰가 낮으며, 나눔 관련 법규가 부처별로 분산되어 장기적·거시적 안목의 나

눔정책 부제로 추동력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다.

정부에서는 ‘일상·평생·신뢰의 나눔’을 비전으로 각각 5대 우선추진과제와 제도개선과제를 선정, 범부처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하기 위해 나눔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과 제도적 지원 방안을 담은 「나눔문화 확산 개선대책」을 논의·확정(국가정책조정회의, 2014년 3월)했다(국정과제 44-④).

표 2-5-4 추진체계도

비전	일상의 나눔, 평생의 나눔, 신뢰의 나눔	
목표	나눔의 사회적 실천 확산 및 제도화	
추진 과제	우선추진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부문 나눔실천 선도 ❖ 나눔문화 저변 확대 ❖ 기업의 사회공헌 활성화 ❖ 생활 속 나눔교육 확대 ❖ 자원봉사 활동 질적 제고
	제도개선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부연금제도 도입 ❖ 나눔단체 투명성 강화 ❖ 기부금품 및 공익신탁 정비 ❖ 나눔활동 정보 제공 강화 ❖ 나눔정책 총괄·조정기능 강화
추진 기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눔기본법」 제정을 통한 범부처 협업체계 구축 ▪ 방송·언론 등 전략적 홍보를 통해 대국민 인식 확산 	

나눔에 대한 기본원칙 제시, 나눔교육·통계·연구 등 지원 확대, 나눔문화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부처간, 민관협의체 구성·운영(나눔문화위원회), 계획기부의 한 형태인 기부연금 제도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나눔기본법」 제정안(2013년 11월, 문정립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관련부처, 나눔단체 등의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정부 조정안 초안을 마련(2014년 10월)했다.

또한, 일상 금융거래와 나눔이 연계된 ‘나눔금융상품’을 개발(2014년 6월, 50만명 가입)하여 생활 속 손쉬운 기부문화를 촉진하였고, 나눔 통계 발표(2014년 4월, 통계청), 기부금품의 일정가액을 연금형태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기부연금 제도’ 도입 방안, 사회공헌활동(돌봄봉사)을 마일리지로 적립하여 향후 돌봄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는 ‘사회공헌활동기부은행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등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나눔 가치 확산과 저변 확대를 위해 나눔실천자 초청 격려, 나눔교육 확대, 제5회

나눔대축제, 제3회 대한민국나눔국민대상, 기업 사회공헌 활성화를 위한 정보·교육·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나눔문화 확산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였다.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해 나눔 관계부처 T/F 구성·운영 등 적극적인 협업을 통한 추진방안 마련 및 추진상황 주기적 점검·평가 체계 구축으로 국민체감도를 제고하여, 나눔문화 정착과 민간자원의 활성화 정도를 보여주는 나눔문화 참여도(기부, 자원봉사 참여)가 전년(53.4%)에 비해 11.2% 포인트 증가한 64.6%를 달성했다.

2. 지역수요를 반영한 주민체감형 건강증진사업 강화

(1)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1990년대 후반부터 서서히 추진해오던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은 2000년대 초반에 본격적으로 증가하면서 60여개의 사업으로 확대되었으나, 사업별 예산의 규모가 작고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지침과 평가지표 설정으로 지자체의 자율성이 제한되어 왔다. 여러 서비스가 상호연계 없이 분절적으로 제공되고,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건강문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채 수동적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실질적인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존재하였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20)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여건과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건강증진서비스를 자체적으로 개발·집행하도록 2013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을 도입하였다.

기존의 획일적 지침과 일방적 예산·사업량 통보방식에서 벗어나,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별 연간예산액(포괄보조금)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건강문제 분석을 통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인력운용과 서비스제공 방식을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에 맞추어 능동적·자율적으로 기획·실행토록 전환하였다.

또한, 보건소 업무 추진방식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건강증진사업 평가체계를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정성적 평가로 구축하고, 평가지표 또한 지자체의 주도적 사업추진이라는 큰 틀의 변화에 적응하고 분절적 사업을 통합·연계하는 방향성을 제시하도록 지역 건강문제 분석·평가, 취약계층에 대한 사업계획, 지역자원의 발굴·연계, 사업의 모니터링·환류 등 과정상의 내용들을 중심으로 설정하였다.

2014년에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을 보건소에서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반이 참여하고 관심을 높여 주민이 체감하는 건강증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보건소가 리더십을 발휘하여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조정함으로써 건강증진사업 외연 확장에 주안점을 두고 지원하고 있다.

특히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계획을 포함 시킴으로써 중장기적 관점의 일관성 있는 사업이 수행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건강증진사업의 무게중심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동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큰 계기가 되었다.

(2) 주민 정신건강 지원확대

급격한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로 인해 우리나라의 성인의 평생 정신장애 유병률이 25%에 달하며(2011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인구 10만명당 자살 사망자 수가 2012년 기준 29.1명으로 OECD 국가 평균(12.1명)의 2.4배에 달하는 등 국민의 정신건강 문제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중증 정신질환자 치료·재활 중심의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체계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 조기 발견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주민 정신건강 지원 사업은 지역의 정신건강증진센터를 기반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정신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이를 예방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상담, 치료,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복귀를 돕는 등 국민의 정신건강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정신보건법 제13조(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등) 및 제13조의2(정신보건센터의 설치)를 근거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여 주민의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 정신보건 전문기관이다. 각 시도 단위에 광역 정신건강증진센터, 시·군구 단위에 기초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정신건강증진사업·중증정신질환관리사업·아동청소년정신건강증진사업·자살예방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는 주로 전반적인 지역정신보건사업의 기획·조정·홍보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주요 업무는 ① 해당지역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지역

정신보건사업 기본(시행)계획 마련, 기초조사 등 수행, ② 광역 및 기초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활용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효과성 평가, ③ 정신질환 인식개선, 정신보건서비스 인지도 향상 등을 위한 광고·홍보 및 캠페인 등 수행, ④ 지역 정신보건전문요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자살예방 게이트 키퍼 등 양성, 정신질환자 당사자 및 가족 인권교육, ⑤ 지역사회 서비스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및 업무조정, 위급상황에 대한 응급대응체계 구축 등이며, 정신건강 상담전화(1577-0199) 24시간 핫라인 운영 및 응급위기대응, 광역 정신보건심판위원회 평가 업무 지원 등의 업무도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는 주로 직접서비스 제공 중심으로 해당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 문제 상담, 사례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의 업무를 하고 있으며, ①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상담 프로그램, 사례관리, 병원연계, 위기개입, ② 자살 고위험군 조기발견, 병원연계, 상담 프로그램, 사례관리 등 자살예방 사업, ③ 아동·청소년 대상 정신질환 조기발견, 정서행동특성화 검사(교육청) 사후관리, 병원연계 및 치료비 지원, 바우처연계, ④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일반상담, 심리검사, 정신 관련 행사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998년 정신건강증진센터 4개소를 설치하여 개소수를 점차 확대, 2014년 12월 31일 현재 전국 시·도 및 시·군·구에 212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2012년부터는 통합정신건강증진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광주광역시에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자살예방센터, 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하여 지역사회 정신건강 전달체계의 중심기관으로서 통합적 정신건강증진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2013년에는 지역사회 내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을 위해 정신건강증진센터 중 100개소에 아동·청소년정신건강증진사업을 확대하여 스트레스, 우울증, ADHD 등 아동·청소년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전문 상담 및 치료비 지원을 실시했다. 또한 학생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교육부와 공동으로 ‘학생 정신건강 지역협력 사업’을 추진하여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정신건강증진센터·학교 및 정신의료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조성하였는데, 2013년 6개 지역으로 시작하여 2014년 12개 지역으로 확대하여 취약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 정신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4년에는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2개소, 기초 정신건강증진센터 10개소를 신규로 설치하고,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을 130개소로 확대하였다. 또한 4·16 세월호 침몰사고, 어린

이집 아동학대 사건 등을 계기로 각종 재난·사고 발생 시 피해자 등에 대한 심리지원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세월호 사고 피해자가 집중되어 있는 안산지역에 안산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하고, 재난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역의 정신건강증진센터를 통해 심리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제2절 맞춤형 복지시책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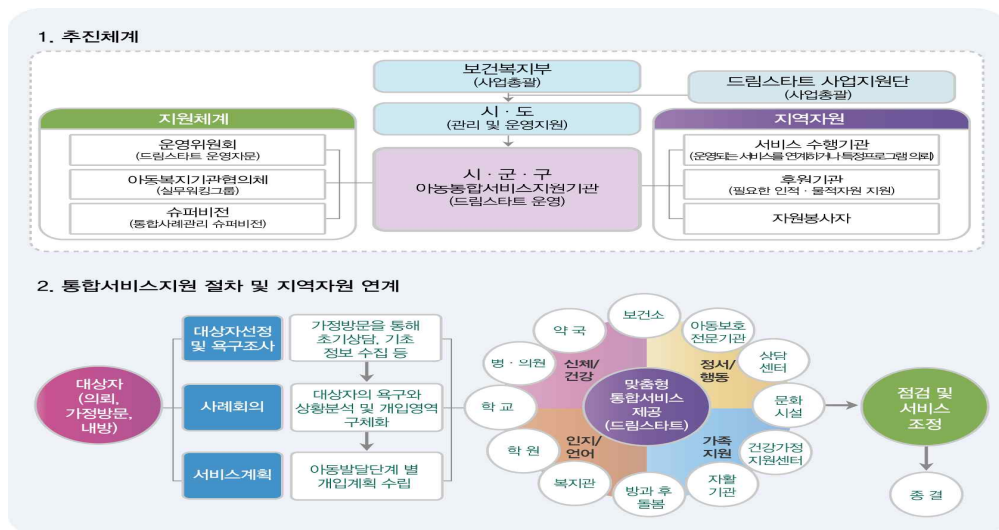
1. 수혜자 특성을 고려한 주민지원 시책 확대

(1) 드림스타트 지원사업

드림스타트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여 취약계층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고, 나아가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아동복지정책이다. 기존의 아동복지서비스가 문제 발생 후 단편적이고 치료적인 면에 초점을 두었다면 드림스타트는 기존의 패러다임을 탈피,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통합적인 사례관리를 통하여 문제 발생을 예방하는 사전적이고 능동적인 복지를 추구하고 있다.

기초수급 또는 차상위 계층 등의 아동(0세~12세)과 그 가족, 임산부를 대상으로, 아동에게는 건강·복지·보육·교육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부모에게는 부모교육 프로그램 및 직업훈련·고용촉진서비스 등을 연계·제공함으로써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고 동시에 가족기능 회복을 통해 안정적이고 공평한 양육여건이 보장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표 2-5-5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체계 및 서비스지원 절차 등



보건복지부는 드림스타트 사업을 총괄하고 시·군·구 드림스타트가 운영하고 있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통합사례관리로서, 드림스타트는 지원이 필요한 대상아동을 발굴하고 가정방문을 통해 아동과 그 가족에게 필요한 서비스 수요를 파악하고 지역자원(서비스)과 연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즉, 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학교, 보육시설, 보건소 및 민간 의료기관 등 다양한 지역 내 아동 복지자원을 연계하여 경제적 후원뿐만 아니라 정서적 후원효과까지 도모하고 있다.

2007년 이후 시·군·구 드림스타트 확대를 꾸준히 추진해 온 결과, 2013년 대비 9개 신규지역을 추가하면서 2014년 12월 현재 219개 시·군·구 드림스타트를 통하여 6만 6,551가구, 10만 7,127명의 아동이 서비스를 지원받게 되었다. 2015년에는 전국 229개 전체 시·군·구로 사업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양적 확장과 더불어 드림스타트는 질적 서비스 수준을 제고를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대상아동 및 부모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아동과 양육자 모두에게 긍정정인 효과가 확인되었다. 특히 아동이 어릴수록 서비스 수혜의 효과가 다른 연령대보다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2) 지역아동센터(방과후돌봄)

지역아동센터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해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홀로 방치될 수 있는 지역 내 아동들에게 사회적 안전 보호망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설치 가능한 소규모 아동이용시설로서 아동의 집에서 근거리 이용의 편리성을 도모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내 인적·물적 자원을 통해 홀로 방치되는 학령기 아동(18세 미만)에게 학습능력 제고, 정서지원, 문화체험 등 다양한 경험 제공으로 취약계층 아동에게 사회의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1985년부터 빈곤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에서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을 위해 자생적으로 설립·운영해 온 '민간 공부방'은 IMF 이후의 사회현상과 맞물려 방과 후 방임

아동이 증가함에 따라 그 수가 급증하였다.

여성의 사회진출로 인한 맞벌이 가족의 증가, 근로빈곤층의 확대 등으로 인해 방과 후에 홀로 방치되는 아동에 대한 돌봄이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되면서, 정부는 민간 공부방을 지역아동센터로 법제화(「아동복지법」 개정 2004년 1월 29일)하여 공적 전달 체계로 제도화하고 운영비 지원을 시작하였으며, 현재는 지역사회 안에서 아동의 건강한 성장뿐 아니라 가족기능을 강화하고 아동의 종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정부는 지역아동센터의 기능 강화와 타 부처 방과후 돌봄서비스와의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인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지역사회 돌봄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부처간 연계협력 업무협약 체결(2012년 10월) 이후, 2013년에 지역아동센터(보건복지부), 초등돌봄교실(교육부), 방과후아카데미(여성가족부) 등 부처별로 실시하고 있는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연계하였고, 2014년부터 전국적으로 지역아동센터 4,059개, 초등돌봄교실 10,702실, 방과후아카데미 200개소가 연계하여 범정부 방과후 돌봄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하여 전국 단위 시·군·구·교육지원청에서 방과후 돌봄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범정부 통합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표 2-5-6 연도별 지역아동센터 지원 규모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지원 개소	244	500	902	1,800	2,788	2,788	2,946	3,260	3,500	3,742	3,989
지원단가 (만 원/월, 개소)	67	200	200	200	220	상반기 220 하반기 320	320	370	395	420	433

표 2-5-7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내용

프로그램명	내 용
보호프로그램	일상생활지도, 급식제공, 위생건강관리, 생활안전지도 등
교육프로그램	숙제·교과 학습지도, 특기적성, 동아리 활동 등
문화프로그램	체험활동(관람, 견학, 캠프 등) 및 참여활동(공연, 행사 등)
정서지원	상담(부모·가족, 아동 상담) 및 가족지원(보호자 교육, 가정방문 등)
지역사회연계	기관홍보 및 지역사회 내 인적·물적 자원연계

표 2-5-8 연령별 이용아동 현황('14.12월말 기준)

(단위 : 명)

계	미취학	초등학생 저학년	초등학생 고학년	중학생	고등학생	탈학교 등
108,936 (100%)	3,533 (3.2)	40,425 (37.1)	40,662 (37.3)	20,121 (18.5)	4,035 (3.7)	160 (0.2)

출처 : 2014년 12월 기준 전국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 보고서

(3)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인을 위한 요양제도 도입 추진(2008년 100대 국정과제) 및 VIP 주재 국민경제대책회의 서민희망과제 채택(2010년)에 따라 기존 활동보조사업을 확대하여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시행(2011년 10월)되었다. 동 제도는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장애인의 활동지원 인정조사결과와 생활환경에 따라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급여액을 매월 바우처(이용권) 형태로 제공함으로써(기본급여(1~4등급) 41~101만원, 독거 등 생활환경에 따라 추가급여(8.6~234.1만원))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을 토대로 장애인활동지원이 본격 제도화(시행 2011년 10월 5일)됨에 따라 대상자 수 확대(30천명→65천명)를 통한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및 가족수발자의 부양 부담을 경감시키고,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 서비스 내용 확대로 방문간호사 등 유휴인력의 추가적 일자리 창출로 활동보조인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19천명→57천명)을 확대하였으며, 위탁사업기관으로 국민연금관리 조직 내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운영부서인 '장애인활동지원부'를 신설하여 292명의 전문인력 배치로 인정조사 전문화는 물론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신청 안내 및 제도의 인지도 제고 및 정책 홍보를 실시하였다.

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의 욕구에 부응하는 돌봄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였고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정부 재정지원에 의한 민간부분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저소득층 중년 여성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게 되었다.

또한 2013년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시범평가를 거쳐 2014년부터 활동지원기관에 대해 유형별로 3개년 평가를 실시하여, 장애인에게는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유도하고 있다.

아울러, '중증장애인 보호대책 마련'(국정과제 50-2) 선정에 따라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장애 1급→장애1~2급) 및 급여(35~153만원→41~335만원) 확대(2013년 8월~),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2013년 10월~) 등으로 중증장애인 상시보호를 위한 통합 돌봄 제공체계 마련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및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있다.

(4)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저소득·맞벌이·한부모 등 취약계층 가정의 방과후 홀로 시간을 보내는 청소년들에 대하여 학습능력 배양·체험활동·급식·건강관리·상담 등 종합 학습지원 및 복지·보호를 통해 건전한 성장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및 학교와 가정·지역사회가 연계하여 공교육을 보완하는 방과후 활동을 통해 공적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2005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주5일 수업제 시행에 따른 다양한 복지 서비스 수요에 부응하여 계층 간 격차 완화 및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있다.

맞벌이·한부모·부모의 실직·파산·신용불량 등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방과후 아카데미 지원을 받는 청소년(초4~중2)은 2005년 2,350명(연인원: 225,600명), 2006년 4,200명(연인원: 1,260,000명), 2007년 6,300명(연인원: 1,890,600명), 2008년 7,680명(연인원: 2,165,760명), 2009년 7,245명(연인원: 2,064,825명), 2010년 6,645명(연인원: 1,727,700명), 2011~2014년 8,200명(연인원: 2,148,400명)으로 점증적으로 대상 청소년이 늘어나고 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시행은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운영하고 있으며, 방과후 아카데미 실시 장소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공공청소년공부방, 청소년단체시설 등을 활용하고 있다. 2008년 185개소가 운영되다가, 2009년 178개소, 2010년 161개소로 잠시 축소운영 되었으나, 2011년 다시 200개소로 대폭 확대 운영되었다. 운영방식에 있어서는 2005년 시범실시(46개소) 이후 2006년 지자체 보조사업으

로 전환(국비 50%)되어 지자체 매칭펀드 방식으로 운영되다가 2009년 청소년육성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환되었다. 2014년 국고 144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서울의 경우 30%, 다른 지역의 경우 50%가 국비에서 지원되었다.

표 2-5-9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목적	저소득·맞벌이·한부모 등 취약계층 가정의 방과후 홀로 시간을 보내는 청소년들에 대한 학습능력 배양·체험활동·급식·건강관리·상담 등 종합 학습지원 및 복지·보호를 통해 건전한 성장 지원
사업대상	맞벌이·한부모·부모의 실직·파산·신용불량 등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방과후 홀로 지내는 청소년 (초4~중2) - 2005년 : 2,350명(연인원: 225,600명) - 2006년 : 4,200명(연인원: 1,260,000명) - 2007년 : 6,300명(연인원: 1,890,600명) - 2008년 : 7,680명(연인원: 2,165,760명) - 2009년 : 7,245명(연인원: 2,064,825명) - 2010년 : 6,645명(연인원: 1,727,700명) - 2011년 : 8,200명(연인원: 2,148,400명) - 2012년 : 8,200명(연인원: 2,148,400명) - 2013년 : 8,200명(연인원: 2,148,400명) - 2014년 : 8,200명(연인원: 2,148,400명)
시행주체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동 운영
설치시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공공청소년공부방, 청소년단체시설 등
사업기간	2014.1~12월 연중 상시 실시(토요일, 방학중에도 운영)
사업개소	200개소(기본형: 1개소 총40명, 1개반 20명, 2개반) 운영
사업예산	144억원(국비지원율: 서울 30%, 지방 50%)

(5) 청소년시설 확충

청소년수련시설 확충사업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건전한 활동 공간 제공을 위해 전국적으로 청소년수련시설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시·도 및 시·군·구에 청소년수련관 1개소 이상, 읍·면·동에 청소년문화의집 1개소 이상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수련시설 건립 및 기능보강을 지원하며, 주5일 수업제 등으로 인해 증가하는 청소년

여가시간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청소년수련시설 유형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청소년특화시설, 유스호스텔로 구분되어 있다. 청소년수련시설 현황은 2014년 말 현재 청소년수련관 187개소, 청소년문화의집 233개소, 청소년수련원 188개소, 청소년야영장 42개소, 유스호스텔 128개소, 청소년특화시설 9개소 등 전국에 787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

2014년에는 청소년수련관 9개소 건립에 101억원, 청소년문화의집 13개소 건립에 97억원, 청소년특화시설 2개소 건립에 16억원, 청소년시설 52개소 기능보강에 236억원 등 모두 450억원을 지원하였다.

표 2-5-10 청소년수련시설 현황(2014년 12월 31일 기준)

(단위 : 개소)

구 분		계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계	787	187	233	188	42	128	9
	공공	513	184	227	54	21	18	9
	민간	274	3	6	134	21	110	0

표 2-5-11 2014년도 청소년시설 확충사업 지원현황

(단위 : 개소, 억원(국고))

구 분		계	건립지원			기능보강 지원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시설 확충	지원개소	76	9	13	2	52
	지원액	450	101	97	16	236

2.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복지서비스

(1)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사업

농촌지역은 65세 이상 고령자뿐만 아니라 노인독거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주거·영양·위생 여건 등 독거노인들의 삶의 질이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주택은 노후화되었으나, 수선 및 난방 비용이 부담되어 겨울철에도 난방을 하지 않고 지내는 경우가 많으며, 혼자이다 보니 식사를 걸러 영양이 불균형하거나, 우울증 등으로 인해 자살 및 고독사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사회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농촌지역 고령자의 주거·영양·위생 여건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여 고령화 문제를 극복하고 대안적 노인복지 모델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4년에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을 시작하였다.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사업은 접근성이 좋은 마을·읍면 중심지에 마을회관 등 유희시설을 활용하여 공동생활홈, 공동급식시설, 작은목욕탕을 조성해 주는 사업이다. 공동시설은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를 고려하여 무장애디자인(Barrier Free Design) 또는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을 적용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토록 하였으며, 부처간 협업을 통해 공동시설 중심으로 복지·의료·문화 서비스 프로그램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서비스 체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연계 서비스 프로그램으로는 복지부의 건강100세 노인운동 서비스, 문체부의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 농식품부의 가사도우미 등 11개 사업을 발굴·지원하고 있다. 또한, 사업성고를 높이기 위해 한국농촌건축학회 소속 민간전문가를 총괄계획가로 지정하여 계획 수립부터 공사 시행, 사후 평가까지 사업 전 과정에 참여하여 지자체가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14년에는 전국 50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동생활홈 35개소, 공동급식시설 26개소, 작은목욕탕 14개소를 선정하여 국비 4,150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을 지원하였다. 이를 통해 농촌지역 고령자들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동시설을 제공하여 외로움·불안감 감소와 함께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등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

앞으로는 2014년 시범사업 추진 결과를 분석하여 공동시설 유형별 사업운영 모델을 개발 및 우수사례집 제작 등을 통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확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2) 어린이집 확충

국공립어린이집은 부모의 선호도가 높으나 전체 어린이집의 5.7%(2014년 말)에 불과하여 지속적인 확충이 필요하다. 어린이집 확충 사업은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 확충하여 공공보육인프라 확대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대상 선정은 농어촌 및 저소득 밀집지역, 산업단지, 군관사 인근지역,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다문화 밀집 지역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선정하여 시설 접근성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은 개소당 330㎡까지 지원하되, 예산 범위 내에서 396㎡까지 지원하여 최대 251,460천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내 의무어린이집 중 지자체가 무상임대 받아 국공립으로 운영하려는 시설에는 최대 25,000천원을 지원하고 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2014년 말 기준 2,489개소가 설치·운영되어 159,241명의 아동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정부는 2013년 75개소, 2014년 150개소를 선정·지원하였으며, 국정과제에 따라 2017년까지 매년 150개소씩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면서 효율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을 기부채납한 기업 근로자의 자녀 및 공동주택 입주민 자녀에게 입소 우선권을 부여하고 국가 또는 지자체가 부지·건물을 매입하거나 기부채납 받은 경우 단독·공동주택에도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 가능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2015년 1월)하였다. 이에 따라, 기업 등 민간 기부채납 활성화, 가정어린이집·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등의 국공립 전환을 적극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국공립 확충을 추진할 예정이다.

(3)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 제3항에 의거하여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여 장래 글로벌 인재로 활약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언어발달 지원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언어발달지도사를 배치 또는 센터 인근 보육시설로 파견하여, 보육시설 원아인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언어발달지원서비스는 만 12세 이하의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언어발달 상태를 평가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진 아동에게 어휘·구문 발달 촉진, 대화·사회적 의사소통 능력 향상, 읽기 및 이야기하기 등 발달 촉진을 위한 적절한 언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원만한 발달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더불어 다문화 부모에게 상담 및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도 아동의 언어발달 촉진을 도모하고 있다.

2009년 87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100명의 언어발달지도사를 배치하기 시작하여 2012년에는 173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200명, 2014년에는 206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300명 확대 배치하였다.

표 2-5-12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도서비스 운영 실적(2014년 12월 기준)

(단위 : 명)

구 분	계		진단아동 수		교육아동 수	
	연인원	실인원	연인원	실인원	연인원	실인원
2014년	212,790	14,602	25,272	9,101	187,518	5,501

제3절 취약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1.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통한 의료취약지 해소

(1)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육성

농어촌 취약지는 인구가 적고 면적은 넓은 반면, 의료 인프라는 부족하여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지역이다. 이러한 문제는 응급상황에서 더 심각하게 부각된다. 취약지의 일반적인 환자는 먼 도심지 병원으로 이동하는 경우 불편이 발생하지만, 응급환자는 일정 시간 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사망하거나 예후가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취약지에서는 환자수가 적어 수익이 나지 않는 반면, 의료인력이 근무를 기피하여 더 많은 인센티브가 필요해 비용은 많이 들기에 응급의료기관을 유지하는 것이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국가와 지자체는 농어촌 취약지의 응급의료기관이 구축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응급환자가 적정 시간 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안전망을 운영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있다.

응급의료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6년부터 응급의료 취약지역 내 의료기관에 당직운영비를 지원하기 시작했으며, 2010년 응급의료기금이 500억원 규모에서 2,000억원 규모로 확충되고 2010~2012년 응급의료선진화 계획에 중점추진사업으로 채택되면서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응급의료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른 사업추진 방향은 취약 진료권(20개)과 취약 군(郡) 지역(43개)을 해소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2012년 12월 기준 20개 진료권 중 13개 진료권에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육성·운영 중에 있으며, 43개 군(郡) 지역 중 36개 지역에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육성·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군 지역에 응급의료기관을 새로 구축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농어촌의 인구가 감소하는 등 사회경제적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경영난을 이유로 기존 군 지역 응급의료기관이 문을 닫거나 응급의료기관을 반납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2년도부터는 군 지역내 응급의료기관이 1개소 밖에

없어 문을 닫을 경우 응급의료 사각지대가 되는 지역의 기관까지 응급의료기금에서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2013년도부터는 모든 군 지역 응급의료기관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응급의료 안전망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103개소까지 확대 지원하였다.

표 2-5-13 연도별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지원 현황

(단위 : 개소, 백만원)

연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기관수	28	37	44	48	45	52	71	87	103
지원액	3,667	3,275	4,305	5,950	21,549	18,558	18,511	23,372	22,866

군 지역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이 2006년 37억원에서 2014년 249억원까지 늘어나고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군이 2006년 43개에서 2014년 13개까지 감소함에 따라, 보조금을 응급의료 안전망 유지에 적절하게 활용하도록 관리·감독 하는 것이 중요해졌으며 양적인 인프라 확충에서 질적인 의료의 질 개선으로 정책목표를 이동할 조건이 충족되었다.

따라서 매년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하고 있으며, 시설·장비·인력에 대한 법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에 대해서는 삼진아웃제를 시행하여 질적 수준을 관리하고 있다. 또한, 모든 응급의료기금 사용에 대해 회계법인의 감사를 실시하여 투명한 보조금 집행을 담보하고 있다.

그간의 노력으로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군은 12개까지 감소하였으나 이 지역에 추가적인 응급의료기관을 구축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응급의료기관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전담인력 이외에도 야간·휴일 진료를 분담할 당직의사들이 필요하기에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 또는 종합병원이 지역 내 존재하여야 한다. 그러기에 지역 내 의료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에는 이런 의료기관이 없어 지원금만으로 응급의료기관을 구축하기 어렵다.

응급의료기관을 구축할 의료인프라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접근방식을 바꿔 인근 대도시의 거점병원에서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응급실을 위탁운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취약지 병원에서 인력을 확보하기는 어려우나 거점병원에서 단기 순환파견 방식으로 인력을 구하기는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이다. 2015년도 시범사업을 거쳐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군에 위탁운영되는 응급실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모든 취약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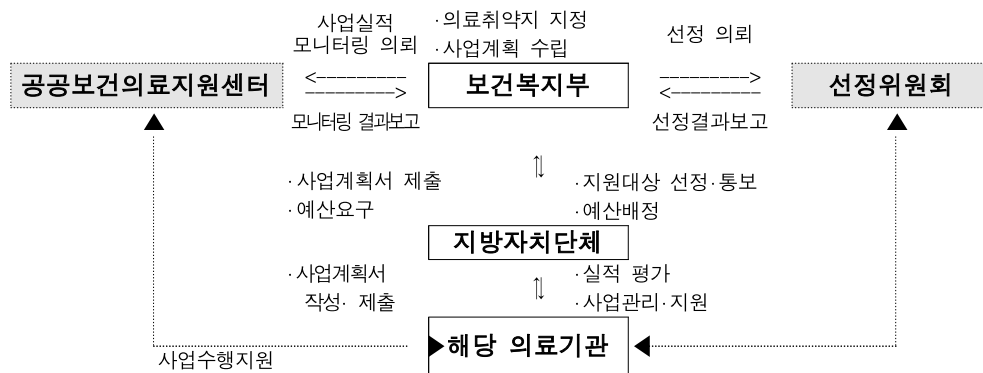
에 응급의료기관을 육성하는 것이 장기적인 목표이다.

2015년부터는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지원 대상을 현재 행정구역상 군(郡)지역(83개)에서 응급의료취약도가 높은 도·농 복합시(19개)까지 확대하고, 취약도가 높아 수익구조가 열악한 지역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하여 취약지 응급의료기관들이 법정기준을 지키고 안정적으로 응급실이 운영되도록 유도할 것이다.

(2) 필수의료 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원

의료자원 분포의 불균형으로 일부농어촌 군지역은 필수의료서비스를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받는 등 의료접근성이 현저히 낮다. 이런 지역 간 의료서비스 접근성의 격차는 취약지역 주민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어렵게 하여 결과적으로 건강 수준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약지 주민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공급이 부족한 지역을 의료취약지로 지정하고 지역 내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시설·장비·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림 2-5-2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원 사업 추진체계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원사업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의료취약지의 지정·고시) 및 제13조(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지정)를 근거로 하여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등의 필수의료서비스(응급, 분만, 산부인과 제외)가 제공되지 않는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의료취약지 모니터링 연구를 통해 도출된 필수의료 취약지역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부족한 필수 진료과·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1차년도에는 국고지원 한도 내에서 시설·장비비와 인건비(최대 6개월분)를 지원하고 2차년도 이후부터는 연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2014년 소아청소년과 1개과에 대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추진 중에 있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의 개정(2013년 2월 시행)으로 의료공급이 부족한 의료취약지 지정, 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다. 의료취약지 지정·지원을 위해 ‘지역별 의료실태 분석을 통한 의료취약지 도출방안 연구(2012년 12월~2013년 6월, 주관: 건보공단, 연구: 국립중앙의료원)’ 및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모델 및 관리방안 연구’(2013년 9월~12월, 국립중앙의료원)를 수행하였고, 이를 통해 의료취약지 유형별 거점의료기관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2014년 필수의료 취약지에 대해 거점의료기관 지원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사업 지속 중에 있으며 2015년에 소아청소년과 1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표 2-5-14 2015년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원사업 대상지역

시도	개수	소아청소년과 취약지(29)
인천	1	옹진군
경기	2	양평군, 연천군
강원	5	양구군, 인제군, 정선군, 평창군, 화천군
충북	2	괴산군, 보은군
충남	1	태안군
전북	6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전남	1	신안군
경북	6	군위군, 봉화군, 영덕군, 영양군, 의성군, 청송군
경남	5	남해군, 산청군, 의령군, 함양군, 합천군

(3) 분만취약지 의료기관 지원

의료기관의 대도시 쏠림 현상으로 농어촌 의료공백, 저출산에 따른 출산 인프라 감소 등으로 분만취약지역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분만취약지가 증가하여 농어촌 산모는 산전산후 진찰 및 분만을 위해 원거리 이동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동 사업은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는 분만취약지역에 산부인과가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장비비 등을 지원하여 분만취약지를 해소하고, 이를 통해 안정적인 분만 환경과 인프라를 구축하고 취약지역의 관내 분만율을 상승시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2011년부터 분만취약지역 공공 및 민간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분만산부인과 설치 가능여부(분만·외래·순회진료산부인과)로 구분하여 시설·장비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매년 취약지로 도출된 지역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고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있다.

분만 취약지에 대한 체계적 분석 및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부내 관련과 및 외부 전문가로 T/F팀을 구성·운영(2009년 11월~2010년 4월)하여 국비지원 규모를 검토하였고, 산부인과 분만실 유무의 평면적 접근에서 탈피하여 취약지 기준을 선정하고 특성에 맞는 지원방향 도출(2010년 5월) 등 분만취약지 개선방안을 추진하였다.

2011년 시범사업을 통해 분만산부인과 3개소를 시작으로 2012년 분만산부인과 2개소, 외래산부인과 2개소, 2013년 분만산부인과 4개소, 2014년 분만산부인과 2개소, 외래산부인과 7개소, 순회진료산부인과 5개소를 신규 선정하여 분만 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예산 지원을 통해 산부인과가 없어 산전후 진찰 및 분만을 위해 원거리 이동 또는 대도시 원정출산이 불가피했던 농어촌 지역의 산모가 근거리의 산부인과를 이용하게 됨으로써 산모·신생아의 건강증진 및 경제적 부담경감에 기여하였다.

또한 “임신·분만 취약지역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를 국정과제(62-③)로 채택하여 매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 중에 있다.

표 2-5-15 연도별 분만취약지 사업 선정 및 지원 현황

(단위 : 개소, 백만원)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비 고
기관수	3	4	4	14	
예산(국비)	1,875	2,200	3,950	4,875	

제3부 지역별시책

제1장 서울특별시

제2장 부산광역시

제3장 대구광역시

제4장 인천광역시

제5장 광주광역시

제6장 대전광역시

제7장 울산광역시

제8장 세종특별자치시

제9장 경기도

제10장 강원도

제11장 충청북도

제12장 충청남도

제13장 전라북도

제14장 전라남도

제15장 경상북도

제16장 경상남도

제17장 제주특별자치도

제1장 서울특별시

제1절 경제 현황

1. 일반 현황

서울의 인구는 2013년 기준 1,014만명으로 2010년에 비해 17만명 감소하였다. 지역 내총생산(GRDP)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307조원이며, 1인당 GRDP도 3,205만원으로 나타났다. 수출액은 2007년 270억 달러의 2.2배인 603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재정자립도는 88.8%로 6년 전에 비해 1.7%p 낮아졌으나,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표 3-1-1 서울특별시 경제 일반현황

구분	전국			서울		
	2007년	2010년	2013년	2007년	2010년	2013년
지역내총생산(십억원)	1,151,843	1,265,146	1,376,143	274,419	289,719	307,255
인구(천명)	49,269	50,516	51,141	10,193	10,313	10,144
1인당 GRDP(만원)	2,147	2,561	2,842	2,484	2,883	3,205
수출액(백만달러)	371,489	466,384	559,632	26,979	45,348	60,316
취업자(천명)	23,433	23,829	25,066	4,940	4,936	5,097
재정자립도(%)	53.6	52.2	51.1	90.5	85.8	88.8

주 : 지역내총생산은 2010년 기준가격임.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2. 산업 현황

서울의 산업구조는 지역내총생산액 기준으로 서비스업 93.8%, 제조업 6.0%, 농림어업 0.2%로 서비스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13년 제조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은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이 각각 32.8%, 35.0% 44.7% 등으로 나타나 다른 업

종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는 '전자부품·컴퓨터·통신장비', '전기장비' 등의 업종 비중이 높았다. 2007년과 비교할 때, '전자부품·컴퓨터·통신장비'의 비중이 감소하였으며, 다른 업종의 비중변화는 크지 않았다.

표 3-1-2 서울특별시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07년			2010년			2013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제조업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식료품	2.3	2.5	4.2	2.1	1.8	3.1	2.4	2.7	3.3
의복, 의복액세서리	34.4	36.5	38.9	31.8	36.4	42.6	32.8	35.0	44.7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2.6	2.2	2.1	2.7	2.6	1.8	2.5	2.6	2.3
금속가공제품(기계·가구 제외)	3.8	2.9	2.4	3.8	2.9	2.0	2.9	2.2	1.6
전자부품·컴퓨터·통신장비	9.6	14.2	15.7	8.6	13.4	14.5	8.2	11.3	11.3
전기장비	5.4	5.4	4.8	6.0	5.5	4.2	6.3	5.7	4.3
기타 기계 및 장비	7.4	6.7	6.0	7.4	6.3	5.4	6.7	6.9	5.1
자동차 및 트레일러	0.8	0.7	0.8	0.6	0.6	0.6	0.4	0.4	0.3
기타 제품	4.7	3.5	2.8	4.8	3.7	2.3	5.5	4.6	3.1

주 : 2010년은 경제총조사 자료임.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광업·제조업 조사(9차 개정) ; 경제총조사(2010)」

표 3-1-3 서울특별시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07년			2010년			2013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서비스업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0.2	0.5	0.6	0.2	0.4	0.4	0.2	0.5	0.6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6.6	19.3	37.4	6.8	18.5	41.2	9.3	19.9	39.5
부동산업 및 임대업	20.5	12.6	18.5	17.5	8.9	13.3	17.6	9.8	12.4
사업지원 서비스업	5.1	24.8	11.1	5.0	21.9	9.2	6.4	25.4	11.4
교육 서비스업	14.6	10.2	6.4	14.9	18.6	11.8	15.1	9.2	5.9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1.1	16.3	14.1	11.0	15.1	11.4	12.7	19.7	17.0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12.1	5.9	6.6	10.7	4.7	5.8	10.7	5.5	8.3
기타 개인 서비스업	29.8	10.3	5.4	33.9	11.8	6.9	28.0	10.0	4.9

주 : 2010년은 경제총조사 자료임.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전국서비스업조사 ; 경제총조사(2010)」

2013년 서비스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업체수 기준 '기타 개인 서비스업'과 '부동산 및 임대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종사자수 및 생산액 기준으로는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이 19.9%, 39.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2007년과 비교할 때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종사자수 및 생산액 비중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사회적으로 의료·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3. 혁신활동 현황

서울특별시의 연구개발 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기준 연구개발비 11조원, 연구개발인력 147,228명, 연구개발조직수 7,069개로 경기도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전국대비 비중 변화는 2007년에 비해 연구개발비, 인력, 조직수 모두 소폭 감소하였다.

특허 현황을 보면, 출원 및 등록 모두 전국대비 비중이 30% 수준으로 나타났다. 2013년 기준으로 특허출원은 47,737건이며, 등록은 29,369건으로 전국대비 비중은 각각 29.8%, 30.7%였다. 다만, 특허 등록건수 및 전국대비 비중은 2007년과 비교하여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4 서울특별시 혁신활동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 건, %)

구분		2007년	2010년	2013년
연구개발	연구개발비	6,183,768 (19.8)	8,243,019 (18.8)	10,702,663 (18.1)
	연구개발인력	119,964 (28.5)	135,143 (27.0)	147,228 (25.9)
	연구개발조직수	3,393 (27.3)	4,504 (25.2)	7,069 (25.6)
특허	출원	44,245 (34.4)	42,136 (32.0)	47,737 (29.8)
	등록	31,950 (34.9)	15,671 (30.5)	29,369 (30.7)

주 : ()는 전국대비 비율임.

자료 : 1)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년도

2) 특허청, 지식재산통계연보, 각년도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서울은 600년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의 수도로서 4대 궁을 포함한 다양한 역사문화 자원과 한강, 남산 등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서울을 중심으로 전국의 철도, 도로 등 간선교통망이 발달되어 있으며, 전국 대학의 약 35.6%가 집중되어 있어 인적자원이 풍부하다. 이처럼 서울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기술 등이 집적되어 지속적인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가 경제성장의 엔진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나아가 최근에는 동북아 경제권역의 핵심지역으로서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최근 노령화 추세 및 1~2인 가구의 급증으로 주택시장, 교통환경, 복지수요, 소비시장 등 각 분야에서 수요의 전환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응한 다양한 정책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경제성장의 둔화와 소득양극화 심화에 따라 지역균형발전과 노약자 및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주거 및 사회복지서비스 등의 개선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기상이변으로 인한 수해, 산사태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개발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환경가치와 에너지절약을 중시하는 저탄소 도시로의 방향전환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이에 서울시는 주요 정책이슈 및 향후 발전과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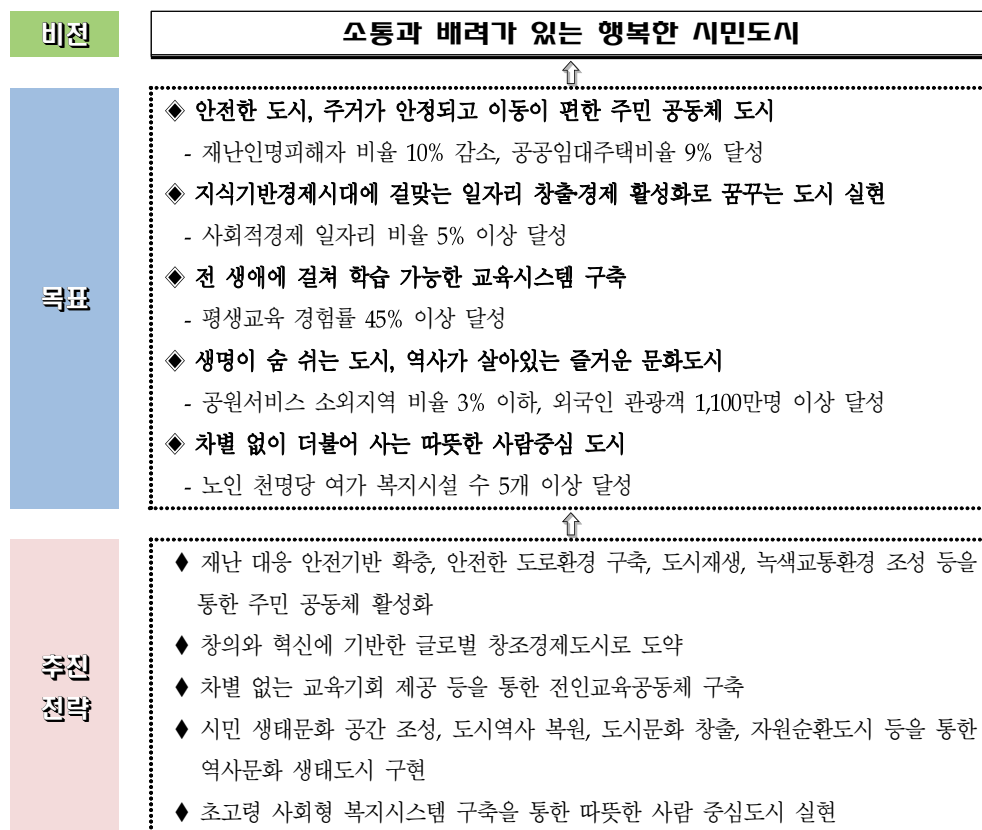
첫째, 총량적인 양적성장을 추구하기 보다는 시민들의 생활환경, 문화 및 여가, 주택, 자연환경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두고 접근해야 할 것이다. 둘째, 자연자원을 잘 관리하고 역사자원의 보전을 통하여 서울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서울이 가진 장점과 독특한 매력을 살리는 동시에 과밀로 인한 집적 불경제 요인을 점차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글로벌 기후변화와 이에 대응한 환경협약에 따라 에너지 낭비요인을 줄이는 동시에 녹색산업의 육성·발전을 적극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노후한 도시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첨단화하여 도시의 안전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 중소도시와 대도시 등 이분법적인 경쟁구도는 지양하고 서울시와 주변도시 그리고 비수도권의 상호 특징점을 살려가는 상생적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1. 발전비전

서울시는 ‘소통과 배려가 있는 행복한 시민도시’를 지역발전 5개년계획(2014년~2018년)의 발전 비전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관련 계획 중 최상위계획인 「서울도시기본계획(2030 서울플랜)」에서 제시한 미래상을 수용하여 반영한 것으로, 소통과 배려를 통해 ‘안전한 도시, 주거가 안정되고 이동이 편리한 주민공동체 도시’, ‘지식기반경제시대에 걸맞는 일자리 창출·경제 활성화로 꿈꾸는 도시 실현’, ‘전 생애 걸쳐 학습 가능한 교육시스템 구축’, ‘생명이 숨 쉬는 도시, 역사가 살아있는 즐거운 문화도시’, ‘차별 없이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사람 중심 도시’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림 3-1-1 서울특별시 발전 비전 및 추진전략



2. 추진전략

서울시 지역발전 5개년계획의 세부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은 정부에서 제시한 5대 분야, 21개 실천과제에 따라 서울도시기본계획 및 서울 시정 4개년 계획 내용을 고려하여 수립하였다.

첫째, 지역생활권 활성화 분야의 세부 정책목표는 ‘안전한 도시, 주거가 안정되고 이동이 편리한 주민 공동체 도시’로 설정하고, 추진전략으로는 ‘재난 대응 안전 기반 확충, 안전한 도로 환경 구축 및 침수지역 해소’, ‘위험과 폭력으로부터 여성과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조성’, ‘삶터와 일터가 어우러진 도시재생 추진’, ‘승용차에 의존하지 않아도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녹색교통환경 조성’, ‘선택이 자유롭고 안정된 주거공간의 확대’를 내세우고 있다.

둘째,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분야의 세부 정책목표는 ‘지식기반경제시대에 걸맞는 일자리 창출·경제 활성화로 꿈꾸는 도시 실현’으로 설정하고, 추진전략으로는 ‘창의와 혁신에 기반한 글로벌 창조경제도시 도약’, ‘경제주체 간 동반성장과 지역의 상생발전 도모’, ‘사람과 일자리 중심의 활력경제 실현’, ‘전통문화유산 및 자연자원을 활용한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내세우고 있다.

셋째,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분야의 세부 정책목표는 ‘전 생애에 걸쳐 학습 가능한 교육 시스템 구축’으로 설정하고, 추진전략으로는 ‘누구에게나 차별 없는 교육기회 제공’, ‘학습사회 구축을 통한 시민역량 강화’, ‘전인교육을 위한 학교 기능 회복’, ‘지역자원을 활용한 교육공동체 실현’을 내세우고 있다.

넷째, 지역 문화 융성, 생태복원 분야의 세부 정책목표는 ‘생명이 숨 쉬는 도시, 역사가 살아있는 즐거운 문화도시’로 설정하고, 추진전략으로는 ‘도시 내 자연생태계 보전·회복과 공익기능 증대’, ‘모두가 함께 누리는 다양한 도시문화 창출’, ‘생활 속에 살아 숨 쉬는 도시역사 구현’, ‘에너지 효율적인 자원순환도시 실현’을 내세우고 있다.

다섯째,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분야의 세부 정책목표는 ‘차별 없이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사람중심 도시’로 설정하고, 추진전략으로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복지시스템 마련’, ‘시민 누구나 건강하게 사는 생활터전 조성’, ‘양극화 및 차별 해소를 위한 사회 시스템 구축’, ‘성평등과 사회적 돌봄의 실천’을 내세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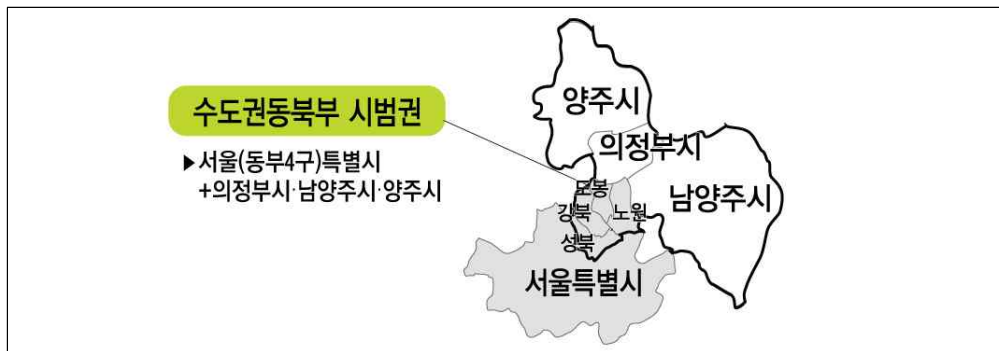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1. 지역생활권 활성화

(1) “지역행복생활권” 추진현황 및 성과

서울시는 지리적으로 연속된 지자체간 접근성을 바탕으로 지역간 연계, 기능적 연계, 역사 문화적 동질성 및 지자체간 협력 의지 등을 반영하여 서울시 4개 자치구(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성북구)와 경기도의 3개 시(의정부시, 남양주시, 양주시)를 중심으로 ‘수도권 동북부 시범생활권’을 구성(2014년 1월)하였으며, ‘지역간 협력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자족적 기반강화’를 비전으로 설정하였다.

그림 3-1-2 서울특별시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수도권 동북부 시범생활권의 주요 사업으로는 의정부시가 주관하고, 서울 노원구와 성북구가 참여하는 ‘중랑천 녹색문화벨트 조성사업’이 2014년 지역생활권 선도사업으로 최종 선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비 14.2억원(전체 사업비 15.8억원)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다. ‘중랑천 녹색문화벨트 조성사업’은 수도권 동북부 생활권의 내부를 관통하고 있는 중랑천의 주요 장소에 화합과 만남의 광장 조성, 소통의 정원 조성, 생태하천 조성 및 녹지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주민 교류의 장 마련, 도심지역 녹색 문화공간 및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 수도권 동북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따른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지역별 추진현황 및 성과

서울시는 지역중심지 활력 증진을 위해 ‘서울형 도시재생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생활권 단위의 환경 개선,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공동체 활성화, 골목경제 살리기 등을 통해 거대 단위가 아닌 동네 생활권 단위의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을 실현하는 사업으로, ‘낙후·쇠퇴지역 활성화’, ‘지역경제 부활’을 동시에 이루는 것이 목표이다. 이를 위해 2014년에는 시범사업 지정 공모를 실시하였으며, 14개 자치구 15개 사업 중 강동구 암사1동 일대, 성동구 성수 1,2가 일대, 성북구 장위1동 뉴타운 해제구역, 동작구 상도4동 일대, 서대문구 신촌동 일대 등 최종 5곳을 시범사업지구로 선정하였다. 본 사업은 지역주민과 자치구가 계획 수립부터 시행까지 주체로 적극 참여하고 시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한 곳당 4년간 최대 100억원(시비 90%, 구비 10%)이 지원된다. 향후 서울시는 정부가 지원하는 도시재생 선도지역과 별개로 ‘서울형 도시재생 시범사업’을 통해 권역별 특성에 맞는 ‘서울형 도시재생’ 성공모델을 다양하게 만들어 서울 전역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노후화된 시설 개선, 상업기반 지원 등을 통한 이용고객 편의 증진을 위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14개 시장 18개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특히 수유재래시장 등 3개 시장이 연합하여 3개 년도에 걸쳐서 추진하는 공동주차장 사업(100면)은 시장 주변 주차난 해소 및 시장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였다. 본 사업에 대한 상인 만족도(66개 전통시장 상인 1,320명 대상) 및 시민 만족도(이용시민 1,320명 대상) 조사 결과, 상인 만족도 84.5%, 이용시민 만족도 92.4%를 달성하였다.

그 외에도 도시철도 9호선 1단계 구간의 운영효율 극대화를 도모하고, 2호선 혼잡지역(잠실~삼성~신림) 완화를 위한 ‘도시철도 9호선 2단계 사업(강남구 논현동~삼성동 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구간, 총 연장 4.5km, 정거장 5개소)’을 완료하여 2015년 3월에 개통하였으며, 지하철 고가 및 철교 내진보강 3.8km 지속 추진, 13개 노후시설 개량 추진 및 3개 시설 개량 완료 등을 통해 지하철 1~4호선의 안전운행을 강화하였다.

마지막으로, 55개 재난유형별 황금시간 개념 정립, 의료장비를 포함한 노후구급차 5대 교체, 어린이 보호구역 47개소 신규 및 확대 지정·CCTV 205대 설치 등 시민 체감 생활안전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2.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1) 일자리 창출 중심의 지역대표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중심의 지역대표산업 육성을 위한 서울시의 주요사업으로는 ‘지역연고 산업 육성’, ‘서울형 특화산업지구 지정·운영’, ‘지역형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등이 있다.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은 지역 내 특색 있는 자원과 첨단기술의 융복합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역연고산업을 발굴·지원하는 사업으로, 2014년에는 「서울 주얼리산업 육성을 위한 혁신기반 구축」, 「서울 패션창조지구 육성을 위한 디자인 봉체네트워크」, 「G밸리 중심의 서울시 IT융합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사업」 등 3개 과제의 시스템 구축, 연구개발, 마케팅 및 판로 확대, 네트워킹 활성화 등을 위해 총 338.2백만원을 지원하였다. 이를 통해 주얼리산업 인력양성 243명 및 판로개척 131곳, 패션창조지구 기업지원 확대 353개 및 투자유치 346백만원, G밸리 제품화 매출 28억원 및 인력양성 169명 등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서울형 특화산업지구 지정·운영’사업은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제조업 밀집지역을 서울형 특화산업지구로 지정하여 제조업 기반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였다. 세부적으로는 마포 디자인·출판 종합지원센터가 2014년 2월에 개관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동대문 한방진흥센터, 종로 주얼리비즈니스센터 등은 실시설계 용역 완료 후 현재 설치 공사 중에 있다.

‘지역형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은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성 있는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4년에는 일자리 창출사업 205개 기업·1,004명, 사업 개발비 118개 기업·1,879백만원, 지역특화사업 15개 자치단체·528백만원 등 총 9,183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이를 통해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형성에 기여하였다.

(2) 산업단지 고도화로 창조경제 구현

서울시는 서울의 유일한 국가산업단지인 G밸리(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열악한 기업 환경 개선 및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통해 산업단지 경쟁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코자 ‘G밸리 활성화 추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4년에는 G밸리 산업현황 조사

및 발전전략 도출, G밸리 재생과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2015년에는 G밸리 근로자 복합공간 조성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3) 지역기반 연구 활성화로 창조경제 지역 확산

지역기반 연구 활성화로 창조경제 지역 확산을 위한 서울시의 주요사업으로는 ‘중소기업 산학협력 기술개발’, ‘서울형 R&D지원’사업 등이 있다. ‘중소기업 산학협력 기술개발’사업은 중소기업과 대학이 협력하여 수행하는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4년에는 36개 개발과제에 대해 총 3,211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촉진, 서울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였다.

또한 서울의 미래성장 동력 확보 및 도시문제 해결 등 서울시와 시민에게 필요한 R&D 지원을 위해 ‘서울형 R&D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를 통해 44개 과제에 대해 총 14,942백만원을 지원하였다. 이에 따라 논문게재(55건), 특허출원(56건), 특허등록(59건), 기술이전(29건) 등에서 전년대비 양적 성장을 이루었으며, 중소기업 매출 증대, 비용절감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4) 농산어업 경쟁력 강화

서울시는 고용창출, 시민들의 안전 및 편의 제공을 위해 ‘근교산 자락길 조성’, ‘근교산 등산로 정비’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장애인, 휠체어 이용자 등 시민 누구나 장애 없이 이용 가능한 무장애 숲길 9.2km를 조성하였으며, 서울시 근교산 등산로 48km를 정비하였다.

또한 ‘강동 친환경 도시텃밭 운영’사업을 통해 제초제, 농약, 화학비료, 비닐 등을 사용하지 않는 5,300구좌의 친환경 도시텃밭을 보급·운영하여 한강 수질 개선과 안전한 유기농 먹거리 및 환경보전에 관한 시민 참여의식을 고취하는 데 기여하였다.

그 외에도 한강상수원보호구역 내 ‘함께 서울 친환경 농장(9,300구획, 153,450㎡)’, 고양시 및 시흥시 일원의 ‘희망 서울 친환경 농장(2,050구획, 33,825㎡)’ 등 분양·운영을 통해 친환경 농업 실천,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 기회제공, 도농교류 촉진을 도모하였다.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1) 지방 초중교 교육환경 개선

여성의 사회진출 및 맞벌이 가정 증가에 따라 서울시는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방과후 ‘초등 돌봄교실 운영’사업을 추진하였다. 2014년에는 관내 초등학교 570교·1,395실·26,592명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지원하였으며, 이를 통해 돌봄 학생 수용비율 97.6%를 달성하는 등 돌봄확대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교육환경이 열악한 11개 자치구(강북, 강서, 관악, 구로, 금천, 노원, 도봉, 서대문, 성북, 은평, 종로)를 ‘서울형 교육우선지구’로 선정하였으며, 자치구간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 문예체 협력교사 파견, 창의적 테마 체험활동, 진로 직업교육, 각 자치구 특화사업 등에 대해 총 3,000백만원을 지원하였다.

(2) 창의적 인재를 키우는 지방대학 육성

창의적 인재를 키우는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 서울시는 ‘대학 특성화를 통한 서울시립대 경쟁력 강화’사업을 추진하였다. 2014년은 사업 운영 첫 해로 학과 특성화 사업(4개 참여 학과 선정, 30백만원 지원, 학과별 특수성 및 사회적 인력수요에 기반한 특화교육 운영), 계산물리 특화 교육과정 운영(연구교수 1명 채용, 27개 교과목 실습모듈 개발), 학생 장학금 지원(5백만원 지원) 등 세부사업을 통해 특성화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2015년에는 2014년 사업과의 연계성 확보 및 사업성과의 교내 공유·확산을 통해 지속적인 대학 전체 특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3) 일과 학습 병행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일과 학습 병행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서울시의 주요사업으로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지원 확대’, ‘선취업 후진학 체제 확립’ 등이 있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지원 확대’사업은 특성화고교 교육과정 내실화를 통해 산업수요에 적합한 지역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2014년에는 특성화고 체제 개편(28교), 실험실습기자재(77교), 실험실습재료비(79교), 취업역량 강화사업(

49교), 산학협력 지원사업(30교) 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다.

‘선취업 후진학 체제 확립’사업은 선취업 유도를 통한 취업 중심 특성화고교 정체성 확립 및 고졸 취업률 제고를 위해 추진되었으며, 일부 특성화고교의 경우 자체 예산으로 졸업생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선취업 후진학 우수학생 롤 모델을 배출하였다.

(4) 100세 시대 지역 평생학습체제 구축

서울시는 2014년 4월, 서울연구원 부설기관으로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을 지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서울시 평생교육정책 및 사업 등을 보다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담 추진체계를 구축하였다. 2015년에는 이를 독립 법인으로 전환, 서울시 평생교육 정책의 컨트롤타워 및 허브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학교 자원을 활용한 시민 평생학습 기회 제공 및 지역 평생교육기반 조성을 위해 ‘학교 중심 지역평생학습공동체 구축’사업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학교평생교육 거점학교 226교·448개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으며, 총 9,348명이 참여하여 프로그램 관련 자격증 취득(564명), 학습동아리 결성(82개 팀), 학교 및 지역사회 봉사(1,268건) 등의 활동이 이루어졌다.

4. 지역 문화 융성, 생태복원

(1) 지역 문화역량 강화 및 특성화 발전 지원

서울시는 홍인지문 복층의 멸실된 성곽복원을 통한 역사문화경관 회복을 위해 ‘한양도성 보수, 복원’사업을 추진하였다. 2014년에는 원형고증 연구를 통하여 성곽복원 설계안을 마련하였으며, 2015년에는 관할 자치구와 협력하여 성곽 주변 노점상 등 가로시설을 정비하고 성곽복원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2) 맞춤형 문화서비스를 통한 문화격차 해소

서울시는 서울 어디서나 걸어서 10분 이내에 도서관 이용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코자 매년 공공도서관 8개소 확충을 목표로 ‘공공도서관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4년에는 이 보다 1개소 많은 9개소를 개관하였으며, 작은 도서관 28개소도 추가 개관하는 등 문화격차 및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다. 뿐만 아니라, 은평뉴타운 사업으로 지역 내 발굴된 유물을 비롯하여 한옥을 전시·체험하는 은평역사한옥박물관을 개관·운영함으로써 시민에게 고품격 문화유산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은평뉴타운 내 조성중인 한옥마을과 연계하여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였다.

그 외에도 꿈다락 토요문화학교(35개 프로그램 운영, 25천명 참여), 서울시 저소득층 예술영재 교육지원(160명), 꿈꾸는 청춘예술대학(어르신 및 베이비부머세대 대상, 24개 프로그램 운영, 523명 참여), 시민예술가 육성지원(72개 동아리, 800명 지원) 등 문화예술시민대학 운영을 통해 문화예술 참여기회 확대, 문화예술을 통한 삶의 질 제고 및 자아실현 기회 제공을 위해 노력하였다.

(3) 지역 관광산업 육성

지역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서울시는 ‘스토리텔링을 통한 관광명소 개발’사업을 추진하였다. ‘스토리텔링을 통한 관광명소 개발’사업은 서울 전역에 숨겨져 있는 스토리를 시민과 함께 발굴하고 스토리텔링을 통해 관광자원화하여 매력 있는 관광지로 명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4년에는 5대 대표 명소(한강, 한양도성, 동대문, 세종대로, 한성 백제문화 유적), 6개 투어 코스(외국인 대상 투어 프로그램 운영)를 개발하였으며, 명동, 이태원 등 세계문화 담긴 지역 거점 설정 및 관광명소화, 신촌 플레이버스 조성, 전통사찰(58개) 이야기 발굴 등 다수의 스토리 발굴(2,500여건)로 스토리텔링사업의 초기 기반을 구축하였다.

(4) 생태·자연환경 보존·활용

서울시는 생태·자연환경 보존·활용을 위한 주요사업으로 ‘운행차 저공해 사업’을 추진하였다. ‘운행차 저공해 사업’은 노후 경유차·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초)미세먼지(PM_{2.5}, PM₁₀) 및 질소산화물(NO_x) 등 인체 위해성 오염물질을 저감하여 대기질 개선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2014년에는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12,152대), 질소산화물 저감(353대)을 통해 미세먼지를 개선하였다.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1) 지역밀착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지역밀착형 복지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서울시의 주요사업으로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등이 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발굴·제공하기 위해 추진하였으며, 2014년에는 41개 세부사업 운영을 통해 39,790명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의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4년에는 월평균 소득 50%이하의 저소득 출산가정 산모·신생아 9,613명에게 가정방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및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을 주었다.

(2) 맞춤형 복지시책 추진

서울시는 맞춤형 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환자안심병원 사업)’을 추진하였다. 본 사업은 간호·간병에 대한 공공병원의 사회적 책임 역할 수행 및 간병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되었으며, 2014년에는 서울의료원 380병상·121,534명, 동부병원 51병상·7,545명에게 질 높은 간호, 간병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에 따라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은 서울시민이 직접 뽑은 서울시 10대 뉴스 5위, 서울시 정책박람회에서 시민이 선정한 최고의 정책 1위로 선정되었으며, 간병비 절감은 물론, 국가정책(포괄간호서비스)을 이끌어 내는 등의 성과를 도출하였다.

(3) 취약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

취약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한 서울시의 주요사업으로는 ‘서울형 공공의료망 50 구축’사업이 있다. 세부적으로는 북부병원 1개소를 시범기관으로 지정,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의료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의료보건복지 통합서비스망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의료장비 및 의료인력 지원 등 시립병원과 민간의료기관간 협력을 바탕으로 소외계층에게 공공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서울시 안전망 병원 사업을 추진하여 총 275명에게 진료 및 검사를 지원하였다.

제4절 향후 추진계획

‘소통과 배려가 있는 행복한 시민도시’를 만들기 위한 서울시의 2015년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생활권 활성화를 위해 2014년에 선정된 서울형 도시재생 시범사업지구 5개소에 대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재난약자 자율대응 강화사업, 시민안전 파수꾼 양성(2만명) 등을 통해 재난 위험요소의 선제적 해소, 안전시스템 개선·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우이~신설 경전철, 도시철도 9호선 3단계, 사가정길~암사동간 도로개설 등 도시철도 및 광역도로망 확충 사업을 지속할 것이다.

둘째,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제고 분야는 창조경제 기반 강화를 통한 성장 동력 발굴 및 경쟁력 제고, 사회적경제 생태계 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 도모를 목표로 서울형 특화산업지구 지정·운영, 서울형 R&D 지원, 지역형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지역 과학기술기반 확충을 위한 홍릉 클러스터 조성, 개포디지털혁신파크 조성 사업을 본격화 할 예정이다.

셋째,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분야는 안전하고 차별 없는 교육환경 조성, 서울형 지식산업기반에 적합한 창의적 인재 육성,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통한 시민력 강화를 목표로 서울형 혁신교육지구(11개) 선정·지원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 초·중·고돌봄서비스의 질적 내실화 추진, 평생교육진흥원 독립 법인 전환을 통한 평생교육 활성화 기반 조성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넷째, 지역문화 융성, 생태복원 분야는 생활 속에 살아 숨 쉬는 역사도시 구현, 모든 시민이 즐길 수 있는 문화적 여건 조성 및 문화격차 해소, 건강하고 살기 좋은 녹색도시 서울을 목표로 한양도성, 초안산 분묘군, 풍납토성, 살곶이 다리 등 역사문화 자원의 복원·보존을 통해 서울의 역사성을 확립할 것이다. 또한 도서관, 다목적체육센터 등 문화·체육 기반시설을 지속 확충할 것이며,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 태양광 미니발전소 지원 등을 통해 에너지 절감 및 서울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다섯째,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분야는 시민 누구나 누리는 보편적 복지 실현, 시민 누구나 건강하게 사는 생활터전 조성을 목표로 월평균 소득 65% 이하 출산가정에 대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보호자 없는 안심병원 포괄간호서비스 수가화 전환, 서울형 의료 안전망 의료비 지원, 방문간호사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2장 부산광역시

제1절 경제 현황

1. 일반 현황

부산의 인구는 2013년 기준 353만명으로 2010년에 비해 4만명 감소하여 2007년 이후 감소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지역내총생산(GRDP)은 2010년 64조원에서 6.5% 증가한 68조원이며, 1인당 GRDP는 2007년 대비 28% 증가한 2,040만원으로 나타났다. 수출액은 2010년 124억 달러에서 7% 증가한 133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취업자수는 2007년 162만명에서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하여 164만명으로 나타났다. 재정자립도는 56.6%로 2007년에 비해 6.3%p 낮아졌으나, 전국 평균보다는 다소 높았다.

표 3-2-1 부산광역시 경제 일반현황

구분	전국			부산		
	2007년	2010년	2013년	2007년	2010년	2013년
지역내총생산(십억원)	1,151,843	1,265,146	1,376,143	62,180	63,737	68,152
인구(천명)	49,269	50,516	51,141	3,587	3,568	3,528
1인당 GRDP(만원)	2,147	2,561	2,842	1,591	1,839	2,040
수출액(백만달러)	371,489	466,384	559,632	10,160	12,374	13,263
취업자(천명)	23,433	23,829	25,066	1,616	1,574	1,644
재정자립도(%)	53.6	52.2	51.1	62.9	57.6	56.6

주 : 지역내총생산은 2010년 기준가격임.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2. 산업 현황

부산의 산업구조는 지역내총생산액 기준으로 서비스업 79.5%, 제조업 19.4%, 농림어업 1.0%로 나타났다.

2013년 제조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업체 및 종사자수 기준으로는 '기타

기계 및 장비'가 각각 16.3%, 14.5%로 가장 높았다. 생산액 기준으로 '자동차 및 트레일러'가 13.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이 외에도 '금속가공제품',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등의 업종 비중이 다른 업종에 비해 높았다.

표 3-2-2 부산광역시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07년			2010년			2013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제조업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식료품	5.4	5.9	4.8	5.8	6.8	4.9	6.3	6.3	6.2
의복, 의복액세서리	7.1	7.7	2.6	7.1	6.9	2.5	6.3	6.0	2.3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6.9	5.6	3.6	6.6	5.4	3.9	7.2	7.2	5.2
금속가공제품(기계·가구 제외)	17.4	13.4	11.7	17.3	14.7	11.1	16.1	12.7	11.3
전자부품·컴퓨터·통신장비	1.5	5.3	3.6	1.2	1.9	4.2	1.6	5.1	4.0
전기장비	5.6	5.1	4.3	5.7	5.9	4.0	5.9	5.7	5.0
기타 기계 및 장비	16.4	12.4	10.7	16.9	15.3	11.1	16.3	14.5	12.4
자동차 및 트레일러	5.0	8.6	15.1	5.2	6.0	17.0	6.3	8.9	13.2
기타 제품	1.3	1.0	0.4	1.1	0.9	0.4	1.2	0.9	0.4

주 : 2010년은 경제총조사 자료임.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광업·제조업 조사 ; 경제총조사(2010)」

표 3-2-3 부산광역시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07년			2010년			2013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서비스업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0.5	1.8	2.6	0.5	1.3	2.4	0.6	1.5	3.0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5	3.0	6.5	1.7	3.9	14.7	1.9	2.8	5.6
부동산업 및 임대업	12.9	10.3	20.3	11.9	8.2	14.8	14.5	10.6	21.0
사업지원 서비스업	5.1	21.1	13.0	5.0	16.3	10.0	6.0	22.5	13.3
교육 서비스업	16.6	13.0	8.4	16.9	26.0	20.2	16.6	9.9	6.1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0.0	23.5	26.7	10.1	21.8	19.5	11.9	29.1	30.6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13.2	8.1	9.2	10.4	5.3	6.8	10.3	6.5	9.6
기타 개인 서비스업	40.2	19.1	13.3	43.4	17.3	11.5	38.3	17.1	10.8

주 : 2010년은 경제총조사 자료임.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전국서비스업조사 ; 경제총조사(2010)」

2013년 서비스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업체 기준 '기타 개인 서비스업'과 '교육 서비스업'이 각각 38.3%, 16.6%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부동산 및 임대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순으로 높았다. 반면 종사자수 및 생산액 기준으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29.1%, 30.6%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사업지원 서비스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의 비중이 높았다. 2007년과 비교할 때 '기타 개인 서비스업'의 비중이 다소 감소한 반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증가하였다.

3. 혁신활동 현황

연구개발 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기준 연구개발비 9,655억원, 연구개발인력 21,162명, 연구개발조직수 1,001개로 나타났다. 전국대비 비중 변화는 2007년에 비해 연구개발인력은 0.2%p 증가한 반면, 연구개발비 및 조직수는 각각 1.2%p, 1.1%p 감소하였다.

특허 현황을 보면, 출원 및 등록 모두 전국대비 비중이 3% 수준으로 부산시 규모에 비해 높지 않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2013년 기준으로 특허출원은 4,738건이며, 등록은 2,850건으로 전국대비 비중은 각각 3.0%로 나타났다. 특허활동의 전국대비 비중은 2007년과 비교하여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4 부산광역시 혁신활동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 건, %)

구분		2007년	2010년	2013년
연구개발	연구개발비	870,262 (2.8)	839,482 (1.9)	965,470 (1.6)
	연구개발인력	14,761 (3.5)	20,621 (4.1)	21,162 (3.7)
	연구개발조직수	578 (4.7)	764 (4.3)	1,001 (3.6)
특허	출원	3,238 (2.5)	3,722 (2.8)	4,738 (3.0)
	등록	1,834 (2.0)	1,411 (2.7)	2,850 (3.0)

주 : ()는 전국대비 비율임.

자료 : 1)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년도

2) 특허청, 지식재산통계연보, 각년도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부산광역시에는 유라시아대륙권역과 환태평양해양권역을 연결하는 시·종점으로서 대륙과 해양 접점에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지정학적 경쟁력을 바탕으로 부산은 국내 최대항만인 신항만과 특화 산업단지를 갖추고 기간산업과 전략산업 등 산업기반을 확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개화기부터 한국전쟁 전후 만들어진 역사·해양 근대 문화유산과 풍부한 관광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창조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10년간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인구증가율과 고령화 현상, 지역 우수인재 및 자원의 역외 유출 및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산업공동화 현상 심화, 낮은 고용률(55.6%) 등으로 산업 환경 구축이 다소 미흡한 경제사회학적 구조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부산은 항만 및 배후지 개발을 통한 무한한 성장 잠재력과 함께 동북아의 거대 시장을 배후에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부산은 조선해양플랜트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기술창업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창조경제 성과를 구현하기 위한 연구개발 특구 조성, 영화·영상제작 중심도시 환경 구축 및 영화산업 경쟁력 강화,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조경제에 대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특히, 민선 6기 출범과 함께 부산은 융·복합화, 글로벌화 등 세계적인 경제트렌드에 맞추어 기존의 전략 및 특화산업정책을 해양, 융합부품, 창조문화, 바이오헬스, 지식인프라 서비스 등 5대 신전략산업으로 기반을 재구조화하여 부산의 경제체질을 바꾸고 튼튼한 도시체력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노력 중이다.

고령사회에 접어든 부산이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은 다양한 창의성과 과학기술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인재와 기업이 몰려드는 부산을 건설해야 한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해양과 대륙의 기·종점의 접점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정학적 강점을 살린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미래를 대비한 북극항로 개척, 경제통일시대를 대비하여 부산의 기회를 극대화할 수 있는 도시브랜드 제고, 영화도시 부산으로 한류문화 재점화, 신공항 건설, 서부산 글로벌 시티 조성, 2028올림픽·2030엑스포 유치 등 신(新)경제부흥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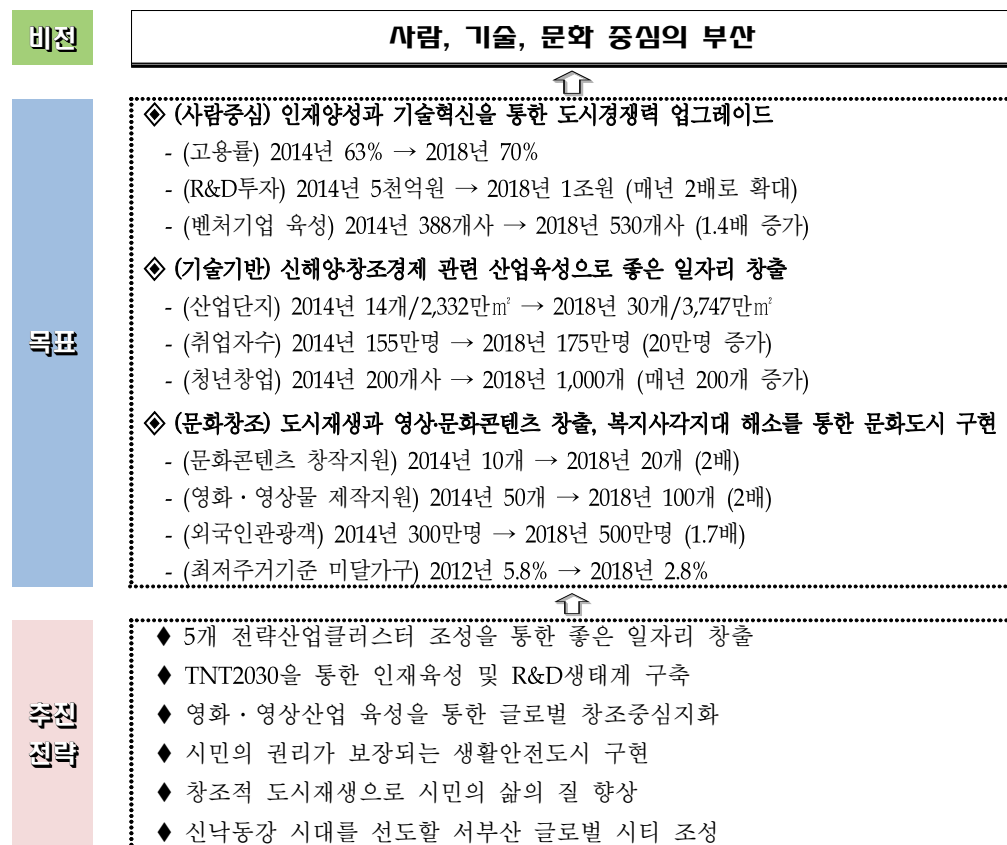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1. 발전비전

부산시는 민선 6기 출범과 함께 ‘사람과 기술, 문화로 융성하는 부산’이라는 도시비전을 설정하고 시정 전 분야에 걸쳐 변화의 새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시정의 중심을 과거 인프라 건설에서 인재양성·기술혁신·문화융성으로 옮기고, 도시체질 개선을 통한 부산의 장기적인 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해 변화와 혁신의 노력을 거듭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재양성과 기술혁신을 통한 도시경쟁력 업그레이드, 신해양·창조경제 관련 산업육성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 및 도시재생과 영상·문화 콘텐츠 창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문화도시 구현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그림 3-2-1 부산광역시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2. 추진전략

부산광역시의 발전비전을 이루기 위해 '5대 전략산업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TNT2030을 통한 인재육성 및 R&D생태계 구축', '영화·영상산업 육성을 통한 글로벌 창조중심지화', '시민의 권리가 보장되는 생활안전도시 구현', '창조적 도시재생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신낙동강 시대를 선도할 서부산 글로벌 시티 조성'등 6가지 추진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첫째, 인재육성과 기술혁신을 통한 경제 체질개선으로 창조경제시대를 선도하는 일자리가 풍부한 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융·복합 산업 트렌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통한 고용창출, 고부가가치형 산업의 선순환구조를 구축한다.

둘째, 과학기술 중심의 혁신적 도시발전 체계를 구축, 인재와 기술혁신 투자를 확대하고, 과학기술 인프라를 적기에 확충하여 고급 인력 공급기반을 확충한다. 또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활력운영으로 창의적 아이디어에 대한 사업화를 지원하고, 유망 벤처기업 발굴 및 지원강화로 창업의욕을 고취시키며, 신산업 수요에 맞는 산업단지를 적기에 확충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

셋째, 아시아 최고 영화제로 도약한 부산국제영화제, 영화·영상 관련 풍부한 인프라를 갖춘 부산의 강점을 살려 부산은 해운대 센텀시티를 중심으로 한 영화·영상 관련 인프라 확장, 국제영상콘텐츠밸리, 아시아영화학교 설립 등 핵심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관련 기술 개발 및 사업화 등을 통해 글로벌 영화·영상 도시로의 도약을 추진한다.

넷째, 폭우피해 등과 같은 재난피해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통합적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전도시 정착에 시민 역량을 결집, 연안피해 및 선박침몰 등 해난 사고에 대비한 체계적인 해난 방재 시스템의 구축과 신속대응을 위한 매뉴얼 마련 및 연안 종합 방재대책 수립하여 안전 도시 부산을 구현한다.

다섯째, 도시재생 추진기반을 구축하고 마을에 생기를 불어넣어 활기있는 도시로 재탄생시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뉴타운 지역 기반시설을 적기에 확충하여 서민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한다.

여섯째, 과거 부산의 중심기능 역할을 했던 서부산권의 노후화된 공단을 첨단지식 기반 스마트시티로 재창조하여 노동 및 정주환경 개선과 산업구조의 구조고도화를 동시에 추구한다.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1. 지역생활권 활성화

(1) “지역행복생활권” 추진현황 및 성과

부산광역시의 지역행복생활권은 부산·김해·양산·울주로 구성된 부산중추도시권 1개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생활권 4개 지자체간 상생협력을 위해 폐기물 처리시설 공동이용, 낙후지역 환경개선 및 공유자원 관리, 광역 도시철도 노선 연장, 광역도로 연장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림 3-2-2 부산광역시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특히, 2014년에는 2건의 선도사업이 선정되어 총 5,356백만원(국비 4,238백만원, 지방비 1,118백만원)의 사업비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철길마을 W-line프로젝트는 생활권(부산-김해-양산-울주) 전체에 걸치는 사업으로 2014~2017년 간 3,170백만원(국비 2,844백만원, 지방비 326백만원)의 예산으로 경전선·동해남부선 철도역사 인근 낙후지역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고, 폐기물매립시설 공동이용은 김해-양산간 연계협력사업으로 2014년~2016년 간 2,186백만원(국비 1,394백만원, 지방비 792백만원)을 지원하여 양산 유산동 폐기물매립장을 공동이용하여 매립가스 이용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그 외, 영락공원 화장시설 공동 활용, 범기수원지 상수원 공동 이용, 허왕후 신행길 관광상품개발 사업 등 생활권 자체 연계협력사업 14건을 발굴·추진하여 지역 간 상생협력을 적극 도모하고 있다.

(2) 지역별 추진현황 및 성과

부산시는 민선 6기 출범 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원도심권 재창조, 산복도로 르네상스 같은 도시재생사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특히 민간전문가, 시의원,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도시재생 컨트롤타워 '도시재생위원회'를 공식 출범, 부산 곳곳의 낙후지역을 되살리는 사업에 힘을 쏟았다. 부산역을 중심으로 원도심 일대를 관광·ICT(정보통신기술)·영상산업 거점 기능을 갖춘 '창조경제 플랫폼'으로 되살리는 도시재생사업도 가시화시켰다. 이러한 부산형 창조적 도시재생사업은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014 메트로폴리스 어워드'에서 도시재생 우수모델로 평가돼 1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메트로폴리스는 전 세계 인구 100만명 이상 135개 도시가 회원으로 가입, 도시발전을 논의하는 권위 있는 국제회의체로서 '산복도로 르네상스'는 3년마다 여는 '메트로폴리스 어워드' 심사에서 세계 최고 도시재생모델로 뽑혔다. 낙후지역을 허물고 새로 짓는 재개발 대신 마을 고유의 환경에 문화·예술·경제를 접목시켜 더 살기 좋은 마을로 재탄생시키는 새로운 시도를 통해 세계의 인정을 받은 것이라 볼 수 있다. 특히 각 마을의 주민을 사업 추진 주체로 세우고, 사업 대상도 철도변 마을, 노후주거지, 공단 등 소외지역까지 확대한 점에서 좋은 평가를 얻었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부산역 일대가 경제기반형 국가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선정되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부산시는 이 사업 선정으로 부산역 일대를 관광·비즈니스 거점으로 탈바꿈시키고 대한민국 도시재생의 롤 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는 기회를 맞았다.

또한 부산시는 어느 분야보다 도시안전 확보에 힘을 쏟았는데, "시민이 안전한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재난안전관리시스템을 대폭 강화하였다. 시장 직속의 '통합재난관리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시·소방·경찰·군 등으로 구성된 '통합안전협력팀'을 신설하는 등 도시안전 기구도 대폭 보강했다. '소방·의료기관 응급 핫라인 시스템' 구축으로 응급환자의 사망률을 낮춰 행정제도개선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기도 했다. 이와 함께 전국 최초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재난관리시스템 '스마트 빅보드' 구축에도 착수하였으며, 시민들의 생활안전을 위해 '심야 마을버스 안심귀가서비스'를 시행했으며, 범죄예방디자인 '셉테드 사업'도 확대 추진하여 보다 안전한 부산을 만들어 시민의 행복한 삶의 질을 제고하였다.

2.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부산시는 부산국제금융센터 준공, 해양·금융 공공기관 이전,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서부산 글로벌시티 그랜드 플랜과 기술개발 및 인재육성 프로젝트인 ‘TNT2030 플랜’을 본격적으로 착수하여 부산 경제부흥의 기틀을 다지고 세계 일류도시로의 도약 기반을 마련하였다. 부산의 인재(Talent)와 기술(Technology)이 지니고 있는 잠재역량을 극대화해 2030년 부산을 세계적인 창조혁신 도시로 도약시키는 창조·혁신 실행계획인 ‘TNT 2030 플랜’의 구체화를 위해 과학기술 인프라 확충, 부산형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벤처기업 지원 확대 등으로 부산의 연구개발 역량을 한층 강화하였다. 지역 주력산업인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을 발전시키고, IT융복합산업을 부산의 신성장동력으로 뿌리내리도록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방사선 의·과학 산업을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하고 의료·바이오산업을 부산의 선도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였다.

무엇보다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시정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좋은기업유치위원회’를 출범하고 ‘일자리산업실’을 신설하는 등 일자리 창출 추진체계를 강화하였다. 또한 중국 및 개성공단 진출기업 6개사의 부산 유턴을 비롯해 컨택센터 5개사, 수도권 역외기업 3개사, 연구개발특구 연구소기업 5개사 등을 유치·설립했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 산업용 가스제조업 등의 글로벌 기업 2개사를 유치하여 총 3.5억 달러의 투자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이루었다.

부산국제금융센터(BIFC)가 준공되어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예탁결제원, 대한주택보증 등 수도권 공공금융기관 본사가 이전해 왔는데, 이들 이전기관들은 부산이 동북아의 해양·파생상품 금융허브로 도약하는 데 지렛대가 될 전망이다. 부산국제금융연수원 개원(9월), 해양금융종합센터 출범(11월), 해운보증기구 설립 추진 등 금융 인프라도 크게 넓혀 ‘동북아 금융허브 부산시대’를 활짝 열었다. 이러한 부산의 세계적인 해양·파생특화 금융 허브로의 도약은 영국의 세계적 컨설팅 그룹인 지앤(Z/Yen)이 발표한 ‘세계 주요 금융센터 경쟁력 평가지수(GFCI)’에서 83개 평가대상 도시 중 28위를 차지하며 인정받았다. 부산의 경쟁력은 파리(31위), 베이징(32위), 오사카(33위) 등 세계 유수의 금융도시들 보다 높게 나타났고,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는 10위를 차지했다.

세계경제 침체에도 불구하고 부산신항의 경쟁력 향상에 힘을 쏟아 2014년 한 해 동안 부산항이 처리한 컨테이너 물동량은 사상 최대로 평가받았으며, 북항재개발 사업 및 신항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항만물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도 확충하였다. 더불어 첨단기술이 해양산업과 융합 부가가치를 높이고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해양경제특별구역 지정 추진, 해양 R&D클러스터 구축, UN 산하 FAO 「세계수산대학」 설립 추진 등 해양창조경제 추진기반을 조성하였다. 이밖에 SW융합 클러스터 센터 개소, 지식산업센터 착공, 부산창조경제 혁신센터 구축 등 부산의 미래 먹거리와 R&D 산업생태계 조성을 역점 추진했다.

정보통신기술(ICT) 올림픽으로 불리는 ‘2014 부산 국제전기통신연합(ITU)전권회의’와 ‘한·아세안 정상회의’ 등 대형 국제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세계적인 마이스(MICE)도시로서의 역량을 다시 한 번 국내외에 과시했다. 특히, 3주간의 ‘ICT 올림픽’ 개최도시로 IT강국 한국의 면모를 세계에 알리며 당초 예상한 7천억 원을 뛰어넘는 파급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극대화하였다. 실제로 회의기간 동안 글로벌 IT기업인 시스코-SK텔레콤과의 ‘사물인터넷 기반 스마트시티 구축 사업’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국내외 ICT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비즈니스 미팅과 세계 고위급 인사 및 유명 기업인과의 네트워크 형성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부산시는 아시아 최초 ‘유네스코 영화 창의도시’ 지정으로 영화도시로서의 위상을 드높였다. 이는 영화의 전당과 부산국제영화제로 대표되는 부산의 영화산업 역량과 잠재력을 국제사회로부터 공식 인정받음과 동시에 부산시의 영화산업 정책에 대해 국제사회가 높은 평가와 지지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부산시는 지자체 최초로 중국 완다그룹과 영화펀드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원스톱 영화촬영 서비스, 후반작업시설 건립, 센텀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과 같은 영화·영상관련 인프라를 크게 넓히며 영화산업도시 기반도 한층 다졌다.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부산시는 민선 6기 출범 이후 산업체 수요에 부응하는 실무인력 및 기술적 혁신을 담당할 수 있는 맞춤형 고급인력 양성을 위해 지역기업과 연계한 다양한 산학협력 선도모델을 창출 및 확산하였다.

첫째, 부산대학교 등 7개 대학 산학협력단을 통해 특성화 분야 인력 1,226명을 양성하였고, 프로그램 참여학생의 67.5%가 취업 및 진학을 하였으며, 79건의 기술이 사업화되는 성과를 이루었다. 이러한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은 대학과 지역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산학협력 친화형 대학으로 체제를 개편하는 것으로 학과별 전공핵심역량강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특히, 해양, 융합부품, 창조문화, 바이오헬스, 지식인프라 등 부산시의 비교우위 분야를 집중 지원하여 대학의 체질개선 및 특성화 기반 구축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였다.

둘째, 유망 분야의 특화된 산업과 연계하여 예비 마이스터(Young Meister) 양성을 목적으로 최고 수준의 기술 중심 교육을 시행하는 특수목적 고등학교인 마이스터고의 지원 확대를 통해 현장중심 고교 직업교육 체제를 정착하였다. 자동차고의 경우 산학협력 MOU체결을 확대하였고, 사업체 맞춤반을 편성·운영하였으며, 7개의 전문동아리를 운영, 기능사자격증 취업률을 증가시켰다. 기계공고의 경우 영어토익 및 현장체험프로그램 등 영마이스터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창의적 지역인재 육성을 강화하였으며, 해사고는 방학 중 윈터-서머 스쿨운영, 승선실습교육 실시 및 기능사 자격증 취득을 독려하였다.

셋째, 지역기업과 대학이 공동으로 기술개발 과제를 수행하여 지역현장 맞춤형 고급인력 양성과 더불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였다.

넷째, 일·학습 병행 필요성 증대로 선 취업·후 진학 및 계속교육에 대한 수용에 대응하기 위해 고졸 선 취업·후 진학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학사과정 운영 및 재직자 평생직업 역량강화를 위한 재직자 기초과정을 개발·운영하였다. 또한 지역 주민들을 위한 평생교육 시설 및 프로그램 등 평생학습 참여기반이 부족한 실정으로 경력단절 여성, 은퇴자 등 취약계층에게는 계층별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으로 양질의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였다.

4. 지역 문화 육성, 생태 복원

부산시는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위한 마케팅 강화, 부산만의 특색 있는 관광상품 개발, 크루즈 등 해양관광 활성화, 관광인프라 확충, 고품질 관광서비스 제공 등 누구나 다시 찾고 싶어 하는 매력적인 국제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5대 전략으로 제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추진하였다. 특히, 해양, 산복도로, 국제시장, 영도대교 등 부산이 가진 고유의 관광자원과 6·25전쟁, 피란생활 등 역사성을 결합한 특색 있는 관광상품 개발로 부산관광의 경쟁력을 키웠으며, 관광서비스 인력 및 관광 인프라의 지속적 확충으로 글로벌 관광도시 부산의 위상을 높였다. 또한 쇠락했던 원도심 상업지 일원의 재정비와 함께 추진한 ‘크리스마스트리문화축제’는 세계축제협회 ‘피너클 어워드’ 금상과 ‘2014 아시아도시경관상’ 본상을 수상하며 세계적 겨울축제로 자리 잡았다.

부산시는 시민 삶의 질이 알찬 문화복지도시 조성을 위해 홍티아트센터, 감만창의 문화촌과 같은 특색 있는 문화·예술창작공간을 확충하였고, 메세나 활성화 지원, 시민 문화예술 교육지원, 시민 생활문화동아리 지원, 찾아가는 문화 활동 확대 등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 육성을 통한 일상 속 시민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하였다. 또한 소외계층의 문화공동체를 지원하여 사각지대 없는 문화복지 도시를 구현하였다. 뿐만 아니라 국제문화·축제도시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불꽃축제, 자갈치 축제, 바다 축제 등을 국제예술행사로 개최하고, 바다미술제를 부산만의 정체성이 묻어나는 국제적인 야외 미술제로 육성하였다. 특히 부산시민공원 내 문화예술촌에서 열린 부산 유일의 공원문화축제인 공방아트페스티벌에는 15일간 60여만 명의 방문객이 다녀가 지역문화 관광축제의 가능성을 확인하면서 지역민을 위한 부산문화 저변 확대에도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었다.

동천·수영강 등 지역하천 및 산림의 복원, 수질개선으로 생태자원 보전과 녹색 환경 증진을 도모하였다. 부산시는 생태자원을 단순한 보전과 개발이 아닌 도시개발의 복합적 가치로 접근하여 도시의 부족한 생태공간을 확충하고 체험공간을 제공하여 시민에게 휴식·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였다. 도심하천 환경개선사업 진행으로 자연 친화형 녹색도시 구축 및 깨끗한 하천만들기를 추진하였다.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부산시는 시민이 행복하고 따뜻한 복지, 시민 삶이 알찬 행복한 복지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 장애인 자립과 편의 증진,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 등과 같은 시책을 추진하였다.

먼저,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를 위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확충하였고,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최저생계비 120% 이하 한부모 가정 등 저소득 주민 2만 9천여 명에게는 월동대책비 및 교육장려금을 지원했다. 또한 고위험군·장기입원군 등의 의료급여 수급자 13만 5천여 명에게 진료비를 지원하기도 하였다. 또한 노숙인을 보호하고 자립기반을 지원하기 위해 거리 노숙인 현장 상담을 강화하고 쪽방 및 시설 연계를 지원하였으며, 쪽방거주자의 주거 및 일자리 지원을 위해 희망등지사업과 노숙인희망자활사업을 추진하였다. 안정된 일자리창출 및 시장활성화를 위한 내실 있는 시민체감형 지역사회서비스 추진과 생산적 자활사업을 통한 자립도 지원하였다.

둘째, 저소득 장애인의 생계를 보장하고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거주시설을 보장하고,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확대하였다. 또한 공공일자리 및 직업재활시설을 포함 장애인 1,800여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고, 직업재활시설도 26곳 운영하였다. 「부산장애인 채용박람회」를 개최하여 장애인 채용을 희망하는 업체와 구직자를 연결하기도 하였다. 박람회 기간 동안 장애인들이 구직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수화통역, 즉석 증명사진 촬영·인화, 취업서류 접수 대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셋째,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안정적인 노인 일자리 창출, 기초연금을 지급하였으며,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인 시니어클럽을 13개소에서 16개소로 3개소 확충하였다. 또한 노인복지관, 노인요양시설 등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하였으며, 영남권에서 유일한 '고령친화산업 IT·SW융합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고령친화산업의 IT융합 추진 기반을 조성하였다. 아울러, 부산국제실버엑스포를 개최하여 총 11개국 170개사, 500여 부스가 참가하는 사상 최대의 실적을 거두었다. 그 외 건강한 노후보장 및 노인보호를 위해 독거보인 응급보호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지원을 위해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쉼터를 운영하였다.

제4절 향후 추진계획

부산시는 향후 일자리·시민생활안전·도시재생을 3대 핵심과제로 삼고 ‘사람과 기술, 문화로 융성하는 부산’을 힘차게 열어나갈 예정이다. 우선 일자리가 풍부한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2015년 한해 좋은 일자리 5만개를 창출하고, 세계 5위 해양도시 도약을 위한 해양 R&D 등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할 계획이다. 특히, 창조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미래전략산업·신성장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 인프라를 확충하고, 신산업 수요에 맞는 산업단지를 적기에 확충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며, 인재양성과 기술혁신을 위한 ‘TNT2030플랜’도 힘껏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촘촘한 생활 안전망 및 선진국 수준의 비상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원전으로부터 안전한 부산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주민 주도의 창조적 도시재생으로 도심의 활력을 회복하고 이를 통해 도시재생에 보다 큰 활기를 불어넣어 도시 재창조를 통한 균형발전 도시 건설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노후 주택 밀집지역에는 주거 긴급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을관리사무소’를 설치하고, 도시재생지역 내 보육, 복지, 문화, 일자리 등 종합적인 일상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해 지역 주민의 만족도와 혜택 또한 제고할 예정이다.

부산은 3대 핵심과제와 함께 서부산 글로벌시티 조성, 2028년 하계올림픽 유치, 2030년 등록엑스포 유치와 같은 부산발전 메가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영화·영상 등 문화콘텐츠를 집적화하고 관광과 연계한 지식서비스 산업을 전략 육성하며, 창조적 공유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문화도시를 구현할 계획이다. 이는 대내적으로는 경제체질의 개선, 대외적으로는 부산의 경제영토 확장을 통해 환동해 시대를 앞장 서 열어가는 주춧돌이 될 것이다.

아울러 위대한 부산의 새 시대를 여는 초석을 다지기 위한 노력도 경주할 예정이다. 행정혁신을 통한 ‘시민중심, 현장중심, 책임시정’의 적극적 구현으로 2030년까지 부산의 도시 경쟁력이 전 세계 50위권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도시경제, 연구개발, 문화교류, 정주여건, 도시환경과 접근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표와 지수를 세계도시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제3장 대구광역시

제1절 경제 현황

1. 일반 현황

대구의 인구는 2013년 기준 250만명으로 2010년에 비해 1만명 감소하였으며, 2010년 이후 정체가 지속되고 있다. 지역내총생산(GRDP)은 2010년 39조원에서 10% 증가한 43조원으로 이며, 1인당 GRDP는 2010년 대비 31% 증가한 1,815만원으로 나타났다. 수출액은 2010년 52억 달러에서 35%로 크게 증가한 70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취업자 수는 2010년 117만명에서 120만명으로 증가하였다. 재정자립도는 51.8%로 2007년에 비해 12.1%p나 낮아져 전국 평균 수준으로 떨어졌다.

표 3-3-1 대구광역시 경제 일반현황

구분	전국			대구		
	2007년	2010년	2013년	2007년	2010년	2013년
지역내총생산(십억원)	1,151,843	1,265,146	1,376,143	36,825	38,580	42,833
인구(천명)	49,269	50,516	51,141	2,493	2,512	2,502
1인당 GRDP(만원)	2,147	2,561	2,842	1,387	1,561	1,815
수출액(백만달러)	371,489	466,384	559,632	4,040	5,193	7,012
취업자(천명)	23,433	23,829	25,066	1,157	1,169	1,195
재정자립도(%)	53.6	52.2	51.1	63.9	56.3	51.8

주 : 지역내총생산은 2010년 기준가격임.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2. 산업 현황

대구의 산업구조는 지역내총생산액 기준으로 서비스업 76.8%, 제조업 22.8%, 농림어업 0.3% 순으로 나타났다.

2013년 제조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종사자수 및 생산액 기준으로 '자동차

및 트레일러'가 각각 17.2% 및 21.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종사자수 기준으로는 '금속가공제품'이 21.0%로 가장 높았다. 이 외에도 '기타 기계 및 장비',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의 비중도 높았다.

표 3-3-2 대구광역시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07년			2010년			2013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제조업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식료품	3.3	3.6	5.0	3.2	3.1	4.9	3.4	3.8	5.2
의복, 의복액세서리	4.0	3.4	1.2	3.7	3.1	1.3	3.3	2.7	1.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7.4	7.6	6.4	7.1	6.9	6.8	7.6	8.2	7.1
금속가공제품(기계·가구 제외)	20.9	15.9	12.3	21.1	16.2	12.5	21.0	15.9	13.5
전자부품·컴퓨터·통신장비	2.5	7.9	8.0	2.3	7.1	6.5	2.3	7.1	5.2
전기장비	2.9	3.4	4.4	3.3	2.8	3.3	3.7	3.9	4.1
기타 기계 및 장비	14.7	11.6	12.1	14.5	12.3	14.0	14.8	12.6	13.7
자동차 및 트레일러	7.6	15.0	20.3	8.3	17.0	19.6	9.0	17.2	21.5
기타 제품	0.6	0.3	0.3	0.6	0.4	0.2	0.5	0.3	0.1

주 : 2010년은 경제총조사 자료임.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광업·제조업 조사 ; 경제총조사(2010)」

표 3-3-3 대구광역시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07년			2010년			2013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서비스업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0.6	1.3	4.2	0.4	0.9	3.5	0.6	1.1	4.8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4	4.0	7.2	1.8	4.8	14.9	1.8	3.7	7.4
부동산업 및 임대업	12.0	10.9	20.7	9.9	7.2	14.4	11.8	9.3	18.8
사업지원 서비스업	3.7	15.4	10.6	3.7	13.7	10.3	4.5	18.9	14.4
교육 서비스업	20.9	16.2	8.9	21.2	28.7	21.9	20.3	13.0	8.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0.2	24.9	30.2	10.4	22.4	20.7	12.7	30.6	31.4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12.3	8.2	6.5	11.1	5.6	4.2	11.4	6.9	5.1
기타 개인 서비스업	38.9	19.1	11.7	41.4	16.8	10.2	37.0	16.5	10.1

주 : 2010년은 경제총조사 자료임.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전국서비스업조사 ; 경제총조사(2010)」

2013년 서비스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업체수 기준으로 '기타 개인 서비스업'과 '교육 서비스업'이 각각 37.0%, 20.3%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부동산 및 임대업'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반면 종사자수 및 생산액 기준으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30.5%, 31.4%로 가장 높았다. 2007년과 비교할 때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종사자수 및 생산액 비중이 증가하였으며,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종사자수가 다른 업종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3. 혁신활동 현황

연구개발 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기준 연구개발비 8,212억원, 연구개발인력 13,287명, 연구개발조직수 969개로 나타났다. 전국대비 비중 변화는 2007년에 비해 연구개발비는 0.1%p 증가한 반면, 연구개발인력 및 조직수는 소폭 감소하였다.

2013년 기준으로 특허출원은 4,054건, 등록은 2,641건으로 전국 대비 비중은 각각 2.5%, 2.8%로 나타났다. 2007년 대비 출원 건수는 1,139건 증가하여 전국대비 비중이 0.2%p 증가하였으며, 등록 건수는 996건 증가하여 1.0%p 증가하였다.

표 3-3-4 대구광역시 혁신활동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 건, %)

구분		2007년	2010년	2013년
연구 개발	연구개발비	413,135 (1.3)	590,020 (1.4)	821,246 (1.4)
	연구개발인력	10,424 (2.5)	12,241 (2.5)	13,287 (2.3)
	연구개발조직수	448 (3.6)	716 (4.0)	969 (3.5)
특허	출원	2,915 (2.3)	3,459 (2.6)	4,054 (2.5)
	등록	1,645 (1.8)	1,295 (2.5)	2,641 (2.8)

주 : ()는 전국대비 비율임.

자료 : 1) 한국과학기술기 획평가원(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년도

2) 특허청, 지식재산통계연보, 각년도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대구광역시에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과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유치를 통해 첨단의료산업 및 로봇산업분야의 신성장 동력 확충 기반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들과 연계한 다양한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투자유치 환경적인 측면에서 경제자유구역인 대구테크노폴리스지구, 신서첨단의료지구 등이 입지하고 있어 국내외 투자유치에 유리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

또한 대구광역시에는 DGIST 등 29개 대학(대학교 13개, 전문대학 16개)과 103개 고교가 소재하며, 국내 최초로 외국학교법인(Lee Academy)이 직접 투자한 대구국제학교가 입지(2010년 4월)해 있다. 즉, 우수 대학과 교육 및 학술 관련 공공기관 등 교육 인프라가 대구광역시에 집적되어 있어 교육 인프라가 우수하다.

발전과제로서 제조, 중소기업 위주의 취약한 산업생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지식기반 산업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 아울러 노후산단의 재정비를 통해 첨단산업 유치를 위한 기반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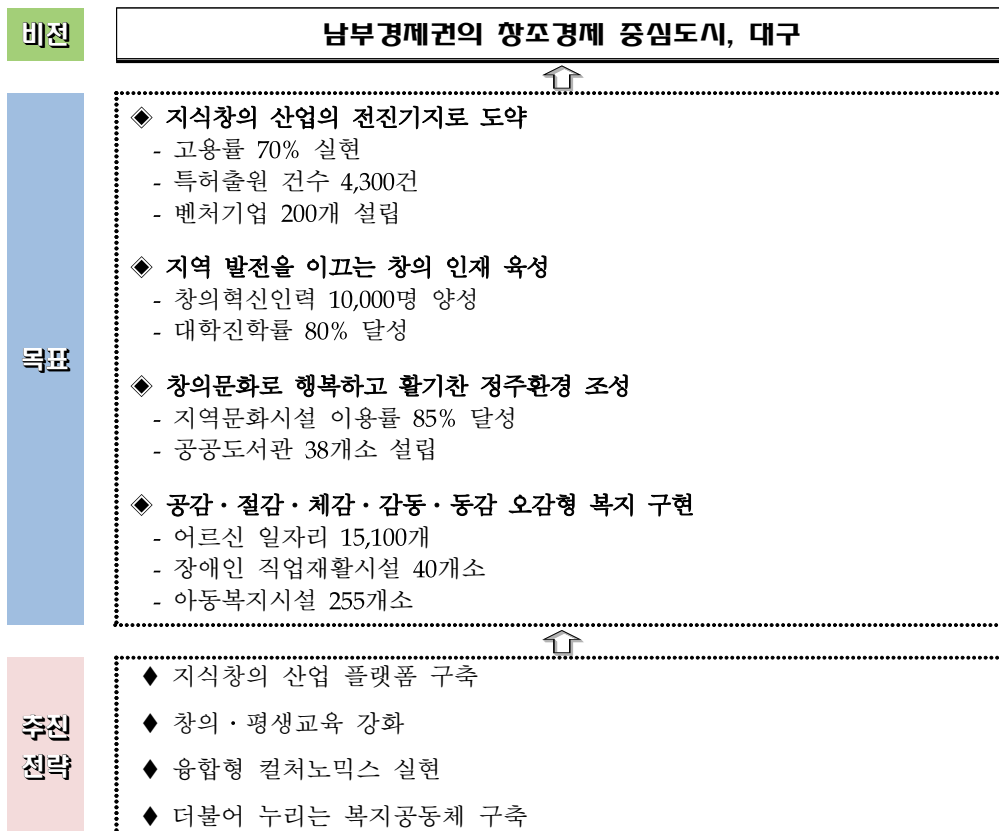
그리고 중추도시로서의 도심기능을 회복하여 도시매력도를 증진시키고 주변도시와의 연계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1. 발전비전

대구광역시시는 창조경제시대로의 패러다임의 변화, 공간적 위상, 주변도시와의 역할 관계 및 지역의 정책적 의지 등을 고려하여 '남부경제권 창조경제 중심도시, 대구'라는 미래비전을 설정하였다. 지식창의 산업 플랫폼을 구축하고, 융합형 컬처노믹스 실현과 복지공동체를 구축하여 대구의 장기적인 발전 및 비전 실현을 위한 노력을 거듭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식창의 산업 및 인재 육성, 창의문화로 행복한 정주환경 조성, 오감형 복지구현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그림 3-3-1 대구광역시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2. 추진전략

대구광역시는 비전의 실현을 위해 경제·산업분야는 ‘지식창의 산업의 전진기지로 도약’, 인력양성 분야는 ‘지역 발전을 이끄는 창의 인재 육성’, 문화 및 생태분야는 ‘창의문화로 행복하고 활기찬 정주환경 조성’, 복지의료분야는 ‘공감, 절감, 체감, 감동, 동감하는 오감형 복지 구현’을 4대 하부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첫째, 지식창의산업의 전진기지로의 육성을 위해 SW융합기술고도화 및 ICT 융합 창조벤처센터 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을 패키지사업으로 추진하고, 기존의 임대형지식 산업센터, 노후산단 재생 등을 통해 제조·서비스가 융합된 도시형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한다.

지식창의산업의 거점화를 위해 국가 미래산업의 주요 전략으로 추진되고 있는 첨단 의료복합단지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한국뇌병원 및 첨단의료유전체연구소 설립 등의 내실화를 추진하고 있다.

둘째, 지역발전을 이끄는 창의인재 육성을 위해서 ‘창의·평생교육 강화’를 추진하고 세부정책으로 공교육 영역의 확대와 국제화 교육 및 지역대학의 역량 강화, 평생학습 체계 구축을 전개하고 있다.

셋째, 창의문화로 행복하고 활기찬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서 문화적 비즈니스 활동과 문화예술활동을 동시에 육성하여 문화예술과 경제적 가치의 조화를 추구하고, 일상 속 문화복지의 구현과 도시 생태자연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넷째, 공감, 절감, 체감, 감동, 동감할 수 있는 오감형 복지 구현을 위해 더불어 누리는 복지공동체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복지체감도 증진을 위해 복지수요자의 다양한 개인별 욕구를 만족시키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지역의 우수한 의료서비스 인프라와 SW기술을 활용하여 시민대상의 효율적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정보 교류시스템 시범서비스 사업 추진을 통해 건강한 생활을 위한 의료 복지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1. 지역생활권 활성화

(1) “지역행복생활권” 추진현황 및 성과

대구광역시의 지역행복생활권은 대구중추도시생활권 1개 권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구광역시를 중심으로 8개 시·군민 모두가 행복한 생활공동체를 조성하고자 ‘주민이 행복한 생활공동체 조성’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대구는 목표 실현을 위하여 지역중심지 활력 증진, 주민체감 생활 인프라 확충, 지역주도 협력 발전체제 구축, 그리고 지역 교통 및 물류망 확충을 추진전략으로 설정하였다. 지역 중심지 활력 증진을 위해서 창조적인 마을 조성 및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주민체감 생활 인프라 확충을 통해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권 정주여건을 확보하고자 한다. 아울러 지역주도 협력 발전체제 구축을 통해 창의적인 주민 자립역량을 확보하고, 지역 교통 및 물류망 확충을 통해 생활권 시·군 간의 효율적인 연계 인프라를 확충하고 주민생활 편의를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림 3-3-2 대구광역시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이와 관련하여 생활권을 구성하고 있는 대구광역시 인근 시·군의 지역 특산물을 활용하여 힐링푸드 레시피 개발 및 힐링용 로컬푸드 개발하여 이를 산업화하는 ‘지역특

산물을 활용한 힐링푸드밸리 조성사업'을 생활권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15년까지 총사업비 8.33억원(국비 7.49억원, 지방비 0.84억원)이 투입되며, 이를 통해 생활권내 주민 소득창출과 연계협력 강화, 그리고 지역주도의 협력 발전체계 구축을 도모하고 있다. 그간 이 사업은 '힐링식품사업단'을 구성하였고 아토피 레시피 개발을 추진하였고, 힐링푸드밸리의 브랜드화와 네이밍(웰푸드)을 추진하였다.

(2) 지역별 추진현황 및 성과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은 생활공간에 기반한 지역정책을 통해 주민들의 정책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 중심이 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대구광역시도 주민 체감형 생활 인프라 확충의 노력으로, 하수 및 오수 처리시설 정비를 추진하였다. 현풍하수처리장건설 사업이 151억원의 예산으로 2단계 사업을 착공하였고 공정률 40%를 보이고 있다. 소규모 하수관로 정비 및 환경기초시설 설치, 북부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 등의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신천 좌안지역 오수관로 설치, 이천·봉덕지구 오수관로 설치 등의 오수관 정비사업을 실시하였다.

상대적으로 개발이 뒤떨어진 농촌지역의 기초생활환경, 문화·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확충하여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을 통해서 5개 지구(동구, 북구, 수성구, 달성군 구지면·하빈면)의 마을간 도로, 농로포장 및 용·배수로 정비 등을 통해 농촌생활 인프라도 개선하였다.

개발제한구역내 거주함으로써 불편함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54억원(국비 47억원, 지방비 6.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농수로·마을진입로·소하천 등 생활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누리길·복합문화공간조성, 전통문화복원사업 등 18개소의 사업을 시행하는 등 주민들의 영농활동이나 일상생활 편의를 도모하였다.

지자체간 연계협력 강화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약용작물 명품화 지원사업은 생산량의 증가를 위해 농가의 우수한 종묘·종근을 보급하고, 재배에서 집하·가공·출하의 전 단계를 인증·관리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약재의 신뢰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이다. 특히 약용작물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GMP시설 구축 그리고 한약 안정성검사를 통한 생산 및 유통의 신뢰성 강화로 약용작물 재배 농가의 소득 증대 및 지역간 연계협력 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대구광역시시는 일자리 창출 중심의 지역대표산업 육성을 위해, 주력산업 분야별 기술개발 지원, 신지역특화산업육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초광역연계 3D융합산업 육성에 146.25억원(국비 102.2억원, 지방비 41억원, 민자 3.05억원)을 투입하여 3D융합기술지원센터를 준공하였고, 기업지원을 위한 장비 11종을 구축하여 해당 기업의 지원체계를 갖추어가고 있다. 이를 통해 장비활용 애로 기술지원 16건, 인력양성 639명, 기술사업화 지원 43건 등을 통해 지역 3D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다.

레이저응용 의료기기/첨단소재가공 산업기반구축사업을 통해서 장비구축 21종, 시제품제작지원 5건, 기반구축연계 제품화개발 R&D지원 3건을 추진하는 등 관련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였고, 신규인력채용 5명과 151명의 인력양성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다. 이 사업을 통해서 시제품 제작지원 기업의 매출이 발생하였고, 다수 기업 및 기관들의 레이저장비 활용 활성화로 향후 신기술개발 및 제품화를 통한 기업의 매출증대가 기대되고 있다.

또한 지역기업 경쟁력강화를 위해 다양한 기업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이를 살펴보면 중소기업 해외마케팅지원 사업을 통해서 5개 분야 35개 사업에 46억원이 투자되었고 수출액 78억 달러를 달성하였는데, 이는 전년대비 11.4%가 증가한 수치로 지역에서는 사상최고액을 경신하였다. 중소기업 비중이 99%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의 특이성을 감안할 때, 자체적으로 해외마케팅 역력이 부족한 영세중소기업에게 무역사절단,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등 해외판로 개척의 기회를 제공하여 사상 최고액의 수출 달성에 기여하였다.

우수기업 성장동력화 사업의 경우 스타기업의 발굴과 육성을 통해 지역기업의 경쟁력강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타지역의 벤치마킹 사례가 되고 있다. 동 사업을 통해 평균매출액 2.1% 증대 및 고용인원 5.9% 증가, IPO 기업 매출 2개사, 투자유치 195억원, 지역사회동반성장을 위한 환원에 약 160억원과 봉사활동 34건 등의 성과를 도출하였다.

종합컨설팅 및 맞춤형 지원사업의 경우 월드스타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이 사업을 통해 매출액이 27.1% 증대되었고, 고용인원이 11.6% 증가하였으며, 중

기청 주관의 “World Class 300 기업” 6개사를 배출하였다. 이는 수도권을 제외하면 광역지자체 중 최다 선정의 성과이다. 아울러 약 160억원의 지역사회 환원과 34건의 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등 지역사회의 동반성장에도 기여하였다.

또한 벤처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을 통해서 지역 벤처기업의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시제품 제작 54건, 특허·실용신안 등 인증지원 98건, 전시회 참가지원 26건, 컨설팅 지원 127건, 마케팅 활동 지원 210건의 실적을 올렸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디어와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사업화 능력이 미흡한 신생기업 및 예비창업자에게 체계적 창업보육 시스템을 제공함으로써 창업 성공률 제고에 힘쓰고 있다.

지역 중소기업의 상품 및 브랜드 인지도 상승에 따른 기업 매출 증가를 위한 지역 중소기업 디자인 지원사업의 경우 266건의 디자인 애로사항 지원과 58개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을 지원 그리고 9개 기업의 자체디자인 상품개발을 지원하였다.

그리고 대구의 특화프로젝트인 SW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지역SW산업진흥지원사업을 통해 SW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국내외 전시·상당회 참가 6회(40개 기업), 제품홍보지원 16개 기업, 경영·상용화컨설팅지원 14개 기업, 포럼운영과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연계사업으로 7개 기업을 지원하는 등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SW기업의 글로벌 진출 역량강화 및 해외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힘쓰고 있다.

아울러 대구광역시에는 대학의 기술개발 자원을 활용하여 기술력이 취약한 지역 중소기업의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 지원과 더불어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원을 통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와 지역대학의 인력양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산학공동기술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특허출원 21건 특허등록 6건, 시제품개발 68건, 공정개선 10건, 고용창출 12명, 논문 발표 11건, 상품화 42건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동 사업을 통해 혁신역량이 취약한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산학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의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4개소, 특허출원 8건, 특허등록 2건, 시제품 개발 5건, 고용창출 13명, 상품화 3건 등의 성과를 창출하였고, 이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역량 제고 및 산학연계를 강화하여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있다.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대구광역시시는 창조경제의 시대에 발맞추어 창의적인 인재양성과 이를 위한 교육여건 개선 등의 사업을 운영하였는데, 대표적으로 창조적 인재육성을 위한 산학협력선도대학·전문대학 육성과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 등을 통한 다자간 협력환경을 조성하였다. 아울러 평생학습체계구축을 위한 노력도 추진하였다.

먼저 산학협력선도대학(LINC)육성사업을 살펴보면, 119억원(국비 106억원, 지방비 3.2억원, 민자 9.5억원)을 투자하여, 현장실습학생 1,260명을 교육하였고, 캡스톤디자인에 4,470명을, 특성화교육을 통해 2,563명을 지원하는 등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지역대학의 연구기술을 기업에 이전하는 기술이전 63건과 기술사업화 34건을 추진하였다.

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LINC)육성사업을 통해서는 22.3억원(국비 20.5억원, 시비 1.4억원, 민자 0.4억원)을 투자하여 현장실습학생 2,461명, 캡스톤디자인에 393명, 특성화교육에 722명을 교육하였으며, 기술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기업에 기술지도 367건(47개사)을 추진하였다. LINC사업을 통해서 지역의 연구중심대학 기반 강화 및 글로벌 역량을 제고하고, 창의에 기반한 고급 전문인재 양성, 그리고 지방 대학원의 교육·연구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전문적인 직업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산학연계와 적재적소에 전문인력을 배치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마이스터고 지원프로그램을 통해서 교구 및 실험·실습기자재 확충과 영마이스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취업률 96.8%를 기록하였다.

평생학습지원사업을 통해서는 5억원을 투자하여 22개 기관, 880명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였고, 2.5억원을 투자하여 진흥원을 운영하였다. 이를 통해 계층별 세대별 맞춤형 평생학습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통해 평생학습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재정여건 및 학교 현장의 의견을 감안한 수요자 중심의 초등돌봄교실 운영으로 215개교의 418실을 운영하였고, 총 7,848명이 돌봄교실을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질 높고 안전한 돌봄 서비스 제공을 통한 학생·학부모의 만족도를 개선하고자 노력하였다.

4. 지역 문화 육성, 생태복원

대구광역시시는 창의문화로 행복하고 활기찬 정주환경 조성을 위하여 ICT융합 스포츠 및 휴먼케어 콘텐츠개발을 지원하고, 국제오페라축제 지원 및 야구장 건립 등의 문화·체육기반 조성에 힘쓰고 있으며, 생활 속의 문화체육 복지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먼저 ICT융합콘텐츠 개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휴먼케어콘텐츠 개발사업의 경우 콘텐츠 개발지원 12건과 함께 24명의 고용을 창출하여 지역의 휴먼케어콘텐츠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였다.

대구모바일게임센터 지원사업을 통해서도 무역회관 12층에 모바일게임센터를 구축하여 게임개발 및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 집적화와 기업지원으로 모바일게임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구디자인패션산업육성사업을 통해서도 16개 컨소시엄의 제품개발업체를 지원하였고, 신인디자이너육성 16명, 패션문화캠프운영 74명, 패션창업캠프운영 9팀 등의 성과를 도출하였고, 이를 통해 글로벌 마켓에서 계약액 2.4억 여원의 매출이 증대되었다.

문화체육기반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아양아트센터 공연장을 리모델링하고, 달성군민체육관 증개축 공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북구 다목적스포츠센터를 건립하고 있다. 특히 시민여가활동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대구야구장 건립사업의 경우 연면적 46,943㎡(지하2층/지상5층) 규모에 공정률 43%(2014년 12월)를 기록하고 있다.

오페라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부대행사 기획으로 오페라의 문턱을 낮추고 시민들과 함께한 축제의 본질을 만족시키는 공연예술축제로 호평받고 있는 대구국제오페라축제의 경우, 수준 높은 대중성 위주의 메인오페라 구성으로 역대 최고 점유율(91%)을 기록하여 브랜드 파워를 강화해가고 있다. 12회 행사에서는 10개 단체가 참가하였고, 18개 작품이 총 31회 공연을 실시하여, 총 35,767명의 관람객이 내방하였다.

또한 생활 속 문화체육복지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일반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 지역주민 대상의 생활체육지도활동 및 동호인 육성을 추진하였고,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 지역노인시설 방문 및 노인관련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을 통하여 어르신들의 체력증진 및 건전한 유대관계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대구광역시시는 사각 없는 지역복지·의료분야의 오감형 복지 구현 및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사업비 5.8억원을 투입하여 광역 치매센터를 운영하여, 2,472명의 치매조기검진과 475명에게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였다. 107회에 걸쳐 9,820명에게 치매관련 교육사업을 실시하였고, 103회에 걸쳐 치매인식개선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장애인의 행복한 삶을 위한 지원으로 직업재활시설을 개보수(개보수 1, 장비보강 5)하였고, 연 1,739명이 장애인 복지관을 이용하였다.

아울러 저소득층 생활밀착 서비스 제공으로 생계, 의료, 교육, 주거, 복지 사각지대를 지원하고 있는데,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 보건·복지·교육의 맞춤형 통합 서비스 구축에 힘쓰고 있다. 드림스타트업 사업은 기초생활수급가정 및 차상위 계층 아동 등 취약계층아동(0~12세)과 가족을 대상으로 맞춤형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2.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였다. 이를 통해 8개소의 센터를 운영하여 300여명의 아동이 이용하였다.

또한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하여 출산장려금·의료비지원, 보육료 확대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출산축하금지원과 컬러폴 출산장려금 지원을 통하여 28,372명이 출산축하금을 지원받았으며, 이를 통해 출산분위기를 조성 장려하고 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6개소,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95개소, 21개소의 어린이집 기능보강을 통해 신뢰받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였다.

취약지역 공공의료체계 정비를 위하여 예방적 차원의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하였는데 13개 건강증진사업을 통합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422,025명에게 제공하여 시민건강증진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고, 회귀·난치성 질환자 1,584명에 의료비 지원과 대상환자 가족들의 생활 및 심리적 안정 도모를 위해 힘쓰고 있다.

지역응급의료체계 선진화사업을 통해서 중심병원 5개소와 협력병원 36개소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2,445건의 환자 전원을 유도하여 응급실 환자 체류시간 감소 및 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제4절 향후 추진계획

대구광역시시는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의 기조변화에 발맞추어 생활권사업 중심의 사업 전개로 시민들의 정책체감도를 제고하고자 노력하였다. 이와 더불어 특화발전사업으로 선정된 SW융합산업 육성을 통하여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5년도에는 전체적인 지역발전의 틀을 유지하면서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의 내생적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 가고자 한다.

먼저 창조경제의 기반이 되는 창의산업 육성과 벤처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한다. 2014년도에 개소한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와 스마트벤처스쿨 등을 통해 창의력에 기반한 벤처기업 및 스타트업 기업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갈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지역의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있는 로봇산업클러스터 지속 추진, 첨단의료복합단지 활성화, 자동차 부품산업의 구조고도화 그리고 물산업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기업유치 및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들 차세대 동력산업의 지원을 위하여 산학연계를 통한 창의적 인재양성 및 현장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또한 기업 맞춤형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역 이전기업 및 신규 스타트업 기업의 사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다. 그간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글로벌 마케팅 지원사업의 내실을 기하고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를 통하여 효율적인 도시형 첨단 산업단지 조성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다.

정부의 문화융성 기조에 발맞추어 융합형 컬처노믹스를 실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문화예술과 경제적 가치의 조화, 일상생활 속의 문화복지 구현, 도시내 쾌적한 생태환경 유지를 도모하고자 한다. 아울러 문화적 비즈니스 활동과 문화예술 활동을 동시에 지원하여 문화예술과 경제적가치의 조화를 이루고자 한다. 또한, 복지체감도 제고를 위해 복지수요자의 다양한 개인별 욕구를 만족시키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건강한 생활을 위한 의료복지서비스 선도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중추도시생활권의 도심기능 강화와 주변도시와의 연계 강화를 통해서 중추도시생활권의 위상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도심권 중심의 성장잠재력 육성과, 주변도시의 활력회복을 추진하며,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다차원적 광역서비스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제4장 인천광역시

제1절 경제 현황

1. 일반 현황

인천의 인구는 2013년 기준 288만명으로 2010년에 비해 12만명 증가하여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지역내총생산(GRDP)은 2010년 61조원에서 64조원으로 증가하였다. 1인당 GRDP는 2,297만원으로 광역시 중에서는 울산, 서울 다음으로 높았다. 수출액은 2010년 210억 달러에서 30%로 크게 증가한 273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취업자수는 2010년 132만명에서 144만명으로 12만명 증가하였다. 재정자립도는 67.3%로 2007년에 비해 2.5%p 낮아졌으나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하였다.

표 3-4-1 인천광역시 경제 일반현황

구분	전국			인천		
	2007년	2010년	2013년	2007년	2010년	2013년
지역내총생산(십억원)	1,151,843	1,265,146	1,376,143	56,332	60,708	63,591
인구(천명)	49,269	50,516	51,141	2,665	2,758	2,880
1인당 GRDP(만원)	2,147	2,561	2,842	1,958	2,238	2,297
수출액(백만달러)	371,489	466,384	559,632	20,928	21,022	27,288
취업자(천명)	23,433	23,829	25,066	1,258	1,320	1,442
재정자립도(%)	53.6	52.2	51.1	69.8	70.4	67.3

주 : 지역내총생산은 2010년 기준가격임.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2. 산업 현황

인천의 산업구조는 지역내총생산액 기준으로 서비스업 70.2%, 제조업 29.2%, 농림어업 0.4%, 광업 0.2%로 나타났다.

2013년 제조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업체수 기준으로는 '금속가공제품'이

18.8%로 가장 높았다. 종사자수는 '기타 기계 및 장비'가 17.6%였으며, 생산액 기준으로 '자동차 및 트레일러'가 17.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 외에도 '전자부품·컴퓨터·통신장비', '전기장비' 등의 업종 비중도 높았다.

표 3-4-2 인천광역시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07년			2010년			2013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제조업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식료품	2.7	3.7	5.9	3.0	3.5	7.9	3.4	3.7	8.0
의복, 의복액세서리	2.0	1.6	0.3	2.2	1.5	0.3	2.0	1.5	0.3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8.3	7.9	4.4	8.0	8.5	4.5	8.1	8.6	4.6
금속가공제품(기계·가구 제외)	19.8	12.7	6.3	18.7	14.3	6.6	18.8	12.1	5.8
전자부품·컴퓨터·통신장비	9.4	10.5	5.1	10.1	12.4	6.4	10.7	12.1	7.9
전기장비	7.4	7.0	5.0	7.3	6.6	4.9	7.4	6.2	4.7
기타 기계 및 장비	18.5	17.3	13.9	18.4	20.4	15.7	18.3	17.6	12.7
자동차 및 트레일러	4.4	13.3	18.9	4.5	6.7	14.1	4.9	12.8	17.1
기타 제품	1.7	1.7	0.7	1.6	1.5	0.4	1.7	1.3	0.4

주 : 2010년은 경제총조사 자료임.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광업·제조업 조사 ; 경제총조사(2010)」

표 3-4-3 인천광역시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07년			2010년			2013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서비스업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0.8	2.7	10.6	0.7	2.0	8.6	0.9	2.4	12.0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0	2.1	3.4	1.2	2.7	9.1	1.3	2.1	4.2
부동산업 및 임대업	19.9	13.9	28.1	16.7	8.6	18.2	16.6	9.8	17.0
사업지원 서비스업	3.2	16.3	7.5	3.3	13.5	7.8	4.6	19.7	11.6
교육 서비스업	15.1	14.9	7.9	15.1	28.0	20.7	14.7	11.2	6.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0.6	22.8	21.2	10.5	21.4	18.3	14.1	30.7	30.7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14.5	8.9	9.7	12.7	6.2	6.5	13.8	7.8	7.3
기타 개인 서비스업	34.9	18.3	11.7	39.9	17.5	10.9	33.9	16.3	10.7

주 : 2010년은 경제총조사 자료임.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전국서비스업조사 ; 경제총조사(2010)」

2013년 서비스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업체수 기준 '기타 개인 서비스업'이 33.9%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종사자수 및 생산액 기준으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각 30.7%로 가장 높았다. 인천은 그 외에도 '부동산업 및 임대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등의 업종 비중이 높았다. 2007년과 비교할 때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비중이 다른 업종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3. 혁신활동 현황

연구개발 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기준 연구개발비 2.1조원, 연구개발인력 22,370명, 연구개발조직수 1,548개로 나타났다. 전국대비 비중 변화는 2007년에 비해 연구개발인력 및 조직수는 각각 0.4%p, 0.2%p 증가한 반면, 연구개발비는 1.8%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 현황을 보면, 2013년 기준으로 특허출원은 6,185건이며, 등록은 4,478건으로 전국대비 비중은 각각 3.9%, 4.7%로 나타났다. 2007년 대비 출원 건수는 1,274건 증가하였으나 전국대비 비중은 0.1%p 증가에 불과한 반면, 등록은 1,787건 증가하였으며, 전국대비 비중은 1.8%p 증가하였다.

표 3-4-4 인천광역시 혁신활동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 건, %)

구분		2007년	2010년	2013년
연구 개발	연구개발비	1,676,396 (5.4)	1,662,384 (3.8)	2,132,828 (3.6)
	연구개발인력	14,924 (3.5)	19,952 (4.0)	22,370 (3.9)
	연구개발조직수	667 (5.4)	981 (5.5)	1,548 (5.6)
특허	출원	4,911 (3.8)	5,779 (4.4)	6,185 (3.9)
	등록	2,691 (2.9)	2,253 (4.4)	4,478 (4.7)

주 : ()는 전국대비 비율임.

자료 : 1)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년도

2) 특허청, 지식재산통계연보, 각년도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인천시는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우수 연구개발 인력 유치가 용이하며, 서울·경기 지역에 입지한 서비스 기업과 협력이 용이한 장점이 있다. 또한, 지역 내 산업단지에는 다양한 업종의 중소기업이 밀집되어 있어 R&D 수요 증대가 가능하며, 기업 간 협력을 통한 융합트렌드에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역 내 주요 혁신주체이자 기초연구를 수행하는 대학과 연구기관은 총 36개로 전국 1,539개와 비교하여 2.3%(2011년 기준)에 불과하여, 서울·경기·대전 등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혁신역량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이에 대한 투자가 향후 발전과제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인천시는 항만과 국제공항이 위치하고 있어 인적·물적 자원의 수송에 있어 국내 여타 도시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경쟁력을 지닌다. 항공물류는 국제화물 처리실적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 88개 도시와 화물항공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등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허브 기지로 성장하고 있다.

인천시는 2005년부터 경제자유구역 등 신도심과 원도심간의 격차 완화를 위한 발전과제들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동 과제 추진을 통해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의 신도심 육성을 위한 새로운 서비스 제공과 원도심의 지역자원에 기반한 도시재생에 대한 관심과 새로운 발전모델을 완성시켜 나가고 있다.

송도·청라·영종 등 경제자유구역에 입지하고 있는 글로벌캠퍼스, 로봇랜드·카지노 관광산업 등 서비스산업은 정부에서도 지원하고 있는 유망 서비스산업군으로 향후 국내 최대의 서비스산업지역으로의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또한, 인천은 GCF(녹색기후변화기금)를 유치하는 등 환경도시로의 변화를 꿈꾸며, 과거 공업지대에서 미래 환경도시로의 이미지 전환과 환경 분야에서의 높은 발전을 도모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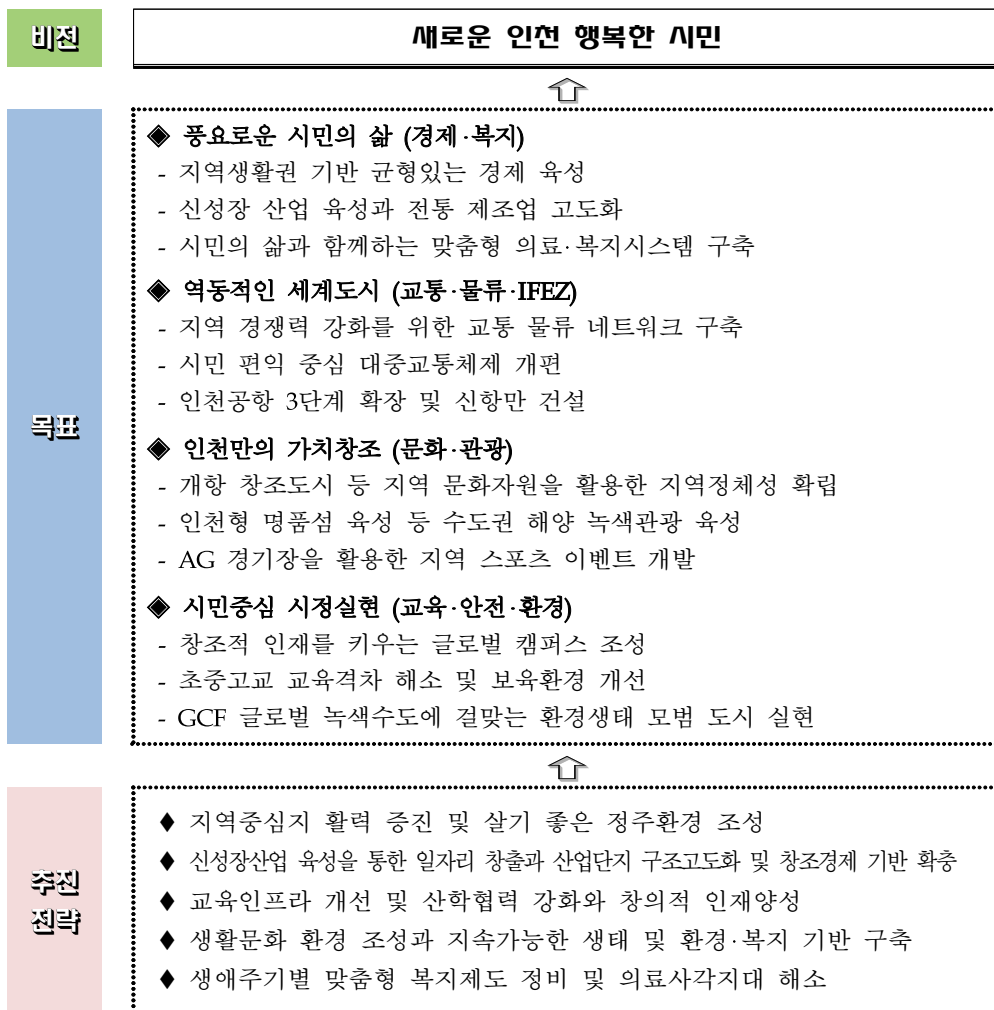
인천은 항만·공항, 수도권과 중국이라는 배후시장, 전통 제조업을 기반으로 성장하고 있는 첨단산업, 경제자유구역 조성의 성과 가시화, 국내외 우수대학교 R&D입주 증가, 서해안 해양생태지역의 풍부한 자연환경 등의 강점을 토대로 하여 송도지구 서비스산업 육성전략, GCF 등 국제기구의 유치와 국제협력 확대 증가, 지역자원 기반의 도시재생의 관심 증대, 중국 부상과 환황해 중심도시로서의 역할 제고, 2014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통한 도시 브랜드 가치 향상 등의 기회요소가 잠재되어 있다.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1. 발전비전

인천시는 ‘새로운 인천, 행복한 시민’이라는 미래 비전을 설정하여 시민이 행복한 시민 중심의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풍요로운 시민의 삶, 역동적인 세계도시, 인천만의 가치창조, 시민중심 시정실현’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그림 3-4-1 인천광역시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2. 추진전략

인천시는 ‘새로운 인천, 행복한 시민’이라는 발전 비전을 이루기 위해 ‘지역중심지 활력 증진 및 살기 좋은 정주환경 조성’, ‘신성장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및 창조경제 기반확충’, ‘교육인프라 개선 및 산학협력 강화와 창의적 인재양성’, ‘생활문화 환경 조성과 지속가능한 생태 및 환경·복지 기반 구축’,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제도 정비 및 의료사각지대’ 등 5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중심지 활력 증진 및 살기 좋은 정주환경 조성’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근대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차별적이고 개성 강한 지역별 특성화, 원도심내 폐·공가 활용을 통한 지역 활성화 전략뿐만 아니라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물류 네트워크 확충이 필요하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프로그램, 주민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기초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초생활 인프라 및 교육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네트워크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이 밖에도 인천광역시만이 가진 공항 및 항만의 입지적 특성을 활용하여, 신항 건설과 공항 3단계 확장 사업을 통한 인적·물적 자원의 네트워크 확장 및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신성장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및 창조경제 기반확충’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 내 서비스산업 허브 조성 및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와 첨단산업단지 유치를 통한 창조경제 거점 육성, 관광자원 발굴과 콘텐츠 개발을 통한 매력적인 관광산업 육성, 고유자원을 활용한 농어촌 산업기반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

‘교육인프라 개선 및 산학협력 강화와 창의적 인재양성’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지원과 함께 지역대학 특성화 사업을 통해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을 통한 대학의 창의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100세 시대 평생학습체제를 구축해 나가기 위한 추진전략이 필요하다.

‘생활문화환경 조성과 지속가능한 생태 및 환경·복지 기반 구축’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고유자원과 연계한 인천형 창조문화를 발굴해 나가는 전략과 AG경기장을 활용한 지역 스포츠이벤트 개발, 인천의 풍부한 해양·친수자원을 통한 수도권 해양 및 녹색관광 육성 등의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시민들이 문화향유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문화혜택기회의 다양화가 필요하며,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세부 전략들이 필요하다. 또한 생태적으로 건강한 도시환경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5R 운동 등 범시민 실천 녹색환경 문화체험 등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전략들이 필요하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제도 정비 및 의료사각지대 해소’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육환경개선을 통한 아동과 여성의 복지 증진과 함께 취약계층의 자립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사회복지 인프라 정비 방안이 필요하며, 취약지역 공공의료체계 정비를 통한 도서·농어촌 지역의 의료시스템 개선 등이 필요하다.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1. 지역생활권 활성화

(1) “지역행복생활권” 추진현황 및 성과

인천시와 인접한 경기도 부천시·김포시는 수도권 서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측으로 서울시와 경기도 파주·고양·시흥·광명시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 인천, 부천, 김포 3개 지자체 행정구역은 반경 약 30km범위 내에 있으며, 인천-부천, 인천-김포, 부천-김포 시청 간 거리는 약 7.5km, 18km, 13km로 차로 30분 이내 도달할 수 있는 아주 인접한 생활권 환경이다. 또한, 인천, 부천, 김포는 역사적으로 행정구역의 편입과 분리과정을 거치며, 현재의 경계는 1990년대 들어서 확정되었다. 인천시 10개 군구와 부천시, 김포시는 20년 전부터 행정협의회 구성 및 공동발전협약을 맺고 각종 협력사업을 함께 추진해왔다. 인천시 서구, 계양구, 부평구, 남동구, 강화군 등 인접지자체 11개는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1993년 출범)를 심도 있게 운영하고 있으며, 강화군, 계양구 등은 강화-김포 공동발전협약(2011년), 계양-김포-부천 공동발전협약(2012년) 등을 체결한 바 있다. 이러한 지자체간 행정협력의 경험이 풍부한 인천, 부천, 김포는 다양한 생활권 정책 현안에 대한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림 3-4-2 인천광역시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인천시의 지역행복생활권은 인천·부천 1개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김포시와의 지속적인 논의와 협의를 통해 2014년 12월 「인천·부천·김포 지역행복생활권 구성·운영」에 대한 MOU를 체결하였다. MOU를 체결하기까지 인천, 부천, 김포 3개 지자체는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동의 협력과제 발굴과 소통을 위한 합동워크숍, 실무협의회, 현장방문 등을 12회 가졌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인천, 부천, 김포는 지역생활권 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준비시간을 가졌으며, 공동의 지역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연계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인천·부천·김포 지역생활권 내에는 굴포천이 관통하고 있으나, 각 지자체 행정구역 경계에 걸쳐 있어 협력을 통한 생태계 보전 및 수변 여가공간으로의 공동 활용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이에, 굴포천과 주변지역 문화자산 등을 연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건강길 네트워크 사업을 구상하여, 2014년 12월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에 선정되어 2015년 본격 추진하게 될 예정이다.

(2) 지역별 추진현황 및 성과

지역생활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중심지 활력 증진 및 살기 좋은 정주환경 조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2014년은 중심시가지 재생과 교통인프라 개선, 서민경제 안정화 등을 위해 경주한 한 해였다.

인천시는 지역 내 인천만이 지닌 고유성과 근대문화 및 역사적 명소를 활용한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열악한 생활환경을 정비하고 있다. 우선은 중심시가지재생을 위하여 중·동구 일원 도시재생사업 추진기반을 구축하고, 송의목공예마을 및 아시아누들타운 조성사업 등 도시활력증진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낙후 도서·접경지역 생활기반시설 확충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 도서·접경지역 주민의 소득을 5억원 증대하는 등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마을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마을기업 총 18개(신규 11개, 재지정 7개)를 지정·지원하고, 2014년 6월에는 대한민국 마을기업 박람회를 문학경기장에서 개최하여 3만 여명이 방문하는 성과를 달성하고, 1억 5백만원의 매출을 기록하였다.

인접한 지자체와 함께 인천시는 서부수도권 지역의 숨겨진 아름다운 경관과 관광지를 홍보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였다. 인천시 서구·계양구·부평구·강화군, 서울시

구로구·강서구·양천구, 경기도 부천시·김포시·광명시·시흥시 11개 지자체는 국내외 관광여건변화에 맞춰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 이미지를 개선하고 빈약한 관광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는 서부수도권 테마별 관광벨트 조성사업을 공동 추진하였다. 2012년에 11개 지자체는 본 사업 추진을 공동으로 제안하였고, 2013년 지역연계협력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었다. 본 사업을 통해 2014년에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지를 연결한 4개 코스를 공동으로 만들어 서부수도권 관광서틀버스를 운영하고, 홈페이지 구축·운영과 함께 팸플릿을 제작하여 공동으로 홍보를 해오고 있다.

2.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신성장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및 창조경제 기반 확충'을 목표로 설정하고, 2014년은 창조경제 성장 동력 기반 조성,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힘쓴 한 해였다. 우선적으로 인천시는 일자리 앵커시설인 제물포스마트타운(JST)을 개소하여 분산되어 있는 일자리 업무를 통합공간에서 수행가능토록 하였다(2014년 4월 26일). 제물포스마트타운 안에는 일자리종합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창업보육센터, 노인인력개발센터, (사)함께하는 인천사람들 총 6개 일자리 관련 기관이 모여 있어, 기관 간 네트워크 강화, 업무의 효율성 증대, 침체된 구도심의 지역활성화 등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창조경제 성장 동력으로 부가가치와 성장가능성이 높은 로봇산업을 부흥시키고자 2014년 9월에는 로봇산업진흥시설인 로봇산업지원센터와 로봇연구소 건축 공사를 착공(2014년 기준 공정률 40%)하였다. 인천시는 로봇산업 부흥을 통해 로봇 강국이라는 국가 목표 달성의 전초기지를 마련하고, 로봇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신성장 동력산업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 하고 있다.

2014년 8월 정부에서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인 유망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에 따라 영종도 복합리조트 조성, 글로벌 캠퍼스를 활용한 외국교육기관 해외 유학생 유치, 인천공항 물류 허브기능 강화 및 KTX화물열차 도입 등을 토대로 서비스분야 허브화를 추진하였고,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케팅 및 디자인 분야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다. 우수 중소기업을 지원하

고 FTA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1,419개사에 5,408억원을 지원하고 우수기업 113개사를 지정하여 맞춤형 지원을 하였다.

이 밖에도 SW융합클러스터 송도센터를 2014년 2월에 개소하였으며, 노후된 부평·주안 산단을 혁신산업단지로 지정하였고, 신규산업단지로 검단 및 강화산업단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전략을 추진하였다.

또한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을 통해 1~3차 복합산업화를 촉진하고, 안정적 생산 및 유통기반을 마련하여 생산유발 63억원 효과 및 일자리 178명을 창출하였다. 농업기반정비사업을 통해 생산 기반시설을 보강하고, 쌀 생산량을 11%를 증가시키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3. 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양성

인천시는 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인프라 개선 및 산학협력 강화와 창의적 인재양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2014년은 교육인프라 확충, 지역대학 역량 강화, 생애주기별 지역맞춤형 평생학습체계 구축 등에 힘썼다. 인천시는 전국 17개 시·도 중 수능성적 순위가 저조하나, 2014년은 각종 정책지원으로 수능성적 순위 향상(2013년 16위→2014년 15위)을 보였다.

또한 해외 명문대 분교인 겐트대, 유타대가 IFEZ내 분교하였고, 지역거점대학인 인천대학교와 인하대학교를 중심으로 특성화를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인천시는 대학교의 수나 대학교 재학생의 수 등에서 타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이지만, 지역거점 대학인 인천대학교와 인하대학교를 중심으로 창의역량 중심의 산학협력을 선도하는 선도대학(LINC) 육성을 추진하였다. 특히, 인천대학교는 글로벌 융합연구, 경제자유구역 서비스산업 허브화 선도, 해양과학, 지역인문 르네상스 등의 특성화 분야를 육성하여 지역수요를 기반으로 한 지역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였다.

평생학습 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인천다모아평생교육정보망 On-Line서비스를 2014년 3월 개시하고, 제2회 인천평생학습박람회를 10월에 개최하여 지역 맞춤형 평생교육 사업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4. 지역 문화 융성, 생태 복원

인천시는 지역 문화 융성, 생태복원을 위해 '생활문화환경 조성'과 '지속가능한 생태 및 환경·복지기반 구축'을 목표로 설정하고, 2014년은 지역 문화역량 강화 및 특성화 발전 지원, 문화격차 해소, 환경생태 모범도시 실현 등을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2014년은 인천시에서 아시아 화합의 장인 인천아시아게임과 인천장애인아시아게임이 각 16일간, 7일간 개최되었다. 인천아시아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인천을 세계로 더욱 더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AG경기장을 활용한 지역 스포츠 이벤트 개발의 붐을 일으키는 기회가 되었다.

인천시는 개항의 도시로서, 우리나라 근대문화가 최초로 도입된 지역이다. 또한 인천이 지닌 해양자원과 공항 및 항만인프라, 경제자유구역, 근대문화재 등은 인천만의 경쟁력을 지닐 수 있는 고부가가치의 문화자산임에 따라, 민선 6기 출범 이후 인천시는 인천만의 가치창조 발굴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천만의 가치창조를 위하여 인천의 역사문화를 스토리텔링하여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고 있으며, 인천만의 자긍심을 키우기 위한 콘텐츠 등을 발굴하는 등의 기반을 조성하고, 인천만의 가치창조를 통해 발굴된 문화와 역사를 관광산업에 접목하여 매력과 감동을 줄 수 있는 인천 만들기를 추진 중이다.

국제빙상경기장, 운동장 체육시설, 작은 영화관 및 지역미디어센터를 각 1개소씩 건립하여 맞춤형 문화서비스를 통해 문화격차 해소에 노력하였다. 서구 세어도 자연생태 관광활성화, 강화군 마니산 주차장 및 역사문화 둘레길 조성, 옹진군 평화공원 및 백령도 생태탐방로 조성 등 역사·문화·생태 자원 등을 연계한 도서관관 인프라를 확충하였다. 또한,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으로 12회의 무료공연을 기획하고 1,746명이 무료 관람하는 등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나눔사업을 확대하였다.

자연과 시민이 함께하는 생태·자연환경 보존·활용 추진을 위하여, 석모도 자연휴양림 조성, 서구 자연마당 조성, 장수천 등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하였다. 자연환경 보전 및 관리사업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감축을 통한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에 기여하여, 2012년 대비 미세먼지를 $2\mu\text{g}/\text{m}^3$ 를 감소시켰다. 또한, GCF유치 도시에 걸 맞는 글로벌 녹색기후 선도도시 조성을 위하여 저탄소·녹색도시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준비를 추진하였다.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인천시는 사각 없는 지역복지, 의료를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제도 정비 및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설정하고, 2014년에는 민관 협력을 통한 저소득층 생활 안정 지원, 응급의료체계구축 등의 시책들을 추진하였다.

먼저, 30개의 지역사회서비스사업을 추진하고, 사랑가꿈 사업을 통하여 저소득 소외 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해주고 생활필수 물품을 지급해 주는 등 총 741가구에 지원을 완료하였다. 사랑가꿈 사업은 최저 생활가구를 우선선정하고 지원해주며, 자력신청이 어려운 숨어있는 대상자를 발굴하는 등의 실질적인 복지나눔 효과를 제고하고 있다.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기초수급자 등에게 집고치기, 전면개조, 생활수선서비스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영유아·아동·청소년의 보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공립 어린이집 6개소를 확충하여 총 136개의 어린이집을 운영하였고, 청소년수련관 3개소를 설비 보강하여 안전성을 강화하였다. 또한, 2014년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서 인천시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인천시는 전국 특·광역시 중 유일하게 '군' 지역이 2개인 지역이다. 특히, 강화도·백령도·대청도·영흥도·덕적도·굴업도 등 크고 작은 39개의 유인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도서지역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는 일은 인천시 지역 내 사각 없는 지역복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인천시는 이에 대한 방안으로 응급의료전용헬기를 운항하고 있으며, 강화병원·웅진백령병원 등을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육성중이다. 또한, 인천시는 응급의료기관 20개소를 지정하여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주요사업별로 보면, 인천시는 정신보건시설운영 지원사업을 통해 2014년도에 2천여명의 정신질환자를 등록·관리시켰고, 5만여 건 가까이 가정방문을 통한 사례관리를 하여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도왔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통해서 총 316개소 기관에서 지역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약 20만 명 이상의 주민들이 혜택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언어치료사 등 서비스 제공인력 1,5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아동센터 179개소에 기본운영비를 지원하고,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여성가족부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제4절 향후 추진계획

인천시는 향후에도 새로운 인천과 행복한 시민을 위하여 ‘풍요로운 시민의 삶, 역동적인 세계도시, 인천만의 가치창조, 시민중심 시정실현’의 4대 목표를 실현할 분야별 추진전략들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지역생활권 활성화를 위해 인천발KTX 추진, 도시철도2호선 건설, 서울지하철 7호선 석남 및 청라연장, 제2외곽순환도로 건설 등 성장인프라 구축에 노력하고,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서해5도 등 접경·도서지역에 대한 생활인프라 개선 및 소득창출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인천지역 고유성과 근대문화 및 역사적 명소를 활용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여 열악한 생활환경을 정비하고,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추진과 함께 인천지역 내 취약지역에 대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인접지자체인 부천, 김포 등과는 협업을 통하여 지역생활권 권역별 종합적·협력적 발전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인천시는 향후 미래 먹거리 마련을 위한 8대 전략산업을 도출 중이다. 인천시의 지역적 강점과 특성을 활용하여 경제성, 기술성, 전략성, 입지적합성 등을 고려한 8대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주요 산업을 중심으로 미래성장동력을 발굴해 나갈 것이다. 또한, 송도를 중심으로 서비스산업 허브화와 연계하여 송도 글로벌캠퍼스, MICE산업, 영종 물류산업, 영종 복합리조트 등 서비스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인천은 8대 광역시 중에서 가장 넓은 농업진흥지역을 지니고 있으며, 총 151개의 섬과 해양환경을 보유하고 있음에 따라, 강화군과 옹진군 등 인천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한 농어촌 산업기반을 활성화해 나가고, 농어촌 체험시설 등을 확충하여 지역민의 소득 증대를 유도해 나갈 것이다.

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해 인천시는 최우선적으로 인천시에서 개최되는 유네스코 지정 2015세계교육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할 것이다. 세계교육포럼은 세계교육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며, 주요 교육의제에 관해 논의하기 위해 195개 회원국 대표단과 UN 등 국제기구 대표, NGO 및 전문기관 대표 등 1,500여명이 참가하는 행사다. 세계교육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인천시는 글로벌 교육도시로서 인천의 잠재력을 확인하고 도시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인천시는 초등학교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며, 창의 및 융복합 연구와 창의역량기반 인재양성을 위하여 지역대학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시민 참여형 평생행복학습 문화 조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지역 문화 융성, 생태 복원을 위해 인천시는 가장 최우선적으로 인천만의 가치창조 발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해양, 항공, 경제자유구역, 개항, 근대문화자산, 원도심 등 인천만이 지닌 가치를 창조하여, 스토리텔링을 통한 관광마케팅, 축제문화의 브랜드화, 매력적인 섬 만들기, 친수와 항만이 조화된 관광산업 육성, 경인아라뱃길 수변 공간 개발 등의 추진전략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다양하고 세분화되고 있는 지역주민의 문화적 수요에 부응하고,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에 대한 문화향유기회를 증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미추홀 2000년에 걸맞는 인천시의 역사문화유산을 계승하기 위하여 강화역사지구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인천의 정체성을 찾는 역사도보여행지인 ‘한국최초, 인천최고’ 등 책자를 발간하여 시민에게 인천만의 역사 정체성 및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한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저탄소·녹색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인천기후변화센터(ICCC) 설립 준비 등 GCF를 연계한 생태 친화적 도시를 조성하고, 자연과 시민이 함께하는 녹색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자연마당, 생활공원, 도시숲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사각 없는 복지, 의료를 위해 인천시는 지속적으로 취약계층의 자립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복지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복지포털 ‘행복나눔 인천’ 운영, 기부식품 제공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 도모를 위해 공익성 높은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그리고 아동과 청소년 역량 강화와 조화로운 성장을 위하여 국공립 및 공공형 어린이집의 공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청소년 사회안전망을 강화함으로써 미래로 향하는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푸른 성장을 지원할 것이다. 또한,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사각 없는 의료서비스가 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제5장 광주광역시

제1절 경제 현황

1. 일반 현황

광주의 인구는 2013년 기준 147만명으로 2010년에 비해 2만명 증가하였다. 지역내총생산(GRDP)은 2010년 26조원에서 29조원으로 증가하였으며 1인당 GRDP는 1,953만원으로 3년 전에 비해 증가하였다. 수출액은 2010년 116억 달러에서 37%로 크게 증가한 159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취업자수는 2010년 66만명에서 71만명으로 증가하였다. 재정자립도는 45.4%로 2007년 대비 8.8%p나 낮아져 전국 평균을 하회하였다.

표 3-5-1 광주광역시 경제 일반현황

구분	전국			광주		
	2007년	2010년	2013년	2007년	2010년	2013년
지역내총생산(십억원)	1,151,843	1,265,146	1,376,143	24,219	26,401	28,657
인구(천명)	49,269	50,516	51,141	1,413	1,455	1,473
1인당 GRDP(만원)	2,147	2,561	2,842	1,535	1,773	1,953
수출액(백만달러)	371,489	466,384	559,632	10,144	11,581	15,868
취업자(천명)	23,433	23,829	25,066	633	664	708
재정자립도(%)	53.6	52.2	51.1	54.2	47.5	45.4

주 : 지역내총생산은 2010년 기준가격임.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2. 산업 현황

광주의 산업구조는 지역내총생산액 기준으로 서비스업 70.8%, 제조업 28.8%, 농림어업 0.5%로 나타났다.

2013년 제조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업체 수 기준으로는 '기타 기계 및

장비'가 18.0%로 가장 높았다. 종사자수 및 생산액 기준으로 '자동차 및 트레일러'가 각각 23.6% 및 40.8%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 외에도 '전기장비', '금속가 공제품' 등의 비중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2 광주광역시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07년			2010년			2013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제조업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식료품	4.5	2.8	1.8	5.1	3.4	2.0	4.8	2.7	1.9
의복, 의복액세서리	2.1	0.9	0.1	2.1	0.8	0.1	1.7	0.6	0.1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12.5	13.3	9.0	12.3	13.0	9.3	11.1	12.7	8.2
금속가공제품(기계·기구 제외)	15.6	8.0	4.6	15.8	13.4	6.0	15.6	8.2	4.4
전자부품·컴퓨터·통신장비	5.1	12.3	6.9	5.8	6.6	7.2	5.2	11.8	6.1
전기장비	11.9	17.0	22.3	11.5	12.3	23.5	10.8	14.6	19.4
기타 기계 및 장비	19.2	11.9	7.4	17.0	11.9	6.9	18.0	11.8	7.9
자동차 및 트레일러	10.6	20.8	36.5	11.1	27.9	34.4	11.2	23.6	40.8
기타 제품	0.3	0.4	0.1	0.7	0.2	0.0	0.6	0.4	0.1

주 : 2010년은 경제총조사 자료임.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광업·제조업 조사 ; 경제총조사(2010)」

표 3-5-3 광주광역시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07년			2010년			2013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서비스업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0.4	1.6	3.5	0.4	1.0	3.3	0.5	1.3	5.7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7	4.1	7.0	2.0	5.1	17.5	2.2	3.4	6.0
부동산업 및 임대업	11.1	10.5	20.8	9.6	7.4	13.8	12.0	9.8	21.8
사업지원 서비스업	4.0	15.8	10.4	3.9	13.5	8.8	4.9	17.4	13.1
교육 서비스업	20.4	15.2	7.6	20.6	28.6	22.8	20.3	12.5	7.3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0.8	25.4	28.8	11.1	22.1	18.7	13.3	32.4	29.4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14.1	8.2	8.5	12.2	5.5	4.7	12.6	7.2	7.7
기타 개인 서비스업	37.5	19.2	13.6	40.3	16.8	10.5	34.3	16.1	9.1

주 : 2010년은 경제총조사 자료임.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전국서비스업조사 ; 경제총조사(2010)」

2013년 서비스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업체 기준 '기타 개인 서비스업'과 '교육 서비스업'이 각각 34.3%, 20.3%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종사자수 및 생산액 기준으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32.4%, 29.4%로 가장 높았다. 그 외에도 '부동산업 및 임대업', '사업지원 서비스업'등의 업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2007년과 비교할 때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전반적으로 다른 업종에 비해 크게 증가한 반면,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비중이 감소하였다.

3. 혁신활동 현황

연구개발 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기준 연구개발비 5,937억원, 연구개발인력 11,813명, 연구개발조직수 579개로 나타났다. 전국대비 비중 변화는 2007년에 비해 연구개발비 및 인력, 조직수는 각각 0.6%p, 0.2%p, 0.1%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 현황을 보면, 2013년 기준으로 특허출원은 2,436건이며, 등록은 1,589건으로 전국대비 비중은 각각 1.5%, 1.7%로 나타났다. 2007년 대비 출원 건수는 116건 증가하였으며, 전국대비 비중은 0.3%p 감소하였다. 반면, 등록은 238건 증가하였으며, 전국대비 비중은 0.2%p 증가하였다.

표 3-5-4 광주광역시 혁신활동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 건, %)

구분		2007년	2010년	2013년
연구 개발	연구개발비	502,279 (1.6)	520,854 (1.2)	593,698 (1.0)
	연구개발인력	9,787 (2.3)	11,464 (2.3)	11,813 (2.1)
	연구개발조직수	274 (2.2)	394 (2.2)	579 (2.1)
특허	출원	2,320 (1.8)	2,203 (1.7)	2,436 (1.5)
	등록	1,351 (1.5)	921 (1.8)	1,589 (1.7)

주 : ()는 전국대비 비율임.

자료 : 1)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년도

2) 특허청, 지식재산통계연보, 각년도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광주는 서남권 유일한 광역도시로서 풍부한 도시자원이 집적된 상태이고, 양호한 정주·환경여건을 보유한 첨단 거점도시이다. 기술개발, 산업연계 및 융합화를 통해 광산업·자동차산업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비교우위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및 혁신도시 내 16개 공공기관이전, 연구개발특구 지정에 따른 문화·경제적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 대비 교육·문화시설 및 서비스의 양적·질적 열세이고, 고급인력 유출로 인해 기술개발 등 핵심 기업 활동에서의 제약을 받고 있다. 인접 배후도시의 사회·경제적 쇠퇴 현상이 뚜렷하기에 이들 지역과 연계협력을 통하여 시너지 창출, 경제력을 제고해야 한다.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 및 지역특화프로젝트로 선정된 문화·콘텐츠 산업이 대통령 공약사업임에도 정부지원에 있어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남구 송하동 CGI센터 일원에 미래핵심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첨단실감 콘텐츠 제작 클러스터 구축(3D콘텐츠 미디어산업 클러스터)’, 중외공원 및 용봉지구 일원에 세계적인 종합예술공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비엔날레상징 국제타운 조성사업’, 하천의 생태복원을 통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광주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 등 지역현안 과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2. 추진전략

광주시의 발전비전을 이루기 위해 5가지 추진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첫째, 생활 인프라 확충 및 빚고을 중추도시생활권 연계협력의 강화이다. 둘째,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미래형 지식기반산업 육성이다. 셋째, 지역교육 특성화 및 맞춤형 인력 양성이다. 넷째, 지역문화 진흥 및 자연생태계 보존·활용이다. 다섯째, 수요 맞춤형 복지기능 강화 및 공공의료 서비스 개선이다. 전략적 차원에서 호남고속철도(KTX) 개통, 2015년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개최, 아시아문화전당 개관 등을 연계한 맞춤형 지역발전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빚고을 중추도시생활권 활성화 차원에서 기존에 구축된 시·군 간 인프라의 공동 활용과 중복적 투자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해서 지역의 문화역량 강화 및 특화된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시아문화전당의 성공적 운영을 통해 아시아의 문화수도를 지향하고 있다. 또한 지역경쟁력 강화차원에서 대표산업 육성 및 거점도시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및 클린디젤자동차 부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3D콘텐츠 미디어산업 클러스터 구축, 비엔날레상징 국제타운 조성사업, 광주 도심하천 생태복원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주민밀착형 복지전달체계 구축·맞춤형 복지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더불어 사는 광주, 더불어 행복한 시민’을 구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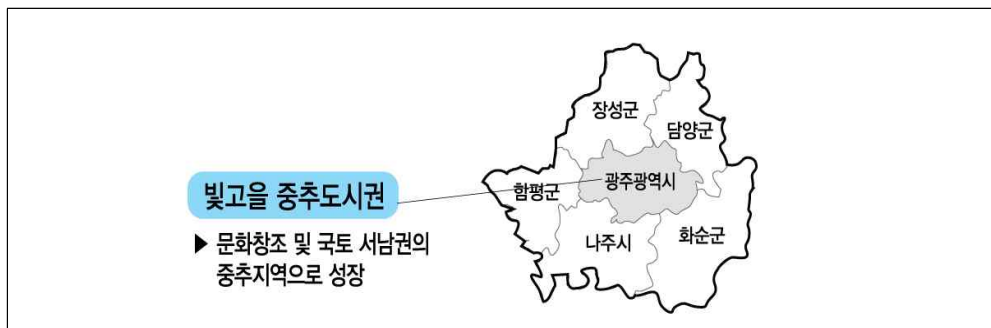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1. 지역생활권 활성화

(1) “지역행복생활권” 추진현황 및 성과

인접 5개 시·군(나주시, 담양군, 화순군, 함평군, 장성군)은 ‘빛고을중추도시생활권’을 구성하여 생활인프라 확충, 일자리, 복지 등 주민체감형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빛가람)는 한국전력 등 16개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서 새로운 지역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

그림 3-5-2 광주광역시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2) 지역별 추진현황 및 성과

‘한뿌리 생활권 지역경제순환증진 프로젝트’는 광주 남구, 나주시, 화순군이 공동 추진하는 과제로서 로컬푸드 판매 체계를 구축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공생하는 지역경제를 조성하여, 지역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모델이 되고 있다. ‘취약지 응급협진시스템 구축사업’은 총사업비 15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생활권 응급의료 취약지 주민들에게 양질의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거점병원인 전남대병원을 중심으로 전남 나주시 등 5개 시·군의 응급의료기관 6개소와 응급협진사업 추진단 발대식을 개최하였으며, 본격적으로 시작된 원격의료 관련 기술선점에 기여하였다.

도시재생과 관련 기존의 획일적인 전면 철거·정비 위주로 진행되어 온 재개발, 재건축 등의 도시정비 방식을 지양하고, 공동체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가에서 추진중인 도시재생 선도지역에 공모(2014년 3월)하여 동구 일부지역(동구 충장동 등 6개동 966,551㎡)을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2014년 5월 7일)하였다. 또한 도시재생선도지역 활성화계획의 사업내용 확정을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2014년 11월)와 국가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2014년 12월)를 거쳤으며 선도지역 사업추진협의회, 상가재생팀 및 주거재생팀을 구성하여 수시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그리고 예술의 거리 활성화를 위해 예술의 거리 부지매입과 충오미디어프론티어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여 부지 매입을 추진하였다.

도시공원 내 노후 또는 기능상실로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시설물은 정비 또는 철거 후 새로 설치하였으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거 안전검사 기준에 부합하도록 어린이놀이시설을 정비·교체하였다. 또한 도심 속 녹색공간의 기능을 부여하기 위해 그늘목 및 화목류를 식재하여 도시 생태숲을 조성하는 등 11개소의 도시공원을 정비(사업비 26억원)하였다. 2015년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등에 대비하여 외국인들에게 쾌적하고 푸른 정원도시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우리시 주요관문 및 도로변에 대해 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염주체육관 등 35개소에 경관숲, 이미지숲, 도로변가시권 녹화, 차폐녹화를 추진 중이며 2013년 6개소, 2014년 23개소를 완료하였다.

2.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및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국가기획사업으로 추진하여 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최종 선정(2014년 11월) 되었다. 전국 최초로 자동차산업과를 신설(2014년 9월)하고 사회통합과 생산성 등 경쟁력 증대를 위한 지역역량을 결집시키기 위한 민간 주도의 ‘(사)자동차산업밸리추진위원회’를 출범(2014년 11월)시키는 등 자동차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했다. 국내 완성차업체의 고성능자동차 개발 착수와 연계한 고성능부품 개발로 외산부품 의존 사전방지 및 국내 부품기업 기술력 향상을 제고하고 자동차업체의 수요 맞춤형 연구개발사업 기획으로 국비 신규반영에 노력중이다. 또한 국제 환경규제 강화에 대응하고 관련 기업 및 기관을 집적화하기 위해 진곡산단 내 ‘클린디젤자동차부품산업 클러스터’ 기반조성사업을 지속 추진해 왔

으며, 이를 기반으로 자동차부품기업 및 친환경자동차산업 육성 등 지역 경제성장의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다. 추진성과로는 진곡산단에 클린디젤 기술개발과 부품성능을 시험을 담당하는 디젤기술전문센터와 첨단단지 생산기술연구원 내에 핵심부품소재센터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국내 최초 클린디젤 기술개발 및 기업지원 인프라를 확보하였으며 기술개발을 통해 지역 부품기업의 기술개발 역량을 강화하였다. 지역 자동차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육성 분야를 선정하고 기술 연계를 통해 고부가가치 및 기술 집약적 산업화 전략을 수립하는 등 자동차산업 육성에 매진하고 있다.

한전의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이전이 지역 전력에너지산업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확신하에 중장기 목표(R&D, 인력양성, 기업유치)를 담은 ‘에너지밸리 조성사업’ 계획을 수립했다. 2014년 8월에는 에너지밸리사업을 조정하고 추진할 ‘에너지밸리 위원회’를 관련기관 관계자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조직하여 에너지밸리 조성계획을 구체화하였다. 계획은 광주·전남 R&D에 매년 100억원 이상 투자, 2020년까지 전문인력 1,000명 양성 및 기업 500개 유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전과 광주·전남의 협력사업 발굴을 협의한 결과, ‘마이크로그리드형 시스템 기술개발사업(2014년~2017년, 90억원)’을 발굴해 지역 에너지산업을 견인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지역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특화사업 13개, 연구·포럼 4개 사업 등 총 17개 사업을 수행하여 광기술, 전기·전자, 자동차 부품, 생체 의료 부품, 생활공예 등의 분야에서 860여명의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미스매치와 청년 실업문제 해소 등에 기여하였다. 그 결과 전국 지자체 일자리 경진대회에서 디자인·공예 융합 「창조산업일자리만들기 200프로젝트」는 일자리 부문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보호·교육·건강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77개소 지역아동센터를 지원운영(2014년 1월~12월)하고 있다. 644명의 종사자 및 219명의 아동복지교사로 8,052명 이용아동을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및 아동급식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은 18세 미만 아동이나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면 지원이 가능하다. 교육부 시행 돌봄교실 위탁 운영 기관교육(2014년 3월~12월), 어린이날 행사(2014년 5월), 지역아동센터의 날 운영(2014년 12월) 등 방과 후 돌봄서비스 추진기관 간 연계체계 운영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인 돌봄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 내 통합적 아동 지원체계 구축,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 학교 부적응 해소, 일상생활 지도, 학교생활 유지 및 적응력을 강화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학교기업 운영을 통해서 창업가 정신과 기업마인드 함양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들 학교기업은 광주자연과학고의 자연팍, 광주공고의 GT시스템 공조, 광주경영고의 JS시스템, 광주전자공고의 카뷰티샵, 광주여상고의 I-jump가 활발히 운영 중에 있다.

지역민의 급증하는 평생교육 수요에 맞는 평생교육 환경조성 및 체계구축을 위하여 광주평생교육 5개년 발전계획(2014~2018년)을 수립하여 비전, 미션 및 전략추진과제를 도출하였다. 또한 2013년 4월 개원한 광주평생교육진흥원은 지역내 평생교육 정보의 제공 및 DB구축, 평생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평생교육 기관간의 네트워크 형성, 각종 통계조사, 직업능력 향상 및 학습매니저 양성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펼쳐 우리 지역 평생교육 중추기관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지역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평생교육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한 차원 높은 평생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수도권 대학을 다니는 지역 출신 대학생들에게 학비부담 절감 및 생활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전남과 공동으로 제2의 남도학숙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은평구와 공유부지 활용 건립방안에 대한 실무협의, 제2남도학숙 건립 방안 정책연구를 실시하였다.

4. 지역 문화 융성·생태 복원

삭막한 산업단지에 매력적인 문화예술 거점공간을 조성하여 현장근로자와 주민들이 일상속에서 문화예술 활동에 직접 참여하고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도모하고자 문화체육관광부의 산업단지 문화재생사업(2014년 1월) 공모사업에 광산구 소재 '소촌농공단지 관리사무소 리모델링 사업' 제안서를 제출한 결과 2014년 산업단지 문화재생사업으로 최종 선정되었으며, 이후 지속가능한 복합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주민 설명회(2014년 2월) 개최, 건물의 안전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구조안전진단용역(2014년

11월) 실시, 관리사무소의 리모델링 현상설계 공모계획수립(2014년 12월)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고, 2015년 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소촌 아트팩토리 문화재생 사업은 문화예술 환경이 열악한 산업단지 근로자와 지역주민들에게 문화예술 복합공간을 제공하여 힐링 기회를 확대하는 도시문화 디자인사업이다.

5·18 민주화운동이 발생한 광주에 역사적 상징성과 장소성을 연계하는 민주·인권·평화의 소중한 가치로 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실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공간조성이 필요로 대두된다. 이에 광주교도소 이전부지에 민주·인권·평화 콤플렉스 조성사업을 추진해 랜드마크로 육성하기 위해 2012년부터 광주교도소 이전부지 무상양여를 위해 중앙부처(법무부, 기재부, 국회)에 수차례 건의 및 요청한 바 있다. 최근에는 법무부에서 광주교도소 이전에 대비 구치소 대체부지 제안에 대하여 현장방문 및 협의를 2~3회 진행하는 등 현장 부지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와 주변 민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계획 단계에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법무부와 광주광역시 간 무상양여 이전부지에 대한 건의를 적극적으로 협의를 추진 중에 있어 본 사업 추진에서 가장 중요한 이전부지 무상양여 문제를 법무부가 적극 나서고 있어 그 변화에 성과가 있었다.

세계인권도시포럼은 2011년도 시작하여 해마다 개최되는 연례회의를 거듭하면서 지역내 NGO 등 참여자들이 토론내용, 시민참여 등 포럼의 발전적 변화에 대해 공감하고 지속적인 개최요구와 참여의지를 표명해왔다. 지역의 NGO의 참여가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국내외 참가자간의 네트워크가 강화되고 신규 네트워크 구축의 발판이 되었다. 또한 유럽·남미·아프리카 등의 인권도시 참여와 자비 부담 해외참가자 증가로 지속가능한 포럼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다(UCLG인권위원회의 포럼에 대한 적극 협조로 전지구적 논의 가능). 특히 '지방정부와 인권'워크숍, UCLG인권위원회를 포럼과 연계하여 추진함에 따라 인권증진을 위한 공동노력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지속적인 연대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광주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이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의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2013년~2014년)을 추진하여 광주천 1,140억원, 용봉천 2,350억원의 사업비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중앙부처(국토교통부, 환경부)에 신청하여 기획재정부에서 「2014년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되었다.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1~2급 등록장애인 중 만6세~만65세 미만)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장애 정도에 따라 활동지원 등급을 구분하여 기본급여를 제공하고, 생활환경 및 자립활동 등을 감안하여 추가적으로 급여를 산정하고 있다. 2014년에는 2,600여명의 장애인이 자립생활 및 사회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2015년 6월부터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3급까지 확대하는 등 지속적으로 서비스 규모 및 대상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장애인 복지정책이 시설을 통한 ‘보호’와 ‘수용’에서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 지원으로 변화함에 따라, 자립을 원하는 장애인들이 가장 큰 부담을 갖는 거주공간인 주택마련과 관리비 등을 지원하는 탈시설 중증장애인 임대주택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2013년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 연립주택 5채를 임대하여 자립을 원하는 생활시설 거주 장애인에게 2년~5년 동안(기본 2년, 1년씩 3회 연장)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고, 월 임대료와 전기, 수도 등 공공요금을 지원하고 있다.

어린이 단체급식의 안전 및 영양관리를 위해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 집과 유치원 720개소를 52명의 영양사가 정기적인 현장방문(3,200회)을 통해 식재료 및 주방환경 전반의 위생관리 기술 지원으로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연령별 영양요구량에 맞게 설계된 식단과 아동요리 표준레시피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성장기 어린이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올바른 손씻기, 편식예방, 올바른 식사예절 등의 주제로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교구 및 교육시나리오를 개발하여 ‘알록달록 건강 채소’, ‘영양 주먹밥’ 등 체험형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을 9,350회, 103,900명에게 제공하여 미래 건강인구 육성에 기여하였다.

민선 6기 「아시아 광주진료소 설립지원」 공약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캄보디아 광주진료소(2014년 6월 개소)의 안정적인 정착을 우선과제로 삼고 의약품 및 의료기자재 구입비용을 지원하였으며, 주변부지 환경정비를 통해 진료대기 환자와 의료봉사자의 편의를 제공하는 등 쾌적한 진료환경 조성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였다. 또한 캄보디아 현지 의료진을 채용하여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상시 진료혜택을 제공하였으며 광주지역 의료봉사단이 연 6회 진료소를 방문하여 회당

1,500~2,000여명의 주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인권·평화·나눔의 ‘광주정신’을 펼침으로써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광주시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원전 30km 범위내)에 포함되지 않으나, 한빛원전 대형 방사능누출 사고 시 피해가 우려되어 민선 6기 「안전한 도시환경기반과 시스템구축」 공약에 따라 광주·전남 상생협력을 통한 방사능 방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한빛원전 방재대책협의회(2014년 12월) 및 사고 초기대응 능력배양 훈련(2014년 12월) 등에 참여하였다. 한빛원전과는 원전고장 및 운전상황 등의 정보공유를 위한 문자정보(SMS) 체계를 구축(2014년 11월) 하였으며, 시민보호를 위한 갑상선방호제 등 방호물자 확보(2014년 7월) 및 「방사선 비상시 시민행동요령」 홍보전단을 제작 배부(80,000매)하여 방사능 재난에 대비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방호물자 확보 및 대시민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한빛원전 안전성 확보를 위해 호남권(광주·전남·전북) 공동대응체계 구축 실무협의(2014년 12월)를 추진하여 원자력발전소 사고대응 방재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다.

제4절 향후 추진계획

향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따른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성공적 개관, 3D 콘텐츠 미디어산업 클러스터 구축, 비엔날레상징 국제타운 조성, 광주 도심하천 생태복원 사업 등이 국가적 지원 하에 적극 추진될 필요가 있다.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내 16개 공공기관의 이전을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교통 인프라의 획기적인 변모를 가져올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거점 기능강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 확충을 위하여 자동차100만대 생산기지 건설 및 클린디젤자동차 핵심부품산업 육성, 광주 R&D특구활성화 및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역량 강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창의적 교육환경 조성 및 지역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하여 제2의 남도학숙 건립 추진 및 학교기업 육성을 통한 고교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2015년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서 도시브랜드 경쟁력 제고는 물론 한반도 및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평화구현, 최첨단 시스템 도입의 IT, 시민참여 명품대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수혜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및 취약층 복지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복지 인프라 확충 및 취약 계층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6장 대전광역시

제1절 경제 현황

1. 일반 현황

대전의 인구는 2013년 기준 153만명으로 2010년에 비해 3만명 증가하였다. 지역내총생산(GRDP)은 2010년 28조원에서 29조원으로 증가하였으며, 1인당 GRDP는 2,084만원으로 나타났다. 수출액은 2010년 35억 달러에서 14% 증가한 40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취업자수는 2010년 70만명에서 74만명으로 증가하였다. 재정자립도는 2010년에 비해 소폭 증가한 57.5%로 전국 평균을 상회하였다. 이는 2007년 대비 14.6%p나 낮아진 수치로서 재정자립도 수준이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표 3-6-1 대전광역시 경제 일반현황

구분	전국			대전		
	2007년	2010년	2013년	2007년	2010년	2013년
지역내총생산(십억원)	1,151,843	1,265,146	1,376,143	25,135	27,632	29,426
인구(천명)	49,269	50,516	51,141	1,476	1,504	1,533
1인당 GRDP(만원)	2,147	2,561	2,842	1,527	1,829	2,084
수출액(백만달러)	371,489	466,384	559,632	2,581	3,546	4,030
취업자(천명)	23,433	23,829	25,066	680	702	736
재정자립도(%)	53.6	52.2	51.1	72.1	56.3	57.5

주 : 지역내총생산은 2010년 기준가격임.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2. 산업 현황

대전의 산업구조는 지역내총생산액 기준으로 서비스업 84.1%, 제조업 15.8%, 농림어업 0.1%로 나타났다.

2013년 제조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기타 기계 및 장비'는 사업체수, 종사

자수, 생산액이 각각 18.7%, 15.1%, 13.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 외에는 '전자부품·컴퓨터·통신장비'의 비중도 높았으며,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은 생산액 비중이 13.3%로 높았다.

표 3-6-2 대전광역시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07년			2010년			2013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제조업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식료품	6.7	5.3	4.4	6.9	6.9	5.5	6.8	5.5	5.4
의복, 의복액세서리	4.2	3.0	0.6	4.3	3.7	0.7	3.1	2.6	0.4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4.3	9.7	16.6	4.3	3.8	14.3	4.2	9.5	13.3
금속가공제품(기계·가구 제외)	7.1	5.2	4.9	7.0	4.4	4.8	6.8	5.3	4.4
전자부품·컴퓨터·통신장비	11.1	13.3	7.5	12.2	17.1	10.6	10.8	13.8	10.6
전기장비	4.3	3.9	3.4	5.2	4.2	6.2	6.1	3.8	4.1
기타 기계 및 장비	17.5	14.4	16.4	15.5	15.5	14.1	18.7	15.1	13.3
자동차 및 트레일러	3.5	5.4	3.0	3.4	5.1	2.7	4.2	6.4	5.0
기타 제품	2.4	1.9	0.8	2.1	1.7	0.8	2.0	1.6	0.7

주 : 2010년은 경제총조사 자료임.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광업·제조업 조사 ; 경제총조사(2010)」

표 3-6-3 대전광역시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07년			2010년			2013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서비스업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0.4	1.4	3.0	0.3	1.0	5.3	0.4	1.0	2.6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2.1	5.5	13.6	2.4	5.7	19.3	2.9	6.0	11.7
부동산업 및 임대업	14.2	11.1	18.2	11.7	8.1	11.6	13.4	9.6	11.5
사업지원 서비스업	3.9	19.6	12.5	4.1	15.8	8.9	5.5	23.0	16.1
교육 서비스업	18.0	13.5	8.0	17.8	27.6	22.7	17.1	10.6	7.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2.7	24.9	27.1	12.9	21.5	17.4	15.8	29.6	31.5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13.2	7.4	6.5	11.0	5.0	5.4	12.0	6.0	8.8
기타 개인 서비스업	35.5	16.5	11.0	39.8	15.4	9.5	33.0	14.2	10.3

주 : 2010년은 경제총조사 자료임.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전국서비스업조사 ; 경제총조사(2010)」

2013년 서비스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업체수 기준 '기타 개인 서비스업'과 '교육 서비스업'이 각각 33.0%, 17.1%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종사자수 및 생산액 기준으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29.6%, 31.5%로 가장 높았다.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은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에 비해 생산액이 높아 부가가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과 비교할 때 '사업지원 서비스업' 및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종사자수 및 생산액 비중이 다른 업종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3. 혁신활동 현황

연구개발 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기준 연구개발비 5.9조원, 연구개발인력 42,076명, 연구개발조직수 1,081개로 나타났다. 전국대비 비중 변화는 2007년에 비해 연구개발인력은 0.1%p 상승한 반면, 연구개발비 및 조직수는 각각 0.7%p, 0.9%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 현황을 보면, 2013년 기준으로 특허출원은 11,197건이며, 등록은 7,809건으로 전국대비 비중은 각각 7.0%, 8.2%로 다른 광역시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과 비교할 때, 출원 건수는 2,088건 증가하였으며, 전국대비 비중은 0.1%p 감소하였다. 반면, 등록은 2,710건 증가하였으며, 전국대비 비중은 2.6%p 증가하였다.

표 3-6-4 대전광역시 혁신활동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 건, %)

구분		2007년	2010년	2013년
연구 개발	연구개발비	3,359,841 (10.7)	5,012,198 (11.4)	5,940,087 (10.0)
	연구개발인력	30,824 (7.3)	35,942 (7.2)	42,076 (7.4)
	연구개발조직수	600 (4.8)	758 (4.2)	1,081 (3.9)
특허	출원	9,109 (7.1)	10,457 (7.9)	11,197 (7.0)
	등록	5,099 (5.6)	3,874 (7.5)	7,809 (8.2)

주 : ()는 전국대비 비율임.

자료 : 1)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년도

2) 특허청, 지식재산통계연보, 각년도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대전광역시는 대덕연구단지조성 40년 동안의 풍부한 R&D자원 및 역량 축적과 대덕특구 지정으로 인한 기술사업화 경험과 인프라가 누적되어 있으며, 국토 중앙에 입지한 전통적 국내교통의 중심지라는 발전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전통 제조업의 경직성이 없어 새로운 산업과 이를 육성할 시스템 구축이 용이하다.

하지만 풍부한 연구개발자원에 비해 지역수요에 기반한 기술사업화 시스템이 정착되어 있지 않고,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며 고용성장 잠재성이 약하고, 영세업체 중심의 낙후된 서비스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약점이다. 한편 인구 50만의 세종시 조성 과 함께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으로 인하여 형성된 대전중추도시생활권 정책은 인접한 중수도시와의 연계 확대로 대전을 중심으로 한 도시권역의 확대 기회라 할 수 있다.

대전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잠재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대전의 강점과 기회를 연계하여 기 보유한 풍부한 연구개발 자원과 역량을 활용한 신성장 모델의 창출지로서의 입지를 공고화하고, 친환경 도시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장하여 국내 최고 수준의 친환경 첨단 도시를 구현하는 것 역시 앞으로의 과제이다.

또한 지역기반의 기술사업화 시스템 정착이 미흡한 약점을 풍부한 R&D 역량을 기반으로 기술사업화와 인큐베이팅 등 기술집약형 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등 대전의 약점을 기회 요인과 연계하여 발전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원도심 낙후 문제 해결을 위해 문화도시 재생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재창조 사업을 발굴·추진하는 것도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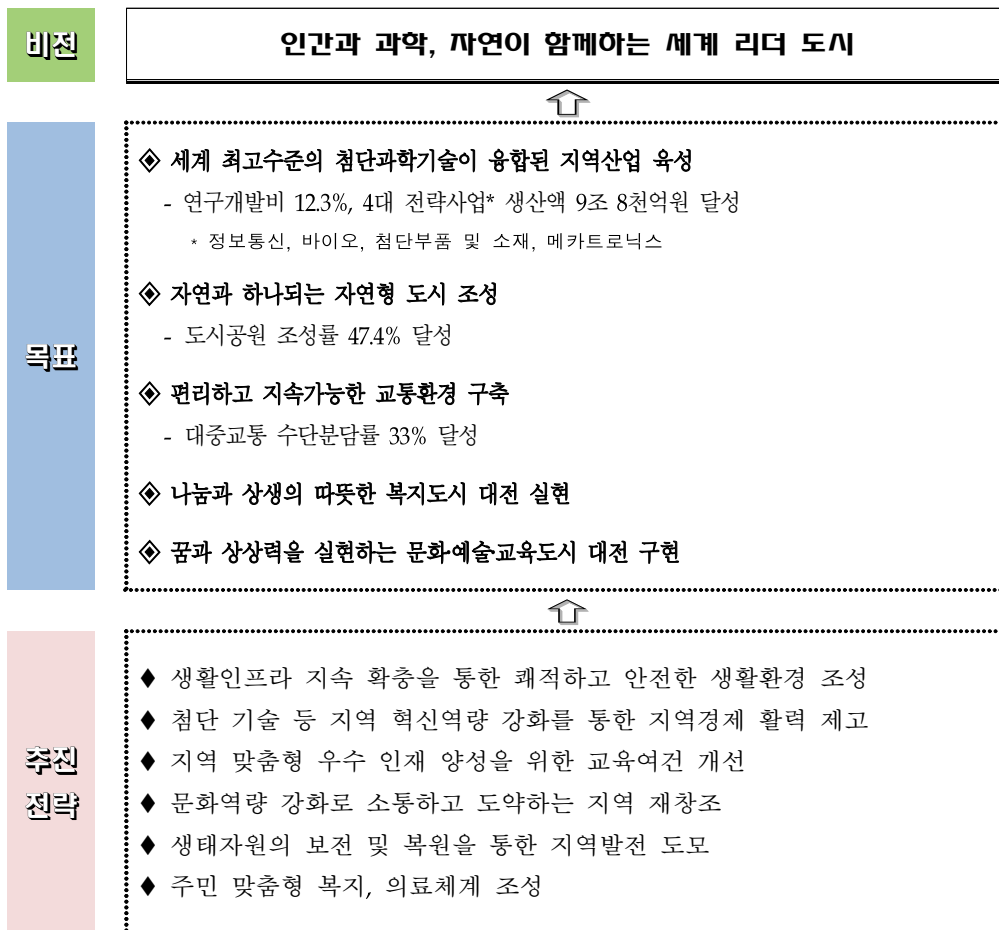
대전의 강점과 위협요인을 연계하여 발전과제는 경제·소득의 양극화 및 실업문제를 연구개발 자원을 활용한 과학기반 사회적 기업의 확대로 극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대전의 약점과 위협을 연계하여 극복할 발전과제로서는 타지역 과학기술 수요 증대에 따라 연구개발 자원 분산 위협과 지역 시민차원의 과학기술 수요에의 대응 체계 미흡 문제를 지역기반형 과학기술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통해 극복하는 것과 함께 노령화 증대와 실업문제 등, 복지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기업군 창출과 생산적 복지 체계 구축을 통해 선순환적으로 해결하는 것도 주요 과제가 될 것이다.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1. 발전비전

현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에 대응하여 향후, 5년간(2014년~2018년) 지역발전의 가치를 새롭게 정립하고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지역발전 비전을 「인간과 과학, 자연이 함께하는 세계 리더 도시」로 설정하였다.

그림 3-6-1 대전광역시 발전 비전 및 추진전략



또한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과학기술 기반의 지속성장도시”, “자연순환적 녹색도시”, “인간중심의 상생·창의도시”를 추구하면서 5개의 목표를 세웠다. 첫째, 세계 최고수준의 첨단과학기술이 융합된 지역산업 육성, 둘째 자연과 하나되는 자연형 도시 조성, 셋째 편리하고 지속가능한 교통환경 구축, 넷째 나눔과 상생의 따뜻한 복지도시 대전 실현, 다섯째 꿈과 상상력을 실현하는 문화·예술·교육도시 대전을 구현하는 것이다.

2. 추진전략

발전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5대 부문별로 각각의 추진전략을 수립하였다. 먼저 지역행복생활권 활성화를 위해 대중교통수송분담률을 2018년까지 33%까지 높이고 범죄취약지역 CCTV를 600여대 추가 설치하는 등 생활 인프라의 지속적 확충을 통한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또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경제활동인구를 2018년까지 957천명 늘리고 4대 전략산업(정보통신, 바이오, 첨단부품 및 소재, 메카트로닉스) 생산액을 9.8조원으로 늘리는 등 지역 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다. 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창의혁신 인재를 2018년까지 1,000명 양성하는 등 지역 맞춤형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에 힘쓸 것이다.

지역문화 육성 및 생태 복원을 위해서는 2018년까지 54.0km의 3대 하천 생태복원을 하는 등 생태자원의 보전 및 복원을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한편으로 문화역량 강화로 소통하고 도약하는 지역 재창조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부문에서는 사회 복지시설을 80개소로 늘리는 등 주민 맞춤형 복지, 의료체계 구현을 위해 주력할 것이다.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1. 지역생활권 활성화

(1) “지역행복생활권” 추진현황 및 성과

대전광역시시는 정부의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에 맞춰 충청북도 옥천군,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과 함께 대전중추도시생활권을 구성하였다.

대전을 중심으로 하는 중추도시생활권은 첨단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융합형 클러스터 구축(계룡, 논산 등과 연계한 첨단국방산업 클러스터 구축), 도농통합형 공생커뮤니티 구축(기호유교문화권, 대청호 등 지역의 역사, 생태자원 등을 활용한 통합 문화·관광지대 구축)을 목표로 설정되어 생활권의 중심이 되는 대전 중심지의 활력증진과 함께 주민 체감 생활 인프라 확충, 지역주도 협력발전체계 구축, 지역 교통물류망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림 3-6-2 대전광역시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그 중에서도 특히 지역발전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의 생활권 선도사업(공모사업)으로 “대청호권 생태창조마을 네트워크 구축사업”이 선정되어 생활권 참여 지자체와 연계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16년까지 총사업비 26.4억원(국비 23.8억원, 지방비 1.6억원)이 투입되어 대청호 인근 마을의 노후시설 정비 등 마을환경 개선, 생태체험프로그램 개발, 복합체험시설 개선, 마을 생산품 브랜드 마케팅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4년에는 사업의 초기단계로 찬샘마을, 두메마을, 절골마을 등 대청호권 농촌체험 대표마을을 현장조사 하였고, 사업대상마을을 선정하였다. 이후, 선정된 마을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특히, 관광 활성화와 함께 마을 자생력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으며, 사업들이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지자체 간의 연계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였다. 또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공무원, 관련 전문가, 지역주민을 포함하는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2) 지역별 추진현황 및 성과

대전광역시 지역 중심지 활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도시재생 사업 등을 통해 원도심 활성화를 도모하였는데, 이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재정비를 착수했으며, 축진지구 기반시설 사업비 853억원(국비 398억원, 시비 455억원)을 투자하는 등 지속적인 기반시설비 공공투자로서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였으며,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 추진을 위하여 도시재생시민대학을 설치·운영하였다.

주민체감 생활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상·하수도 등 주민 밀착형 인프라 확충에 노력하였는데,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확충을 위해 금고동위생매립장에 10억원의 예산을 투입, 침출수 차수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자원순환단지조성을 위한 시행자를 지정하고 본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 사업을 통해 3,334백만원을 투입하여 기반구축 1개 및 시설개선 11개 사업 등 절약사업 12개를 완료하였으며,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추진 297백만원을 지원하여 1,399가구의 시설개선을 완료하였다.

지역 교통·물류망 확충을 위해서 대전역~와동IC 광역 BRT 건설에 11,523백만원을 투입하여 토목 및 전기·통산공사의 공정률 60%를 달성하였으며, 광역도로 건설을 위해 낙후되었던 흑석, 기성 평촌동 일원의 지역발전과 장태산 휴양림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벌곡길 확장사업을 추진하였다.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건설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하는 등 인접 지역과의 대전 중심 교통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시민안전의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다.

2.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대전광역시시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하여 전통시장 및 중소 유통 물류기반 조성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를 추진하였으며, 대전 대표축제 관광상품화를 통한 관광객 유치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과학, 비즈니스, 여가 중심의 엑스포 공원 재창조를 위한 기반조성에 노력했다.

주요 분야별로 보면, 일자리 창출 중심의 지역산업 육성을 위하여 현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으로 추진하는 지역특화산업프로젝트로 대전의 특성에 맞는 국방 ICT 융합 기업생태계 구축사업이 선정되어 국방기술개발 및 기술이전 활성화, 국방 ICT 융합 산업화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2015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되면 국방관련 기술과 제품개발, 인력양성 교육으로 매출증대와 고용창출이 기대된다.

또한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의 경우 기술사업화 및 마케팅 중점지원을 통한 매출액이 전년 대비 43%가 증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지역내 170명의 일자리 창출로 삶의 질을 개선하였다. 또한 지역SW성장지원사업을 통해 584백만원을 투입, 21개 회사를 지원하여 매출 24%, 수출 170% 증가와 46명의 고용창출을 달성하였다. 2015년도에는 글로벌 강소기업 3개사를 발굴, 육성하고 국내외 판로확대를 위해 12개 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고용창출을 위한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을 통해 383명의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260명의 취업을 달성하였다. 2015년에는 경력단절여성 지원 및 청년인력 양성에 집중할 계획이다.

산업단지 고도화로 창조경제를 구현하기 위하여 지역거점조성지원사업으로 하소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데, 2016년말 준공을 목표로 실시설계 및 공사발주를 완료하였다. 그리고 노후산업단지 재정비를 위해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추진하여 민자유치 협의 및 민간사업자 공모를 시행하였으며, 지역특화산업단 조성을 목표로 평촌일반산업단지 사업시행자 협의 및 주민설명회를 추진하는 등 지역 내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지역 내 경제성장을 꾀하고 있다.

지역기반 연구 활성화로 창조경제의 지역 내 확산을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개소(2014년 3월)하고 창업사랑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창조경제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대전시의 파트너인 SK그룹과 함께 혁신형 생태계 조성 기반 마

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사이언스 센터(과학도서관, 기술거래소, 창업공간 등), 특허정보원, 민자시설(과학체험시설, 상업 및 업무시설 등) 설립을 목표로 추진 중인 사이언스콤플렉스 조성사업의 경우 사업의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본격적인 건립 및 운영방안 마련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산학연 협력기술개발의 일환으로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여 50개 과제를 선정하였고 250여명의 고용창출과 연매출 4,800백만원을 달성하였으며, 산학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 사업을 통해서 5개 과제를 선정, 25명의 고용창출과 연매출 800백만원의 성과를 올렸다.

지역성장 거점도시 조성을 위해 엑스포 재창조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세계엑스포기념품박물관과 개관(2014년 3월), 시청자 미디어센터 준공(2014년 7월) 등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또한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에 따른 정부수요 전시공간 확충 요구와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중부권 전시시설 확충을 위해 대전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2014년 11월에 기획재정부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조속한 추진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대전에서 개최되는 축제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대표축제 육성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효문화뿌리축제 관람객 16만여명,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 7만여명의 관람을 이끌어 내는 등 대표축제의 관광상품화를 통한 관광객 유치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농산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농식품 가공 체험기술 보급으로 전통식문화 계승활동을 지원하여 86회 2,504명의 교육을 추진하였다. 또한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농촌환경개선편이장비 시범사업(3개소)을 추진하여 47개 농가가 수혜를 받았으며, 편이장비 보급(5종 67농가), 환경개선 교육(13회 456명)을 추진하였고,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 추진으로 마을공동시설보완(1식), 공동 재배포 운영(1식), 농작업보조구 보급(4종 100개)을 완료하였다.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꿈과 상상력을 실현하는 교육도시 대전을 달성하기 위해 2014년도에 대전광역시에서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먼저 초중고교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초등 방과 후 돌봄시설 확충 및 개선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초등돌봄교실 353학급 운영을 위해 120억원을 투입하였으며, 더하여 24억 원을 투입하여 142실을 추가 구축하였다. 동 사

업을 통해 돌봄 참여대상을 초등학교 1~2학년 희망자로 확대 운영하였으며, 적기에 시설을 추가로 구축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였다. 또한 특성화고의 글로벌 현장 학습 지원을 통해 해외취업을 도모하고 있는데, 2014년에는 호주에 37명의 글로벌 현장 학습을 실시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큰 만족을 이끌어 냈다.

창의적 인재를 키우는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3개 대학)과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1개 대학)을 지원하여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시스템 개선과 취업의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다.

일과 학습의 병행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글로벌 성장사다리 구축·운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전시는 이 사업을 통해 259명의 창의인재를 양성하였으며, 15개사를 히든챔피언으로 발굴하여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였다.

대전시는 100세 시대 지역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해 평생학습도시 특화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자치구의 특색 있는 평생학습 환경을 조성하여 균형 있고 다양한 평생교육 실현을 목적으로 2014년 4개구 7개 사업에 5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4. 지역 문화 육성, 생태복원

지역 문화 육성과 생태복원을 위해 대전광역시는 2014년 자연 휴양림 노후시설 및 재해 위험지 등 정비를 통해 이용자 안정성 확보 및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시민 밀착형 생활 스포츠 환경 조성을 통한 시민 체육활동 참여 기회 제공에 집중하였다.

특히 대전시는 맞춤형 문화서비스를 통한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주민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국악전용공연장을 준공하고 점자도서관 개관, 관평도서관 착공, 유니버설디자인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등의 성과를 이루었으며, 261명의 지역일자리를 창출하여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이바지하였다. 또한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을 위한 생활체육시설 등을 확충하였는데, 월드컵경기장 노후시설 개보수, 국궁장 조성, 학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 공공체육시설 이용객이 전년도 대비 173천명 증가하는 성과를 이루었고, 운동장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고 개방하는 학교도 전년 대비 7개소가 증가하였다.

지역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서 행평그린공원 관광벨트 및 골목재생 특화거리를 조성하여 차별화된 사계절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관광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생태·자연환경 보존·활용을 위해 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대전 녹색환경지원센터를 지원하여 5개의 연구사업과 10개 업체에 총 13회의 기업체 환경 기술지원을 실시하는 등 지역 환경기술개발의 구심점을 형성하게 하였다. 또한 생태하천 복원을 위해 세동천 등 2개 하천에 1,904백만원을 투입하여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여가활동을 제공,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였으며,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유지보수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구축, 시민들의 이용 만족도를 높였다.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나눔과 상생의 따뜻한 복지도시 대전 실현’을 위해 주민 맞춤형 복지를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전은 2014년 노인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활동 지원과 보육의 공공성 강화에 다음과 같이 힘을 썼다.

지역밀착형 복지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주민 정신건강 지원 확대(정신건강 증진센터 운영)사업은 1,820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연인원 총 55,328명의 상담을 받는 등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도 향상을 위한 일반 상담서비스 제공도 80%를 달성하였다. 또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을 통해 160백만원의 직접사업과 3,029백만 원의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 사업의 체감도를 제고하였다.

수혜자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시책 추진을 위해서는 드림스타트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복지교사 140명을 배치하고, 사례관리 2,002명(동구 311명, 중구 360명, 서구 297명, 유성 711명, 대덕 323명) 등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였다. 또한 방과후돌봄으로 68개소(거점형 5, 특수목적형 13, 토요운영 50)의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고, 5개 분야(지역사회복지사, 독서지도, 학습지도, 기초영어, 예체능) 140명의 복지교사를 배치하여 돌봄 기능을 강화하였다. 한편 장애인 활동지원을 위해 일자리 창출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33,202백만원

의 예산을 투입해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참여가 어려운 장애인 2,369명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을 지원하였다.

대전광역시는 청소년 복지를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였는데,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609명에게 언어발달지원을 하였으며,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사업으로 취약계층 가정의 청소년에게 복지·보호·지도 등을 통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청소년수련시설 확충을 위해 5개소(평송청소년문화센터, 대전청소년수련마을, 대덕구 청소년수련관, 유성구 유스호스텔, 서구 도솔청소년 문화의 집)의 기능보강 공사를 완료하여 이용자의 불편해소와 안전사고 사전예방에 주력하였다.

제4절 향후 추진계획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변화에 맞춰 대전광역시는 2014년에 지역민의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체험 가능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였다. 2014년에 추진된 사업들은 그 실적을 바탕으로 미흡한 사업들은 개선하여 대전광역시 발전계획에 맞춰 2015년에도 차질 없이 사업을 수행할 것이며,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여 기존 사업들과 전략적으로 연계, 성과를 극대화 할 것이다.

지역생활권 활성화를 위해 낙후지역 정비사업을 통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것이며,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도시재생 및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의 지속 추진을 통한 침체된 원도심 활성화 사업을 확대할 것이다. 또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및 범죄 사전 예방 등을 위해 취약지역 CCTV설치, 보행환경개선사업 등을 추진하며 시민편의 정류장 환승환경 개선사업,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추진 등을 통해 대중교통중심의 교통체계 구성에 노력할 것이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지역 내 중소벤처기업 연구 성과 기술 사업화 지원 및 유망기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며, 전문화, 다양화되는 일자리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청년 및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맞춤형 인력 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초등돌봄교실 운영의 내실화를 통해 실질적인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정부 창조경제 정책에 부응하는 대전 특화형 창의적 혁신인재양성에 집중할 것이다.

지역문화 융성, 생태 복원을 위해 2015년에는 우선적으로 문화예술 창작환경 조성을 목표로 지역 예술인을 위한 소통과 교류의 창작 공간마련에 노력하며, 도심 속 생태휴식 공간 조성을 통한 시민의 건강 유지와 행복한 생활문화 제공에 노력할 것이다.

끝으로 사각 없는 지역복지·의료로 위해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저소득층 아동복지를 확대할 것이며, 취약지역 공공의료 정비를 통한 시민 건강증진 지원서비스를 확대할 것이다.

제7장 울산광역시

제1절 경제 현황

1. 일반 현황

울산의 인구는 2013년 기준 116만명으로 2010년에 비해 3만명 증가하였다. 지역내총생산(GRDP)은 2010년 63조원에서 69조원으로 증가하였으며, 1인당 GRDP는 6,042만원으로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높았다. 수출액은 2010년 714억 달러에서 28%가 증가한 915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취업자수는 2010년 53만명에서 55만명으로 증가하였다. 재정자립도는 서울, 경기와 더불어 70%이상인 70.7%로 나타나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하였다.

표 3-7-1 울산광역시 경제 일반현황

구분	전국			울산		
	2007년	2010년	2013년	2007년	2010년	2013년
지역내총생산(십억원)	1,151,843	1,265,146	1,376,143	61,920	62,852	69,071
인구(천명)	49,269	50,516	51,141	1,100	1,126	1,156
1인당 GRDP(만원)	2,147	2,561	2,842	4,652	5,745	6,042
수출액(백만달러)	371,489	466,384	559,632	63,952	71,384	91,513
취업자(천명)	23,433	23,829	25,066	515	534	546
재정자립도(%)	53.6	52.2	51.1	68.4	67.2	70.7

주 : 지역내총생산은 2010년 기준가격임.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2. 산업 현황

울산의 산업구조는 지역내총생산액 기준으로 서비스업 28.4%, 제조업 71.3%, 농림어업 0.3%, 광업 0.2%로 서비스업보다 제조업 비중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2013년 제조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자동차 및 트레일러'가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이 각각 19.2%, 29.7%, 17.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 외에는 '금속가공제품' 및 '기타 기계 및 장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2007년과 비교할 때, '자동차 및 트레일러'의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가 감소하고, 생산액은 증가하였다.

표 3-7-2 울산광역시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07년			2010년			2013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제조업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식료품	2.8	0.7	0.5	2.3	0.5	0.5	2.1	0.7	0.4
의복, 의복액세서리	0.6	0.1	0.0	0.4	0.1	0.0	0.5	0.1	0.0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3.0	1.9	0.8	3.7	1.5	0.8	3.5	2.7	0.9
금속가공제품(기계·가구 제외)	15.7	5.7	1.4	13.9	6.7	1.2	13.1	5.4	1.2
전자부품·컴퓨터·통신장비	1.1	2.4	1.3	0.6	0.5	0.5	0.6	1.8	0.4
전기장비	4.7	1.7	0.2	5.7	2.1	0.6	4.5	3.9	1.7
기타 기계 및 장비	14.9	4.9	1.3	12.8	5.8	1.3	11.9	6.2	2.1
자동차 및 트레일러	14.1	33.0	21.6	17.3	34.5	19.2	16.7	29.7	17.4
기타 제품	0.2	0.1	0.0	0.5	0.1	0.0	0.4	0.1	0.0

주 : 2010년은 경제총조사 자료임.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광업·제조업 조사 ; 경제총조사(2010)」

표 3-7-3 울산광역시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07년			2010년			2013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서비스업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0.7	1.9	7.3	0.7	1.5	6.5	0.9	1.8	7.4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0.9	2.5	6.3	1.2	3.0	9.9	1.0	2.4	6.3
부동산업 및 임대업	10.9	9.4	13.3	9.8	7.3	9.5	11.9	9.7	15.7
사업지원 서비스업	4.1	23.5	17.2	4.2	17.0	12.6	5.5	21.5	17.2
교육 서비스업	22.1	16.1	8.7	21.1	29.5	24.7	20.0	12.9	8.1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0.0	20.9	26.1	10.4	19.6	20.8	12.5	27.7	28.0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15.4	8.0	8.2	13.1	5.7	4.8	13.3	7.6	5.3
기타 개인 서비스업	35.9	17.7	13.0	39.4	16.3	11.2	34.9	16.4	11.9

주 : 2010년은 경제총조사 자료임.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전국서비스업조사 ; 경제총조사(2010)」

2013년 서비스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업체수 기준 '기타 개인 서비스업'과 '교육 서비스업'이 각각 34.9%, 20.0%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종사자수 및 생산액 기준으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27.7%, 28.0%로 가장 높았다. 그 외에도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의 업종 비중이 높았다. 2007년과 비교할 때 업종별 비중의 큰 차이는 없으나,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종사자수 비중이 다른 업종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이 특징이다.

3. 혁신활동 현황

연구개발 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기준 연구개발비 7,405억원, 연구개발인력 8,620명, 연구개발조직수 311개로 2007년에 비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전국대비 비중 변화는 크지 않았다.

특허 현황을 보면, 2013년 기준으로 특허출원은 3,072건이며, 등록은 1,149건으로 전국대비 비중은 각각 1.9%, 1.2%로 나타났다. 2007년 대비 출원 건수는 무려 2,002건 증가하였으며, 전국대비 비중이 2배 이상 높아졌다. 등록 건수 역시 549건 증가하여 0.5%p 증가하였다.

표 3-7-4 울산광역시 혁신활동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 건, %)

구분		2007년	2010년	2013년
연구 개발	연구개발비	353,496 (1.1)	452,213 (1.0)	740,508 (1.3)
	연구개발인력	5,489 (1.3)	6,091 (1.2)	8,620 (1.5)
	연구개발조직수	159 (1.3)	242 (1.4)	311 (1.1)
특허	출원	1,070 (0.8)	1,806 (1.4)	3,072 (1.9)
	등록	600 (0.7)	498 (1.0)	1,149 (1.2)

주 : ()는 전국대비 비율임.

자료 : 1)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년도

2) 특허청, 지식재산통계연보, 각년도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울산광역시시는 산업수도로서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3대 주력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선점으로 경제기반의 도시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제조업 및 주력산업분야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성장이 취약한 상태이다.

지역산업의 구조고도화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신산업의 태동과 연관산업의 성장발판 마련이 강화되어야 하며, R&D 기능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에너지분야의 경쟁우위를 기반으로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산업과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 사업 등의 특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가지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 환경·에너지 정책의 전환과 산업의 융복합으로 ICT 및 녹색산업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이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지역의 도로망 구조는 남북 교통축은 잘 발달되어 있는 반면, 동서 및 순환 교통축 등은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도로망 연계가 절실한 실정으로 기존 도로망이 국가기간도로망과 효율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아 도시간선도로상의 교통부하가 가중됨에 따라 교통혼잡이 심화되고 있어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도시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또한 산업중심 공간개발로 시민생활의 문화공간이 미흡하며, 풍부한 자연자원과 문화역사자원으로 문화관광 분야의 성장기회 및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어 창조산업으로의 공간 구축이 가능함으로 지역 내 생활권 연계를 강화하고, 복지 및 서비스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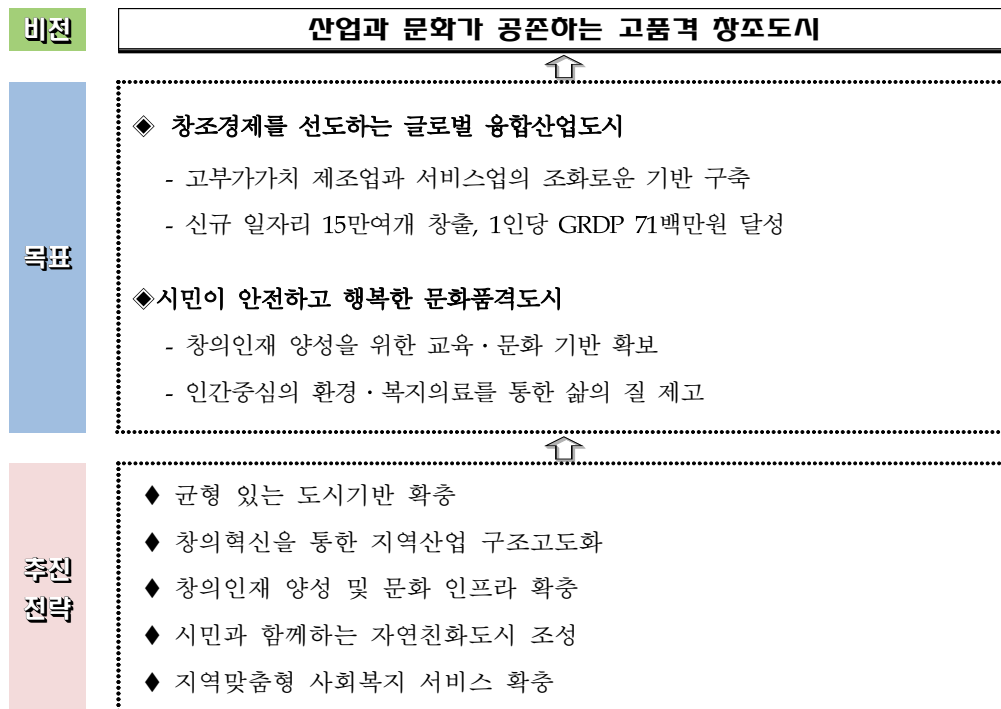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1. 발전비전

울산광역시의 발전 비전으로 ‘산업과 문화가 공존’하고 시민의 삶이 풍요롭고(豊) 조화로운(和) 품격(格) 높은 창조도시 구현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비전은 ‘창조경제를 선도하는 글로벌 융합산업도시’와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문화품격도시’라는 목표 달성을 통해 실현될 것이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 첫째, ‘균형 있는 도시기반 확충’, 둘째, ‘창의혁신을 통한 지역산업 구조고도화’, 셋째, ‘창의인재 양성 및 문화 인프라 확충’, 넷째, ‘시민과 함께하는 자연친화도시 조성’, 다섯째, ‘지역맞춤형 사회복지 서비스 확충’을 중점 추진하며 개별 추진 전략에는 세부전략을 마련한다.

그림 3-7-1 울산광역시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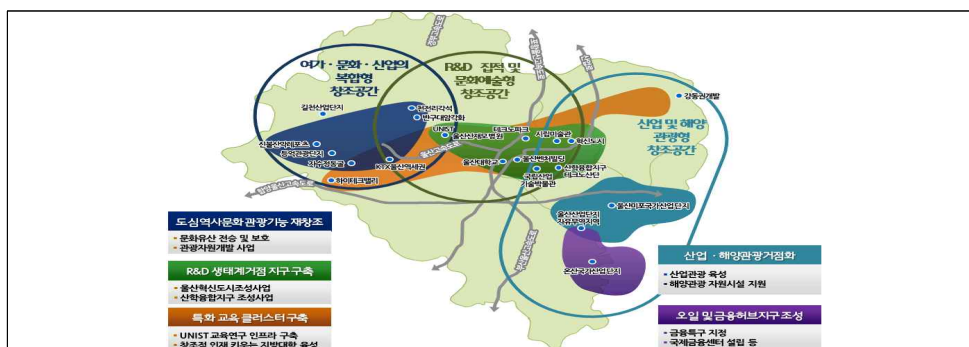
2. 추진전략

울산시의 발전비전을 이루기 위해 '균형 있는 도시기반 확충', '창의혁신을 통한 지역산업 구조고도화', '창의인재 양성 및 문화인프라 확충', '시민과 함께하는 자연친화도시 조성', '지역맞춤형 사회복지 서비스 확충' 등 크게 5가지 추진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추진전략으로 균형 있는 도시기반 확충을 위하여 산림, 녹지, 생활환경 등의 통합적 관리 및 보전을 하며, 안전·방재 인프라 구축을 통해 안전도시를 건설한다. 또한 주민의 역량강화와 주민주도적 지역사업추진으로 지역정체성을 확립하며, 도로·철도·항공 등 연계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한다. 창의혁신을 통한 지역산업 구조고도화를 위해 신성장동력산업의 발굴·육성 및 인프라를 조성하고,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을 조성하며,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으로 석유거래 및 금융 산업을 육성한다. 또한 산·학·연 활성화로 지역의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한다. 시민과 함께하는 자연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영남알프스 생태복원을 통한 지속가능한 산림생태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도심속 녹지공간 확충과 도심속 생태하천을 조성하며, 상·하수도 보급률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물순환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지역맞춤형 사회복지 서비스 확충을 위해 지역사회복지 인프라를 확대하고, 사각 없는 복지전달체계를 확립한다.

공간별 추진전략은 발전 비전 '산업과 문화가 공존하는 고품격 창조도시' 구현을 위해 서부권을 '여가-문화-산업(R&D)의 복합형 창조공간', 도심권을 'R&D 집적 및 문화예술형 창조공간', 동부권을 '산업해양관광형 창조공간'으로 구분하여 추진한다.

그림 3-7-2 울산광역시 공간별 창조도시 추진전략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1. 지역생활권 활성화

(1) “지역행복생활권” 추진현황 및 성과

울산광역시의 지역생활권은 농어촌 생활권과 도농연계 생활권을 고려하지 않고 중추도시생활권 하나만을 구성하는 것으로 울산을 중심으로 기능적 연계 및 지리적 연계 등의 기준을 적용하여 경북 경주, 경남 밀양·양산 4개 도시를 울산중추도시 생활권으로 구성하였다(2014년 2월 4일). 이에 울산중추도시생활권은 2014년 68개 사업을 발굴하여 23개 사업이 국비에 반영되었다. 그 중 선도사업으로 영남알프스 마운틴탑 사업(총 32억원, 국비 29억원, 지방비 3억원)이 선정되어 울산광역시를 중심으로 경주·밀양·양산의 공유자원인 영남알프스를 동남내륙지역의 산악관광메카로 육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관리 및 안내·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그림 3-7-3 울산광역시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영남알프스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확보, 산악관광인프라 구축 및 통합연계 관광상품 개발을 통한 명품 산악관광지로 육성한다.

또한, 울산시의 주 식수원인 회야댐 상류지역은 울주군 웅촌면 지역과 양산시 웅상 지역으로 구분되며 울산시가 공공하수도 관리를 하며, 발생 하수는 회야·온산하수처리장에서 연계 처리하여 지역 간 시민이 만족하는 건강한 생활권을 확보하고 있다.

(2) 지역별 추진현황 및 성과

생활권 도시역량 강화를 위하여 생활편의 인프라 확충 및 관리체계 확립, 연계교통, 상하수도, 방재·안전 등 다양한 생활환경 편의성을 확보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안전한 지역환경 만들기를 위하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2014년 4개소, 총 194개소), 어린이 안전영상 정보 인프라 구축(어린이 보호구역 80개소 CCTV 118대 설치, 도시공원 놀이터 116개소 CCTV 171대 설치), 위험도로 구조개선(도로확장 및 개량 4개소 L=5.32km),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개선(345개소), 저상버스(10대) 도입 등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생활체감 도시 인프라 정비로 청량 두현저수지 경관사업(8개 사업) 등의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고,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운영·관리비 지원(310개소, 37억원 지원), 정기적인 수질검사 및 관리강화를 통한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 공급, 노후시설 개량으로 식수난 해소,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물류기반 조성인 아케이드 설치, 진입로 등 전통시장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울산시는 지역주민에게 휴식공간 제공을 더불어 도시이미지 제고에도 노력하고 있다. 대왕암공원 연안유희지 개발사업(잔디마당 2,007㎡ 조성 등)인 연안공간의 특화된 해양테마공원 조성과 도심활력 증진사업인 구도심 녹지공간조성(토지보상 565㎡, 토지보상율 100%)과 남산근린공원 수변공원 조성(인공폭포 및 분수대 설치, 무허가 건축물 등 철거 31동) 등이 추진되었다.

더불어 맞춤형 자원봉사체계를 구축하여 양질의 자원봉사 서비스 제공(24개 사업)으로 대한민국자원봉사대상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하는 등 자원봉사 참여확산으로 시민 행복지수 상승의 효과가 나타났다.

국가기간도로망과 효율적인 연계 및 교통혼잡 개선을 위해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사업(공사착공, 2014년 6월), 울산-포항 고속도로 건설사업(공정률 85%), 광역도로 건설로 산업로(신답교~경주 시계) 확장(실시설계 완료), 언양-영천 확장(공정률 27%), 국도31호선(장안~온산) 건설(공정률 46%), 동해남부선 복선전철(공정률 56%) 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대도시권 혼잡도로 개선사업인 울산대교 및 접속도로(공정 86%) 등 우회순환도로망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최적의 교통·물류체계 구축으로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네트워크형 도로망을 통해 이동하기 편리한 교통 환경을 실현하였다.

2.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울산광역시시는 지역대표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였다. 특히, 울산시는 국내 수소의 60% 이상을 생산하고 국내 최고의 수소공급 배관망을 구비하는 등 이와 같은 여건 속에서 2014년 특화발전 프로젝트로 연료전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선정되었다. 이를 통해 차세대 지능형 에너지도시로 전환하여 수소산업 거점화의 단초 역할을 하였다.

특히, 울산은 주력전통산업뿐만 아니라 울산지역 내 R&D 기반 확충을 통한 주력산업의 고도화와 신성장 동력육성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고용창출 효과가 우수한 산업을 신지역특화산업(수송기계융합부품, 엔지니어링플랜트, 에너지소재, 정밀화학, 환경)으로 육성하고, 새로운 산업 및 업종 출현이 가능하도록 관련 인프라(그린카기술센터 건립(공정률 52%), 바이오화학실용화학센터 건립)를 확대하여 글로벌 선도 강소형 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고리를 강화하였다. 이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인 석유화학업종의 맞춤형 인력양성(취업 23명), 산업단지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취업 38명)을 통해 고용문제 해소에 기여하였다.

또한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을 위하여 입지선정(2014년 7월)과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2014년 7월)을 추진하였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울산연구센터 유치(주력산업과 ICT융합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과제 발굴(24개)로 설립 기반 마련), 울산 차세대전지 종합지원센터 설립(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승인, 울산테크노일반산업단지 부지 조건부 분양 계약), 울산전시컨벤션센터 건립 추진 준비(기본계획 재검토, 건립·운영 전문가 자문 등)로 생산과 연구기능이 융합된 첨단산업단지 조성과 과학기술기반 확충, 전시·회의 유치로 지역 내 부족한 서비스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였다.

산업단지를 창조경제의 거점으로 육성하여 유망기업 투자유치를 도모하고, 동북아 오일허브 가속화로 지역투자 촉진 기반을 확대하였다. 산업용지를 12개 산단에 8,576㎡ 공급하여 10개 산단이 분양 완료(332개사)하였으며, 산업단지의 기업지원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폐·부산물에 대한 기업간 연계를 통한 친환경 산업단지 구축(3단계) 사업으로 자원 및 에너지 이용효율 극대화, 환경오염물질 배출 최소화에 이바지하였다.

산업단지 기업지원 기능강화를 위하여 울산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 사업(공사 착공), 스마트그리드를 활용한 생태산업단지 모델도시를 추진(예비타당성 조사, KDI), 그린 에너지 소재기술 개발센터 구축(연구개발 특허 9건, 해외출원 1건 및 장비구축 2종)하며, 특히 울산자유무역지역 조성사업으로 자가 공장부지 입주현황 30개사를 유치함으로써 대·중소기업 간 기술협력, 외자유치 및 수출 진흥을 촉진하였다.

울산시는 지난해 SK가스 및 사우디 어드밴스드社 합작투자, SK케미칼 및 일본 테이진 합작사 이니츠 등 해외글로벌 기업의 신규·증설투자를 유치하면서 동북아오일허브 가속화 사업인 물류기반 구축(1단계 북항 : 상부공사 SPC설립(2014년 2월), 하부공사 공정을 19.3%(2014년 12월), 2단계 남항 :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2014년 12월)), 물류 활성화 추진(오일허브 산업정책 포럼 개최 2회, 울산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과제발굴 TF 구성 19개 기관, 금융허브 조성 마스터플랜 수립 기초자료 연구용역 실시)으로 금융허브로써의 선도적 역할을 위해 지역투자 촉진 기반을 확대했다.

나아가 울산광역시 창조경제협의회 구성·운영(2014년 10월), 창조경제추진 종합계획 수립(2014년 12월)으로 울산형 창조경제 추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원자력시설 해체 종합연구사업(미래부) 참여로 중앙정부의 과학기술정책 연계협력 활성화를 통해 지역내 산업간·산업내 기술이전 촉진을 위한 정책도 추진하였다.

지역 성장거점 육성을 위해 혁신도시 투자유치 설명회 및 홍보 책자 제작·배부, 혁신도시 생활정보지 제작·배부,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가족 초청행사, 지역희망박람회 혁신도시관 운영 및 홍보를 통한 생활편의 지원으로 정주여건을 갖추는데 이바지하였다.

또한 1차 산업의 6차 산업화 추진을 통한 농어촌 일자리 확충을 추진하였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로컬푸드사업 추진으로 로컬푸드직매장 2개소를 설치하여 매출액 100백만원/월, 농가 300명(1일 참여농가 110명) 참여 등의 성과를 거두었고, 과수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를 통해 연 1,680명,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으로 연 20,000명(매출액 85억원, 73명/일)의 농촌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어촌분야에서는 수산어업 지원 등 어촌지도사업인 수산어업 행정지원, 수산자원조성사업(바다숲 조성, 수산종묘 방류 등)을 수행하고, 농촌분야에서는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배양실조성 164㎡ 및 배양기 2대 설치, 미생물 생산 8.4톤)으로 농·어업 소득 증대에 기여하였다.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울산시는 국내 산업을 이끌어온 도시로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교육을 통한 우수한 인재양성이 절실하나 지역 내 교육기관이 부족한 실정으로 중·고교 이후 우수 인재의 역외 유출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 교육복지 서비스 확대를 통한 지역 공교육 내실화 및 창의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다.

지방 초중고교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서 적정규모의 육성을 위한 학교통합 기본계획에 따라 2014년 울산초 및 울산동중을 혁신도시로 이전 재배치를 실시하여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통해 소규모학교는 도심지 학교와 교육격차 해소뿐만 아니라 교원확보, 낙후된 시설개선 등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 도모에 이바지하였다.

농산어촌 초·중학교 지원인 ICT를 활용한 농산어촌 학생 학습여건 개선지원 사업으로 14개교 지원을 통해 아동기·청소년기 학생들의 성장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각종 체험기회를 부여하였다. 또한 부처통합 방과후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여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120개교 233실 운영하여 5,200여명을 지원했으며, 그 결과 학부모 95.1%가 긍정적으로 만족한 결과가 나타났다.

지역 인재의 역외유출을 막기 위하여 지역 산업현장 수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지원을 확대한다. 현대공고(조선해양플랜트분야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1식 개발, 조선해양플랜트분야 마이스터학생 기숙사 신축 및 시설기반조성), 울산마이스터고·울산에너지고(마이스터고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지원) 지역산업연계형 직업교육 운영으로 산업수도 울산지역산업을 지원하는 기술인재양성 교육역량을 확보하였고, 양질의 기술인력 육성으로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였다.

또한 지역의 미래 기반 창의인재 양성을 위하여 BK21 플러스사업인 울산대학교를 지원하여 세계적인 자동차·조선전자융합기술 연구인력 양성, 연구개발을 위한 자동차·조선전자융합기술 산업 발전을 선도하여 울산시가 자동차 및 조선산업의 메카로서의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하였다.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을 통해 취업률 53.1%를 달성하였고, UNIST 교육·연구 인프라 구축으로 포항가속기연구소 UNIST 전용 다목적 빔라인 등을 완공(50억원)하여 미래부 대학운영성과 평가는 88점(100점 기준) '우수' 등급을 획득하였다.

더불어 100세 시대 평생학습체제를 구축한다. 지역평생교육활성화 사업(구군 평생학습 특성화 지원, 9개 프로그램 700명 참여), 대학중심의 평생학습 활성화(67명 참여, 일자리 프로그램 지원), 소외계층 인문학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수료인원 263명)으로 계층 특성을 고려하고,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지역차원의 체계적 평생교육을 추진하였다.

4. 지역 문화 융성, 생태복원

울산시는 제조업 및 주력산업분야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성장이 취약한 상태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특색 있는 지역문화인프라 구축과 안전한 자연생태환경 조성을 추진한다. 먼저, 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사업(8개 분야 98개 개인·단체),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정확대 및 운영활성화, 문화예술행사 개최(제33회 전국연극제, 울산연극제, 청소년연극제 등) 등으로 울산시의 문화예술 역량 제고에 힘쓰고 있다. 또한 전통사찰인 옥천암 요사채 개축, 신흥사(염불암) 단청공사, 반구대 암각화 주변 가변형 임시 물막이 설치 등의 보전 정비로 울산의 문화유산 가치를 높이는 데 이바지하였다. 공립박물관 건립지원(박물관 시설물 관리)과 암각화박물관 3D영상콘텐츠 제작 등으로 연중 박물관 관람객 148,236명을 유치하였다.

또한 문화공간 및 문화시설 확충을 위해 시민의 오랜 숙원인 시립미술관 건립, 청소년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청소년문화회관 건립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어린이가 즐기면서 체험할 수 있는 어린이테마파크 건립과 울산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레지던스 프로그램 및 공연장 상주단체지원과 전국공연장 상주단체 페스티벌 지원, 지역단위 생활체육 지도자배치(15종, 585,373명 참여), 소외계층 문화예술 교육지원(국악예술강사 운영 등),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공공도서관 2개소 및 작은도서관 5개소 건립지원), 체육진흥시설 지원으로 지역에 걸 맞는 맞춤형 문화서비스 제공을 통해 문화격차를 해소하고자 하였다. 특히, 통합문화이용권 및 울산예술사랑티켓 사업을 통해 카드이용률 97%로 17개 시·도 중 1위를 달성하여 문화향유권을 누릴 수 있도록 삶의 질을 제고하였다.

관광자원개발사업인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와 화암추등대 관광자원화사업 추진, 울산의 우수한 산악관광인 '영남알프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세계 '알프스' 브

랜드 국제협력 확대(2015 UNWTO 산악관광회의 개최 확정)와 신불산 로프웨이 설치(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추진)로 지역 관광산업 육성에 힘쓰고 있다.

더불어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친환경 자연생태도시 구축과 안전체험교육으로 안전문화 확산에 주력하였다. 생태관광지역 지정·육성인 태화강 봄꽃 대향연과 가을 국화 개최로 방문객 55만명 유치로 생태관광활성화 도모에 기여하였고, 지방하천정비 사업(산책로 선형작업)과 백두대간 마루금 생태축연결 복원사업(영남알프스 생태복원 사업, 계획수립 및 타당성평가), 국가산업단지 주변 완충녹지 조성 등으로 주민체감도가 높은 지역에 우선적으로 녹지공간을 확충하여 자연환경을 보존·활용하였다. 또한 산림 및 안전체험 교육 기반인 울산수목원·산림교육문화센터 및 안전체험교육센터(소방종합훈련센터) 준비를 통해 생태환경 조성과 안전문화를 확산하였다.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오늘날 절대적 빈곤에서 상대적 빈곤으로 관심이 옮겨가고 있으며, 노인 및 장애인 가구가 증가하고, 저출산 및 가족의 해체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빈곤문제 뿐만 아니라 노인과 장애인의 생활지원과 삶의 보장 등으로 더욱 다양한 서비스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제반요소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맞춤형 복지지원을 실현하였다.

우선,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사회서비스 욕구 충족으로 예방적 복지 강화,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추진하였다. 본 사업을 통해 사회서비스 수혜자가 8,320명에서 10,743명으로 29% 증가하였고, 사업 참여 제공기관이 47% 증가하였다. 작년대비 195명에서 324명인 48%의 일자리를 창출시켜 사회서비스 시장규모 2013년 대비 30% 증가와 사회서비스 품질 및 이용자 만족도 97%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사회서비스 욕구를 충족시켰다.

지역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직 15명을 신규채용하여 복지업무를 내실화하고 시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제고하였다. 또한 어린이집 1개소(남구 장애아 전문)를 확충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였다.

그 외 신체적·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정보 접근 및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정보통신 보조기기(92명) 보급사업 추진, 사랑의 그린PC 보급(총 266대), 인터넷 중독 대

응사업 추진(예방교육 41,694명 실시) 등으로 주민밀착형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지역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의 욕구를 지역에서 해결하는 공동체 구성으로 복지주체의 역할 강화 및 다원화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노력을 위하여 드림스타트사업(아동보호통합서비스 사업) 운영으로 지역자원과 연계한 맞춤형 서비스 및 지역아동센터를 지원(58개소)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지원(5개소, 200명), 청소년 시설 확충(중구 청소년문화의집 기능 보강), 노인활동지원 사업(실적 106% 달성),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운영(102명)으로 여성일자리 알선 효과가 나타났고,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2,015명) 등으로 수혜자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시책을 추진하여 보편적 복지를 달성하였다.

한편 건강증진 노력의 결과, 시민의 건강지수 평가(대한민국 건강랭킹)에서 전국평균(62.0점)보다 15.4점이나 많은 77.6점을 받아 전국 1위를 차지하였으며, 특히 흡연율은 22.5%(2013년 23.1%)이며, 비만율은 23.5%(2013년 24.1%)로 시민들의 건강상태가 점차 개선되어 가고 있다.

특히, 울산시는 R&D 기능과 임상연구동을 갖춘 울산 산재모병원 건립(추진단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약 46만명의 울산 근로자를 위한 산업재해에 대한 의료시설을 갖추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서비스를 강화하고 응급의료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4절 향후 추진계획

울산시는 “산업과 문화가 공존하는 고품격 창조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첫째, 창의 혁신을 통한 지역산업 구조고도화로 일자리 창출, 둘째,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인프라와 최적의 도로망 구축, 셋째, 지역문화융성과 복지주체의 다각화로 지역문화역량을 강화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우선적으로, 신성장 동력 보강과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일자리 창출 중심의 지역대표산업을 육성한다. 이를 위해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산학융합지구 조성 사업인 현장맞춤형 산업인력 양성의 선도 모델을 구축을 위해 협약 추진, 바이오화학실용센터 개소(2015년 9월), 울산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 등 신성장 동력 발굴 및 육성기반을 확충한다. 또한 스마트그리드를 활용한 생태산업단지 모델도시 추진(예비타당성 조사)과 산학융합형 하이테크타운 건립(사전행정절차 이행), 친환경 전지융합 실증단지 조성(건축물 실시설계 및 연구개발 추진), 동북아 오일허브 가속화 등을 통해 지역투자 촉진 기반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유관기관 연계·협업을 통한 기업지원체계 구축 및 창업지원, 아이디어 사업화 등 창업문화 확산 추진을 위한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립·운영하고, 원자력시설 해체 종합연구센터 유치를 위한 분위기 조성, ICT 융합 Industry 4.0s(조선해양) 추진 등으로 지역기반 연구 활성화로 창조경제 지역 확산을 도모할 것이다.

지역재생 및 정비사업으로 주민밀착형 사업을 추진한다. 울산중추도시생활권 연계협력 사업인 영남알프스 Mountain Top사업으로 통합적인 관시시스템 구축과 산악관광 활성화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해 명품 산악관광지로 육성하고, 도시의 토지이용 및 상하수도, 안전·방재 등 다양한 생활환경 편의성을 확보함으로써 도시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교통혼잡 개선을 위해 울산외곽순환도로 개설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국가기간도로망 확충을 통해 원활한 산업물동량 수송으로 물류비 절감 및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한다.

울산시의 취약한 고부가가치 문화산업을 성장시키고, 복지 및 서비스 기능을 강화한다. 시립미술관 건립으로 울산시민의 미술 향유를 위한 공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창조적 인재를 양성하는 울산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으로 모든 시민이 문화와 예술을

즐거는 도시를 구축하고, 2015년 UNWTO 산악관광회의 개최를 통해 관광객 유입 극대화도 울산의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한다.

또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가사간병방문 관리 지원 등)과 아동지원 강화 및 복지시설 구축, 산재모병원 건립을 위한 예비타당성 발표가 완료되면 실시설계 추진 등 공공 의료 서비스 강화로 복지도시를 구현한다.

제8장 세종특별자치시

제1절 경제 현황

1. 일반 현황

세종의 인구는 2013년 기준 12.2만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0.9만명 증가하였다. 수출액은 2012년 2.8억 달러에서 3.2배 증가한 9.0억 달러로 수출액 증가율이 매우 높았다. 재정자립도는 38.8%로 전국 평균인 51.1%에 크게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세종시의 경제현황은 도시건설 진행 중이라는 환경적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표 3-8-1 세종특별자치시 경제 일반현황

구분	전국			세종	
	2007년	2010년	2013년	2012년	2013년
지역내총생산(십억원)	1,151,843	1,265,146	1,376,143	-	-
인구(천명)	49,269	50,516	51,141	113	122
1인당 GRDP(만원)	2,147	2,561	2,842	-	-
수출액(백만달러)	371,489	466,384	559,632	279	904
취업자(천명)	23,433	23,829	25,066	-	-
재정자립도(%)	53.6	52.2	51.1	-	38.8

주 : 지역내총생산은 2010년 기준가격임.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2. 산업 현황

세종시의 2013년 제조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업체수 기준으로 '식품품'이 13.3%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전기장비' 등 순이었다. 종사자수 및 생산액 기준으로 '전자부품·컴퓨터·통신장비'가 각각 17.2%,

15.8%로 가장 높았으며, 그 외에도 '식료품', '전기장비',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의 비중이 높았다. 2012년 사업체수와 비교할 때, '전기장비'와 '기타제품'의 비중이 증가하고, '기타 기계 및 장비'가 감소하였다.

표 3-8-2 세종특별자치시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12년			2013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제조업 전체	100.0	-	-	100.0	100.0	100.0
식료품	13.6	-	-	13.3	11.9	11.8
의복, 의복액세서리	0.0	-	-	0.0	0.0	0.0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10.9	-	-	11.8	9.5	9.1
금속가공제품(기계·가구 제외)	5.4	-	-	5.1	1.8	0.9
전자부품·컴퓨터·통신장비	3.6	-	-	3.5	17.2	15.8
전기장비	6.8	-	-	8.6	9.0	11.1
기타 기계 및 장비	5.0	-	-	3.9	1.4	0.6
자동차 및 트레일러	6.8	-	-	7.5	8.9	7.1
기타 제품	0.5	-	-	2.0	0.7	0.1

주 : 세종시 2012년 전체 제조업의 종사자수 및 생산액은 집계되지 않음.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광업·제조업 조사 ; 경제총조사(2010)」

표 3-8-3 세종특별자치시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12년			2013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서비스업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1.5	3.9	1.4	1.4	4.1	1.6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0.8	0.6	0.1	1.2	1.3	0.1
부동산업 및 임대업	23.1	17.6	11.2	24.9	17.8	16.6
사업지원 서비스업	4.3	10.2	0.8	4.9	12.0	1.2
교육 서비스업	10.9	8.6	0.6	11.5	7.7	0.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5.0	32.0	2.4	14.6	31.5	2.5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11.4	11.5	82.3	11.1	9.9	76.3
기타 개인 서비스업	33.2	15.5	1.2	30.5	15.8	1.2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전국서비스업조사」

2013년 서비스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기타 개인 서비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체수 기준으로는 '기타 개인 서비스업' 및 '부동산업 및 임대업'이 30.5%, 24.9%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종사자수 기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31.5%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생산액 기준으로는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이 76.3%로 부가가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혁신활동 현황

연구개발 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기준 연구개발비는 1,881억원으로 전국대비 0.3%를 차지하였다. 연구개발인력은 2,039명으로 전국대비 0.4%로 나타났다. 공공 연구기관 및 기업체, 대학 등을 모두 포함한 연구개발조직수는 73개로 연구개발비 및 인력과 비슷한 0.3%로 나타났다.

특허 현황을 보면, 특허출원은 267건이며, 등록은 175건으로 출원 및 등록 모두 전국대비 비중이 0.2%로 나타났다. 이는 2012년도와 비교할 때 건수는 소폭 증가하였다.

표 3-8-4 세종특별자치시 혁신활동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 건, %)

구분		2012년	2013년
연구 개발	연구개발비	- -	188,074 (0.3)
	연구개발인력	- -	2,039 (0.4)
	연구개발조직수	- -	73 (0.3)
특허	출원	219 (0.1)	267 (0.2)
	등록	131 (0.2)	175 (0.2)

주 : ()는 전국대비 비율임.

자료 : 1)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년도

2) 특허청, 지식재산통계연보, 각년도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세종시는 전국으로부터 2시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는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어 주변도시로부터의 접근성 향상과 중심성이 뛰어나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교통·물류의 중심도시로서 발돋움시키기 위해 2030년까지 총 예산 22.5조원을 투입하여 인구 80만 명(신도시 50만, 읍면지역 30만) 거주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세종시 건설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 대전, 청주, 천안 등의 주변도시와의 네트워크를 통한 명실상부한 국토의 중추도시권으로 자리잡을 것이다. 또한, 천안·아산 IT 클러스터, 오송·오창 BT 클러스터, 대덕특구의 R&D 등 충청권 산업생산과 연구개발이 밀집되어 충남·북 지역의 산업기반을 계획적으로 관리하여 충청권 발전을 유도하면 지역의 상생발전 구축은 물론 대한민국의 핵심 경제산업권으로의 부상이 가능할 것이다.

아울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거점지구(대전)와 기능지구(세종, 천안, 청주)가 조성됨에 따라 세종시는 기능지구의 역할인 기술 사업화 실현을 위한 테스트베드, 후기-연구개발(Post-R&D), 산업생산기능 등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사업화 기술지원, 응용연구, 인력양성 등을 포함하는 과학기반산업 혁신클러스터의 전초기지가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런 강점 및 기회에도 불구하고 세종시는 현재 도시 건설의 초기단계로 도시의 자족성이 상당기간 부족할 것으로 예견되며 또한, 향후 세종시 발전에 따른 인근 도시와의 격차로 인해 자치체간의 갈등이 예상되는 등 약점 및 위험요인 등을 안고 있다.

따라서 세종시의 강점 및 기회요인을 증가시키고 약점과 위험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한 주요 발전과제로 4가지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완성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선도하는 세종시의 당초 건설 목적을 살리기 위해서는 실질적 행정수도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 및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세종시는 성장동력을 갖춘 자족도시, 문화·관광과 연결된 명품도시가 되어야 한다.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을 성공적으로 건립하고 교통·물류망 및 생활기반 인프라 확충, 첨단 기업 유치를 통한 도시의 자족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정부세종청사와 호

수공원, 국립도서관 등 도시를 상징하는 랜드마크를 기반으로 국내외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

셋째, 세종시는 도농복합도시로 농촌지역이 지역경제를 상당히 떠받치고 있어 농촌 경제 활성화 사업 발굴 및 관련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세종시 읍면지역과 신도시간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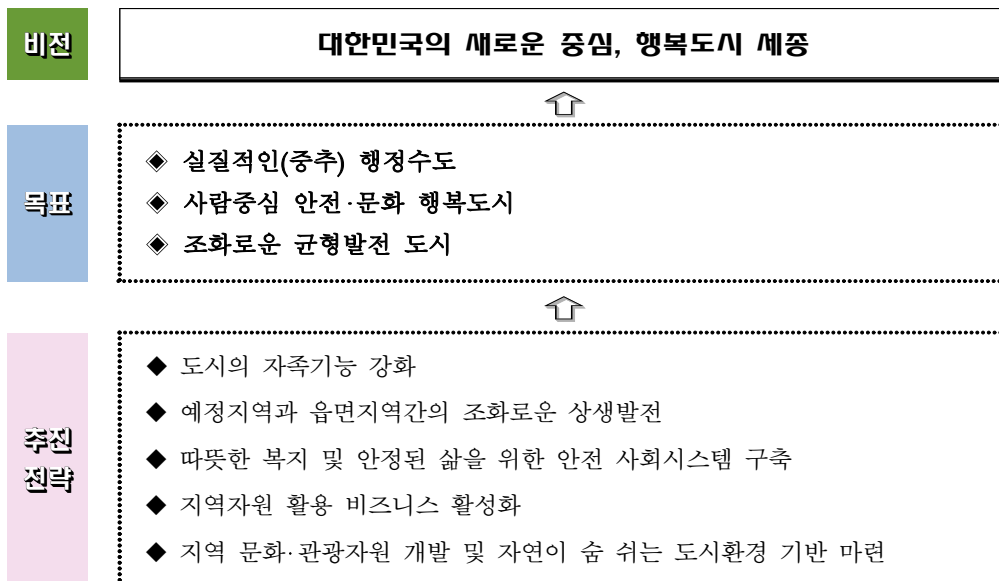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세종시와 인접도시 간 상생발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세종시의 자족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주변도시와의 기능 중복이 우려되므로 충청권광역발전계획 수립 등을 통하여 기능을 분담하거나 광역지자체간의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1. 발전비전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는 정부가 새로운 도시 건설을 통해 국내적으로는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역 간 균형발전을, 국외적으로는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담대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2030년까지 중앙행정기능을 중심으로 한 복합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추진하는 매우 상징성을 지닌 특별한 도시이다.

그림 3-8-1 세종특별자치시 발전 비전 및 추진전략



세종시는 대외적으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의 당초 취지를 살리고 대내적으로는 시민의 행복과 안녕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를 위한 최근 주요 당면과제로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 '도시 자족성 확보',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와 읍면지역간의 균형발전' 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실질적인 행정수도 지위 확보 및 정주여건과 문화·복지 및 안전 강화, 읍면지역 균형발전 등을 해결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춰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행복도시 세종'을 구현한다는 세종시의 비전을 수립하였다.

2. 추진전략

세종시는 지역발전의 비전 및 목표 달성을 위해 5대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첫째, ‘도시의 자족기능 강화’ 전략은 세종시가 도시의 자족성 확보를 위해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의 성공적 건립, 광역 및 지역차원의 교통·물류망 확충, 생활기반 인프라 확충 및 일자리 창출 지속가능한 좋은 경제 구축을 지향한다.

둘째, ‘신도시와 읍면지역간의 조화로운 상생발전’ 전략은, 세종시 읍면지역의 상대적 낙후도를 개선하기 위해 신도시와 읍면지역 간 동반성장을 위한 기능 분담 및 협력체계 토대 구축을 통하여 읍면지역의 특화발전과 협력체계 구축, 신도시와 읍면지역 간 대중교통의 확충 및 생활환경 개선 등의 도모이다.

셋째, ‘따뜻한 복지 및 안정된 삶을 위한 안전사회시스템 구축’ 전략은 저출산·고령화 등 당면한 사회적 문제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 체계 및 교육여건 개선, 국제수준의 안전도시 인증 및 도시안전 심의·감독기준 강화, 재해예방형 도시 조성 및 도시재생 등 안전 및 복지전달체계 구축 마련이다.

넷째, ‘지역자원 활용 비즈니스 활성화’ 추진전략은 세종시 농촌지역의 자원을 기반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고용 확대를 위한 세종형 3농(근교, 관광, 식품연계농업) 모델 구축 및 농가소득 보장, 농업의 산업화 촉진 등의 기반을 갖추기 위함이다.

마지막으로 ‘지역 문화·관광 자원 개발 및 자연이 숨 쉬는 도시환경 기반 마련’ 추진전략은 여가생활 여건 향상 및 창조계층 유입을 위한 세종시 문화 정체성 함양 및 관광자원 개발, 도시 어메니티 증진 및 진취적 기상의 인재 육성 등을 꾀하기 위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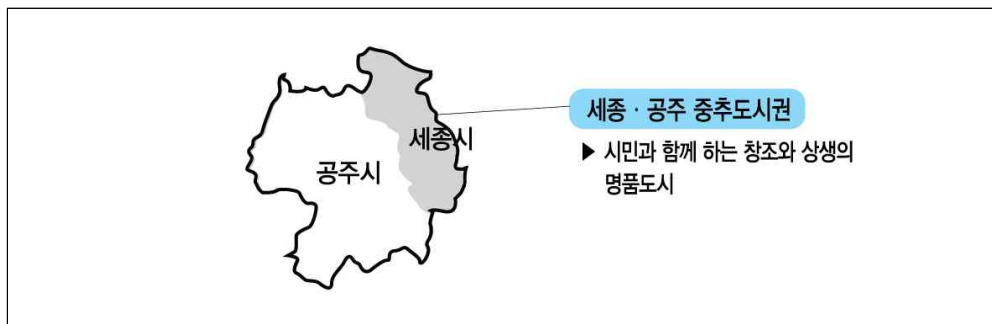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1. 지역생활권 활성화

(1) “지역행복생활권” 추진현황 및 성과

‘국민에게 행복을, 지역에 희망을’이라는 정부의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의 비전에 맞추어 행정중심도시로서의 위상 및 중앙행정 중추기능 입지, 지리적 연결함과 동시에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세종시는 공주시와 중추도시생활권 및 생활권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2014년 협의회 3회 개최) 중이다. 생활권 형성을 통해 양시 간의 협력 필요성의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양 시민의 행복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연계협력 사업 발굴 등이 진행 되고 있으나, 사업 재원조달에 그 한계가 노출되고 있다.

그림 3-8-2 세종특별자치시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2) 지역별 추진현황 및 성과

쇠퇴하는 도시기능을 재생하고 농촌중심의 거점기능을 회복하는 등의 지역 중심지 활력증진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세종시 관내 신도시와 원도심(조치원읍) 간의 조화로운 발전과 낙후지역 생활환경 개선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젊고 활력이 넘치는 도시조성을 위해서 도시재생 디자인대학 운영,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등의 도시재생(조치원읍)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조치원읍 구도심에 대한 도시경쟁력 강화 및 주민 참여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기초 자양분의 토대를 구축하였다. 또한, 중앙부처 이전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 협회 및 단체 등의 세종시 입주 수요 증가에 대응 및 경제 활성화 도모를 꾀하기 위해서 서북부 도시개발(조치원 신시가지 조성) 사업 진행을 통해서 도시개발 지정고시와 업무용지 입주수요 조사를 완료하여 개발을 위한 전초 단계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시민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기초생활인프라 확충을 통한 삶의 질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읍·면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에 대한 도시가스공급 사업(공급관 18.7km, 2,310세대 공급)을 추진하였다. 대부분 읍·면 지역은 가스 공급관으로부터 원 거리에 위치하고 협소한 도로와 사유지로 사업투자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미 공급지역이 많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는데, 본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안전하고 저렴한 청정연료인 도시가스 공급으로 주민들의 경제부담 완화 및 불편사항을 해소시켰다. 또한,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농촌 면지역에 도시수준의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면지역의 급수보급률 향상(2013년 45.4%→2014년 47.2%)시킴으로써 주민들에게 풍부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였다. 그리고 대규모 재난재해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등에서 발생하는 손상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심각해지고 사회적 안전불감증 해소를 위해서 WHO국제안전도시 인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안전도시 조례제정 및 국제안전 시범학교 1개교 선정, 안전도시위원회 발족 및 정기회 개최(3회) 등을 수행하여 인증 획득을 위한 첫 발을 내딛었다.

한편, 위험도로구조 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종고개 0.3km(400백만원) 및 부강 등곡 0.6km(452백만원)를 완공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주민불편을 해소하였으며, 세종~대전 간 광역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을 통하여 정류장안내단말기 85개소를 설치함으로써 지역의 대중교통 활성화 및 시민교통편의 등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전통시장 편의시설 확충 사업을 통해 기업형 유통업에 의한 상권 위축완화 및 소상공인의 매출증대에 기여하였으며, 가축분뇨공동화자원화 활성화 사업을 수행하여 공동화시설에 대한 개보수 지원 및 가축분뇨를 활용한 300ha(30천톤) 액비살포 및 비료생산업 등록을 완료하는 등 자연순환농업 활성화에 힘을 기울였다.

그 외에도 지역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고 마을단위 공동체의 활성화 및

지역사회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반농산어촌개발의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역량 강화 교육(6회, 참여자 82명)을 실시하였고, 이를 계기로 마을 권역단위의 주민 화합 및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주민 추진의지를 고취시켰다. 또한, 읍면소재지의 교육, 문화, 복지시설 등의 불특정 다수 주민이 이용 가능한 적정수준의 시설 유지·확충 사업을 통해 거점기능 강화 및 기초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였다. 특히, 낙후된 읍면지역 대상의 균형발전 및 지역주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조치원읍 소재지 지역정비사업을 실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역발전 및 지역 간 협력 촉진, 또는 산업 기반 조성·활성화, 주민생활 편의 등을 위해서 지역교통·물류망 확충이 필요하여 '조치원 동서연결 도로 확충' 사업을 수행했다. 동 사업은 조치원읍 내 남북축으로 형성된 경부선(충북선) 철도로 인하여 조치원역을 중심으로 원도심과 신도시 간 분리 단절되어 있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지역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동서축 연결도로 확충이 필요하여 현재 동 사업이 추진 중인 가운데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된 상태이다. 또한, 비가림 승강장 7개소 설치를 통해 시내버스 이용 승객들의 편의를 증진시켰으며, 주차난 완화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주차수급실태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관련 용역 착수를 실시하였다.

2.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자율과 협력, 융합에 기초해 지역산업을 육성하고 새로운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창조경제 기반이 필요하다. 세종시의 경우 명품도시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가산업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지역 주력산업 육성을 위해서 지역산업을 비교우위와 기술 집적도를 반영하여 선정된 2개의 주력산업인 자동차부품 및 바이오소재 분야에 대하여 연구개발 및 기술·사업화 지원사업(9개 과제에 9개 기업 및 9개 기관에 총 41.7억원 투입)을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서 역량 있는 지역기업과 충청권 혁신기관의 사업 참여 독려를 이끌어내는 동시에 고용창출의 실마리를 푸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시의 주요 특산품인 복숭아와 구절초를 이용한 고기능화장품 및 건강기능식품 개발·사업화 지원(특화 상품화 및 관련기업(4개 기업))을 통해 특화자원과 화장

품제조업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제품개발 및 고용창출, 매출 증대를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밑거름이 되었다. 아울러, 세종시 출범 이후 30~40대 인구 유입이 증가하면서 신도시를 중심으로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고용대책 수립과 직업훈련시설 및 훈련과정 부족 등으로 취업이 제한적이어서 지역산업 수요에 맞는 인력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훈련도입 등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지역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자치단체 주도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의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지역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을 추진(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2개 과정 운영, 산업단지 중소기업의 고용실태 분석 및 공공취업지원 활동 활성화 연구, 일자리공시제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컨설팅 운영, 세종고용포럼 4회 운영 등 수행)함으로써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기업들에게 상당한 도움을 제공하였다.

한편, 지역에 대한 투자 기피 현상에 대응하고 국내 복귀 기업의 투자수요를 지역 투자로 연계 시키거나 경쟁력이 취약한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판로 개척 등 지역 투자 촉진 기반 확대가 필요하다. 세종시 관내기업 672개(2014년 기준) 중 90%인 607개 기업이 소기업으로 부설연구소 설치 및 기술개발 인프라가 부족하며, 대다수 기업이 R&D사업에 최초로 참여하는 기술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이기에 기술개발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사업 관련 첫걸음 R&D 사업 4개 과제 및 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대학, 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개발 인프라를 활용하여 혁신기술의 사업화 촉진 및 기술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능력을 제고하였다. 또한, 지역투자 촉진기반 확대 관련하여 관내기업 중 7%만이 수출기업으로 대다수 기업의 상품 판매가 국내시장 비중이 높은 관계로 해외시장에 대한 관심과 수출기업으로 전환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에 중소기업 대상 수출산업 해외 마케팅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기업의 해외 진출역량 강화 및 수출 증대를 목적으로 무역사절단 4회(10개 기업 참여) 운영 및 타 지자체와 공동 마케팅 1회 등을 통하여 수출계약 15백만 달러를 달성하였다.

그 외에도 지역기반 연구 활성화로 창조경제 지역확산 관련하여 세종시 청사 및 세종시교육청 등 주요행정기관 이전에 대비하여 원도심 공동화 방지 및 세종시 이전 중앙행정기관의 유관기관·공동단체 등을 유치하여 인구유입,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촉진하기 위해서 세종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다. 현재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

계획 인가 및 건축심의회가 통과된 상태이며 세종비즈센터 입주예정기관 90%를 실현하였다. 또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에 대한 과학 및 기술 사업화의 선도거점으로 육성 발돋움하기 위해서 추진 중인 SB(Science Biz)플라자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연구조사를 완료하였다.

마지막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농업인 종합교육관신축 관련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귀농 귀촌인 및 지역 농업인의 농업기술 수요 증가에 대한 단계적 대응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선도적 농업리더 홍보 및 지역농업 인력자원 발굴, 선도적 농업리더 간담회 개최 등 농업인의 역량 강화를 통한 농촌지역 소득증대 사업을 모색하였다.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지방 초중고교 교육여건 개선과 관련하여 농촌 초·중학교 ICT지원, 농촌 거점별 우수 중학교 육성, 초등방과후 돌봄시설 확충 및 개선 등 3개 사업을 추진하였다. 첫째, 세종시의 농촌 초중학교 ICT 사업의 경우 신도시에 비해 읍면 농촌지역은 노후화된 학교시설, 부족한 교원 등으로 학생들의 교육환경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농촌의 소규모학교를 대상으로 ICT(스마트기기, 무선 인터넷) 구축 및 스마트 멘토링 지원, 스마트학교 전면 구축 및 1~2실 구축교의 특수학급 스마트교실 환경 등을 조성하여 농촌학교 학생들의 ICT 콘텐츠 활용을 통한 자신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양질의 학습 환경을 제공하였다.

둘째, 농촌 거점별 우수 중학교 육성사업은 도농간의 교육기회 균등 및 격차 해소, 농어촌 학교시설 개선을 통한 교육품질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관내 농촌 거점별 우수 중학교 육성 사업을 통해 자유학기제, 진로교육 활성화, 학교 스포츠클럽, 학생 오케스트라 운영, ICT 활용프로그램, 외국어 친화프로그램 학력 UP프로그램, 행복하교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였다. 또한, 농촌 지역의 학생 수 감소 및 학교 소규모화의 악순환을 막고 학생들에게 질 좋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관내 중학교를 집중·육성함으로써 학생은 물론 학부모의 만족도를 향상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마지막으로 초등방과후 돌봄시설 확충 및 개선 사업은 지역 내 28개교에 대해서 초등 방과후 돌봄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여 돌봄 강사 51명 및 884명 학생이 참여하여

학부모가 자녀들을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특히,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학생들에 대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학부모들의 자녀 양육 환경 조성에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한편, 100세 시대 지역평생학습체제 구축 관련하여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을 진행하였다. 모든 주민이 전 생애에 걸쳐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추진을 통해 평생교육프로그램 120종, 22,750명이 참여를 하였다. 특히, 공모사업 및 특강 등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주제의 프로그램을 제공하였고, 도서관 접근이 어려운 학습자를 위한 ‘찾아가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공간부족 및 교육시스템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다양한 계층의 평생교육 수요 증가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대응하였다.

그 외에도 일과 학습병행을 통한 지역인재 육성 관련하여 특성화고 취업준비 지원 강화 사업을 수행하였다. 지역 내 특성화고 취업지원 기능 및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산업현장 직무수행에 필요한 수업내용 및 수업방법 개선 노력 확산 등을 통해 특성화고 취업률이 2013년도 38.4%에서 2014년도 39.6%로 증가하였다. 예를 들어, 학년별 취업준비 프로그램 운영으로 취업역량을 강화시켰고, 현장실습과 우수 훈련기업 연계 강화로 취업률 및 취업유지율을 제고하는 한편, 산업현장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직업기초 역량 강화를 위한 수업내용을 개선시키는 등 현장에서 요구하는 산업인력의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4. 지역 문화 육성, 생태복원

세종시는 관내 맞춤형 문화서비스를 통한 문화격차 해소 차원에서 관내 공동도서관이 2개소에 불과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소규모의 독서문화기반 시설인 작은도서관 확충 사업을 추진하였다. 소정도서관 개관 등 관내 9개의 작은 도서관에 대한 지원 및 조례 제정을 통하여 작은도서관 조성 활성화 기여를 토대로 새로운 복합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았다.

아울러, 지역실정에 맞는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선정하거나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가정주부, 청소년 등 체육활동 소외계층 시민이 참여하는 생활체육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아마추어 생활스포츠 집중 육성사업 추진을 통해 기금사업으로 12종 106개소 4,802회 운영(65,972명) 및 자체사업으로 10종 94개소 2,282회를 운영(22,442명)하였다. 특히, 체육지도자 배치를 통하여 프로그램 보급 및 현장지도, 노인시설 방문 생활체육 지도 등을 통하여 노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 계층의 건강하고 활력 있는 맞춤형 생활체육을 보급하여 주민들의 기초 체력 향상을 도모하였다. 또한, 세종시 내 낙후된 지역의 개발에도 노력을 경주하여 부강면의 열악한 생활 체육시설 개선·확충을 통하여 건강한 여가 체육공간 조성 및 주민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부강생활체육공원 조성을 추진 중인 가운데, 공원 조성 관련하여 부지 매입(45억원) 및 주민의견 청취 설명회 개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한편,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는 개별 생태계의 고유성과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것만큼이나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태계와 자연환경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활용하는 일 또한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세종시 관내 생태·자연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하여 생태적 활용가치가 우수한 고복저수지를 생태공원으로 조성 중인 가운데, 2·3단계의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었고, 총 22억 원을 투입하여 연꽃식물원 7,525m² 및 수변관찰로 124m×1식을 완공하였으며 전체 공정 중 현재 70%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추후 생태공원 조성이 완료되면 체험 교육장 및 관광자원 등으로 활용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지역특성에 맞는 복지전달체계 구축과 민관 연계 강화를 통해 지역복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다문화가족지원 및 지역아동센터 운영 사업을 추진하였다.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의 경우 복지사각지대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기존 복지전달체계의 한계 인식 및 급격한 인구유입에 따른 지역 내 복지수요 증가와 복지욕구의 다양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읍면동 복지기능 강화사업의 일환으로 방문상담 1,255건, 취약계층 발굴 729건, 사례관리 선정 83건, 서비스연계 775건 등 현장중심 복지서비스 강화 및 취약계층 발굴 지원에 중점을 맞췄으며 욕구별 맞춤서비스(정보 및 상담)를 제공하여 주민 복지체감도가 향상되었다. 또한,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생활을 위해 가

족 및 자녀교육, 성평등, 인권 상담, 통번역 및 정보제공, 역량강화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한국어방문 및 집합교육, 취업연계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언어 발달지원사업, 통번역 서비스사업(2,619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424건) 등을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사회경제적인 자립에 기여하였다.

아울러, 세종시 신도시 지역 내 인구증가로 인해 저소득층 아동 및 맞벌이 부부 아동 등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아동 수요 증가가 요구되는 실정이기에 지역아동센터 운영 사업을 통해 아동센터 1개소(풍성한 지역아동센터) 및 중촌동(1·3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내 공립형지역아동센터 공간을 마련했다. 또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으로 복합커뮤니티(도담동, 중촌동, 아름동) 내 어린이집 3개를 개소하였다.

그 외에도 지역의 공공의료 취약지역은 의료서비스 여건이 취약하기 때문에 취약지역 응급의료체계 및 응급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주민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였다. 세종시는 인근 대도시와 인접하여 교통이 편리하여 응급환자 발생시 대전, 천안, 청주 등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을 선호함에 따라 매년 3,000여명의 응급환자가 타 지역으로 이송되고 있어 신속한 환자진료를 위한 지역 응급의료기관이 시설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에 응급의료시설 2개소 및 평일 야간진료기관 1개소를 지정·운영하였고 심폐소생 등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1,042명) 등을 수행하여 지역상황에 맞는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해 나감으로써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였다.

제4절 향후 추진계획

세종시의 2015년도 및 향후 연도는 2014년도에 기 수립된 지역발전의 비전 및 목적, 추진전략, 사업계획 등의 청사진을 토대로 시민들이 행복한 세종시 건설을 위해서 본격적인 닳을 올리는 시기이다. 이에 세종시의 지역발전 비전의 목표로 설정된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 중앙부처 및 국책연구기관 3단계 이전 완료에 따른 정착은 물론 서울에 남아 있는 중앙부처의 세종시 이전 및 국회분원, 청와대 제2집무실 세종시 설치에 노력을 경주할 예정이다.

둘째, 도시 및 주민 안전과 관련하여 안전도시 만들기(국제안전도시 공인, 도시시설물 통합관제, 생활안전 강화) 및 선제적 재난 대응체계 구축(소방차 현장출동 제고, 살림화재 조기감지시스템 구축), 재난안전 인프라 구축(재난안전실과 119 종합실 통합, 첨단장비 도입) 관련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문화와 관련해서는 문화인프라 확대(시민대학 집현전 운영, 도서관 확충, 문화재단 설립준비 등) 및 친환경 도시구현(생태공원 조성, 전원주택 조성, 자전거이용 활성화) 등을 수행하여 '사람중심 안전·문화 행복 도시'의 목표를 지향할 계획이다.

셋째, 청춘조치원 프로젝트 구도심 활성화, 세종시형 로컬푸드 운동 본격 추진, 농업과 ICT가 융합된 창조마을 조성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편리하고 안전한 미래형 도시·교통 체계 구축을 위해서 도시관리계획 정비 및 난개발 대책 실시(개발행위 제한구역 지정, 성장관리방안 마련), 대중교통체계 혁신(운행기록 전산화, 서비스평가, 벽지노선 소형버스 확대 등), 도시기반 시설 확충(생활기반시설 확충, 상수도 및 도시가스 보급 확대 등) 등을 수행할 것이다.

넷째, 투자유치 확대 및 전략산업 육성 도모를 위해서 투자유치단 운영,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등으로 기업 유치, 전략산업 육성(자동차부품, 바이오) 및 산단조성(도시첨단, 미래, 명학 등), 관광산업 활성화(세종축제 명품화, 호수공원 활용, 함강오토캠핑장 개선 등)를 추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복지정책 강화(복지기준 마련, 행복드림센터 확대, 종합복지지원센터 개관 등), 복지서비스 확대(공공급식 확대, 시립의원 운영 개선 등), 사회적 약자 복지지원 강화(노인일자리 확대, 출산장려금 확대, 청소년수련관 건립) 관련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따뜻한 복지, 시민이 골고루 행복한 세종복지 구현에 앞장서 나갈 계획이다.

제9장 경기도

제1절 경제 현황

1. 일반 현황

경기도의 인구는 2013년 기준 1,224만명으로 2010년에 비해 45만명 증가하였다. 지역내총생산(GRDP)은 2010년 267조원에서 297조원으로 증가하였으며, 1인당 GRDP는 2,593만원으로 나타났다. 수출액은 2010년 857억 달러에서 19% 증가한 1,020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취업자수는 2010년 567만명에서 599만명으로 증가하였다. 재정자립도는 71.6%로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하였으며, 전국에서 서울 다음으로 높았다.

표 3-9-1 경기도 경제 일반현황

구분	전국			경기		
	2007년	2010년	2013년	2007년	2010년	2013년
지역내총생산(십억원)	1,151,843	1,265,146	1,376,143	229,682	266,562	297,215
인구(천명)	49,269	50,516	51,141	11,106	11,787	12,235
1인당 GRDP(만원)	2,147	2,561	2,842	1,928	2,303	2,593
수출액(백만달러)	371,489	466,384	559,632	64,605	85,706	102,005
취업자(천명)	23,433	23,829	25,066	5,398	5,673	5,988
재정자립도(%)	53.6	52.2	51.1	74.9	72.8	71.6

주 : 지역내총생산은 2010년 기준가격임.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2. 산업 현황

경기의 산업구조는 지역내총생산액 기준으로 서비스업 60.8%, 제조업 38.1%, 농림어업 1.1%, 광업 0.1%로 나타났다.

2013년 제조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업체수 기준으로는 '기타 기계 및 장

비가 14.9%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금속가공제품',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등 순이었다. 종사자수 및 생산액 기준으로는 '전자부품·컴퓨터·통신장비'가 각각 23.8%, 35.0%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기타 기계 및 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금속가공제품' 등의 종사자 수 및 생산액 비중이 높았다.

표 3-9-2 경기도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07년			2010년			2013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제조업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식료품	4.5	5.3	5.2	4.5	5.3	4.7	5.0	5.5	5.0
의복, 의복액세서리	2.0	1.3	0.5	1.8	1.1	0.4	1.8	1.0	0.4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10.8	8.2	5.5	10.6	8.3	5.5	11.1	8.4	5.7
금속가공제품(기계·가구 제외)	14.3	9.3	5.9	14.6	9.3	5.6	13.9	8.7	5.1
전자부품·컴퓨터·통신장비	9.1	23.1	31.1	9.0	23.2	33.9	9.3	23.8	35.0
전기장비	7.8	6.9	5.3	7.7	6.7	5.3	7.5	6.4	4.9
기타 기계 및 장비	14.0	11.0	7.8	14.4	11.6	8.8	14.9	11.9	8.3
자동차 및 트레일러	3.5	8.3	12.0	3.7	8.1	11.4	3.7	8.2	12.9
기타 제품	1.7	1.1	0.5	1.8	1.1	0.5	1.7	1.1	0.5

주 : 2010년은 경제총조사 자료임.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광업·제조업 조사 ; 경제총조사(2010)」

표 3-9-3 경기도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07년			2010년			2013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서비스업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0.7	2.2	5.1	0.6	1.6	4.1	0.9	1.9	5.6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4	5.2	13.8	1.7	5.7	18.6	2.3	6.8	19.4
부동산업 및 임대업	21.1	15.2	20.4	17.1	10.0	19.2	17.7	11.0	16.6
사업지원 서비스업	3.0	11.6	6.7	3.2	10.6	5.7	4.3	16.9	8.3
교육 서비스업	17.6	16.4	9.4	18.0	29.5	18.1	17.4	12.8	7.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1.8	22.4	18.4	11.9	19.9	13.4	14.8	27.0	21.4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12.7	10.2	15.7	10.9	7.1	12.3	11.6	8.8	11.5
기타 개인 서비스업	31.7	16.8	10.5	36.6	15.8	8.6	31.0	14.9	9.7

주 : 2010년은 경제총조사 자료임.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전국서비스업조사 ; 경제총조사(2010)」

2013년 서비스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업체수 기준 '기타 개인 서비스업'이 31.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종사자수 및 생산액 기준으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27.0%, 21.4%로 가장 높았다. 그 외에도 '부동산업 및 임대업', '교육 서비스업'의 업종 비중이 높았다. 2007년과 비교할 때 '부동산업 및 임대업'의 비중이 전반적으로 낮아진 반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비중은 다른 업종에 비해 증가한 것이 특징이다.

3. 혁신활동 현황

연구개발 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기준 연구개발비 27.3조원, 연구개발인력 179,708명, 연구개발조직수 9,169개로 전국에서 경기도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국대비 비중 변화는 2007년에 비해 연구개발비, 인력, 조직수 모두 증가하여 경기도의 연구개발 활동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허 현황을 보면, 2013년 기준으로 특허출원은 50,234건이며, 등록은 26,558건으로 전국대비 비중은 각각 31.4%, 27.8%로 나타나 출원 건수는 전국에서 가장 많았으며, 등록 건수는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2007년 대비 출원 건수는 전국대비 비중이 0.9%p 하락하였으며, 등록 건수는 9.1%p 하락하였다.

표 3-9-4 경기도 혁신활동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 건, %)

구분		2007년	2010년	2013년
연구 개발	연구개발비	12,264,639 (39.2)	18,312,936 (41.8)	27,309,456 (46.1)
	연구개발인력	120,273 (28.5)	145,922 (29.2)	179,708 (31.6)
	연구개발조직수	3,572 (28.8)	5,486 (30.7)	9,169 (33.2)
특허	출원	41,598 (32.3)	39,208 (29.7)	50,234 (31.4)
	등록	16,302 (36.9)	16,302 (31.7)	26,558 (27.8)

주 : ()는 전국대비 비율임.

자료 : 1)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년도

2) 특허청, 지식재산통계연보, 각년도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현 정부가 경제도약의 핵심동력으로 창조경제화 전략을 추진 중인 가운데, 경기도는 창조경제의 인적·물적 자원이 집중된 대한민국의 중심지이며 현 정부의 경제정책 목표에 가장 부합하는 핵심요충지이다. 경기도는 정보기술(IT)을 중심으로 첨단 산업 기반이 잘 갖춰져 있으며, 국가 중추 교통망의 수혜지역으로 국제공항, KTX, 고속도로 등 우리나라의 중추 교통시설과 교통망이 경기도를 경유하거나 인근에 입지하여 이를 활용한 경제효과가 매우 크다. 또한 서해를 사이로 가깝게 마주하고 있는 중국과의 경제권 강화로 경기도의 입지적 역할이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판단되며, 전자,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대중국 무역의 핵심산업 클러스터가 경기 남부에 포진하여 한국의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지로서의 역할이 부각될 것이다.

현재 경기도가 직면하고 있는 현안을 해결하고 중장기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분야별 주요 발전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내수 부진을 해소하고 가계소득을 높일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이 요구되며 지속적인 저성장 기조를 극복할 수 있는 경제성장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우선 시장경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사회적 경제의 육성과 함께, 시장경쟁에 밀려 위축되고 있는 서민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정책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고 취약계층 등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여, 소득부진과 가계부채로 위기에 처한 서민경제에 희망을 찾아주는 정책적 대안이 요구된다. 또한 경기도의 지역적 여건에 부합한 창조경제와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의 성장률이 점진적으로 회복되어야 한다.

둘째,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기 동북부 지역에 대한 우선적 개발·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 과도하고 중첩된 개발규제와 지역간 불균형으로 인해 동북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은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경기도의 자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제한이 우려된다. 이에 경기도에 집중된 과도한 중첩규제는 선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 또한 지역맞춤형 지역활력 시책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지역행복생활권 사업 등 국비지원사업이 적극 유치되어야 한다.

셋째,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복지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사회보장 체

계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한편 지역공동체 기반의 복지자원을 활용한 사회안전망 강화가 필요하다. 이에 지역공동체와의 협업을 기반으로 한 무한돌봄 복지를 보다 강화하여야 하며 경기도형 공동체 복지 전달체계의 보다 견고한 구축 등이 요구된다. 또한 도민들의 보건환경 개선을 위한 지역맞춤형 안심건강정책의 확대도 필요하다.

넷째,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다각적 정책과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 최근 대형 복합재난의 증가로 효과적 컨트롤 타워와 신속한 현장대응능력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경기도는 현재까지는 효과적 대응시스템 구축과 안전 인프라 등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현장 중심의 스마트한 재난안전 시스템 구축과 소방·의료지원 전문인력 및 장비 등의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

다섯째, 새로운 부동산 환경에 맞춘 주택정책 추진이 요구된다. 최근 1~2인 가구 증가 및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별 수요자가 원하는 주택 유형 및 규모, 점유형태 등을 고려한 공공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 또한 국민주택기금의 지자체사업 활용권한을 보다 확대해야 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공공택지사업에 대해 과감한 구조조정을 추진하여야 한다. 아울러 정부의 행복주택 공급정책에 발맞추어 도시내 미활용부지, 도시재생용지, 공기업 보유 토지, 도유지 등에 적극적인 공공임대주택 건설이 요구된다.

여섯째, 대중교통 서비스 환경 개선과 광역교통인프라의 확충이 필요하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고 교통사각지대를 해소하며, 광역버스의 효율적 조정과 광역교통개선 대책수립이 요구된다. 또한 중앙정부의 조속한 국비 지원을 통한 광역급행철도(GTX) 사업 추진과 광역기능의 철도인프라 개선을 위한 도내 주요구간의 복선전철 건설이 속히 진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자체 중심의 남북 교류협력 확대가 필요하며 이에 남북관계에 민감하지 않은 지자체 교류협력 사업이 발굴·추진되어야 한다. 남북관계에 영향을 덜 받는 지속가능하고 상호이익이 되는 경기도 특색의 남북교류협력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말라리아 방역 등 보건의료사업과 영·유아 등 취약계층 식량지원, 묘목재배 등 산림녹화, 농업협력사업 등 성과가 많은 사업은 성공 경험을 확대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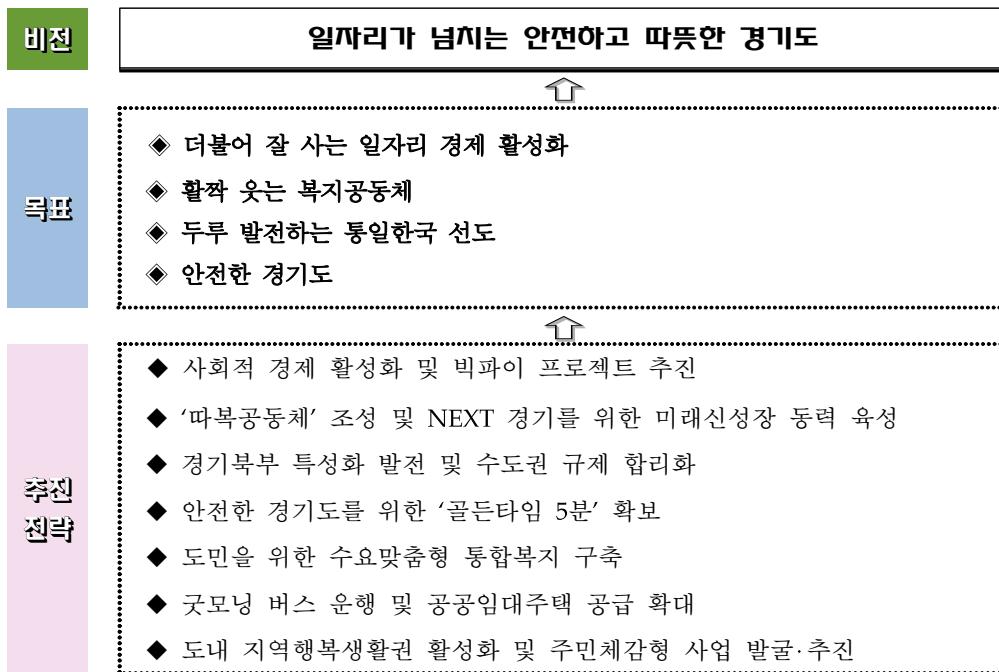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1. 발전비전 및 목표

민선 6기 경기도는 현장, 소통, 통합, 데이터 기반의 도정 혁신을 추구하고 지역·정파를 넘어 도민 모두가 화합하고 행복한 연정(聯政)을 통해 “일자리 넘치는 안전하고 따뜻한 경기도”를 만들고자 한다.

이에 경기도는 ‘더불어 잘 사는 일자리 경제 활성화’, ‘활짝 웃는 복지공동체’, ‘두루 발전하는 통일한국 선도’, ‘안전한 경기도’를 4대 목표로 선정하였고, 일자리 70만개 창출 등 24개의 도정 전략과 이를 위한 200여개의 주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향후 경기도만의 중장기적 성장기틀을 마련하여 대한민국의 중추적 성장동력이자 글로벌 스탠더드가 되고자 한다.

그림 3-9-1 경기도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2. 추진전략

경기도는 도정 비전과 주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분야별 세부 추진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전략별 중점사업을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목표별 전략 및 사업 등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더불어 잘사는 일자리 경제 활성화’와 관련하여 청년·여성·장년층·근로빈곤층 등 고용 취약계층의 고용 가능성을 제고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따복마을 확산 추진을 통해 중산층과 서민경제를 지원한다. 아울러 경기도형 창조경제와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을 발굴·육성하여 국가·지역경제 성장률의 점진적 회복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도시권은 특성화된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 농정혁신을 통해 농업·농촌의 새로운 발전기회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따복공동체 조성’, ‘빅파이 프로젝트’, ‘NEXT 판교 조성’ 등의 세부 사업들을 추진 중에 있다.

둘째, ‘활짝 웃는 복지공동체’와 관련하여 지역공동체와의 협업을 기반으로 무한돌봄 복지 및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경기도형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며 도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보건인프라와 서비스를 점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서민 주거복지 향상과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임차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자 한다. 여기에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직접 찾아가는 다양한 문화활동을 전개하여 소외지역 문화복지 확대를 도모하며, 생활전문 체육의 균형발전을 위해 체육시설 인프라 공급을 확충할 예정이다. 이에 대한 세부 사업으로 ‘안산정신건강 트라우마센터 건립’, ‘어린이집 개보수지원’, ‘찾아가는 문화예술지원’,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하고자 한다.

셋째, ‘두루 발전하는 통일한국 선도’와 관련하여 경기북부 발전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경기북부 10개년 발전계획 및 반환공여구역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전략적인 개발 추진을 시행하며 북부지역 특화산업 경쟁력 확보 및 신성장산업 육성을 추진한다. 또한 효율적인 광역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도민들에게 편안한 아침 출근길을 제공하기 위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며 도로·철도망의 지속적 확충과 혼잡구간 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지자체 중심의 남북 교류협력 사업 추진과 전국 남북교류협력 기반을 마련코자 한다. 이에 대한 세부사업으로 ‘굿모닝 버스 운행’, ‘경기

북부 융복합 창업 클러스터 조성', 'GTX 등 철도 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하고 있다.

넷째, '안전한 경기도'와 관련하여 안전측면에서는 재난·응급대응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재난 의료지원 전문인력 및 장비 확보, 효과적 대응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대형 복합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 신설을 추진한다. 또한 생활주변의 위험·위협·위해요소를 제거하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생활안전망 만들기를 추진하려 한다. 이에 대한 세부 사업 및 전략으로 '현장 중심 스마트 재난안전 시스템 구축', '범죄사각지대 CCTV 및 비상벨 설치', '어린이 안심하굣길 만들기' 등이 추진 중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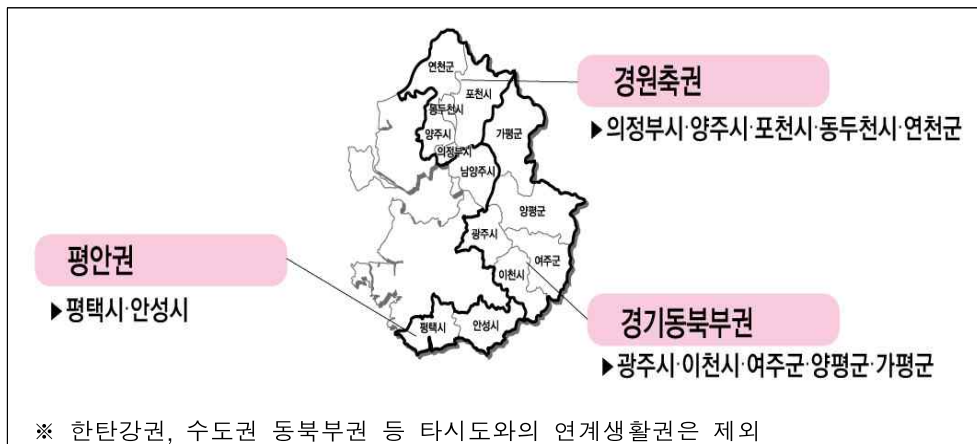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1. 지역생활권 활성화

(1) 지역행복생활권 추진현황 및 성과

현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핵심모델인 ‘지역행복생활권’과 연계하여 경기도에서는 2014년 5월 총 6개 생활권이 구성되었다. 도내 낙후지역인 동북부가 우선적으로 생활권을 구성하였으며 수도권이라는 지리적 연접성으로 인해 서울·인천과 각각 시범생활권을 구성하여 지역적 특성에 부합한 연계협력을 추진 중에 있다.

그림 3-9-2 경기도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경기도의 경우, 구성된 도내 생활권 가운데 동북부 생활권 등 대부분의 생활권이 선도사업을 포함한 지역발전위원회 주관 사업들에 선정되지 못했으며, 규제개선 중심의 비예산사업 추진도 잠정적으로 보류되어 생활권 정책의 효율성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중앙정부에서는 동북부 낙후지역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관점에서 사업 선정 등의 지원이 요구되며 향후 정책 추진과정에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이분법적인 정책기조에서 벗어나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표 3-9-5 경기도 지역행복생활권별 비전 및 추진전략

구분	비전	추진전략
경원축권	미래 성장 동력 신산업의 거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섬유산업 등 특화산업 육성 · 경기북부 정주여건 확충
경기 동북부권	수도권의 힐링권역으로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지역 문화시설 및 복지시설 확충 · 고부가가치 친환경 농업 육성
평안권	전통과 첨단이 공존하는 생활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체감형 공공서비스 연계 추진 · 농업규모 확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
한탄강권	생명과 역사가 숨쉬는 생활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탄강 물길 산책로 조성 · 지역연계사업(축제, 홍보 등) 추진
수도권 동북부 시범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자족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자원 활용한 쾌적한 전원도시 기반조성 · 서울과 경기도간 연계협력 사업 발굴 추진
인천 시범권	인천과 부천의 행복공동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단지식 및 물류교통 네트워크 강화 · 경제, 문화 등 교류, 협력 촉진

(2) 지역별 추진현황 및 성과

‘지역생활권 활성화’에 대한 추진현황 및 주요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민들을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 및 친환경 주거공간 조성을 추진하였다. 우선 서민 주거안정과 안전한 주거공동체 조성을 위해 영구·국민 등 공공임대주택 1.6만호를 공급하였고 도심내 매입·전세임대주택 8천호를 공급하였다. 또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167개 단지)을 실시하였고 햇살하우징 추진을 통해 85호가 수혜를 받았으며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여 맞춤형정비사업으로 약 121억원의 국비를 확보하였다.

둘째, 대중교통 서비스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도민들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우선 버스정책 분야에서는 광역버스 좌석제 교통대책에 관해 관계기관과 협의 시행하였고 광역버스를 348대 증차(2014년 11월 기준)하여 출근길 혼잡을 개선하였으며 수도권 통합요금제 운영 활성화로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증진하였다. 또한 광역버스 환승거점 정류소 20개소의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벽지노선버스 운행을 확대하였으며 도내 6개시에 버스 공영차고지 건설을 지원하였다(계속4, 신규2). 또한 택시산업 발전기반 조성을 위해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택시업계 경영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

셋째, 도민들에게 맞춤형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도 도모하였다. 우선 수도권 주요도로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을 위해 교통정보서비스 제공 구간을 확대(4,294.3km→4,386.7km/92.4km 증가)하였으며, 지금·진건지구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였다. 또한 다양하고 편리한 버스도착 안내 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 전국 최초로 광역급행버스(M버스) 빈자리정보를 제공(21개 노선 304대)하였으며 도내 버스정류소 안내전광판을 확대 설치(8,658개소→9,239개소)하였다. 이외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475대를 도입하였고 도내 8개 시·군에 저상버스 도입을 지원하였다.

2.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대한 추진현황 및 주요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자리 중심 도정운영을 통하여 2014년에 일자리 238천개를 창출하였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대 규모이며 전체 일자리 창출 가운데 약 45%를 차지한다. 경기도는 일자리 70만개 창출을 위해 중앙정부와 상생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맞춤형 인력양성 시범 사업 및 고용환경 시범 사업을 성공적 추진하였고 전국 최초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시범사업을 유치하였다.

둘째, 수요자 중심의 계층별 취업지원을 추진하였다. 이에 일자리 현장상담, 구인·구직자 맞춤형 서비스 등 일자리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재정지원을 통해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교육훈련을 지원하였으며 ‘맞춤형 10 to 4 시간제 일자리’, ‘슈퍼맨 펀드 조성’, ‘4050 여성 취업 성공지원’ 등의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였다.

셋째, 도내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맞춤형 기업지원을 추진하였다. 이에 G-STAR 기업(22개사) 지원 등 강소기업육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였고, 기업현장 애로 해소를 위해 수요자 중심의 현장행정을 구현하였으며, 중소기업 육성자금(14,789억원) 및 신용보증(18,893억원) 공급으로 경영안정을 도모하였다. 또한 섬유원자재센터(2014년 6월) 건립, 기술개발 등 섬유산업 집중 육성 등을 추진하였고,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14회, 145개사)하고 및 해외 G-FAIR 개최(4회, 155개사) 하였으며, FTA 활용 극대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2014년 3월)하였다.

넷째, 전통시장 육성·소상공인 창업지원 등 서민경제 활력제고에 노력하였다. 우선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상인역량 강화, 청년 상인 발굴 오디션을 운영하였고, 소상공인 전문컨설턴트의 멘토링-네트워킹-모니터링을 통한 맞춤형 환경개선 지원과 창업 지원(창업아카데미 3,030명)을 실시하였다. 또한 저소득·저신용 금융소외 계층을 위한 서민금융 안정화를 위해 지원센터 3개소를 운영하여 총 51,657건에 421,617백만원의 햇살론을 지원하였다.

다섯째, 지속성장 가능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사회적경제허브를 구축하였다. 이에 창업→성장→사후관리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연도별 우선구매를 실시(674억원, 9.3%)하였고, 협동조합 컨설팅 지원을 위해 경영·인사·회계분야 전문가 자문단(42명)을 구성·운영하였다.

여섯째, R&D 및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으로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견인하였다. 우선 글로벌 R&D 혁신클러스터 구축·운영하였으며, 차세대 바이오·헬스산업 및 첨단 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를 지원하였다. 여기에 수요자중심 기술개발 및 연구를 지원(총 391억원 : 국비 63억원, 도비 154억원, 기타 174억원)하였으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지원하였고 MICE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행사 유치·개최를 하였다.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에 대한 추진현황 및 주요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일·삶」이 조화로운 평생교육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다. 우선 사회·교육적 소외지역에 평생교육 촉진을 위한 경기 행복학습마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약 32,519명이 교육수혜를 받았으며,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을 통해 지역인재를 발굴·양성하여 학습·일·복지문화가 선순환 되는 학습생태계를 조성하였다. 또한 꿈나무 안심학교를 운영하여 저소득·맞벌이가정 자녀에 대한 방과후 학교밖 돌봄과 교육을 통해 보육부담 완화 및 사회안전망 확충에 힘썼고, 성인장애인 평생교육과 장애유형에 따른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으로 취·창업 교육지원 등 자립기반을 마련하였다.

둘째, 대학유치와 협력 활성화를 통하여 대학교육 역량을 강화하였다. 경동대학교

양주캠퍼스 개교하고,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최초로 예술대학을 유치하여 약 2천여 명의 입학정원을 확보하였다. 또한 대학생과 취약계층을 연계한 맞춤형 학습 제공을 위해 평생학습 대학생코치 파견사업을 추진하여 약 900여명이 수혜를 받았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확대를 위한 유학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에 노력을 경주하였다.

셋째, 도서관 시설 건립 및 지원을 통해 공공지식서비스의 제공을 강화하였다. 우선 12개 시·군에 공공도서관 건립을 지원하였으며 2013년~2014년간 총 19개 도서관이 개관하였다. 또한 디지털 정보 기반 확충을 통한 독서 기회 확대를 위하여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을 운영하여 약 41만명이 혜택을 봤으며, 통합도서관서비스시스템 구축·운영하여 도민들이 전국 도서관을 공동 이용할 수 있는 지식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였다.

4. 지역 문화 육성, 생태복원

‘지역 문화 육성, 생태복원’에 대한 추진현황 및 주요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복지를 실현하였다. 우선 도내 경제적·사회적 소외계층에게 문화·관광·스포츠관람을 할 수 있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을 시작하여 약 19만명 도민들이 문화복지서비스를 누리게 되어 문화격차를 점진적으로 보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도민들의 직접적인 문화체감 지원을 위해 현장으로 찾아가는 ‘거리로 나온 예술’ 공연을 835회 이상 실시하였으며 창작센터 숙박형 창의예술캠프와 1박 2일 뮤지엄 캠프 등을 운영하여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제공하였다. 여기에 디지털 만화유통지원 플랫폼 구축(부천 등), 슬로시티 팜아트 식도락 문화마을 조성(남양주 등), 자라섬 뮤직 스튜디오 조성(가평) 등을 추진하여 도민 문화향유 기반 조성 및 활성화를 확대하였다.

둘째, 문화콘텐츠 창작지원 및 창업생태계 조성을 통한 창조경제 실현에 노력을 기울였다. 우선 ‘경기문화창조허브(2014년 5월 19일)’ 및 ‘경기 콘텐츠코리아 랩(2014년 9월 29일)’을 설립·운영하여 신규 창업 94건, 일자리 창출 373개, 스타트업 지원 1,019건의 성과를 나타냈다.

셋째, 전문체육 위상제고 및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추진하였다. 도민 생활밀착형 체

육시설 찾아가는 생활체육 강좌를 개설하고, 지역아동센터 스포츠클럽을 운영하며 시설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체육시설 인프라를 확충하였다. 이를 통해 생활체육공간 조성 확대 및 주민 기초건강 증진을 도모하였다.

넷째, 전문적·체계적인 환경안전관리 강화를 시행하였다. 우선 유해화학물질 관리계획 수립으로 환경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화학사고 취약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7개소)하고 사고대응 종합훈련을 실시(2회)하였다. 또한 환경기술지원으로 배출업소 환경관리 역량을 강화하여 환경부 주관 환경기술지원 평가부문에서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다섯째, 도민이 편리한 자원순환체계를 확산하였다. 우선 광역 업사이클 플라자 등 재활용·재이용품 거래 플랫폼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재활용품 수거 활성화로 자원순환 기반을 구축하였다. 또한 단독주택가 쓰레기 배출체계를 개선하고 길거리 쓰레기통을 설치하였으며 생활폐기물 품앗이 소각체계를 구축하였다.

마지막으로, 환경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였다. 환경산업 성장세가 확대되는 중국 지방정부와 교류협력을 추진하여 산둥성, 장쑤성, 허베이성과 MOU를 체결하였다. 또한 해외 신흥시장 진출을 위한 공동마케팅을 추진하였다.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에 대한 추진현황 및 주요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요맞춤형 통합복지 실현을 통해 도민들의 요구에 부합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재정지원 중심의 복지서비스에서 벗어나 일자리 제공을 통해 서비스 만족도 증가 및 복지재정 수요를 감소시켰으며, 경기도형 복지와 고용의 통합모델을 구축하여 복지정책 시너지를 창출하였다. 또한 방과후 돌봄 사업을 추진하여 아동복지교사, 학습도우미 등 다양한 전문강사 지원, 유관기관 등과 돌봄협의회를 구축하고 공동수요조사 실시하였다.

둘째,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는데 우선 현재의 법·제도로 적절한 보호가 어려운 위기가구에 생계비·의료비를 지원하였으며 취약계층 가정의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 수련시설(수련관, 문화의 집) 위탁 운영 및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기여를 위한 장애등급별 차등 급여 지원 및 활동보조인

지원을 추진하였으며 중도입국자녀 한국사회 적응지원 및 일반·다문화 가족 캠프, 결혼이민자 취업교육 확대 등의 도내 다문화가정 지원과 유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다문화사회의 인식을 제고하였다. 밤 10시 이후 운행하는 심야 안심귀가 마을버스 운행 및 택시안심 귀가서비스를 확대 추진하여 도민들의 안전을 도모하였다.

셋째, 도민들의 건강증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보건인프라 개선 및 의료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였다. 우선 응급의료 안전망을 구축하고,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3개소를 신규 지원(김포, 이천, 의왕)하였으며, 취약지 및 농어촌 응급의료기관 6개소를 지원하였다. 또한 재난심리지원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안산 국립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를 건립하였다. 또한 사회취약계층 대상 환자, 보호자를 위한 아토피질환 관리 교육캠프를 운영하고 드림스타트 사업을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여기에 고령화사회에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치매 종합지원서비스체계를 마련하고 치매조기검진 등 치매종합지원서비스체계 구축 및 공공·지역자원을 활용한 가족사랑 이음센터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제4절 향후 추진계획

경기도의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 민선 6기는 도정을 보다 혁신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NEXT 경기는 현재 직면하고 있는 현안을 해결하고 중장기적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민선 6기만의 비전과 철학을 담아 정책과 유관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것이며 ‘연정’을 통하여 도민 모두가 소통하는 경기도를 만들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더불어 잘사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민선 6기 동안 7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여 ‘일자리 제일 경기도’의 명성을 고수할 것이며, 시장경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사회적 경제의 육성을 통하여 서민경제에 희망을 찾아주는 노력을 적극 경주할 것이다. 또한 지역주민 중심의 ‘지역 활성화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사회통합 및 마을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따복공동체’를 조성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 및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도심지 재생사업 등 도시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경기도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접경지역 등 낙후지역을 중심으로 한 시·군 지역행복생활권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추진하여 도내 시·군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예정이다.

둘째, 모두가 활짝 웃는 따뜻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경기도형 안심·안전의 맞춤형 통합복지 실현하고 이에 도민 전체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서비스센터를 설치하며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다층적 복지프로그램을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일자리와 연계된 복지망 구축 관련, 경기도형 복지와 고용의 통합모델을 구축하여 복지정책의 시너지를 창출하고 일자리 제공함으로써 복지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증가 및 복지재정 부담 감소를 동시에 확보할 것이다.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통합건강증진 서비스 강화를 위해 평생 건강관리시스템 및 치매종합지원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감염병 감시·대응 및 재난대비 응급의료 시스템도 강화할 계획이다.

셋째, 두루 발전하는 경기도가 되고자, 북부지역 특화산업 경쟁력 확보 및 신성장산업을 육성하고 경기북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주민 주도의 대표 축제를 개최하며, 관광지를 조성하고 기존 축제·관광지·캠핑장 등을 연계한 체류형 1박2일 상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안전 인프라

라 확충을 위해 도민들의 출퇴근길 안전과 교통복지 구현을 위해 대중교통서비스 환경을 순차적으로 개선할 것이다. 또한 상하수도 및 가스보급 확대 등 서민형 생활인프라 개선사업을 확대하며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공공 임대주택아파트를 공급할 예정이다.

넷째,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현장 중심의 스마트 재난안전 시스템을 구축하고 재난 통합관리 대응체계 마련 및 소방력 보강, 재난 응급의료 지원체계 강화를 추진할 것이며, 생활 주변의 위험·위협·위해요소를 제거하여 도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또한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운영, 특정수질유해물질 기준 합리화, 환경정비구역 확대, 수변구역 해제 등의 환경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아울러 환경 신(新)산업 육성과 기후변화 대응으로 환경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제10장 강원도

제1절 경제 현황

1. 일반 현황

강원의 인구는 2013년 기준 154만명으로 2010년에 비해 1만명 증가하였다. 지역내총생산(GRDP)은 2010년 31조원에서 33조원으로 증가하였으며, 1인당 GRDP는 2,312만원으로 나타났다. 수출액은 2010년 15억 달러에서 44% 증가한 22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취업자수는 2010년 67만명에서 70만명으로 증가하였다. 재정자립도는 26.6%로 6년 전에 비해 1.7%p 하락하여 전국평균을 크게 하회하였다.

표 3-10-1 강원도 경제 일반현황

구분	전국			강원		
	2007년	2010년	2013년	2007년	2010년	2013년
지역내총생산(십억원)	1,151,843	1,265,146	1,376,143	28,684	30,628	33,332
인구(천명)	49,269	50,516	51,141	1,504	1,530	1,542
1인당 GRDP(만원)	2,147	2,561	2,842	1,822	2,060	2,312
수출액(백만달러)	371,489	466,384	559,632	1,126	1,509	2,173
취업자(천명)	23,433	23,829	25,066	672	668	698
재정자립도(%)	53.6	52.2	51.1	28.3	27.1	26.6

주 : 지역내총생산은 2010년 기준가격임.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2. 산업 현황

강원의 산업구조는 지역내총생산액 기준으로 서비스업 81.9%, 제조업 10.2%, 농림어업 5.3%, 광업 2.5%로 나타났다.

2013년 제조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등 모든

부문에서 '식료품'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2007년과 비교할 때, '식료품'의 사업체수 비중은 소폭 하락하였고, 종사자수 및 생산액 비중은 증가하였다. '자동차 및 트레일러'는 6년 전에 비해 사업체수 및 생산액이 증가하였다.

표 3-10-2 강원도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07년			2010년			2013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제조업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식료품	34.3	26.9	16.9	31.5	32.4	19.0	32.8	27.7	20.1
의복, 의복액세서리	0.8	1.0	0.1	1.8	2.0	0.4	1.7	2.1	0.3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5.9	4.8	2.7	5.3	5.1	2.4	5.2	3.8	2.3
금속가공제품(기계·가구 제외)	5.9	3.2	3.0	6.3	5.1	3.0	5.0	3.3	2.8
전자부품·컴퓨터·통신장비	2.0	3.0	2.6	1.8	1.3	0.6	1.0	1.0	0.7
전기장비	3.6	4.0	4.0	3.1	2.1	4.4	3.7	4.2	3.8
기타 기계 및 장비	5.3	4.3	2.6	5.8	5.2	4.8	5.2	5.4	4.2
자동차 및 트레일러	4.0	13.4	14.0	3.8	6.8	11.0	6.2	13.1	16.0
기타 제품	0.9	1.3	0.4	1.4	0.4	0.4	1.3	1.2	0.4

주 : 2010년은 경제총조사 자료임.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광업·제조업 조사 ; 경제총조사(2010)」

표 3-10-3 강원도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07년			2010년			2013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서비스업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1.1	2.5	4.1	0.9	1.8	3.4	1.2	2.5	5.7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3	3.8	7.4	1.9	5.0	16.1	1.3	3.4	6.8
부동산업 및 임대업	13.4	10.0	18.0	10.1	6.8	7.2	12.0	8.7	12.2
사업지원 서비스업	3.3	9.0	5.3	3.1	7.9	5.1	4.8	13.7	8.5
교육 서비스업	16.4	12.8	6.5	17.6	28.6	26.0	16.1	9.9	6.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0.8	26.7	28.4	10.5	22.4	17.1	13.9	31.5	27.9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14.4	15.4	17.5	11.6	9.5	14.8	13.7	13.2	22.8
기타 개인 서비스업	39.3	20.0	12.9	44.3	18.1	10.2	37.0	17.2	10.1

주 : 2010년은 경제총조사 자료임.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전국서비스업조사 ; 경제총조사(2010)」

2013년 서비스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업체수 기준 '기타 개인 서비스업'이 37.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종사자수 및 생산액 기준으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31.5%, 27.9%로 가장 높았다. 그 외에도 '부동산업 및 임대업',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의 업종 비중이 높았다. 2007년과 비교할 때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은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비중은 낮아졌으나, 생산액 비중은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모든 부문에서 2007년 대비 증가하였다.

3. 혁신활동 현황

연구개발 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기준 연구개발비 3,565억원, 연구개발인력 9,277명, 연구개발조직수 375개로 나타났다. 특히 연구개발인력은 2007년 11,841명에서 2,564명 감소하였으며, 전국대비 비중 변화는 1.2%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 현황을 보면, 2013년 기준으로 특허출원은 2,186건이며, 등록은 1,315건으로 전국대비 비중은 각각 1.4%로 나타났다. 2007년 대비 출원 건수는 0.5%p, 등록 건수는 0.6%p 증가하였다.

표 3-10-4 강원도 혁신활동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 건, %)

구분		2007년	2010년	2013년
연구개발	연구개발비	204,327 (0.7)	284,718 (0.7)	356,524 (0.6)
	연구개발인력	11,841 (2.8)	9,646 (1.9)	9,277 (1.6)
	연구개발조직수	166 (1.3)	253 (1.4)	375 (1.4)
특허	출원	1,211 (0.9)	1,612 (1.2)	2,186 (1.4)
	등록	710 (0.8)	545 (1.1)	1,315 (1.4)

주 : ()는 전국대비 비율임.

자료 : 1)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년도

2) 특허청, 지식재산통계연보, 각년도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강원도를 둘러싼 여건변화는 크게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2018년 제 23회 평창동계올림픽이다. 2018년 2월 9일부터 17일간 개최되며 200만명 이상의 관람객과 23만명의 고용유발, 직간접으로 64.9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둘째는 「춘천 레고랜드 테마파크」 건설사업으로 2017년 3월까지 레고랜드 테마파크를 우선 완공하고, 2018년까지 호텔, 아울렛, 상가, 워터파크 등 관광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셋째로는 북방경제 확대에 강원도 동해안은 북극으로 연결되는 가장 가까운 거리로 북극과 러시아로부터 에너지와 천연·지하자원을 수입하고 가공·생산한 제품을 가장 빠르게 유럽과 북미대륙으로 수출할 수 있는 북방경제의 전진기지이다. 넷째로는 북방경제 활성화에 따른 강원도 물류기능의 확대와 남북한 접경지역의 평화적 이용 및 경제발전 잠재력이다. 철원평화공원 및 철원평화산업단지 조성 등과 같은 남북한 교류 및 경제협력의 상징적인 장소로서 발전 잠재력도 높다.

강원도는 이와 같은 발전잠재력과 함께 경제성이 있는 지하자원을 바탕으로 한 소재산업의 경쟁력 확보, 지역대학의 풍부한 연구역량과 인력, 관광분야를 중심으로 전국 최고의 문화, 환경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며 또한 우수한 주거생활여건과 교육여건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발전 요소들을 활용하여 강원도 특성에 맞는 생명·건강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것이다.

발전잠재력을 살리고 강원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발전과제를 제시하면, 첫째,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완벽한 준비와 이를 통한 지역발전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평창동계올림픽 준비 과정에서 지역 활성화 전략뿐만 아니라 올림픽 이후의 시설물 이용 등에 대한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지역경제에 중요한 역할이 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세계 속의 글로벌 강원도 구현이다. 동계올림픽 개최 등 세계 속에 강원도를 홍보할 기회가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살릴 수 있는 종합적인 전략수립이 필요하다. 셋째, 첨단 전략산업 중심의 지역경제구조 전환이다. 강원도의 특성을 살린 건강·생명산업을 바탕으로 어메니티 산업생태계 조성을 통해 그동안 약점으로 여겨왔던 강원도 제조업 분야의 발전을 유도해야 한다. 넷째, 북방경제와 통일한국을 선도할 SOC를 확충해야 한다. 수도권과의 접근성 확대 및 동해안을 활용한 물류 전진기지 육성에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1. 발전비전

강원도는 생명·건강산업을 중심으로 동북아 녹색성장에 일조할 수 있는 차별화된 발전지대를 만들고자 ‘생명·건강 중심의 동북아 녹색성장의 신 발전지대’라고 하는 최종목표를 선정하였다. 4대 중간목표로는 첫째, 녹색성장을 지향하는 경쟁력 있는 생명·건강산업 육성, 둘째, 녹색성장을 주도할 신성장 거점 조성, 셋째, 동북아 진출과 신성장 거점육성을 위한 SOC 확충, 넷째, 타 지역과의 연계를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를 설정하였다.

그림 3-10-1 강원도 발전 비전 및 추진전략

비전	어메니티산업(Amenity Industry) 1번지, 세계속의 생명·건강 허브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원도 생명·건강 지역행복생활권 구현 및 균형발전 ◆ 1인당 GRDP 3만달러 달성을 위한 창조경제 기반구축 ◆ 인간·생명·안전·삶의 질 중심의 창의적 지역인재 양성 ◆ 동계올림픽을 통한 세계적 지역문화·생태강원 실현 ◆ 모두가 행복한 강원도 만들기
추진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원도 6개 생명·건강 지역행복생활권 구축 ◆ 도시재생·농촌 중심지 활성화 ◆ 대륙화 및 지역행복생활권 연계 교통·물류망 확충 ◆ 강원도형 어메니티산업(Amenity Industry) 육성 ◆ 특화산업단지 조성 및 투자촉진 ◆ 창조적 산업생태계 과학기술기반 확충 ◆ 생명건강 성장거점 육성 ◆ 지역과 연계한 대학 특성화 ◆ 지역을 이끌어 나갈 창의인재 양성 ◆ 교육여건 개선 및 평생학습체계 구축 ◆ 생활권별 특화된 문화인프라 조성 ◆ 2018평창동계올림픽 레거시 ◆ 생태강원 인프라 조성 ◆ 어르신, 장애인, 소외계층, 여성이 행복한 복지인프라 ◆ 마음·생명·건강 치유인프라 조성 ◆ 취약지역 없는 의료체계 구축

2. 추진전략

강원도는 환동해권 국제교류협력의 중심에 위치하며, 수도권과 환동해권을 연결하는 국토 중심지대로서 경제 및 문화교역의 중심적 입지 등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잠재력을 기반으로 강원도는 지역의 특성을 살린 산업육성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조성을 도모하고 있으며 18개 시·군이 모두 다 잘사는 균형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한 추진전략으로 첫째, 강원도 생명·건강 지역행복생활권 구현 및 균형발전이다. 강원도의 6개 생명·건강 지역행복생활권을 구축하고 도시재생·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프로젝트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둘째, 강원도의 1인당 GRDP 3만 달러 달성을 위한 창조경제 기반구축이다. 어메니티산업(강원도형 창조산업) 육성을 통해 강원도형 특화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창조적 산업생태계 구축과 과학기술기반 확충을 통해 생명·건강 지역성장거점으로 육성하는 전략이다. 셋째, 인간생명 중심의 창의적 지역인재 양성 전략으로 인간·생명 중심의 대학 특성화전략, 지역을 이끌어 나갈 창의인재 양성, 교육여건 개선 및 평생학습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넷째,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한 세계적 문화·생태 강원 실현 전략으로 6개 생활권별로 특화된 문화인프라를 조성하고 2018평창동계올림픽 레거시를 활용한 지역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며 생태강원 인프라 조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는 전략이다. 다섯째, 모두가 행복한 강원도 만들기 전략이다. 어르신, 장애인, 소외계층, 여성이 행복한 복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강원도 자연환경을 최대한 활용한 마음·생명·건강 치유 인프라를 조성하여 관광과 의료가 접목된 산업을 육성하는 전략이다. 이와 함께 취약지역 없는 의료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추진하는 것이다. 강원도형 창조산업 벨트를 조성하는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춘천-홍천-횡성-원주-평창을 중심으로 강원 건강·생명 레저 관광 헬씨에이징 창조산업 육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동해안 해양관광벨트와 북방경제 진출의 허브조성 전략이다. 동해안 해안누리길 활성화전략, 해양관광 기반시설 조성, 등대해양문화공간, 어촌관광 활성화전략 등을 통해 명품 해양관광벨트를 육성하고,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을 북방경제 진출의 허브로 조성하여 강원도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는 추진전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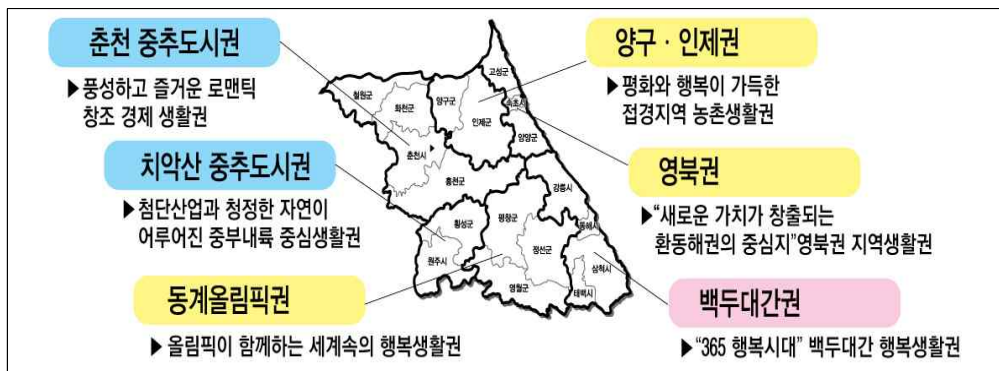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1. 지역생활권 활성화

(1) “지역행복생활권” 추진현황 및 성과

강원도는 ‘국민에게 행복을, 지역에 희망을’이라는 정부의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의 비전에 맞추어 연접성, 수계, 산, 통근율, 통행·통학권 등 지자체간 연계성과 문화·역사적 동질성 및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지역 간 연계협력사업 실적, 지자체간 연계협력 의지 등 기능적 연계협력 가능성을 고려하고 주민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추도시 생활권(춘천권, 치악산권), 도농연계 생활권(백두대간권), 농어촌 생활권(영북권, 올림픽권, 양구-인제권) 등 6대 생활권을 설정하였다.

그림 3-10-2 강원도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이와 함께 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및 협력사업 발굴 등을 위해서 강원도 생활권발전협의회를 구성(2014년 5월 9일)하여 운영(2014년 협의회 4회 개최) 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발전 5개년계획의 강원도발전계획을 수립하였고, 생활권 관련 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지역발전위원회에 신청하여 2014년 생활권 사업으로 124건이 반영되었다. 또한 선도사업의 경우 3개 사업이 최종 선정되어 국비 57.3억원, 지방비 6.4억원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 증대를 위해 투자되고 있다.

(2) 지역별 추진현황 및 성과

농촌 중심지의 잠재력과 고유의 테마를 살린 농촌 발전거점 육성을 위해 강원도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도로정비 등 H/W 중심의 투자에서 주민 참여를 강화한 S/W 중심으로 전환하고 농촌중심지의 특성과 경쟁력을 갖춘 농촌 발전거점을 육성하였다. 또한 재정비 촉진을 위해 지속적인 기반시설 확충과 행정지원을 통해 재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으며, 2014년도에는 기반시설(도로 9개 노선, 공원 3개소) 확충에 150억 원을 투자하였다. 이와 함께 생활용수 공급으로 주민생활개선을 도모하는 농어촌 상수도시설 확충사업으로 농어촌생활용수(16개 사업 중 3개소 완료, 13개 사업 조기 집행 추진), 소규모수도시설(69개소 소규모수도시설 조기 개량 추진)사업을 추진하였다. 귀농귀촌 전국 1위 달성을 위한 귀농귀촌 정착지원 사업을 통해서 귀농인 정착 지원 (31명, 300백만원(도비 150백만원, 시·군비 150백만원)),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3개소, 600백만원(국비 300백만원, 도비 60백만원, 시·군비 240백만원)), 귀농귀촌 화합프로그램 지원(12회, 72백만원(도비 22백만원, 시·군비 50백만원)), 귀농귀촌 창업·주택구입 지원(100명, 13,600백만원(융자)) 등이 추진되었다. 화천군, 고성군을 중심으로 한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을 통해 백암산남북물길 조망지구(화천)에 로프웨이 및 생태관찰학습원 설치(53억원), 고성 해돋이 통일전망타워(고성)의 전망타워 신축(30억원) 등이 이루어졌다.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사업을 통해 총 331억원(4개소, 26.96km)이 투자되었는데 그중 계속사업으로 3개소 21.86km, 신규사업 1개소 5.1km가 추진되었다. 강원도 접경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사업 추진 기반 확립을 위한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의 경우 2014년도에 89개 사업 929억원(국비 689억원, 지방비 240억원)이 투자되었다.

2.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강원도는 일자리 창출 중심의 지역산업 육성사업을 위해 강원도 특성에 맞는 건강·생명 융복합 헬씨에이징 창조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균형발전을 위한 어메니티 산업의 생태계 구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생태계 완성형 어메니티산업(지역특화산업, 지역전통산업, 천상의화원프로젝트, 향토산업클러스터)과 신산업 창출형

어메니티 산업(Life Security신산업, 나노융합, 스포츠지식서비스) 육성을 통한 18개 시·군 전체의 생태계 구축과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지역 관광산업 육성사업을 위해 2018동계올림픽을 대비한 거점관광인프라 조성, 크루즈 관광 활성화, 산업관광 육성, 평창동계올림픽특구 개발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사계절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자원개발(춘천 1개, 태백 1개, 홍천 1개, 횡성 1개, 평창 1개, 화천 4개, 양구 2개 사업)사업과 관광두레 조성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강원도 특화자원을 활용한 관광인프라 조성사업을 통해 강원도의 문화유산, 해양자원, 생태자원을 활용한 관광 인프라를 조성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는 첫째, 농어촌 일자리 확충사업을 들 수 있는데 농어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농어업소득 증대사업으로 친환경농업, 과수, 인삼, 종자산업 분야의 생산·유통인프라 조성, 경쟁력 있는 지역농업 연구·기술 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어업분야로는 수산자원·식품분야의 생산인프라 및 수산물유통시설을 구축하였다. 이와 함께 도농상생을 통한 농외소득 증가와 농어촌활력증대사업,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와 농촌축제 지원사업 등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였다.

강원도 산림의 유효이용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는 산림휴양녹색공간 및 숲길네트워크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였고, 농어업의 6차산업화로 새로운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농촌 및 어촌 자원복합산업화지원, 향토산업·지역전략식품산업·수산물가공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였다.

2014년도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일자리 창출 중심의 지역산업 육성의 일환인 지역 특화사업 육성사업 추진을 통해 R&D 35개, 비R&D 9개(146억원)사업이 추진되었으며, 지역특성화산업육성사업을 통해 상담건수 101건에 5,283만 달러, 계약추진 14건 140만 달러의 성과를 거두었다. 산업단지를 창조경제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과학기술의 기반 확충을 위해 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원사업(춘천 동춘천산단 1.5km, 원주 부론산단 4.5km)을 추진하였으며, 지역특화맞춤형 기술이전사업을 통해 노면 복공재 기술 등 11건의 특허를 획득하였다.

강원도의 관광산업 육성과 지역성장거점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그 중 문화유산 관광자원 개발사업을 통해 신흥사 유물전시관, 수륙대재 사업을 추진하였고, 크루즈 관광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총 방문객 272,008명, 컨테이너 화물 11,102TEU의 성과를 창출하였다. 또한 관광자원개발사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특화 북

합 관광(단)지 확대 조성을 추진하였다.

농어촌 일자리 확충을 위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사업을 통해 농촌 여름휴가 페스티벌, 시·군단위 광역 맞춤형 농촌체험프로그램을 개발 완료하였고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 사업 (10개 시·군, 28개소 (2,162백만원)), 수산물 유통시설건립사업을 통해서도 수산물유통물류센터 등 3개소, 28,050백만원을 투자하였다. 산림휴양녹색공간사업으로는 9개소(자연휴양림 보완 3, 산림욕장 조성 2·보완 4)에 대한 휴양공간을 마련하였다.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강원도는 지역을 위해 공헌하는 인간생명 중심의 창의적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사업 및 농산어촌 초중학교 학습여건 개선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인간·생명 중심 어메니티 산업에 특화된 대학 특성화와 지역에 필요한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해 강원도 자체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였다.

또한 지방 초중고교 교육여건개선사업을 통해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프로그램 운영, 농산어촌 초중학교 ICT지원 및 특성화, 초등학교 방과후 세분화된 돌봄교실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와 함께 창조적 인재를 키우는 지방대학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역에 밀착된 대학 특성화 추진을 위해 지방대학 경쟁력강화사업, BK21 플러스 사업의 지방대학원 연구역량강화사업, 학부교육선진화 선도대학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산업과 연계 발전하는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LINC)사업도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다.

2014년 주요사업에 대한 성과를 살펴보면, 지방 초중고교 교육여건개선사업을 통해 작은학교 모델학교 학생 수가 전년 대비 초등학생 수가 5.18% 증가하였고, 농산어촌 ICT 지원 사업을 통해서도 193개 학교가 ICT 기기 및 무선 인터넷 지원을 받았으며 226교에 대해서 멘토링비를 지원 하였다. 초등 방과후 돌봄교실 지원사업을 통해 국·공·사립학교 중 358교 485실의 오후돌봄교실이 운영되었으며 저녁돌봄 60교 운영, 토요돌봄 167교를 운영하였다.

능력중심의 지역인재와 기업의 선순환 성장이라는 목표로 추진한 강원도형 마이스터과 지정 운영을 통해서도 5학교 5과에 지원하였으며 도단위·특성화고 취업지원센터 운영(도교육청, 22교), 취업기능강화 특성화고 운영(39교), 산업현장 중심의 맞춤형 교

육과정 운영(특성화고 7교) 등이 추진되었다.

지역혁신 창의인력 양성사업을 통해서 17개 지역교육지원청, 195개교, 지역 초·중·고교생, 학부모, 교사 등 50,000명이 혜택을 받았다. 또한 글로벌마인드 함양사업을 통해 17개 지역교육지원청의 80명이 해외연수의 기회를 받았다. 창의학술동아리 연구활동 지원 사업은 18개교 344개 동아리(10개 시·군)에 동아리 연구활동비를 지원하였고, 중·고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사업을 통해 원어민교사 144명의 인건비 등을 지원하였다. 그 밖에도 과학영재교육원 운영지원(372명 참여), 대학생 실습공무원제 운영(30명 참여) 등을 추진하였다. 이처럼 강원도는 지역의 창의적 인재양성과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국비 및 지방비를 지속적으로 투입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4. 지역 문화 융성, 생태복원

강원도는 문화 다양성을 기대할 수 있는 전통, 근대, 현대의 모습을 갖춘 지역이 다수 존재하고 있는데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도시발전의 선진사례로 성공가능성과 확장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주민, 예술인을 중심으로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이 가진 특성과 가능성을 부각시켜 지역브랜드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존 문화시설의 기능성 감소, 외곽 건립에 따른 접근성 어려움 등, 도내 문화소외계층도 증가하고 있어 다양한 문화공간 조성이 필요하다.

스포츠 시설과 관련해서는 공공스포츠 클럽, 생활체육광장, 공공체육시설이 있으나 체육시설 확보, 주택가 근접 시 소음 등 민원 발생, 시설노후화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국가의 자연보호 중심의 기존 환경정책으로 강원도와 같이 자연환경이 양호한 보호지역은 주민 삶과 경제적 기반이 약화되어 낙후지역으로 전락할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세계적 문화·생태 강원 실현을 위해 지역문화 재창조를 통한 살기 좋은 문화도시, 문화마을을 조성하고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대비한 문화올림픽 콘텐츠 등을 개발·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 간 균형 있는 문화시설을 조성하고 스포츠시설의 내실화 및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청정 1등 도’로서 생태·자연환경 보존과 활용의 우리나라 대표 모델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4년도 주요 사업에 대한 성과를 보면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재생사업을 통해 재생사업지구 선정(2014년 3월, 국토교통부)되었으며 이에 따라 2015년 국비 3억원을 확보하였다. 문화시설 확충 및 조성을 통해서는 문화원 1관(동해), 문예회관 1관(화천), 미술관 1관(양구)이 추진되었으며 계속사업으로는 문화원 1관(인제), 도서관 2관(춘천, 원주), 문예회관(정선), 공연장 1관(평창)이 추진되었다.

농어촌 작은영화관 건립 사업은 2014년에 2개소(홍천 : 2014년 4월 8일, 월평균 6천 여명 관람), 화천 : 2014년 12월 20일)가 완료되었으며, 4개소(삼척·영월·평창·철원)가 추진 중에 있다. 작은도서관 조성·지원 사업은 사업비 130백만원(국비 70백만원, 군비 60백만원)이 투자되어 횡성 갑천면 작은도서관이 조성·완료되었다.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은 21개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이 순조롭게 추진(준공 5개소, 추진 중 16개소) 되고 있다.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 사업은 탐방로 10개소(94.4km)를, 생태하천복원사업을 통해서는 2개소(강릉 신리천, 평창 오대천)가 완료되었다.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강원도의 인구고령화는 전국적으로 매우 높은 추세이며,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5.7%로 전라남도과 함께 최고로 높은 수준이다. 또한,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나홀로 청소년(맞벌이 및 취약계층, 다문화)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내과, 외과·수술실,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의료취약지가 전국 15개소 중 4개소(평창군, 정선군, 양구군, 인제군)가 위치해 있으며 분만 취약지가 9개 지역, 분만 준 취약지 1개 지역이 위치하고 있다.

이에 강원도는 국비 및 지방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강원도의 복지 및 의료에 많은 지원을 추진하였다. 특히 2014년도에는 도 전체예산의 29.1%인 1조 1,639억원(전년대비 16.3% 증가)을 확대하여 투자했으며, 그 외에도 장애인 1인당 복지예산 확충(698천원), 의료원 시설 장비 보강(40억원) 등을 추진하였다.

주요 사업의 성과를 살펴보면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을 통해 3개소(공동생활 홈 3)에 360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사업은 440명(지원형 : 초등 160명, 중등 80명, 농산어촌형 : 초등 120명, 중등 80명)을 지원하였다. 또한 청소년시설 확충 사업을 통해 청소년문화의집 신규 건립(1개소),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

강(3개소)이 완료되었다.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언어발달지원 사업은 언어발달지도사 배치 및 운영 기관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4년도에 14개소, 19명을 지원하여 결혼 이민자 및 다문화 자녀 상담지원 등을 지원하여 한국사회 적응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방과후 돌봄서비스의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고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의료취약지 지원을 통해서는 분만 산부인과 설치·운영 지원 1개소(삼척의료원), 외래 산부인과 설치·운영 지원 1개소(영월의료원) 등이 완료되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육성은 응급의료기관 11개소(2,700백만원)를 지원하여 응급의료기관 법적기준 충족률 68% 목표를 달성하였다.

주민 통합건강증진사업을 통해서는 도내 18개 시·군 모니터링 및 사업수행 기술지원을 추진하였으며, 취약지역 건강불평등 완화를 위한 건강플러스사업 지원 5개소, 담당인력(공무원 및 전문인력) 역량강화 교육 실시 8개 과정, 327명을 지원하였다. 주민 정신건강 지원 확대 사업을 통해서는 정신건강증진센터를 확대 운영(11개소(2013년)→14개소(2014년))하였으며 자살예방센터도 5개소로 확대하여 운영하였다. 이처럼 강원도는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를 위해 국비 및 지방비와 함께 민자 등을 적극 유치하여 도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제4절 향후 추진계획

강원도의 2014년 도정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던 한해였으며 이러한 큰 비전을 바탕으로 도가 직면한 상황 및 당면 과제 등을 고려하여 지역발전 계획을 수립하였다. 2015년도에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완벽 준비 및 첨단 전략산업 등 강원도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극대화 하는 시기이다. 또한 해외사업본부 확대·개편, 수출 등 해외시장 개척, FTA 공세적 대응, 적극적인 해외 관광홍보·마케팅 등을 통해 기업과 자본, 관광객 유치에 매진하고자 한다.

이를 가시화하고 실현시키기 위해 강원도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생명·건강 지역행복생활권 구현을 더욱 고도화 할 것이다. 2개 중추도시권(춘천권, 치악산권)을 중심으로 지식, 문화(춘천권)와 첨단산업(치악산권)을 추진하고 도농연계생활권인 백두대간권은 관광을 키워드로 상호 연계 공존하는 생활권을 형성할 것이다. 3개 농어촌생활권(영북권, 양구군·인제군, 동계올림픽권)은 동해안 자원(영북권), 접경지역 자원(양구군·인제군), 올림픽 활용(동계올림픽권) 등 강원도만의 특색 있는 자원을 공유하면서 연계·발전하는 생활권을 조성할 것이다.

이와 함께 창조경제 기반구축을 통해 2015년도에는 1인당 GRDP 25.8백만원을 목표로 정하고 2018년까지 1인당 GRDP 3만 달러 달성을 위해서 2차 산업의 비중을 확대함과 동시에 1·2·3차 산업이 함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강원도형 창조경제 기반을 구축할 것이다. 또한 강원도 창조산업인 어메니티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경쟁력을 높여 내수시장 공략과 해외시장 개척에 노력할 것이다.

인간·생명 중심의 창의적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지역산업과 생명·건강생활권 구현에 필요한 창의적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타 지역 유출을 최소화 할 것이며, 세계적인 지역문화·생태강원 실현을 통한 성공적 동계올림픽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추진할 것이다. 또한 평창동계올림픽을 문화올림픽으로 개최하기 위한 대표적 문화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국내를 대표하는 강원도의 문화 및 생태자원을 동계올림픽을 통해 세계적인 수준의 자원으로 보존하고 육성할 계획이다.

모두가 행복한 강원도 만들기를 통해 강원도가 가장 취약한 분야인 의료·복지의 공공서비스를 개선하여 도내 시·군 모두가 행복한 삶의 터전으로 육성하여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제11장 충청북도

제1절 경제 현황

1. 일반 현황

충북의 인구는 2013년 기준 157만명으로 2010년에 비해 2만명 증가하였다. 지역내총생산(GRDP)은 2010년 39조원에서 46조원으로 증가하였으며, 1인당 GRDP는 2,993만원으로 나타났다. 수출액은 2010년 103억 달러에서 33% 증가한 137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취업자 수는 2010년 74만명에서 78만명으로 증가하였다. 재정자립도는 2010년에 비해 소폭 증가한 34.2%로 전국 평균을 하회하였다.

표 3-11-1 충청북도 경제 일반현황

구분	전국			충북		
	2007년	2010년	2013년	2007년	2010년	2013년
지역내총생산(십억원)	1,151,843	1,265,146	1,376,143	34,769	39,470	45,929
인구(천명)	49,269	50,516	51,141	1,507	1,550	1,573
1인당 GRDP(만원)	2,147	2,561	2,842	2,144	2,594	2,993
수출액(백만달러)	371,489	466,384	559,632	8,920	10,330	13,735
취업자(천명)	23,433	23,829	25,066	694	737	776
재정자립도(%)	53.6	52.2	51.1	33.3	33.7	34.2

주 : 지역내총생산은 2010년 기준가격임.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2. 산업 현황

충북의 산업구조는 지역내총생산액 기준으로 서비스업 49.4%, 제조업 46.1%, 농림어업 4.1%, 광업 0.5%로 나타났다.

2013년 제조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업체수 기준으로는 '식료품'이 14.2%

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금속가공제품' 등 순이었다. 종사자수 및 생산액 기준으로는 '전자부품·컴퓨터·통신장비'가 각각 21.0%, 23.2%로 나타나 다른 업종에 비해 종사자 규모와 생산액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식료품',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등 순이었다.

표 3-11-2 충청북도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07년			2010년			2013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제조업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식료품	13.4	11.7	10.3	13.9	13.0	11.0	14.2	12.3	12.7
의복, 의복액세서리	0.3	0.1	0.0	0.4	0.1	0.0	0.2	0.1	0.0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12.5	9.4	10.0	12.0	8.4	6.4	13.3	9.8	7.2
금속가공제품(기계·가구 제외)	11.0	6.5	4.6	10.5	6.5	3.9	10.5	6.4	4.5
전자부품·컴퓨터·통신장비	7.1	21.9	20.2	6.6	23.7	26.0	5.9	21.0	23.2
전기장비	6.2	6.9	8.8	6.4	7.1	7.8	6.6	7.4	8.1
기타 기계 및 장비	8.7	5.2	4.2	8.1	4.8	3.7	7.6	5.4	3.8
자동차 및 트레일러	3.8	5.1	5.2	4.5	6.5	8.1	5.8	7.0	7.4
기타 제품	0.8	0.7	0.3	0.8	0.7	0.4	0.9	0.8	0.4

주 : 2010년은 경제총조사 자료임.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광업·제조업 조사 ; 경제총조사(2010)」

표 3-11-3 충청북도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07년			2010년			2013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서비스업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1.1	2.7	6.4	0.9	2.1	6.3	1.4	2.9	8.6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2	2.8	5.8	1.7	3.7	11.7	1.3	2.4	4.8
부동산업 및 임대업	12.8	9.5	17.8	11.2	7.8	13.5	12.1	9.3	17.8
사업지원 서비스업	3.9	15.3	9.7	3.7	9.8	6.1	5.6	16.7	10.8
교육 서비스업	17.9	14.7	9.3	17.6	30.5	27.6	16.6	11.2	8.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1.9	26.8	28.3	11.0	22.5	18.9	14.1	31.8	30.0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13.3	9.2	8.8	11.3	6.2	5.0	13.2	9.0	7.5
기타 개인 서비스업	38.0	19.0	13.8	42.7	17.4	10.9	35.6	16.8	11.9

주 : 2010년은 경제총조사 자료임.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전국서비스업조사 ; 경제총조사(2010)」

2013년 서비스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업체 수는 '기타 개인 서비스업'이 35.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종사자 수 및 생산액 기준으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31.8%, 30.0%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부동산업 및 임대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의 업종 비중이 높았다. 2007년과 비교할 때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비중이 다른 업종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대부분 업종은 비중 변화가 적었다.

3. 혁신활동 현황

연구개발 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기준 연구개발비 1.1조원, 연구개발인력 16,868명, 연구개발조직수 971개로 나타났다. 전국대비 비중 변화는 2007년에 비해 연구개발인력은 0.4%p 증가하였으며, 연구개발비 및 조직수의 비중은 큰 변화가 없었다.

특허 현황을 보면, 2013년 기준으로 특허출원은 2,776건이며, 등록은 1,718건으로 전국대비 비중은 각각 1.7%, 1.8%로 나타났다. 2007년 대비 출원 건수는 933건 증가하여 전국대비 비중이 0.3%p 증가하였으며, 등록 건수는 71건 증가에 그쳤으며 전국 대비 비중은 동일하였다.

표 3-11-4 충청북도 혁신활동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 건, %)

구분		2007년	2010년	2013년
연구개발	연구개발비	598,423 (1.9)	782,915 (1.8)	1,059,810 (1.8)
	연구개발인력	10,968 (2.6)	15,288 (3.1)	16,868 (3.0)
	연구개발조직수	451 (3.6)	619 (3.5)	971 (3.5)
특허	출원	1,843 (1.4)	2,319 (1.8)	2,776 (1.7)
	등록	1,647 (1.8)	1,131 (2.2)	1,718 (1.8)

주 : ()는 전국대비 비율임.

자료 : 1)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년도

2) 특허청, 지식재산통계연보, 각년도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충청북도는 아름답고 깨끗한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을 완성시키는 한편 수출 230억 달러, 투자유치 37조원, 일자리 40만개, 고용률 72% 달성을 목표로 충북 경제 전국 4%대 도약 실현의 꿈을 키우며 충북이 영충호 시대의 리더로 우뚝 솟아오르기 위한 지역 잠재력 및 발전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충주호, 대청호의 수자원과 소백산, 월악산, 속리산을 비롯한 청정 자연경관이 우수한 북부권을 중심으로 관광산업이 발달하고 있으나, 자연자원 주변의 각종 환경규제로 개발에 많은 제약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과감한 규제개혁 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충청북도의 전체 인구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여 영충호 시대가 도래되어 도민에게 기회와 희망을 안겨주었으나, 청주시의 인구가 충북 전체 인구의 52.3%(2014년말 기준)를 차지하고 있어 청주권과 비청주권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셋째, 2014년 충북의 합계 출산율은 1.36명이며, 65세 이상의 노인인구 비율은 14.2%를 차지하여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지역의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복지지출 부담증가 및 지역경제 활력 저하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대안을 발굴·추진해야 한다.

넷째, 수도권인 기업투자확대를 위한 규제완화 등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수도권 기업 유치와 산단 분양의 차질과 더불어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과 이에 따른 지역인재 유출 등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수도권규제 완화 정책 저지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추구해야 한다.

다섯째, 2014년 충북 고용률 61.8%로 전년대비 2.0%p 상승하여 지난해 보다 고용상황이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비정규직과 시간제 일자리 등 질 낮은 일자리 창출보다는 고용이 안정된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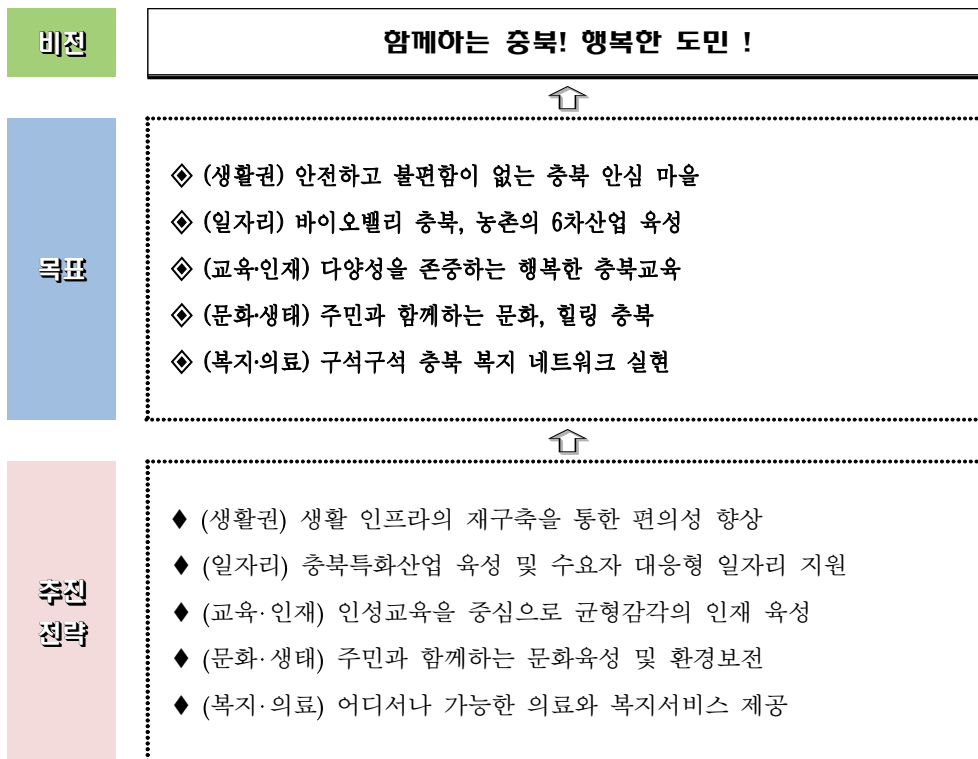
여섯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충북경제자유구역, 혁신도시 등 지역 성장거점을 바탕으로 연계를 통한 시너지 창출과 지역을 선도하는 대기업 유치는 물론 강소·벤처기업 등을 선제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1. 발전비전

160만 도민과 함께하는 도정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최고의 가치인 도민행복시대를 실현해 나감은 물론, 신수도권시대, 영충호시대의 리더로서 충북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국민 화합시대를 충북이 선도하고자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을 발전비전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안전하고 불편함이 없는 충북 안심 마을’, ‘바이오밸리 충북, 농촌의 6차산업 육성’, ‘다양성을 존중하는 행복한 충북교육’,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 힐링 충북’, ‘구석구석 충북 복지 네트워크 실현’이라는 5대 목표와 도정운영방향을 설정하였다.

그림 3-11-1 충청북도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2. 추진전략

충북의 첫 번째 전략인 ‘생활 인프라의 재구축을 통한 편의성 향상’을 위해서 ①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 추진, 창조지역 사업 등을 통한 지역발전 경쟁력을 강화하고, ②위험도로 구조개선, 도내 소방서 신설 및 증설 등 안심도 충북을 실현하고, ③도시 재생, 농촌중심지 활성화 등 주거환경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④충청내륙고속화도로, 시골마을 행복택시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주민들의 생활교통망을 개선한다.

두 번째 전략인 ‘충북특화산업 육성 및 수요자 대응형 일자리 지원’을 위해서 ①세계적 바이오밸리 조성, 특화산업 육성 등을 통한 지역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②산업 단지 진입도로 지원사업, 지역거점조성지원사업(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건설) 등을 통한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③산학융합지구 조성,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등 지역 R&D 성과를 확산시키고, ④향토산업육성,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지원 등 6차산업화를 통해 농촌 일자리를 창출한다.

세 번째 전략인 ‘인성교육을 중심으로 균형감각 있는 인재 육성’을 위해서 ①초등돌봄교실 시설개선 및 확충, 소규모 학교의 적정 규모화 등을 통한 농산어촌지역 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②산학협력 선도대학 및 전문대학(LINC), 지역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지원 확대 등을 통한 산업현장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고, ③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등을 통한 주민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한다.

네 번째 전략인 다함께 누리는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 육성 및 환경 보전’을 위해서 ①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문화 재생 등을 통한 유희공간을 문화예술공간으로 재창조하고, ②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등을 통한 도민의 문화향수권을 보장하고, ③문화유산 관광자원개발(직지금속활자 복원사업) 등 숨겨진 문화·역사·관광 자원을 개발하고, ④국가 및 지방하천 정비 등을 통해 홍수예방 및 하천환경을 개선한다.

마지막 전략인 사각지대 없는 ‘어디서나 가능한 의료와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①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주민 정신건강 지원확대 등을 통한 주민들에게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하고, ②지역아동센터(방과후돌봄), 9988 행복나눔 사업 등을 통한 아동·청소년·노인 등에게 맞춤형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③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 육성, 분만 취약지 의료기관 지원 등을 통한 의료안전망을 구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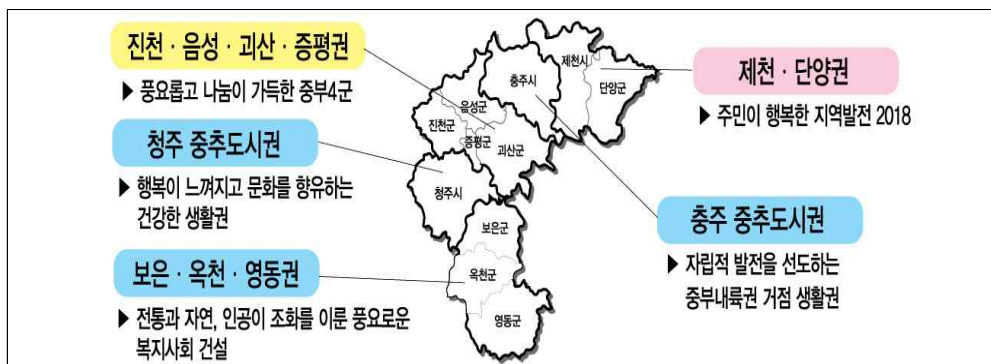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1. 지역생활권 활성화

(1) “지역행복생활권” 추진현황 및 성과

지역행복생활권의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5개 지역행복생활권 구성(2014년 2월 14일), 청주권 등 5개 생활권별 MOU를 체결 완료(2014년 3월 11일)하였고, 생활권발전 전담조직 구성(2014년 3월 28일)을 추진하였으며, 충청북도 발전계획 수립(2014년 8월) 및 도내 5개 생활권별 시·군 발전계획 수립(2014년 12월)을 완료하였다. 또한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지역발전, 일자리, 교육·문화, 복지 등 8개 분야 민·관 전문가 등 총 18명으로 구성된 충청북도 생활권발전협의회를 총 4회(4월 7일/6월 16일/8월 13일/11월 6~7일) 운영하여 도의 발전 및 생활권 관련 협의·조정의 기능 및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그림 3-11-2 충청북도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선도사업으로 2014년에는 6개 사업에 3,708백만원을 투입하여, 청주권 일자리중심 허브센터구축사업(832백만원) 등을 추진하였으며, 창조지역사업으로 2014년에 5개 사업, 1,144백만 원을 투입하였고, 그 중 자치언론의 고향, 옥천군(134백만 원)은 주민참여 미디어교육 및 창작활동 지원 등을 추진하였다.

표 3-11-5 선도사업 연계·협력 프로젝트(2014~2016) 현황 및 성과

(단위 : 백만원)

권역	사업명	사업비(2014년)	주요성과
합계	6건	3,708	-
청주권	청주권 일자리중심 허브센터 구축	832	센터직원 10명 채용
충북권	증평군 행복학습 거점센터 구축	500	프로그램운영 기본계획 수립
북부권	도농일자리 지원센터 운영	830	센터 리모델링 설계 실시
소백산권	백두대간 영서 에코힐링 벨트화	462	노천 물놀이장 조성 추진중
삼도봉권	삼도봉 권역 호두특화산업단지	738	임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추진중
대전권	대청호권 생태창조마을 네트워크 구축	346	대상마을 1곳 선정 추진중

(2) 지역별 추진현황 및 성과

지역간 연계·협력을 통한 상생발전과 도시와 농촌, 청주권과 비청주권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기업 육성사업에서는 4,445백만원을 투입하여 11개 시·군 69개소에 육성사업비 및 위탁사업비 등을 지원하여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다. 도청 북부출장소 청사 건립 등으로 도·시·군 간 상호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북부권 주민들에게 향상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북부권 균형발전을 도모하였다.

또한 슬레이트지붕철거 지원사업은 4,464백만원을 투입하여 1,861가구의 노후 슬레이트를 철거·처리하였으며, 농어촌 상수도시설 확충사업은 201억원을 투입하여 5개 시·군 14개면에 상수도시설을 설치하여 상수도보급률을 88.9%까지 높였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은 27,967백만원을 투입하여 청주시외 9개 시·군, 24개소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사업추진 등 마을하수처리장 및 하수관로 설치를 확대하였다.

아울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4,326백만원을 투입하여 신창도로 선형개발공사,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 10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도내 전 지역에 대한 위기관리대응시스템 구축을 위한 충북도내 소방서 신설 및 증설사업은 단양소방서 부지가 확보(2014년 12월)되면서 1시·군 1소방서 설치가 추진되어 안전한 충북 건설에 힘을 보탰다.

동서6축 고속도로인 음성-충주 구간이 완전 개통되었고, 경부와 중부를 직접 연결하는 옥산~오창 간 고속도로는 내년도 사업비 1,371억원을 확보하였다. 청주공항의 중부권 거점 공항화 사업으로 활주로 폭 확장비 확보, 중국인 120시간 무비자 환승시스템 구축, 국제노선 증설(34개), F급 국제공항 지정 추진 등으로 국내 5대 공항으로 입지를 굳혔다.

2.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바이오, 태양광, 화장품·뷰티, 유기농, ICT, 공항 및 항공정비사업 등 6대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 등 질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지역특화산업육성(주력산업육성) 사업은 바이오의약, 반도체, 태양광, 전기전자부품, 동력기반기계부품 등을 5대 주력산업으로 선정하고 R&D 38개 과제, 기업지원 10개 과제를 추진하였다.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를 통해서 84,592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목표(68,170명) 대비 124.1%를 초과 달성하였다. 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원사업은 추진 중인 9개소 사업 중 2개소를 준공하고 신규사업 3개소를 착공하는 등 산업단지 추진에 따라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였다. 5개 신규산업단지(청주 강내·KGB, 음성 유촌·오선, 진천 광혜원)를 지정하고, 6개의 산업단지(청주 오창2·옥산, 충주 DH, 제천 양화, 보은 동부, 진천 산수)를 준공하였으며, 진천 산수산업단지 내 외투지역 지정을 이끌어 내어 우수 외국기업 유치에 기반을 닦았다.

2014 오송 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 개최(2014년 9월 26일~10월 12일)로 961,427명이 넘는 관람객이 방문하고 국내외 우수기업 303개사, 바이어 4,106명이 참가하여 2,173만 달러 수출계약으로 흥행과 경제적 실익면에서도 대성공을 거뒀다. 2015 괴산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2015년 9월 18일~10월 11일) 사업은 조직위원회, 집행위원회, 자문위원회, 행정지원협의회의 구성·운영, 창립총회, 국제학술행사 개최, 세부실행계획 수립 및 확정 등 개최 성공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울였다. 주택, 경로당 등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 확대사업은 12,376백만원을 투입하여 주택, 경로당 등 1,439개소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였고, 태양광 특화도시 '솔라그린시티' 조성사업은 태양광기술지원센터와 건물에너지기술센터 완공으로 저탄소 녹색도시 구현을 위한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였다. 특히 태양광산업 육성의 컨트롤타워인 태양광기술지원센터 완공 등으로 아시아 최고의 솔라밸리 충북 건설을 앞당길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산학융합지구조성 사업은 산업단지캠퍼스 및 기업연구관 준공, 캠퍼스설립인가 등 관련 행정절차 추진과 중소벤처기업 입주(40개사), 기업지원 및 인력개발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하였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사업은 과학벨트 기능지구 핵심시설인 SB플라자 건립 부지를 선정하였으며,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사업은 산학융합지구 준공, 국립의과학지식센터·고위험병원체 특수연구센터 준공, 오송 제2생명과

학단지 본격 분양 등으로 바이오 충북의 위용을 서서히 드러냈다. 그리고 융합바이오 소재산업의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융합 바이오 세라믹 소재센터의 오송 유치로 세계 3대 바이오 클러스터의 첫 발을 내딛었다. 한편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은 5,150백 만원을 투입하여 234.8ha에 대한 관수관비시설, 관정개발, 무인방제시설, 방풍망시설 등 15종 사업을 추진하였고, 향토산업육성사업은 참돔대중화사업 등 3개 사업과 로컬 푸드직매장 설치지원 사업으로 충주, 진천 등 2개소 직매장을 설치·운영하였다.

충북은 지역발전 특화프로젝트로 세계적 바이오밸리 조성을 위하여 도정역량을 결 집하고 있다. 1990년대 초반 바이오산업을 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오송생명과학단지를 중심으로 바이오산업을 집중·육성하고, 오송 바이오밸리를 중심으로 제 천 한방 바이오밸리, 옥천 의료기기 바이오밸리, 괴산 유기농 바이오밸리 등 지역별 특성화된 바이오산업 육성전략을 마련해 추진 중에 있다.

사업기간 2010년부터 2038년까지 총 29년간 충북 전 지역을 대상으로 총 108,600백 만원(국비 85,140백만원, 지방비 22,560백만원, 민간투자액 900백만원)을 투입하여 침 복단지 연구개발비(국비 39,000백만원),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국비 28,900백만원), 글 로벌 천연물 원료제조거점시설(18,100백만원(국비 7,240백만원, 도비 4,130백만원, 시 비 5,830백만원, 민자 900백만원)), 글로벌 코스메슈티컬 개발센터(17,600백만원(국비 5,000백만원, 도비 12,600백만원)), 바이오의약산업지원(국비 5,000백만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14년에는 침단의료 관련 기업 및 연구기관 유치를 위하여 침 복단지 내 원형지 매입 개발(2013년~2016년),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조성(2014 년~2016년),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 건립공사(2014년 3월~2016년 3월) 및 글로벌 코스 메슈티컬 개발센터 설계(2014년 10월~2015년 2월) 등을 본격 추진하였다.

주요 성과로는 침복단지 연구개발사업을 통한 신약 및 침단의료기기 개발기반을 마 련하였고,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 천연물 원료제조거점시설, 코스메슈티컬 개발센터 등 충북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였으며,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바이 오의약산업 지원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하여 글로벌 수준의 바이오 인프라 확충을 통해 바이오산업을 충북의 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성과를 도내 전역으로 확산시켰으며, 특히 오송은 정책기관, 바이오기업, 연구기관, 산학융합지구 등 산학연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대한민국 바이오 산업의 중심지로 발전을 주도하였다.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바른 인성과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초·중고 교육여건 개선과 창조경제를 견인하는 학습과 일이 연계된 직업·평생교육을 위한 농산어촌 학교의 ICT 교육환경 구축 사업에 737백만원을 투입하였다. 이를 통해 농산어촌 ICT 활용 운영학교 128교 무선망 구축 및 스마트기기 지원, 전담교사 연수 3회 등을 추진하여 농산어촌 학교의 최적의 교육환경을 마련하였다.

한편, 농산어촌 거점별 우수 중학교 육성 사업은 기숙형 중학교인 속리산중학교(학급수 7개, 학생수 140명), 괴산오성중학교(학급수 7개, 학생수 170명)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운영, 통학지원, 시설구축 등과 추가 지정을 위한 부지매입, 기타 설립 용역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우수중학교를 육성하여 농산어촌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초등돌봄교실 시설개선 및 확충 사업은 2,215백만원을 투입하여 151실 시설 구축 및 보수를 수행하였다. 아침돌봄 33실, 오후돌봄 417실, 저녁돌봄 70실, 그리고 토요일돌봄 161실을 운영하여 학부모가 자녀를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조성하여 공교육의 만족도 및 신뢰도를 제고하였다.

그리고, 소규모 학교의 적정 규모화(작은 학교살리기) 사업은 학생수 60명 이하 면 지역의 작은 학교를 대상으로 지난 2013년부터 10개교를 선정해 운영 중이며, 2014년 상반기에 강천초, 회인초, 청성초, 상신초, 연풍초 등 5개교를 추가로 선정하였고 2015년까지 교당 최대 2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농산어촌 지역의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교육의 질 제고를 도모하였다.

또한, 산학협력 선도 전문대학·대학(LINC) 육성 사업은 기술지도 18건, 가족회사 7건, 기업디자인 3건 지원을 통한 기업과 대학간 맞춤형 인재양성으로 지역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였다.

더불어 지역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지원 확대 사업은 4,821백만원을 투입하여 충북 반도체고,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 충북에너지고 등 3개 마이스터고에 대해 운영지원하여 지역산업수요를 반영한 인력양성 및 취업중심 고교 직업교육 체제를 구축하였다.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은 8개 프로그램 194명 이수, 경제활동참여 8명, 자격 취득 25명, 그리고 학습동아리 개설 9건 등을 추진하여 중·장년층의 경제적 자립역량 강화 및 사회공헌 확대를 위한 제2차 학습권을 보장하였다.

4. 지역 문화 육성, 생태복원

지역에 특화된 문화·생태 자원을 이용한 문화·관광 인프라를 확충하여 지역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건강한 생태·자연환경 보존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산업단지, 폐산업 시설 문화 재생사업에서는 2,000백만원을 투입하여 청주 도시첨단문화산업단지 1개소를 조성하여 주민들의 문화향후 공간으로 활용되었다.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은 19,455백만원을 투입하여 청주장애인스포츠센터건립 등 13개 사업을 추진하였다.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사업은 31,367백만원 투입으로 청주시립미술관건립(진척률 90%), 감곡도서관건립(진척률 50%) 등 시설 확충을 하였고, 생활체육 공원 조성 사업은 12,767백만원으로 충주양성생활체육공원 등 8개소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관광자원개발 사업은 27,870백만원을 투입하여 온달관광지 정비사업 등 16개 사업을 추진하여 다양한 관광수요에 대응하였고, 문화유산 관광자원 개발 사업은 400백만원 투입으로 직지 상권 금속활자(19판) 및 직지 하권 목판(11판)을 복원하였다.

한편, 세종대왕 초정(椒井) 르네상스 조성 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비 국비 5억원 확보를 통해 사업의 추진 동력을 마련하였고, 제천 스토리창작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2,400백만원 투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2014년 7월~2015년 2월) 수립 및 건립추진위원회 7명을 구성(2014년 9월)하였다. 이와 함께 옛 대통령별장인 청남대 누적 관광객 800만명 돌파와 보은 바이오산림휴양벨리·옥천 휴·포레스트·영동 웰니스단지 조성, 속리산 다목적 문화교육관 건립, 배티 세계순례성지 조성 등으로 충북관광 제2의 도약기를 맞이하였다.

그리고,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개최로 3일간(9월 12일~14일) 3만여명 참가, SNS 130만건 게재, 취업박람회 146명 채용 등 14억 중국인들에게 충북을 알리는 효자 역할을 해냈고, 문화소외지역 찾아가는 공연(도립교향악단, 도지정예술단) 사업은 찾아가는 공연활동 85회 전개 및 32,400명이 관람하였다.

더불어, 도심열섬완화를 위한 녹색공간 조성사업은 녹색쌈지숲 5개소, 산림공원 1개소, 가로수 조성관리 63.7km, 명품가로숲길 2.6km 등을 추진하였고, 지방하천 정비 사업은 82,166백만원을 투입하여 지방하천 22지구 등 지방하천 수해상습지에 대한 환경개선을 추진하였다.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구석구석 사각지대 없는 주민 맞춤형 복지·의료서비스를 실시하고, 출산에서 노후까지 모두가 행복한 감동 복지·의료 안전망 구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금연, 절주, 운동 등 13개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 건강수준 향상을 도모하였다. 주민정신건강 지원확대사업으로 정신건강증진센터 13개소에서 11,117명에 대한 자살예방상담을 통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을 일깨워 주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방과후돌봄) 사업은 5,000여명의 나홀로 아동에게 보호·급식·학습지도 등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14,571백만원을 투입하여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 1,690명, 활동지원 제공인력 1,100명 등을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였다. 청소년시설확충사업은 국비 42억원으로 2개 수련시설 건립과 4개의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였고, 어린이집 확충 사업은 어린이집 신축사업 2개소, 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 1개소, 어린이집 기자재구입 지원 3개소를 추진하였다.

한편,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 육성사업은 1,765백만원을 투입하여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9개소의 응급실 운영비를 지원하였고, 분만취약지 의료기관 지원 사업은 보은군, 영동군 2개소에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여 산부인과 관련 의료 취약지 해소에 기여하였고,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4,969백만원을 투입하여 여성농어업인 34,239명에게 정신건강과 문화생활 기회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9988 행복나누미 사업은 40억원을 투입하여 행복나누미 170명을 구성하여 경로당 2,400개소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의 치매와 중풍을 예방하였다. 충북 어린이 인성교육 인프라 확대 사업은 유아기 성폭력예방 뮤지컬 순회 공연(10회, 16백만원), 인성교육 우수어린이집 선정 및 지원(6개소, 39백만원)을 추진하였고, 방과후돌봄(지역아동센터 확충지원) 사업은 60백만원을 투입하여 지역아동센터 15개소에 대한 인건비, 프로그램비, 관리운영비 등을 지원하여 아동의 보호체계를 마련하였다.

또한 찾아가는 취약계층법률상담, 중증장애인 일감지원, 출산여성 산후조리 한약지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하는 복지시책을 펼쳤다. 또한 여성 교류의 장이 될 충북 미래여성 플라자를 착공하고, 여성행복지원단 구성(11시·군, 106명),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 확대(39개소) 등 여성이 행복한 여성친화도 건설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제4절 향후 추진계획

2014년도는 충청북도가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을 발전비전으로 하여 영충호 시대의 리더 충북을 향해 힘찬 항해를 시작한 한 해이다. 그 성과로서 96만여명의 관람객이 참여하고, 1조 1,608억원의 상담실적과 2,173만달러의 수출계약을 성사시킨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를 성공리에 마쳤다. 또한 중국인 유학생과 도민 등 3만여명이 참가한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은 14억 중국인들에게 충북의 훈훈한 정을 알리면서 한중교류의 가교역할을 톡톡히 했으며, 정부합동평가 3년 연속 최우수 도(道) 선정은 160만 충북도민 모두가 합심하여 만들어낸 결과로 충북인의 자긍심을 높여 주었다.

그동안 닦아온 기반을 바탕으로 2015년도에는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을 완성시키는 한편, 충북미래 100년 번영을 이끄는 쌍두마차가 될 「충북경제 4% 도약 프로젝트」와 「도민행복 마스터플랜」의 밑그림을 마련하고 착실히 실천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하여 첫째, 충북이 신수도권 시대의 중심, 영충호 시대의 리더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기반을 다져 나갈 것이다. 충청내륙고속화도로, 동서 5·6축 고속도로, 천안~청주공간 복선전철, 충북선 철도 고속화 등 국토 X축 교통망을 구축하고, 아울러 수도권·영남권·호남권을 아우르는 조정자로 충화영호(忠和嶺湖)의 정신으로 국민 대통합시대를 여는 산파역할을 해 나갈 것이다

둘째, 그동안 정성껏 가꿔온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을 완성하여 대한민국 미래 100년 먹거리를 창출해 나갈 것이다. 화장품 기술개발의 산실이 될 글로벌 코스메슈티컬개발센터를 착공하는 한편, 제천에는 글로벌 천연물 원료제조 거점시설을 구축하고, 옥천에는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를 착공하며, 괴산에는 유기식품산업단지를 완공하는 등 충북 전역을 바이오 5각 벨트로 조성해 나가겠다. 또한 국내 최대 태양광기술지원센터를 본격 가동해 나가고, 혁신도시의 솔라 그린시티 조성, 신재생에너지 융·복합타운 조성, 경로당 등 태양광 발전시설 확대(745가구) 등을 통해 충북을 아시아 최고의 솔라벨리로 육성해 나갈 것이다.

셋째, 충북형 창조경제를 구현하여 충북경제 전국대비 4%대 도약의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바이오, 화장품·뷰티, 태양광, ICT, 유기농, MRO 등 6대 신성장동력산업을 우리의 창조경제 주력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다. 특히, 충북경제의 신화를 창조할 경제자유구역을 개발하고, 오송바이오융복합산업지구(오송 제2산단)는 단지조성공

사 마무리와 함께 분양을 실시할 예정이다. 청주공항 에어로폴리스 지구는 단지 조성에 본격 착수하고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는 실시계획을 완료하며 과학벨트 SB플라자 건립, LG그룹과 함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구축해 충북 100년 미래 먹거리 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갈 것이다.

넷째, 모범적인 충북형 복지브랜드인 실버토피아 충북을 더욱 확대해 나가면서 출산에서 노후까지 모두가 행복한 감동복지를 구현해 나갈 것이다. 9988 행복나눔미 사업과 9988 행복지킴이 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시골마을 행복택시제를 시범 시행하며, 치매와 중풍에 대한 예방·검진·치료·돌봄의 체계적인 노인복지시스템을 구축하여 치매·중풍 걱정 없는 충북을 더욱 굳혀 나갈 것이다.

다섯째, 그동안 다져온 함께하는 충북의 저력을 바탕으로 도시와 농촌, 청주권과 비청주권이 함께하는 균형발전을 실현해 나갈 것이다. 도내 저발전지역의 성장거점 육성을 위한 2단계 균형발전사업으로 5년간(2012년~2016년) 2,500억원을 투자하고 7개 시·군 행복마을 조성, 지역행복생활권 사업, 중원 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 등을 추진하여 도민의 행복지수를 더욱 높여 나갈 것이다.

여섯째, FTA 등 농산물 시장 개방에 맞서 충북농업을 수출농업으로 대전환할 수 있도록 전국 제일의 유기농 특화도를 건설해 나갈 것이다. 세계 최초로 개척되는 괴산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척하여 유기농 특화도 충북의 위상을 확실히 정립하고, 농산물 수출 6억 달러 달성과 충북 고급농산물의 대중국 수출을 위한 전진기지가 될 상해 충청북도사무소를 내년부터 본격 운영해 나갈 것이다.

일곱째, 영동에서 단양까지 동네방네 행복바이러스가 퍼질 수 있도록 문화관광체육 인프라를 적극 확충해 나갈 것이다. 작은 도서관·영화관 건립, 생활체육공원 확충, 스토리창작 클러스터 조성, 세종대왕 초정 르네상스 조성, 성지순례코스 개발, 보은 바이오 산림휴양벨리 조성 등으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매력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해 나갈 것이다.

여덟째, 160만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시 하여 안심도 충북을 구현해 나갈 것이다. 도민 안전을 최일선에서 보살피는 소방인력과 장비를 확충하고, 단양소방서 신설을 끝으로 도내 전 시·군에 소방서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재난안전체험관 유치, 여성 안심귀가 서비스와 초·중·고생 안전교육 실시, 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로 안전한 충북을 실현해 나갈 것이다.

제12장 충청남도

제1절 경제 현황

1. 일반 현황

충남의 인구는 2013년 기준 205만명으로 2010년에 비해 3만명 감소하였다. 이는 연
기군이 세종시로 편입되면서 인구가 감소된 것으로 보인다. 지역내총생산(GRDP)은
2010년 83조원에서 98조원으로 증가하였으며, 1인당 GRDP는 4,524만원으로 경기도에 이
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 수출액은 2010년 541억 달러에서 19% 증가한 643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취업자 수는 2010년 97만명에서 114만명으로 증가하였다. 재정
자립도는 2010년에 비해 소폭 감소한 36.0%로 전국 평균을 하회하였다.

표 3-12-1 충청남도 경제 일반현황

구분	전국			충남		
	2007년	2010년	2013년	2007년	2010년	2013년
지역내총생산(십억원)	1,151,843	1,265,146	1,376,143	69,418	83,167	98,002
인구(천명)	49,269	50,516	51,141	1,996	2,076	2,048
1인당 GRDP(만원)	2,147	2,561	2,842	2,993	4,007	4,524
수출액(백만달러)	371,489	466,384	559,632	47,823	54,054	64,282
취업자(천명)	23,433	23,829	25,066	998	974	1,137
재정자립도(%)	53.6	52.2	51.1	36.9	36.6	36.0

주 : 지역내총생산은 2010년 기준가격임.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2. 산업 현황

충남의 산업구조는 지역내총생산액 기준으로 서비스업 37.7%, 제조업 57.5%, 농림
어업 4.4%, 광업 0.2%로 나타났다.

2013년 제조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업체수 기준으로는 '자동차 및 트레일러'가 13.2%로 가장 높았다. 종사자수 및 생산액 기준으로는 '전자부품·컴퓨터통신장비'가 각각 19.5%, 23.2%로 나타났다. 그 외에는 '식료품', '기타 기계 및 장비' 등의 업종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표 3-12-3 충청남도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07년			2010년			2013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제조업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식료품	13.4	8.9	5.5	12.5	8.5	4.6	11.7	7.6	4.6
의복, 의복액세서리	1.1	0.6	0.1	0.9	0.3	0.1	0.9	0.5	0.1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9.7	7.5	3.8	10.0	8.3	3.7	9.7	7.7	3.9
금속가공제품(기계·가구 제외)	10.5	6.0	3.3	11.8	6.9	2.8	11.5	6.3	3.2
전자부품·컴퓨터·통신장비	4.6	21.5	23.1	4.4	20.7	31.0	4.4	19.5	23.2
전기장비	4.8	5.5	3.6	5.5	7.8	5.2	4.8	7.0	5.1
기타 기계 및 장비	11.6	8.7	4.8	11.8	10.1	4.6	12.9	10.0	4.6
자동차 및 트레일러	10.9	14.9	15.0	10.6	14.8	10.3	13.2	15.4	11.9
기타 제품	0.5	0.2	0.0	0.4	0.2	0.0	0.4	0.2	0.0

주 : 2010년은 경제총조사 자료임.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광업·제조업 조사 ; 경제총조사(2010)」

표 3-12-3 충청남도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07년			2010년			2013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서비스업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1.0	3.3	8.4	0.8	2.2	6.2	1.2	3.0	11.6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0.8	1.5	3.2	1.4	3.2	9.4	1.1	1.6	2.4
부동산업 및 임대업	13.8	9.7	17.7	11.2	6.3	15.1	13.5	8.4	15.2
사업지원 서비스업	3.7	11.0	6.8	3.3	9.6	7.2	5.4	15.8	11.8
교육 서비스업	15.6	14.3	8.8	16.2	32.4	29.4	14.6	10.7	7.3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2.3	29.0	30.4	11.9	22.9	16.7	15.9	34.4	29.6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13.3	9.7	10.8	10.1	5.8	6.4	11.7	7.5	8.6
기타 개인 서비스업	39.6	21.4	13.9	45.0	17.5	9.5	36.6	18.6	13.4

주 : 2010년은 경제총조사 자료임.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전국서비스업조사 ; 경제총조사(2010)」

2013년 서비스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업체 수로는 '기타 개인 서비스업'이 36.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종사자수 및 생산액 기준으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34.4%, 29.6%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부동산업 및 임대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의 업종 비중이 높았다. 2007년과 비교할 때 '사업지원 서비스업' 비중이 다른 업종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소폭 하락하였다.

3. 혁신활동 현황

연구개발 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기준 연구개발비 2.6조원, 연구개발인력 24,425명, 연구개발조직수 1,142개로 나타났다. 전국대비 비중 변화는 2007년에 비해 연구개발비, 인력, 조직수의 비중이 소폭 하락하였다. 특히 연구개발비는 2010년 전국 대비 6.1%였으나, 2013년은 1.7%p 하락한 4.4%로 나타났다.

특허 현황을 보면, 2013년 기준으로 특허출원은 6,020건이며, 등록은 3,379건으로 전국 대비 비중은 각각 3.8%, 3.5%로 나타났다. 2007년과 비교할 때, 출원 건수는 1,408건 증가하여 전국대비 비중이 0.2%p 증가하였으며, 등록 건수는 846건 증가하여 0.7%p 증가하였다.

표 3-12-4 충청남도 혁신활동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 건, %)

구분		2007년	2010년	2013년
연구 개발	연구개발비	1,504,689 (4.8)	2,686,605 (6.1)	2,628,163 (4.4)
	연구개발인력	18,881 (4.5)	24,472 (4.9)	24,425 (4.3)
	연구개발조직수	559 (4.5)	777 (4.4)	1,142 (4.1)
특허	출원	4,612 (3.6)	4,640 (3.5)	6,020 (3.8)
	등록	2,533 (2.8)	1,615 (3.1)	3,379 (3.5)

주 : ()는 전국대비 비율임.

자료 : 1)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년도

2) 특허청, 지식재산통계연보, 각년도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충남은 지리적 관점, 산업적 관점, 환경·문화적 관점에서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먼저 지리적 관점에서 우리나라 국가 교통 네트워크의 중심지이며, 대산항·당진항·보령항 등 동아시아 및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네트워크의 중심으로서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특히 동북아 경제권의 급성장과 중국과의 교역량 증가로 인해 서해안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된 현시점에서의 충남은 환황해권 교류거점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역이다. 산업적 관점에서 충남은 세계 최대의 디스플레이 집적지이자, 국가 3대 석유화학단지 중 하나인 대산석유화학단지, 일관제철을 갖춘 철강산업집적지 등 국가 주요 기간산업이 집적화되어 있다. 환경·문화적 관점에서 백제문화, 내포문화 등의 풍부한 지역문화자원과 경제적 가치가 높은 생태자원(습지, 사구, 갯벌 등)이 분포하고 있다. 또한 서해안 관광자원이 풍부해 문화, 휴양 등 다양한 관광활동이 가능하다. 이를 바탕으로 동아시아 관광의 중심지로서 발돋움 할 수 있을 것이다.

발전 잠재력을 바탕으로 충남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발전과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지리적 관점에서 세계경제의 주역으로 떠오른 중국 등 신흥아시아국은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와 유사한 특징을 보이고 있어 우리나라 수출시장 잠식 및 생산설비의 해외 이전 등으로 지역산업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에 대비하여 충남의 가장 큰 강점인 지리적 중심성을 살려 환황해 경제권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항만·내륙 교통체계를 연계하여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 진출의 교두보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산업적 관점에서는 충남의 특화산업 및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고 다양한 창의적인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개발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연구 및 산업근로자를 위한 정주기반을 구축하여 많은 우수한 인적 자원이 이주하여 정착할 수 있는 지역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또한 제조업 중심에서 R&D중심의 기업으로 변화하여 IT산업의 기술고도화 및 융복합화를 통한 신성장 동력을 창출함으로써 아시아 IT산업의 급성장에 대한 능동적 대응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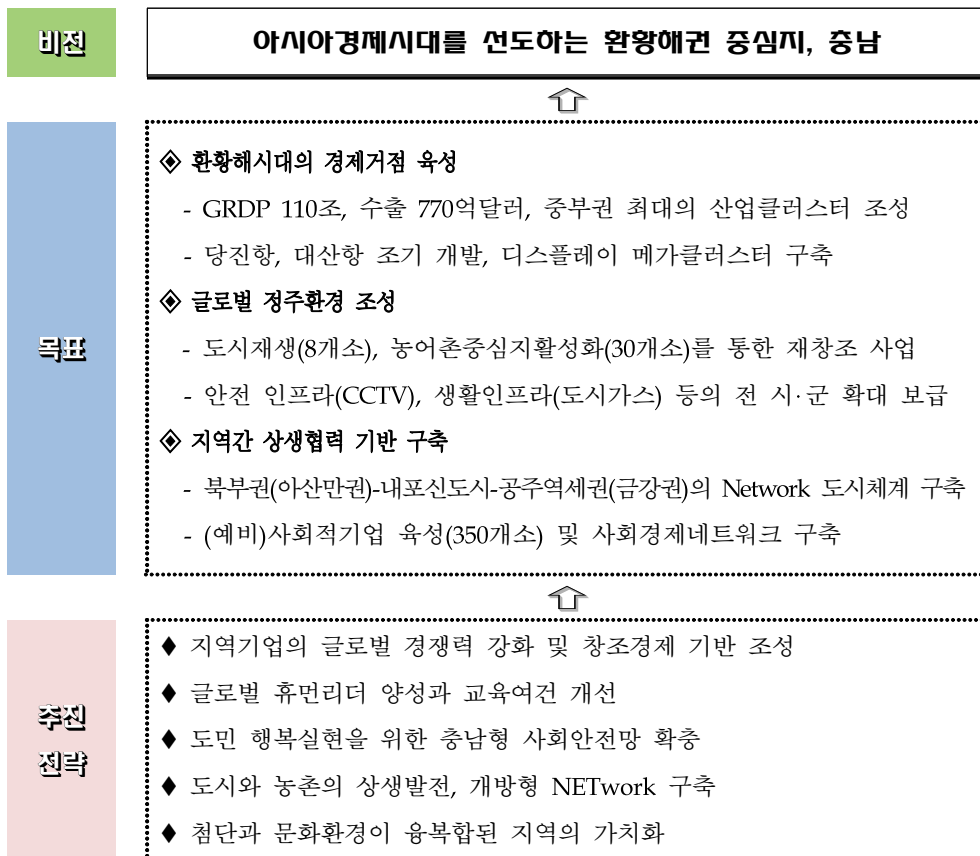
환경·문화적 관점에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확실시 되고 있는 백제문화유산을 중심으로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을 활용한 '관광충남'을 만들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 따라서 충남의 문화와 자연환경을 세계에 홍보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함과 동시에 세계적인 관광지로 거듭나기 위한 관광기반 확충이 필요하다.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1. 발전비전

충남은 '아시아 경제시대를 선도하는 환황해권 중심지, 충남'으로 발전비전을 설정하였다. 발전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해 충남의 지리적 이점과 산업적인 이점을 고려하여 환황해시대의 경제 거점 육성, 글로벌 정주환경 조성, 지역간 상생협력 기반구축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그림 3-12-1 충청남도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2. 추진전략

충남의 발전비전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전략은 ‘지역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창조경제 기반 조성’, ‘글로벌 휴먼리더 양성과 교육여건 개선’, ‘도민 행복실현을 위한 충남형 사회안전망 확충’,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 개방형 NETwork 구축’, ‘첨단과 문화환경이 융복합된 지역의 가치화’ 등 5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지역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창조경제 기반 조성’을 위해서 신성장 동력 및 주력산업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과학기술 연구개발 거점지역으로 충남을 자리매김하여 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자원에 기반한 관광 및 문화유산 개발을 추진한다.

‘글로벌 휴먼리더 양성과 교육여건 개선’의 구체적인 세부전략은 지역여건에 맞는 산학협력 선도·특화산업 거점대학 육성 및 특성화를 지원하고, 지역일자리 맞춤형 직업교육 및 능력을 강화한다. 또한 충남 소재 대학교육 역량강화를 통한 실용중심의 실력있는 인재를 배출하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의 평생교육 기반 확대 및 다양한 평생교육 인프라를 확충한다.

‘도민 행복실현을 위한 충남형 사회안전망 확충’의 세부전략은 초고령 사회에 대응한 지역사회 복지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정책을 강화한다. 또한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계층별 복지서비스 구축 및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의료부분에서는 지역거점 의료시설의 원격진료 시스템 확충 및 농촌시설간의 연계를 확대한다.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 개방형 NETwork 구축’의 세부전략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역별 맞춤형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통한 경쟁력 있는 도시로 재창조하는 것이다. 두 번째, 생활권별 비전공유와 협력사업 추진을 통한 충남의 발전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 지역주도의 생활기반형 사업을 통해 주민체감형 인프라를 구축하고 생활권 내 또는 생활권 간 연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교통망을 확충한다.

‘첨단과 문화환경이 융복합된 지역의 가치화’ 부문에서의 세부전략은 지역문화관련 시설의 생활권 확충 및 공동이용을 확대하고 농어촌 지역 내 문화·생활편의시설 확충을 통한 문화격차를 해소하는 것이다. 또한 지역 간 연계형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산업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도 이 부문의 중요한 전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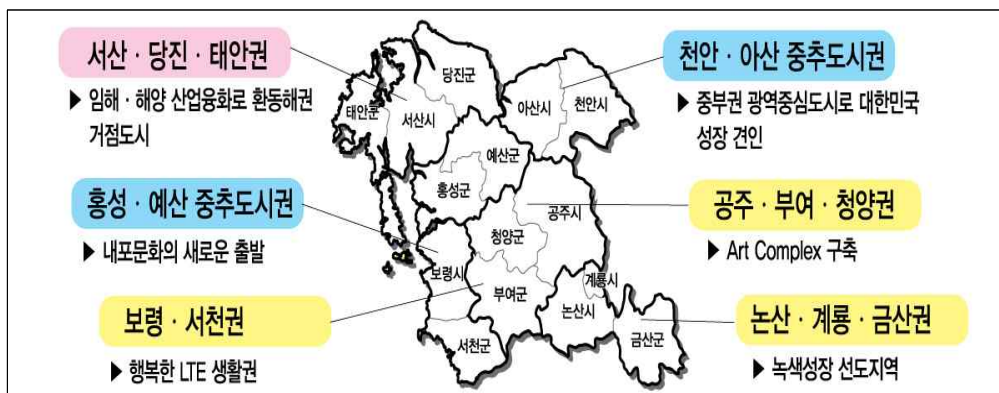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1. 지역생활권 활성화

(1) “지역행복생활권” 추진현황 및 성과

충남의 지역행복생활권은 천안·아산 중추도시생활권, 홍성·예산 중추도시생활권, 서산·당진·태안 도농연계생활권, 공주·부여·청양 농어촌생활권, 논산·계룡·금산 농어촌생활권, 보령·서천 농어촌생활권 6개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3-12-2 충청남도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천안·아산 중추도시생활권은 천안 추모공원을 공동이용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추 도시생활권 협의회를 발족하고, 협의회 운영에 관련 규정 개정을 협의하였다. 또한 천안·아산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정보센터’를 조성하고 있다. 복합문화정보센터에서는 도시통합관계 센터, 지역 아카이브 도서관, 천안·아산 상생협력 센터를 수용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특히, 본 센터는 도시 간 기능을 연계한 공공·상업서비스 이용공간으로서 동일생활권 기능을 강화하는 촉매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2) 지역별 추진현황 및 성과

충남은 환경과 자연을 생각하는 녹색산업의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 중 하나로 하수도 정비 및 설치사업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하수관거 정비사업(11개 시·군 18개 지구 중 5개 지구 준공), 공공하수 처리시설 설치사업(11개 시·군 20개 지구 중 6개 지구 준공),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11개 시·군 28개 지구 중 8개 지구 준공), 면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2개 시·군 2개 지구 중 1개 지구 준공) 등 6개 생활권 전반의 하수도 환경인프라 사업을 진행하였다.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농어촌 생활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농어촌 마을 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을 하였다. 서천과 청양지역의 2개소 마을에 LPG 소형 저장탱크 및 배관망을 설치하여 도시가스와 같은 방법으로 LPG를 공급함으로써 기존 등유대비 약 20~30% 저렴한 연료공급이 가능하게 되었다.

지방상수도가 미 보급된 농어촌 면단위 지역 주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사업을 하였다. 이 사업의 결과로 상수도 보급률이 2013년 90.1%에서 2014년 91.1%로 향상되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를 위해서 10개 읍·면(송악읍, 합덕읍, 결성면, 비봉면, 군북면, 운산면, 청라면, 정안읍, 서천읍, 금산읍)의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비봉면, 결성면, 송악읍은 기본계획서를 수립하여 고시하였으며, 합덕읍은 천주교 도보순례코스(L=3.2km)정비사업을 완료하여 관광산업과 연계하여 농촌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있다.

일반농산어촌 지역개발 사업을 통해 지속적인 주민교육으로 상향식 마을개발 의지를 높였다. 마을단위 법인 설립 등으로 체계적인 마을관리 및 대외활동 영역을 확장하여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주민간 연대의식을 강화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을 통해 도서지역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난지섬 용못공원 내 방갈로 3동 조성 완료(2014년 7월 31일), 대난지섬 해안 및 소방도로 개설 공사 보상추진 및 착공(2014년 9월 25일), 소난지섬 해안도로 공사추진 완료(2014년 12월 15일), 대난지섬 해안 및 소방도로 개설공사의 보상협의 완료 및 소난지섬 해안도로 개설공사 완료 등의 성과를 시현하였다. 이러한 기초생활기반의 확충으로 난지섬의 교통여건 개선, 관광객 유치 및 주민생활여건 개선에 기여하였다.

2.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충남은 농어촌 자원복합산업화로 농촌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역특화 품목 육성사업을 시행하였다. 2014년에는 기존에 설치한 우리밀 누룩제조 및 누룩발효시설과 연계를 위한 지역특화품목(우리밀) 저온 보관시설 지원사업으로 저온보관시설(330㎡)을 설치하였다. 본 사업으로 지역에서 생산중인 우리밀 매입 및 보관이 용이하게 되고, 우수한 품질의 우리밀누룩을 제조 원료로 공급이 가능해졌다. 또한, 우리밀을 원료로 제조한 누룩을 지역 특산품인 소곡주의 발효제로 소곡주 공장, 농가에 공급가능하게 되어 우리밀의 생산·가공·유통과 연계된 농업소득의 창출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다.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은 품종갱신, 관정, 에너지 저감시설, 재배예방시설 등을 8개 시·군(천안, 공주, 보령, 아산, 논산, 당진, 부여, 예산)에 설치하였다. 이 사업을 통해 충남지역의 과수의 품질을 높여 농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농가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었다.

충남은 도내 중소기업 생산물의 해외판로를 개척하기 위하여 해외 마케팅 지원사업을 시행하였다. 이는 엔저(低) 등 어려운 국·내외 여건 속에서도 다양한 해외마케팅 지원으로 충남지역 생산물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수출기업이 원하는 해외바이어 발굴 및 시장정보 제공을 위해 무역사절단, 해외전시회, 바이어 찾기 사업 등 수출기업친화형 사업추진으로 만족도를 높이는 효과를 거두었다. 수출실적은 잠정치 652억 달러로 전년 642억 달러 대비 1.6%가 상승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충남은 전국적으로 수출순위 3위(경기>울산>충남), 무역수지 2위(경북>충남)를 기록하였다. 실질적인 수출지원 업체 수는 목표 1,720업체 대비 2,162업체를 지원해 목표대비 126% 달성하였다. 수출지원성과는 수출상담 15억 달러, 수출계약액 1.4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도내 농산물을 위한 지원사업은 ‘부여 굿뜨래’와 ‘금산 인삼’ 등 지역 브랜드 마케팅을 통해 농·특산물의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으로 농민들의 소득을 증대하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국내·외 마케팅 강화를 통해 인지도를 높이고 판매량을 늘리며, 농산물에도 경영적 마인드를 가지고 전략적 접근을 할 수 있도

록 돕는 경영혁신교육을 강화하였다. 본 사업을 통해 '부여 굿뜨래' 브랜드로 매출 2,800억원, 수출 7,88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금산인삼'은 수출 2,950만 달러 초과 달성, 해외마케팅 6회, 금회 해외매장 개설, 대도시순회특별전 매출 1,903백만원, 국제인삼교역전(상담회) 1,580만 달러 등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기 위한 창조지역사업으로 금산군은 자치종합대학과 목조건축학교를 운영하였다. 자치종합대학은 새로운 산업구조와 트렌드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에 맞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산재된 평생교육사업을 자치종합대학에 편입하여 다년간 축적된 노하우와 인적·물적자원 활용으로 효율성을 극대화한 평생교육기관이다. 자치종합대학으로 취업 1명, 창업 2개소, 136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또한 배움의 수혜를 받은 만큼 이를 금산지역으로의 환원을 통해 사업효과에 의미를 더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자치종합대학의 바리스타 동아리는 카페운영 수익금 전액인 400만원을 장학금으로 기증하였다. 이를 통해 나눔의 선순환과 공동체 의식의 함양에도 기여한 바가 크다. 특히, 노후된 불법 건축물인 마을회관의 리모델링을 통하여 방치된 불법 건축물이 마을의 자산으로 탈바꿈하였고, 지역민의 공동 문화공간으로 조성되어 활력 있는 지역 만들기에 일조하였다. 또한 단순 지도 역할이 아닌 수강생들의 취·창업 등 일자리창출까지 연계한 사후 관리와 우수 수강생 중 취·창업 희망자에 대한 지속적 관리를 통해 지역경제 활력에 큰 기여를 하였다.

지역농산물의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는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사업을 지원하였다. 충남은 3농혁신 특화사업의 하나로 공주 우성농협, 당진 신평농협, 홍성농협, 태안 남면농협 4개소에 로컬푸드 매장설치를 도지원사업으로 지원하였다. 논산계룡농협은 중앙지원 공모사업으로 로컬푸드 매장을 설치하였다. 이와 함께 직매장 유통 농산물 품질 및 안전관리를 위한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과 MOU 체결(2014년 9월 24일)을 하였다.

한·미 FTA 등 시장개방에 따른 대량 농산물의 수입에 대응한 전략적 특화품목 육성 및 유통시설 지원을 위해 서천 농특산물 전처리 및 유통시설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농산물의 품질 고급화를 통한 대응력을 제고하였다. 2014년도 추진실적은 친환경쌀 저온저장시설 1개소와 잡곡집하·선별·저온저장시설 1개소를 지원하였다. 친환경쌀 저온저장시설은 450농가 계약재배(2,300톤 수매/6,900백만원)로 국내 롯데매장, 수원시 등에 학교급식용 친환경쌀을 납품하였다. 잡곡집하·선별·저온시설은 150농가에 수매

(228톤/1,389백만원)를 실시하여 전처리 실시·소포장재 개발 등으로 대도시 대형매장 판촉으로 유통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충남은 산업수요맞춤형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의 지원을 확대하였다. 이를 위해 충남발효식품고를 식품분야 마이스터고로 선정하고 충남발효식품고 기숙사 및 실습동을 지원하였다. 또한 특성화고 취업지원인력 36명을 지원하였다.

교육여건개선을 위해 소규모학교 적정 규모화 사업을 시행하였다. 이 사업을 통해 유치원 4원(대평초병설유치원, 도성초병설유치원, 대남초병설유치원, 대관초병설유치원), 초등학교 3교(광남초, 대평초), 중학교 1교(광천여중)의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고, 통폐합 지원금 국고보조금 160억을 확보하였다. 이를 통해 보령지역의 소규모 병설유치원을 통합한 단설유치원 설립과 홍성 광천지역 초·중학교 재배치를 통한 소규모학교의 적정규모화 기여하여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충족시켰다.

산학협력 선도 전문대학 육성사업의 하나인 아주 자동차 대학의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을 통해 충남의 산업구조에 맞는 인력을 양성하고,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수자동차 분야 및 자동차와 IT 분야에서의 대학 역할모델 구축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취·창업 강좌를 통한 특허 출원 및 취득한 특허의 기술거래를 주선하여 자동차 산업 현장실무형 기술인력을 양성하였다.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인 공주대학교 특성화 사업으로 공주대학교는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2012년~2022년)을 수립하고, 특성화 사업단 선정을 위한 평가 계획수립사업단을 5개(농업6차 산업화 전문인력양성사업단, 창조문화 트랜스형 인재양성사업단, Eco기후환경융합 인력양성사업단, IT융합 글로벌 인력양성사업단) 선정하였다. 또한 학부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기획, 관리 및 평가를 총괄하는 전담조직으로 '대학교육기획단'을 본부 조직으로 신설하였다. 특성화 여건 및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교육과정 개선, 학습 지원체제 및 실험실습 지원 확대 등 학부교육을 강화하였다.

BK21 플러스 사업인 단국대학교 친환경,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한 동물자원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통해 단국대학교는 동물산업분야에 산업적 실효성을 갖춘 연구업적 12

편과 그 외 연구가치가 인정되는 논문 15편을 게재하였고, 해외 석학 초빙강의, 해외 논문 발표, 영어수업 등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하였다.

대학중심의 평생교육활성화 지원사업인 공주대학교 대학중심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선취업후진학 현장 맞춤형 학과(전공)를 설치(특성화고졸재직자 전형/계약 학과 신설 : 총 2개과/융·복합 전공 설치 : 4개)하였고, '평생학습 행복 파트너' 제도, 평생학습설계 상담 실시 등 후진학 거점센터 추진을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전문인력을 전담 배치하였다.

4. 지역 문화 융성, 생태 복원

충남은 인구밀도가 높지 않는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도서관을 건립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지역에 작은 도서관을 조성하는 사업을 시행하였다. 생활공간 가까운 곳의 유휴 공간 및 기존 문고의 리모델링(서가·열람 공간 조성, 도서·PC 등 물품 구입 경비)을 통해 주민의 지식정보 접근성 향상 및 지식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였다. 그 결과 공주 반포 작은도서관, 서산 예천 한성필 작은도서관, 수림 작은도서관, 예산 덕산 작은도서관을 조성하였다.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은 문화로 지속성장 가능한 문화생태계 조성으로 지역문화 융성 및 창조경제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충남은 2014년도에 문화도시 1개소, 문화마을 3개소를 조성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별 문화공동체 6개소(공주, 부여, 천안, 당진, 홍성, 예산)를 구성하였고, 특화된 도시·마을 6개소(공주, 부여, 천안, 당진, 홍성, 예산)의 자원을 조사하였다. 또한 마을문화 콘텐츠 개발 및 컨설팅(1식/3회 컨설팅, 1회 워크숍)을 지원하였다. 공주역사문화도시조성 사업의 사업내용을 보면 공산성 환경정비 지구 및 고마나루 역사 환경지구정비, 진입부(시가지)경관 개선 및 야간 경관 특화사업, 백제역사문화 체험·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이 있다. 부여역사문화도시조성 사업으로 성왕로 2단계 정비사업(성왕로타리~경찰서 구간 0.91km 정비)의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을 완료하였다. 또한 상징가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역사·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노력하였다.

생태하천복원사업으로 10개 하천(총연장 51.9km)을 복원 중에 있고, 이 중 예산 덕

산·대치천은 사업을 완료하였다. 이외에도 도랑살리기 사업, 소하천 정비사업, 지방하천 정비사업 등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환경을 조성하고, 재해 사전예방 및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중증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을 통해 장애인 3,090명을 지원하였다.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지전달체계 구축사업을 통해 맞춤형 전달체계를 개선하여 161명에게 4,830백만원을 전달하였다. 또한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를 구축(개별급여)하여 57명에게 855백만원을 보조하였다. 다문화 가족 아동청소년 언어발달지원 사업으로 668명에게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진단·평가·수업·상담 등을 실시하여 2014년도 만족도 조사결과 5.0만점에 4.7점을 얻어 높은 만족도를 성취하였다.

시민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예방사업인 아산시 주민정신건강 증진사업을 통해 우울증 선별검사 15,687명, 자살예방교육 53,294명(16개 진료소 중심 228회 실시), ‘생명사랑 행복마을’ 운영 등의 성과를 거두었고, 재가정신질환자 3,578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였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13개 건강증진사업(금연, 절주, 신체활동, 영양, 비만, 구강보건,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방문 관리, 임산부 어린이 건강관리, 한의약건강증진, 치매검진, 재활, 아토피천식예방) 운영을 지원하였다. 특히 지역여건과 주민 요구를 반영하여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을 선정·추진하여 2014년 정부합동평가 지표 중 주민체감도 ‘가’ 등급을 획득하는 성과를 얻었다.

고용취약계층에 적합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포괄보조사업에서 2014년도 일자리창출 실적은 1,164명(아동인지포함)으로 당초 일자리창출 목표인원(1,160명)을 초과 달성하였다.

제4절 향후 추진계획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생활 인프라 확충사업으로 농어촌 마을 상하수도 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상수도 보급률은 90%를 넘었지만 하수도는 아직 70% 초반에 머무는 실정으로 환경·생태적 측면에서도 하수도 보급률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충남은 2015년에 13개 시·군 29개 지구에 공공하수처리 시설 및 하수관거 설치사업을 신속한 행정절차로 실행할 계획이다.

또한 주민의 건강지수를 높이고 생활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15개 시·군, 39개 지구를 대상으로 상수도시설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그리고 삶의 질 개선과 직결되는 또 하나의 사업으로 농어촌 마을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마을 주민 동의를 최우선 순위로 하여 대상마을을 선정하였고, LPG 산업협회 위탁사업으로 추진하여 당해년 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사업비확보 등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농촌 자원복합 산업화 지원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사업이다. 서천 농특산물 인터넷 쇼핑몰 농사랑 운영사업은 농산물 판로확보가 불투명한 소농에 대한 판매대책을 추진하고, 농특산물 수급불균형(과잉생산, 홍수출하 등)에 따른 가격하락 농특산물 판로대책 마련에 중점을 두고 진행한다. 또한 농가 전자상거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전산, 고객·품질 관리)을 강화한다.

지역연구기반 조성사업으로 농업기술원 및 특화작목시험장 개발을 위한 육종 및 연구 시설·장비 구축을 통해 신품종 육성·보급 및 연구개발 기술을 보급한다. 이를 통해 충남의 경제를 R&D중심으로 전환하는 데 노력한다.

관광자원개발사업, 산업관광육성, 문화유산 관광자원개발 사업을 통해 동아시아 관광의 중심지로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관광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충남의 관광경쟁력을 높일 것이다. 또한 관광수요의 변화와 동향, 지역에 대한 개발여건 등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개발사업 추진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특히 체험·학습형 관광자원을 적극 개발하여 창조관광의 세계적 트렌드에 발맞추어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로 성장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자연자원뿐만 아니라 문화자원을 발굴하여 이를 관광자원화하고 지역의 정체성을

찾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면천두견주 전수회관 공사를 발주하여 준공하고, 수영성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발굴조사 및 토지매입을 추진한다. 성주사지 유물박물관 디지털 전시 자료관 건립의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돈암서원 연차별 계획에 의거하여 교육문화 및 체험공간 조성, 내포보부상촌 조성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제13장 전라북도

제1절 경제 현황

1. 일반 현황

전북의 인구는 2013년 기준 187만명으로 2010년에 비해 0.4만명 증가하였다. 지역내 총생산(GRDP)은 2010년 37조원에서 39조원으로 증가하였으며, 1인당 GRDP는 2,343만원으로 나타났다. 수출액은 2010년 105억 달러에서 4% 감소한 101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취업자 수는 2010년 82만명에서 88만명으로 증가하였다. 재정자립도는 2010년에 비해 소폭 증가한 25.7%로 전국 평균을 하회하였다.

표 3-13-1 전라북도 경제 일반현황

구분	전국			전북		
	2007년	2010년	2013년	2007년	2010년	2013년
지역내총생산(십억원)	1,151,843	1,265,146	1,376,143	33,724	36,632	38,977
인구(천명)	49,269	50,516	51,141	1,862	1,869	1,873
1인당 GRDP(만원)	2,147	2,561	2,842	1,675	2,042	2,343
수출액(백만달러)	371,489	466,384	559,632	6,354	10,505	10,116
취업자(천명)	23,433	23,829	25,066	828	817	876
재정자립도(%)	53.6	52.2	51.1	23.5	24.6	25.7

주 : 지역내총생산은 2010년 기준가격임.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2. 산업 현황

전북의 산업구조는 지역내총생산액 기준으로 서비스업 63.9%, 제조업 26.9%, 농림어업 8.9%, 광업 0.3%로 나타났다.

2013년 제조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업체수 기준으로는 '식료품'이 15.5%로 가장 높았다. 종사자 수 및 생산액 기준으로는 '자동차 및 트레일러'가 각각 21.9%, 26.3%로 가장 높았다. 그 외에도 '금속가공제품', '기타 기계 및 장비' 등의 비중이 다른 업종에 비해 높았다.

표 3-13-2 전라북도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07년			2010년			2013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제조업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식료품	17.7	18.2	13.7	15.7	18.0	14.1	15.5	15.6	15.0
의복, 의복액세서리	9.1	4.2	1.3	7.7	4.0	0.8	7.2	3.4	0.8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5.5	3.6	2.4	5.9	4.3	2.3	5.2	4.0	2.3
금속가공제품(기계·가구 제외)	7.2	3.7	1.4	11.3	8.8	2.1	10.7	6.8	2.3
전자부품·컴퓨터·통신장비	1.8	5.4	3.0	1.8	2.9	4.1	2.0	4.2	2.9
전기장비	2.7	2.2	2.0	3.4	3.1	1.9	3.6	2.9	1.8
기타 기계 및 장비	7.0	6.0	4.8	7.4	6.8	4.9	8.3	7.3	6.1
자동차 및 트레일러	12.2	22.7	30.2	11.5	23.0	27.0	12.7	21.9	26.3
기타 제품	1.2	0.7	0.3	1.2	0.6	0.3	1.2	0.6	0.3

주 : 2010년은 경제총조사 자료임.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광업·제조업 조사 ; 경제총조사(2010)」

표 3-13-3 전라북도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07년			2010년			2013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서비스업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0.8	2.3	4.7	0.7	1.7	3.6	1.0	2.3	6.7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0	2.8	5.6	1.7	4.1	13.7	1.2	2.0	3.8
부동산업 및 임대업	10.3	9.7	16.4	8.8	6.2	9.7	11.4	8.2	17.6
사업지원 서비스업	3.4	10.2	7.0	3.0	8.5	5.4	4.7	13.7	9.8
교육 서비스업	18.9	14.0	8.1	18.9	29.5	27.9	18.3	11.0	7.1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3.7	33.5	37.5	12.5	26.7	24.9	16.5	38.9	37.7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11.7	8.4	7.6	9.0	5.5	4.4	10.4	7.4	6.3
기타 개인 서비스업	40.3	19.1	13.1	45.4	17.8	10.4	36.6	16.4	11.0

주 : 2010년은 경제총조사 자료임.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전국서비스업조사 ; 경제총조사(2010)」

2013년 서비스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업체 수로는 '기타 개인 서비스업'이 36.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종사자 수 및 생산액 기준으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38.9%, 37.7%로 가장 높았다. 그 외에도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았다. 2007년과 비교할 때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비중이 증가하였으며,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전반적으로 비중이 감소하였다.

3. 혁신활동 현황

연구개발 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기준 연구개발비 8,751억원, 연구개발인력 13,385명, 연구개발조직수 603개로 나타났다. 전국대비 비중 변화는 2007년에 비해 연구개발비, 인력, 조직 수 모두 0.3~0.4%p 증가하였다.

특허 현황을 보면, 2013년 기준으로 특허출원은 3,789건이며, 등록은 1,615건으로 전국 대비 비중은 각각 2.4%, 1.7%로 나타났다. 2007년 대비 출원 건수는 2,155건 증가하여 전국대비 비중이 1.1%p 증가하였으며, 등록 건수는 775건 증가하여 0.8%p 증가하였다.

표 3-13-4 전라북도 혁신활동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 건, %)

구분		2007년	2010년	2013년
연구 개발	연구개발비	382,865 (1.2)	530,798 (1.2)	875,085 (1.5)
	연구개발인력	9,008 (2.1)	11,225 (2.2)	13,385 (2.4)
	연구개발조직수	222 (1.8)	362 (2.0)	603 (2.2)
특허	출원	1,634 (1.3)	2,455 (1.9)	3,789 (2.4)
	등록	840 (0.9)	615 (1.2)	1,615 (1.7)

주 : ()는 전국대비 비율임.

자료 : 1)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년도

2) 특허청, 지식재산통계연보, 각년도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전북은 그동안 전통적인 농도로서 산업구조가 취약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되었으나, 중국의 부상으로 서해안시대가 도래함으로써 늘어나는 기업유치와 함께 산업구조가 고도화되고 있다. 최근 KTX 개통으로 광역접근성의 향상과 더불어 세종시와 혁신도시 개막이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여 지역 간 격차를 줄여나가는 전환점이 되고 있다.

새만금은 개발청 출범으로 인프라 구축, 내부개발의 본격화, 한중경협단지 조성 등을 통해 국가발전의 신 성장거점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으며, 중국과의 접근성, 대규모 용지확보 가능성 및 새만금 개발의 잠재력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서해안시대의 대중국 교역의 전진기지로 발돋움해 나갈 것이다.

이와 같은 발전 잠재력을 활용하여 문화융성과 창조경제를 선도하는 전북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발전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새만금을 대중국 전진기지 및 창조경제의 요람으로 개발한다. 새만금 개발의 잠재력과 중국과의 접근성 등을 활용하여 대중국 교역의 전진기지로 개발하고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창조경제의 요람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둘째, 창조경제를 선도할 신산업 육성으로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한다. 솔라밸리, 해상풍력단지 등 새만금 및 배후지역에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집적화시켜 에너지산업의 글로벌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탄소소재 및 인쇄전자, 방사선융합기술, LED 융합 산업 등 창조경제의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실증연구단지, 지역창조기업, 우수인력 양성 등을 통해 지식 생태계로 조성해 나갈 것이다.

셋째, 농식품산업 기반을 활용한 농생명수도를 조성한다. 농촌진흥청 등 농생명 연구기관, 국가식품클러스터의 농식품 제조·가공, 새만금의 대규모 수출농업 등 농생명 관련 기관·기업이 연계된 가치사슬을 형성하여 아시아 농생명 산업의 허브를 구축할 계획이다.

넷째, 전통문화자원을 활용한 한문화(K-Culture) 창조거점을 조성한다. 전통문화가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부상하여 비교우위에 있는 전북 한문화 자원을 원형 발굴하고, 한문화 확산의 중심으로서 종합적인 체험·교육·관광·소비의 거점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다섯째, 관광산업의 신성장 동력화를 추구하고 연계관광을 육성한다. MICE 및 비

즈니스 산업을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으로 육성하고, 도심문화관광의 거점화, 마을관광과 연계한 대안관광 프로그램화, 동부권 휴양·힐링의 거점 조성 등을 통해 관광산업의 신성장 동력을 구축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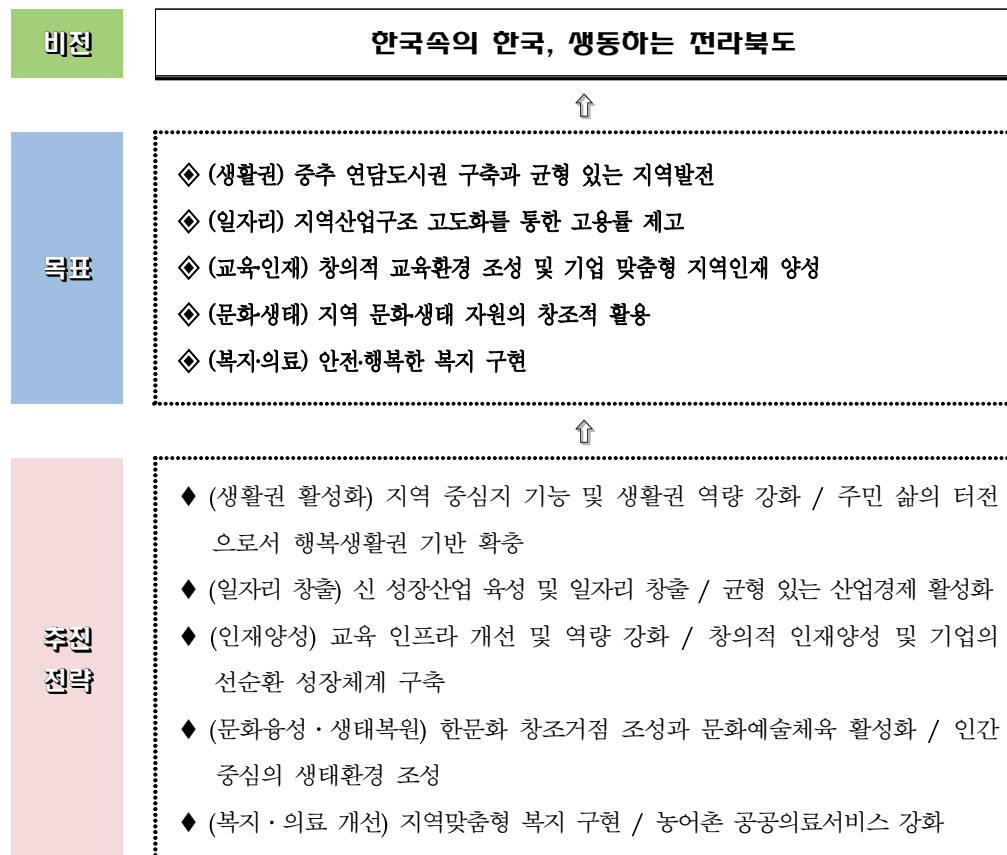
여섯째, 맞춤형 복지 및 복지전달체계를 개선한다. 도·농간 복지서비스 불균형 해소와 복지체감도 제고를 위해 발달단계별 차별화된 생애주기 맞춤형 복지, 지역의 복지 수요와 공간적 구조에 맞는 지역 맞춤형 복지, 수요자 중심의 재정 맞춤형 복지, 그리고 소득계층별 맞춤형 복지 등의 추진으로 누구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전복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1. 발전비전

전라북도는 지역이 간직한 고유의 전통문화 자원과 청정 생태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가장 한국적인 모습과 가치를 담아 ‘한국속의 한국’을 구현하고, 21세기 새로운 전북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농업농촌 삼락정책, 토탈 관광 시스템 구축, 탄소산업 육성 등을 통한 ‘생동하는 전라북도’ 실현을 목표로 하여 대한민국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의 중심지 그리고 국민행복 일번지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그림 3-13-1 전라북도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2. 추진전략

전북은 발전비전의 달성을 위해 10개 추진전략에 대한 44개 세부과제를 확정하여 충실히 실행해 나갈 것이다. 첫째, 지역 중심지 기능 및 생활권 역량 강화를 위해 도시기능 재생 및 농어촌 중심지 육성 과제를 추진하고, 창조적 마을 만들기와 지역공동체 활성화, 시·군간 연계·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둘째, 주민 삶의 터전으로서 행복생활권 기반 확충을 위해 생활 인프라, 주민체감형 사회안전망 구축, 그리고 SOC 확충 등의 과제를 적극 추진하여 지역행복생활권을 활성화해 나갈 것이다. 셋째, 신성장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략산업인 탄소산업과 농생명 허브 조성을 통해 지역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람이 모이는 관광 기반 구축을 통해 관광산업을 육성할 것이며, 지속가능한 농촌 경쟁력 강화를 통해 전북을 활력 넘치는 지역으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

넷째, 산업경제 활성화 분야는 과학기술의 인프라 및 지역주민 밀착형 기반 구축을 달성하고, 산업단지의 혁신역량 강화와 혁신도시 중심의 산업클러스터 조성으로 창조경제의 거점지역을 육성하여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다섯째, 교육 인프라 개선 및 역량 강화를 위해 농어촌 교육을 구현하고 인재 양성, 평생 직업교육대학 육성 및 평생교육 활성화를 추진하여 공교육 여건 개선 및 평생학습체제를 구축할 것이다.

여섯째, 창의적 인재양성 및 기업의 선순환 성장체계 구축을 위해 지방대학 경쟁력과 직업교육을 강화하여 맞춤형 인재를 양성해 나갈 계획이다. 일곱째, 한문화 창조거점 조성 and 문화예술체육 활성화를 위해 한문화 창조거점 조성 and 생활문화 중심의 문화복지 강화를 통해 문화 격차를 해소해 나갈 것이다.

여덟째, 인간 중심의 생태환경 조성을 위해 생태환경 자원의 보전·복원 및 환경자원의 현명한 이용 등을 추진하여 양질의 문화와 생태가 공존하는 지역을 만들 것이다.

아홉째, 지역맞춤형 복지 구현을 위해 복지서비스의 통합화 및 농촌 통합복지 전달체계 구축, 그리고 고령친화 복지전달체계 구축을 실현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농어촌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서는 농어촌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과 의료서비스 사각지대 등 보건의료서비스 강화를 통해 복지·의료의 행복한 복지를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1. 지역생활권 활성화

(1) “지역행복생활권” 추진현황 및 성과

전라북도의 지역행복생활권은 중추도시형 1개, 도농연계형 2개, 농어촌형 1개로 총 4개의 생활권이 구성되어 있으며, 과거의 역사성과 문화·지형의 유사성, 그리고 장래 시·군 간 협력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생활권을 구성하였다.

그림 3-13-2 전라북도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현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이 2013년 7월 18일 발표됨에 따라, 도를 중심으로 수차례 시·군 부단체장 및 기획실장 등의 회의를 통해 생활권역을 확정함과 아울러 생활권별로 업무협약(MOU)을 2014년 1월 8일부터 1월 20일까지 모두 체결하여 전국에서 가장 먼저 생활권을 구성하였다.

도내 4개 생활권은 시군의 긴밀한 협조 하에 생활권사업 총 147건(선도사업 14건, 연계협력사업 25건, 단독사업 108건)을 발굴하고, 2월 28일 지역발전위원회에 제출하였고, 이들 사업 중 생활권의 대표사업인 연계·협력 프로젝트(선도사업)는 생활권별 1건씩으로 총 4건이 최종 선정되었다. 선정사업 중 동북부 생활권의 ‘진장 경계지역 오지마을 상수도 공급사업’은 진안군과 장수군의 중심지로부터 최외곽 지역인 경계지역

의 3개 마을주민에게 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지역발전위원회의 모범 사례로 대통령에게 보고가 된 사업이기도 하다.

(2) 지역별 추진현황 및 성과

전북이 추진한 대표적인 지역활성화 사업은 일반농산어촌개발, 성장촉진지역개발,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 지역특성화 산업육성 등이다.

먼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은 13개 시·군사업에 1,061.51억원을 지원하여 지역 주민의 소득과 기초생활수준 향상을 통해 농산어촌의 인구유지 및 지역별 특화발전을 도모코자 노력하였다. 부안군은 110.06억원을 지원하여 읍면소재지 종합정비, 권역단위 종합정비, 그리고 기초생활 인프라사업을 추진하고 특화작물의 체험관광 활성화로 소득창출 효과와 더불어 주변개발사업과도 연계 협력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시켰다. 김제시는 99.45억원을 지원하여 빈집정비를 통해 1,261개소 정보센터를 조성하여 주거복지 여건을 마련하였고, 한울타리 행복의집을 통해 맞춤형 노인복지를 제공함과 아울러 마을만들기 사업과 지역자원 연계로 지속 가능한 지역공동체를 조성하였다.

성장촉진지역 개발사업은 4개 사업에 315.3억원을 지원받아 낙후된 지역의 자생적 소득기반을 마련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였다. 먼저, 김제시는 벽골제 경관도로 개설사업 등에 126.05억원을 투입하여 지평선축제 전 경관도로를 완료하여 교통체증을 완화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리고 남원시는 5개 내역사업에 89.55억원을 투입하여 대표적 관광자원의 진입도로 2개 지구(국악의 성지 연결도로, 지리산 허브벨리주변 관광순환도로)를 완공하여 지역주민의 접근성 강화 및 교통편익 증진에 기여하였다.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은 도시내 노후쇠퇴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환경 및 거주환경 개선사업으로 전주시 낙후지역 2개 마을에 총 66.34억원을 지원하여 기초생활 기반확충, 주거지 재생, 중심시가지 재생, 그리고 지역역량강화를 추진하여 농촌마을 주거환경개선과 소득증대 기반 구축하고 전통공예 장인이 직접 전수교육을 추진하고 마을만들기 사업과 해피하우스 사업 등과 연계하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였다.

지역특성화 산업육성은 중소기업 위주의 취약한 지역산업구조를 혁신하고 뿌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코자 9개 내역사업에 총 191.5억원을 지원하였다. 주요성과는 우선 뿌리산업 기업지원을 받은 43개 기업의 매출액 838억원(125% 성장) 증가와 함

계 294명의 고용창출이 되었으며, 2014년 종료된 26개 기업의 R&D개발제품의 상용화로 27.3억원의 매출과 59명의 고용창출이 있었고, 뿌리기업의 현장기술 인력양성을 위해 특성화고 6개교에 142명 교육을 통해 110명 취업 등을 이루어냈다.

2.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농림어업 중심의 산업이 오랜 기간 주력산업을 이루어 온 전북은 1995년부터 제조업의 비중이 농업을 추월함에 따라 산업구조의 트렌드에 큰 변화가 있었고 2012년 제조업 비중이 30% 정도에 달하였다. 이와 같은 변화는 외부로부터의 지속적인 기업유치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기업유치와 연계하여 미래 먹거리를 마련하기 위해 신성장 동력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으며, 이 중 자동차·조선·기계, 신재생에너지, 탄소, LED, 인쇄전자, 방사선융합기술, 그리고 식품·생명산업 등을 전북의 미래를 이끌어갈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은 늘어가는 전북을 회생시키는 중요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발전에도 기여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전략산업의 기업유치로 2010년 이후 상용근로자수 증가율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였고 2010년에서 2012년까지 414개 기업유치로 약 20,000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였다.

그러나,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에도 불구하고 구직자의 수도권 선호 현상으로 인해 지역 기업의 구인난 심화, 양질의 일자리 부족-인력유출-지역기업의 구인난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의 해소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를 남겨 놓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의 해결책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신성장 산업육성과 균형 있는 산업경제 활성화를 추진전략으로 하고 있다. 이 중 신성장 산업육성을 위해 탄소산업 등 지역의 경쟁우위에 기반하여 고용 창출형 지역특화산업 등을 육성하고 있고, 산업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향토기업과 뿌리기업의 성장 지원을 통한 지속가능한 산업 환경조성 및 융복합 소프트웨어 강소기업 육성 등 창조산업기반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산업 육성과 산업단지의 창조경제 거점 등의 분야에 총 118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이중 지역특화산업을 2014

년 주요성파로 제시하고자 한다.

지역특화사업은 지역기반 특화산업을 선정하고 기술개발, 마케팅, 인력양성 등을 집중 지원하여 고용창출 촉진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자동차·기계 생산기반산업, 경량소재 부품산업, 향토기능성 식품산업, 인쇄 전자산업, 그리고 에너지 변환·저장 부품산업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013년 지역산업진흥계획의 산업통상자원부 평가('S'등급)와 지역경제위원회 심의를 통해 2013년 4월에 총 사업비 201.54억원(국비 141.34억원, 도비 60.20억원) 및 지원계획을 확정하였다.

또한 확정된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지역 내 우수 기업이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각종 기회교육을 통한 설명회 등을 추진하였으며, 평가위원회를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총 56개(R&D 40개, 비R&D 14개, 거점운영 2개)의 과제를 선정하였다. 2013년 6월부터 과제별 협약체결을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사업성과 제고를 위해 사업기간 중 2회의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 개선 및 성과창출을 독려하였다.

추진 중인 사업의 성과평가를 위해 2014년 5월 15일~20일간 상반기에 추진된 29개의 R&D과제에 대해 연차평가를 실시하고, 28개 과제는 성공(계속), 1개 과제를 중단(기업회생절차상황) 조치 완료하였으며, 비R&D(14개)는 사업기간 연장으로 인해 2014년 8월말에 종료되었으며, 하반기에 선정된 R&D(11개)는 2014년 9월말 종료되었다.

이를 통해 신규고용 375명 창출, 수혜기업 매출액 증가율 19.2%로서 목표대비 100%이상 달성하였고, R&D 및 비R&D 수혜기업의 성과로 신규채용 증가율 5.8%, 매출 증가율 17.75%를 달성하여 2014년 12월에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성과부분평가에서 'A'로 우수한 등급을 받았다. 2015년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역산업지원체계 개편으로 인해 지역특화사업은 2개년 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2차년도인 2015년 6월에 종료될 예정이다.

또한, 전북은 탄소에너지 의존형 산업구조를 탈피하고 Green 환경·에너지 중심의 탄소소재 산업으로 전환하여 미래 산업의 신성장동력 구축에 시발점이 될 탄소밸리구축사업을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5년간 1,991억원(국비 1,087억원, 도비 39억원, 시군비 39억원, 민자 826억원)을 투입하여 탄소소재 원천 및 응용기술개발 그리고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2014년도에는 사업비 536억원(R&D 490억원, 인프라구축 46억원)을 투입하여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먼저, (주)효성은

KIST와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생산기술연구원, 전북대 등과 공동으로 라지토우 탄소섬유 생산기술 및 중간재 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2014년부터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주)OCI는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자동차부품연구원, 명지대 등과 공동으로 석탄계 등방성 탄소섬유 및 단열재 응용기술을 개발하여 2014년부터 제품생산을 출시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농어촌 지역은 인구 감소와 더불어 급속한 노령화 진행으로 교육·사회적 여건이 매우 취약한 실정에 있고, 농어촌 학교의 학생감소와 도·농간 교육격차의 심화 등 도내 농어촌 지역의 교육여건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또한, 지방대학은 지역발전의 주체로서 교육·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 졸업생의 취업난과 열악한 교육여건, 일자리 등의 경쟁력 저하로 고사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교육 인프라 개선 및 역량강화’와 ‘창의적 인재 양성 및 기업의 선순환 성장체계 구축’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지방 초중고교 교육여건 개선’과 ‘창조적 인재를 키우는 지방대학 육성’사업 등에 총사업비 92,922백만원을 투입하여 23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들 사업 중에 자체사업으로 200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해외연수 사업은 도내 초·중·대학생을 대상으로 글로벌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에게 영어권(캐나다, 호주, 뉴질랜드)과 중국, 그리고 유럽 등의 현지체험을 통해 문화와 언어를 습득하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14년 주요성과는 전라북도와 (재)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이 공동으로 겨울학과 여름학기에 연수생 680명을 선발하여 해외연수를 실시하였다. 해외연수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은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해외에서의 유의점과 생활에티켓, 생활풍습 등에 대해 1박 2일간 설명회를 갖고 연수국에서 4주 동안 현지 공립학교에서 ESL를 배우며, 4주 동안 공립학교 현지 아이들과 똑같은 수업을 받고 돌아온다. 또한 현지에서의 생활은 홈스테이를 통해 한국과는 전혀 다른 생활 속에 많은 추억과 경험으로 혼자서

도 세계 속에 한국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을 경험하게 된다.

성과로는 선발된 해외연수생들에게 전후 영어테스트를 실시하고 있으며, 해외연수에 대한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편으로 97.7%로 나타났으며, 학부모를 모시고 성과보고회를 갖고 발전한 학생들에게 표창을 주어 더욱 잘할 수 있도록 북돋워 주고 있다. 또한, 연수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홈스테이 자녀 또는 외국학교 친구와 이메일 등을 통해 지속적인 관계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대학생은 국제행사 개최시 자원봉사자로 활용하는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무엇보다 글로벌 체험 해외연수는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해외연수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온 학생들에게는 눈과 마음이 넓어진 게 가장 큰 성과이다. 따라서 전라북도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기 위해 해외연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4. 지역 문화 육성, 생태복원

전북은 한문화(韓文化) 수도로 불릴 정도로 한국적 전통문화자원이 풍부한 지역으로서 한문화 기반의 기본적인 지역발전의 토대 구축에 구심점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러나 한국적 전통문화 중심지임에도 불구하고 한문화 기반의 종합적 발전전략이 타 시도에 비해 미숙한 실정에 있어 차별화를 이루는 데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문화의 복원을 위해 시설건립과 프로그램 지원 등의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고 도농간 문화향유와 생활체육 참여 확대 등 격차해소에 노력하고 있으며, 전주시로의 집중화를 피하고 외곽지역 주민이 문화를 골고루 향유할 수 있도록 행복생활권별 거점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지역문화역량 강화 및 특성화 발전 지원사업 등 84개 사업에 총사업비 750,948백만원을 투입하여 전북만의 차별성 있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들 사업 중 익산 백제고도 르네상스사업은 2012년부터 10년간 3,652억원(국비 1,156억원, 도비 248억원, 시비 247억원, 민자 2,001억원)을 투입하여 금마도토성 발굴 및 정비 등 17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연차별 사업내용 중 2014년도는 익산 고도보존육성 시행계획 사전조사용역을 완료(2014년 2월)하였고, 익산 고도보존육성 시행계획 수립을 추진·진행 중에 있다. 용역결과에서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2015년 초부터

옥룡천 옛물길 회복, 금마지구 전통주거지역 기반조성, 객사·관아터 유적 발굴조사 등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익산 고도보존육성사업은 2014년도에 사업비 5,128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그 중 토지매입 및 발굴조사 등 이주단지 조성비로 3,354백만원을 사용하였으며, 옥류천 복원사업의 부지매입비로 1,428백만원, 주거환경개선 용역·학술회의비로 346백만원을 집행하였고 2015년부터 본격적인 복원공사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본 사업은 위에서 언급한 사업내용 외에도 옛길정비, 익산향교 정비, 전통 거리조성, 주택재생사업지원, 교동마을 조성, 그리고 역사문화복합센터 등의 사업이 함께 추진되고 있어 고풍스런 고도 이미지를 통해 관광객 신규 유입과 더불어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대도시 지역은 기 운영되는 복지시설과 의료시설로 양질의 혜택을 누리는 반면, 농산어촌 지역은 시설의 효율성과 경제성 등의 논리에 밀려 외면되고 있어 도시와 취약지 간 불균형의 격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 전북은 도농간 복지인프라 불균형 그리고 소득계층 간 복지수혜 불균형 및 복지사각지대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열악한 재정과 높은 복지비 부담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현 정부의 지역정책에 부응하여, 어느 지역에서 누구나 양질의 삶의 질을 누리도록 하는 ‘HOPE 프로젝트’에 맞게 지역맞춤형 복지구현과 취약지역 공공의료체계 정비 등을 도정의 주요 시책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주요사업으로는 맞춤형 복지, 고령친화 복지전달 체계구축, 그리고 취약지역 공공의료체계 정비 등 27개 사업에 총사업비 380,781백만원을 투입하여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시스템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이들 주요사업 중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육성지원 사업은 응급의료 취약지역에 응급의료 안전망을 구축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응급의료센터가 적정 개소 수 대비 부족한 진료권의 지역응급의료센터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군 지역 등에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육성 지원하는 사업이다. 위 사업에

대한 2014년도 사업은 총예산 24,910백만원을 확보하고 의료기관 9개소(보건소 1개소, 보건의료원 4개소, 병원 4개소)의 응급실 전담인력 인건비, 교육비, 그리고 출산취약 지역 8개 지자체의 임신부 산전 진찰과 분만 이송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로 인해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법정기준 충족률은 2013년 76.9%에서 2014년 85.7%로 전년대비 8.8%p 상승하였고, 이를 통해 주민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또한, 임신부 이송 지원실적은 산전 진찰 이송 6,825건, 분만 이송 1,756건으로 총 8,581건을 지원하였으며, 산부인과 설치가 어려운 출산취약지역 임신부의 안전 분만의 사전 대응으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위험요인을 최소화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그리고 도내에서 의료서비스가 가장 취약한 진안·무주·장수에 거점 공공의료기관을 설립하여 경제성 논리를 탈피하고 취약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2010년부터 총사업비 24,043백만원(국비 9,740백만원, 도비 2,300백만원, 군비 12,003백만원)을 투입하여 건립한 진안군의료원이 2014년 7월에 완공되었다. 의료시설은 진료 9개과에 85병상으로 총 의료인력이 73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난 2015년 4월 24일 진료를 개시하여 보다 편리한 거점병원으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진안군내 주민과 인접 무주군과 장수군의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제4절 향후 추진계획

전북은 산업기반이 취약하고 지역발전 잠재력이 약화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농업의 강점을 살려 음식문화가 발달한 ‘맛의 고장’을 육성하고, 한국적인 전통문화자산을 온전히 간직한 ‘전통문화예술의 고장’을 만드는 데 주력할 것이다. 미래산업의 ‘쌀’인 탄소산업의 ‘탄소섬유 양산체계의 구축’, 그리고 새만금의 대중국 교역 생산거점으로 ‘국가경제발전의 중심 축’을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2015년도에는 8개 실천전략을 정하고 세부과제를 성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다. 먼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 전북의 실현’을 마련할 것이다. ‘안전전북’ 실현은 재난·재해 등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협요인을 사전 제거하여, 도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 나갈 계획이다.

둘째, ‘보람 찾는 농민, 제값 받는 농업, 사람 찾는 농촌을 위한 삼락농정’의 전북 미래 창조 어젠다를 실천하여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삼락농정, 사람 중심의 농정추진으로 살기 좋은 농촌, 행복한 전북을 만들어 갈 것이다.

셋째, ‘탄소 등 성장동력산업 육성으로 경제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것이다. 이를 위해 탄소산업 4대 전략기지 조성, 연구개발(R&D) 육성기반 구축, 성장동력산업 경쟁력 강화, 기업·투자유치 강화를 추진하고, 특히 탄소산업은 2020년까지 190개사 기업을 유치하여 매출 8조원에 고용 26,000명, 전문인력 6,300명을 달성할 계획이다.

넷째, ‘즐겁고 멋스런 문·예·체·관광 진흥으로 행복지수’를 높일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 속의 한국, 전북의 전통문화와 예술진흥으로 도민의 자긍심을 드높이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해 활력 넘치는 전북을 만들 것이다. 지역에 산재한 관광자원과 다양한 서비스를 기능적으로 연계하고 시·군별 대표 관광지를 관광거점으로 육성하여 사람과 돈이 모이게 할 것이다.

다섯째,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고, 맑고 깨끗한 삶터를 만들 것이다. 촘촘한 사회복지 안전망을 구축하여 도민 모두가 차별 없는 보편적 복지를 누리게 할 것이다. 생태환경의 미래가치를 감안하여 수질 및 대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깨끗한 도민의 삶터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여섯째,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생활행정을 펼쳐나갈 것이다. 서민경제 안정은 사람

중심의 '함께'의 가치를 구현하는 사회적 경제를 실현하여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 지원 등으로 지역 순환경제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서민경제가 튼튼하고 건실하게 만들 계획이다.

일곱째, 새만금 기반시설 개발을 본격화하고 경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새만금이 동북아 전체 국면을 바꾸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새만금이 세계 경제의 중심이자 동북아 허브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져 나갈 것이다.

여덟째, SOC 확충과 지역균형개발을 촉진하여 고루 잘사는 전북을 만들 것이다. 지역발전을 위한 기반 인프라를 확충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간 격차가 없는 고른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도록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실천과제를 통해 2015년도는 농생명, 관광, 탄소산업의 초석을 다져 나가는 원년을 만들도록 할 것이다.

제14장 전라남도

제1절 경제 현황

1. 일반 현황

전남의 인구는 2013년 기준 191만명으로 2010년에 비해 1만명 감소하였다. 지역내총생산(GRDP)은 2010년 60조원에서 63조원으로 증가하였으며, 1인당 GRDP는 3,467만원으로 나타났다. 수출액은 2010년 304억 달러에서 36% 증가한 414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취업자 수는 2010년 89만명에서 92만명으로 증가하였다. 재정자립도는 2010년에 비해 소폭 증가한 21.7%로 전국 평균에 비해 매우 낮았다.

표 3-14-1 전라남도 경제 일반현황

구분	전국			전남		
	2007년	2010년	2013년	2007년	2010년	2013년
지역내총생산(십억원)	1,151,843	1,265,146	1,376,143	54,983	59,901	62,636
인구(천명)	49,269	50,516	51,141	1,930	1,918	1,907
1인당 GRDP(만원)	2,147	2,561	2,842	2,642	3,371	3,467
수출액(백만달러)	371,489	466,384	559,632	21,988	30,416	41,402
취업자(천명)	23,433	23,829	25,066	905	885	915
재정자립도(%)	53.6	52.2	51.1	20.1	20.6	21.7

주 : 지역내총생산은 2010년 기준가격임.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2. 산업 현황

전남의 산업구조는 지역내총생산액 기준으로 서비스업 49.1%, 제조업 42.3%, 농림어업 8.3%, 광업 0.4%로 나타났다.

2013년 제조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식료품'이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에서 각각 21.3%, 11.5%, 2.0%로 모든 분야에서 다른 업종에 비해 비중이 가장 높았다. 그 외에는 '금속가공제품', '기타 기계 및 장비',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등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4-2 전라남도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07년			2010년			2013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제조업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식료품	26.2	12.8	2.1	23.7	15.3	2.0	21.3	11.5	2.0
의복, 의복액세서리	0.5	0.7	0.1	0.4	0.0	0.0	0.9	0.7	0.0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6.7	6.2	1.6	6.0	3.5	1.8	5.7	5.3	1.5
금속가공제품(기계·가구 제외)	10.7	8.5	1.5	12.9	10.6	1.6	12.2	8.1	1.4
전자부품·컴퓨터·통신장비	0.5	1.2	1.2	0.6	0.3	0.1	0.5	0.6	0.1
전기장비	2.3	1.2	0.2	3.0	2.4	0.4	3.1	2.0	0.4
기타 기계 및 장비	5.5	4.5	0.7	4.9	3.6	0.6	5.3	4.0	0.9
자동차 및 트레일러	1.5	0.8	0.1	1.0	0.6	0.1	1.4	0.9	0.1
기타 제품	0.2	0.1	0.0	0.8	0.4	0.1	0.5	0.2	0.0

주 : 2010년은 경제총조사 자료임.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광업·제조업 조사 ; 경제총조사(2010)」

표 3-14-3 전라남도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07년			2010년			2013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서비스업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1.0	3.2	6.8	0.9	2.2	5.8	1.4	3.4	9.3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0	2.0	4.1	2.0	3.8	13.3	1.2	1.6	3.4
부동산업 및 임대업	7.3	7.0	8.0	5.6	4.3	6.3	7.9	6.5	11.2
사업지원 서비스업	3.1	9.7	8.8	2.8	8.0	7.3	4.5	11.6	12.0
교육 서비스업	16.8	12.4	7.6	17.6	29.8	26.0	15.7	8.7	4.9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3.2	33.6	37.5	12.2	26.7	22.6	16.3	40.5	38.3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13.1	9.6	8.7	10.3	6.4	5.2	12.2	9.1	7.2
기타 개인 서비스업	44.4	22.4	18.6	48.7	19.0	13.4	40.8	18.7	13.6

주 : 2010년은 경제총조사 자료임.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전국서비스업조사 ; 경제총조사(2010)」

2013년 서비스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업체 수로는 '기타 개인 서비스업'이 40.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종사자수 및 생산액 기준으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40.5%, 38.3%로 가장 높았다. 그 외에도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의 업종 비중이 높았다. 2007년과 비교할 때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및 '부동산업 및 임대업'의 비중은 다른 업종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기타 개인 서비스업'의 비중은 감소하였다.

3. 혁신활동 현황

연구개발 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기준 연구개발비 6,456억원, 연구개발인력 6,832명, 연구개발조직수 381개로 나타났다. 전국대비 비중 변화는 2007년에 비해 연구개발비는 0.3%p, 연구개발인력은 0.2%p 증가하였으며, 조직수는 비중 변화가 없었다.

특허 현황을 보면, 2013년 기준으로 특허출원은 2,026건이며, 등록은 1,177건으로 전국대비 비중은 각각 1.3%, 1.2%로 나타났다. 2007년 대비 출원 건수는 696건 증가하여 전국대비 비중이 0.3%p 증가하였으며, 등록 건수는 454건 증가하여 0.4%p 증가하였다.

표 3-14-4 전라남도 혁신활동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 건, %)

구분		2007년	2010년	2013년
연구 개발	연구개발비	236,010 (0.8)	482,640 (1.1)	645,637 (1.1)
	연구개발인력	4,068 (1.0)	6,327 (1.3)	6,832 (1.2)
	연구개발조직수	179 (1.4)	291 (1.6)	381 (1.4)
특허	출원	1,330 (1.0)	1,651 (1.3)	2,026 (1.3)
	등록	723 (0.8)	610 (1.2)	1,177 (1.2)

주 : ()는 전국대비 비율임.

자료 : 1)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년도

2) 특허청, 지식재산통계연보, 각년도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전남은 비옥한 땅, 청정 바다, 아름다운 섬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국립공원, 농업진흥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습지보호구역 면적이 모두 전국 1위이며, 바다, 섬, 해안선의 전국 비중은 바다 37%, 섬 65%, 해안선 45%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이 오염되지 않은 땅과 바다를 보유한 전남은 안전식품 수요 증가에 따라 친환경 농수산업 1번지로 도약하고 있다. 친환경 농수산물 생산량과 수도권 학교급식에 친환경 쌀 공급량이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수산물 수출액은 2009년 1억 6,155만 달러에서 2014년 2억 8,549만 달러로 증가하였다.

또한 전남의 자연환경은 관광자원 및 산업자원으로서의 가치도 높아지고 있다. 2013년말 국내 관광객이 4,067만명으로 전국 2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풍력, 조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도 부상하고 있다. 서해안에 5GW 대규모 풍력 발전단지를 조성 중이고, 태양광 발전량은 435GWh로 전국의 27%에 이르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중국 관광객과 대중국 교역의 증가, 서울-광주 송정 간 호남고속철도 개통 등으로 전남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전남이 발전과제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청년 일자리 창출이다. 이를 위해 빛가람혁신도시 이전기관과 협력하여 6년간 기업 700개를 유치할 계획이다. 지역산업 발전의 토대를 튼튼히 하기 위해 석유화학, 철강, 조선 등 주력산업의 활력을 회복하고 생물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등 지역특성을 살린 신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농축수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저비용 고소득 경영모델을 확산시키고 지속가능한 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매력있는 관광·문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국, 일본 등 해외관광객, KTX 이용객에 초점을 맞춘 관광·문화자원을 개발하고, 2015년과 2016년에 개최되는 국제농업박람회,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세계친환경디자인박람회, 장흥 국제통합의학박람회 등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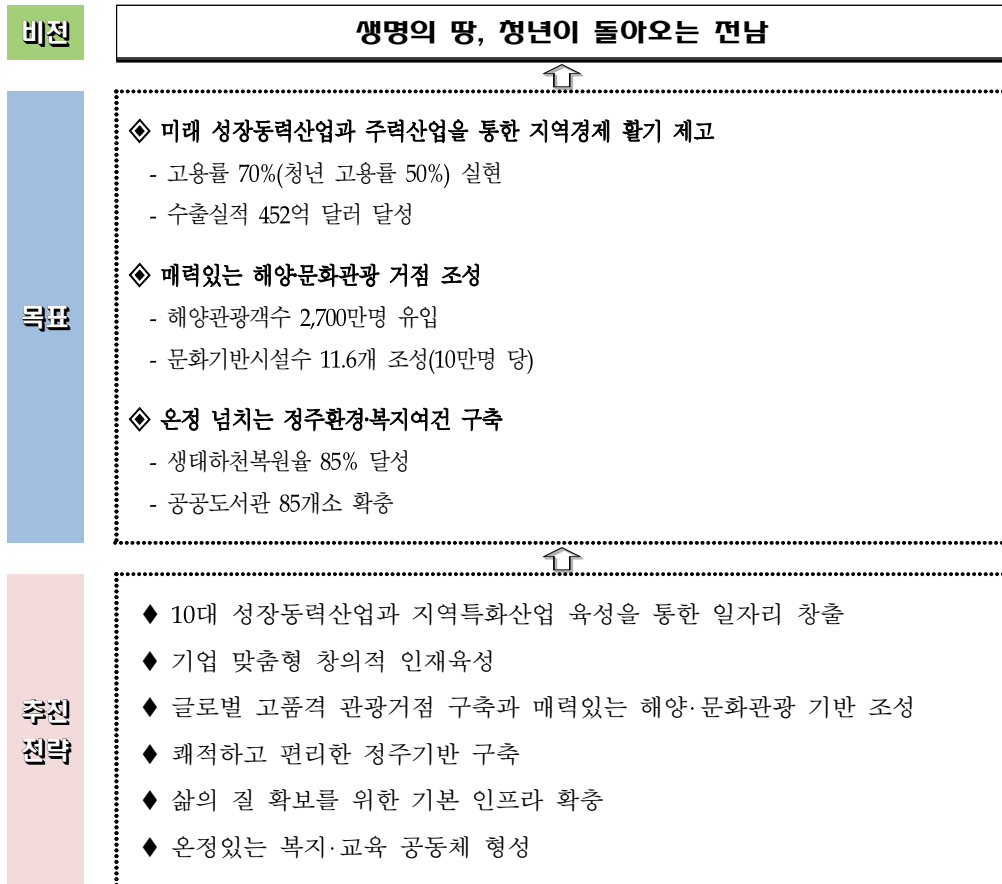
장기 과제로는 「가고싶은 섬」 가꾸기와 「숲속의 전남」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다. 「가고싶은 섬」은 전남의 소중한 자산인 섬을 관광명소로 육성하기 위해 섬의 생태·문화자원을 보전·정비하여 매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숲속의 전남」은 전남을 공원처럼 가꾸고 매력있는 경관숲과 돈이 되는 소득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1. 발전비전

전남의 발전비전은 ‘생명의 땅,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이다. 좋은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전남 인구 200만명을 회복하도록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만드는 것이다. 생명의 땅 전남은 ‘삶의 전 영역에서 생명력이 넘치는 매력있는 지역’을 지칭하며, 이를 위해 식량산업, 해양산업, 실버산업, 관광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공공의료, 생활복지 내실화, 좋은 일자리 지속창출 사업 등을 추진할 것이다.

그림 3-14-1 전라남도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전남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목표는 ‘미래 성장동력산업과 주력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기 제고’, ‘매력 있는 해양·문화관광 거점 조성’, ‘온정 넘치는 정주환경·복지여건 구축’으로 설정하였다.

2. 추진전략

전남의 발전비전과 목표 실현을 위해 6대 추진전략을 마련하였다. ‘활기’를 위해 10대 성장동력산업 및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창출과 기업 맞춤형 창의적 인재 육성을 추진한다. ‘매력’을 위해 글로벌 고품격 관광거점 구축 및 매력있는 해양·문화관광 기반을 조성하고 쾌적하고 편리한 정주기반을 구축한다. ‘온정’을 위해 삶의 질 확보를 위한 기본인프라 확충과 온정 있는 복지·교육 공동체 형성을 추진한다.

추진전략별 세부과제는 다음과 같다. 10대 성장동력 산업과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부과제는 기술혁신을 위한 신성장산업 동력화, 지역 연고산업 고도화를 위한 과학기술 분야 지원·육성, 강소형·중견 기업 및 창조경제 거점 육성, 국내·외 투자 유치를 위한 주력산업 고도화,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인적자원 중심 주력산업 육성, 지역자원과 연계한 행복한 농어촌일자리 창출 등이다. 또한 기업 맞춤형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해 지역 거점대학을 육성하고, 실용중심 산학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글로벌 고품격 관광거점 구축과 매력있는 해양·문화관광 기반 조성을 위해 해양관광 특화발전 프로젝트 추진, 해양관광 및 미래형 해양레저기반 구축, 남도 고유 전통문화자원 및 관광자원 가치제고 등의 과제를 추진한다. 쾌적하고 편리한 정주기반 구축을 위해 활력있고 경쟁력 높은 지역 중심지를 재창조하고, 녹색생태환경 보존으로 정주여건을 강화하며, 유기적인 기능연계를 위한 생활권기반 개발 축을 설정한다.

삶의 질 확보를 위한 기본 인프라 확충의 세부과제는 삶터 복원을 위한 연계협력형 생활인프라 확충, 생활권 중심 문화기반 확충을 통한 도·농간 격차 해소,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기반시설 정비, 행복실현을 위한 교통·물류망 확충 등이다. 온정있는 복지·교육 공동체 형성을 위해서는 수요맞춤형 복지지원체계 구축, 취약지역 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 복지·보건·교육 거점인프라 조성, 생애주기형 창의교육기반 조성, 농산어촌 교육역량 강화 등을 추진한다.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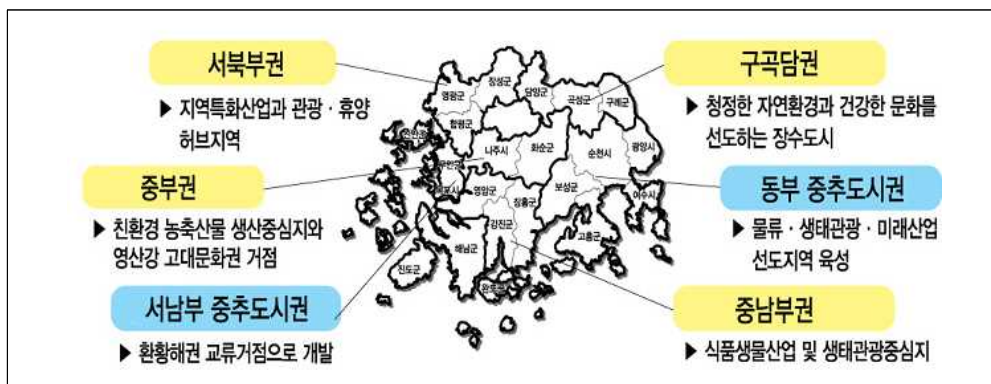
1. 지역생활권 활성화

(1) “지역행복생활권” 추진현황 및 성과

전남의 지역행복생활권은 지리적 인접성과 기능적·역사적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중추도시생활권 2개, 농어촌생활권 4개 등 6개 권역으로 구성하였다.

생활권별 비전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중추도시권 가운데 서남부권(목포·해남·무안·진도·신안)은 환황해권 교류거점으로 개발이고, 동부권(여수·순천·광양·고흥·보성)은 물류·생태관광·미래산업 선도지역 육성이다.

그림 3-14-2 전라남도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농어촌생활권별 비전을 살펴보면, 구곡담권(담양·곡성·구례)은 청정한 자연환경과 건강한 문화를 선도하는 장수도시 조성, 중부권(나주·화순)은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중심지와 영산강 고대문화권 거점, 서북부권(함평·영광·장성)은 지역특화산업과 관광·휴양 허브지역, 중남부권(장흥·강진·영암·완도)은 식품생물산업 및 생태관광 중심지 등이다.

2014년부터 시작한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은 생활권별로 1건씩 추진되었다. 서남부권의 취약지역 청소년 문화체험 사업은 한 시·군에서 여러 시·군의 박물관·미술관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이동전시를 하고 있고, 동부권의 패류 종묘배양장 공동활용 사

업은 보성의 패류종묘배양장을 생활권내 시·군이 공동활용해 시설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있다. 중부권과 구곡담권은 도농 일자리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중부권은 인근 광주의 유희인력을 일손이 부족한 농촌지역과 연결하고 있고, 구곡담권은 구례, 곡성, 담양의 주요작물별 인력소요시기가 다른 점을 고려해 일자리를 상호 연계시키고 있다. 서북부권에서는 장성에 생활권 치매거점병동을 운영하여 생활권내 모든 시·군의 중증환자들이 이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중남부권의 도서 낙도주민 이동편의 확충사업은 완도 도서 주민들이 육지를 드나들 때 거쳐야 하는 장항과 협력하여 항로 개설과 편의시설 설치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2) 지역별 추진현황 및 성과

지역생활권 활성화 관련 사업은 중심지 기능강화, 주민체감형 생활환경 개선, 지역주도 지역발전, 교통·물류망 개선을 목표로 추진되었다.

중심지 기능강화를 위해 목포시, 순천시 구도심은 도시재생 선도지역사업에 선정되어 도시 공동체를 회복하기 시작하였고,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43개 읍·면 소재지의 생활편의, 문화·복지시설 등을 확충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주민체감형 생활환경 개선을 목표로 공동생활권(목포, 영암, 무안, 신안)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하였고, 도시가스 미공급 농어촌지역 2개 마을을 대상으로 LPG 소형저장탱크 시설을 구축하였다. 농어촌 상수도시설 확충사업은 133개 지구의 상수도 서비스를 향상시켰고,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44개소의 주거환경 개선과 인근하천 수질보전에 기여하였다.

지역주도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우수 농촌공동체회사 17개소를 대상으로 영세 농가소득 증대 및 농촌형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농촌활성화지원센터(목포대)는 마을의 유·무형 자원 및 주민역량을 조사·분석하고 주민주도의 마을 발전과제를 발굴·운영하여 주민참여 마을 만들기 정책에 대한 인식제고에 기여하였다.

교통·물류망 개선을 위해 목포와 신안 다이아몬드제도를 연결하는 압해-암태 구간과 77번 국도를 연결하는 영남-적금, 돌산-화태, 화양-적금 등 연륙·연도교 1.7km가 건설되어 낙후지역 개발을 촉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산업단지와 고속도로 간 자동차 전용도로망 구축을 위한 월전-중군 국도 건설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2.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지역에 특화된 산업 육성과 함께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다. 순천 뿌리기술지원센터 기반구축 국비 확보로 제조업의 근간이자, 중소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뿌리산업의 첨단화와 융복합화 토대를 마련하였다. 구조·기능세라믹스, 석유화학기반 고분자소재, 해양기자재·부품, 고기능생물소재, 금속소재·가공 등 특화산업 육성으로 신규고용 증가율은 17.3%를 기록했다.

또한 세풍산단은 바이오패키징산단으로 육성하기 위해 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시작하였고, 해룡 전자부품산단은 진입도로 개설 등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다. 전남창조경제 혁신센터 준비단 출범으로 지역단위 창조경제 전진기지 구축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다. SW 품질 컨설팅 및 테스트 지원(8개사)과 전문가 양성교육 등을 통해 중장기적 관점의 지역 SW품질을 고도화할 수 있는 조직 및 품질관리체계 기반이 구축되었다.

해양관광거점 구축 및 친환경 특화 해양관광자원 개발을 위해서는 서해안·남해안의 섬, 해안선, 갯벌, 바다 등 해양환경을 활용하여 기업도시 진입로, 요트마린 실크로드, 크루즈 전용부두, 흑산도 소형공항 등 '서남해안 해양관광 허브'가 조성되고 있다. 여수세계박람회장은 Big-O쇼, 게스트하우스 건립, 해양레포츠 연계 등을 통해 남해안 해양관광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있다. 또한 국내외 관광객의 차별화된 관광수요에 맞추어 순천만자연생태공원 생태탐방로 설치, 남도삼백리길 정비 등 전남 대표 생태녹색관광자원을 조성하고 있다. 관광두레 사업 추진을 위해 민관의 협력과 적극적인 상생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사업을 발굴한 결과 전국 20개 지역 중 전남에서 4개 지역이 선정되었다.

농어촌 일자리와 관련해서 농식품 가공·체험 기술 보급사업은 가공기술 및 향토음식 상품화 지원 6개소, R&D 지역자원 연계 6차산업화 기반 조성 2개소 등을 추진하여 농가소득을 다각화하였다.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은 2개소에서 특화된 농산물의 생산·유통·가공·판매 등을 추진하여 소득이 증가하였고, 농식품 ICT융복합 사업은 시설원예, 과수 등 15농가를 대상으로 ICT융복합 기술을 생산현장에 적용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다. 산림휴양 녹색공간 조성사업은 산림치유 6개소, 자생식물원 3개소 등을 추진하여 지역의 특화자원을 활용한 치유의

숲 특성화와 자생식물에 대한 탐방, 체험의 장을 제공하였다.

2014년 일자리실적은 직접 일자리창출이 45,500명, 고용서비스 7,800명, 직업능력개발훈련 5,500명 등 72,056명으로 목표치를 달성하였다. 이는 지역 실정에 맞는 일자리 목표 공시제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도민에게 제공한 결과이다. 이외에도 2014년 주요 추진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청년 일자리를 위해 먼저 혁신도시 및 투자유치 일자리에 역량을 집중하였다. 한국전력,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전국 최대 규모의 13개 공공기관이 이전을 완료하였고, 혁신도시 이전 5대 기관 대상으로 46개 기업을 유치하였다. 이와 함께 일자리 인프라에 해당되는 혁신도시 일자리정보센터가 개설되었고 공공기관장 협의회가 구성되었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로 따뜻한 일자리도 창출되었다. 사회적 경제 육성조직이 신설되고 통합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다. 사회적 경제기업 신용보증상품이 출시(30억원)되고, 공공구매 공시제가 추진되었다. 뿐만 아니라 세월호 피해 극복을 위한 진도군 일자리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여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비 4억원, 사회적기업 사업비 3천만원이 긴급 투입되고, 진도경제 살리기, 농특산물 사주기 등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일자리 창출 성과로 노인일자리사업 및 문화재 돌봄사업이 전국 최우수기관, 일자리 창출 경진대회 지역맞춤형사업이 최우수기관, 사회적기업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우수성과는 다음과 같다. 전남도 지역특성에 맞춘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 2014년에 철강, 기계 분야 191명, 해양플랜트 분야 32명, 생물산업 분야 86명이 취업하였다. 사회적 경제 기업의 자립지원을 위한 통합지원 체계 구축으로 사회적 경제 기업이 증가(2013년 대비 43% 증가)하였고 일자리가 확대(2013년 대비 22% 증가)되었다. 전남형 사회적 경제 기업의 성공모델로는 화답, 해피락 등을 선정하였다. 귀농·귀촌 인력의 조기 정착·자립 정책으로 2014년 농업 창업자금 및 주택구입비가 908가구, 50,714백만원 지원되었고, 구례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조성 및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이 추진되었다.

또한 전남형 일자리종합센터 운영으로 일자리정보망 DB를 구축하고, 취업알선 등 윈스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취업박람회, 취업설명회, 일자리토크쇼 등을 개최하였다. 농촌 성공 청년사업가 모델양성 사업을 통한 일자리도 창출되었다. 그 성과는 2014년 벤처형 농촌 청년사업가 성공모델 51명, 특허 14건 및 상표등록 41건이고, 농촌 청년사업가 성공모델로는 싱싱농원, 엔자임팜, 해남청정농원 등이 있다.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창조경제를 견인할 산학협력 선도대학과 특성화 대학을 육성하면서 대학-기업 간 산학협력을 통해 현장중심형 교육, 애로기술 지도, 기술개발 등이 추진되었다.

산학협력 선도대학 및 선도전문대학(LINC) 육성사업을 통해 취업 및 창업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특성화 분야 인력양성이 추진되었다.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은 목포대의 해상풍력, 신해양산업과 동신대의 문화관광, 생명바이오, 에너지 환경산업 분야에서 추진되었고, 전남도립대는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으로 육성되었다.

지방대학 특성화사업은 동신대의 지역문화콘텐츠·웰에이징메디스파, 목포대의 해양레저스포츠·친환경바이오융합, 순천대의 인문고전·광양만권경제특구 등의 분야에서 인재를 양성하였다.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전남과학대, 전남도립대, 청암대)은 지역산업과 연계된 주력분야 중점 육성과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교육과정 운영 및 산학협력을 기반으로 한 취업지원체제 강화에 이바지하였다. 지역혁신 창의인력 양성사업(목포대, 순천대) 추진은 대학의 기술정보·인력 활용을 통해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였다. 뿐만 아니라 특성화고 졸업생들이 중견 기술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의 산업계 수요 대응성을 높임으로써 특성화고 취업률 67%, 기업맞춤형 취업교육생 채용률 80%를 달성했다.

또한 초·중학교 교육 및 평생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인프라가 확충되었다. 초등방과후 돌봄교실은 1·2학년을 대상으로 운영하여 학부모와 지역민의 학교에 대한 신뢰감이 형성되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사교육비가 절감되도록 하였다. 1군 1우수중학교 집중 육성은 9개 학교를 대상으로 3년간 15억원을 지원하여 농어촌 지역의 공교육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질 좋은 교육을 제공하게 되었다.

평생학습은 평생학습도시 지원 3개소, 행복학습센터 설치·운영 3개소 등 지역 평생학습체계를 구축하고, 계층별 맞춤형 평생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대학에서 보유하고 있는 인적·물적 인프라는 지역 수요에 맞춘 특화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활용되었다. 평생학습은 도민의 행복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기제인 만큼 도·교육청간 연계 강화와 국가·도·시·군의 긴밀한 협력체제 속에서 추진하고 있다.

4. 지역 문화 육성, 생태복원

지역 문화산업은 지역대표 문화·역사·관광정보 기반을 활용한 인포테인먼트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육성되었다. 우수 출판물 140개, 앱 전자책 22개가 제작되었고, 전남 우수 e-book 콘텐츠 개발 및 대형 전자책 유통망 확보로 지속적인 사업화가 기대되고 있다.

문화자원 세계유산등재사업은 한국의 서원, 전통산사, 서남해안 갯벌 등 잠정목록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관계기관 협약과 추진단 구성을 통해 협력체계 등을 구축하였다. 지정문화재 원형보전 보수·정비사업은 여수 진남관, 나주읍성, 강진 병영성 등의 중요한 문화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문화재 보수·복원 지원으로 문화재 가치 향상과 관광자원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문화복지 향유를 위한 작은영화관, 작은도서관 등도 조성되었다. 영화관이 없는 고흥과 장흥에서 작은영화관이 조성되기 시작함으로써 문화취약지역 도민의 문화수준 향상에 기여하였다. 1읍·면 1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은 목포와 신안의 농산어촌 문화소외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 거점시설로 도서관을 조성하였다.

농촌 전통문화가 깃든 고유 농업유산 자원은 발굴·보전·관리하여 농촌의 다원적 가치 증진과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였다. 세계중요농업유산 지정(완도 청산도 구들장논) 및 국가중요농업유산 추가 지정(구례 산수유농업, 담양 대나무밭)으로 전통 농업자원을 활용한 다원적 가치 증진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농경지에는 6,443ha에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촌경관을 개선함으로써 도농 교류 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 하였다. 경관작물 재배단지 농가에 직불금과 마을경관 보전활동 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지역내 특화작물을 활용한 경관보전활동으로 농촌관광이 활성화되고 있다.

생활공간의 숲은 도시숲 52ha, 학교숲 9개교, 가로수 165km 등으로 확대 조성됨으로써 녹색 쉼터를 제공하게 되었다. 도시열섬 완화를 위한 생활권녹색공간 조성사업을 통해 건물·도로·철도 등 생활주변 자투리땅은 쾌적하고 아름다운 생활공간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또한 하천의 직강화, 콘크리트 호안조성 등 인위적 하천정비로 훼손된 하천을 자연친화적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은 24개 하천에서 추진하여 도민의 휴식장소 및 생태학습공간을 제공했다.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복지 서비스는 수요자에 따라 차별적인 내용과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먼저 고령화 되어 있는 농촌 주민에 대한 맞춤형 기초 서비스가 제공되었다. 고령자 공동생활시설 농림식품부 공모사업에 공동생활홈 6개소, 공동급식시설 2개소, 작은목욕탕 2개소 등이 선정되는 등 고령자 친화형 공동시설 지원을 통해 농촌 고령자의 주거·영양·위생 여건이 개선되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의 운영 확대는 맞벌이, 한부모, 취약계층 가정의 청소년 710명의 복지·보호·지도를 강화하고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기여하였다. 방과 후 돌봄서비스 추진기관간 연계체계 운영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육기반이 취약한 농·어촌 지역 민간어린이집 매입 전환으로 신축비용을 절감하였다.

청소년시설 확충은 9개소에서 추진되어 청소년이 선호하는 기능보완 및 프로그램 제공으로 이용객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내 공사현장 근로자 및 신규시설 내 운영 종사자 채용으로 일자리를 제공하였다. 다문화가족 자녀에게는 대상아동에게 적합한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아동의 언어발달 정도를 평가하고, 언어발달 지도사 23명의 전문성 평가 개선을 통해 서비스 수준을 높였다. 또한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한 체계적 사례관리(1,223가구)를 통해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켰다.

의료취약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의료환경이 개선되도록 하였다. 필수의료서비스인 산부인과 5개소, 소아청소년과 1개소가 문을 열어 안정된 출산 및 의료환경이 구축되었다. 응급의료기관수는 25개소로 다른 지역에 비해 많지만, 상대적으로 응급의료기관이 열악한 군 지역 중심으로 응급의료기관 육성이 필요한 실정이다. 응급의료기관 평가 충족률이 2014년도 73%로 2013년도 29%에 비해 큰 폭으로 높아졌으나, 도시지역에 비해 응급의료의 질은 열악한 편이다. 또한 정신건강증진센터 15개소가 설치·운영되어 중증 정신 질환자를 관리하고, 주민을 대상으로 개선된 정신건강 증진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제4절 향후 추진계획

생활권, 일자리·경제, 교육, 문화·생태, 복지·의료 등 5대 분야별 2015년 중점 추진 계획은 다음과 같다. 지역행복생활권 활성화 분야에서는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여 교육·복지강화, 일자리 창출 등과 연계되도록 도시재생을 추진하고, 중심성이 강한 읍·면 소재지에 교육·보건 등 기초서비스와 지역 경제·문화인프라를 구축한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제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도시가스 공급, 상·하수도 시설, 주민 안전,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 등에 초점을 맞춰 기초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도서·벽지 등 교통 소외지역 교통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은 연계·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체계를 확립하여 공동 추진함으로써 지역생활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분야에서는 전남의 주력산업인 금속소재·가공, 바이오식품, 석유화학기반 고분자소재, 에너지설비 분야를 중점 육성한다. 또한 주요 정책사업 및 투자사업을 대상으로 고용친화적 정책개선방안을 도출하고 반영하는 일자리 영향평가제를 추진한다. 산업단지를 창조경제의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세종산단 기능성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분양을 활성화하며,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 및 운영으로 GS 산업기반과 ICT를 연계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한다. 지역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전남의 비교우위 자원인 바다, 섬, 해안, 갯벌 등 다양한 해양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특화형 해양관광 명소로 조성하고 연안크루즈 등 다도해를 활용해 미래형 해양레저기반을 구축한다.

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분야의 경우 통폐합 추진 권장기준에 해당하는 학교의 경우에도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신중하게 추진하고, 농어촌 우수중학교의 교육 향상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산학협력 선도대학 및 선도전문대학(LINC) 육성사업을 통해 취업 및 창업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특성화 분야 인력을 양성한다. 정부 평생교육 사업과 연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습-고용-복지를 연계하는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평생교육을 제공하며, 지역·대학·산업체 협조체제를 통한 평생직업교육대학 브랜드화를 추진한다.

지역문화 육성, 생태 복원 분야에서는 지역이 보유한 전통문화예술자원을 기반으로

관련산업 활성화를 유도하고, 우수한 문화유산과 자연자원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한다. 또한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문화기반시설 조기 구축으로 도민 문화복지를 향상시키고, 농어촌지역내 문화·생활편의시설 등을 확충한다. 보성 계단식 차밭, 화순 붓도랑과 다랑논 등 국가중요농업유산 추가 지정과 구례 산수유농업, 담양 대나무밭 등 세계중요농업유산 추가 지정을 준비한다.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분야는 지역맞춤형 복지 지원을 위해 홀로 사는 노인에게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공동 난방·취사로 경비를 절감하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을 내실화한다. 또한 지역 내 아동복지서비스 제공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시·군별 아동복지기관 협의체 구성·운영을 강화한다. 취약지역 공공의료체계 정비를 위해 안정적인 분만환경 및 인프라 구축으로 임신·출산 등 사회 친화적 분위기 확산과 농어촌 지역 출산율을 높인다.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지역상황에 맞는 응급의료기관 육성 또는 당직의료·야간진료기관 지정 등을 추진한다.

제15장 경상북도

제1절 경제 현황

1. 일반 현황

경북의 인구는 2013년 기준 270만명으로 2010년에 비해 1만명 증가하였다. 지역내총생산(GRDP)은 2010년 81조원에서 86조원으로 증가하였으며, 1인당 GRDP는 3,351만원으로 나타났다. 수출액은 2010년 449억 달러에서 20% 증가한 538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취업자수는 2010년 136만명에서 139만명으로 증가하였다. 재정자립도는 2010년에 비해 소폭 하락한 28.0%로 전국 평균을 하회하였다.

표 3-15-1 경상북도 경제 일반현황

구분	전국			경북		
	2007년	2010년	2013년	2007년	2010년	2013년
지역내총생산(십억원)	1,151,843	1,265,146	1,376,143	74,027	80,839	86,013
인구(천명)	49,269	50,516	51,141	2,681	2,690	2,699
1인당 GRDP(만원)	2,147	2,561	2,842	2,497	3,076	3,351
수출액(백만달러)	371,489	466,384	559,632	45,266	44,937	53,765
취업자(천명)	23,433	23,829	25,066	1,348	1,361	1,386
재정자립도(%)	53.6	52.2	51.1	28.9	29.3	28.0

주 : 지역내총생산은 2010년 기준가격임.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2. 산업 현황

경북의 산업구조는 지역내총생산액 기준으로 서비스업 42.8%, 제조업 51.1%, 농림어업 5.8%, 광업 0.3%로 나타났다.

2013년 제조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업체수 기준으로는 '금속가공제품'이

13.0%로 가장 높았으며, 종사자수 및 생산액 기준으로는 '전자부품·컴퓨터·통신장비'가 각각 21.5%, 39.7%로 가장 높았다. 그 외에도 '자동차 및 트레일러', '기타 기계 및 장비' 등의 비중이 높았다.

표 3-15-2 경상북도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07년			2010년			2013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제조업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식료품	7.5	5.1	2.2	6.8	4.6	2.0	5.9	4.5	2.2
의복, 의복액세서리	0.5	0.3	0.1	0.6	0.3	0.1	0.4	0.3	0.1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9.8	8.0	3.3	9.1	7.3	2.9	9.7	8.0	4.0
금속가공제품(기계·기구 제외)	12.4	8.9	3.8	13.5	9.7	3.9	13.0	8.9	4.7
전자부품·컴퓨터·통신장비	8.3	26.0	40.5	6.8	25.4	42.7	7.1	21.5	39.7
전기장비	3.9	4.0	4.1	4.4	4.7	4.5	4.2	4.8	3.7
기타 기계 및 장비	10.6	5.6	2.3	11.0	6.4	2.6	11.5	6.9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7.8	8.7	5.0	7.7	8.9	4.2	9.6	11.6	6.7
기타 제품	0.5	0.2	0.1	0.4	0.1	0.1	0.6	0.4	0.2

주 : 2010년은 경제총조사 자료임.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광업·제조업 조사 ; 경제총조사(2010)」

표 3-15-3 경상북도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07년			2010년			2013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서비스업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1.2	3.1	14.1	1.0	2.1	9.7	1.5	3.4	13.4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2	3.0	7.0	1.7	3.8	12.8	1.3	1.9	5.0
부동산업 및 임대업	9.1	7.9	7.2	7.4	5.0	5.1	9.8	7.2	9.9
사업지원 서비스업	2.8	12.3	10.2	2.8	9.8	6.5	4.5	14.7	11.7
교육 서비스업	18.3	14.6	7.8	18.5	31.8	31.0	16.7	9.7	6.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1.4	27.3	29.2	11.1	22.4	19.0	14.5	34.7	31.5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13.2	9.4	9.3	10.7	6.2	5.3	12.1	8.7	8.5
기타 개인 서비스업	42.8	22.5	15.2	46.8	18.9	10.7	39.7	19.8	14.0

주 : 2010년은 경제총조사 자료임.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전국서비스업조사 ; 경제총조사(2010)」

2013년 서비스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업체수 기준 '기타 개인 서비스업'이 39.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종사자수 및 생산액 기준으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34.7%, 31.5%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의 업종 비중이 높았다. 2007년과 비교할 때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비중이 다른 업종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기타 개인 서비스업'의 비중은 감소하였다.

3. 혁신활동 현황

연구개발 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기준 연구개발비 2.2조원, 연구개발인력 22,616명, 연구개발조직수 933개로 나타났다. 전국대비 비중 변화는 2007년에 비해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인력이 각각 0.8%p, 0.7%p 감소하였으며, 조직수는 0.1%p 증가하였다.

특허 현황을 보면, 2013년 기준으로 특허출원은 7,634건이며, 등록은 5,946건으로 전국대비 비중은 각각 4.8%, 6.2%로 나타났다. 2007년 대비 출원 건수는 2,956건 증가하여 전국대비 비중이 1.2%p 증가하였으며, 등록 건수는 1,986건 증가하여 1.9%p 증가하였다.

표 3-15-4 경상북도 혁신활동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 건, %)

구분		2007년	2010년	2013년
연구개발	연구개발비	1,389,688 (4.4)	1,828,589 (4.2)	2,135,540 (3.6)
	연구개발인력	19,670 (4.7)	22,055 (4.4)	22,616 (4.0)
	연구개발조직수	410 (3.3)	652 (3.7)	933 (3.4)
특허	출원	4,678 (3.6)	5,915 (4.5)	7,634 (4.8)
	등록	3,960 (4.3)	2,746 (5.3)	5,946 (6.2)

주 : ()는 전국대비 비율임.

자료 : 1)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년도

2) 특허청, 지식재산통계연보, 각년도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경북은 찬란한 신라 천년의 불교문화와 신비의 가야문화 그리고 선비정신의 유교문화 등 민족 문화의 본산지이자 한국 문화의 얼굴이다. 또한, 새마을운동과 자연보호운동 등 국민정신운동의 발상지이기도 하다.

이 밖에도 수려한 자연경관, 335km에 달하는 긴 해안선과 청정 동해 등 다양한 잠재력과 개발수요를 간직하고 있고, 세계적인 철강 섬유산업의 중심지로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 왔으며, 수도권 다음으로 많은 대학(38개)이 소재하여 풍부한 연구인력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풍부한 문화자원(전국 문화재의 20%)과 천혜의 관광자원, 지역의 높은 문화적 역량을 바탕으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세계적인 문화·관광중심지로 가꾸어 나가고 있다.

하지만 다수의 지역이 낙후지역으로서 균형발전이 필요하나 수도권 규제완화, 인력 및 기업의 역외 유출로 성장이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경북은 지역민이 고루 잘사는 균형발전을 선도하여 지역생활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성공적인 도청신도시를 조성하고 신도청시대에 발맞춰 권역별 특화된 발전전략을 이끌어내야 한다. 따라서 북부권은 농생명산업벨트, 서부권은 스마트 융복합산업벨트, 동해안권은 해양신산업벨트, 남부권은 창의지식서비스벨트 구축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경북·포항 두 개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주축으로 창조경제의 역량을 강화하고, ICT융복합·로봇·에너지·물융합·첨단의료 및 바이오를 5대 주력산업 육성과 경북의 미래를 선도할 미래 신성장산업 및 ICT 전진기지 구축에 힘써야 한다.

그리고 신라, 유교, 가야 문화의 풍부한 전통 문화자원을 명품브랜드로 발전시키고, 이를 활용한 경북만의 테마형 관광상품 개발 및 수용태세 개선을 통한 관광객 유치로 경북관광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또한 주민 밀착형 문화서비스 제공 및 문화기반 확충을 통해 도민의 생활 속 문화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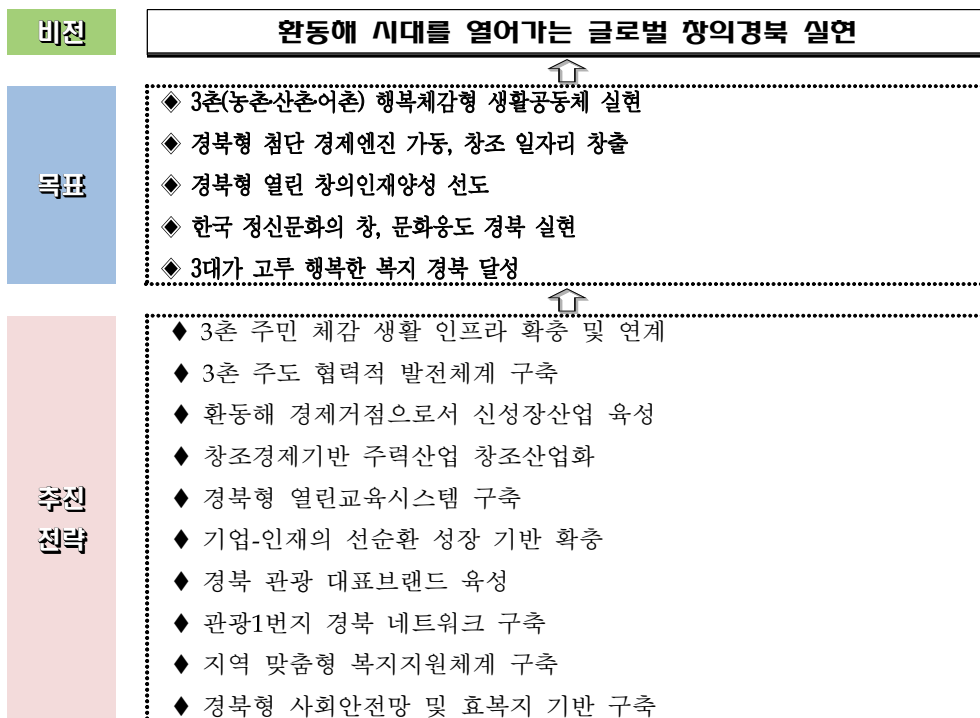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더불어 사는 경북을 위해 현장중심의 복지전달체계 강화, 자활사업을 통한 생산적 복지 실현, 어르신을 위한 서비스 기반 강화, 장애인 사회참여 환경 조성 등 취약계층별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1. 발전비전

경북은 유구한 역사와 문화, 우수한 인적자원과 첨단과학·산업기반 구비 등 발전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이다. 이와 같은 발전잠재력을 기반으로 설정한 경북지역의 발전계획의 최종목표는 ‘환동해 시대를 열어가는 글로벌 창의경북 실현’이다. 이는 환동해 경제권 국가 간 협력강화 및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도약과 경북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통한 행복한 경북실현을 지향하고 있다.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3촌(농·산·어촌) 행복체감형 생활공동체 실현’, ‘경북형 첨단 경제엔진 가동 창조일자리 창출’, ‘경북형 열린 창의인재양성 선도’, ‘한국 정신문화의 창, 문화융도 경북실현’, ‘3대가 고루 행복한 복지 경북 달성’을 5개 목표를 설정하였고, 5대 분야·21개 실천과제 추진을 통한 경북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그림 3-15-1 경상북도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2. 추진전략

경북은 지역생활권 활성화를 위해 안동·예천 도청이전 신도시 중심으로 인구 10만의 거점도시 조성을 계획하고, 구미·김천권(지식경제 기반), 포항(과학), 경주(역사문화) 등과 연계하여 안동, 구미, 포항 3대 중추도시 생활권 중심 거점도시 조성 및 거점-중소도시 간 상생(Win-Win)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도농연계 생활권 및 농어촌 생활권내 특화사업을 발굴, 주민 실생활 밀착형 기초 인프라 확충 및 특화사업 발굴을 통해 주민 체감형 행복 생활공동체 실현을 목표로 삼고 있다.

산업경제 측면에서 창조경제에 기반 한 지역특화산업 육성으로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구미 IT융합산업 첨단화, 포항 철강 단일산업의 다변화 방안을 모색하고 그린에너지, IT융·복합산업 등을 통한 경북 미래첨단엔진 가동, FTA에 대응한 글로벌 농업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으며, 기술주도형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창조경제 지역생태계 구축, IT융합 창조생태계기반인 바이오, 원자력, 항공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인력양성은 창조적 인재를 키우는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사업 및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 등을 추진하여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업과 대학 간 연계활성화를 통한 실질적 효과 극대화를 추진하고, 지역대학 및 연구소, 기업 등이 상호 연계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통한 지방대학의 경쟁력 제고 및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경북지역의 우수한 문화자원과 산림·해양자원 등 생태자원을 활용하여 전통적 삶·문화·자연을 연계한 경북만의 킬러 문화콘텐츠 개발로 경북관광 브랜드화를 추진한다. 또한 환동해경제권 형성에 따른 경북 동해안의 역할과 역량을 강화하고 자원개발 산업·해양에너지산업·해양융합산업·해양레저 및 휴양산업 등을 중점 육성하여 신성장 동력 창출을 통한 동해안 미래발전 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행복한 복지 경북 달성을 위해 여성, 장애인, 아동, 청소년, 저소득층 스스로가 역할을 키우고 함께 나서서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상호 호혜적 공동체를 구축한다. 또한 지역사회구성원이 주도하여 지역기반 공동체를 형성하고, 각종 사회적 위험을 함께 예방하고 해결하는 선순환 복지사회 구현에 힘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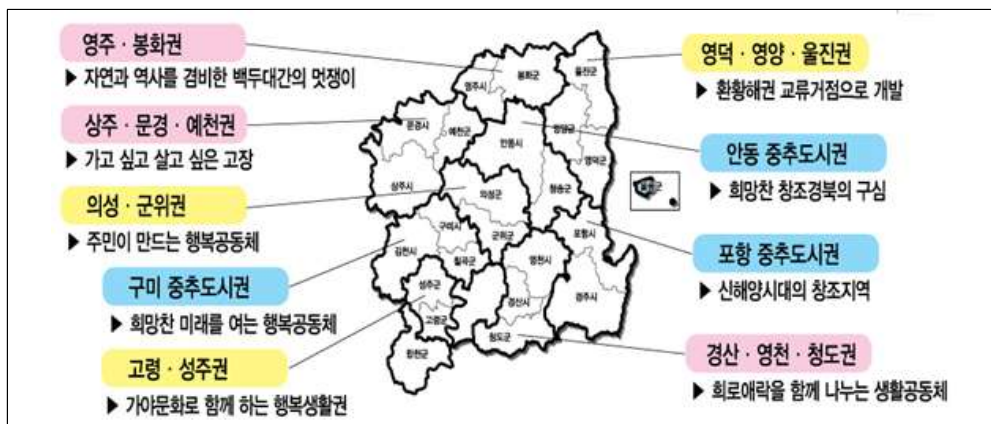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1. 지역생활권 활성화

(1) “지역행복생활권” 추진현황 및 성과

경북지역의 지역행복생활권은 13개 생활권으로 도내 9개 생활권과 타시도 연계 4개 생활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오투어리즘을 활용한 동해안권 친환경 통합관광 활성화 사업, 산골 철도역사 문화관광자원화 사업, 낙강선유(落江船遊) 휴(休)벨트 조성 사업, 스포츠를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 사업, 삼도봉 권역 호두 특화산업단지 조성 사업, 백두대간 영서 에코힐링 벨트화 사업이 선도사업으로 선정되어 문화, 관광, 복지, 농업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다.

그림 3-15-2 경상북도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2) 지역별 추진현황 및 성과

경상북도는 농어촌 및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기초 생활인프라 확충을 위해 도시가스망·LPG 소형저장탱크 보급·마을 상수도 보급 확대

에 노력하였으며, 도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후 슬레이트(슬레이트 처리 2,450동, 지붕개량 353동) 해체·처리 및 위험도로 구조개선(6지구 1.9km)을 추진하였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를 통한 농어촌 지역 하수도 보급률을 2014년 52.4% 확대하였으며, 토지계·축산계 등에서 배출되는 비점오염물질의 저감으로 탁도 50NTU(임하댐 말단지역) 유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확충(14개소 운영)을 통해 가축분뇨 처리율 5% 향상, 가축분뇨 1,290㎥/일 처리 등 농어촌 등 소외지역의 환경기반시설 확충에 힘썼다.

지역자원 및 자산 기반의 사업으로 지역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창조적 지역개발을 도모하여, 29개 마을기업을 육성하였으며, 특히 군위 삼국유사화본마을은 행자부 선정 최우수 마을기업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이루었다. 또한 읍·면의 기초생활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읍·면 종합정비 사업(2014년 72개 지구)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였다. 농촌체험마을 10개소, 농촌공동체회사 7개소 조성을 통한 농촌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2014년 2,172가구(3,688명)가 귀농한 대한민국 귀농1번지인 경북은 창업센터 2개소 운영, 지속적인 도시민 유치지원, 귀농인의 집 12개소 운영, 시도단위 귀농인 민간자생단체(귀농연합회) 전국최초 결성 등 도시민의 농촌유치 및 정착을 지원하고 지역공동체 기반의 주민협력 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간선도로, 철도 등 생활권 간 통행편의 제고를 위해 양질의 교통 네트워크 구축에 힘썼다. 상주-영덕 고속도로, 울산-포항 고속도로, 포항-영덕 고속도로를 건설 중에 있으며, 다산-화원간 광역도로 역시 송곡교, 월성교, 노강교 건설이 완료되는 등 교통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 밖에도 국가 기간도로망 기능보강 등 교통 인프라 구축 및 지역균형개발을 위해 L=13.12km의 지방도를 건설하였으며, 대구·경산지역 근로자(13만명) 및 4개 대학 통학생(3.5만명) 교통편의 제공으로 광역교통난 해소를 위해 대구 안심역-경산 하양역까지 L=8.77km 연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2.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경상북도는 지역산업 육성, 지역성장거점 육성사업, 농어촌일자리확충사업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 데 역량을 경주하였다.

2014년 좋은 일자리 만들기 위원회를 출범하여 청년 희망일자리(9,875개), 노인·여성 등 사회적 약자 일자리(24,381개), 기업유치·사회적기업 육성 등 지역일자리(11,764개), 공익사업 등 친서민 일자리(11,827개) 창출을 위해 노력하였다.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일자리 정책인 '경상북도 Smart 두레공동체'는 도시의 취약계층이나 유흥인력들을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연결해 줌으로써 도농간 일자리 mismatch를 해소해 주는 사업으로, 정부 3.0 브랜드과제 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협력적인 지역 고용 거버넌스 구축에 힘쓰고 있다.

경북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2개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출범시켰다. 구미에 경북의 창조자산과 삼성ICT를 융합하여 금오테크노밸리 내 경북창조혁신센터를 설립하였으며, 포항에는 POSCO와 협력 전국 최초 민간자율형 창조경제혁신센터인 포항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립하였다. 삼성과 포스코가 참여하는 두 개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경북창조경제의 컨트롤 타워로 운영하여 창조경제 패러다임 확산을 통한 지역경제 혁신을 도모하였다. 경북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스마트 팩토리, 7대 상생협력 신사업 육성, 전통문화자산의 문화산업화,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실현하고, 포항 창조경제혁신센터는 Eco 산업단지 조성, 첨단소재 클러스터 조성, 에너지절감형 공장 솔루션 지원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북은 지역 특성을 살려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성장산업들을 육성하고 있다. 동해안지역의 에너지산업, 남부권의 부품·소재산업, 북부지역의 바이오·생태산업은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자원과 산업의 조화로운 결합을 통해 지역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융합기술산업의 특화와 R&D, 산업화 기반확충을 위해 각 지역과 산업을 연계한 첨단융합산업 벨트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산지역을 차세대 건설기계·부품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총 8,967억원을 투자하여 건설기계·부품 특화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건설기계관련 기업유치 활동을 전개하여 22개 기업(691천㎡)이 입주 예정이다.

영천지역은 항공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항공전자 시험평가센터 건립을 2017년

까지 370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 보잉사의 영천 MRO센터 건립사업은 2014년 4월에 착공하여 2015년 3월 운영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동 센터는 보잉사가 아시아 지역에는 처음으로 건립하는 항공기수리정비개조센터로서 최대 1억 달러까지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경북 서남부지역에는 1차 소재, 조립금속(기계, 자동차) 및 전기, 전자부품, 소재산업이 발달해 있다. 따라서 이 지역에 집적된 IT 기반과 기술의 융·복합화를 가속하여 기존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신성장동력 산업으로서 부품·소재산업을 집중 육성해 나가고 있다.

경북 북부지역은 수려한 자연환경을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바이오·생태산업의 창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3년 7월 안동에 SK케미칼의 안동백신 제2공장을 설립을 유치하였고, SK케미칼은 2017년까지 총 2,500억원을 이 지역에 투자할 계획이다. 경북은 북부지역에 바이오산업 선진화와 산업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경북북부지역 바이오·백신클러스터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경북바이오벤처프라자 및 경북바이오연구원 운영 활성화를 통해 다가올 바이오 경제시대에 대비하고 있다.

또한 경북이 국내 최대의 원전 현장이라는 강점을 기반으로 하여 경주, 포항, 영덕, 울진 등 경북 동해안을 세계 최고수준의 안전한 원전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인력·산업이 집적된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를 조성해 나가고 있다.

농산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어촌 유·무형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농어업과 2·3차 사업간 융·복합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였다. 2014년도 14개소 농산물 제조·가공 지원하여 농산업의 복합산업화를 촉진하였고, 농촌체험마을 운영을 통해 2014년 방문객 1,848명, 매출액 51억원으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통한 농촌지역 일자리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해 과원 품종갱신 600ha(누적 9,900ha), 시설현대화 3,600ha를 추진하여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고품질 과수생산성을 향상시켰으며,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7개)을 통해 친환경농업 기반을 확대하고, 통합브랜드(김천애플)를 사용하여 과실출하율 20%(9,193톤) 달성 등 광역공동브랜드 육성과 과메기 산업화 가공단지 및 붉은대게 식품단지 조성 등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기반 정비에 힘썼다.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경상북도는 지역대학과 지역산업의 공생발전 및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사업을 추진하는 7개 대학교에 국비 229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다. 기술이전과 사업화역량이 특화된 '기술혁신형' 대학에는 영남대학교가 선정되었고, '현장밀착형'에는 금오공과대학교, 대구대학교, 경운대학교, 경일대학교가 선정되었으며, 또한 전문대학 지원사업으로 '산학협력 선도형'에는 구미대학교가, '현장실습 집중형'에는 안동과학대학교가 선정되었다.

취업중심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해 경북권내 12개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기업수요, 특성화고 학사일정 등을 반영하여 수요자 중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수료율 100%, 취업률 88%의 성과를 이루었다. 그 밖에도 글로벌 인재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대학과 선도산업 및 지역특화산업간 산학연 연계를 통한 지역발전에 필요한 우수 인재를 양성·공급하기 위한 다양한 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도민들이 전 생애에 걸쳐 능력개발을 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 등을 확충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학습기회를 제공하였다. 20개 읍면동에 행복학습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12개소), 소외계층 프로그램 지원(4개), 도민참여교육실시 등을 통해 세대별·계층별 맞춤 평생교육을 통해 도민 삶의 질 향상 및 도민의 평생학습 욕구 충족을 위해 노력하였다.

4. 지역 문화 융성, 생태복원

정부는 문화를 통해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문화융성을 국정기조로 제시하였고, 이에 경상북도에서는 풍부한 문화자산을 바탕으로 경북만의 차별화된 전략을 추진하였다.

지방 최초로 경북형 문화융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3대 역사문화권과 생태문화권을 융합, 역사와 생태의 특화 전략을 추진하였으며, 옛것을 활용하여 관광자원화 하여 문화를 통한 지역 재생에 힘썼다. 또한 실크로드 및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지속적인 발굴로 경북문화의 세계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을 추진하여 도내 97개 예술단체가 참여, 경북도내 문화오지지역과 문화취약지역에서 205회 정도의 공연을 통해 문화소외계층 지역주민들에게 문화향수를 제공하였고, 농·산·어촌 찾아가는 작은음악회를 열어 도민의 문화격차 해소와 생활문화 활성화에 노력하였다.

3대문화권 생태관광기반 조성을 위해 유교문화 글로벌 브랜드화, 신라 천년문화 재현을 통한 정체성 확립, 신비한 가야문화 재발견과 네트워크화를 추진하였다. 또한 경북의 빼어난 녹색자원을 활용한 강·산·바다 녹색관광 상품화를 추진하기 위해 낙동강의 풍부한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리버 관광지구 조성, 해양자원과 산림·휴양자원을 연계한 자연치유 휴양벨트 조성과 네트워크화, 문화권과 생태자원이 연계된 도시관광 비즈니스 허브기능 강화 등을 추진하였다.

그동안 2010년부터 5,369억원(국비 3,667억원, 지방비 1,702억원)을 투입하여 황악산 하야로비공원조성, 신화랑풍류벨트조성사업 등 30개 사업 43개 지구에서 관광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3년 육로 실크로드 탐험에 이은 2014 해양실크로드 탐험은 통해 세계와 교류한 신라인의 흔적을 따라 총 45일 동안 9개국 10개항, 22,958km의 대장정이었다. 이를 통해 경북은 천여 년 전 동서 문물교류인 바다 실크로드 재조명을 통해 우수한 韓文化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한류를 넘어 문화 산업화를 이끌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해양강국으로서의 대한민국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

최근 생태관광·체험에 대한 지속적으로 관심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의 우수한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보전함으로써 생태관광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향상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생태계와 자연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핵심역할을 하고 있다.

산림휴양 공간을 자연친화적으로 조성, 양질의 산림휴양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자연휴양림 5개소, 도시숲 25개소, 녹색공간 17개소 등을 조성·보완하여 산림휴양시설을 확대·조성하고 이용객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한편 대국민 산림문화 학습장으로 제공하였다. 또한 영천·영덕에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 안동시 등 9개 시·군에 낙동강 풍경 트레일 조성(126km), 봉화군 등 10개 시·군 낙동정맥 트레일(378km) 조성 등을 통해 백두대간과 낙동정맥을 활용한 휴양 및 녹색공간을 확충하여 지역 연계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경북은 2013년부터 복지전달체계를 선도적으로 개편하였다. 동 주민센터를 체감도 높은 맞춤형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해 경북형 복지허브로 만들기 위하여 10개 시, 2개 군에 도 자체 시범 동 주민센터를 선정하였다. 특히 성주시는 보건복지부 읍면동 복지강화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착실히 역할을 수행하며 복지행정 기능을 점검하고 강화해 나가고 있다. 또한 주민에게 직접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복지행정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 ‘좋은 이웃들’을 구성하고 이동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다.

기초수급자, 노인, 장애인, 결혼이민여성 등 취약 계층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산적 복지, 일자리 지원 등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였다. 응급 안전 돌보미 시범사업을 전 시·군으로 확대하여 20,316가구의 홀몸어르신 돌보미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다문화가족의 행복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강화하고 도민들의 인식개선에도 힘쓰고 있다.

2012년부터 추진한 ‘찾아가는 행복병원’ 사업은 포항·김천·안동 3개 의료원별 주 2회 순회 진료를 통해 의료취약계층 무료 건강검진서비스 제공으로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오·백지 응급환자의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해 2013년 7월부터 닥터헬기를 운영하여 응급환자 462명을 이송하였으며, 의료관광 우수병원을 8개소 지정하여 의료관광산업의 교두보를 마련하였다.

또한 청소년 교육 및 복리증진을 위한 활동지원에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연계하여 노후화된 시·군·구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하여 준공년도, 시설안전도, 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개보수를 하였다. 경쟁 고용이 어려운 지역 장애인들에게 맞춤형 일자리 1,265개를 제공하여 장애인들의 자립기반 조성 및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고하였으며,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로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손주와 조부모간의 만남을 통하여 세대 간의 공감과 소통을 증대하고, 격대(인성)교육을 통한 인성회복과 가족공동체 복원을 위해 2014년 10월 ‘할매·할배의 날’을 선포하고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을 ‘할매·할배의 날’로 지정하여 가족공동체 회복 100일 프로젝트, 연극단 운영 등을 통해 세대 간의 소통과 공감확산에 힘썼다.

제4절 향후 추진계획

경북은 기업의 투자가 지역의 일자리로 연결되는 선순환의 경제생태계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앞으로 IT, 항공, 자동차 부품, 레저서비스 등 고용효과가 큰 유망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인 중소기업이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금과 기술, 인력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경북·포항 두 개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제조업을 대혁신하고 전통문화자산의 문화산업화, 농어업의 6차 산업화를 실현하고, 꿈의 소재라 일컫는 탄소섬유와 미래 신기술로 각광받고 있는 3D프린팅을 경북의 2대 신산업으로 발전시키고 ICT융복합, 로봇, 에너지, 물 융합, 첨단의료 및 바이오를 5대 주력산업으로 집중 육성하여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할 계획이다.

또한 동해안을 국가차원의 원자력 R&D 허브로 조성하여 국제원자력인력양성원, 원자력기술표준원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원전 해체기술 종합 연구센터를 유치하여 국내 유일 전주기 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며, 세계 유일의 3대 가속기 클러스터, 과학벨트 DUP 연합캠퍼스를 기반으로 한 첨단 과학단지 조성을 추진 중이다.

그 밖에 정부 지역발전 정책의 핵심인 행복생활권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한 낙후지역 지원으로 23개 시·군 간 발전의 격차를 줄일 계획이다. 또한 3대 문화권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신라왕경 복원 사업을 조기에 가시화시키고, 작은도서관·작은영화관·작은음악회와 같은 생활 속에서 쉽게 누릴 수 있는 알찬 문화적 서비스를 다양하게 확충할 계획이다.

FTA 대응전략으로 경북 농산어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민사관학교를 통한 농업 CEO양성·유통구조 개선·품질 고급화로 경북 농업의 명성을 지키고, 바다목장 확대·붉은 대게 식품단지 조성·수산물 복합유통센터 건립, 해양관광 활성화로 어업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할 계획이다. 그리고 국가 산채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산림약용 자원을 산업화하여 백두대간과 낙동정맥을 산지부농의 새로운 터전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노인·여성·장애인이 행복한 경북을 만들기 위해 어렵고 힘든 이웃에 대한 지원에 중점을 두고 찾아가는 행복병원, 닥터헬기 운영을 통해 현장중심의 보건의료를 강화하고, 장애인의 자활기반과 여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제16장 경상남도

제1절 경제 현황

1. 일반 현황

경남의 인구는 2013년 기준 333만명으로 2010년에 비해 4만명 증가하였다. 지역내총생산(GRDP)은 2010년 87조원에서 94조원으로 증가하였으며, 1인당 GRDP는 3,096만원으로 나타났다. 수출액은 2010년 584억 달러에서 11% 감소한 519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취업자수는 2010년 153만명에서 162만명으로 증가하였다. 재정자립도는 2010년에 비해 소폭 감소한 41.7%로 전국 평균을 하회하였다.

표 3-16-1 경상남도 경제 일반현황

구분	전국			경남		
	2007년	2010년	2013년	2007년	2010년	2013년
지역내총생산(십억원)	1,151,843	1,265,146	1,376,143	76,078	87,419	92,433
인구(천명)	49,269	50,516	51,141	3,197	3,291	3,334
1인당 GRDP(만원)	2,147	2,561	2,842	2,332	2,725	3,096
수출액(백만달러)	371,489	466,384	559,632	36,512	58,380	51,859
취업자(천명)	23,433	23,829	25,066	1,502	1,533	1,619
재정자립도(%)	53.6	52.2	51.1	39.1	42.9	41.7

주 : 지역내총생산은 2010년 기준가격임.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2. 산업 현황

경남의 산업구조는 지역내총생산액 기준으로 서비스업 51.2%, 제조업 44.9%, 농림어업 3.7%, 광업 0.1%로 나타났다.

2013년 제조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기타 기계 및 장비'가 사업체수, 종사

자수, 생산액 모두 업종 비중이 각각 20.4%, 17.3%, 11.5%로 가장 높았다. 그 외에도 '금속가공제품', '자동차 및 트레일러' 등의 비중이 높았다. 2007년과 비교할 때, 업종별 비중변화는 크지 않았다.

표 3-16-2 경상남도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07년			2010년			2013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제조업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식료품	5.9	4.8	3.7	5.4	4.6	3.6	5.3	4.7	4.2
의복, 의복액세서리	0.4	0.4	0.1	0.3	0.2	0.1	0.3	0.3	0.1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7.3	7.1	4.8	6.7	6.6	4.1	7.3	7.6	5.2
금속가공제품(기계·가구 제외)	17.2	13.2	10.3	18.5	14.0	10.0	18.5	13.7	11.5
전자부품·컴퓨터·통신장비	2.6	3.8	3.7	2.2	3.4	4.3	1.7	2.0	1.6
전기장비	4.9	5.6	5.9	5.0	6.1	6.7	4.7	5.7	5.8
기타 기계 및 장비	20.7	16.6	20.7	20.3	16.9	17.2	20.4	17.3	16.9
자동차 및 트레일러	8.7	8.6	7.7	8.7	8.5	7.4	10.4	10.0	10.2
기타 제품	0.6	0.3	0.1	0.6	0.3	0.1	0.6	0.3	0.1

주 : 2010년은 경제총조사 자료임.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광업·제조업 조사 ; 경제총조사(2010)」

표 3-16-3 경상남도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07년			2010년			2013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서비스업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0.9	2.9	7.2	0.8	2.0	6.5	1.2	2.8	8.3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0	2.5	6.9	1.5	3.6	12.9	1.1	2.2	4.7
부동산업 및 임대업	12.0	9.6	15.7	10.4	6.5	10.1	13.1	9.4	17.6
사업지원 서비스업	3.0	10.8	7.6	2.7	8.3	5.9	4.2	13.3	11.8
교육 서비스업	19.6	16.1	8.3	20.0	31.0	25.0	18.7	12.0	6.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1.3	27.6	30.6	11.8	23.7	21.5	14.7	33.9	30.8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14.5	10.5	8.4	10.4	6.2	6.0	10.9	8.2	8.1
기타 개인 서비스업	37.8	20.0	15.3	42.4	18.7	12.2	36.2	18.2	12.2

주 : 2010년은 경제총조사 자료임.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전국서비스업조사 ; 경제총조사(2010)」

2013년 서비스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업체수 기준 '기타 개인 서비스업'이 36.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종사자수 및 생산액 기준으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33.9%, 30.8%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의 업종 비중이 높았다. 2007년과 비교할 때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과 '사업지원 서비스업'의 비중이 다른 업종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기타 개인 서비스업'의 비중은 소폭 감소하였다.

3. 혁신활동 현황

연구개발 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기준 연구개발비 2.1조원, 연구개발인력 25,189명, 연구개발조직수 1,275개로 나타났다. 전국대비 비중 변화는 2007년에 비해 연구개발비, 인력 및 조직수의 비중이 감소하였으며, 특히 조직수는 0.9%p 하락하였다.

특허 현황을 보면, 2013년 기준으로 특허출원은 5,017건이며, 등록은 3,076건으로 전국대비 비중은 각각 3.1%, 3.2%로 나타났다. 2007년 대비 출원 건수는 1,413건 증가하여 전국대비 비중이 0.3%p 증가하였으며, 등록 건수는 1,192건 증가하여 1.1%p 증가하였다.

표 3-16-4 경상남도 혁신활동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 건, %)

구분		2007년	2010년	2013년
연구 개발	연구개발비	1,286,328 (4.1)	1,513,659 (3.5)	2,074,905 (3.5)
	연구개발인력	19,107 (4.5)	19,749 (4.0)	25,189 (4.4)
	연구개발조직수	677 (5.5)	975 (5.5)	1,275 (4.6)
특허	출원	3,604 (2.8)	3,971 (3.0)	5,017 (3.1)
	등록	1,884 (2.1)	1,492 (2.9)	3,076 (3.2)

주 : ()는 전국대비 비율임.

자료 : 1)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년도

2) 특허청, 지식재산통계연보, 각년도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경남은 국토의 관문으로서 신항만,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과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등 개방거점의 개발로 향후 한태평양 경제권의 경제중심지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국가기간 산업의 메카로서 기계, 조선, 로봇산업이 지역 주력산업으로 성장하면서 발전하였고, 이러한 발전역량과 기반을 바탕으로 해양플랜트, 항공우주산업, 나노융합산업 등 미래 대응형 산업구조로 전환하고 있는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남해, 지리산, 섬진강, 낙동강 등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대장경, 가야문화 등 지역고유의 세계적인 역사문화자원을 함께 보유하고 있고, 전역에 청정한 자연환경과 전통적인 문화역사자원이 분포하고 있어 향후 지역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경남의 발전잠재력은 산업기반과 자연환경기반이 골고루 갖추어져 있어 향후 지역성장에서 주요한 기반으로 작용할 것이며, 앞으로 동북아시아의 경제권이 확대될 경우 산업중심지로서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이다. 또한 최근 해양자원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어 새로운 해양레포츠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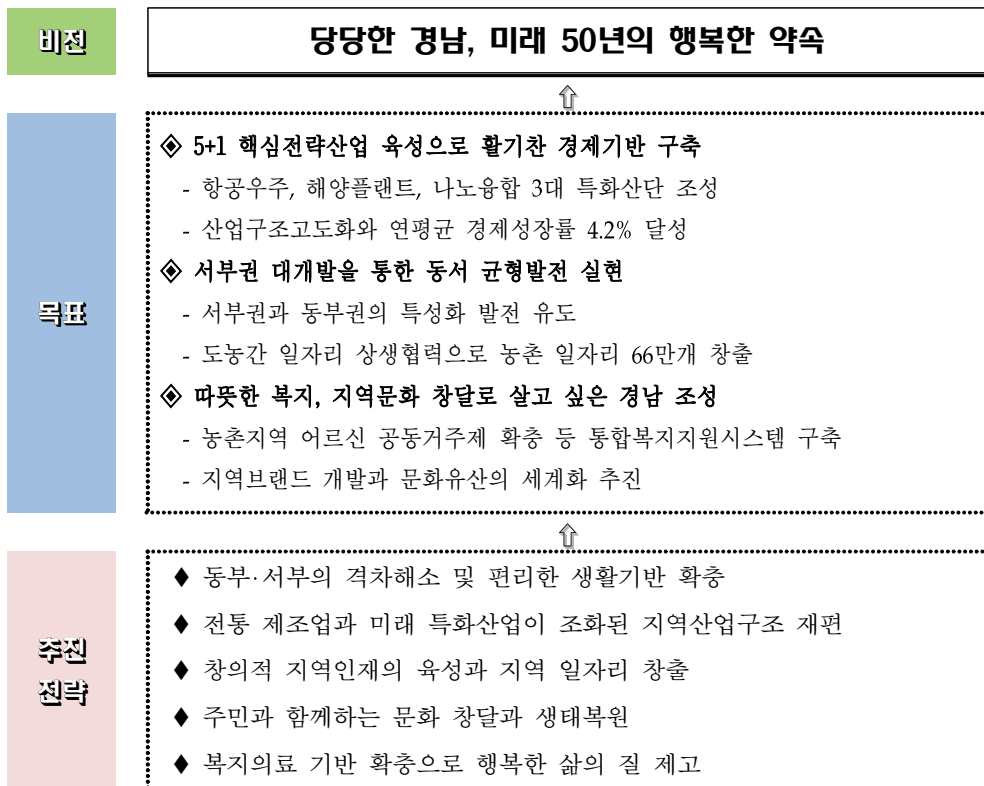
경남의 발전과제는 산업 및 자연환경자원을 기반으로 한 지역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발전과제는 풍부한 해양자원과 산악자원 및 문화자원을 활용한 국제적인 관광·휴양산업의 거점으로 개발하고, 기계, 조선, 항공 등 경쟁력을 갖춘 전통 제조업과 새로운 기술의 융복합화를 통하여 다양한 산업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등 산업의 연계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국제적인 관문지대화를 위해 항만·물류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기반시설을 확충해야 하며, 조선·기계산업의 구조고도화를 추진하여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자원을 바탕으로 한 지역산업 특화 및 연계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지역특화자원을 활용한 친환경농업, 향노화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여 경남내 지역 간 상생발전을 추진하도록 하여 지역불균형을 체계적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1. 발전비전

경남은 '당당한 경남, 미래 50년의 행복한 약속'이라는 비전을 설정하였다. 그 동안 대한민국의 국가성장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해 온 산업집적지로서 국제적 경쟁력을 보유한 기계, 조선 등 전통 제조업의 구조고도화와 함께 미래 성장동력인 로봇, 항공우주, 해양플랜트, 나노, 항노화 등 첨단 제조업과 융합산업의 창조적 혁신으로 한 세대를 내다보는 새로운 발전기반을 구축한다. 또한 국가성장의 주요 지역으로서 역할을 지속하면서 내부적으로 균형발전을 추진하여 살기 좋은 지역으로 성장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림 3-16-1 경상남도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발전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5+1 핵심전략산업 육성으로 활기찬 경제기반 구축”, “서부권 대개발을 통한 동서 균형발전 실현”, “따뜻한 복지, 지역문화 창달로 살고 싶은 경남 조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2. 추진전략

경상남도의 발전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동부·서부의 격차해소 및 편리한 생활기반 확충’, ‘전통 제조업과 미래 특화산업이 조화된 지역산업구조 재편’, ‘창의적 지역인재의 육성과 지역 일자리 창출’,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 창달과 생태복원’, ‘복지의료 기반 확충으로 행복한 삶의 질 제고’의 5가지 추진전략을 마련하였다.

첫째, 경남은 그 동안 동부권에 산업 및 행정이 집중되어 서부권 농어촌 지역 간의 발전격차가 심화되어 왔다. 따라서 서부권 대개발을 추진함과 동시에 지역행복생활권 활성화를 통해 경제, 문화, 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불균형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의 행복만족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둘째, 기계, 조선산업 등 전통 제조업의 구조고도화를 통해 세계적 경쟁력을 유지하며, 항공우주, 해양플랜트, 나노융합, 항노화산업 등 국가차원의 미래 성장동력을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한다.

셋째, 지역의 창의인재 육성기능을 강화하고, 구조개혁을 통해 지역대학의 자체 경쟁력을 확보하고, 농산어촌 지역의 학습환경 개선을 통한 농어촌 교육여건을 조성하는 등 창의적 지역인재 육성과 지역일자리 창출을 연계해 나갈 것이다.

넷째, 수요자 중심의 창조적 하드웨어 구축 등 지역주민이 함께 하는 문화창달과 광역생태축, 광역녹지축 복원 및 보전을 통해 도 전체의 환경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주민의 환경정책 참여 확대 등 환경보호의 인식을 높여 나가고자 한다.

다섯째, 복지서비스간의 소통을 통해 복지정책의 도민 체감도를 높이고, 지역의 복지문제를 공동의 문제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공동 프로그램을 활성화 한다. 또한 지역별, 연령별, 대상별로 전략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확대하는 수요자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전환하고,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를 강화하여 지역간 의료서비스의 불균형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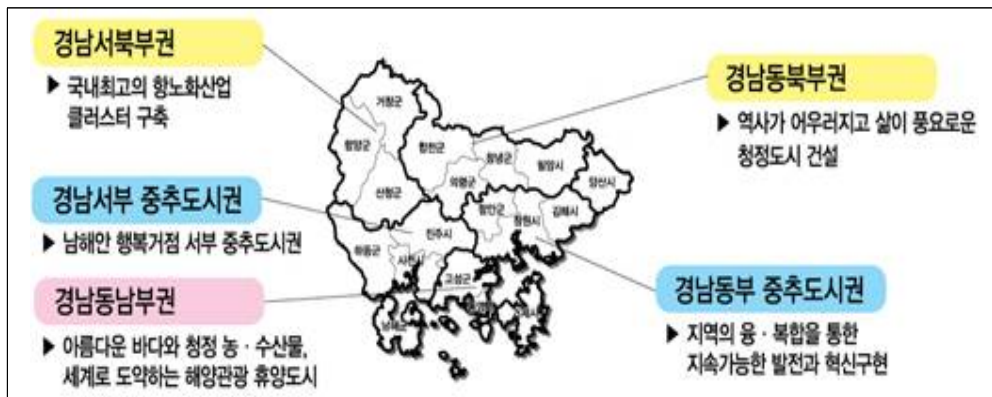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1. 지역생활권 활성화

(1) 지역행복생활권 추진현황 및 성과

경남의 지역행복생활권은 5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추도시생활권(2)은 경남동부 중추도시권(창원시·김해시·합안군), 경남서부 중추도시권(진주시·사천시·남해군·하동군), 도농연계생활권(1)은 경남동남권(통영시·거제시·고성군), 농어촌생활권(2)은 경남서북부권(거창군·함양군·산청군), 경남동북부권(합천군·밀양시·창녕군·의령군)이다.

그림 3-16-2 경상남도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행복생활권은 2개의 연계협력사업(통영-고성, 거창-함양-산청)이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생활권내 시·군간 연계협력사업을 통해 지역 간 경쟁에서 협력을 통한 상생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최근 이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대되고 있어 앞으로 생활권내 시·군간 연계사업이 계속하여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지역별 추진현황 및 성과

경남도는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이 모두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 예산확보를 통

한 기반시설구축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주민생활의 편의성을 확대하는 등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물류기반 조성사업에서는 월 3회 이상 방문자 비율 68.6%를 달성하였고, 그 중 젊은 세대 이용자의 비율을 40% 이상 달성(당초 목표 27%)하였다. 이 외에도 상수도보급률 91.7%, 주택보급률 105.5%, 주거만족도 72% 등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생활인프라도 목표치를 초과하여 달성하여 주민생활의 편의성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도심침수대응사업은 2013년 환경부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선정된 창녕군과 고성군에 200억원을 투입하여 도심침수 대응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있고, 향후에도 신규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며, 계속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기간 내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은 10개소에 264억원을 투입하여 농어촌 면단위의 하수도 보급률(86.9%)을 높이고 수질오염을 예방해 나갈 것이다. 폐기물처리시설은 창원시와 진주시에 매립시설을 착공하였고, 음식물처리시설 건립도 실시계획 중에 있다. 해양오염과 관련하여 방치선박 8척을 정리하여 해양오염방지 및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하였고, 해양쓰레기 712톤을 수거, 처리하여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에 기여하였다.

광역도로는 3개 구간에 75억원을 투입하여 계속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1개 구간을 개통하여 연 5,475천명에게 도로이용의 편익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밀양-울산구간(9개 공구, 45.2km)에 공사를 착공하였고, 부산순환고속도로 건설과 마산-거제 국도(5호선) 건설, 국가지원지방도 11개 지구에 대한 건설사업을 각각 정상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도시철도 양산선(노포-북정) 건설, 부전-마산복선전철 사업도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절차를 추진 중에 있다.

2.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지역산업분야에서는 지역특화산업(기계)에 183억원을 투입하여 R&D 사업에 33개 기업, 비R&D 사업에 11개 주관기관에 지원하였고, 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 창원컨벤션센터 증축, SW 융합지원, 지역맞춤형 인력교육·기술이전 등 지역산업마케팅 지원사업을 확대하였다. 그리고 관광 및 농어업분야는 관광자원개발 5개 사업에 50개소

601.6억원을 투입하여 관광시설을 확충하였고, 농어업기반 조성 및 농어촌관광, 자원 복합화자원사업으로 어촌관광 및 농촌체험관광 25개 마을, 로컬푸드 직매장 12개소, 농업기반정비 56개소, 농어촌자원복합화자원 39개소 등을 추진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지역SW산업진흥지원사업을 통해 IT 무역사절단 파견 6개사, SW 제품사업화 지원 사업 2개사, 기업지원 멘토링 지원 3건, SW 품질인증 2건, 품질전문 인력양성 57명 등의 실적을 올렸다. 지역전통산업육성은 실크소재활용 및 전통목공예에 10.6억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13.6억원을 투입하여 항공, 풍력 등 4개 특화사업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186명을 취업시키는 성과를 나타냈다. 이와 같이 지역전략산업(항공, 풍력, 금형 등)과 연계한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로 기업체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김해지역의 산업 및 기업지원을 위해 종합비즈니스센터 건설사업에 78억원을 투입하여 2015년에 완공할 예정이며, 지역거점조성사업(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건설) 중 김해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사업을 추진하여 기업체의 산업용지 수요 시기에 맞는 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한 사업을 적절히 추진하였다.

과학기술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경남과학연구단지 활성화사업에서는 미래먹거리 전략과제 3건을 발굴하고 과학기술 활성화 포럼을 2회 개최하였다. 지역특화맞춤형 기술이전사업에서는 출연연, 대학 보유 특허 및 기술이전 수요기업 DB를 구축하였고, 2014년도 경남창원기술이전 장터를 개최하여 41개 기업 120여명 참여, 기술상담 35건을 실시했고, 경남대 해수의 담수화 장치 등 기술이전 28건, 2.8억원의 성과를 이루었다. 또한 지역연구개발지원단 육성사업을 통해 지역맞춤형 연구회 10개를 운영·지원하였고, 과학기술정책 세미나 2건과 지역 과학기술 혁신 역량강화 교육을 1건 개최하였다.

마케팅지원사업으로 국내전시회마케팅지원에 12.5억원을 투입하여 산업전시회 3회를 개최하여 계약금액 1,282억원의 성과를 창출하는 등 수출상담회의 성공적 개최로 해외수출 및 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그리고 지역산업마케팅 지원(기계산업) 사업에 10억원을 투입하여 기계산업분야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을 21회 실시하였으며, 이는 기업의 수출역량 강화에 큰 도움을 주었다고 평가되었다.

관광자원개발 관련사업 중 어촌관광 활성화 지원사업에 18개 마을 지원을 통해 약

57만명이 방문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체험장비 및 홍보물 지원을 통해 어촌관광 활성화 및 어업 외 소득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관광자원개발사업은 지역 내 주요 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해 5개 사업에 총 602억원을 투입하였다. 또한 폐선철로 관광상품개발을 위해 레일바이크 및 와인터널을 조성하고, 문화생태 탐방로 정비, 우포늪 생태관광 모델사업을 추진하여 탐방객 분리도로 개설 및 주민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생태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농어촌관련 사업 중 로컬푸드 육성사업에 5.4억원을 투입하여 9개 시·군, 12개소에 직매장 내 냉장고, 판매대, 포장재 제작기 등을 지원하여 지역농산물 신규 판로확보와 안전한 농산물 공급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7개 마을에 대한 지원을 통해 2014 농촌여름휴가페스티벌 도협의회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농업기반사업 56개 지구 추진으로 기초 인프라를 조성하였고,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에 15개 시·군에 157.5억원을 투입하여 과수분야 생산시설 현대화로 생산단가 절감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또한 밀양시에 과실전문생산단지 48ha에 농업용수 공급 및 경작로를 포장하였으며, 종자산업기반구축을 위해 5개 사업에 32.8억원을 지원하여 온실, 저온창고 설치를 지원하는 등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에 35개 사업 416.7억원, 지역농업연구기반조성사업에 기간작물 종합육종연구 시설 보완 등 15건에 33.8억원, 지역농업특성화기술지원에 28.5억원, 농식품 가공·체험기술 보급에 9.5억원을 각각 지원하였다. 그리고 농수산물 해외 마케팅지원사업을 통해 560건의 상담실적과 1.2억 달러의 수출실적을 올렸다.

산림과 관련하여 임도시설 308km에 142억원, 산림경영자원육성에 목재문화체험장 등 11개소에 75.8억원,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에 휴양림 7개소 등 356.9억원을 각각 투입하여 산림생태관광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다양한 여가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농산어촌 학습여건 개선을 위해 소규모학교의 적정규모화 2개교(남해 꽃내중학교, 합천 가야초등학교)를 확정하고, 거점기술형 중학교 4개교 설립 예산 495억원을 편성

하였다. 그리고 ICT를 활용하여 농산어촌 학생들에게 양질의 학습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238교에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농산어촌 거점별 우수학교 5개교(군북중, 안의중, 진례중, 용남중, 해인중)에 25억원을 지원하여 도농 교육격차 해소를 통해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돌아오는 농촌 기반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였다.

초등돌봄교실 874교실 운영에 251억원을 지원하여 학부모의 만족도(94.2%)를 크게 향상시켰으며, 특성화고·마이스터고 45개교에 258.8억원을 지원하여 취업률 49.2%를 달성하여 전년도에 비해 4.7%를 상승시켰다. 그리고 생애단계별 평생학습 프로그램(24개 평생학습관 664개 프로그램 122천명 참여)과 학력인정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6개 지역 8개 기관 13학급)을 운영하였고, 학원, 교습소 등 건전성 확보를 위한 지도단속을 실시(점검률 34.3%, 적발률 22%)하는 등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을 확대하였다.

4. 지역문화 육성, 생태복원

지역문화시설 확충을 위한 생활문화센터 조성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계획이 시작되었다. 또한 공공도서관 6개소, 박물관 조성 2개소 등 문화시설 확충사업에 16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그리고 2015년 10월에 개관을 목표로 남해군 작은영화관 조성이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소외계층문화순회 사업에 연극, 무용, 음악, 국악 등 4개 분야에 3.7억원을 지원하여 47개 단체에 69회 공연을 실시하였고,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으로 문학, 시각(미술, 서예, 사진) 2개 분야에 2.1억원을 투입하여 10개 단체, 23건에 지원하였다. 작은도서관 조성은 남해 갯변마루 작은도서관, 하동 코스모스 작은도서관을 조성하는 데 1.65억원이 투입되었다. 지역문화시설 확충사업은 주로 소외된 지역의 문화수요에 대응하고, 지역맞춤형 문화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하게 지원되고 있다.

주민의 체육활동지원 확대 및 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생활체육현장 37개소에 생활체육지도자 209명을 배치하는 데 54.8억원을 지원하여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수요 증가에 부응하고 있다. 사천스포츠클럽(3년간 3억원씩)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체육활동

증진에 도움을 주었고, 생활체육광장 37개소에 1억원을 지원하여 새벽시간 또는 저녁 시간 주민들의 체육활동 모임 현장에 전문지도자를 배치하여 지역주민의 체육활동 증진을 위한 운영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에 15개 시·군 28개소에 371억원을 지원하여 서민중심의 생활공감 체육정책을 확대하고 있고, 지역별 차별화된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하고 있다.

지방문화산업기반조성을 위해 25개 사업에 40.7억원을 투입하여 도내 문화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문화콘텐츠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생태하천복원사업은 56.3km에 440.6억원을 투입하여 도심지 경관개선 및 주민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통해 연구사업 8건, 기업환경지원사업 45개 업체 등에 7.9억원을 지원하였다.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에 18개 지구 22억원을 지원하여 농촌 고령자의 주거·영양·위생 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며, 공동생활홈, 공동급식시설 설치에 집중하여 추진하고 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사업은 17개소에 24.4억원 지원하여 670명을 실시하여 청소년 비행노출 예방 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지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2012년~2014년 동안 231명을 충원하고, 인건비 41.4억원을 지원하여 복지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사회복지인력 충원 및 읍면동 복지기능 강화에 주안점을 두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은 창원 신월어린이집 1개소에 5억원을 투입하여 공보육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자 하였다.

지역특성 및 주민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하여 수요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사회서비스 포괄보조사업에 119.7억원을 투입하여 34개 사업, 이용자 26천여명, 제공기관 300여개에 지원하였고, 자체평가 결과 창원시와 진주시가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360.4억원을 집행하여 82개 제공기관을 통해 월평균 3,500명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3,000여명의 활동보조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다.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에 언어발달 지도사 25명, 60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취약지역 거주 임산부 및 12세 이하 아동에 대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사업인 드림스타트지원사업에 52.5억원을 투입하여 18개소를 운영 중에 있다. 그리고 방과후 돌봄서비스는 167.3억원을 투입하여 256개소를 운영하고 6,454명이 이용하였다.

의료취약지 지원은 9개 시·군에 18.5억원을 투입하여 시설개선 10개소, 장비 51점을 지원하였다. 통합건강증진사업은 금연클리닉 등 주민건강증진에 147.8억원을 투입하였다. 그리고 주민 정신건강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증진센터 2개소를 신규 설치하고, 아동청소년건강증진, 자살예방 및 지역 정신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하는데 41.7억원이 투입되었다.

제4절 향후 추진계획

경남의 지역발전사업의 목표는 크게 경제성장과 주민의 생활환경개선에 두고, 전년 대비 각각 4% 증가와 2% 개선을 설정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경제성장은 GRDP, 고용률, 실업률, 수출액 등의 전년대비 평균 4% 이상의 증가를 목표로 지역의 경제성장기반을 확충해 나갈 것이며, 생활환경개선은 주민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기초생활인프라인 상수도보급률, 생활문화시설 확충 등을 2% 이상 확대하여 주민의 삶의 질적 수준을 높여 나갈 것이다.

5대 분야별로 보면, 지역생활권 활성화에서는 주민생활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생활인프라 확충에 주안점을 두고, 연계협력사업 및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또한 각종 포괄보조사업에 대한 추진을 수시로 점검하여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갈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는 지역경제기반 조성을 위해 기계, 조선, 항공 등 전통제조업의 구조고도화를 추진하며, 지역기반산업의 융복합화를 통해 미래성장동력으로 탈바꿈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관광산업 및 농어업분야의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은 소규모학교의 적정규모화와 농어촌지역 교육지원을 확대하여 도농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고교 직업교육 기회 및 고졸취업 확대를 위해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지역문화 육성 및 생태복원은 주민수요에 대응하는 문화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생태복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는 복지시설 신축 및 대상자 지원 확대를 통해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크게 확대해 나가며, 지역주민의 건강지원을 확대하여 건강한 지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인 연계협력 프로젝트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프로젝트를 동시에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도내 시·군의 참여 확대를 유도하고, 수시 컨설팅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선정된 사업은 수시 모니터링을 통하여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연계협력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시켜 지역간 상생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추진 중인 경남 미래 50년 전략사업을 발전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실현가능성을 확대해 나갈 것이며, 5+1 특화산업 등 주요 전략사업의 추진상황을 수시로 검토하여 지역발전사업과의 연계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략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다각적으로 사업화해 나가는 방안도 동시에 강구할 계획이다.

제17장 제주특별자치도

제1절 경제 현황

1. 일반 현황

제주의 인구는 2013년 기준 59만명으로 2010년에 비해 2만명 증가하였다. 지역내총생산(GRDP)은 2010년 11조원에서 13조원으로 증가하였으며, 1인당 GRDP는 2,341만원으로 나타났다. 수출액은 1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취업자수는 2010년 28만명에서 31만명으로 증가하였다. 재정자립도는 2010년에 비해 4.5%p 증가한 30.6%로 전국 평균을 하회하였다.

표 3-17-1 제주특별자치도 경제 일반현황

구분	전국			제주		
	2007년	2010년	2013년	2007년	2010년	2013년
지역내총생산(십억원)	1,151,843	1,265,146	1,376,143	9,967	10,899	12,664
인구(천명)	49,269	50,516	51,141	559	571	594
1인당 GRDP(만원)	2,147	2,561	2,842	1,668	1,993	2,341
수출액(백만달러)	371,489	466,384	559,632	58	98	103
취업자(천명)	23,433	23,829	25,066	289	283	305
재정자립도(%)	53.6	52.2	51.1	26.4	26.1	30.6

주 : 지역내총생산은 2010년 기준가격임.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2. 산업 현황

제주의 산업구조는 지역내총생산액 기준으로 서비스업 81.4%, 제조업 3.7%, 농림어업 14.8%, 광업 0.2%로 나타났다.

2013년 제조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식료품'이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모두 업종 비중이 각각 45.6%, 47.8%, 42.0%로 가장 높았다. 그 외에도 다른 제조업의 비중은 미약한 수준이었다. 2007년과 비교할 때,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금속가공제품'의 비중이 감소하였으며, 다른 업종의 비중변화는 크지 않았다.

표 3-17-2 제주특별자치도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07년			2010년			2013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제조업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식료품	42.0	45.7	46.5	40.6	55.3	44.5	45.6	47.8	42.0
의복, 의복액세서리	1.2	0.0	0.0	0.6	0.0	0.0	0.5	0.0	0.0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8.6	6.5	3.8	8.3	7.4	2.8	5.7	4.2	3.0
금속가공제품(기계·가구 제외)	3.1	2.4	1.3	4.4	3.8	1.6	1.0	0.0	0.0
전자부품·컴퓨터·통신장비	0.6	0.0	0.0	1.1	0.0	0.0	0.5	0.0	0.0
전기장비	2.5	1.5	0.9	1.1	0.0	0.0	3.6	1.9	0.8
기타 기계 및 장비	1.2	0.0	0.0	2.2	3.2	1.4	2.1	1.1	1.0
자동차 및 트레일러	0.0	0.0	0.0	0.0	0.0	0.0	0.0	0.0	0.0
기타 제품	0.6	0.0	0.0	2.2	1.6	0.5	1.0	0.0	0.0

주 : 2010년은 경제총조사 자료임.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광업·제조업 조사 ; 경제총조사(2010)」

표 3-17-3 제주특별자치도 서비스업의 주요 업종별 비중

(단위 : %)

구분	2007년			2010년			2013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서비스업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하수·폐기물 처리, 환경복원업	0.6	1.3	2.0	0.5	1.1	1.3	0.5	1.1	4.1
출판,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3	3.9	6.1	1.9	5.9	14.6	1.7	4.8	8.6
부동산업 및 임대업	9.6	6.4	10.3	7.5	4.6	12.0	10.1	6.1	16.4
사업지원 서비스업	6.6	13.7	11.5	7.0	11.3	6.9	9.0	15.2	8.5
교육 서비스업	18.6	13.9	7.2	18.9	25.3	17.9	18.2	10.2	4.9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2.4	25.6	23.0	12.1	23.2	16.8	14.1	30.3	21.7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13.6	17.8	30.0	11.5	12.9	22.5	12.5	17.7	28.5
기타 개인 서비스업	37.4	17.3	9.9	40.7	15.6	7.9	33.8	14.7	7.2

주 : 2010년은 경제총조사 자료임.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전국서비스업조사 ; 경제총조사(2010)」

2013년 서비스업의 업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업체수 기준 '기타 개인 서비스업'이 33.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종사자수 및 생산액 기준으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30.3%, 21.7%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등의 업종 비중이 높았다. 2007년과 비교할 때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비중이 다른 업종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기타 개인 서비스업'의 비중은 감소하였다.

3. 혁신활동 현황

연구개발 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기준 연구개발비 1,313억원, 연구개발인력 2,438명, 연구개발조직수 109개로 나타났다. 전국대비 비중 변화는 2007년에 비해 연구개발비 및 인력, 조직수의 비중은 큰 변화가 없었다.

특허 현황을 보면, 2013년 기준으로 특허출원은 582건이며, 등록은 323건으로 전국 대비 비중은 각각 0.4%, 0.3%로 나타났다. 2007년 대비 출원 건수는 311건 증가하여 전국대비 비중이 0.2%p 증가하였으며, 등록 건수는 176건 증가하여 0.1%p 증가하였다.

표 3-17-4 제주특별자치도 혁신활동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개, 건, %)

구분		2007년	2010년	2013년
연구 개발	연구개발비	75,233 (0.2)	111,803 (0.3)	131,256 (0.2)
	연구개발인력	1,560 (0.4)	3,986 (0.8)	2,438 (0.4)
	연구개발조직수	54 (0.4)	89 (0.5)	109 (0.4)
특허	출원	271 (0.2)	451 (0.3)	582 (0.4)
	등록	147 (0.2)	136 (0.3)	323 (0.3)

주 : ()는 전국대비 비율임.

자료 : 1)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년도

2) 특허청, 지식재산통계연보, 각년도

4. 잠재력 및 발전과제

제주지역 발전잠재력을 살펴보면, 첫째, 청정 환경과 다양한 자연환경은 제주가 가진 최대의 장점이다. 천혜의 자연환경 및 동북아 중심의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 등의 이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제주의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부각하여 발전 잠재력으로 활용이 가능하며, 다양한 생물종을 활용한 한방 바이오산업 육성이 유리하다. 둘째, 동북아시아 경제권의 배후 휴양관광지로 육성이다. 국내·외 대도시를 시장으로 하는 관광서비스산업 육성에 이점이 있으며, MICE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쇼핑, 관광, 회의 연계전략으로 고부가가치의 휴양관광지로 도약이 가능하다. 셋째, 청정 제주에 적합한 지식산업기반 육성이다. 물산업, 식품가공산업 중심의 '제주형 제조업' 진흥을 도모할 수 있으며, BT산업을 중심으로 1·2·3차 산업의 융·복합화 추진으로 미래가치를 담보하는 지식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그러나 공항·항만 도로 등 인프라 부족으로 접근성 제약, 섬지역의 특성에 따른 물류·유통비용 과다, 교육·의료·문화 등 인프라 부족, 산업 및 R&D 기반 취약, 산업 구조 및 제조업 기반 취약, 영세한 지역 자본 및 재정 자립도 등 약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FTA 등 시장개방에 따른 경제 가속과 고용 없는 성장 지속 및 양극화 확대, 기후변화 및 환경규제 강화 등 위협이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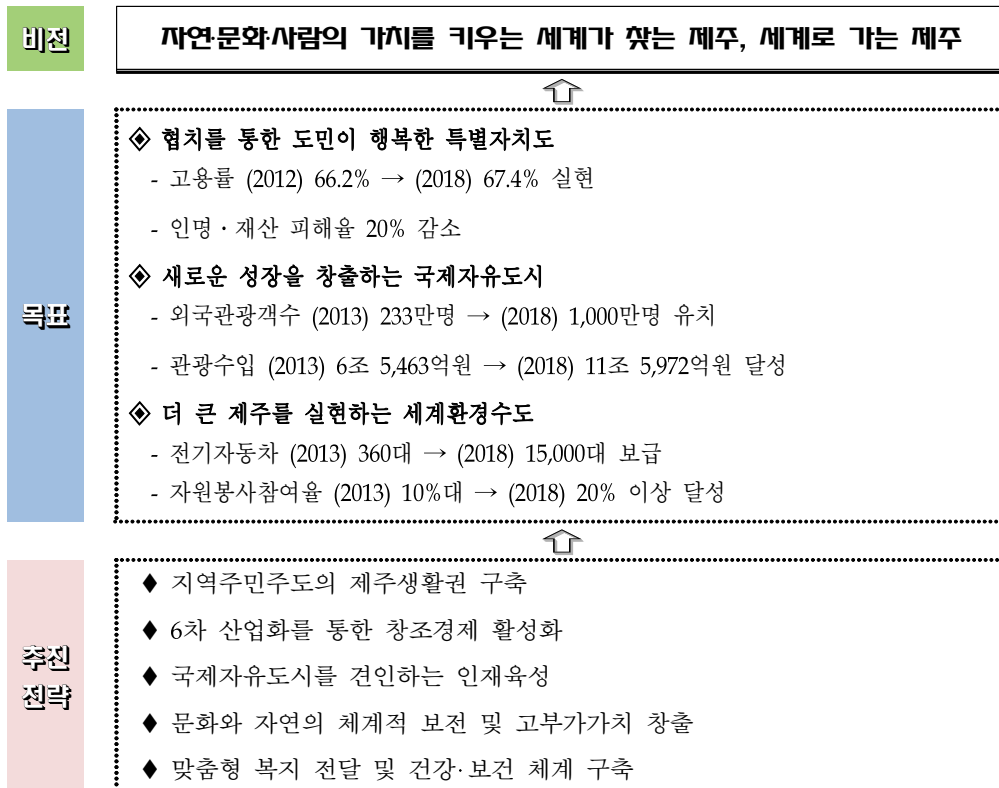
제주지역은 3차 산업 비중이 사업체 수의 91.1%, 종사자 수의 86.2% 등으로 노동집약적 특성을 가진 관광산업 및 연관 업종에 특화되어 지역특성을 활용한 창조경제 실현 및 지역특화산업 육성이 필요하다. 또한 초·중·고등학교의 187개소(분교 8개소) 중 제주시 116개, 서귀포시 71개소 등 2개 지역에 집중되어, 읍·면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및 맞춤형 발전전략 추진이 필요하다. 특히, 공공기관 등록 박물관 9개소(연간 방문객 200만명), 공연시설 32개소, 공공 공연장 10개소, 민간 공연장 16개소, 영상 상영장 6개소 등 문화자원들이 분포되어 있어 국제관광도시 위상에 맞는 문화관광 연계확충이 시급하며, 유네스코 3관왕 등 국제적인 환경자산을 활용한 세계환경수도 육성이 필요하다. 또한 제주지역 내 총 병·의원 수가 230개지만 상대적으로 제주시 지역에 소재한 경우가 많아 읍·면 지역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및 양질의 의료 서비스 공급체계가 필요하다.

제2절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1. 발전비전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세계가 찾는 제주, 세계로 가는 제주’이라는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 “협치, 새로운 성장, 더 큰 제주”의 기본방침을 설정하여, 협치를 통한 도민이 행복한 특별자치도, 새로운 성장을 창출하는 국제자유도시, 더 큰 제주를 실현하는 세계환경수도 등 3대 발전목표로 제시하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으로 지역주민주도의 제주생활권 구축, 6차산업화를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 국제자유도시를 견인하는 인재육성, 문화와 자연의 체계적 보전 및 고부가가치 창출, 맞춤형 복지 전달 및 건강·보건체계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그림 3-17-1 제주특별자치도 발전비전 및 추진전략



2. 추진전략

제주특별자치도의 추진전략은 ‘지역주민주도의 제주생활권 구축’, ‘6차 산업화를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 ‘국제자유도시를 견인하는 인재 육성’, ‘문화와 자연의 체계적 보전 및 고부가가치 창출’, ‘맞춤형 복지 전달 및 건강·보건 체계 구축’ 등 5대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전략 기조는 지역행복생활권 개념 도입, 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성 및 지역의 자연자원 및 문화자원 활용, 지역혁신 역량강화로 한정된 자원과 인력 활용의 극대화 추진, 미래 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 및 인재양성 시스템, 중앙정부 부처별 부문별 계획과의 정합성 유지 등이다. 이러한 전략 기조를 통하여 5대 추진전략 44개 실천과제, 243개 세부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지역주민주도의 제주생활권 구축은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주민체감형 인프라 확충, 지역공동체 육성 및 마을 만들기 사업 확대를 통해 구현할 계획이다. 6차 산업화를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는 지역 특성 및 잠재력 극대화를 위한 지역산업 육성 체계화, 고품격 관광지 조성을 위한 창조적 문화관광 활성화, 그리고 농어촌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 구축과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을 견인한다. 또한 국제자유도시를 견인하는 인재육성을 위해 초·중·고교 교육여건 개선으로 학교 경쟁력 향상 실현 및 창의적 지역인재 양성을 도모한다. 더불어 문화와 자연의 체계적 보전 및 고부가가치 창출은 일상적 융합문화 체험을 통한 체감도 향상 및 문화격차 해소, 자연환경자산의 체계적 보전 및 가치에 기반을 둔 지역발전 도모를 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맞춤형 복지 전달 및 건강·보건 체계 구축을 위해 맞춤형 복지 지원을 통한 도민 행복 구현과 취약 지역 공공의료체계 정비를 통한 의료 만족도 제고에 힘쓰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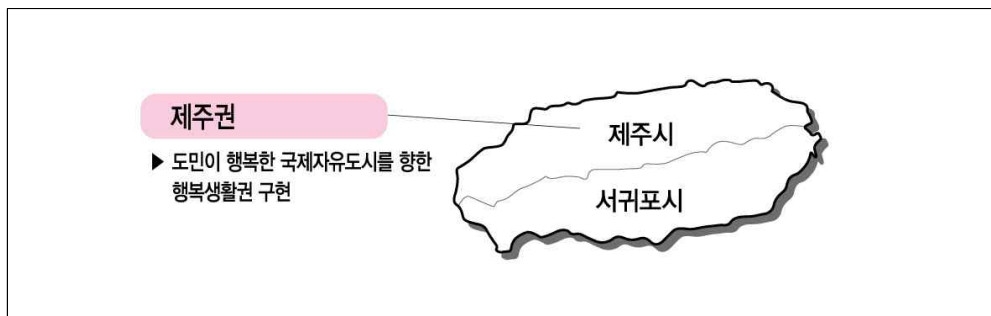
제3절 추진현황 및 성과

1. 지역생활권 활성화

(1) “지역행복생활권” 추진현황 및 성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행복생활권은 제주시·서귀포시 연계된 생활권 1개 지역으로 구성된 제주행복생활권이다. 제주시는 생활인프라, 인구, 교통, 경제, 의료 서비스 등 중소도시로서의 역할을 하고, 서귀포시는 향토산업 육성, 도시재생, 도시활력 증진,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 등의 역할과 기능을 갖춘 곳으로 육성하는 생활권이다. 이를 위해, 생활인프라, 일자리 및 경제활동, 교육·문화·의료·복지 등 5대 분야 기반으로 행복생활권 사업 추진을 통해 ‘제주행복 Dream’을 완성하기 위하여 생활권의 비전으로 설정하여 추진하였다.

그림 3-17-2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2) 지역별 추진현황 및 성과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주민 주도의 제주생활권 구축을 위해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으로 도농중심지 활력증진’, ‘주민체감 생활 인프라 확충, 정부여건 개선 및 지속가능성 환경 조성’, ‘창조형 지역개발과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화, '간선도로망 확충, 항만 및 어항 정비' 등 4가지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추진은 기본계획 수립 등 일련의 준비를 통해 상모리, 영천동 등 2개 지구가 선정되어 2015년 본격 추진될 예정으로 도농중심지 활력증진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다.

'주민체감 생활 인프라 확충'은 서광지구 및 송당지구의 상수도 시설 확장,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등 상수도 시설 확충과 버스정보 시스템 보강 구축 및 특수교통수단 도입으로 교통편의 증진을 도모하여 주민편의를 위한 생활환경을 개선하였다. 또한 전국최초 골목상권 우대카드인 「제주통카드」를 출시(31,609좌 발급, 246억원 이용)하고 골목슈퍼 PB(자체브랜드, 매출 17억원)상품 개발 및 공동배송 확대를 통해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제고하였다. 이와 더불어 전통시장시설 현대화사업을 통해 전년대비 1일 평균이용객 23%, 1일 평균 매출액 11% 증가 등 서민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하였다.

'창조형 지역개발과 마을 만들기 사업'은 김녕애 권역, 세계자연유산권역, 무릉도원 올레권역, 한솔타리권역, 월령선인장마을권역, 어명아방권역 등 권역단위 정비사업으로 기초생활기반확충, 소득증대, 경관개선, 역량강화 등 지역개발을 도모하였으며, 녹색농촌체험마을,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 지역창의 아이디어사업 등 제주형 마을만들기를 통해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특히, 참여주민들이 사업추진에 대한 만족도를 '보통' 이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도시민 유치 홍보로 제주로 이주하는 인구가 3,875가구 7,997명(전국대비 8.7%, 9.9%)을 유치하였다. 또한 여성친화도시 지정 및 조성·확산 사업을 통해 여성행복안심 무인택배 시스템 3개소 운영, 지역안전 프로그램 12개 운영 등으로 여성친화도시 가치 확산에 노력을 하였다.

'간선도로망 확충, 항만 및 어항 정비'는 구국도 건설, 국도유지운영, 구국도유지보수, 구국도시설개량, 국도시설안전개선 등 구국도 운영 및 관리를 통한 간선도로망을 확충하고, 항만시설 유지보수, 연안정비 사업 등으로 항만정비를 실행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항만 인프라 구축에 힘을 모았다.

2.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제주특별자치도는 6차산업화를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자리창출 중심의 지역산업 육성’, ‘혁신역량 강화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통한 창조경제 거점육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민행복관광지 조성’,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 ‘농어촌지역 일자리 확충 사업 추진’ 등 6가지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일자리창출 중심의 지역산업 육성’은 지역SW산업진흥지원을 통해 선도기업 대상으로 수출을 지원하고 수출계약(4건) 및 융합제품 상용화(3건)의 성과를 도출하였으며, 애로해소 및 1:1 매칭 기업 방문으로 만족도 증가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또한 신시장 창출을 위한 SW 융합기술 고도화를 통한 IoT 가상화 분산파일시스템 기술 개발, IoT 대규모 병렬 처리를 위한 분석 시스템 기술개발, IoT 분산 컴퓨팅 시스템 보안 및 인증 기술개발 등 신시장 창출을 위한 산업화에 노력하였다. 특히,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를 추진하여 2014년 목표대비 93.3% 달성(6,534개 창출)하였으며,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체감도를 높였다.

‘혁신역량 강화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창조경제의 거점육성’은 제주관광 비즈니스 커뮤니티 센터 건립을 구체화하여 초석을 다지는 데 힘을 기울였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민행복관광지 조성’은 새별오름 관광자원 개발사업을 통해 관람객수 318천명이 방문하는 등 제주 방문 관광객 수 12백만명(외국인 3.32백만명)을 달성하는 데 기여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였다.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은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 지원을 통해 혁신도시내 기업 유치, 투자유치 설명회 등 혁신도시 활성화 도모를 위해 기여하였다.

‘농어촌 일자리 확충 사업 추진’은 자원활용기술보급을 통해 수다뜰 공동브랜드 홍보로 매출증대(34개 업체 25억원(2013년)→30억원(2014년), 농촌교육농장 농촌진흥청 품질인증 획득(총 5개 농장) 등 농장수 사회적 역할수행에 따른 자긍심 및 자신감을 높였다. 특히, 농업인교육훈련을 통해 3기 농업마이스터대학 졸업(128명), 2회 전문농업마이스터지정시험 1차 필기시험에 16명이 합격하는 성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농업전문인력양성을 통해 전문농업인력 양성 농업인전문교육 142과정(48,240명)을 개설하였으며, 농기계훈련사업을 통해 교육훈련생 1,172명을 배출하였고, 교육만족도(93점)도 높게 나타났다.

3.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제주특별자치도는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양질의 교육기회 및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한 초·중·고교 교육 여건 개선, ‘인재와 기업의 선순환 성장’, ‘100세 시대 평생학습 체제 구축’ 등 3가지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양질의 교육 기회 및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한 초·중·고교 교육 여건 개선’은 농어촌 ICT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ICT 운영 학교 확대((5교→43교), ICT 운영 학교에 대한 121백만원 예산 지원(학교당 2백만원 멘토링비 지원), 교육부 컨설팅(성읍초, 수산초), ICT 운영 학교 팀장 및 선도교사 지정으로 지역별 협의회 개최 등의 성과를 창출하였다. 그리하여 스마트 기기 및 무선 인터넷망의 지속적 확대와 다양한 콘텐츠 활용 능력을 가지는 교사 양성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다. 또한 농어촌 거점별 우수중학교 육성 사업을 통해 자유학기제, 학교교육진로교육프로그램,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학교오케스트라, 기타 특색프로그램 운영, 특별실 및 시설 구축 등의 성과를 창출하였다.

‘인재와 기업의 선순환 성장’은 특성화·마이스터고 지원 확대로 산·학·관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지원 사업으로 일자리 130명 창출, Job Fair 800여명 참가, 391명 면접 참여, 81명 1차 합격, 원양승선실습에 2학년 해양산업과, 전자통신과 학생 56명 참여, 특성화고 5개교 10명 학생 대상 호주에서 글로벌 현장학습 실시, 자영생명산업과 학생 급식비 지원(도청 50%, 교육청 30%) 등 선순환 성장을 위해 노력하였다.

‘100세 시대 평생학습 체제 구축’은 지역평생교육활성화로서 행복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을 통해 행복학습센터 지정 운영 3개소, 행복매니저 양성 20명 등 성과를 도출하였다. 그리하여 시범사업 이후 평생학습의 기회를 확대·확산을 위한 토대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와 같이 농어촌 지역 초중고교 교육서비스 지원 확대, 농어촌 거점별 우수중학교 육성에 전환점 마련, 행복학습센터 지정을 통한 평생학습 기여 부여 등으로 인재·기업의 선순환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 인재양성을 통해 더 큰 제주를 위한 미래 가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4. 지역 문화 융성, 생태 복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 문화 융성, 생태 복원을 위해 ‘문화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 재창조’, ‘문화격차 해소’, ‘생태자원의 보전 및 가치 증진을 통한 지역발전 도모’ 등 3가지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문화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 재창조’는 작가의 산책길 탐방로의 활성화를 위해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관리 조례 개정(2014년 11월 12일)’을 통해 운영위원회 구성, 주민협의체 구성 등 근거가 확보되어 사업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였다. 특히 지방문화산업기반조성(CRD) 육성을 통해 애니메이션 디자인 1식, 시나리오 21편, 본편 1편 제작, 민간투자 6억원 유치, 공동제작사 유치 등의 성과를 창출하였다.

‘문화격차해소’은 작은도서관 지원 사업으로 2개소 조성(화북, 추자면), 종합형 스포츠 클럽 육성으로 8종목 580명 회원을 확보하였다. 또한 전통사찰 정비로 전통사찰을 찾는 신도 및 관광객에게 관광지 사찰로서의 일신과 템플스테이 운영으로 불교문화 체험기회를 부여하였으며,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으로서 설문대여성문화센터를 활용하였으며, 이를 이용한 도민들의 서비스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체육진흥시설 지원으로서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을 통해 생활체육시설 확충(2개소),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4개소), 장애인 전용 체육관 건립 추진(1개소)등 생활체육 인프라 개선을 하였으며, 생활체육지도사 활동지원 사업을 통해 체육지도자 51명(일반 25명, 어르신 26명) 운영, 운영개소 및 횟수 3,66개소(24,085회)·참여인원 538,130명 등 성과를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서귀포시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서귀포 예술의 전당을 개관(6월)하였다.

‘생태자원의 보전 및 가치 증진을 통한 지역발전 도모’는 도심열섬완화를 위한 생활권 녹색공간 조성사업으로 도시숲 조성, 도시녹화사업으로 애조로 등 2개소(2,865본), 나무은행사업으로 삼성로 등 6개소(395본) 등 가로수 식재를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도모하였으며, 산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역사와 문화의 정취가 살아있는 자연 천수 생태하천을 조성하였다.

이와 같이 제주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상품개발 및 운영체계 마련, 지역문화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콘텐츠 활용, 제주문화시설 확충으로 문화혜택 기회 증진 등을 통해 지역 문화 융성, 생태 복원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5.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제주특별자치도는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를 위해 ‘맞춤형 복지 지원’, ‘취약지 공공의료체계 정비’ 등 2가지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맞춤형 복지 지원’을 위해 「공무원+통합사례관리사+방문간호사」가 통합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관 협업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시범사업으로 선정하고, 복지코디네이터를 육성 및 배치(34개 동)하는 등 주민밀착형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대상별·계층별 차별화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첫째, 출산장려 환경 조성 및 보육서비스 제고를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23개소→24개소) 및 공공형 어린이집(23개소→24개소), 시간연장형·24시·휴일어린이집(326개소→365개소)을 확대하였다. 둘째, 노인복지 안정망 구축을 위해 가사간병 도우미 등 맞춤형 노인돌봄 서비스(5,140명) 및 치매질환 치료관리비(12,000명)을 지원하였다. 셋째, 장애인의 활동지원을 위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지원대상을 1~3등급 확대하고 장애인응급알림서비스(107가구) 및 장애아동 가족지원사업(1,639명)등을 추진하였다. 이와 더불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10개소), 장애 대학생 취업연수 운영(34명),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835명) 등을 통해 장애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 및 자활·자립기반을 마련하였다.

‘취약지역 공공의료체계 확충’을 위해, 농어촌 보건기관 시설개선 및 장비보강(50개소)을 통해 진료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제주의료원의 요양병상을 확대하고 산남지역 유일 종합병원인 서귀포 의료원을 취약지역 응급의료 기관 및 산부인과 전문치료센터로 지정하는 등 의료원별 기능특성화 및 진료기능 확대를 통해 공공의료기관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였다. 또한 주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세월호구조자 대상 심리안정서비스 제공(실인원 6명, 총30회), 4.3및 강정마을 정신건강실태조사, 자살위기관리시스템구축(1577-0199, 3자 통화), 제주대학교병원을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로 선정하는 등 자살예방, 정신질환 재활 등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조성으로 도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였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우수기관, 신종감염병 위기관리 최우수기관, 감염병관리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공공보건의료서비스 개선에 대한 노력을 인정받았다.

제4절 향후 추진계획

제주특별자치도의 2015년 정책방향은 “창조적 가치 창출을 통한 더 큰 제주”로 설정하여 제주전반의 가치를 진단하고 맞춤형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활력이 넘치는 제주, 자연과 공존하는 그린제주, 즐기며 살아가는 좋은 제주, 모두가 함께하는 협력제주 등 4대 전략과제를 실행할 예정이다. 특히, 균형발전을 통한 동반성장은 주민체감형 지역균형발전 및 행복생활권 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생활권 활성화’는 제주행복 DREAM을 실현하는 행복생활권 기반 마련, 주민 행복 만족도 10%증가(2014년 대비) 등 목표를 설정하고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통한 도시재생사업과 지역자원 활용 지역공동체 육성 및 마을만들기 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중점추진사업으로는 제주행복생활권 선도사업 연계협력프로젝트 추진, 도시재생 선도지역 전략사업, 생활체감형 인프라 확충 사업, 상수도 시설 관리 확충 등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는 창조경제형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고용률 66.8% 달성 등을 목표로 설정하고, 지역특성 및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지역산업 육성 체계화와 농어촌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 구축 및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을 전략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중점 추진사업으로는 일자리 창출 중심의 지역산업 육성, 관광산업 육성, 농어촌 일자리 확충 등이다.

‘교육 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양성’은 인재·기업의 선순환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 인재양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농어촌지역 초·중·고교 교육여건 개선과 100세 시대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전략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중점추진사업은 농어촌 초중학교 ICT 지원과 지역 평생교육활성화사업 등이다.

‘지역문화 육성·생태 복원’은 지역문화 육성 및 자연환경자산의 보전과 가치 증진을 목표로 설정하고 문화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 재창조와 지역주민의 일상적인 융합문화 체험을 통한 문화격차 해소를 전략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중점추진사업으로 작가의 산책길 탐방로 프로그램과 제주문화 융합형 콘텐츠 개발이다.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는 사회통합 및 공동체 활성화를 실현하는 지역 복지·의료 구현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맞춤형 복지 지원을 통한 도민 행복 구현과 취

약지 공공의료체제 정비를 통한 의료 만족도 제고를 위해 전략적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중점추진사업은 어린이집 확충 사업,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복지공동체 활성화 등이다.